제433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2026년3월19일(목) 오후 3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3월19일 개의하여 3월22일 산회하였음］

의사일정

1.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4)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5)
3.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655)(추가)

상정된 안건

1.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4) ····· 2
- 무제한토론 의원(윤상현) ····· 4
- 무제한토론 의원(이성윤) ····· 28
- 무제한토론 의원(조배숙) ····· 50
- 무제한토론 의원(최혁진) ····· 114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 134
- 무제한토론 의원(김재섭) ····· 174
- 무제한토론 의원(송석준) ····· 208
- 무제한토론 의원(최형두) ····· 233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1인 서면동의) ····· 295
1.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4) ····· 296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5) ····· 297
- 무제한토론 의원(이달희) ····· 298
- 무제한토론 의원(신정훈) ····· 356
- 무제한토론 의원(고동진) ····· 379
- 무제한토론 의원(서범수) ····· 424
- 무제한토론 의원(박덕흠) ····· 482
- 무제한토론 의원(박수민) ····· 505
- 무제한토론 의원(이성권) ····· 538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0인 서면동의) ····· 574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5) ····· 575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7674) ····· 575
3.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655) ····· 576
- 무제한토론 의원(김예지) ····· 577
- 무제한토론 의원(이주희) ····· 716
- 무제한토론 의원(김민전) ····· 752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0인 서면동의) ····· 789
3.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655) ····· 790

(15시07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공동 대표발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우원식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송재봉 의원실 소개로 강원 정선군 지역주민들, 김태호 의원실 소개로 양산시 지역주민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

1.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4)

(15시08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공소청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용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남양주병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청법(대안)은 박은정·김용민·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및 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접수된 1건의 입법청원을 통합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왔습니다. 급기야 힘을 키워 막강한 정치세력이 되었고 마침내 내란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가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자비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최소한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주권자의 일관되고 준엄한 명령과 이를 수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우리 국민주권국회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칼날을 차별적으로 휘둘러 왔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집요하고 잔인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이 무려 163명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검찰은 봐주기 수사, 강압과 회유·압박을 통한 조작 수사 및 기소로 일반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한편 정치검찰은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을 조작 수사하여 당시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를 없애려 시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국민주권정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코스피 6000 시대는커녕 혼란과 탄압만 가득한 세상, 내란범들과 검찰이 지배하는 독재국가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검찰은 단 한 사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지난 12·3 내란의 밤, 영하의 추위 속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들며 민주주의와 검찰정권에 맞선 빛의 혁명, 시민의 위대한 저항 덕분에 우리는 내란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어받아 온 민주진영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정권의 폭주와 12·3 내란의 비극을 거치며 검찰개혁은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시대적 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조직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행정조직은 상호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준엄한 헌법정신을 다시금 증명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되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윤상현)

(15시15분)

○의장 우원식 먼저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늘 이 법안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중수청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의장 우원식 윤상현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5시 18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이 법안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 이것이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큰소리로 선동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사실과 법리의 역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이 법안이 얼마나 우리 역사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법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을 논하려면 먼저 법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공소청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즉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검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인 공소청에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가진 수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에 집중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사·기소의 분리가 과연 권력 분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하면 서로 견제가 된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두 기관의 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입니다. 결국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고, 여야를 떠나 장기적으로 이 기관들을 통제하는 것은 집권 여당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기소를 원하고 기소기관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기소기관이 기소하려는데 수사기관이 증거를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안은 갈등을 해소할 명확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둘째,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불명확하다는 문제입니다. 법안에는 중대범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탄력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그 재량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만 이 두 법안은 현행 헌법체계와 충돌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성 법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법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법률은 전문가의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검사의 신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영장 청구는 헌법상 검사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설치하는 중수청은 어떻습니까? 중수청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나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공수청의 검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영장 청구는 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수사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 제12조 3항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취지에 반합니다.

한번 헌재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헌재 92헌가8 결정문입니다. 영장주의의 본질이 법관의 사법적·사전적 억제에 있음을 선언했고, 영장의 효력 유지 여부조차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 96헌바28 결정은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취지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제삼자 입장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2022헌라4 결정은 이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만들어 내는 구조에서는 수사 현장을 직접 아는 중수청 수사관과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공소청 검사 사이에 구조적 단절이 발생합니다. 이 단절은 단순한 절차적 불편이 아닙니다. 영장주의의 실질적 형해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사람이 수사 내용을 모르면 영장제도가 껍데기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려면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영장을 검사가 판사에게 신청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왜 검사가 직접 하게 했냐면 검사가 직접 수사했으니까 이 사람 왜 잡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수사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해 줘야 영장을 줄지 말지를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중수청이 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봤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형사 A라는 사람이 6개월 동안 범인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판사 앞에 가서 '이 사람 잡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수사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 B입니다. B는 A가 써 준 보고서만 읽었습니다. 판사가 '왜 이 사람이 범인입니까? 증거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B는 제대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게 됩니다. 아니면 영장을 거부합니다.

제가 앞에서 형해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해화라는 것은 즉 살은 다 빠지고 뼈대만 남았다, 겉모습은 영장제도인데 실질은 없다는 뜻입니다. 영장제도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함부로 사람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독립적으로 이게 진짜 필요한 체포냐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는 사람이 수사 내용도 모른다면 판사의 심사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형식만 남고 실질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형해화입니다.

검사라는 분들에 대하여…… 저는 지금 검사제도를 얘기하면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검사님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법시험 혹은 로스쿨, 수년간의 공부, 치열한 경쟁 그리고 임용. 처음 검사 배지를 달던 날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권력을 누리겠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검사들은 약자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일탈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권력에 부역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비판받아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아이를 씻깁니다. 씻기다 보니 물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더러운 물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아이를 버려야 합니까? 일부 검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검사라는 직분 자체를 헌법 밖으로 밀어내는 것, 이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말을 빌리면 추상적인 정의는 구체적 인간을 보지 못합니다.

검사 여러분들께도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법안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해체하려는 것이 정말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소권입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추적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워 작성한 공소장, 여러분들이 증거를 모으며 버텼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피해자 앞에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들, 그것을 이 법안은 부정합니다. 검사를 중수청이 넘겨주는 서류에 도장이나 찍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제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도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체입니다. 더러운 물은 버리십시오. 절대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지키십시오.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강력한 사법체계가 바탕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밤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제도의 헌법적 위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검사를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제12조 3항, 헌법 제12조 3항이지요, 영장 청구. 제16조의 주거 수색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특정 직명을 명시한다는 것은 그 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의미합니다. 학계에서 이를 제도적인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정립한 개념으로 헌법이 특정 제도를 명시할 때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은 입법자도 침해할 수 없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학회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자 국회는 검사 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변형할 수 있습니까? 제도의 외형은 유지하되 내용을 완전히 비워 버리는 것,

즉 검사를 단순히 기소문서에 도장 찍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서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중수청이 수사를 합니다. 중수청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를 하면 공소청 검사는 그것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가 없고 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이 상정한 검사의 역할이 결코 아닙니다.

권력분립의 원칙 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66조는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이것이 현행 우리 대한민국헌법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새로운 기관들을 만들면서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지나치면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책임을 지려면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독립기관의 위상과 소속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만드는 기관들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기존 헌법 체계 밖에 놓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기관들의 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 구조입니다. 국회의 동의나 추천이 개입하는 구조는 의도와 무관하게 입법부가 사법 작용의 핵심인 수사·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과 충돌합니다.

다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 듀 프로세스(due process)의 원칙입니다. 적법절차는 단순히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질적 내용의 적정성도 요구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헌재의 1992년 12월 24일 92헌가8 결정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법안이 만드는 수사와 기소의 이원화 구조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어떻게 됩니까?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어느 기관에 권리구제를 청구해야 합니까?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어떻게 담보됩니까? 이 법안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상의 사례를 몇 개 들고자 합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사례 1,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수사받는 중소기업 사장 김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하는 김 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수청 수사관들이 들이

닥칩니다. 회사 서버를 통째로 가져갑니다. 거래처 계좌 자료도 압수합니다. 김 씨는 영문도 모릅니다. 김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묻습니다, '도대체 혐의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중수청에 문의합니다. 중수청은 말합니다, '수사 중입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결정합니다'. 공소청에 문의합니다. 공소청은 말합니다, '아직 중수청에서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갑니다. 회사는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소도 안 됐습니다. 불기소도 아닙니다. 그사이 어딘가에 사건이 떠 있습니다. 김 씨는 헌법소원을 내려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수사한 중수청입니까, 기소권 있는 공소청입니까? 변호사도 명확한 답을 못 합니다. 이것이 두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30대 여성 이 씨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수사가 끝납니다. 중수청은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더니 말합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사건이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말합니다, '저희는 이미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습니다. 공소청이 기소만 하면 됩니다'. 핑퐁이 시작됩니다. 3개월, 6개월, 1년…… 가해자는 그사이 증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증거가 희미해집니다.

피해자 이 씨는 매일 그 상사를 출근길에 마주칩니다. 이 씨가 호소할 곳은 어디입니까?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합니다', 공소청은 '우리는 기소 여부만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두 기관 사이 어느 틈 사이에서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무고를 당한 공무원 박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방공무원 박 씨가 있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던 동료가 박 씨를 허위로 고발합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 결과 무고임이 명백합니다. 중수청 수사관도 압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류를 공소청에 넘깁니다. 공소청 검사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느낀 그 확신, 피의자의 눈빛, 증인들의 일관성 그런 것들은 서류에 담기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합니다.

박 씨는 재판을 받습니다. 1년이 지나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박 씨는 직위해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수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박 씨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잘못 수사한 중수청입니까, 잘못 기소한 공소청입니까? 두 기관은 서로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정치적 표적이 된 야당 의원 최 씨에 관한 가상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례입니다.

야당 의원 최 씨가 집권 여당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후 최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갑니다. 공소청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입니다. 여당 입맛에 맞

는 분이지요. 공소청은 기소합니다.

지금 제도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검사가 수사부터 기소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합니다. 언론이 추적하고 국민이 압니다. 그러나 이 법안 구조 안에서는 중수청은 수사만 했다고 합니다. 공소청은 서류 보고 결정만 했다고 합니다. 책임은 분산되고 희석이 됩니다. 정치적 표적수사가 더 교묘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례,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분리의 틈새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힘없는, 빽 없는 개인들입니다. 강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두 기관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습니다. 약자는 어느 기관 문을 두드려야 할지 몰라 복도에서 헤맵니다. 이것이 이 법안이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법치가 아니라 법 지옥이 될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적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 요소로 법적안정성 또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는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됩니까? 미결 사건의 처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법안에 부칙이 있겠지만 이처럼 거대한 제도 변경에서 과도기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범죄피해자도, 억울하게 수사받는 사람도 모두가 이 혼란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위헌성의 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장검사 제도의 헌법적 보장, 권력분립, 적법절차, 법적안정성 이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모두가 문제입니다. 민주당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위헌이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헌법률이 시행되는 동안 국민이 받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수결 민주주의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방식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렇다면 히틀러가 집권 초기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수권법을 통과시킨 것도 민주주의입니까?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나치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교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다수결 자체는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더하여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소수자 보호, 권력분립이 함께 작동할 때에만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헌법학에서는 이것을 다수결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와 헌정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의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가 곧 법이 됩니다. 헌정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관철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헌정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 제1조가 그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서에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도 그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그 선서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습니까? 권력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좋은 법은 충분한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토론을 두려워하는 법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숨기려고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퀀텀정치혁명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95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는 진리를 생산하는 체계가 아니라 권력을 억제하고 폭정을 방지하며 공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은 민주는 투표와 절차만 남고 공화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다수결은 합의를 대신하는 진리의 대용물이 되었고 공적 이성이 사라진 자리를 권력의 힘 겨루기와 절차 남용이 대체하고 있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극단까지 밀어붙여 민주주의 자체를 압살한 역설이 일상화된 사회, 즉 절차적 정당성만 남은 포스트공화국의 정치적 무정부 상태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운동권은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전제, 현실을 스스로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식 능력 그 전제를 잃어버렸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과정이지만 운동권 내부에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집단규범을 절대시하는 사고방식, 즉 특정 노선의 선택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범 과잉의 인식론이었다. 결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 즉 자기 반성, 관찰, 판단의 자유가 철저히 소멸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맨얼굴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역사는 수사기관이 권력에 종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한국 현대사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앙정보부가 설립됩니다. 중앙정보부는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겸비한 기관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 야당 정치인 사찰, 언론통제였습니다. 1980년 어떻습니까? 대법원이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확정판결한 그 사건 이후 보안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을 일삼았습니다. 5·18 광주의 비극도 이 시절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안기부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공작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 독립성 논란, 저는 이런 것들을 특정 정권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권력 가까이에 있을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수사기관의 독립은 어느 특정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권력 전체로부터의 독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확한 헌법적 근거와 견제 시스템입니다. 이 법안이 그것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독립을 강화하는 척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즘 법치주의의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사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1933년 독일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수상이 됩니다. 그는 의회에서 수권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은 내각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의회 다수결로 의회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치는 즉시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을 장악합니다. 게슈타포가 만들어지고 법원은 나치의 뜻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반체제 인사들은 정상적인 법절차 없이 체포되고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나치는 법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뉘른베르크법, 수권법 등. 그러나 그 법들은 헌법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법이었습니다. 형식은 법이었지만 실제는 독재의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법학에서 법실증주의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면 모두 정당하다고 보는 시각은 법이 얼마나 끔찍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무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법 위에 있는 자연법, 즉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정의의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나치즘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법이라는 형식이 아무리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권력 집중과 기본권 침해를 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의 검사 제도 악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 바로 스탈린 체제입니다.

스탈린은 검사 제도를 권력 유지의 핵심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소련의 헌법은 형식상 많은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내무인민위원회 그리고 검사 제도가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작동했습니다. 대숙청 기간 동안, 1936~1938년 동안 약 75만 명이 처형되었고 수백만 명이 굴라크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 절차는 권력의 의지를 집행하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역사는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 주었습니다.

미국의 독립검사 제도와 그 교훈, 긍정적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972~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특별검사 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하려 했고 이것이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법무부장관이 해임을 거부하고 사직했습니다. 결국 닉슨은 탄핵 위기에 몰려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이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도적인 보장과 개인의 용기입니다.

미국 연방검사 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방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한번 임명한 후에는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special counsel)는 법무부 규정에 의해 더욱 강력한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물론 이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구조, 미국적 의미의 견제와 균형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그 분리가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기관 모두 정치권력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영국의 왕립검찰청 제도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1985년 검찰청법으로 왕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모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CPS가 담당합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이 법안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영국 모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국 CPS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85년 법 제정 이후 제도가 안착하는 데 무려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둘째, CPS는 독립적이지만 어터니 제너럴(Attorney General)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책임성의 연결고리입니다. 셋째,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 헌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CPS에 넘기면 CPS가 기소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가정폭력 사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국도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우리나라는 헌법 체계가 다르고 사법 문화가 다르고 역사적 맥락이 다릅니다. 외국 제도의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과 맥락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입니다.

프랑스의 예심판사 제도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형사소송법 체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수사와 기소가 복잡하게 연계된 구조입니다. 특히 예심판사 제도가 특징적입니다. 예심판사는 중대사건의 수사를 독립적으로 지휘하는 사법관입니다. 이것은 수사에 사법적 통제를 직접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프랑스는 바로 이 예심판사 제도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사법부 소속 판사가 수사를 지휘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우리 공소청법안에 이런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 행정기관을 만들 뿐 사법적 통제장치, 공소청법·중수청법 이 두 법안은 새로운 행정기관을 만들 뿐 사법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나치는 법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을 이용했습니다. 뉘른베르크법으로 국민을

우리와 그들로 갈랐고 수권법으로는 의회와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법이었지만 내용은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역시 이름은 개혁이지만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쪼개고 실제 권력은 보이지 않게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법의 형식을 빌려 헌법의 정신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순간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법리 논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첫째, 수사 공백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대규모 조직개편이 시작됩니다. 현재 검찰에 있는 수사 인력 중의 일부는 중수청으로 이동하고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재배치됩니다. 이 과도기는 얼마나 됩니까? 법안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든 현실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혼란 기간 동안 수사가 중단된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 중인 기업 비리 조사, 조직범죄 수사, 부패 수사가 담당 검사의 소속기관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대규모 조직개편 시기에 기존 수사가 은근슬쩍 묻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과 그 직후는 특정 사건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소권과 수사권의 구조적 충돌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는데 공소청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나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구조에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누구를 상대로 불복합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청이 기소하려 하는데 중수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핵심 증거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는 상황, 두 기관의 기관 이기주의가 충돌하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범죄피해자입니다. 이 갈등을 조정하는 상위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그 조정 메커니즘이 명확합니까? 아닙니다. 결국 갈등 조정은 법무부장관이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정치가 수사와 기소에 개입하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법적 인력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경험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수사를 해 봐야 어떤 증거가 왜 중요한지 알고 기소를 해 봐야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 경험 없이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검사를 만드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 적용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중수청의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를 경험하지 않고 수사만 하면 어떤 수사가

공판에서 유죄 판결로 이루어지는지 키우기 어렵습니다. 무죄 판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자가 기술적 이유로 풀려나는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형사·사법의 비효율화와 지연입니다.

사건 하나가 중수청에서 수사되어서 공소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갑니다. 보완수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핑퐁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가진다고 합니다. 형사사법의 비효율화는 이 헌법적 권리의 침해입니다. 범죄피해자는 빠른 정의를 원합니다. 무고하게 수사받는 사람도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이 법안은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다섯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의 공백입니다.

현재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여기에 중수청이 추가되면 고위공직자 범죄는 어느 기관이 담당합니까? 공수처입니까, 중수청입니까? 관할권 충돌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이미 독립성 논란을 겪었습니다. 공수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특정 사건의 관할권을 조작하기 위한 구조입니까?

여섯째, 국제적 신인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핵심입니다. 수사와 기소 체계가 갑자기 재편되고 그 과정에서 사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외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법치주의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회수합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제투명성기구, 트랜스패런시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사법의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 내는 불확실성은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와 제도적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정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왜 지금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십니까? 표면적 이유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대규모 기관 재편 과정에서 수사 동력이 약화되고 수사 자료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증거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향후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새로운 기관의 장을 누가 임명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 결정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다음 정치 국면에서 수사·기소권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장기 전략, 저는 이것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논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특히나 대통령직을 그만둔 뒤 다시 재

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미리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체계를 고친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 그것은 헌법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료 민주당 의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그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 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기관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이 기관은 위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오늘 제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법은 영원히 야당의 손에만, 여당의 손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당도 언젠가 야당이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법치주의의 원칙은 지켜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의힘이라는 야당 정치인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화, 자유 또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살고 싶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비판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올해 1월 24일 뉴데일리 특별 인터뷰에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렇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의 치안 대응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특히 선거범죄와 같은 정치적·권력형 범죄 대응을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기한을 무시해도, 보완수사 결과를 엉망으로 넘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사건 수사에 허점이 드러나도 공소청이 손을 못 대면 공소유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전혀 못 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만 할 수 있다면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돌려보내는 핑퐁은 예견된 재앙이다.

공소유지 과정에서 기록을 보면 허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사건을 기관 간에 돌려보내면 두세 달 걸릴 수 있다. 구속사건이면 그사이 피의자 신병 처리, 증거 확보 문제까지 얽혀 더 복잡해진다. 효율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책임을 일정 부분 포기했다는 말로도 들린다. 가령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했을 때 보완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했다가 피고인이 무죄가 나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경찰이 그 수준의 전문성과 축적된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 부실화가 심각해져 선거판에 범죄자가 판칠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결과 이득을 보는 쪽이 누구인지 냉정히 봐야 한다. 대형 선거범죄, 권력형 부패, 정치권 관련 범죄에 대해 속수무책이 되는 구조라면 그것은 제도 설계의 목적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수사관인데 누구는 수사사법관, 누구는 전문수사관,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자칫하면 베테랑 수사관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람의 지휘를 받게 된다. 수사사법관은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최호진 교수입니다.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의 조직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내에서 규율해야 법체계가 헝클어지지 않는다.

신인규 변호사 얘기입니다. 검수완박을 달리 쓰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결국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는 재판을 공판중심주의로 진행하고 변호사도 의뢰인을 만나는데 검사만 기록만 보고 기소할 수는 없다. 보완수사권은 헌법상 소추권에 내재한 권한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장영수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장영수 칼럼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논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따르자면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지, 왜 계속되는 특검의 경우에도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청 또는 공소청에 넘겨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결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정작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빠트리고 엉뚱한 증거들을 근거로 기소하여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은 이미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확인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거꾸로 기소 담당자가 수사 과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거 검찰에서 수사를 한 사건에서도 공판 담당 검사가 수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제 진정한 개혁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당한, 정치화된 조직의 문제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이런 식이라면 목표를 실현할 수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입니다.

검사를 임용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검사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강화하고 특정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개입을 제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권, 수사기관의 제한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소 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남용하거나 불기소를 남용하는 것 모두 문제입니다.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를 강화하고 기소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 검토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증거 법칙을 강화하며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검사평가시스템의 개선입니다.

검사의 성과를 기소율이나 유죄율로만 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적법절차의 준수, 피의자 인권 보호 등 질적 요소를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헌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검찰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합니다.

반면 민주당의 이 법안은 헌법 체계를 뒤흔들면서 실질적 개혁은 가져오질 못합니다. 단지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까 봐 두렵습니다. 혹시나 대통령 개인을 위해 방탄국회를 넘어 방탄국가를 만들 것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청법에 대한 헌법 정신 위반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법의 위헌 조항에 대한 분석입니다.

헌법 제12조·16조 위반, 검사의 영장청구권 훼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대체했습니다.

헌법적 문제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형식적 영장청구권만을 보유하면 이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헌법 조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소의 유기적 연관성을 인정해 왔으며 수사를 통해 공소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을 전제로 합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하여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가 형해화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2헌라4는 소추와 수사에 대한 헌법 규범을 고려할 때 국가의 수사 기능이 소추 기능에 실효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 제89조 위반, 검찰총장의 지휘·기능의 실질적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제89조제16호,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제89조에 보면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을 보면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라고 칭한다. 공소청 기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장은 헌법상 명칭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합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수

사권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장이 된다면 헌법이 상정한 검찰총장의 기능과 본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헌법 조문의 실질을 법률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헌성 논거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의 주장입니다. 헌법상 기관은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 실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 헌법상 기관을 하위법률이 변경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정성호 장관께서도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이 있고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법학계에서는 헌법에서 대통령이라 명시한 것을 법률에서 총통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법체계 혼란 가능성을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들도 공동입장문을 통해서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한 적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입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적법절차의 훼손입니다.

공소청법에 만약에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물론 결정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하다, 지금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 검토해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이것 헌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수사·기소 절차가 법률에 따를 것만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가 부실한 수사기록만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구조에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위헌성에 대한 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핵심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보완수사권 없이는 민생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건 경찰 파쇼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검사가 불충분한 수사기록으로 기소하는 경우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기소를 당할 위험이 증가하여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치주의 법체계 정합성 위반입니다. 관련 법령의 미정비 부분입니다.

공소청법을 시행할 경우—검찰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관련 법규 300여 개가 있습니다—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만 130여 개입니다. 이를 졸속 처리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법체계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구체적 문제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공소 제기 및 유지 주체로서 검찰을 전제하고 있어 공소청 출범 시에 즉각적인 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절차를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이동하면 기존 법무부·검찰 중심의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전면 수정해야만 하나 관련 법 개정 없이 강행됩니다. 형사소송법 등 핵심 절차법의 미개정 상태에서 공소청법 시행은 헌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형사사법 공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수청법의 위헌 조항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수사기관의 창설인데 한마디로 중수청을 행안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행안부 산하에 놓이게 됩니다. 헌법적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행안부장관 1인이 경찰 수사청 2개, 경찰 중수청 2개의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여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성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산하에—경찰청 국수본을 포함합니다—중수청이 모두 편제될 경우 행안부장관이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의 수장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8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마저 없앨 경우 경찰·중수청에 막대한 권한을 주게 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선거·내란 범죄까지 포함하므로 이 기관이 집권 여당 통제를 받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정치적 수사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고 중수청 희망자는 0.8%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설문 결과는 독립성 우려가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신분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직접 행사를 하는데 영장은 공소청 검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는 우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실질적 수사를 하지만 영장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이원화된 구조는 수사의 주체와 영장 청구 주체가 분리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하여 영장제도의 인권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위헌성 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 헌법이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검사가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구조에서는 통제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총기 사용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문제—중수청법 제47조인데—FBI 수준의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표방하면서도 법적 수사 권한이 불완전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법절차, 인권보장 위반의 문제, 수사 공백 및 인력 부재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

습니다.

검찰의 이탈 사태, 수사 공백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2025년에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의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대검 TF의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0.8%에 불과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사 공백으로 중대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과정을 충분히 마련해서 검찰이 맡고 있던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들이 협업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검찰청을 없애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대 공수처가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 미비로 인한 형사사법 공백은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검찰권력의 분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헌법상 영장제도의 형해화.

헌법 제12조,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공소청법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 검토한 채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영장제도의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제89조가 전제하는 검찰총장의 기능 변질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검찰총장이 수장인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상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총장을 기소 전담 기관의 장으로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질시켜 헌법이 예정한 검찰총장의 실질을 하위법률로 바꾸는 위헌 입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사 권력의 행정부 내 비정상적 집중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에 더해 중수청까지 두는 구조를 만들어 행안부장관 1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는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집권여당이 모든 형사수사를 통제하는 수사 전제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졸속 입법에 의한 형사사법 공백입니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 130여 개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공소청 또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실패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 제10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공소청법 졸속 입법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일체의 범죄수사나 수사지휘 직무를 없애고 부당한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에 대해 지검장의 수사중지명령이나 사법경찰 교체임용요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국가의 형벌권을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그 무게에 걸맞은 숙의와 검증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장치는 수사와 기소의 적절한 통제, 그 과정에서의 재검증 그리고 최종 책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공소청법(대안)은 겉으로는 검찰 권한의 축소를 의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기소의 단절, 책임의 분산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민 피해의 증가를 안고 있습니다.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최근 당정청 최종 조율안 역시 검사의 수사지휘권, 영장 집행 지휘 관련 조항, 특사경 지휘·감독권, 중수청 사건 개시 및 통보 및 수사중지요구권 같은 통제장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또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강행처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소청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정한 조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안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지휘, 수사 통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사를 통제하지 않는 기소기관이 과연 수사 결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 정작 수사 형성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그 기소는 책임은 지되 통제는 못 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공소청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능의 단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56조는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여기에는 보완수사를 강제할 권한도, 불응 시 제재도 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도 없습니다. 협력관계를 정한 조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만 놓고 본다면 실효적인 보완수사권이 설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최근 보도에서도 일치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금까지 이번 공소청법안 논의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에 쫓겨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부터 바꾸고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절차는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입법입니까?

법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다뤄야 합니다. 지금 수사 환경이 단일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완결적으로 처리할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습니까? 이미 수사 지연, 사건 적체, 책임 회피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급진적인 변화, 구조 변화를 밀어붙이고 보완 장치는 추후 논의로 미루겠다는 것은 개혁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책임 구조의 결여도 심각합니다. 이 법은 수사는 별도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까? 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했고 기소는 공소청이 했다고 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분산되면 결국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그랬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소청법안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조항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안 제21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검사는 그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외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법에서 결정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합니다. 외부가 심의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최종 책임은 다시 검사에게 남는 구조라면 이것은 책임의 분산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소 여부는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가장 무거운 판단입니다. 그 무거운 판단을 둘러싼 책임 구조가 더 명료해져야지 더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검사 직무대리 조항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안 제38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을 지명해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제외된다고 하나 그 외에는 사실상 검사 직무의 상당 부분이 대리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전문수사관 제도와 연계해 우수 인력 유입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이 분리된 구조에서 단순히 인사 경로를 넓히는 것이 곧 제도의 완성도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다른 기관이 하고 또 기소 판단은 분리되어 있으며 직무 일부는 대리 수행되는 구조는 형사사법의 핵심 원칙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의 명확성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것인지 기능만 나누고 책임은 흐리게 둘 것인지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들어 있는 기존 사건 처리 조항 역시 문제로 보입니다. 부칙 제6조는 이 법의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안에서 6개월이었던 사건 종결 기한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대형 경제범죄, 조직범죄, 복잡한 부패 사건이 90일 안에 정리될 수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졸속 종결, 무리한 이송, 수사 공백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헌법적 측면에서도 이 법안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강제수사의 남용을 통

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영장 청구는 남겨 두되 수사 통제장치는 빼고 보완수사 문제는 미루고 조직개편만 서두르는 방식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의 체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매우 상당합니다. 수사·기소의 완결성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법안은 조직개편부터 먼저 추진되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절차는 미완성 상태로 남겨 둔 채 제도의 외형부터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개혁이 아니라 핵심 설계 없이 골격부터 세우는 방식입니다. 결국 지금의 공소청법은 완결된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입법에 또 의존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미완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법조인들과 전문가들도 공소청법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조항 삭제로 인해 사법적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중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또 특사경 지휘권까지 삭제한 상태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식품, 노동, 세무, 출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의 완결성 또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다는 점 또한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정치와 사법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2개의 중요한 축입니다. 정치는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한계를 통제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립한 몽테스키외는 권력이 권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권력이 분산되고 서로를 견제할 때만 국민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나타나고 반대로 정치권력이 입법과 제도를 통해 사법을 흔들면 사법의 정치화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법 집행의 기준이 정치의 필요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침해되는 것은 힘없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 오래된 법언은 형사사법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문명 기준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민주당분들께서는 그 원칙 위에 이 법안을 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권한 축소라는 정치적 표어만 앞세운 채 정작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절차의 설계는 뒤로 미루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바뀌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관계도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론과 힘에 따라 구조를 흔드는 방식의 개혁은 결국 제도에 대

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이 다루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지, 국가의 형벌권이 어떤 절차 속에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려야 할 판단은 정치적 유불리에 관한 선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법안을 속도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자유·권리의 문제로 깊이 있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졸속입법은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워진 절차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법리를 얘기했고 또 역사를 얘기했고 또 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 수사·기소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나라, 헌법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원칙인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법안은 그런 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정치는 복수가 아닙니다. 정치는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마도 저희 이 필리버스터는 사법개악의 폭거를 막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은 힘의 논리에 따라 민주주의의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 자유공화주의에 대해 그것이 마치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공기처럼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공화,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누리는 공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노력을 함께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 주기 위한 시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현재의 힘만으로 막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이 개악을 막을 이는 오직 국민의힘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우리를 보고 계신 국민이 있다면 우리들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한 분께서 깨어나서 또 반대한다면 그것은 결국 5000만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필리버스터 이제 시작일 뿐이며 자유·민주·공화·법치의 정신을 일깨우는 운동으로 국민을 초대하는 하나의 초대장이 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형사사법제도는 정치 구호로 설계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그 피해는 조용하지만 깊게 국민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아직 핵심 절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설계를 국민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법,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 2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면 권력 분산이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실체는 중수청이라는 거대 괴물 수사기관을 만들어 놨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중수청 국가다, 중수청 공화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청법안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요 그리고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집행을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없습니다. 중수청에 입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소청의 이 통제 기능이 완전하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입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소청과 관련돼서 중수청에 대해서 이 법안,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인 경찰을

관장하고 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또 중수청 수사관에 대해서 직무적격심사를 통해서 면직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중수청이 선거, 부패, 금융 등 소위 말해 고도로 정치화된 사건을 다루는 경우 그 상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중대범죄 수사가 행안부장관의 뜻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전개될까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행정부·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이제 입법·사법·행정 통째로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가 왕 중의 왕의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왕 중의 왕이 되어 버리는 격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 공화국입니다, 민주당 공화국. 왜냐하면 공화국의 본질이 뭡니까? 공화국의 본질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런데 견제와 균형이 온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의 개혁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검찰의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청법안이 공화주의에 반하는 법안이요, 민주공화국 법안이 아니다, 민주당분들만의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이 법안을 속도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헌정질서의 문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졸속 입법, 개혁이 아닙니다. 비어진 절차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윤상현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검찰이 아닙니다. 저 윤상현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으켜 온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와 민주공화정입니다. 이 땅의 선배들의 거룩한 희생 속에 핀 자유와 법치와 민주공화정을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꼭 자유와 법치와 민주공화정을 끝까지 지켜 낼 수 있도록 저 윤상현의 충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물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충정만은 꼭 해량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다수결의 원칙이 생각납니다. 다수결이라는 게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를 같이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다수결 원칙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것이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

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말씀하신 분이 바로 민주당의 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 정치철학, 정치사상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아니고 권력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해량하여 주십시오.

졸속 입법, 개혁이 아닙니다. 비어진 정의,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이 법안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민주공화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성윤)

(17시10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은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입니다.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 인권 옹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으로 정권에 빌붙고 국민을 겁박하면서 정권까지 노리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쫓겨난 저 이성윤을 국민께서 국회 법사위에 보내 윤석열과 싸우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이었으며 진정한 정의를 염원해 온 국민들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침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직접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 행사해 온 구조는 애초부터 권한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유산인 경찰 파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입법과 제3공화국 헌법을 통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 재판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입법을 주도한

엄상섭 의원과 한격만 검찰총장은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검찰 파쇼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향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과 검찰총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조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구조 속에서 검찰은 자기편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기소를 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는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 아닌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사 인력이 대폭 늘어났고 무력보다는 법을 통한 통치라는 민주화의 역설이 작용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순차적으로 장악해 왔던 권력기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권력을 스스로 생산하고 급기야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표적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이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정의를 비틀어 왔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 앞에서는 비굴하게 눈을 감고 덮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 왜곡과 조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검찰의 이중 잣대는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지난 78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다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해서 정권까지 잡는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은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로 결론을 정해 놓고 끝없이 표적 수사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는 조작과 왜곡을 동원해 죄를 만들어 내며 자기 편의 범죄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이러한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저질러진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 증거 조작과 사건 왜곡, 권한 남용과 봐주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며 사건을 마음대로 조작하고서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하는 사람이 다시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좌우하는 구조 속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면 예외 없이 남용의 유혹이 생기고 그 권력이 통제받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일이고 국민을 겁박하면서 정권까지 노리는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이 더 이상 흉기로 쓰이지 않도록 검찰권력을 민주주의 통제 아래에 두겠습니

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짚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역사에서 퇴장하는 건 자업자득입니다. 정권에 철저히 부역하면서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증거 조작과 증인 협박도 불사한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 정점이 윤석열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권 부역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일명 위례신도시 사건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민간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일당들끼리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민간 속기사에게 의뢰해 문서로 제출했지만 일부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조작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라는 단어를 '윗어르신'으로 바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민간업자와 유착하여 위례신도시 사업을 내정하고 승인했다는 근거로 썼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가 위례신도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사업자 선정 특혜를 준 것인지조차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무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못한 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의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자백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비열한 소설을 쓰더니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종합판입니다.

먼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에서도 벌어집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데에 용이하다라는 의미의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을 해서 개발 특혜를 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해석한 것입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 도중에 '재창이형'이라는 단어를 검찰이 임의로 '실장님'으로 조작하였고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재생하며 남욱 변호사에게 녹취록의 '실장님'이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냐는 질문까지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영학은 재창이형이라고 대답하고 대화 상대방인 남욱도 재창이형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대화 당사자들이 모두 녹취록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었다고 증언하는데도 검찰은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은 녹취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엑셀을 통해 토지의 적정 평가 금액을 1500만 원으로 계산하고서도 고의로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사업성 분석 엑셀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엑셀 파일에는 처음부터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계산하였고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평당 14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엑셀 파일을 수정하여 평당 1500만 원으로 숫자를 바꾸었고 검찰이 바꾼 엑셀 파일을 마치 대장동 일당이 평당 토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만든 파일인 것처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외에도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강압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 3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욱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에게 총 3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며 당시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하며 전달 대상이 정진상과 김용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남욱에게 진술을 가이드해 주었고 강압과 회유를 통해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남욱 증언에 따르면 유동규가 받아간 3억 원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준 정치자금이 아니라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사적으로 진 빚으로 인해 독촉에 시달리며 채무변제를 한 돈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대장동 일당을 강압·회유하면서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술 짜맞추기를 하였고 심지어는 남욱에게 패륜적인 폭언까지 하며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의 사건 조작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세 번에 걸쳐 북한에 지급한 300만 불을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 보고서에는 북한 측 인사 6명이 참석했고 이 중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리호남과 김성태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에서 진행된 쌍방울 비밀 만찬 동영상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된 대화가 일절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도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한 대행사 대표도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수사권도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하였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사권도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탓에 억울한 검

찰 조작수사 피해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연이어 들통나고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 개인의 알선수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정근 부총장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녹음파일을 본래 혐의와 무관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기소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 자체를 다른 범죄수사에까지 사용하도록 했다고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일명 먹사연까지 압수수색했고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혐의 내용, 관련 인물이 전혀 다른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먹사연 기소를 전형적인 별건수사로 보았습니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 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법원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 확정될 때까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정치생명이 끊겼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제 중수청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청의 조직입니다.

공소청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해서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 또는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에 대한 집행 지휘와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그리고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해 법률에 따라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정하고 공소와 상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해서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와 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그리고 무죄판결률, 무죄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 없어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을 가능하도록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해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1명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고 그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정치관여죄를 도입했습니다. 검사가 재직 중에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될 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소청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치검찰이 해체되고 또 그렇게 해체된 데에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원인이었고 자업자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가지고 있는 폐해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해서 썼던 그리고 가지고 있던 생각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 썼던 '그것은 쿠데타였다'라는 책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표를 던진 어느 검사장의 심경에 나는 적잖이 공감했다. 그가 퇴임의 변에 적은 취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검찰에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것은 존폐와 무관치 않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일부 검사들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정치의 단맛을 좇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조직의 존폐 위기임은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그 증거가 바로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는 검찰 내 자신의 패거리를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지를 앞장서 방해했고 한술 더 떠 자신의 행위를 정의로 포장했다. 이른바 보수언론들을 활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공정할 것이라는 세간의 믿음을 역이용한 것이다. 청와대는 윤석열 사단이 제공해 준 적폐청산의 결과에 취해서 검찰 패거리의 위험성을 간과했다.

마침내 윤석열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검찰을 쥐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전두환의 하나회가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구별하자면 전두환은 총으로 위협했고 윤석열은 국민과 인사권자에게 기만전술을 사용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쿠데타였다.

윤석열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조직을 제물로 팔아먹은 셈이다. 하지만 그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딱 한 가지 기여를 했다. 그는 정치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검찰의 조직 내부가 썩어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었다. 그리하여 특정 패거리만의 집단이기주의와 불공정하고 무도한 수사관행을 척결하려는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적 저항의 명분을 재확인시켜 준 공로는 인정된다.

윤석열은 사냥하듯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여주지청장 시절이던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라는 게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해야 한다라고 수사를 사냥에 비유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사냥하듯 표적을 수사하라는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수사는 사냥이다’라고 할 때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이 울기만 해도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하면 뚝 그친다는 유행어가 시중에 돌 정도입니다. 그만큼 압수수색이 많았고 또 강압적이라는 뜻입니다.

압수수색이 언론에 지나치게 자주 보도되면서 그 폐해도 심각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9년 3월 시작한 사법농단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21년 4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재판정에서 ‘한 언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한다고 할 정도로 수사상황이 쉬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마구 재단되어 일반 사회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젖어들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사단의 수사 방식을 지적한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민생 사건보다는 기획·표적·보복 수사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아니라 죽이는 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골목의 압사사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마약사범을 잡으려고 경찰을 동원하느라 교통정리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다 보니 좀 더 자극적인 이슈를 필요로 합니다. 연예인과 마약은 과거부터 정치검사들도 선호하는 조합이고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들은 이윽고 연예인을 끌어들여 불리한 상황을 전환시켰습니다.

배우 이선균의 죽음이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현장이 찍힌 영상이 보도가 되고 주가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라는 여론이 들끓자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릴 만한 흥미거리가 필요했을 거라는 짐작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선균이 마약수사의 제물이 되어 언론에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비보를 접한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12월 27일은 내게도 몹시도 아픈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 차례나 약물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포토라인에 반복적으로 세워져 징역보다 치명적인 명예 상실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도 없이 회복 불가능한 처벌부터 받은 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사단의 수사에 치를 떨던 순간이 또 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 저를 기소했습니다. 제가 이임한 이후에도 또 다른 사건 수사를 핑계로 중앙지검 입구에 저를 세웠습니다. 저는 기관장으로 재직하던 바로 그 건물 현관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언론을 동원한 망신 주기를 당해 본 저는 이선균 사건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권력기관에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으면 법과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정치적 결정을 하는 등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되므로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패거리 문화에 휩쓸린 자들은 피의사실공표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릅니다. 이러한 불법적 관행부터 없애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사단의 본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본질은 간단히 말해서 특수통 패거리 문화입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철희 위원이 역대 검찰총장후보자 중에서 무슨 무슨 사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후보자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처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사단 득세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단어는 2017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부터 언론에 등장하더니 마침내 검찰 인사에서 그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 중에 보스 기질이 넘쳐 자기 식구만 챙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후배 검사들의 인사를 챙겨 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보스에게 충성하는 이른바 조직관리 요령입니다.

과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회처럼 군림하면서 주목받는 사건을 독식하고 그것을 통해 명성을 얻으면서 꽃보직을 계속 누려 온 특수통 출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도 특수통 검사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이른바 검란을 일으켜 총장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때도 이들이 동조하여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수부에서 장시간 함께 일한 인연으로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는 검찰 패거리 문화는 사실 어제오늘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말하는 윤석열 사단은 전 정부 요직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전 총장이 최고의 권력으로 직행하는 바람에 이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온전히 쥐게 되었으므로 그 패거리들도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존재는 검찰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들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믿어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공정을 외친들 의미 없는 주장이 될 뿐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기관은 그 존재가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 안에서 소집단이 자신들의 힘을 키워 대집단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 건강체가 죽게 되는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수사권을 사익이나 특정 세력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무질서한 패거리 문화가 자리 잡으면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고 조직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패거리 검사들 때문에 결국 검찰조직도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23년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북 콘서트를 관람하던 중 잠시 마이크를 잡고 덕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내의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유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나는 한동훈 법무부의 감찰 하나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군부 안에 사조직이 생기면 국가이익보다는 사조직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에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가적 불행을 불러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안에서도 패거리 문화는 자신들만의 집단이기주의를 좇아 행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기소가 됐습니다. 중앙검사장으로서 최초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중앙지검장을 기소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 1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죄목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김학의의 출국을 방해한 것은 불법임에도 그 과정에 대검 총장과 차장도 모르게 사전에 제가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안양지청이 수사를 개시하자 제가 막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전혀 실체와 맞지 않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설령 제가 그런 죄를 지었다 한들 각종 비리로 의심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도주로 의심되는 출국을 하도록 그냥 놔두는 게 옳았다는 말인가?

하물며 그 일과 무관한 나를 그 사건에 엮어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웠습니다. 누구나 소송에 걸리면 재판 준비로 일상이 힘들어지고 생계마저 위협을 받습니다. 저 이성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법을 전공한 저도 저의 사건에 대응하려면 평정심을 잃기 쉽고 일상에 지장이 생기므로 응당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행히 1심에서 진실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저의 불행을 원하는 검찰 내 세력은 실력 행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소를 했고 다시 저는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021년 3월 발표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관련 입장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들이 관련된 이 사건은 제가 지휘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더더욱 저와는 무관합니다.

대검 지시에 대해 일선 청의 이의제기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의사결정 구조상 김학의 출국금지 건에 대해 수사나 감찰을 못 하도록 반부패·강력부가 일선 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형사절차법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법상 고위직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의 관할이므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이다.

셋째, 수사의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원고검장에게 저에 대한 수사를 맡겨 놓고 위법하게 자신이 나서서 직접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지휘계통입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은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관계에 있고 그 가족 내지 윤석열과 관계 있는 이른바 특수라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찍어 내리려는 표적수사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직 공무원이므로 뇌물이나 청탁금지 위반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의 무료 변론마저 거절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가장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 가장 힘든 일은 없는 기억을 만들어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일도 잊고 사는 세상인데 일선 청에서 일상적으로 대검에 보고한 수천 건 중의 하나에 불과한 내용을 기억해 내라는 것이 도대체 사람의 능력에 맞는 주문인지, 그것도 2년이나 지난 일을 말입니다.

저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꼬박 2년을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참모로 근무했습니다. 첫 1년은 형사부장, 나머지 1년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참모는 전국 60여 개 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언제든지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지휘를 받아 다시 일선 청에 전달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근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1시를 넘겨 총장에게 보고한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8시에 아침 일과를 시작했는데 소속 과장이나 연구관은 그보다 한두 시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선 청에서는 통상 매일 수십 건의 보고서가 대검찰청으로 올라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주임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차장이나 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고 그 후에 주임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결재를 다시 올려서 자연스레 종결처리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일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 부장이나 차장을 고발했다면 검찰 업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이없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검찰이 저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고 저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기소된 상황에 대해서 송구할 따름이다. 대검과 일선 청, 검찰청 내 사건의 결재 등 검찰 업무에 대해 마땅한 법원의 평가가 따를 것이다. 저에 대한 재판은 오롯이 제가 감당해 내겠습니다. 수사팀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반부패·강력부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양지청 모 검사가 제출한 이른바 공익신고서가 언론에 떠오르자 제가 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했다는 등 수사 과정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까지 거침없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익신고라는 명분을 빌려 사건을 만든 배후와 저의가 의심될 만도 했습니다. 당시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이 있는지 묻는 질문었습니다. 저는 단순명

료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사에 관여한 것이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언론에서 수사 관련 보도를 하면 저는 수사팀이나 공보담당자에게 항의합니다. 수사팀은 언론에 흘리지도 공보하지도 않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런 후에도 수사가 진행될 때면 어김없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흘리거나 공보했다는 사람은 없는데 언론이 어떻게 수사 상황을 훤히 알고 기사화할까.

저는 수사의 과정 과정마다 이른바 보수언론의 보도에 대응하느라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2년 전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기록이나 보고서가 없는 상황인데 언론에 보도된 수많은 의혹들을 무슨 재주로 일일이 대응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시시각각 보도되는 내용은 생경한 것도 많았습니다. 억지 사건들이 정녕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나는 사람이 범죄적 상황에 처할 때의 그 심리를 잘 압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어떤 꺼림칙한 결정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보통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특이한 것이라서 잘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있었다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 기억에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일상적 업무 중 하나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되니 답답하여 업무일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 30년을 보내면서 중요하거나 결심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날마다 업무일지에 기록해 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난 뒤였는데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2019년도 업무일지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도 3월부터 7월까지 기록이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답변이 될 만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수사팀에 제출했지만 그들은 제 업무일지를 믿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수사에서 재판까지 모든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2021년 설날 무렵에 수원고검장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갑자기 수원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한다니 뜬금없고 이상했습니다. 보통 고등검찰청은 일선 지방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고검장에게 이유를 물으니 아무튼 자신이 지휘를 한다며 저에게 설 연휴기간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후 다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저는 서면조사를 받거나 서면진술서를 내면 안 되는지 물었고 수원고검장은 공익제보 사건이므로 전원 면접조사를 한다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사팀에 협조하는 뜻에서 우선 기억이 나는 대로 적어 서면진술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낸 진술서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반드시 출석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가 느닷없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퇴근 무렵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로 수원지검 수사관이 가지고 온 출석요구서에는 그 주 금요일이나 주말에 출석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사무실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이틀 후인 수요일에 다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검찰에서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수사 내용이 몇 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고발 요지나 피의사실 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니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해서 확인 후 출석하겠다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 토요일·일요일·삼일절 중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 사이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사건기록 사본을 살펴보았으나 사건이나 고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출석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2021년 2월 말부터 변호인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호사들이 제가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서 이해충돌 때문에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방으로 물색한 끝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임한 사건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수십 년간 검사로 근무했으니 그나마 변호사들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갑자기 수사를 받다 보면 변호인을 급히 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인 이유, 변호사와 이른바 궁합이 안 맞는 등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말을 막연히 남의 일처럼 피상적으로만 알다가 직접 제 일로 경험해 보니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 공수처에 이첩이 됐습니다. 공수처장이 저를 조사한 후에 다시 저를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저를 직접 조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 등 소수의 직원만으로 막 출범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원지검에서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통해 고위직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권한이고 이를 다시 검찰로 이첩해 수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에 이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재이첩한 것은 수사 후 공수처에 다시 송치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것처럼 공수처는 수원지검이 돌려받은 사건을 수사해서 결론을 낸 후 공수처에 재이첩할 것으로 예상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2021년 3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사임했습니다. 그해 4월 법무부는 후임자 지명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에 돌입했습니다. 그 무렵 언론에는 검찰이 흘린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이 예상해서 쓴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할 말을 다 하리라 다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앙지검 검사장을 체포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고 하면서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후 체포영장에 대한 소식은 지금도 듣지 못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는지 아니면 대검에서 청구를 불허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나와서 수사심의위원회, 제가 경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믿을 만한 지인의 조언에 따라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모양새가 빠진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제가 대검에서 근무할 때 국민을 위해 운영하던 제도이

니 한번 믿어 보자는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수사심의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심의회에 보여 줄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변호인이 준비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대검에 도착하여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수사심의회에 출석했습니다. 대립적인 토론이 아니라 각자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가 설명할 때는 밖에서 변호인과 대기하고 다시 제가 변호인과 함께 설명할 때는 검사가 밖에 나가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사심의회는 '직권남용죄의 형이 얼마나 되냐' 같은 질문만 할 뿐 제 변호인이 설명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아예 없는 듯했습니다. 나중에 바꿀 기회가 있으면 수사심의회에서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심의회는 기소의견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날 검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교류가 없던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의 사정에 대해 묻지도 않고 세간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특정 세력이 그토록 저에게 셀 수도 없이 해 댔던 말과 내용이 너무도 똑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형님, 오늘 심의회 결과를 보면서 제일 안 된 분이 형님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언제부터 형님이 언제, 어떻게 퇴장하여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없이 비난하고 검사로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정권에 왜 저렇게 빌붙어 있냐는 식의 말을 할 때마다 안타까웠다.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지금은 형님이—형님은 저를 말합니다—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더 이상 늦추시다가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이 말은 더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오전 '나는 수사를 다 했으니, 소임을 다했으니 검찰과 국민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짧은 한마디를 하고 사의를 표하십시오. 검사들이 버렸고 정권도 버렸으며 이제 일반 국민들도 버렸으니 검사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도, 재판도, 새 총장 취임도, 더 나아가 정권 교체 등 모든 상황을 대입해 보더라도 형님—형님은 저를 말합니다—중앙검사장을 마지막으로 하심이 더 이상 곤경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 듭니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저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 재판을 받을 때 제 심정을 최후 진술서에 썼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제가 최후 진술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학의 출금 과정 그 이후에 이루어진 안양지청의 긴급 출금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또 개입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과 이 법정 수사·증거기록을 볼 수 있었는데 저도 수십 년 동안 수사 업무를 해 온 법률가이기에 이 재판에 관하여 재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의 수사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소입니다. 이 사건은 선택적 지록위마식 기소이고 또한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제 나름의 억울함과 답답함에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이 사건은 대검의 통상적 지휘·보고 절차와는 다른 법무부의 개

입이 혼재된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일선 청의 구체적 사건의 지휘에 관여하지 않고 대검이 일선 청과 협의하여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출금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 인사권이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나서서 검사장 승진을 목전에 둔 안양지청장에게 여러 번에 걸쳐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전화, 항의성 전화를 하고 안양지청으로부터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 경위보고서를 받은 것이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일 것입니다. 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도 없고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사 중단을 지시할 이유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었습니다. 저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일선 청에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뿐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서 근무 중 통상적인, 일상적인 업무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한 사건입니다. 긴급 출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인 제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하였던 일은 검찰총장의 업무 지시에 따른 직무상 통상적인 업무 과정일 뿐 대검 반부패부의 의지나 계획,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막연한 추론에 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기소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법무부 관련자는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형사기획과장이고 대검찰청은 총장, 대검 차장, 저,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연구관이었으며 청와대는 조국, 이광철 등 관여자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을 보면 제가 이들과 어떻게 의사연락이 되었고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이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행위를 했는지 또 이들에게 어떤 지시나 건의를 해서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른바 사후 확증편향이나 또는 '나는 줄곧 그걸 알고 있었어'라는 효과처럼 어떤 사건의 결과가 있고 나서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경향에 따라 저도 마치 이들 관련자들과 모두 관련이 있고 이에 따라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 수는 없어도 그 결과가 있으니 어떤 책임이나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른바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이렇게 조작기소, 표적수사 그리고 언론 피의사실공표 이런 행위를 한 수사가 어떻게 유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김학의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무렵 고발사주 혐의로 공수처에서 기소하여 1심 재판 중인 검사장에게는 검찰이 감찰, 무혐의를 해 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 무죄를 받은 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주장을 했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무렵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은 헌법을 외쳐 오고 있다. 총장을 사퇴할 때에는 헌법 파괴를, 대선에 출마해서는 헌법정신을 운운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각종 행사에서 어김없이 헌법정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는 윤석열이 가슴으로 헌법정신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에 일어난 총선개입 의혹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혐의 없다며 감찰을 종결한 사례를 저는 검사 생활 30년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김학의 출금 사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가,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입니까?

김학의와 이성윤을 아무리 맞바꾸고 김학의와 이규원을 뒤섞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포장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한 말 중에 수사로 보복하는 검사는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균형과 비례,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적 죽이기로 보이는 윤석열 사단의 수사 방식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은 끝도 모르게 추락하는 검찰의 명예입니다. 현 검찰은 민생사건보다는 보복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지금의 친윤 검사들이 수사권을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채널A 수사기록을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와 박은정 검사를 수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카투사 근무 시절 아들이 병가를 낸 것을 문제 삼아 추미애 장관을 겨눈 수사를 했습니다. 주야장천 야당 대표를 털어 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사권을 남용하는 유치찬란한 행위들이야말로 보복수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더라도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감히 대통령실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온갖 보복수사를 자행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었고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저는 이처럼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검찰은 결국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검찰 폐지로 갈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검찰이 가져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믿어 주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성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은 배이고 국민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또한 국민이라는 물에 뜬 배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검찰로 인해서 헌법 가치가 추락했고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국민을 극단으로 몰고 갔는지. 그리고 윤석열이 벌인 자가당착적 수사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5일 서울중앙검사장이었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자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저에게 물어 왔습니다. 저는 수사 실무자급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는 모르겠는데 총장으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겪어 본 검사 중에서 가장 무모한 성격이고 수사 방법도 잔인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대검 차장과 감찰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윤석열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들은 서로 어찌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다가 우선 취임 후 인사 조치를 보기로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는 대부분이 그대로 유임되거나 전보되었습니다. 사직을 하는 동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근무하지 않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약 일주일 정도 윤석열의 참모로서 그와 동거하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취임식이 끝나고 제가 윤석열에게 물었습니다. '취임사는 어떻게 썼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어, 내가 하루 저녁에 취임사를 일사천리로 써 버렸지'.

그 후로도 헌법주의자 윤석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검찰이나 검사들이 헌법을 논하거나 헌법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보통 헌법의 구체화 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같은 법률만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인식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실무 규정인 수사준칙이나 인권보호수사규칙, 공보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헌법까지 수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정치권의 먼 이야기였고 오히려 검사가 헌법을 자주 언급하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기 검열을 한 탓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것도 지키지 못하는 집단이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할 때도 헌법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법률이나 하위 법규인 인권보호규칙이나 공보 규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헌법 1조를 언급했습니다. 헌법 1조를 인용하는 분들은 국민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원한다, 이런 용어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정치인들이 쓰는 신호이고 자기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주로 이 표현을 쓴다. 검찰총장이 이 표현을 썼을 때 받은 느낌은 검찰총장 이후까지도 생각한 것 아닌가.

저는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과연 헌법의 수호자였을까, 헌법을 잘 지킬까, 최소한 자신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헌법 가치를 잘 지킬까, 꼬리를 무는 자문자답에 잠을 설치고는 했습니다.

만일 윤석열의 취임사대로 윤석열이 언급한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켰다면 저는 그를 믿고 응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저는 끊임없이 윤석열과 대립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의 우군이었던 언론이 저를 정치검사로 몰아세우는 것을 보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윤석열은 결코 헌법을 수호하거나 자기가 취임사에서 한 말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습니

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 상식과 정의, 민생과 경제를 말할 때마다 검찰총장 취임사가 생각이 나서 웃픈 마음이 앞섰습니다. 때로는 그가, 윤석열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통념상 공정과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 했는데 윤석열에게는 그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며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가 공정과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가치는 법전 속에서만 최상의 법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 속까지 스며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의식이나 합의된 의견이 헌법 조문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헌법이라는 옷을 걸치고 있듯이 말입니다.

헌법은 국가기관을 규율하는 준칙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직접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상위의 대통령까지도 규율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국가 작용은 물론이고 시민들 각각의 생활 영역에서도 살아 있는 규범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은 국가기관, 특히 검찰의 헌법 위반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4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신체를 함부로 구속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이 특종에 메마른 언론을 이용해서 특정인의 혐의사실을 유포하는 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과 무리한 기소가 끝도 없이 전개되었습니다. 절제를 모르는 검찰권력 행사는 오히려 그처럼 깨끗한 정치인이 없다는 방증을 만들어 내 주었습니다.

저는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노신사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들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수사가 길어지고 압수수색이 수백 번이 이어져도 그럴 듯한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쳇바퀴 도는 듯한 뉴스에 이제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나는 정치인 중에 이재명이 제일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속내를 드러내자 옳거니 하면서 좌중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판사보다 먼저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 있겠지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야당만 털 것이냐라는, 여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심이란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가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무려 1년 반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청구한 결과였습니다. 평생토록 완전 무결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찌른 칼날을 계속 비틀어 가며 그 정도로 털어 대면 웬만큼 간 큰 사람도 견뎌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

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참외 서리를 한 것도 몰아가자면 절도죄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한 잔 술에 젖어 논길에 오줌을 눈 노인도 처벌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 거칠게 몰아가면 간이 오그라들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수사권을 남발하면 무죄 제조기라는 오명이 따를 것입니다. 무리한 기소 후에는 유죄 판결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므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이 여럿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정 언론과 정파에서는 그들의 죽음까지도 이재명 대표 책임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오래 몸 담았던 저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사는 과유불급이요 사필귀정입니다. 심지어 같은 직업을 가진, 그것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 저에게 혐의를 씌워 수사를 할 때에는 그야말로 토끼몰이를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21년 정초부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화살이 엉뚱하게도 제게 꽂혔을 때였습니다. 사냥감으로 찍혀 포획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치검사들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립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속보를 띄우고 기사에 언급된 대상이 범죄자라는 의심을 대중의 기억 속에 심어 놓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또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이른바 언론플레이로 먹잇감이 된 피의자를 주변에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제 아내가 뉴스를 보고 '당신 설마 무슨 일 저지른 것 아니지요?'라고 물었을 때에는 정말이지 앞이 캄캄해지고 제 발로 딛고 있는 땅바닥이 밑으로 쑥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검사 생활을 한 저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일반 피의자들, 국민들은 이런 수사를 받을 때 느끼는 심신의 고통과 고립감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치검사들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장난질을 시작하는 순간 헌법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심지어 일부 검사들은 사건 피의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의 무절제하고 무도한 수사 방식을 반성하기는커녕 적당한 희생양을 찾아 남 탓으로 돌리곤 하였습니다. 이런 검찰이 인권을 논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선균의 죽음에 대해 제가 각별히 애도를 표했던 이유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권력기관에 몸담은 자들이 이선균의 극단적 선택을 목도했으니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각을 바꿀까요? 글쎄입니다. 제 생각은 아니올시다에 가깝습니다. 썩은 권력은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곪은 상처는 외과 수술로 도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도했던 검사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앉은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거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 윤석열이 속한 여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그리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는가, 말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협치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조작 사건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김건희와 함께 해외 순방을 다니는 자기 모순을 뭐라고 변명할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정상들의 눈에 주가조

작 사건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자가 어떻게 비쳐질까, 그들이 한국인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 상상만 해도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을 때이므로 그를 함부로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대표도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그것을 핑계 삼아 협치를 거부했던 윤석열의 정치는 졸렬할 뿐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아니었냐고. 평생토록 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주가조작의 공범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오직 김건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못 하는 검찰의 행태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 흔해 빠진 압수수색은 다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대단히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했습니다. 무도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린 일부 정치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며 불평등과 불공정을 심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99년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코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더닝 크루거(Dunning-Kruger) 효과로 알려진 이 연구에서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갖게 한다'는 찰스 다윈의 말을 증명해 줍니다.

무지한 자는 관심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므로 자기 확신이 강화되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 잘못을 알게 된 후에도 그 원인이 능력 부재에 있음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무능한 자기 자신을 오해하여 오만해지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은 과오를 저질러도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덮어 버렸습니다. 곤경에 빠져도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가 권좌에 오르면 그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관심의 눈을 주로 외부에 돌립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성을 띱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자는 남을 과대평가해 스스로 위축되곤 합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능하고 무지한 자가 오히려 유능한 자보다 먼저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저는 집권자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근거로 특정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내세우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정부의 주요 직책에 겁도 없이 검사 출신 측근들을 채워 넣는 저변에는 바로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해 보면 금융 전문가가 되고 부동산 사기범을 수사해 보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전직 검사가 국방 전문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손바닥 위에 들어오는 첨단 시대에 냉전의 낡은 이념으로 대립 구도를 만

들어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용산 전체주의적 발상이므로 더더욱 그러합니다. 공산전체주의를 몰아내자고 외쳐대던 자는 전체주의의 개념이라도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온 나라를 전체주의적 야만의 국면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그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만과 오만은 쌍둥이입니다.

검찰개혁을 외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정의감 하나로 변화를 추진하려던 저의 시도는 돈키호테의 무모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전방에서 몸을 던져야 하는 내부자에게 외부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줄탁동시전략이 필수였음에도 앞장선 장수들만 고립되어 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적진에서 볼 때 저의 처지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검찰이 집단이기주의를 누리고 시대적 대의만을 좇아 검찰개혁을 이끌기에는 중과부적이었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검찰 정권은 탄생했고 우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행의 싹을 정권 차원에서 과감하게 도려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업무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저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하는 표현이지만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이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대를 앞선 철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동력이 금세 고갈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국민의 동의와 깨어 있는 시민의 동참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입니다.

조국 장관은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갖췄음에도 법비들의 저항과 공격을 당해 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깨어 있는 소수만을 앞줄에 내세워 방치하는 무능과 안일함이 재현돼서는 안 됐습니다. 인간의 기본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만과 독선에 빠지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집단과 같은 힘을 가진 특정 집단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 역사를 퇴행시키는 비극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치의 무대에 올라 칼춤을 추거나 갈등의 요소들을 다반사로 법정에 끌어다 놓으면 정치는 무력해지고 정치본연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2024년 총선 이후에 정치권은 새로운 기류가 형성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검찰이 집단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정치검사들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또다시 국민의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이런 검찰,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검찰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체 후에는 검찰조직을 기소 및 공소유지 부서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은 국민에게 든든하다는 안도감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이 자신의 잘못에 비해 지나친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수사 신뢰, 사법 신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발췌해서 국민 여러분께 고했습니다.

이제 대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검찰이라는 이름을 짊어졌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돌이켜보면 영욕의 세월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쓰일 적에는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맞설 때에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내부적인 성찰에 실패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대가입니다.

대검찰청 별관 공원에는 동양권의 신령한 동물로 여겨지는 해치를 본뜬 동상 해치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마에 난 뿔로 악한 사람을 들이받는다고 전해져서 검찰은 이 해치상을 법집행기관의 상징으로 삼고자 1999년 5월 1일 법의 날을 기념해서 대검청사 로비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옷로비 사건 등의 여파로 검찰총장 2명이 연거푸 구속이 됩니다. 문제는 그 불똥이 애꿎은 해치상에게 튀었다는 것입니다. 해치의 뿔이 검찰을 들이받아서 그렇다며 해치를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검찰의 과오를 죄 없는 해치상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제 유리한 대로 이용하고 잘못을 지적받으면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검찰 DNA의 기원은 광복 즈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직후에는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민들을 억압한 순사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식민 사법의 여파로 검찰이 한시적으로나마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그리고 조건부 수사권을 갖춘 검찰은 군사정권의 정권 유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역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후 18시간만에 사형 집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재정권 입맛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부림사건 학림사건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문민정부 후에도 검찰은 한시적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장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모자라 직접수사권을 구실로 주차장법 위반까지 단속해 내며 검찰이 마치 사법의 왕, 사법 대통령인 양 군림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도 불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을 조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수사·기소권으로 조직이 곪아 가도 검찰은 반성하기는커녕 조직의 안위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습니다. 그렌저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도, 99만 원 불기소 세트로 전 국민의 비웃음을 사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검찰 위신이 추락해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날을 한껏 세워 공격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하자 가히 현대판 멸문지화의 수준으로 일가족을 무자비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잠깐 주어진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만의 것인 양 독차지 사용했습니다.

검찰 역사가 검찰권력 사유화의 역사로 치닫는 시점에 윤석열이 등장합니다. 전직 대

통령 두 명 그리고 대법원장 한 명을 구속한 후에 윤석열은 자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윤석열은 검찰권력을 정적 죽이기의 무기로 사용하면서 최대 타깃에는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대통령직에까지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된 순간 윤석열의 국정운영 방식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집권 후 검찰은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만 작동했습니다. 검찰권은 오직 본인과 주변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비리 무마에 동원되었고 검찰은 국민과 완전히 동떨어진 권력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는 사건에서 기소 열외가 됐고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명품백을 챙겨도 김건희만은 무혐의였습니다. 날짜까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건희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께서 '검찰,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만든 차제에 정치권력, 검찰권력을 영원히 누리려 한 윤석열은 끝내 12·3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저도 검찰은 윤석열 편에 섰습니다. 정치검찰이 국민을 외면한 채 권력만을 좇다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을 외면하는 순간 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했습니다. 검찰이 불러낸 시대적 요구가 검찰개혁이고 이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니다. 민주적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치검찰의 역사와 왜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의 운명을 맞게 되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민을 억압하다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아셨을 겁니다.

국민을 외면한 검찰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만악의 근원이었던 정치검찰은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두 기관으로 나뉘어져 인권옹호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78년 동안 사법 검찰로부터 그리고 독재 시절 독재정권에 부역하고 그리고 민주화된 이후에도 자신이 스스로 권력화되어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정치검찰, 오늘부로 검찰은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검찰의 자업자득이고 검찰 스스로 만들어 낸 운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이 다시는 국민 여러분을 겁박하거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주야장천 압수수색하고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해 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이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조배숙)

(18시50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가슴속에 살아 숨 쉬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실려 나가는 장례식 현장에 들어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78년간 이 땅의 평범한 이웃들을 지켜 온 사법체계의 근간이 폭주하는 거대 여당의 칼날 아래 형체도 없이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탈을 쓴 흉기가 국가 사법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소명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소청법 이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위헌적인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지만 그 필리버스터도 하루가 지나면 강제 종료되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 잘못된 입법을 알아야 하기에 다시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각에도 삶의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뼈아프게 마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오늘 대한민국의 거리는 찬바람보다 더 시린 경제위기와 불안으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코스피지수 6300선까지 뚫었다면서 전광판 숫자를 앞세워서 화려한 축배를 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치들은 국민의 고통을 가리는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철강의 도시 당진, 석유화학의 거점 울산 남구가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한 데 이어서 수도권의 인천 동구조차 생존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국가대표급 산업도시들이 줄줄이 위기지역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중동전쟁 탓, 국제 경기 악재 탓을 할 작정입니까?

국민 여러분!

전쟁의 여파가 닥치기 전에 주가가 6000을 넘나들 때 여러분의 살림살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몇몇 반도체 관련된 업종의 대기업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중견·중소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9%나 감소했고 실물기업의 64%가 시장 기대를 저버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는 7만 6000명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지금 서민경제의 모세혈관은 터지기 직전입니다. 실질 소비지출은 5년 만에 마이너스

로 돌아섰고 대한민국 가구 네 곳 중 한 곳은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적자 살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빚의 늪에 빠져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7년 만에 최고치인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 6000 시대의 진짜 민낯입니다. 국민은 적자 살림에 신음하고 가장들은 빚 독촉에 잠을 설치는 이 비극적인 시국에 국가 행정력과 여당의 당력은 어디에 집중돼 있습니까? 무너진 지방경제를 살리는 일입니까? 100만 채무불이행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입니까?

고용지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취업의 문턱은 청년들에게 거대한 절벽이 되었습니다. 서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주거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극치이고 기업들은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노조의 횡포와 그리고 또 정부의 서슬 퍼런 규제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주부들이 시장바구니에 무엇 하나 선뜻 담지 못할 정도로 둥둥 떠오른 물가는 이제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경제는 더욱 참담합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의 그늘 아래서 지방은 속출하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심장부인 번화가조차 '임대'라고 써 붙인 공실 상가들이 줄을 잇고 있고 유령도시처럼 변해 가는 골목마다 서민들의, 중소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이 마주한 진짜 민생의 낯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해서 국민은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국가의 행정력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혈안이 돼서 달려드는 곳은 오직 한 곳, 본인들의 범죄를 파헤친 검찰 해체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라는 유령 같은 입법 폭주뿐입니다. 민생과는 하등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민생을 더 처참하게 파탄 낼 이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국가 사법체계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데 모든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벌이는 투쟁은 국민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까? 민생이 깨지고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으려는 이 졸속입법은 법치주의 본질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생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민주당이 저지른 무책임한 입법 도박의 결과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과거 공수처를 설치할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도 저들은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실적은 형편없고 오직 국민의 소중한 혈세만 잡아먹는 세금 포식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입법폭주를 통해서 수사권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기형적인 시스템을 억지로 탄생시켰습니다. 그 혼란의 대가는 고스란히 애먼 국민과 범죄피해자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지연은 일상이 되었고 사건은 수

사기관이 서로 핑퐁을 치면서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사이에 정작 엄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들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혼란의 발단인 민주당이 이러한 참담한 실패에 대해 단 한 번의 사과도 책임 있는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려 합니다. 실패한 공수처와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제는 아예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이름만 바꾼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서 국가 수사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무능이지만 그 잘못을 알고도 특정인의 방탄을 위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완성의 실상은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완전한 붕괴이자 권력자들을 위한 무법천지의 완성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물론 검찰개혁해야 되지요. 하지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만 하게 하는 공소청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청, 권력의 오남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없어서 허울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 그리고 위법, 수사능력이 전혀 없이 완전히 무능한 이런 조직들이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아옵니다.

아마 민주당은 이렇게 강변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이 충분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공소청법은 2024년 8월 29일에 의원 입법으로 최초 발의됐고 2025년 7월에는 법안심사소위 1소위 상정까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민주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진지한 숙의였습니까? 아니면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었습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내팽개쳐 두었던 법안들을 정치적 위기 때마다 꺼내 쓰는 방탄용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십시오. 2026년 3월 3일 정부안이 제출되고 불과 열흘 남짓 지난 3월 16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부, 그리고 단 하루 만인 17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누더기 법안을 뚝딱 만들고 18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그리고 19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제 내일 통과를 시키겠지요.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정의 실현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받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우리 법제의 뿌리인 대륙법계의 검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국가사법시스템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의 대들보를 단 며칠 만에 뽑아 버리고 이름만 바꾼 공소청을 세우겠다는 지금의 작태가 과연 78년 이어 온 사법체계를 개편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까? 반년에 한 번꼴로 잠자던 법안들을 살짝 건드리는 시늉만 하더니 막상 정부안이 제출되니 얼씨구나 하면서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덕지덕지 이어 붙인 이 누더기 대안이 어떻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숙의의 산물이 아니라 속도전이라는 폭력으로 빚어낸 사법 파괴의 산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의견은 고사하고 학계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현장에서 범죄와 싸우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호소, 범죄피해자들의 절규는 단 한 마디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정청이 밀실에서 짠 시나리오대로 다수 의석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입법 폭주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도는 정의가 아닌 도살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전국의 검찰 인력은 정원 1만 706명에 현원 1만 378명에 달합니다. 이 방대한 조직과 78년의 수사 노하우를 단 며칠 만에 짜깁기해 만든 법안으로 시계 부품 분해하듯 찢어 놓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와 계시네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그림을 여기만 보여 드려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작아서 잘 안 보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큰 글씨는 보입니다.

○조배숙 의원 큰 글씨는 보입니까?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셨나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장관님도 잠깐 보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할 텐데요. 이해하셨나요?

의장님, 보여 드릴까요? 안 보여 가지고.

○의장 우원식 앞에다만 대고 하니까 내가 안 보이지.

○조배숙 의원 아, 죄송해요. 오늘 제가……

○의장 우원식 다 봤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공소청법안의 치명적 독소조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공소청법안(대안)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독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렸지만 그 실체는 수사력을 거세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요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 또 보완수사권 이게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기류로 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쨌든 이 법에서는 범죄수사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이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경찰이 차려 준 밥상을 검토만 하는 서류검토관으로 전락합니다. 현대 범죄는 고도의 지능화·조직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면 대형 부패 사건이나 경제범

죄는 입증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검사의 손발을 묶어 버림으로써 권력형 비리와 거대 악들이 법망을 비웃으면서 활개 칠 수 있는 범죄 프리패스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또 이 법안의 가장 악랄한 독소 중의 하나는 부칙입니다. 부칙의 6조 3항을 보면 90일 시한부 수사가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당시에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서 공소청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면서도 반드시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조 원대 가상자산 사기 사건 또 수십 명의 정치인이 얽힌 권력형 비리 수사, 방대한 회계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횡령 사건을 단 90일 만에 끝내라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복잡한 권력형 비리나 수조 원대 금융사기 수사를 단 90일 만에 끝내라는 것은 수사를 포기하거나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90일을 경과하여 사건이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이송되는 순간 방대한 기록을, 정말 방대한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새잡이입니다. 이것은 수사의 전면적인 중단과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수사력이 이토록 무력하게 리셋되는 그 어두운 틈을 타서 범죄자들은 유유히 증거를 인멸하고 자금을 은닉하면서 법망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완결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수사를 중단하고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라는 항복 선언이자 사법 방해의 시간표에 불과합니다. 명백히 특정인과 특정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탄 꼼수가 법문에 박힌 것입니다.

또 법안 25조를 보겠습니다. 부장검사의 지휘권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대안에서는 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의 사무를 그 부의 사무로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행정 및 일반사무라는 표현에서는 벗어났지만 제4조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이 사무라는 말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에서 부장검사가 지휘할 사무가 무엇이 남습니까? 결국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기능은 마비될 것이고 이는 주임검사의 독단이나 외부의 압력에 팀 전체가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의로 파괴해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저의가 명백합니다.

45조 그리고 59조에 보면 정치 관여죄 또 징계 파면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45조는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에서 징계 처분에 의한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제59조는 정치 관여죄를 신설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의 위험성은 남용하기 쉬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정치적 수사라는 낙인을 찍어서 정치 관여죄로 기소하고 징계를 통해 파면시키겠다고 협박한다면 그 어떤 검사가 소신 있게 권력의 심장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검사의 목에 정치적 목줄을 채워서 사법의 독립성을 영원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단순히 법안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마지막 불꽃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사법 대재앙의 시나

리오는 결코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사법 파괴의 흑역사입니다.

법왜곡죄,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에 이어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맞이할 미래는 이렇습니다. 지난 78년 동안 쌓아 온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과 검찰의 수사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음대로 끝냅니다.

여기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같은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신설된 중수청은 공수처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2의 공수처가 되어서 중수청의 수사 핑퐁, 저조한 실적은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뇌물을 받거나 또는 권력자의 외압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사실을 알아냈다 칩시다. 그러나 알아낸다 한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권력자를 함부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려 한다면 수사관과 검사, 심지어 판사까지도 법왜곡죄라는 올가미에 걸려서 고소 고발당하고 공소 취소와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용기 있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이 모든 외압을 이겨내고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 징계하고 탄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2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22명으로 채워진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마저도 유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합니다. 비리 권력자들은 사건을 정치적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이른바 4심으로 지연시킬 것입니다. 만약 헌법소원마저 패소할 기미가 보이고 피고가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면 아예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면소 판결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가 법 테두리를 빠져나가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사법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꿈꾸는 그리고 지금 이 일련의 법안들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없애며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재물로 바치는 이 기괴한 연극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법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아니,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며 싸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법안이 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독배인지를 각 부문별로 하나씩 조목조목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공소청법안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조직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작동불능의 기형적 기관을 심어 넣으려는 명백한 사법체계 붕괴 법안이자 위헌적 입법 폭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별 조항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청이라는 정체불명 기관의 설

립 자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미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억지로 해체해 버렸습니다.

헌법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기관이 있고 헌법상 기관이 있다. 헌법기관은 분명히 그 기관 자체에 대해서, 국회·법원 이렇게 기관 자체에 대해서 아예 헌법에 못을 박은 경우가 있고 검찰 같은 경우는 헌법에는 검찰이라는 말이 없지만 검사·검찰총장 이렇게 헌법상 어떤 조직을 전제하고 그 수장과 그 구성원에 대해서 헌법에 기재를 한 것은 이것은 이미 헌법이 그 자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이것을 법률로 해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억지로 이렇게 해체했습니다. 만약에 해체를 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하위 법률 제정해서, 헌법의 하위인 법률 제정으로 국가의 수사와 기소체계를 쪼개고 격하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즉 위헌입니다.

저는 이 위헌적 법안이 품고 있는 치명적 독소조항들,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참히 난도질당한 수사권 박탈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의 일상과 인권이 어떻게 처참히 짓밟히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증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법안의 뼈대를 이루는 조직의 명칭과 체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를 보시면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핵심 국가 요직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검찰총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영장청구의 주체로서 검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헌헌법 이래로 검사와 검찰총장 그리고 그들이 속한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이 그 존재와 지위를 직접 결단하고 보장한 헌법상의 기관, 즉 헌법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단지 법률 하나 만들어서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거세하고 이름조차 공소청이라고 바꾸면서 그 위상을 격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11조에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마치 국회를 없애고 입법청을 만들면서 그 수장을 국회의장이라고 부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의장님이 계시는데 그것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차마 지우지 못하니까 조직은 해체하면서 간판만 남겨 두는 기형적인 누더기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또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을 보면 종전 정부안에 있던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패널을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원래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거기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장관님, 이게 원래 우리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장님, 이게 원래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의장님,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간판을 바꿔 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3심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무지의 소산입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엄격한 3심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아까 제가 보여 준 대로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편제되어서 각각 법원의 급수에 맞물려서 공소유지와 재판 수행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최고기관인 대공소청을 그저 공소청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전체 기관명인 공소청과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관청의 명칭이 동일해지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집니다. 비유하자면 대법원의 이름을 그냥 법원으로 바꿔 버려서 동네의 시군법원인지 국가의 최고법원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법행정에 심각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법무부 측 인사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 코미디에 가까운 것은 고등공소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바꾸는 대목입니다. 원래 광역이란 말은 시도 단위……

여러분,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행정적인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행정용어입니다. 즉 행정과 치안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급의 문제인데, 상급법원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는 1심·2심·3심, 상급심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이 1심 지방공소청·고등공소청·대공소청 그래서 그 공소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과거에는 고등검찰청,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하면 고등공소청 검사가 나오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공소청은 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광역이라는 단체를, 광역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광역은요 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소청을 마치 경찰청과 같은 그런 행정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저는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그 용어도 치안의 용어를 이렇게 써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을 하위법률로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려는 이 시도는 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 위에서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다수 의석이라는 완력만을 믿고 법률만으로 헌법기관의 본질을 없애는 것은 입법 쿠데타와 다름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참담한 것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겪은 처참한 개악의 과정입니다. 정부 원안의 규칙에 담겨 있던 검찰총장과 검사 직위 승계 규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검찰청 폐지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이상 기존의 인적자원과 지위를 승계해서 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비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위력으로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원래 민주당 인사가 국회의장이 되면 사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야당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간사도 선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사위의 운영 행태는 정말 비민주적입니다. 과연 저희가 OECD 국가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회복한 나라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 본을 보여야 할 법사위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은 문명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공소청이라는 빈껍데기와 인사승계라는 간판만 남겨둔 채 검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수사 관련 핵심 권한들을 모조리 날려 버렸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단 1%도 관여할 수 없도록 말 그대로 손과 발을 완전히 절단하고 눈과 귀를 막아 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 제4조 검사의 직무 규정입니다. 기존의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던 검사의 범죄 수사개시 권한, 즉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단 한 줄도 남김없이 증발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거악 앞에서도 검사는 스스로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압수수색을 기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4조제7호와 제8호를 보면 검사의 직무수행 권한 근거를 기존의 포괄적인 법령에서 좁은 의미의 법률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조희팔 사건 같은 교묘한 범죄수익의 환수 절차나 끔찍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같은 하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법령을 법률로 바꾸는 이 교묘한 단어 장난 하나로 시행령에 근거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추적하던 공소청의 수많은 실무적 손발마저 마비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영장주의 원칙을 어떻게 철저히 짓밟고 형해화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보면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의 주체는 오직 검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검사라는 직함은 단순한 행정부의 일개 공무원 직급이 아닙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권력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고 있는지를 통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수사기관이 자행했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직접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을 지휘하여 과연 이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합당한지 법률전문가의 눈으로 통제하고 걸러 내라는 헌법적 명령입니다.

헌법은 이런 국가 최고의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존재를 당연한 전제로 보고 이것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모조리 박탈당한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영장청구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가져온 영장신청 서류에 의구심이 들어도 검사는 직접수사할 수도 없고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서류에 적힌 경찰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읽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박탈하고 검사를 한낱 경찰의 영장청구 자판기나 서류 배달부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고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국민의 기본

권을 제한하는 영장 청구의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반헌법적 행동입니다.

더욱 치명적이고 경악스러운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지휘권과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영장지휘권의 삭제입니다. 수정안 제4조 2호를 보면 당초 정부안에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라는 명확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으로 둔갑해서 영장지휘권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 버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영장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 주거의 평온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 행사입니다. 그렇기에 그 청구부터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억울함이나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엄격하게 지휘하고 통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이라는 이 모호하고 무책임한 문구 아래서 통제받지 않는 강제수사가 난무할 위험이 큽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위법성이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제어할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입니다. 법적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횡행한다면 그 참혹한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될 때 구속기간이 10일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10일 그리고 1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검사한테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구속을 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밖에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0일 구속했는데 바로 검찰은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불기소를 하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일이라는 기간이 충분한 수사기간이, 수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석방하기가 뭐하고 하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좀 이상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이 안 된다면 수사를 제대로 못 해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계속 이것을 실무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구속 신청하면 10일간 구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10일, 한 번 연장하면 10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든지 하는데 이런 보완수사권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사법경찰관이 10일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검사는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나 이것을 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인치하고 10일 이내에, 구속기간 안에 다 송치하지 않겠습니까?

○조배숙 의원 아니, 송치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검찰이 2주 안에 정리를 하겠지요.

○조배숙 의원 아니, 그런데 검찰한테 수사권이 없는데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법안을 살펴보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할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할지 이런 문제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다시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의원 이 부분은 다시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논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예.

○조배숙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 막히고 좀 엄청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에는 아직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인 것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고 법뿐만 아니고 관련된 시행령들,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그러면 이 개정 작업은 정말 정치하게,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준비 없이 폐지한다 그리고 10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월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이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이 부분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월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이게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관계기관이 굉장히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형사소송법 개정뿐만 아니라 검사의 역할과 관련된 법령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조문만 해도 10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라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배숙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월까지 이게 과연 될지.

제 얘기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폐지와 동시에 이것을 좀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조급하게 폐지에만 목을 매 가지고 먼저 폐지를 성급하게 한 게 아닌가, 과연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여당으로서 과연 이게 올바른 입법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사지휘권마저 무참히 도륙이 났습니다. 정부원안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마저 수정안에서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이라는 모호한 단어만 남겨 놓았습니다.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경찰의 보조원이나 단순한 법률 자문가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이른바 특사경이 누구입니까? 조세, 환경, 노동, 관세, 산림, 식품 위생 등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특정 행정영역의 단속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행정 분야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 엄격한 법률 및 형사소송 절차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약 산림청 특사경이나 식약처 특사경이 법리적 검토나 증거능력에 대한 엄밀한 판단 없이 혹은 과도한 단속 실적에 쫓겨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하고 검토해서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걸러 냈습니다. 그러나 이 통제장치가 사라지면 법정에서 절차적 위법이나 증거능력 부족으로 무죄판결이 속출할 것입니다. 진범은 법망을 빠져나가 거리를 활보하고, 억울하게 수사를 받은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국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공봉숙 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 한겨레가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독, 현직 검사, 특사경 지휘 필요성 항변, 권한 남용 막을 길 사라져'.

지난 17일 당·정·청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발표된 가운데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조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공봉숙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특사경 지휘가 항상 달갑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께 설명해 주고 사건을 챙기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귀찮지만 꼭 필요한 일, 검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공소청 최종안에는 검사의 직무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공 검사는 특사경 간담회 때 뵙는 실무자 99%가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수사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 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실무를 접해 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 검사는 치열한 고민과 토론 중에 특사경 제도의 현실이나 검사가 특사경 지휘를 통해 실제 하는 일이 뭔지도 이야기가 된 건지, 수사 제도나 사법절차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특사경의 권한 남용을 우려했다. 그는 구청에서 수백 건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며 온갖 청을 만드는 김에 특사경청이라도 만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 검사는 피해자가 수만 명인 대규모 방판 사건에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돼 송치돼도 별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한테 무혐의를 받거나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서 공봉숙 검사의 이 발언을 뒷받침하는 경향신문의 단독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 넘긴 특사경 사건이 수두룩…… 지휘권 폐지 시 위법·부실수사 심각해질 것'.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지난 17일 합의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폐지를 포함시키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식품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경우 현재도 적지 않은 사건 방치나 부실수사 가능성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공봉숙 고검 검사의 이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검사 지휘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까지 받게 돼 특사경 일선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 검사 말대로 특사경이 맡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다수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소송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286건 확인됐다. 이 기간 교통 특사경의 전체 미송치 사건 중 32.3%다. 특사경들은 잦은 업무 이동과 그에 따른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 일반행정 업무 겸임에 따른 업무 부담, 특사경 인원 부족과 수사 경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의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서울 서대문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에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서울서부지검이 당일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아무런 대안 없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위법·부실수사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 이분은 경실련의 시민입법위원장이시네요. 이분이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 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어서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또 SNS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찰 등의 검찰화 그리고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렇습니다. 이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이것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면이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무서운 공권력 행사입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특사경이나 일반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나 적법절차 위반을 사전에 통제하고 시정하는 유일하고도 필수적인 인권 보호의 보루입니다. 앞서 정부 역시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은 법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통제장치를 국회 스스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무소불위한 권력남용 앞에 우리 국민들을 발가벗겨 내던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국민 인권의 최후 방파제 파괴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저지른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행,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나마 정부 원안에서 마지막으로 양심처럼 존재했던 제62조 직무배제 요구 조항을 통째로 날려 버렸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경찰 등 사법경찰관리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검사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 직무에서 즉각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인권옹호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검사에게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모조리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설령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자백 강요, 위법한 증거수집 등 끔찍한 인권 유린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그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직무배제요구권마저 모조리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제 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위법행위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권한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폭주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완전히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 인권보호의 거대한 공백은 고스란히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억울한 국민들의 피눈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른바 권력 분산과 견제라는 그럴싸한 포장지 아래 실상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땅히 갖춰야 할 통일성과 효율성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7조를 똑똑히 보십시오.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검찰청법 제7조 1항에서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던 '상급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개별 검사가 상사 눈치 안 보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보장하는 아름다운 문장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 실무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의 그저 정말 무지한 탁상공론입니다. 그리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독소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제주도에서나 강원도에서나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언제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부산 해운대에서 적발된 사람, 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존의 대검찰청은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규, 지침, 구형기준표 등을 마련해서 전국적인 기소 기준을 통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좁은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지휘를 받는다고 못 박아 버린다면 법률에 미처 명시되지 않은 수많은 내부 하위 예규와 지침은 그 구속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A 지역의 온정적 검사 만나면 기소유예로 풀려나고 B 지역의 엄격한 검사 만나면 징역 3년의 구형을 받는 극단적인 편차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혹은 어떤 성향의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는 끔찍한 사법 로또를 강요받게 됩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형

벌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개별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를 법률이라는 단어 하나로 끊어 내겠다는 것은 곧 사법행정의 무정부 상태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직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정안 37조를 똑똑히 보십시오. 이 법안은 국가 사법정의의 중추를 지탱해 온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당초 정부안 37조에는 명확하게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수사 지휘 근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이 조항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 네 글자를 교묘하게 도려내고 그 자리에 오직 각급 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만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수사 지휘관인 검찰총장에게서 전국 단위의 대형 권력형 비리나 부패사건에 대한 공소의 통합적 지휘를 내릴 권한, 이 사건을 배당하고 재배당할 모든 법적 근거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름만 총장이지 사실상 아무 실권 없는 동네 경로당 회장님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의 척추와도 같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흔적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총장의 지휘·통제가 사라지고 오직 각 지역의 공소청장, 지청장만이 사건을 쥐락펴락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 조직은 수십 개의 지역 토호 세력으로 파편화될 것입니다. 결국 권력자들은 자신과 결탁한 특정 지역 공소청을 방패막이 삼아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수사 동력의 상실은 더욱 뼈아픕니다. 당장 전국적 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거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전국의 정예 수사인력을 한데 모아서 전문 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를 벌여야 되는 골든타임에 정작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고 직무를 이전할 권한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이 거대한 팀을 엮어 낸다는 것입니까?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정예 검사들을 모아서 하나된 힘으로 맞서 싸우던 그 위풍당당한 수사팀, 이제 대한민국 영토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조항은 국가의 지휘체계마저 마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입법 참사입니다. 만약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장관의 지휘를 일선에 하달하고 관철시켜야 될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권한이 삭제됐는데 장관의 명령이 어떻게 일선 지청에 도달해서 이행될 수 있습니까? 지휘의 연결고리가 싹둑 잘려 나가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컨트롤타워 자체가 완벽하게 셧다운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36조를 보십시오. 검사는 소속 공소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면서 물리적인 칸막이를 견고하게 쳐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범죄가 행정구역의 선을 가리면서 얌전하게 발생합니까?

황당한 것은 형의 집행과 영장 업무입니다.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해서 검거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등 관할 외 직무수행이 필수적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당장 서울에서 재판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도망자가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 숨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할에 묶인 서울의 공소청 검사나 수사관은 그 사실을 알아내더라도 부산으로 내려가서 형 집행장을 들이밀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이첩하는 사이에 범

죄자는 다시 밀항선을 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사 현실에서 이처럼 관할 외 직무수행이 필요한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를 법령에 일일이 명문화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억지로 꿰맞춘 법조항에 입법 미비로 인한 빈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사의 관할 밖 직무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위급한 상황임에도 범죄자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끊임없이 불필요한 위법성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일선의 범죄 대응역량은 치명적으로 저하되고 수사는 지연되며 그로 인한 억울함과 피해자 지원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36조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거대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무법 도피처를 대한민국국회가 앞장서서, 그것도 법률로 보장해 주는 미치광이 같은 짓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서 검사의 직무수행 권한 근거를 기존의 법령에서 법률로 옹졸하게 축소한 것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악의적 조항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복잡한 행정규제와 형사절차의 세부사항들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으로는 모두 담을 수가 없어서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부령 등 법령에 촘촘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직무 근거를 오직 국회를 통과한 좁은 의미의 법률로만 한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희팔 사건처럼 교묘하게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위 세부 절차,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규칙, 형 집행에 관한 수많은 세부 훈령들에 근거한 업무들이 하루아침에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거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공소청을 만들어 놓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손발을 묶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뇌사 상태의 식물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매우 치밀하고 악의적인 설계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조직의 통일성을 파괴해서 기준 없는 사법 처분을 양산하고 조직의 목줄을 대통령령에 넘겨서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게 하면서 관할 제한으로 범죄자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이 법안이 정녕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이것은 국가 사법작용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획된 붕괴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형적 법안이 어떻게 일선 부장검사의 손발을 묶어서 수사 지휘를 원천 봉쇄하고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지 그 끔찍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이 법안은 숙련된 법률전문가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서 그저 경찰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주는 기계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수사 지연 그리고 부실 기소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교묘한 독소조항 중 하나인 제21조를 보십시오. 이 법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겉 포장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을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사법기관에서 단 하루라도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위원장 선출방식입니다. 법안 제21조 5항과 제6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이들 중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심의위원장을 각 고등공소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던 정부 원안을 민주당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호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 모이는 12명의 위원이 매번 사안마다 모이게 될 텐데요. 당장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어떻게 스스로 선출하겠습니까?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위원장을 뽑는다는 것은 좀 심각한 행정적 낭비이고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법안의 검찰에 대한 맹목적인 적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사위에서 다수의 완력을 앞세운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신분보장을 박탈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수족마저 고의로 잘라 버렸습니다.

세 번째 위헌적 요소는 국회가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고 사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한 법률유보원칙 및 체계정당성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나 국가기관의 본질적 조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15조, 20조, 27조를 보십시오. 공소청의 핵심 부서와 사무국의 설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구체적 직무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백지위임해 버렸습니다. 국가의 핵심 사법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를 행정부 입맛에 떠넘긴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사법·수사기관의 편제는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땅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단단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뼈대를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 정권이 바뀌고 행정부의 입맛이 변하면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한 줄 고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특정 부서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기형적 부서를 마음대로 신설해서 공소청을 완벽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권력을 비판하며 그토록 시행령 통치를 저주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기관의 목줄을 행정부 시행령에 쥐어 주는 이 끔찍한 이율배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소청 내부에서 묵묵히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등 수천 명의 일반적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잔혹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55조를 보시면 공소청 직원들의 직무를 법률로 정해 주는 척 그럴싸하게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55조 1항 1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모조리 박탈해 놓고 도대체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무슨 명을 받아서 무슨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입니까? 수사권이 0인데 그 0을 보좌하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더욱 기만적이고 끔찍한 것, 기존 법률에 명시돼 있던 수사관들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법안에서 감쪽같이 증발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권한이 명시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제55조에는 기록 작성이나 행정사무 같은 껍데기만 남겨 두고 정작 가장 중요한 수사 권한 쏙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구체적 사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면서

하위법령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장 집행 권한을 법률이 아닌 일개 부처의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소청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에 나가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결국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전면 마비될 것입니다.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받고 도망친 벌금 수배자나 미집행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교도소에 밀어 넣는 업무, 조희팔 같은 희대의 사기꾼들이 차명으로 교묘하게 숨겨 놓은 수백억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관들이 해 왔습니다. 이들의 명시적인 직무 근거를 법률에서 지워 버리면 도망친 범죄자는 발 뻗고 편히 자고 은닉된 수조 원의 범죄수익은 영원히 범죄자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최후 형벌권 행사를 입법부가 앞장서서 포기하는 희대의 자해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공소청 직원들의 손발을 묶는 것도 모자라 국가행정의 톱니바퀴마저 억지로 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제59조를 보십시오. 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 존재하던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공소청 직원의 임용과 전보, 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필수적인 인사행정부터 예산의 계획과 집행, 더 나아가 국제형사 공조와 출국금지 등 실무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청의 일반 직원들 역시 법무부 직제에 반영되어 이러한 궂은 일과 국가적 중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맹목적인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일률적으로 모든 공소청 직원의 법무부 겸임을 법률로 원천 금지해 버렸습니다. 부처의 특성과 실무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풀어 나가야 할 행정적 과제를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겸임 금지 조항 하나로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초래될 법무행정의 마비와 국제형사 공조의 붕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나아가 이 법안은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과의 체계정당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보고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증거보전 청구 등 다양한 수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관여를 이토록 원천 차단해 버리면 형사소송법상의 수많은 조문들은 하루아침에 작동 불능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합니다. 법률 간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박살 나서 대한민국 형사법정은 일대 혼란과 마비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법안을 주도한 세력들의 교묘한 눈속임, 말장난입니다. 법안 제45조를 보십시오. 본래 이 조항의 제목을 '검사의 징계 등'으로 하려다가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슬그머니 '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로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아마 속으로 '이제 신분보장이라는 단어를 넣어 주었으니 불만 없겠지?'라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악질적인 물타기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6

조의 ‘정원·보수 및 징계’를 제37조의 ‘신분보장’과 엄격히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인 신분보장이라는 거룩한 방패는 그 자체로 독립된 조항으로서 오롯이 빛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굳이 신분보장과 징계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단어를 하나의 조문 제목에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검사에게 든든한 방패를 쥐어 주는 척하면서 그 방패의 바로 옆에 징계라는 날 선 칼을 나란히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은 보장해 줄 테니 알아서 기어라,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면 언제든 이 징계 조항으로 옭아매겠다는 노골적인 입법적 협박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들이 보장하겠다는 신분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앞선 조항들을 통해서 영장청구권도,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경찰의 위법 수사에 대한 직무배제요구권도 모조리 다 뺏어 놓고 이제 와서 신분보장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손발이 다 잘리고 눈과 귀가 막혀서 수사를 단 1%도 할 수 없는 식물검사의 신분을 보장해 준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말 잘 듣는 허수아비 공무원들의 밥그릇만 보장하겠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알맹이는 다 파먹고 빈 껍데기만 던져 주면서 신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으스대는 이 기만적 조항은 오히려 사법체계를 유린하려는 이들의 불순한 의도를 가장 명백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가장 끝자락 부칙에 똬리를 틀고 있는 치명적인 절차적 문제 또 헌법 유린의 현장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국가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독약이라면 이 부칙은 그 독약을 단숨에 국민의 입에 들이붓는 사약과도 같습니다. 이 법안은 부칙 제6조 2항을 통해서 법 시행과 동시에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을 타 기관으로 이송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단칼에 베어 버린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남겨 두었지만 이마저도 부칙 제6조 3항에 단 90일 안에 무조건 종결하거나 아니면 타 기관에 넘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수사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무식한 법안을 낼 수 없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기업 횡령 사건, 정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권력형 비리 사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암호화폐로 자금을 세탁하는 거대 마약 카르텔 수사가 단 세 달 만에 뚝딱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좌 압수수색 후에 자금 흐름 분석하는 데만 수개월 걸리고 해외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에는 기본적으로 1년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90일이라는 데드라인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일선 수사팀은 끔찍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증거가 채 모이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부실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패소하거나 아니면 핵심 주범인 몸통은 놔두고 깃털 같은 잔챙이들만 기소하는 꼬리 자르기로 서둘러서 사건을 덮어 버려야 합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수십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뭉텅이로 싸들고 생면부지의 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합니다. 수사의 연속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수사 기밀은 유출될 것이며 범죄자들은 샴페인을 터트리고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이 90일의 시한폭탄은 정의를 향해 째깍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범죄자들의 완전범죄를 완성해 주는 카운트다운입니다.

나아가서 더 심각하고 노골적인 위헌적 요소는 종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무원들의 신

분을 뒤흔드는 부칙 제7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준엄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게 하려는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부칙은 수십 년간 국가의 형사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시험을 통과하고 전문성을 쌓아 온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소속으로 일괄 편입시켰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을 기다리던 청년들은 부칙 제7조제3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공소청으로 갈지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며 본인이 지원하지도 않은 기관의 합격자로 강제 간주해 버리고 자의적인 전보 인사까지 가능하게 만든 폭력적 행정조치를 법률 부칙에 욱여넣은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힌 이들이 과연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기형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억지 주장의 민낯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선진국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럽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46개 회원국 중의 38개국이—82.6% 되네요—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고, 33개국—71.7%네요—71.7%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모두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OECD 38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본은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가지고 과거에 검찰과 경찰이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일본을 들여다보면 일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전 건 다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 사건이나 대형 금융 범죄 등 경찰이 감당하기 힘든 굵직한 부패 범죄는 동경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일본 검찰청법을 보면 제6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일본 검찰청법은 일본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진행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의 수사권마저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소청법안은

일본은 물론 해외 선진국 법조인들이 듣는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프랑스법과 독일법을 계수했고 또 저희들도 일본법을 많이 참고해서 대륙법계를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참고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또 대륙법계의 종주국인 독일과 프랑스, 어떻습니까? 독일은 검사를 수사절차의 주재자로 확립해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검사와 수사판사라는 사법관이 경찰을 철저하게 지휘·통제하는 보조기관으로 두고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연방검사의 직무규정에는 연방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주 헌법 등 주법 역시 주검찰총장에게 지방검사장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마약, 갱단,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고 연방검찰은 대배심을 주도하면서 막강한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영국의 경우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중대범죄 앞에서는 철저히 예외를 둡니다. 1988년 설립된 중대범죄수사청은—SFO라고 하지요—중요 부패범죄나 대형 금융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관, 회계사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아예 한 팀을 이루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통합하여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조차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한을 융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2021년 출범한 유럽 검찰청이 유럽연합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수사하거나 회원국 검사 및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만이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명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뿌리인 대륙법계 국가들의 확고한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허술하고 폭력적이며 헌법재판소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인지 법리상의 문제를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이 명시한 영장청구의 주체이자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을 한낱 하위 법률로 지워 버리려는 위헌적 폭거입니다.

인적 승계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만 남겨 둔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영장지휘권, 특사경 수사지휘권, 인권유린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권 등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거악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은 철저히 난도질당했습니다. 관할을 제한하여 범죄자의 전국적 도피처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줬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려 사법의 통일성을 찢어발겼습니다. 숙련된 부장검사의 수사지휘를 원천 봉쇄해서 평검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실무수사관들의 영장집행 권한과 범죄수익 환수 권한마저 법전에서 지워 버렸습니다. 사건을 90일 만에 덮으라 종용하며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신분마저

박탈하려 합니다.

이것을 과연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범죄 대응역량 해체이자 힘없는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사법정의의 궤멸입니다.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빈대를 잡겠다고 국가사법체계라는 초가삼간을 다 태워 버려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견제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가 범죄와 싸울 수 있는 척추 자체를 부러뜨리는 이 어리석은 입법 폭주를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합니다. 범죄자가 두 발 뻗고 자고 억울한 피해자가 경찰과 법원 문턱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을 대한민국국회가 앞장서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 안에서 우리 선택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는 이 참담한 사법 해체 법안에 단호히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인권이 권력의 입맛대로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이 위험한 입법 폭주를 함께 막아 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이름도 생소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 보호, 사이버라는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합니다. 중앙청과 지방청이라는 거대한 2단계 조직을 만들고 검찰 조직과 경찰 인력을 흡수해서 특정직 수사관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수사 체계의 개편이 과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합니까, 아니면 권력의 잠자리를 더 편안하게 합니까?

수사권 집중 문제, 기소기관과의 권한 조정 문제 등 산적한 쟁점들이 마치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든다더니 실상은 정치권력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기관을 리모컨처럼 조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악마화했던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수사기관 간에 혼선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아가고 눈물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수사의 생명은 독립성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국민이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심지어는 적격심사위원회까지 모든 주요 권한이 행안부장관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측근 혹은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임명된 가장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정치인이 수사기관의 인사권과 조직권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한쪽 팀의 주전 선수를 경기 전체의 주심으로 세운 격입니다.

더욱이 수사관들은 검사 수준의 신분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안 제37조의 성적 평정과 안 29조의 적격심사라는 목줄에 매여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압박받고 쫓겨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권이 임명한 시민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매 단계마다 개입한다면 그것이 수사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심판입니까?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에서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이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정부안에 있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

제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중수청 송치사건을 보고 추가 범죄가 의심될 때 요구할 수 있었던 입건요청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수사의 시작도 모르고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기록을 던져 주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됩니다. 기록을 보다가 공범이나 명백한 추가 범죄를 발견해도 수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 있는 자들의 범죄가 적당히 축소되고 은폐되어도 이를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가 사라졌다는 사망선고입니다.

작년 6월 구속기소된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수사팀장 정 모 경위의 공소장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대출 중개업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는 섬뜩한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것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이 말은 단순히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정 경위는 2억 원의 뇌물을 받고 사건 16건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의견으로 넘겼습니다.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라면서 노골적으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자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만약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들은 영원히 캐비닛 속에서 암장되었을 것입니다.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입건 요청 조항마저 삭제된 중수청법이 통과된다면 제2의, 제3의 정 경위가 나타나도 검찰은 송치 전까지 수사가 시작됐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개혁입니까?

또 다른 충격적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50대 여성 경찰관 정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더욱 가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료 경찰관과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A 경찰서 수사지원팀장이던 정 씨는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주로부터 돈을 빌리고 수수했습니다. 2020년에는 사기사건 피의자를 '혐의 없음'으로 송치해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B 경찰서의 경감으로 근무하던 또 다른 경찰관 김 모 씨가 공범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의자를 겁박하고 돈을 뜯어내도록 도왔습니다. 15년 전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두 경찰관은 수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돌려막기 곗돈처럼 사용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들의 계좌에서 오간 돈만 무려 17억 원입니다. 이것이 수사권 조정 이후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 경찰 수사의 민낯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검찰의 사법통제가 작동했기에 비로소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기록을 다시 보고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계좌를 추적했기에 이 타락한 수사관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입건요청권을 삭제하는 것은 수사관들에게 마음껏 뇌물받고 사건을 암장하라는 자유이용권을 끊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권력자와 결탁해 사건을 뭉개도, 동료 수사관끼리 짜고 허위문자를 보내서 국민을 협박해도 검찰은 그저 먼 산 구경하듯이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인권보호, 형사사법 정의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부패 수사관들을 위한 보호막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다 주는 것은, 지금 수사관 인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3만 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의 새로운 문제 있는 검사가 등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범죄들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 구조를 통해 검사 인력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이마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은 대부분 중수청행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검사들은 배제되고 결국 검찰의 그림자를 지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초임 검사가 제 역할을 하는 데만 3~5년 걸립니다. 이들을 지도할 선배도 시스템도 없는 중수청이 어떻게 법률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공수처의 사례에서 보았습니다. 전문성 없는 수사기관이 어떤 처참한 성적표를 내놓는지 말입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동안 발생하는 치명적인 수사 공백,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외쳤던 명분은 권력의 오남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룡화된 인력과 조직을 가진, 그러나 통제장치는 없는 행정부 직속의 거대 수사기구입니다.

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과 직무성격상 경찰 조직의 생리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한 계급정년과 피라미드형 구조 속에서 정치성이 짙은 행안부장관·직속상관·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퇴직 이후의 불확실성은 거부하기 힘든 현실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조차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좌천되는 현실에서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만 고결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원천적 욕망과 외부의 유혹을 제도적 견제 없이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부패의 늪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만을 지휘한다는 장식용 규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향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분보장은 없애고 승진 경쟁만 부추기는 이 조직이 어떻게 정치검찰의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중수청의 수사관, 경찰, 신분보장이 돼 있나요? 위에서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그러지 않을까요?

정치 논리가 경제를 지배하면 나라가 망하고 정치 논리가 수사를 지배하면 정의가 죽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중수청의 성공이나 정의 실현보다 오로지 검찰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법률전문성도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지 못한 중수청은 결국 제2의 공수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을 설계하십시오.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사기관을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 퇴행적인 법안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재입법에 따른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경북대학교 김성룡 교수님께서 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주신 통렬한 지적을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당시에 중수청법 초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중수청법(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도대체 무엇에 쓰려는 조직입니까?

당초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기존 검찰청과 경찰청이 수행하던 수사 업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존 검찰청 조직은 검사 2200명, 수사관 6000여 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숙련된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업무 범위를 그대로 옮겨 오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력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고 그 막대한 예산을 또 어디서 끌어오겠다는 것입니까? 인프라도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쏟아붓는 이 비효율에 대해 제도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거대 조직의 지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맡긴다는 것, 이것은 형사사법의 법치국가성을 망각한 경찰국가화의 극단이 아닙니까? 정부 측은 상명하복 체계일 뿐 경찰국가는 아니라고 반론하겠지만 사법적 통제 없이 행정부에 모든 수사권을 전담시킨 국가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무부 소속 경찰을 둔 프랑스조차도 검사의 수사 지휘와 사법적 통제권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통제는 피상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권력 한 곳에 수사 역량을 집중시킨 이 발상이 과연 일관성 있는 민주주의입니까?

사법관은 사라지고 계급제 공무원만 남았습니다. 인력 구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하더니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수사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1급부터 9급까지 줄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독일의 레히츠플레거 사법관은 법률전문가로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전문 자격입니다. 이번 법안도 처음엔 이런 법률전문가적 모델을 찾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1급에서 5급은 종래의 검사나 고위 경찰로 채우고 하위직은 수사관으로 채우는 계급 조직일 뿐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중수청에 포섭한다고 해서 형사사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수십 년간 검사 생활을 한 전문가가 중수청 수사관이 된다 한들 그는 기소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사요원일 뿐입니다. 수사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중수청 스스로 판단하면 족하다는 이 오만한 발상, 결국 수사 통제는 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대통령에서 행안부로 이어지는 수사의 정치화, 참담합니다. 이 법안의 구조는 대통령에서 법무부, 행안부장관 또 중수청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예고합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 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안 제6조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인사는 물론 기소 여부, 승진과 파면까지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되니까 소신껏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와 같은 그런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행안부장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에게 이 법안을 정확히 번역해서 보여 줘 보십시오, 이것이 법치국가로서의 개선인지 아니면 퇴행적 개악인지.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독립입니까? 정부는 중수청을 가지고 수사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아니면 검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더 멀어졌고 오직 검사의 사법통제로부터만 독립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만들어 온 수사·기소 재판의 시스템이 과연 검사에게서 수사를 떼어 놓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였습니까? 오히려 정치가 검찰을 놓아주지 않은 것이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치가, 대통령 권력이 검찰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검사로부터 떼어 놓는 것이 인권보호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참으로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인사와 징계위 독점,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중수청의 인사와 징계 구조를 보십시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인사위원회도 적격심사위원회도 징계위원회도 행안부장관 관할에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정권의 심장을 향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기구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구성으로 과잉수사도 과소수사도 없는 정의로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통제받지 않는 최고 수사기관의 오만을 보십시오. 법안 제43조제3항을 보면 중수청은 관할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하여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최고 수사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협력한다는 문구는 선언적일 뿐 수사개시 통보나 입건 요청 같은 실질적인 사법통제장치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통보와 협의가 구속력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완수사 요구를 무시하거나 지체할 때 이를 직접 바로잡을 장치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협력의 고립과 외교적 결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 제48조에서 중수청장이 독자적으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위험합니다. 법무부와 외교부의 통상적 절차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입니까? 유럽연합 등에서는 독립된 사법기관인 검찰이 아닌 국가기구와는 형사사법 공조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사만 배제하면 된다는 편협한 생각이 우리 수사기관을 국제무대에서 외톨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압도적 다수의 선진국이 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검사를 놓아줄 때 비로소 제도의 폐해가 사라집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적법성을 감독하며 증거수집을 통제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보편적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도 상식적인 곳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목소리가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지라도 저는 목소리 높여 주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은 검사에게 사법적 통제와 수사지휘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북대학교의 김성룡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동일한 토론회에서 변호사, 즉 법률 실무자인 박경호 변호사님이 기고하신 글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느끼는 수사 현장의 혼란과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박경호 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 소개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로 축소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마치 권력남용의 우려를 씻어 낸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실상을 보십시오. 제외된 범죄가 무엇입니까?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입니다. 이 범죄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것입니까? 아닙니다. 검찰의 손에서는 뺏고 싶고 그렇다고 중수청에다 주자니 감당이 안 되니 슬그머니 발을 뺀 것입니다. 또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또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까지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내일 당장 대형 참사가 터지면 누가 수사합니까? 선거철에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터지면 전문적인 수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조직 만든다고요? 그것은 결국 경찰 권력을 무한정 키워 주는 꼴이거나 매번 정치적 싸움만 부추기는 특검에 나라 운명을 맡기자는 무책임한 발상 아닙니까? 80년 수사체계를 해체한 대가가 중대범죄 수사의 진공상태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2의 정치검찰을 향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독소적인 부분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입니다. 입법예고안부터 재입법안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독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행안부장관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실세 정치인이 가는 자리 아닙니까? 현재 윤호중 장관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런 정치인에게 수사지휘권을 준다는 것은 청와대가 직접 수사지휘관의 리모컨을 쥐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6항에 의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조차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엄격한 조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수청장만 장관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문화되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왜 행안부장관에게는 이 생생한 칼날을 쥐어 줍니까? 특히나 검사와 같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중수청 수사관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안부장관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수사지휘권은 늘 정치적 외압의 통로였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중수청은 결코 독립적 수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행안부 산하 수사국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수청장의 자격요건으로 전문성은 버리고 코드인사를 택했습니까? 안 제8조의 자격요건의 변화도 가관입니다. 초기 안에는 포함되었던 수사사법관 경력이 삭제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강화한 것 같지만 실무자의 시각은 다릅니다. 수사 실무를 전혀 모르는 정무직공무원이나 코드에 맞는 법률가만 청장으로 앉히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수사 현장에서 뼈가 굵은 내부 전문가가 청장이 될 길을 원천 봉쇄하면 어느 수사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법률 지식과 수사 실무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을 무시한 인사는 결국 조직의 전문성 약화와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직급체계의 일원화와 부칙의 함정, 무늬만 통합입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수사관으로 통일하고 정년도 60세로 맞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등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칙을 보십시오. 출범 시 임용되는 검사와 수사관은 기존 정년과 보수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 수사관인데 누구는 63세까지 다니고 월급도 더 많이 받습니다. 누구는 60세에 퇴직해야 합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 신분제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이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조직 내 갈등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수사 역량의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구조에서 가장 큰 재앙은 기관 간의 갈등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 다시 수사해 오라' 이렇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안에는 이것을 강제하거나 중재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은 검찰과 중수청 사이에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동안 구속된 피의자 인권은 유린당하며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사유를 명시한 서면 요구, 14일 이내 이행 의무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기소협의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설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해체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신분보장 없는 수사관은 권력 앞에 엎드리는 수사로 이어집니다. 수사관들이 소신 있게 수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강력한 신분보장입니다. 검사가 왜 권력 수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년과 신분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수청 수사관들은 어떻습니까? 적격 심사와 성적 평정이라는 이름 아래 언제든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처지입니다. 정치인이 임명한 장관이 인사권 쥐고 있는데 어느 수사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겠습니까? 최소한 5급 이상 수사관에는 검사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수청은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날 토론에서 정재기 변호사님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권력분립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사법절차 안에서 행정 권력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감독과 통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구 신설이 아닙니다. 행정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기능을 흡수해서 당의 결정에 따라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위험한 국가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권한 행사가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 정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신분을 보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은 유엔의 검사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유럽 규범 또한 인권 침해

방지와 경찰 수사의 합법성 감독을 검사의 핵심 기능으로 규정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사법절차입니다. 그래서 사법절차 안에서 행정 권력은 마땅히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행정 권력이 수사와 재판 기능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위험한 국가로 간다',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중수청법은 검사를 그저 서류나 전달하는 공소담당관으로 전락시켜서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수사에서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하에 중국의 정법위원회처럼 수사와 재판을 행정 권력이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패널에다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런 행정 권력,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겁니다. 통제를 받지 않는 중수청 행정 권력의 문제입니다.

의장님도 이것 좀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의장 우원식 예.

○조배숙 의원 법안 제43조를 보십시오. 소속 공무원이 타 수사기관과 협력할 의무만 부여했을 뿐이고 수사관이 검사의 의견을 무시해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수사개시 검사 통보의무를 삭제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을 완전히 암장시킬 수 있는 이른바 깜깜이 수사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꼴입니다. 검사가 송치 전 의견을 내거나 입건을 요청해도 수사관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에게 철저한 신분보장과 객관의무를 지운 이유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니기에 이러한 법적인 객관의무가 없습니다. 오로지 범죄혐의 입증에만 치우쳐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의 숭고한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오로지 실적과 혐의 입증에만 매몰된 거대 수사기구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수사 책임자 인선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법안 제9조 4항의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십시오.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독립적 기구입니까?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비교하면 이 법안의 기만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법안 제44조 2항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더욱 가관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의 외피를 쓴 독재적 발상입니다. 최대 200명의 위원을 중수청장이 위촉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위법한 수사에 대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규정조차 전무합니다. 결국 중수청장의 뜻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인민독재식 수사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수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검사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이 가능합니다.

결정적인 독소조항은 적격 심사입니다. 근무평정기준에 사건처리 결과가 포함됩니다. 물론 검사도 공소청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수사관에게 소신에 의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행안부장관이 평정기준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쁜 성적 주면 자동으로 적격 심사에 회부돼서 장관이 영향력 미치는 위원회를 통해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급자의 지시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요. 80년 동안 다듬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효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소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 자산을 하루아침에 해체하고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중수청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것,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도박입니다.

3월 18일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공개한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 최종안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찰과 중수청이 유일한 수사 권력이 된다면’.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각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 온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삭제했다. 세무, 환경, 노동 등 각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사경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 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이다.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청법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진다.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사경이 어떤 아무런 수사지휘도 받지 않을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늑대를 피하려고 했더니 호랑이를 만났

다는 거지요.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한다면서 경찰·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아예 뭉개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일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날 김예원 변호사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했다.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새로운 기관인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0월 출범한다.

70년 넘게 이어 온 형사사법체계를 허물고 새로 만드는 수준의 개편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왜 중수청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은 납작했다. 검찰이 하던 수사를 넘겨받아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설명만 반복될 뿐이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10월 중수청이 출범하지만 경찰과의 역할 조정 등 미흡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중수청은 1차 수사기관으로 보인다. 6개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설명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과 관할이 중첩되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이 단지 1차 수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을 견제·통제하는 성격까지 포함한다는 뜻인가. 이처럼 제도의 설계자들조차도 중수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일관된 답이 없다는 것은 우려할 상황이다.

만약 경쟁을 위해 두 기관에 중복적 관할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경찰과 검찰의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둘은 전혀 다르다. 그 당시 경찰과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중복적 관할을 가졌던 이유는 검찰이 수사통제기관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이를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 위법·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어차피 기소권자인 검찰에 사건이 다 모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중복적 관할의 부작용이 적었다.

하지만 중수청은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일 뿐이다. 그럼에도 두 기관이 같은 사건을 다루도록 설계할 경우 현장에서 중복 견제가 아니라 중복 회피가 벌어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나 대형 사건은 두 기관이 서로 맡겠다고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겪는 소액 피해나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는 그 반대다. 피해 규모가 적은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에 민생 사건은 고소장 접수조차 어렵다.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직장 내 추행과 같이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어려워 정황·행동증거, 신체·심리 변화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풀어 가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방법이 열린다면 직접 사건 처리보다는 그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을까. 혹여나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사건을 수사했다가 결론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혼란은 어찌할 것인가. 두 기관을 경쟁시키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조직의 생리를 외면한 탁상공론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관할 중복을 방지하고자 중수청은 중대범죄만 수사하라고 법을 만들어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마약사건을 중수청 관할로 정한다 해도 그 안에는 마약 제조자나 유통자가 있고, 마약을 주된 범죄의 미끼나 도구로 사용하는 자도 있다. 점조직과 공범으로 얽혀 있다. 어디까지가 중대범죄인 마약범죄인가. 던지기 수법을 통해 1회 투약한 자도 중대범죄자로 보아야 할까. 진화하는 신종 기술로 나날이 늘고 있는 신종 중대범죄는 어떡하나.

대통령령으로 실시간 중수청의 수사개시 범위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 변화를……

○의장 우원식 조배숙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제한토론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오늘 22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차관의 교대 출석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은 장관의 체력적인 문제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차관과의 교대 출석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배숙 의원님,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실시간 중수청의 수사개시 범위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 변화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같은 사건이라도 사회적 관심도가 달라지면 그 해석의 여지를 이용해 사건을 서로 가져오거나 떠넘기려 할 수 있다. 중대범죄인지 아닌지 갑론을박하는 사이 범죄자가 도망가고 주요 증거가 인멸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

이뿐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새로 생기면 관련 법령과 규칙이 폭증하며 제도가 몹시 복잡해진다. 지금도 형사소송법 외에 행안부령의 경찰수사규칙, 대통령령의 일반적 수사준칙, 경찰청 훈령·예규 등 수십 개의 지침이 존재한다. 여기에 중수청이 생기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규칙과 중수청 수사준칙, 그리고 수십 개의 중수청 지침이 우후죽순으로 추가될 것이다.

형벌권은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권력이므로 어떤 제도보다 높은 완결성을 요한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조차 없다. 어려운 제도를 급하게 만들면 조문 중복이나 누락, 해석 충돌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없는데 법률 비용은 그만큼 크게 증가한다. 절차가 기관마다 다르게 쪼개지면 그 단계마다 법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좋을지 몰라도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중수청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의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일이다. 법률가들이 쌓아 온 경험과 합리적인 대안이 제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때에야 비로소 가난하고 배움이 적은 사람들 그리고 생업에 바빠 권리 주장조차 어려운 시민들이 억울함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김예원 변호사님의 중앙일보 기고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시설과 인력을 두고 굳이 행안부 산하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인적, 물적 낭비입니다. 정착까지 걸릴 수많은 시간과 시행착오, 그 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수많은 중대범죄들, 그 보이지 않는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중수청 신설 대신 검찰 내부에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본부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정치 논리가 수사를 지배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복수의 재물로 삼지 마십시오. 저와 국민의힘은 이 위험천만한 실험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국민 곁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어떻게 사법체계의 뼈대를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는지 구체적인 조문을 통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정치적 주장이나 특정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구하고 수호해 온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고 경고입니다.

지금부터는 차가운 이성과 엄밀한 법리로 이 법안이 왜 대한민국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지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 중의 한 분인 장영수 명예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에 정년을 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논문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어떻게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역행하고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명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석학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의 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발췌도 하고요.

이게 보니까 작년 11월 30일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정신은 같습니다. 감안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 검찰청 폐지 배경과 경과.

2025년 9월 7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할 2개의 기관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검찰청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에 26일 검찰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위헌 논란도 점점 뜨거워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 영장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과 관련 검수완박 입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헌법 제89조제16호에서 검찰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헌법 제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했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문구에 따른 위헌 논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검찰청 폐지가 정말 헌법의 정신과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즉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로 인해 국민의 인권보장이 오히려 약화된다면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를 추진한 정부와 여당의 논리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보편적 원칙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것이 정말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함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이를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수사지연, 수사공백, 심지어 수사실종이 문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 없이 검찰청 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30년 이상 되었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나아가 공수처의 설치 등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시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검찰권 오남용의 뿌리가 검찰 자체의 비리보다는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문제는 검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의 영향력, 즉 정치권에서 검찰에게 압박을 했고 검찰을 이용하려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권력의 측근은 계속 바뀌었다.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경찰이 권력의 측근이었고,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와 그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권력의 측근이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이 권력의 측근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권력의 측근이었던 기관들이 권한을 오남용한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그렇다고 그 기관들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일까? 만일 그렇다면 경찰, 국정원, 검찰을 모두 폐지해야 하는가? 그런 상태로 정상적인 국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정말로 권한 오남용을 문제 삼는다면 대통령직부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작 권력의 측근들은 대통령을 배경으로 호가호위했을 뿐인데.

권한의 오남용을 정당화하자는 것도, 방치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해당 국가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폐지가 답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자꾸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충분한 국민 의사의 수렴 없이 검찰청 폐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전 세계적으로 검찰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검찰의 의의, 성격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검찰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탄생한 배경 및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 빠르게 전파된 이유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검찰권의 오남용과 개혁 필요성을 살피고자 한다. 역대 권력들의 측근들과 권한 오남용의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살펴보고 그 개혁 필요성을 정확하게 짚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검찰청 폐지가 올바른 개혁인가로 이어질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검찰청 폐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오히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몸통인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통령으로부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 논란에서는 헌법상 검사와 검찰에 관한 규정, 즉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규정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자, 검찰의 의의와 성격,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사와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성 요소로서의 검찰입니다.

흔히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법원과 같은 독립된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법원에 준하는 정도로 사법절차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조직체계상 검찰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찰과는 달리 취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조직체계는 나라마다 다르다.

예컨대 독일처럼 행정적으로는 법원과 검찰이 모두 법무부 산하지만 실제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에도 법무부를 비롯한 집행부가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도 있다.

대한민국의 근대적 형사사법체계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형사사법체계가 독일과 프랑스 법체계를 계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이식된 근대적 형사사법체계도 영미법과는 구별되는 대륙법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형사사법체계가 보이는 가장 큰 차이라면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에 각기 기초하고 있는 소송구조를 들 수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국가형벌권 행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이므로 국가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다만 법원에서 직권조사를 폭넓게 할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되 사법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 통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미법계에서는 국가가 형벌권의 주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도 본질적으로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형사소송도 사인 간의 소송처럼 취급했으며 이는 검사가 아닌 피해자가 소추하는 사인소추의 전통 및 배심원이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86년 영국에서 검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미법계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즉 전 세계적인 추세는 검찰제도를 두지 않던 영국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등

검찰제도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이 담당하는 역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간에 말씀드릴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검찰제도를 두고 이렇게 검찰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경찰에서 법원으로 형사사건이 이동했다면 지금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헌법질서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왕정시대나 이런 때겠지요. 그런 때는 사법체계는 경찰에 의한 수사와 법원에 의한 재판이었다. 그 이전의 전근대적인 사법체계는 우리가 흔히 원님 재판이라 부르는 독립된 법원조차 없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근대적 헌법질서와 삼권분립의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경찰 등에 의한 수사와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구분은 있었던 것이다.

검찰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프랑스였다. 프랑스에서 왕의 대리인으로 시작된 법률전문관리가 형사사건에 대한 국가의 소추기관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후 이러한 검찰제도는 각국으로 전파되었으며 형사소송의 발전에 따른 경찰 혹은 그 전신의 법률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는 기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 경찰, 법원의 구조에서 경찰, 검찰, 법원 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경찰에서 수사한 것을 법원에서 재판하는 구조에서 경찰의 수사를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세분화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 변화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은 현대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졌고 이에 따라 모든 수사기관을 법률전문가로 충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검찰이라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 민주국가의 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역할.

‘그동안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검찰이 권력의 오남용을 일삼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선택적 수사와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권한이 공정하지 않게 행사되었다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런 논거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지만 현대 민주국가의 사법체계 속에서 검찰의 역할은 전혀 다른 것이다.

검찰의 교과서적 설명은 범죄수사 및 기소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며,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 형벌의 집행을 관리 감독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다. 즉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심적 요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검찰을 축소·폐지한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 및 공익 실현의 약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물론 검찰권의 오남용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검찰만이 그랬는가?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직도 폐지하고 국회도 폐지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결국 권한을 오남용한 기관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수미일관하게 관철될 경우에는 아나키즘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여러 가지…… 국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폐지해야 되

고, 기관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 폐지한다고 하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기관도 안전하지 않으며 권한의 오남용은 부지기수다. 대통령과 국회는 물론이고 또 사법 비리는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다고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를 모두 폐지한 상태로 민주국가를 만들어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은 대상 국가기관의 폐지가 아닌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 전체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생각한다면 검찰청의 폐지가 아니라 검찰권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 예컨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나왔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검찰권의 오남용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대 권력의 측근과 권력 오남용의 사례들.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 오남용의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그중에는 권력의 중심이었던 대통령에 의한 권력 오남용 이외에 대통령 측근들이 권력을 오남용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

해방 직후 건국 과정에서는 치안의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경찰권의 활용이 매우 중요했지만 일제강점기의 순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국민들은 경찰을 경원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경찰이 권력의 측근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다. 각종 사건에서 경찰권의 오남용이 문제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6·25 전쟁 중에도 경찰에 의한 양민 학살까지 있었고 3·15 부정선거에 앞장섰으며 4·19 혁명 당시에는 시위대에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배경으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검사, 당시 헌법 규정상으로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명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는 국가정보기관, 즉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권력의 최측근이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나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막강한 실세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기관은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군과 검경을 포함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크다고 평가될 정도였다.

결국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정보기관의 권한 및 영향력 축소를 피할 수 없었고 이를 대신하여 권력의 측근으로 부상한 것이 검찰이었다. 밀실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양지에서의 법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해진 것이다.

검찰이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지면서 권한 오남용 문제도 많아졌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기관일수록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을 앞세운 개혁과 그 과정에서의 권한 오남용.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이 된다는 것은 곧 권력의 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권력의 시녀라는 말도 있지만 단순히 심부름하는 시녀가 아니라 칼을 쓸 줄 아는 시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인사권, 다른

하나는 재정권, 마지막 하나는 사정권이다.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정의 칼날을 원하는 대로 휘둘러서 정적을 비롯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쳐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렇게 검찰이 권력의 측근이 되면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법원의 재판이 그러하듯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이 되어 그 영향력하에 있다는 것은 곧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약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가장 문제 되는 것으로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하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안사건 등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정적 등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괴롭혔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반성 및 개선이 필요하나 검찰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더욱이 검찰 내의 개인 비리도 있을 것이지만 검찰개혁의 근거로 제시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온전하게 검찰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굳이 표현하자면 대통령이 몸통이고 검찰은 깃털에 불과한데 왜 깃털에게 몸통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가?'

권한 오남용의 핵심으로서 대통령의 영향력 그 개혁 필요성.

'그런 점에서 정말로 검찰권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를 하위 공직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총리나 장관들이 대통령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대통령으로 인하여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수사권에 관여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이지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수사권을 오남용한 수사기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이런 식의 개혁이라면 몸통은 외면하고 깃털만 잡는 엉터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지적했는데요. 검찰이 권력의 오남용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되지요. 하지만 그 원인 관계를 따지면 대통령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치권이 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검찰이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 주고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용당하고 이런 검찰을 아예 없애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접근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은 대통령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형사사법 정의 그리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및 검찰총장 임기제 등이 도입되었던 것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검찰개혁의 핵심이 대통령의 영향력 차단이 아닌 검찰의 무력화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결

과가 이른바 검수완박이었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 나아가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청 폐지라는 초강수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수사권에 대한 관여를 막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영향력하에서 수사권을 오남용하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높다'.

검찰청을 폐지했지요. 그러면 중수청이 이제 수사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중수청이 제가 볼 때는 다시 대통령 영향력하에 들어가면 또 다른 제2의 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의 측근에 있던 기관들이 이러한 오남용의 역사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력기관들이 무력화된 이후에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그 자리를 대신할 뿐이라는 점도 아울러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결국 문제의 핵심은 권력 오남용의 몸통인 대통령이지 그 하수인인 경찰이나 정보기관 또는 검찰이 아닌 것이다. 이들에 의한 권력 오남용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단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며 계속 눈 감고 넘기려는 권력의 핵심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것도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올바른 개혁인가?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러한 수사·기소의 분리가 보편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가 개념상, 절차상 분리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는 기관인 검찰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보편적 원칙에 따라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소만 전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여러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거니와 성질상으로도 검찰의 역할과 맞지 않는 것이다.

종래에 경찰, 법원으로 구성되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경찰, 검찰, 법원의 구조로 세분화되었고 그것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의 활동을 통해 좀 더 정확하고 섬세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 적용을 강화할 수 있다.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개입이 모든 수사에서 법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이전에 비해 개선된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법률적인 문제들이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에 의해 상당 부분 정리됨에 따라 법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재판의 지연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재판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셋째, 이러한 검사들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범죄의 정확한 규명 및 엉뚱한 사람이 범죄혐의를 뒤집어쓰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검찰의 역할들은 검찰이 오로지 기소만을 전담할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 결과 법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재판에서 범죄자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승소하게 되는 것도, 거꾸로 기소돼야 할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방기하는 것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결을 담당할 때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단절하고 유기적 연결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들여다보고 기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다.

수사 지연 등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결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에서 질 경우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인 국민이 입는 이중적 피해 등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헌법상 보장되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사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인 경찰의 주장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면, 즉 경찰의 신청을 제대로 걸러 내지도 못한다면 검사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역시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의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물론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이나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문제는 그 의미와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단순히 검찰청이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주장 때문이 아니라 검찰청 폐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청 폐지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상당한 편차가 나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분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숙의를 거쳐서 하는 게 옳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대한 호감도가 없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여론조사 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어떤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이미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6대 범죄로, 다시 2대 범죄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 수사 공백 등의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 이후에 관련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검찰청 폐지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크게 만든다.

그동안 검수완박 입법들이 계속된 이후에 수사 현실과 관련된 법조계의 분석과 비판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분석과 정리는 별로 없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를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론을 주장한 바 있으나 정부 여당의 강경 기류에 묻힌 바 있으며 당시에도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셋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피해자나 국민들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청을 폐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아주 급하게 그냥 먼저 폐지하고 보자 그런 태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해자들에게 유리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또 왜 몸통은 외면하고 깃털만 잡으려 하는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검찰권 오남용 문제의 근원은 권력의 중심인 대통령에 있다. 대통령의 영향력하에서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대통령의 정적에 대해서는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던 것이 검찰권 오남용의 핵심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몸통이고 검찰은 그 손발 내지 깃털에 불과한 것 아닌가.

몸통을 외면하고 깃털만 잡으려는 태도를 갖게 만드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몸통을 감히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깃털이라도 잡으면서 뭔가 성과를 보였다고 내세우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통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깃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정말로 무엇이 몸통이고 무엇이 깃털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다. 과연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문제는 외면하고 모든 것이 검찰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고 검찰청을 폐지한 것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 정말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의 발언이나 행동은 직접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 않았던가.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면 매우 주관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의 문제냐, 아니면 사람의 문제냐 이것을 양자택일처럼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권력 오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마련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검찰청의 권한 오남용 문제에서 대통령의 문제를 배제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권한 오남용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면 다른 권력기관들, 특히 검찰 이상으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국회는 왜 폐지되지 않는가? 이것 국회에 대해서 정말 뼈 아픈 얘기입니다.

검찰청 폐지 위헌성 논란. 헌법상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한 규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기관과 헌법상 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나옵니다. 헌법기관과 헌법상 기관에 대한 이해에 혼란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엄밀하게 다른 개념이다.

헌법기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에 의해 그 권한이 부여된 헌법상의 핵심 기관

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기관은 삼권분립을 전제로 입법권·집행권·사법권 중에서 하나를 담당하는 기관 및 그중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회·정부·법원은 담당하는 전자에 속하며 감사원·선관위·헌법재판소는 후자에 속한다.

반면에 헌법상 기관이란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을 말한다. 헌법기관에 비해 비중은 작지만 헌법에 직접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상 기관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다. 법률로 헌법상 기관을 폐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률상 기관과는 다른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헌법기관, 헌법상 기관. 헌법에 직접 명시가 되어서 법률상 기관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로 헌법상 기관을 폐지할 수 없다는 거지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률상 기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상 명시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회와는 별도로 국회의원이 헌법상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렇게 헌법상 기관을 법률상 기관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헌법의 최고성 때문이다. 굳이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사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법률로 규정된 사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상식 아닌가.

그런데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여 법률로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은 법규범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 된다, 마치 프로이센 예산 분쟁을 통해서 이중적 법률 개념이 탄생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예산법률은 의회의 동의 없이 처리해도 된다는 것처럼. 이러한 왜곡은 왜 헌법에 검사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는지를 무시하게 만든다. 헌법의 진정한 의도가 왜곡되고 헌법의 의도에 반하는 법률들이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헌법의 진정한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해석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첫째, 문구 해석의 방법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문구 해석이 법해석의 가장 기본일 뿐만 아니라 문구에 반하는 해석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제3항과 헌법 제16조를 문구 해석에 따라 분석하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동일한 문언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법관의 영장발부권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오로지 법관만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규정이 도입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다. 역사적 해석의 방법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헌법 개정자의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확인될 수 있는 점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없었는데 제3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다

는 점이다.

당시 헌법개정안의 성안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의 신설이 갖는 의미를 개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1공화국 당시 경찰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고려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통해 경찰권 오남용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영장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제헌헌법 제9조제2항에서는 체포·구금·수색에 법관의 영장을 요구하던 것이 제3공화국 헌법 이래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경찰에 의한 직접적인 영장 청구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논리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이 조항이 헌법상의 다른 조항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 비록 헌법 규정들이 법률의 규정들처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체 헌법 조항의 통일적 해석을 통해서 그 조항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부 부처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이를 통해 정부 부처들의 신설과 폐지, 명칭 변경 등을 헌법 개정 없이 할 수 있게 만든 것과는 달리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핵심적 요소로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헌법 제89조제16호에서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은 제헌헌법을 보면 제72조제11호에서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역대 헌법에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장관들도 배제하고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느냐다.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검찰총장의 중요성을 그만큼 높게 본 것이다. 특히 제헌헌법에서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등을 명시한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고 우리가 흔히 함께 4대 권력기관장이라고 지칭하는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에 비해서도 검찰총장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장관들은 정부 부처들의 신설과 폐지, 명칭 변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헌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셋째, 검찰청 및 그 수장으로서의 검찰총장은 이러한 폐지나 명칭 변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즉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로 인하여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헌법 제89조제16호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요. 그 당시 헌법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및 검찰총장 제도가 제헌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지만 이미

일제강점기의 경험을 통해 근대적 사법제도의 기본 골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헌법 제정 당시에 검찰제도 및 검찰청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전제로 검찰총장의 임면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을 명시한 것임을 규정한 것이고 그 의미는 현행 헌법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헌법 제정자 및 헌법 개정자의 의도에 반해서 법률로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여타의 정부 부처에 관한 사항도 헌법에 명시해 놓고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해 놓고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법률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 아닌가요.

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속도 조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맞습니다. 장관님이 이렇게 계시지만 이러한 정성호 장관의 말은 당시 너무 서둘러서 검찰청 폐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해된다. 이는 또한 당시 법무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유증, 즉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확인과도 맞물려서 적어도 보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정의 강경 분위기에 밀려서 검찰청 폐지에 관한 입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정성호 장관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일까?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릴 때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정성호 장관이 옳은 말을 했던 것은 아닐까?

앞서 언급했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피드백은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전단 금지법처럼 위헌적인 다수의 횡포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3호가 있지요, 전단 등 살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23년 9월 26일 날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나왔었지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내릴 것을 우려해서 검찰청 폐지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을 경솔하게 처리했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검찰개혁이라면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정상화를 목표로 했었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제도와 더불어 임기제가 도입된 것도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의 실질화 등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을 포기하고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고, 검찰청 폐지가 역사에 의해 올바른 정책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헌법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역사에 의해서 올바른 정책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이후 검찰총장의 부재 상태가 장기화되었고 작년 11월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등의 문제와 그 후폭풍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과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장영수 교수의 기고 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장영수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마주한 이 참담한 입법 폭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명시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그리고 헌법 제89조가 규정한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정자들과 개정자들이 만들어 둔 견고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따위로 폐지하고 그 이름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논문에서 지적한 몸통과 깃털의 비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남용의 진정한 몸통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최고권력자, 즉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부당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마땅히 그 몸통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아니 오히려 그 몸통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하여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기어이 폐지해 버리는 헌법 파괴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제도를 개선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 폐지해 버렸습니다. 국가 사법체계의 중추를 하루아침에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위헌적인 공소청법안을 통해서 그 빈자리에 수사권도, 영장지휘권도 없는 기형적인 식물기관을 심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사법체계 붕괴의 서막이었다면 오늘 이 공소청법안은 사법 파괴를 완성하는 마지막 대못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손발을 묶고 숙련된 수사관들의 권한을 박탈하여 만들어진 이 허수아비 같은 공소청이 도대체 누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제재할 권한조차 없는 이 무기력한 기관 아래에서 억울한 국민의 기본권은 대체 누가 지켜 준다는 말입니까? 그로 인한 수사 공백과 지연의 피눈물, 오롯이 평범한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비록 검찰청 폐지라는 첫 단추가 위헌적 다수의 횡포로 잘못 끼워졌다 할지라도 이 끔찍한 국가형벌권의 마비 사태를 막아 낼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 이 본회의장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범죄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된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 여러분의 양심 있는 결단으로 사법 붕괴의 마지막 댐을 지켜 낸 날로 기록될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의 완결판인 이 공소청법안에 단호히 반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가장 위험한 사법적 실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천만에요. 본질은 명확합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피의 복수이고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난공불락의 방탄성 쌓으려는 것 아닙니까? 국가 수사역량을 난도질해서라도 권력자의 과거 범죄를 덮으려는 이 무모한 시도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재판이 정지된 대통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라는 거대한 방패 뒤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5개의 형사재판이 일시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멈췄다고 해서 그 죄가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계추가 잠시 고정됐을 뿐입니다. 재판이 멈춘 이 5년이라는 시간, 국민들은 국정에 전념하라고 준 시간이라 믿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이 시간은 사법 시스템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골든타임입니다.

중단된 5개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 준 의혹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기업을 시켜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경기도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입니다.

이 촘촘한 그물망 같은 재판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사권을 완전히 해체하는 검찰청 폐지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수사한 검찰을 없애버리고 행안부장관의 치마폭 아래 중수청을 숨겨서 면죄부 수사를 받겠다는 노골적 야욕 아닙니까?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뒤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적 죽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주변 인물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권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침묵의 강요 때문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인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이 비정한 현실 앞에서 검찰 개악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망각의 법이자 증거인멸의 법입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과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공범이 10년 가까운 징역형을 받았다면 그 결재권자이자 최종 수혜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리적으로 볼 때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급해진 것입니다. 중수청법 만들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한 검사들, 판사들을 법왜곡죄로 가두고 사건 자체를 중수청으로 가져가 증거를 훼손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법정의가 아닙니다. 공범은 감옥에 가고 주범은 법을 바꿔서 왕좌를 지키는 나라,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왕적 독재입니다. 이 모든 퍼즐의 조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오직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 사법체계를 통째로 불태우는 초가삼간 소각법입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80년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희생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이 무도한 행태를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정의의 여신이 안대를 쓴 이유는 상대가 누구든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

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의의 여신의 안대를 벗기고 그 손에 든 저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죽음을 딛고 공범의 중형을 목격하고도 오직 자신의 방탄을 위해 법을 난도질하는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방탄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권력 뒤에 숨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법안의 핵심 독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법안이 얼마나 정치적인 법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상소 여부를 사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합니다. 50명에서 200명에 달하는 거대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구성을 보십시오.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하는 이들이 과연 중립적일 수 있겠습니까? 과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권력기관에 우호적인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심의 결과는 정의가 아니라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추천방식 또한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선발 과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면 결국 코드인사들이 모여서 검사의 결정을 정당화해 주는 면죄부 발행 창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정 권력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받아 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고 비판을 회피하려는 이 꼼수, 이것이 진정한 사법 민주화입니까?

여기에 공소청 검사들을 향한 벌칙까지 마련했습니다. 공소청법 제59조 정치관여죄는 검사가 소신 있게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도록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댑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 정치적이라고 낙인찍어서 처벌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하고 또 더욱 심각한 것이 법왜곡죄입니다. 판검사가 법리를 왜곡하면 처벌하겠다고요? 민주당은 독일에도 이 법이 있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 부역 법관이나 동독 시절의 불법 재판을 단죄하기 위한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한 유물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도 극히 드물어서 사문화된 조항을 왜 지금 대한민국에 가져옵니까?

우리 법체계에는 이미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사법기관의 과도한 행위를 제재할 충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 수사를 한 검사를 범죄자로 만들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뽑아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우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작년 12월 4일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법왜곡죄 도입의 이론적·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잘 지적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었지요. 법왜곡죄는 검사와 재판과 관련된 법관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과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 과오나 소수의견까지도 자칫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법 방해 목적으로 남용되어 정상적인 수사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고발 남발 등 사법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절차 지연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반대 정치 세력에서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고발하게 되면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결국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왜곡죄가 도입되어 있는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사문화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은 없습니다.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배 그리고 1990년 통일 이후 법왜곡죄를 통해서 나치 전체주의 체제와 옛 동독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재판권과 검찰권을 왜곡해 국민 인권을 유린한 법조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법왜곡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법원은 1955년 보이콧 선동을 한 두 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옛 동독 최고법원 형사부 판사에 대해서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도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죄로 처벌당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에서 법왜곡죄로 인한 형사절차와 유죄판결은 매우 희소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법왜곡죄를 적용했던 제국법원의 공식 문건에서도 법왜곡죄에 대한 재판은 4건에 불과했고 그중에서 법왜곡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고작 1건뿐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형사사법실무에서 법왜곡죄의 적용 여부가 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2차대전 이후부터였습니다. 제2차대전 종전 이후 나치 시기 과도한 불법적 판결 선고에 책임 있는 법관 등은 단죄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대전 종전 이후에 전범재판의 과정에서도 법왜곡죄 혐의로 진행된 형사절차는 거의 없었고 법왜곡을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예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행법 체계에는 독일에서와 같은 법왜곡죄의 범죄 구성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법왜곡죄와 같은 범죄 구성요건이 없다고 해도 현행법에 의해서도 법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과도한 행위 또는 봐주기 수사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체계가 존재합니다.

즉 형법 제124조와 125조에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다든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이들 행위 주체가 처벌되고 일반인에 의한 체포·감금죄 내지 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이 되겠지요.

한국과 독일의 형사 실체법 관점에서 보면 매우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체법보다는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분석·평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증거조작은 현행법

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위증교사, 강요, 공용서류 무효 등으로 의율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달리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편의주의가 아니라 기소법정주의를 택하고 형사시스템도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형사사법체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법왜곡죄가 인정된다 해도 한국에서 이것을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양국의 법체계 또 형사소송법 체계를 상세히 검토해 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판검사나 경찰의 고위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이미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고위층의 일반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 신설한다는 것은 옥상옥으로서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또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면 법왜곡을 주장해서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효율적인 분배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계속 결정을 하면 거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법왜곡죄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지속되지요, 무한 루프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성요건상 행위 주체가 사법기관에만 적용되는 독일하고 다르게 우리는 판사 검사 경찰 이렇게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수사나 기소,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들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고소·고발이 빈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사법기관 고유의 기능이 상실되고 상시적인 감사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 법왜곡죄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찰 사법 작용이 저해되고 본래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왜곡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 1호 사냥감 누군지 아십니까? 1호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우리나라 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이고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경찰이 법왜곡죄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토록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인 이유는,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우리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결국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마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이 광기 어린 폭주,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입니까, 아니면 사법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입니까?

이른바 사법개악 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는 과정, 그야말로 의회민주주의 수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온몸을 던져서 막으려 했지만 거대 여당의 의석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국 2026년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악법들이 연달아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위헌 여론이 들끓으니까 자신들도 불안했는지 본회의 직전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법사위에서 우리 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충분하게 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차고 밀어붙이다가 다시 뒤늦게 수정안을 내는 이 졸속 입법,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된 폭주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인데 국회의 위헌적인 입법폭주, 일방통행 이것은 후손과 역사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악법들의 본질은 판사 검사 수사기관을 겁박하는 판검사 처벌법입니다. 헌법 제103조와 106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신분을 엄격히 보장합니다. 검찰청법 역시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보장합니다. 왜입니까?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진실과 정의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은 진실이 아닙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오로지 정권의 뜻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거나 판결을 내리면 언제든 법 왜곡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떤 법관이 소신 있게 재판하고 어느 검사가…… 아,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못 하지요. 어느 수사관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독일에도 법왜곡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법왜곡죄가 시행되고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재판 똑바로 하라. 아니면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고함을 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부에게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 되는 사건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결론을 안 내릴 겁니다. 사건은 처리가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쌓일 거고요. 왜냐?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불리하게 결정이 나온 사람은 분명 승복을 못 하고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4심제 보십시오. 우리 사법부 80년 역사에서 3심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기관인 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 뒤집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송사에 휘말려 본 분들은 아십니다. 재판은 사람의 진을 뺍니다. 재판 한 번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시간 들지요, 비용 들지요. 요즘 변호사 비용 엄청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4심까지 갑니까? 이것은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분쟁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로, 불분명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은 국가적 에너지 낭비이자 재앙입니다.

지금 이 재판소원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기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을 지키겠다던 재판소원제가 시행되자마자 누가 가장 먼저 환호성을 질렀는지 아십니까? 유명 유튜버 쯔양 아시지요? 쯔양을 협박해서 수천만 원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유튜버 구제역.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재판소원한답니다. 그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유죄를 확정했으니까 이것을 바로잡겠다. 이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자가 대통령과 여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나라, 이것이 여러분이 꿈꾸던 사법정의입니까? 피해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습니다. 이제야 겨우 발 뻗고 자나 싶었는데 범죄자는 대통령 덕분에 한 번 더 해 볼 기회가 생겼다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피해자 쯔양의 변호인은 말합니다. 확정판결 후에 기뻐한 것도 잠시였다, 또다시 판결 기다려야 하느냐 하면서 피해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입니다.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정치적 목적의 입법 때문에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기억하십니까? 징역 47년 4개월이라는 중형을 확정받은 그가 옥중 블로그를 통해서 재판소원제에 찬성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1·2심 다 엉터리라면서 대법원 판결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성착취물 제작자,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갈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도 위헌적 재판이라는 프레임만 씌우면 다시 한번 재판을 뒤집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원제는 인권 구제의 도구가 아니라 파렴치 범죄자들의 형기를 늦추고 사법체계를 농단하는 법적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공갈, 성추행, 존속 폭행, 우리 사회가 단죄해야 할 파렴치 범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 첫날에만 스무 건, 단 4일 만에 44건, 지금까지는 또 100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연간 최대 1만 5000건의 재판소원이 쏟아질 것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5만 건이 넘는데 그중 상당수가 헌재로 몰려온다면 사법시스템은 마비됩니다.

대법원뿐이 아니고 1심·2심에서 확정된 사건도 소원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겠지요. 진짜 억울한 서민들의 재판은 뒤로 밀리고 돈 있고 백 있는 권력자들, 뻔뻔한 범죄자들이 헌재의 문턱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 지옥의 실체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현재 재판을 받는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에 4심제라는 괴물을 이식했기 때문 아닙니까? 단 한 명의 방탄을 위해서 수많은 범죄자에게 탈출구를 열어 주고 이름 모를 수많은 피해자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양문석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예고했던 재판소원제도를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정치인들이 생길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조차도 숙의가 필요하다면서 우려했던 이 악법을 기어이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법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도구여야지 강자의 죄를 세탁하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구로 전락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나라, 범죄자가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이 비정상적인 사법 현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법질서를 파괴한 이 입법 폭주,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범죄자들이 다시는 법을 비웃지 못하도록 무너진 사법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26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을 더 늘려서 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만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입법과 행정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완전 장악해서 삼권분립 무너뜨리겠다는 야욕 아닙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거 임명되면 그 판결 어떨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악법이 발의된 시점을 보십시오. 작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발의됐습니다. 5월 2일에 민형배 의원이 법왜곡죄 발의했고,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발의했습니다. 또 5월 7일에는 정진욱 의원이 재판소원법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은 현재 재판받는 피고인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 3중 안전장치입니다.

첫째로 법왜곡죄로 수사검사와 판사의 입을 막습니다. 둘째, 대법관을 증원해 자기 사람 심고 파기환송 결과를 뒤집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재판소원제로 헌법재판소 가서 판결 무효화합니다. 국가의 원칙보다 한 사람의 안위가 우선인 나라,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 헌법체계를 난도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대한 참 참담한 위배입니다.

지난 3월 6일 자 사법파괴 3법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의 위헌성,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전국 법원장들도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이례적 입장 표명을 했다.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면 법조계·학계·정치권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국회 차원의 입법공청회도 없이 처리했다. 국회를 장악한 당이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 민주적·법치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의결해 버렸다.

사법 3법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점부터 그렇다. 작년 5월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에 민주당이 본격 추진했다.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며 퇴임 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검사와 판사들의 소신 있는 수사와 판결도 어려워진다. 정권 내부에서조차 법왜곡죄를 두고 문명국의 수치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 3법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것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이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라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추는 것이다. 어차피 재판이 중지된 상태여서 달라질 것도 없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조차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여야 대표를 만났을 때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 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와 장외 집회까지 열며 반대했던 사법 3법을 일방 처리했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그대로 수용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협치나 여당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다. 거부권 행사로 민생 분야 협치를 할 기회도 사라지게 됐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 이날 대통령이 의결한 사법 3법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담긴 이재명법인 것으로 보인다. 권력자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오명은 오래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강행하는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문제점을 3월 19일 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며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첫째, 검찰의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독소조항입니다. 민주당의 최종안은 기존 정부안에 있던 검사의 수사 통제장치를 사실상 삭제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의무를 없앴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마저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환경·노동 등 각 분야의 2만여 명에 달하는 특사경이 사법적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수사권 남용과 사건 은폐를 막을 제동장치가 사라집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명백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어도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결국 경찰과 중수청이 사실상 유일한 수사 권력이 되고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는 상실되는 구조입니다.

정권이 수사권을 직접 통제하는 정치 예속화의 길입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아래 두는 설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안 됐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된 개혁이 오히려 정권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모순된 결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급조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 없는 입법 강행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사법정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몸통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검찰개혁, 권력남용 방지를 외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보복, 정의 구현이 아니라 방탄입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추적하는 수사관의 손에서 칼을 뺏고 법의 심판대를 아예 철거해 버리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오직 이재명이라는 단 한 사람을 성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라는 국가의 근간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법치라는 성벽을 허물어 그 파편으로 한 개인을 지키는 요새를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사 역량을 마비시켜서라도 권력자의 과거 범죄를 덮으려는 이 무모한 도발을 국민들께서 서슬 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정의를 죽이고 권력을 지키려 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하려 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이 기만적 검찰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며 그 어떤 권력자도 법망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이 될 수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중수청·공소청 신설 이것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아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지요. 경찰이 있고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중수청이 있지요. 또 공수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특검도 있지요. 이 수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복잡성, 혼란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행안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기관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인데,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 과정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역시 혼란이 예상됩니다.

중수청, 이제 신설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사 역량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구조는 수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체계의 혼선을 초래합니다. 또 기관 간에 사건 떠넘기기, 이른바 핑퐁 현상이 빈번해질 것이고 주요 사건의 경우 관할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충원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서 막대한 비용 그리고 국가적 비효율 또한 불가피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 기관을 신설했는데요,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인데 이 재정 부담에 대해서 충분한 비용추계 마쳤나요? 또한 국민이 직면하게 될 복잡한 수사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법무부장관님은 아까 허가를 받아서 이석하셨고 차관님이 대신 오셨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수청 신설하면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마쳤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무위원석에서)

행안부 산하에 소속이 되어서 구체적인…… 행정안전부에서 절차를 거치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아,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검토할 것이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무위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의원 정확한 건 모르신다고요?

3월 9일 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교수가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우려가 많이 되니까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청 폐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선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졸속 입법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현장이 혼란하면 실패한 설계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바로 그렇습니다. 좀 이 얘기를 귀담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연간 약 80만 건의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목소리 한 번 듣지 않고 경찰이 만든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입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면 경찰수사의 허점은 누가 점검합니까? 법조계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박탈은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검사는 기소기관이면서 동시에 기소를 위한 수사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무조건 분리해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제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험한 실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제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험한 실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남용이 아니라 경찰수사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없애면 검사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거나 불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그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맡긴다?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호받습니까? 결국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불완전 기소냐, 소극적 불기소냐. 어느 쪽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주면서 전건송치도 없어졌고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그것이 권한의 균형입니다.

지금처럼 검찰을 악마화해서 권한을 무조건 해체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개혁은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작동해야 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책임은 더 분산되고 기관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구조, 이것이 지금 개혁의 실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자문단 박

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법조인과 법학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 섣부른 개편이라며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가장 강한 검찰개혁안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을쯤 혹 그 이후부터 현장에서 하나둘씩 후유증이 나타날 겁니다.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 처리 문제점, 보완수사요구로만 사건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수사 지연과 진상 파악의 어려움,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을 수 없는 피해자 사례, 이런 사건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보수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특정 진영의 목소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문제가 현실화되면 그 의견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논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전면 박탈과 무리한 수사·기소 분리는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

검사 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검사는 기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다. 다만 직접수사가 가져오는 권한 집중과 남용의 위험 때문에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이를 지휘·감독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를 이유로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개혁의 정답처럼 유통되고 있다. 이는 비교법적으로도 제도사적으로도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향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 버렸다. 이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

수사·기소 분리를 강하게 외치는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과거 검찰권 행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나도 안다. 나도 분노했다. 나도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개인적인 경험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절대 선의 서사로 굳어졌다는 점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절대 선의 서사로 굳어졌다, 물론 그 피해를 입은 분의 상처를 알지요.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지만 그것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면 검찰개혁은 실패한다는 믿음에 도달했다. 이는 논리적 설득의 결과라기보다 반복과 감정의 축적이 만든 세뇌에 가깝다. 제도 개혁이 감정 정치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검찰 공격은 결국 모든 검사를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제는 검사가 무슨 말을 하든 검사니까 믿을 수 없다

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이는 제도적 신뢰의 붕괴가 낳은 비극이다.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신뢰 없이 작동할 수 없다. 특정 권한의 남용을 비판하는 것과 하나의 직역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우리는 그 선을 이미 넘어섰다. 집권 세력이 검사를 악마화해서 얻은 것은 없다. 그들도 공무원 조직에 불과하니 다뤄야 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악마화는 사실 집권 세력이 무언가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의장님, 잠깐 좀 다녀오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예, 다녀오세요.

○조배숙 의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파이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도 개혁에 대한 위험한 환상, 한국의 개혁 담론에는 유독 법률만 바꾸면 현실이 즉각 바뀐다는 순진한 믿음이 깔려 있다. 5년짜리 정권이 법 몇 개 고치면 한 세기 가까이 작동해 온 국가 시스템이 매끄럽게 재설계될 것이라는 환상이다. 그러나 제도가 작동하는 것은 법문이 아니라 축적된 운용의 결과이다. 급격한 구조 변경은 필연적으로 공백과 혼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낳는다. 그럼에도 개혁 주도 세력은 이 위험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한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무책임한 실험에 가깝다'.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 지금 개혁 주창자들은 검사의 직접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실패한다고 주야장창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백, 비효율적인 사건 처리, 억울한 피해 가능성은 애써 외면한다. 분명한 것은 그런 개혁의 비용은 정치인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제도 개혁은 최소한 공리주의적 관점, 즉 사회 전체의 피해와 이익을 비교하는 기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논의는 그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분노에 기초한 개혁, 단순한 구호에 기댄 개혁, 제도 전체를 파괴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개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지금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정교한 설계다', 맞습니다. 개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제가 박찬운 자문위원장님의 페이스북의 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를 앞세운 일방적 개편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을 균형 있게 재설계하려는 신중한 접근입니다. 권한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그 책임을 어떻게 견지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구조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간 역할은 명확해야 하고 책임 주체 역시 분명해야 합니다.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종결되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관이 난립하고 절차가 중첩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오히려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 수사기관을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이는 권한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는 자기모순적 개편입니다.

결국 지금의 개편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수사권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더 강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문제 삼으며 개혁을 주장해 놓고 더 넓은,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구조의 재포장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형 수사기관이 충분한 견제장치 없이 출범할 경우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비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위험이 큽니다. 결국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또 다른 확장일 뿐입니다.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의 방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되고 그 행안부장관은 다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수사 권력의 정점에 대통령이 서게 되는 구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이미 통과시킨 사법 3대 악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법안까지 일련의 입법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권력분립의 균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변화가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아니면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청와대 관저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만찬 자리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특정 입법안의 처리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과 국회 입법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율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 기관처럼 인식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의 법안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권 구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국민의 기본권 보호 체계에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라는 방식으로 요청한 것은 숙의민주주의 원칙을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검찰제도 개편이 과거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수사 및 기소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 추진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과거 자신을 기소했던 검찰 조직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내지 영향력 축소를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도 개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치적 조치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부 수반이 직접 나서 입법을 압박하는 선례가 반복될 경우 향후 어떤 정권에서도 권력기관 개편이나 민감한 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밀어붙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이라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또한 입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재편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러한 구조 개편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범죄 대응 공백 우려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절도, 사기, 폭행과 같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민생범죄는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하거나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수사나 부실 대응을 보완할 장치가 약화되면서 결국 국민 피해구제의 지연과 한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권력 집중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구조는 수사기관이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정권과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는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행정부 소속기관이 수사하게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비효율성 증가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사건의 지연이나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적 비효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생범죄 대응 약화, 수사 통제력 저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정 비효율 증가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무리 억

울하다고 호소해도 검사 앞에 설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 채 오직 경찰이 작성한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살인 혐의를 받는 사건, 생각해 보세요. 피의자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만나고 진술을 들어 보며 판단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피의자 수십 명, 참고인 수백 명에 이르는 대형 부패 사건, 어떻습니까? 피의자가 수십 명, 참고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 이런 부패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진술이 서로 맞지 않거나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계속 발견됩니다. 이럴 때 검사가 직접 관련자 불러서 확인하고 빠진 증거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경찰에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번 판단을 내린 경찰이 과연 스스로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 보완하겠습니까? 그사이에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핵심 증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실체입니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며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장치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를 없애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지난 3월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공식 토론회에서조차 참석한 법학자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미 정부와 민주당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여기서 논의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회의감을 표출했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오기 싫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토론회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토론회 과정에서도 중수청 설계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전문가 논의와 다르게 뒤집힌 경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처음에는 직제 이원화 필요성이 반영됐다가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일원화로 결론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어차피 입법부 의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향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권한 남용이며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대검에서 근무한 모양입니다. 대검 관계자 출신 교수는 경찰 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며 통계와 현

실 인식 자체가 충돌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평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논쟁이 합리적으로 정리되기는커녕 토론회 현장에서 고성과 감정 충돌로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30년 넘게 학술토론을 지켜본 사회자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격앙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첨예하고 중대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혼란과 이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보다는 정해진 방향대로 입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숙의에 기반한 개혁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형사사법체계는 한 번 잘못 설계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문가들조차 방향성에 대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공론화 과정에 대한 불신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결론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리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된 주요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인데요. 7년 전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서 주범을 직접 구속해서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성학대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2018년 8월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네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의자 4명이 공중화장실 및 후배의 집에서 같은 또래인 14살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면서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사례입니다. 경찰이 10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 등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한 사건을 신속히 검토해서 송치 나흘 만에 재수사 요청해서 3개월 만에 일부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임박한 상황에서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 내용 등 다양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집단 성학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폭행죄로만 입건된 일부 피의자의 특수강간 가담 사실, 신고 무마 목적 협박 범행 등을 추가로 인지해서 주범인 피의자 1명을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직접 구속해서 기소하고 공범 3명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랜 시일이 경과해서 암장될 뻔한 사건을 직접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주범을 직접 구속해서 기소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집단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심리 치료, 학자금 지원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3월19일 24시 경과)

또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또 금품을 갈취한 사례인데요. 경찰이 단순 공갈 혐의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 출장 조사, 주거지에 가서 출장 조사를 했고 대검의 법과학분석과의 임상심리 분석을 실시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임을 밝혀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 특수공갈 혐의로 의율해서 범행을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고 플라스틱 빨대를 라이터로 녹여서 손등에 떨어뜨리고 폭행하고 또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해서 70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모친에게는 피해자의 채권자인 것처럼 기망해서 돈 350만 원을 편취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한 추가 사기 범행 규명해서 인지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주범인 피의자 직접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공갈 피의자로 또 입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오히려 이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 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명해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서 거주지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이렇게 다양한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을 알아보고 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충실하게 보완수사를 해서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피해자로 삼은 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서 피의자를 엄단하고 피해자 누명을 풀어 주고 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만전을 가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 우수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5성급 호텔 뷔페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육회를 판매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서 전날 남은 육회를 다음 날 다시 제공하라고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이,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검사 지휘의 우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산지 속인 육회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했는데 특사경은 이 호텔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겠지요. 그런데 검사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생각하고 직접 호텔에 가서 주방에 가서 원재료 보관 방법, 조리 과정 등을 다 확인하고 또 통신내역을 다 확인하고 나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지금 한식 조리사가 근태 불량으로 호텔로부터 징계를 받고 사직 권고를 받아서 앙심을 품게 됐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다가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서 판매한다는 허위신고를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단속 시점에 맞춰서 몰래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호주산 쇠고기하고 한우를 섞어 두었답니다. 이것을 모르고 다른 직원이 그것으로 육회를 조리해서 단속되게 했고, 그러니까 미리 보복할 생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주방에서 허위로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 두고 모르고 육회 만들게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 특사경은 허위신고인 줄 모르고 그냥 원산지를 속였다 해 가지고 기소의견으

로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그게 허위신고인 것이다 이것을 밝혀낸 거지요. 이것도 하나의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여기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작년에 12월 26일 날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경찰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은 사례를 수집을 하셨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무위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래서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무위원석에서)

예.

○조배숙 의원 그래서 이 사례집에 보면 경찰이 놓쳤던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가 회복된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보완수사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잘못하면 억울하게, 그 대구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 사업주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서로 이런 통제장치가 있어야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 이후에 약 4개월 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 약 5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수 사건에서 1차 수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장기 미제 사건을 밝혀낸 사례 또 허위 자백에 의존해서 잘못 송치된 사건에서 진범을 가려낸 사례, 이것은 보완수사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보완수사 기능마저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수사 오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제도적 견제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장할까 두려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처럼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런 사건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에게는 보호망이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무제한토론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분노와 막막한 걱정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면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78년간 우리 공동체를 지탱해 온 사법정의의 대들보가 단 며칠 만에 무참히 잘려 나가는 소리에 대한 비명이자 법치주의라는 마지막 성벽을 사수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다시 한번 준엄하게 묻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헌법 제89조가 보장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차마 지우지 못해서 껍데기만 남겨 둔 채 그 본질적인 사명인 수사권과 지휘권이라는 심장부는 도려냈습니다. 이름만 총장일 뿐 실권은 완전히 거세된 허울뿐인 명칭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독소조항 부칙 제6조 3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단 90일 만에 끝내라는 이 불가능한 명령은 수사를 완결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로를 확보할 시간을 선사하는 범죄자들을 위한 퇴로의 지도일 뿐입니다. 수만 쪽의 수사기록이 새로운 기관으로 이송되면서 리셋되는 짧지 않은 시간, 그 어두운 틈 사이로 범죄자들은 법망을 조롱하며 유유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사법 현장은 통제 불능의 카오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쏟아지는 100건이 넘는 청구가 헌법재판소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파렴치범들이 민주당 덕분에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다며 사법정의를 조롱하는 이 기괴한 풍경이 정녕 여러분이 꿈꾸던 대한민국입니까?

수사권이 거세된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돈을 받고 사건을 덮거나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도 그저 무력하게 지켜만 봐야 되는 관람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거창한 개편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지 이미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라는 방패 뒤에 멈춰 선 5개의 형사재판, 그 촘촘한 그물망에서 단 한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이라는 초가삼간을 통째로 불태우는 만행을 멈추십시오. 민주당 의원 172명 중 105명이 가입해 모임을 만들고 없는 죄가 조작됐다며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이 무도한 행태는 공범 이화영에게 징역 7년 8월의 확정판결을 내린 대법원까지 허무맹랑한 집단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조작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입니다.

검찰을 대신할 경찰은 벌써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작년 11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이 사건 등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고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사건은 늑장 수사에 증거가 인멸됐습니다. 똑같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일주일 만에 구속되고 4개월 만에 실형 선고를 받는 반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출판기념회까지 열며 선거운동을 이어가다 넉 달 만인 오늘에서야 합수본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경찰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민주당 의원의—오늘이 아니고 이제 어제가 됐네요, 12시가 넘어서—성추행 의혹 사건은 현역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지연시킨다는 피해자의 절규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사건이라도 과거 검찰은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지금 경찰은 아예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이 지휘권을 갖는 중수청까지 신설되면 수

사기관은 권력자의 범죄는 뭉개고 정적의 죄만 만들어 내는 관치수사의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때 주가가 6000선을 돌파했다는 화려한 수치 뒤에 가려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국가대표급 산업도시들이 줄줄이 위기를 선언하면서 신음하고 상장사 64%가 어닝쇼크에 빠져 있으며 영세사업장에서는 7만 6000명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100만 명의 국민이 금융채무 불이행의 늪에서 잠을 설치는 이 비극적인 시국에 국가 행정력과 집권여당의 당력은 오로지 방탄입법과 검찰 해체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님은…… 이제 부의장님이 계시는데요.

○부의장 이학영 필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조배숙 의원 아닙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뻔합니다. 결국 공소 취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직접 여기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가시는 줄 몰랐습니다.

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마지막 손수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법은 강자의 죄를 은폐해 주는 두꺼운 장막입니다. 정의의 여신이 안대를 쓴 이유는 상대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저울질하라는 뜻이었지 그 손에 든 저울을 박살 내고 범죄자를 못 본 척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선택을 치욕의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범죄자들을 위해 스스로 무장해제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범죄자를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지워버리는 이 기괴한 연극을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이것이 우리 법률가들의 변치 않는 신조이자 오늘 이 자리에 선 저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사법파괴와 민생파탄을 막아낼 마지막 보루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부디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운명을 생각해 주십시오.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이 악법에 대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법을 사유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 토론은 멈추지만 오늘 제가 남긴 목소리만큼은 이 회의장을 넘어서 국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최혁진)

(00시22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역사적인 공소청법의 입안 통과를 기다리시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검찰이 해체가 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검사들이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거듭나는 이 중요한 순간을 다시 국민의힘이 여야를 넘어서, 진보·보수를 넘어서 함께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여 늦은 시간에 이런 발언들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을 악마화한다라거나 또는 민주개혁 진영이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국민이, 민초들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항상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군주제와 귀족제, 그 밑에서 평생 노예 같은 삶을 살며 고통스러워하던 대다수의 평민들, 민초들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정치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분연히 수백 년 동안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정치제도가 사람들의 삶을, 우리 인류의 모든 삶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 냈습니다.

그때 소위 정치 엘리트,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민주주의를 반대했습니까? 배우지도 못한 얼치기 대중들이 정치적 권한을 가졌을 때 국가와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평민들이 정치적 선택의 권리를 가졌을 때, 정치의 일선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 공교육이 만들어지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권력이, 생명을 위한 권력이, 민초들을 위한 권력이 되는 것을, 그 변화를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자기 스스로 대중들에게 자비로워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성군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많은 국민들이 세종을 이야기하고 나서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그러다 한 사람 더 나온다 그래 봐야 정조대왕 정도가 나오겠지요.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 왕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어느 때 대중 앞에 고개 숙이고 대중을 위해 봉사했습니까? 대중이 두려웠을 때, 시민들이 내 권력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권력은 겸손해졌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것은 정치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검증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재난 문제에 대응도 신속했

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평가받고 권력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좀 더 기민하게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민주주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방탄을 위한 것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늘 검찰개혁이, 검찰청의 폐지가 지금 이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그 방향이 옳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왜 이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더 좋은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사법개혁을 저리도 목 놓아 외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어떤 모습을 보여 왔습니까? 국민의 고통 앞에 서서 국민을 지키고 서민들을 지키고 민중들을 지키는 역할들을 해 왔습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사법부가 국민을 지켰습니까? 박정희 독재정권이 유신으로 영구집권체계를 만들 때 검찰이, 사법부가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을 지켜 냈습니까? 만일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4·19를 성공시켜 내지 않았더라면, 이승만 정권을 축출해 내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번영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독재의 탄압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며, 부당한 판결을 받으며, 검찰에 고초를 입으면서도 군부독재 정권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전두환 독재정권과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 87년의 광장의 함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복적으로 군사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지난 내란의 밤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봉 들고 나와서 맨몸으로 장갑차에 맞서 국회를 지켜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군과 검찰이 지배하는 암울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국민이 불법적 행태 앞에서 고통을 받을 때 국민 앞에 서서 싸우라고 한 조직이 검찰입니다. 국민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 억울함을 풀어 주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독재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쿠데타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맞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몰락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검찰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불법을 행할 때 그들은 거기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독재 권력을 휘두를 때 검찰은 먼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농단을 할 때도 그들은 항상 힘없는 국민의 뒤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검찰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모습을,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의 머리 위에 군

림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학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또 제 뒤를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하실 의원님을 위해서 끝나는 시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2시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2시 20분쯤 시작했으니까요 제 다음에 하실 분은 2시 20분쯤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대한민국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권력인 윤석열 정권을 선택을 했을까.

국민 여러분! 보수정당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최소화하고 민간에 많은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정부보다는 훨씬 자원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시장의 힘은 키우더라도 그것에 개입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인 보수정당들이 이와 유사한 입장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러 보수정당은 독특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민생과 서민을 위한 복지는 축소하지만 검찰과 같은 사정조직의 힘들은 결코 축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검찰을 국민의 뜻에 맞게 보다 민주적으로 개혁하자라고 하는데 법사위에서도 보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손사래를 치며 검찰을 감싸고 옹호하고 검찰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하나입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겼던 지난 수십 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격차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세대 간의 격차도 너무나 크게 벌어졌습니다. 중산층은 쪼그라들었고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불안해졌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들은 약한 국가, 특히 민생과 서민들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며 결국 부자감세를 이어 왔습니다.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보수정치가 왜 유독 검찰권력의 강화에는 이토록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한 시민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민주의식을 키워 오며 주권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 탈시설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청춘을 모두 바치고 이제 노인으로서 자살을 고민하지 않고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한 만큼 국가로부터 책임 있게 예우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인 국민들, 그들은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권력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요구들이 점점점점 커지는 것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입으로는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사정기관들의 힘을 키우고, 검찰권력을 키우고

그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권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억누르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들로 권력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상황을 용납하지 않자 이들은 드디어 내란과 계엄까지 감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과 검찰의 권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민주주의 발전을 억누르려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개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으로 이끌려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개 숙여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입니까? 친일의 잔재를 벗어 내지 못한 일본 군국주의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검찰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라는 1920년에 나온 기록의 박은식 선생의 증언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자는 사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체포했다. 그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친구까지 관련시켜 사실의 유무와 경중을 불문하고 심문에 앞서 잔인한 형벌을 가했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여러 날을 감금한 뒤에 비로소 심문하기 시작하는데 또한 형벌을 가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백만으로 죄를 성립시킨다'. 일제 식민지 일본 총독부 검찰의 모습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모습이 대한민국 검찰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심문을 받던 피고인이 너무도 무서워 오줌을 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윤석열 검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929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시 검찰의 모습입니다. '7명의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100명을 잡아들인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들을,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이런 일을 겪고 경험했습니다.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자백을 강요받고, 진술을 강요받고 그로 인해서 투옥되어야 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검사에게 집중되고 검사 중심의 일원적 수사체계, 일제하 검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9년 대한민국 검찰에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배, 수사권을 초기부터 가져 왔습니다. 명분은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의 부패였습니다. 친일경찰, 민초들에 대한 친일경찰의 괴롭힘을 본인들이 제어해야 한다라며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도 친일 총독부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그 검사들이 그대로 대한민국 검찰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초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것은, 경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친일이라는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변 보호, 안전, 인권을 위해서 경찰에 대한 지배적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분명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이 탄생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가졌다라고 한

다면 그들은 4·19 때, 군부 쿠데타 때, 군사독재 정권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안위, 본인들의 권력, 본인들의 지위를 지키자는 것이 경찰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했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검찰이 군부독재 시절에 공안 검찰로서 인혁당 사건에서 보여 줬던 모습들, 노동 탄압에서 보여 줬던 모습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많은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도가 바뀌니까 대한민국 검찰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태만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노동현장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검찰이 지배권력이었던 일본 총독부에 충성했듯이, 이승만 부패정권에 충성했듯이,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찍어 눌렀던 것처럼, 박정희 쿠데타 세력에 충성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재벌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가장 약한 노동자와 농민과 서민들을 위해서는 악독한 권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검찰은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만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까지 6년 반이 걸렸습니다. 6년 반 동안 그 많은 노동자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조를 파괴한 경영진은 끝까지 버티고 느지막이 처벌받았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징계당하고 거리에 나앉고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광호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늦췄고 혐의를 축소했고 처벌도 약화했습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입니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유우성 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여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제출한 북한을 드나든 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은 해당 증거를 철회했고요 그것도 위조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철회를 합니다.

유우성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증거를 조작하면서 국민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가족까지 처참하게 몰락시킨 담당 검사들은 경징계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그 과정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켜봐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냈던 국민들, 대한민국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하는 것이, 사법개혁 하는 것이 마치 경제적으로 저성장돼 있는 군부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분들과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이승만을 쫓아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유신정권과 싸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전두환 정권을 몰락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내가 죽더라도 막아 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알고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몰락시키는 그런 정치집단들에 꼬리를 흔들고 충성하는 검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분을 삭혀 왔습니다.

우리 같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동료, 노동자, 서민들이 단지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지켜 줘야 할 국가권력의 핵심인 검찰로부터, 사법부로부터 탄압받고, 고통받고, 위증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고초를 겪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저는 원주에서 태어나서 원주에서 자랐습니다. 7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 내셨던 지학순 주교님과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자랐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부패, 탄압, 비리로 인하여 강원 남부지역의 탄광 노동자들이 빨갱이로 몰리고 길가로 내몰리고 감옥으로 가고, 많은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유로 잡혀가고 고초를 겪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모습을, 지학순 주교님이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인권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천주교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권력으로부터, 군부독재로부터 탄압을 받고 시련을 받았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많은 원주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학순 주교님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부패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시민에게 봉사해야지 부패권력에 아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고초를 겪고 원주역에 내렸을 때 인구 5만이던 원주시민들 중에 2만 5000명이 원주역에 모였습니다. 그게 시민의 뜻입니다.

누가 국민의 편이고 누가 국민의 눈을 닦아 주고 누가 국민을 괴롭히는 자와 맞서고 누가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업화의 성과가 많은 국민들의 복지로 이어지고 인권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로 커 올 수 있는 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그 인권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바치는 사람들을 함께하고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몰락의 길에 접어들 위험 속에서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켜내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학습되어 왔습니다. 4년짜리 권력, 5년짜리 권력은 결국 지나가는 권력이다. 영원한 권력은 검찰의 권력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득권과 특권의 편에 서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기회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해 왔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안검사들, 특수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검찰들, 그 사람들이 검찰권력의 수뇌부를 장악하며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검찰까지 전부 다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정치검찰에 동조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정치검찰과 한편이 되지 않았고 평생을 국민을 위해서 검사로서 봉사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은 자정능

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했다면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국정농단을 방어하고 동조하고 방조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됐을 때 그저 지방의 한 검사로서 나는 본분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검사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는데 왜 내가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되냐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검찰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벌어지던 밤에 국민들이 어찌 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만류하는 가족을 뿌리치면서도 여의도 광장으로 뛰쳐나올 때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했던 사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한 청년들이, 양심적인 시민들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못하고 허위 자백과 조작된 진술에 근거해서 사형선고를 받던 그날 그들은 왜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인권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는가? 단지 그 재판정에 내가 앉아 있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동료 판사가, 동료 검사가, 당신들의 지휘부에 있는 검사들이 그런 불법적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하였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수도 없이 기회를 줬습니다. 자신의 피를 뿌리며 기회를 줬습니다. 부패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 할 때 온몸으로 싸우며 대한민국의 권력이, 대한민국의 사정권력이, 대한민국의 사법권력이 제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새로운 권력을 세웠으니 국민의 편에 서 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민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을 성장시켜야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에 의해서, 우리 입법부에 의해서 감시받고 감독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야 모든 국회의원님들,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국민에게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뽑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정권력이, 사법권력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막대한 권력을 활용해서 사적인 이익, 사적인 이해, 본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부패와 비리를 방탄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뽑은 당신들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과 계엄을 저질렀을 때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국민들께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에 나서는 것이 위헌이 아닙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던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 국민이 고통받을 때 침묵으로 일관했고 방조와 동조를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그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할 때마다 건건이 위헌 소지 등을 이야기하며 재 뿌리기를 하고 있습니

다.

그렇게 할 말이 많았더라면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서려 할 때, 그때 그들은 법복을 입고 거리에 나섰어야 합니다. 맨몸의 국민들이 장갑차 앞에, 총칼 앞에 놓여질 때, 5·18 광주의 광장에서 국민들이 살육당할 때 그들은 목소리를 냈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을 거부할 때 그들은 더 이상 헌법을 훼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러면 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내란의 밤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검찰이 그 누구도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검찰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윤석열의 오만함이 몇 개월 동안 이어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경제도 덜 폭망했을 겁니다. 국민들은 덜 고통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는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하고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검찰개혁은, 오늘 공소청법의 제정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그늘,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작 기소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민주당이, 범여권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법사위 국정감사 때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조직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2개의 기업, 그 기업이 검찰과 얼마나 깊은 유착을 이루고 있었던가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쌍방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북송금 사건, 검찰은 진술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표에 나와 있는 걸 보십시오. 윤석열 친위대 검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쌍방울의 핵심 계열사에는 전부 윤석열 친위대 검사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기서 사외이사로, 고문으로 일을 하며 과외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검찰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지요. 쌍방울은 아시다시피 대표가 조직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검찰의 방탄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토록 검찰의 핵심 수뇌부 출신들을 자신의 사외이사로, 고문으로 앉혔던 것입니다.

저들이 당시 윤석열 검찰과 어떤 깊은 연관성을 가졌는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출신을 중요하게 중용했다라는 것을 세상의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저런 선택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 기업에 가서 부당한 청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 하나로 민주개혁 진영을 기소하고 괴롭히고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이유는 하나겠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권력이, 민주개혁을 말하는 권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은 부패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원치 않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울뿐만이 아닙니다. 삼부토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핵심 측근들이 삼부토건에도 자문,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나가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갔습니다. 삼부토건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등이 켜진 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 기업을 보십시오. 삼부토건은 항상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습니다. 삼부토건이 회생될 때마다 삼부토건에는 주가조작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반복적으로 주가조작을 통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려야 했기에 어쩌면 이들은 막강한 검찰권력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알 만한 검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들입니다. 시장에서 망해 가는 기업에, 걸핏하면 주가조작 의혹에 시달리는 기업에 왜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의 수뇌부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저토록 드글드글 들어가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이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삼부건설공업과 고문계약을 맺고 1억 4600만 원을 고문료로 수령합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 삼부토건의 사건을 맡고 삼부토건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고 당시 수임료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삼부토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단죄되지 않고 이후에 경영 부실로 법정관리의 늪에 빠져듭니다. 삼부토건의 비위와 문제를 이야기했던 많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들은 줄줄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하청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패 권력이 거대 재벌기업의 편에 서서 재벌기업의 비리, 기술탈취,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행위 눈감아 주고 무혐의 처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몰락하거나 그분들이 고통에 빠질 때 외면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소기업들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이토록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들이 나오지 않는가'. 저는 공정과 정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권력이 기득권과 특권의 편에 서서 일정하게 자신들도 이익을 얻고 대한민국의 서민들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아픔들을 외면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사회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는 큰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번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좌표가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시작일 뿐입니다.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 위에 서고 뒤에서 대한민국의 비틀어진 성장의 뒷배가 되어 주었던 그 지나간 역사를 이제 우리는 청산해 나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득권과 특권 중심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살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데 사법개혁·검찰개혁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이 어느 정도인지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까지도 비판하고 비난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PPT에 나온 게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하나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 대법관 14명 중에 12명이 서울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85.7%. 헌법재판관은 9명 중에 9명이 다 서울대 출신이고 그중 한 사람만이 비법대입니다.

특정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법권력을 통해서, 검찰권력을 통해서 저는 아까 쌍방울과 삼부토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비리나 불법·파행의 기업들의 보호장치가 되어 경제적 이권들을 누리고 특정 학과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그러진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게 문제인지는 판사 임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대학이 85%의 판사가 임용이 됐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삼사십 %, 전국의 많은 법대 출신 학생들이 판사가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되어도 최정점에는 특정 대학 출신들이 독차지합니다.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될 리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로스쿨 체제에서 제대로 된 법조인 양성이 안 되다 보니…… 저는 놀랍게도 여기 나와 있는 서울대 로스쿨의 최근 입학생의 근 3분의 2가 강남 3구와 특목고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권력이 있는 집안이냐 그렇지 않은 집안이냐, 유전학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재 사법체계는 특정 지역에 태어난 아이들만이 특정 대학에 다수가 입학을 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정의와 공정과 인권을 지켜야 될 사법부가 어찌 된 일인지 특정 대학 출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강남 3구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로스쿨을 가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되는 하나의 직선도로가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왜 지방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서울대 로스쿨을 가지 못합니까? 왜 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했던 사람들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 대법관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로펌의 변호사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아버지가 대법관이어서 그 대형 로펌에 고액 연봉을 받고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도 특정 집안에만 아주 유능한 법조인이 대를 이어 태어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변호사를 세우지 못하고 형사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민사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 제도는 지난 십수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돈이 없

어 변호사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해서 국선변호사를 쓰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낮은 변호사 수임료로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의 불평등에 거기에 더해 검찰의 불공정이 결합됐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서민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다라는, 가장 평등하다라는 사법이라는 공간 속에서조차도 처절하게 외면받고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분노들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더 큰 변화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강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검찰 칠십여 년 역사에 국민의 마음속에는 칠십여 년의 한이 생겼습니다. 그 한이 대대로 이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검찰의 고초를 받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자식들의 한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검사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 검사가, 또 일부 평검사들은 자기의 주어진 의무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서민들을 보호했던 사례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기구입니다. 몇 사람의 선행이 있을지라도 조직 전체가 국가에, 국민에게 해악을 미쳤다라면 국민이 뽑은 입법부에 의해서, 제도의 변혁을 통해서 수술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여러 사람들의, 여러 계층의, 여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법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조직이 변화할 때 약간의 시행착오는 언제나 뒤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맞게 자신을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의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기본적 의무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부산 기장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대선 기간에, 집회가 금지돼 있는 이 시기에 부산 기장군은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선거 60일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강행을 합니다. 강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이 있는 어깨띠를 두르고 행사장 인근을 각종 선거 공약이 담긴 플래카드로 도배를 하고 군민 체육대회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SNS에 가서 지지한다라는 댓글을 마구마구 답니다. 좋아요를 마구마구 누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짧기 때문에 검경 합동수사를 하지요. 놀랍게도 불송치 판결이 납니다. 그것도 만료일 직전에 불송치 판결을 해서 이의제기조차도 할 수 없이 합니다. 당시 부산지검장은 친윤 핵심 검사인 김창진 검사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에서 저에게 법무부에 질의를 해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선거 기간에 다른 정당도 저렇게 해도 이제 앞으로 불송치냐, 다른 정당도 후보자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SNS 댓글을 달아도 기소당할 일이 없느냐’. 아직 법무부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일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관급 행사를 선거 시기에 열어도 된다라고 하면 모든 지자체가 앞으로 열었을 때 처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공직자가 SNS에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댓글을 선거기간에 마구마구 달아도 처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기득권과 특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말 위에 올라타고 한 손에는 경제권력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기득권과 특권층을 옹호하는 정치권력의 손을 잡고 호가호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에 대해서는 진술 하나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괴롭히고 수도 없이 압수수색을 해서 결국은 서민을 시민을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부패권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패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권력의 탄생을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막아 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새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것은 일제 군국주의 검찰의 오물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리 열심히 끝까지 해도 옷은 어그러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한 번쯤은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개혁될 수 있는,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개혁과 자정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손에는 경제권력을, 한 손에는 기득권 정치권력을 손에 쥐려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보수 정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민주개혁적인 정치를 이야기하는 분들보다도 시장의 원리를, 시장의 자율성을 더 강하게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기반 위에 시작을 합니다. 경제학의 기초는, 경제학원론의 첫 장에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 욕망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시스템이 자원 배분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정치그룹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시장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데 검찰의 자율성을, 검찰의 권한을,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까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수정치의 전제에 따라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돌진하는 그런 영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조직

이 아닙니까? 그대로 두면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본인들의 인간관에 맞지 않습니까?

검찰은 검사들도 욕망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지난 역사에서 보여 줬습니다. 간판에는, 규정에는, 입으로는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모인 술자리에서는, 그들만의 골방에서는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지배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감시를 받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징계를 받고 퇴출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권력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 전체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곳곳에 스며들어 갔는지를 저는 이 자리에서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의 현 상황입니다.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 핵심 조직 25개 중에 20개 직위가, 약 80% 비중이 검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무부처가 있고 산하에 청이 있을 때 주무부처에서 산하 청으로 파견을 많이 나가는 경우들은 봤지만 청에서 부로 이렇게 대거 파견 나와서 부 자체를 장악하는 경우는 아마 법무부와 검찰이 유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정도가 되면 법무부의 검찰청이 아니라 검찰부 산하의 법무청이 맞다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대변인도 감찰관도 차관도 인사 부서도 기획조정도 모두가 검사입니다. 검찰국장과 검찰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검찰과의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법무부의 모든 업무를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법무부를 검찰화했습니다. 검사 파견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법무부의 모든 조직을 검찰이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부처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PT 뒤로 넘겨 주시면요 윤석열 정부 기간 때 검찰청은 대한민국 모든 주요 부처에다 검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정 관련 기능을 하는 일부 부처에만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법무부를 완전 장악한데 이어 대한민국 모든 부처에 검사를 파견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부처에, 여성가족부까지 검사들이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왜 나가 있어야 될까요? 과거에 박정희 독재정권과 전두환 군부정권이 보안사, 국정원 등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통제했듯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검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조직 전체를 장악하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도 제일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민주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들이 검사들을 파견받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각 부처로 하여금 파견 나온 검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자료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국민이 정부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정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그 부처에 검사가 나와 있으면 그 부처에 나와 있는 검사가 검찰과 공조를 해서 시민을 상대하면, 가뜩이나 일반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데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모든 부처에는 자문이나 고문을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채용돼 있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 변호사 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사까지 파견을 받아서 인력 운영을 하는 그 이유를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해외공관에도 상당수 진출했습니다. 보시면 좋은 자리들만 갑니다. 주미국대사관, LA총영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제네바, 주독일, 주네덜란드, 치안이 대단히 안정화돼 있어서 굳이 우리나라 검사가 가서 현지에서 파견 나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 교민들이나 현지의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여행객들이 그다지 범죄에 노출될 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선진국에만 나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변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그런 국가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 인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외교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로 힘센 부처 두 군데, 하나는 기재부 하나는 검찰이라고 하네요. 기재부는 예산을 늘려 주는 조건으로 주요 해외공관에, 그것도 아주 좋은 공관에 기재부 자리를 하나씩 늘려 갔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관에 문제가 있는 거 하나씩 덮어 주면서 한편으로 검사 파견 자리를 늘려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데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검찰 수뇌부의 불미스러운 일을 심부름을 잘해서 잠시 해외로 떠나 있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곳에 가시고, 대통령은 민생을 살리는 데 지금 재정을 확보하느라고 밤잠을 안 잔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기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녀들 현지 유학시킵니까?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 3시가 지나면 공소청법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난 뒤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또 경찰도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수사를 일그러뜨리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날 공소청, 중수청을 분리하는 주된 사유가 됐습니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위조·축소·은폐·조작하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준 그런 아픈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와는 조금 다른 문제들과 연루가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지방경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소지에서, 태어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에서 수사관으로 5년 10년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지역의 여러 인사들과 동문들과 인연과 관계로 인해서 봐주기 수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 문제는 검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남겨서 해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사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만한 지역의 근무 제한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검사들에게 일부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수사·기소는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인사 체계와 징벌 체계와 감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때,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 필요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검찰에 남겨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미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악용되었던 역사가 수도 없이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사건을 지체시키고 경찰에게 압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서 사건 자체를 일그러뜨리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굳이 보완수사권을 둔다라면 저는 국민권익위나 제3의 기구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국민권익위에 보완수사권을, 필요하다라면 권익위에 두자라고 하는 법안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부 검찰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익위는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며 강하게 반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익명을 요구하는 고위 인사들에게 '만일 보완수사권을 국민권익위가 맡게 되면 권익위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익위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권익위도 국민의 불편부당함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온 기관입니다. 일부 추가적인 역량은 파견을 통해서든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는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같은 안, 결국 제3의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민주당에서 제3의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정부조직이 확대돼서 정부조직이 비대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기존에 있는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만일 검사가 수사 내용을 검토하며 기소 여부를 볼 때 수사가 다소 미비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민권익위로 이첩하면 됩니다. 제3의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로 이첩하면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3의 기구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단지 수사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들여다봐서 판별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충분한 수사가 돼 있는데 뭘 더 수사하라고 하는 거냐,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면 될 일 아니냐 또는 정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네라고 하는 판단을 제3의 기구에서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 경찰의 수사 남용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일부 수사권을 남겨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땜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 국민의 불안을 떨쳐 낼 수 있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한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만일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소 필요하다라면 기존의 정부 안에 있는 기구, 관련 기구, 유사 기구 또는 신설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재를 위한 것도 방탄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요구에 따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기업하는 분들이 기를 쓰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검찰지청의 범죄예방위원이 되는 길입니다. 뭐 하나라도 봐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지역의 검사님들이 중요할 때 한번씩 봐준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지요.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법에 만연화된 불평등과 불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의 재산이나 지위나 지역이나 또 인맥이나 가족 안에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검찰 앞에서는, 경찰 앞에서는, 재판정에서는 공정하게 판결받을 수 있는, 공정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졌고 국민들은 체감했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오늘 검찰을 개혁했을 경우에 이런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체감해 온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에게도 이로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성과로 평가받고 검사는 그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찰까지 가세해서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우수한 검사로 판결받는, 더더군다나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때 그것이 정치적인 사안과 연결돼 있으면 더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검찰의 흑역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청이 해체가 됩니다. 공소청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필버를 통해서 지난한 논쟁이 있겠지만 결국 중수청이 생겨납니다. 권력이 독점되고 남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대단한 오판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독재의 역사들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온 것도 그렇지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은 저는 예전에 월드컵 때 붉은악마의 모습에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고 수십만이 광장에 나와서 함께 뛰고도 그 자리에 쓰레기 하나를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뜨는 모습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힘입니다.

그 힘이 박근혜 탄핵 때 촛불을 든 광장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광장에도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노래하고 투쟁하고 했던 그 공간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유모차를 끈 엄마들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운 날 발을 동동 구르는 시위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묵탕을 끓여서 나누어 주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들 속에 있을 때가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열사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몸으로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며 공직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지.

윤석열 탄핵이, 윤석열 내란이 일어났던 밤에도 그 모습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추운 날 그 많은 사람들은 노래하며 싸웠습니다. 많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국민을 배반했던 권력이 폭력을 동원했습니다. 군은 최고의 폭력입니다. 그 폭력이 국민을 향했을 때는 최고의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 앞에서도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피 한 방울 흘리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은 맨몸으로 싸웠습니다.

지났지만 너무나 불안했고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울 때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관망했습니다. 가장 힘없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을 지켜 오신 분들 기꺼이 다시 생각을 해 봅시다. 검찰개혁이 뭐 대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합니까? 길거리에 나선 서민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국민을 지켜 내지 못한 공조직에 대해서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밤을 새 가면서 이야기할 문제인지.

국민들이 느꼈던 배신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IMF 터졌을 때 국민들이 폭력 투쟁했습니까? 기업에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기업들이 파산하게 생겼다고 명퇴하고 자진 퇴직하고 길거리로 해고돼서 밀려 나갈 때 그분들이 대한민국 기업의 빌딩 하나를 불을 지르기라도 했습니까? 정부 청사에 화염병을 던졌습니까? 지금은 나라부터 살리겠다라고 했지요. 집에 있는 금붙이들 들고 나와 가지고 이거로라도 나라를 살려 보자라고 그것 팔아 돈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돕자고 했던 게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넘겨서 다시 성장할 때 되면 우리를 받아주겠지, 나를 내보냈던 우리 회사가 나를 제일 먼저 부르겠지, 불과 수년 만에 경제가 안정이 되고 기업은 3배, 4배, 10배로 성장하게 됐지만 그때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집에 있는 금붙이를 내놨던 사람들은 기업에서 불러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던 사람들이 치킨집을 하다 망하고 해도 정부는 죽지 않을 정도의 복지 수준으로 이 사람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나은 민주주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의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단히 좋은 집단적인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지키지 않은 권력, 심지어 기득권과 특권의 손을 잡고 공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아니라 경제권력과 손을 잡고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방탄이 되어서 부패·비리의 철옹성이 되었던 그 권력이 국민에게 단죄받는 역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로 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초들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결단과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항상 옳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아주 현실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여성도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작가들의 글과 수많은 운동가들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여성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됐습니다.

정치학의 역사는 최근 아주 단순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이 어떻게 해야 보장되느냐, 정부는 맨날 재정이 없다 그리고 여러 이해충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의 답을 보여 줍니다. 국회의원 중에 장애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장애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서민의 숫자가 늘어나면 민생경제, 서민경제의 문제는 굳이 누가 챙기지 않아도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복리, 인권은 수많은 평민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권을 얻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검찰개혁, 검찰이 왜 저러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 밑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들의 방탄을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부패한 권력과 싸우는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는가? 국민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이 입법부에 부여한,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권력을, 국민이 믿지 못하는 사법부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민 위에 다시는 군림하지 못하도록,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들에게도 이롭습니다.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던 친구들, 공부밖에 모르던 착한 범생이로 불리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돼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했는데 막상 검사가 되어 보니 요직에 있는 선배들이 그 권력과 특권과 이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결국 한직으로 도는 검사가 되고 마는 그런 많은 기억들이 오늘날의 검찰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검찰을 감시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검사라면, 그런 공소청이라면 박수 쳐 주지만 또다시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너네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냐?', 아닙니다. 그게 삼권분립입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심판받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처절하게 심판받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더 눈을 뜨시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셨고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해라. 우

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똑바로 해라. 검찰을 개혁하라. 사법부를 개혁하라. 행정부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라. 군이 더 이상은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지 않도록 해라.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전심전력하도록 하라'.

아까 행정안전부장관이 역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요즘이 어느 세상입니까? 불법적인 지시 하면 SNS가 다 발달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바로 문제가 됩니다. 언론이 있습니다. 국민의 보는 눈이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깨어나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노조들을 만나면 공무원노조가 행정에 대한 감시 역할도 일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 더 강하고 더 민주적인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 더 민주적인 검찰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경제학과 정치학이 입증했듯이 더 강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때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눈을 뜨는 만큼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관권선거, 금권선거 이런 것들을 왜 개선해 왔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이고 국민들이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국회도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국회는 그래도 지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의 심판을 받으며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뽑힌 저희들이 행정을 개혁해야 합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를 거쳐 민주화 이후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만세 한 번 외쳤다는 이유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무고한 서민들은 조작 수사와 과잉 수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해체되고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만 163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유우성 씨처럼 10년 넘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검찰권력은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위치에 서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권한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권력남용을 막는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고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서민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다시 군이, 또다시 권력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눌 때 맨몸으로 맞서야 하는 국민 앞에는 경찰이 서 있어야 됩니다. 맨몸으로 맞서는 국민 앞에는 검사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맨몸으로 맞서는 국민의 앞에는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몸을 던져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 왔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국회가, 우리 검찰이, 우

리 사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직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의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이렇게 필버로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의 하나로 뜻을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국회가 제 역할들을 한다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강한 민주주의로 발전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될 때, 오직 기득권과 특권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없는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때 가장 먼저 나서는 사법부가, 검찰이 되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한병도 최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02시13분)

○의장대리 한병도 다음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국가형벌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권력기관 사이의 균형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 법안들을 이처럼 졸속으로 서둘러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개편들 또한 지금 이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법안처럼 일부 정치세력들이 밀실에서 그들만의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었던 이후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건 종결, 부실한 수사, 심각하게 지연되는 사건 처리와 그에 따라 요원해진 피해 회복, 단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 간부가 불송치를 미끼로 뇌물을 요구하고 사건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한 상해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요청, 기록 송부 요청, 사건 송치 요구, 보완수사 요구라는 사법통제를 통해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소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2년이 소요되었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가 제때 구제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의율할 필요 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에서 재수사 없이 공소시효만 도과시킨 채 송치하고 다시 검찰이 공소시효 도과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를 하자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한 사건입니다.

비단 이런 사례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피해는 그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범여권은 이번에는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고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 민주당, 범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입법도 더 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정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편인지 아니면 정치인과 검찰 간의 갈등 속에서 나온 것인지.

민주당과 범여권이 이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검찰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부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고 다시는 검찰이 자신들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명 정부와 범여권이 그들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고 이들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선거 등에서 이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이유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검찰 폐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범여권이 이들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이들에게 정치적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 폐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된 주장입니다. 그저 그들만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일 뿐입니다.

대부분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보다는 위법한 검사는 엄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은 지켜 주고, 검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제대로 검찰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포함하여 검찰개혁 방안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국민들께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반대가 45.8, 찬성이 39.5%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또 해당 질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84.5%를 차지한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일반 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일반 국민 4000명,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에 대해 1 대 1 심층 면접 및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중에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성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검사 보완수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와 기소 분리 또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43.8%, 긍정적 의견이 41.5%였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추진되는 방식과 속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제도 개편이라면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 오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현장의 의견도 듣고 부처의 의견도 듣고 또 법률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합의가 먼저 나오고 법안은 그저 뒤따라오는 모습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 또 민주당 대통령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합의를 하면 그 합의한 대로, 입맛대로 법안을 짜맞추고 잘라 내고 추가합니다. 말 그대로 짬짜미 개편이고 입맛대로 개편입니다.

국가의 형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가 균형을 이루고, 기관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효율성과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독립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형사사법제도는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그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나 방안 마련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피해가 대부분의 선량한 우리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과 일부 권력자들만 웃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이유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가 국회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4대 검찰개혁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또 당시에 논의가 있었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또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당시의 법안 제목이었지요—이 4대 검찰개혁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7년간 유지되어 오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다. 과거 일부 검찰의 과오가 있었다고는 하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회 또 저비용 고효율의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형사사법 운영의 근본축인 검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1987년 경찰이 은폐하려던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실을 밝혀내 역사를 바꾼 계기를 만든 것도 검찰이었고, 대검 중수부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사회기강을 바로 세웠던 것도 검찰이었다.

검찰의 문제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던 정치권력에 있다.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고 예외는 없었다. 따라서 인사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 검찰을 폐지하면 정치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권이 직접 지휘 통제하는 정치경찰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특히 검찰 해체를 통해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4대 검찰개혁법안은 중국 문화혁명의 실패한 역사를 답습하면서 중국식 공안 통치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중국은 196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문화혁명 때 각급 인민검찰원을 폐지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75년 개정된 중국 헌법에서는 인민검찰원, 즉 우리의 검찰에 해당하지요. 인민검찰원의 직권은 공안기관, 우리의 경찰입니다. 공안기관에서 행사한다. 즉 1975년에 개정된 중국 헌법에서 검찰의 권한은 경찰이 행사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검찰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문화혁명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대적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중국은 1978년 헌법을 개정하여 인민검찰원 제도를 복원했지만 현재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다.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 기소 심사다. 검사의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중국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고 송치 이후 기소 심사 후 공안에 보충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중국의 검찰 및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한다. 왜 굳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78년간 잘 시행되어 오던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많은 법조인과 형사사법 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검찰제도와 중국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려 하는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내용은 이제까지 검찰의 문제는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던 정치권력에 있고 검찰을 폐지해서 정치검찰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정치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왜 78년간 잘 시행되어 오던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많은 법조인과 형사사법 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검찰제도와 중국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려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이 법안들이 우리 국민들께 가져올 피해도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권력형 범죄, 다수 피해자가 있는 대형 범죄 또 지능범죄, 마약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민생범죄들에 대해서도 왜곡 수사, 부실 수사, 장기 수사, 사건 묵살 등으로 피해가 급증할 것이고 그에 대한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경찰로, 또 중수청으로, 공수처로, 공소청으로,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다시 반복해서 이 기관들 사이를 오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인 국민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대혼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38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개국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 31개국 중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배제된 나라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OECD 38개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다수 국가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하지 않고 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검찰의 문제가 왜 있었던 것인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단이 무엇인지,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범여권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감추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검찰 폐지가 국민의 명령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제도 변화들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저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들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국민적 공론화와 숙의·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소청법안은 검찰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검찰제도가 무엇이고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수사와 기소 분리의 문제점과 부작용, 이번 공소청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제도와 수사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있었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 어느 법률 전문가께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헌법적 지위, 제헌헌법 제72조제11호에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한 것을 제외하면 제헌헌법과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검사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처음 규정된 것은 4·19 혁명 이후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부터다. 헌법 제10조 3항에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위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에 규정된 기관으로 격상되었으므로 헌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영장청구권자의 변경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같은 헌법 개정을 통하여 주거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에 법관의 영장을 제시하도록 영장주의가 신설되었고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에서도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권이 명문화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검사의 조직과 구성, 권한에 관해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상 신분보장을 받는 법관과 달리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9조제16호에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의 헌법적 가치는 첫째,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체 구속의 남용을 억제하여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둘째, 영장 발부에 있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판사와의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해 인권보장을 더욱 충실히 보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헌법의 영장청구권 규정에 의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검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가 법원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법원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이 위헌인 이유다.

공수처와 특별검사,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 맞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도 수사권만 갖는 사법경찰조직으로 만들거나 판사와 검사 등 일부 고위직 범죄에 대한 기소권만 갖는 특별공소청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검도 수사·기소권 분리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헌법에 근거를 둔 검찰은 폐지하면서 위헌 소지가 농후한 공수처와 특검에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제도 파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제도에 대한 이해, 검사는 원래 행정권을 대리하는 사회와 공익의 대표자로서 탄생한 제도다. 프랑스 혁명 직후 검찰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790년, 그러니까 검찰제도가 역사적으로 처음 도입된 때가 1790년, 300년도 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90년 법률에서는 검사를 사회를 대표하고 사회의 이름으로 법원이 공공질서에 관련되는 법

을 선언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소속된 특별사법관으로서 법원에 대한 행정권의 대리인으로 정의하였다. 검찰제도의 본질과 정체성을 적절히 설명해 주는 정의고 오늘날 검찰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되기 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륙법계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검사를 영어로는 퍼블릭 프로시큐터(public prosecutor)라고 하지만 사인소추에 대비한 공적인 소추자라는 뜻으로만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 프랑스는 검찰을 미니스테르 퓌블리크(ministere public)라고 하는데 검찰의 성격과 정체성을 훨씬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검찰제도의 국제표준, 검찰제도에도 국제표준이 존재한다. 유럽평의회가 2000년 10월 6일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권고가 그것이다. 이 권고는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이 합의한 검찰제도에 대한 국제적 표준으로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검찰제도의 다양성과 차이를 포괄하는 검찰제도의 공통의 원칙을 정립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권고는 유럽평의회의 목표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법의 지배를 증진함에 있고 법의 지배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형사사법제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와 국제 범죄에 대한 투쟁을 위해 인권과 유럽인권협약상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과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여야 하며 검찰이 형사사법제도와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여 검찰제도에 관한 회원국 공통의 원칙을 정의하여 입법과 실무에서 기초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권고는 검사의 기능, 검사의 기능 수행을 위해 부여되는 보호수단, 검사의 행정권과 입법권과의 관계, 검사와 판사와의 관계 또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 개인에 대한 검사의 의무, 국제협력으로 나누어 모두 39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고에서는 검사를 사회를 대신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의 권리와 형사사법제도의 필연적인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형사상 제재를 보장하는 공공의 기관으로 정의한다. 이 권고는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 폐지 법안이 추진되는 우리에게 검찰개혁의 기준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수사권의 본질, 수사권을 행정부 소속의 검찰과 경찰이 행사하는 권한이라는 이유로 행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지만 수사권의 본질은 사법권이다. 최초의 근대적 형사소송법인 프랑스의 1808년 형사소송법 입법자들은 구체제 시대 규문주의하에서 판사들이 수사와 소추, 재판권을 모두 독점함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자 사법기능분리원칙을 통해 형사사법 기능을 소추와 예심수사, 재판으로 구분한 뒤 소추는 검사가, 예심수사는 수사판사가, 재판은 판결 법원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수사는 검사의 소추행위를 위한 준비 절차로서 사법권의 영역이었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독일에서도 수사를 소추, 재판, 형 집행과 함께 광의의 사법의 하나로 이해한다. 이러한 광의의 사법은 위험예방, 질서유지, 조성행정 등을 포괄하는 경찰과 엄격히 분리되는

데 프로이센 형사소송법에서도 신문, 구속, 압수수색, 검증 등 모든 수사절차를 법원이 관장하였다. 이탈리아 헌법 제109조는 '사법부는 사법경찰을 직접 보유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경찰이 사법권 소속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법경찰은 내무부 소속, 재무부 소속, 국방부 소속 등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검찰이 3개 사법경찰을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스페인도 헌법 제126조에 사법경찰의 법원과 검찰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사법경찰의 사법권에 대한 기능적 종속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제1호 법률인 1895년 재판소구성법 제정 당시부터 대륙법계의 사법경찰 개념이 도입되었다. 사법경찰권이라는 것은 곧 수사권이 사법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사법경찰만이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에서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곧바로 사법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의 본질인 사법적 성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준사법권으로 보아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소추는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를 오래전부터 경찰에서 주장해 왔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수완박의 이름으로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반영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은 그 완성판이다. 그러나 이는 수사와 기소권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의 과거 통설적 견해였고 프랑스 학계의 통설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소추와 재판이 분리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추는 단지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의 준비 절차로서 사법경찰의 수사가 포함된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전 경찰은 수사를 종료하면 모든 수사 서류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전건 송치였지요—이것도 사법경찰의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단계임을 나타내는 제도적인 표현이다.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준사법권이고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 절차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경찰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수사권과 기소권도 준비 절차와 본 절차의 관계로서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프랑스 혁명 후에 1808년 형사소송법 입법자들은 구체제 시대 경찰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치국가의 경찰은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을 수사판사와 검사가 행사하는 사법관의 권한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검사와 수사판사가 모든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법경찰에게 수사권을 위임해서 수사하도록 하였고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도 이러한 사법관의 권한 위임에서 비롯되었다. 행정경찰은 범죄 발생 이전의 예방 단계를 관할하고 사법경찰은 범죄 발생 이후의 수사 단계를 관할한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행정경찰은 소속된 경찰조직의 위계에 따른 지휘에 따른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사권을 가진 경찰 수장인 행정경찰이 경찰 수사에 부당히 개입할 위험성을 방지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에 따라 행

정경찰인 경찰청장이 사법경찰인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 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검찰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것이고 수사권의 본질은 준사법권이고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 절차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른 선진국에서조차 시행하지 않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잘 보여주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례와 또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직접 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와 기소의 결합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의 수사 및 기소 실무는 현대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 주는 가장 선진적인 모델입니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학살, 전쟁 범죄 등 인류 공동의 중대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1명의 검사, 즉 소추관이라는 단일 직제에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완전히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은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실무적 사례입니다.

소추관이 이끄는 소추부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수사관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수사와 공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추부 소속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대상 범죄의 구성요건 및 법적 쟁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에 의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추부는 재판소의 별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관할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이를 직접 조사·수사하여 기소를 제기할 책임을 집니다. 소추관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수집과 피의자, 증인에 대한 심문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직접수사의 주체로 기능합니다. 특히 진실규명을 위해 유죄와 무죄의 정황을 동등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은 소추관이 단순한 기소권자가 아닌 수사의 주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소추부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동수사팀이라는 유기적인 조직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 팀은 관할권을 검토하는 부서,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과 그리고 공판을 준비하는 소추과 직원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추과 소속의 변호사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대상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사의 방향을 직접 제시하며 실질적인 수사검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실제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소추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 및 피의자 조사 시에도 수사관과 변호사가 한 조를 이루어 함께 심문을 진행하며 변호사는 심문 사항 준비부터 실제 조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의 이러한 구조는 법률가의 관여 없이는 수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 은타간다 사건이나 옹그웬 사건에서도 소추부는 수십 년에 걸친 방대한

수사와 수백 명의 증인 심문을 주도하며 유죄판결과 막대한 규모의 배상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 모델은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 국제사법의 핵심적인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검찰청, 주 검찰청, 지방 검찰청으로 나누고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검찰청별로 직접수사의 법적 근거와 직접수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의 직접수사 체계는 기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권도 보유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구현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미국 법무부장관은 연방 검찰총장입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같은 동일한 역할입니다. 전국 93명의 연방 검사장을 지휘하여 연방법이 정한 간첩, 테러, 공직부패, 대규모 경제범죄 등 국가적 중대범죄를 관할합니다.

미국 연방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법무부의 내부 지침인 연방 검사 매뉴얼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연방 검사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연방 형사 사안에 관하여 전권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전권은 범죄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물론 적절한 연방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휘하고 수사팀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미국 법체계에서 검사의 기소 의무는 해당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사 권한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연방 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연방 수사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직접 수사를 주도합니다. 특히 대배심을 활용할 경우 검사가 직접 배심원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심문하여 소환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함께 증인을 면담하고 수사 상황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압수수색이나 감청영장을 청구할 때도 수사관의 선서진술서에 법적으로 상당한 이유, 즉 프로버블 코즈(probable cause)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검사가 직접 검토하고 승인 서명을 함으로써 수사의 방향과 품질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은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린 프릿 바라라 전 검사장의 사례에서 잘 나타납니다. 프릿 바라라 검사장은 뉴욕 타임스 스퀘어 테러 미수 사건 당시에 대테러팀 검사들을 수사관들과 함께 투입하여 53시간 동안 밤을 새우며 범죄 차량의 행적을 추적하게 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체포 직후 미란다 원칙 고지 시점을 늦추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검사장이 직접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함으로써 범행 일체의 자백을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준킴 전 검사장대행이 주도한 대학농구 비리 수사에서도 연방 검사 4명이 수사 초기부터 FBI 수사관들과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했으며 수사관 명의의 인지서 상단에 담당 검사들이 직접 승인 서명을 남긴 실무 기록도 확인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중대범죄일수록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연방 검찰의 확고한 실무 원칙이며 이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이 정의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의 직접수사 실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는 연방 검사장과 연방 수사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관 간의 공조 수준을 넘어 검찰청 매뉴얼에 명시된 법적 권한과 실질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는 통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연방 검사 매뉴얼에 따르면 연방 검사장은 관할구역 내의 최고 법집행관으로서 연방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연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개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FBI와 같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검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방 검사는 법무부 형사국에 도움을 요청하여 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특정 사안의 해결을 위해 여러 법집행기관의 요원들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수사 실무 측면에서 FBI를 비롯한 연방 수사기관은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이지요—이 하달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범죄단체에 잠입수사, 국가안보 및 테러리즘 등 모든 수사 영역에 걸쳐서 적용되며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수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통제 기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관은 소속기관의 지휘 체계 내에 있으면서도 사건의 성격과 전략에 있어서는 최고 법집행관인 검사의 지침과 법적 판단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대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연방 수사관은 검사와 수사 개시 여부를 상의하며 이 과정에서 검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검사와 수사관은 대배심을 통한 공개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한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며 효과적인 증거수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복잡한 중대범죄 수사에서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는 미국의 확고한 사법 철학을 반영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완성도를 높이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 연방 검찰청이 추구하는 직접수사 실무의 본질입니다.

미국 연방 검찰의 직접수사 실무에서 대배심과 영장 청구 시스템은 검사가 수사관과 한 팀이 되어 증거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복잡한 중대범죄일수록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을 추구합니다.

연방 검사는 연방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배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대배심 소환장을 통해 통화 내역, 금융 정보, 관련자 증언 등을 확보하려는 경우 검사가 직접 배심원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사는 수사관과 함께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여 수사 상황을 완벽히 숙지하며 대배심 현장에서 증거관계를 주도적으로 설명합니다.

대배심을 이용하지 않는 수사에서도 검사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압수수색이나 위치추적, 감청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때 법률상 청구권자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수사관이 작성한 선서진술서에 법적 상당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을 청구합니다. 특히 2017년 대학농구 비리 사건 수사 당시 뉴욕남부연방 검찰청 검사들은

수사 초기부터 FBI 수사관들과 함께 사실 및 증거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 검사는 중대 사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 시점부터 수사 전략 수립, 증거 확보에 이르기까지 수사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실무는 검사의 지휘와 관여 없이는 중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사법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의 직접수사 실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프릿 바라라 전 뉴욕남부연방 검사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에 테러, 마약, 금융범죄, 공직부패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격적인 직접수사를 펼쳐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검사 중 한 명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따르면 총 22장의 내용 중에 무려 9장이 수사에 할애되어 있으며 이는 연방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미국 연방 검찰의 직접수사 실무에서 검사와 수사기관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준킴 전 뉴욕남부연방 검사장직무대행의 체육계 비리 사건 수사입니다.

2017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 대학농구 NCAA 코치들이 아디다스 임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선수를 특정 회사와 거래하게 한 대규모 부패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전 과정을 어떻게 진두지휘하였는지 명확히 보여 줍니다.

킴 검사장대행은 피의자 10명을 체포한 직후 직접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이 직접 도표를 보며 범죄의 구조와 개요를 설명하는 모습은 검사가 수사 결과물인 공소장 작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사 내용 전체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준킴 검사장은 본 건을 수사한 FBI 수사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들을 중요한 업무 파트너로 소개함으로써 검사와 수사관이 대등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실무적인 기록인 인지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수직적 통합 수사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연방 형사소송법상 연방 수사관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인지서 상단에는 담당 연방 검사 4명의 승인 서명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연방 수사관이 체포 및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연방 검사에게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의 충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철저한 직무관행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준킴 검사장의 사례는 중대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수사의 설계자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FBI 등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입증합니다. 검사의 법리적인 판단과 수사관의 정보력이 결합된 이러한 통합 수사 모델은 복잡한 부패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미국 연방 검찰의 핵심적인 수사 동력입니다.

미국 주 검찰과 지방 검찰의 직접수사 체계 또한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의 특성상 연방 검찰과는 다른 형태의 강력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을 보여 줍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사례는 검찰이 단순히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 부패척결과 공공안전을 위해 어떻게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끄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5조에 따르면 주 검찰총장은 주의 최고 법집행관으로서 주 내의

모든 지방검사장과 사법경찰관을 직접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주 검찰총장은 특정 지역에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직접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에게 범죄 수사 및 수사 방법을 지시하고 영장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막강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약 500명의 전문 수사관이 주 검사들의 지휘를 받으며 신원 도용부터 초국가적 범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직접수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 검찰청의 직접수사 실무는 주 헌법에 근거한 강력한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이 다루기 어렵거나 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 각 주에는 주 법무부장관이 주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주 검찰총장은 주의 최고 법집행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합니다. 주 검찰총장은 주 내의 모든 지방검사장과 사법경찰관을 직접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에 특정 카운티에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 검찰총장은 지방검사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어떠한 법 위반행위든 관할 법원에 기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 검찰총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범죄수사 및 단속을 지시하고 체포영장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직접수사권은 실제 부패척결 사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마크 피터슨 지방검사장이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을 인지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 검찰수사관들은 피터슨 검사장의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여 아이폰과 개인 수첩 등을 확보했으며 결국 그를 위증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하여 사직과 유죄 인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주 검찰 실무는 최고 법집행관으로서의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과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때 권력형 비리와 같은 중대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죄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이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구조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사례입니다.

지방검찰청 역시 자체적인 수사국을 운영하면서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을 직접 인지하여 수사합니다. 미국 최대 규모인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경우에 약 300명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이들은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공직 부패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송치하는 사건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주임 검사가 정해져서 수사부터 공판까지 수직적으로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 또한 2007년 주 연금기금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에 착수하여 대배심을 통해 200만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문건을 확보하고 123개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대 미국 지방검찰의 기틀을 마련한 로버트 모겐소 전 맨해튼 지검장은 과거의 수평적인 기소, 즉 경찰 수사 후에 검사 송치라는 시스템을 수직적 기소시스템으로 전환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중대범죄 발생 시에 전담 검사가 형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환 대상, 감청 여부, 압수수색 장소 등을 상의하고 기소 후 공소유지까지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맨해튼의 유죄 선고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살인 사건은 89%가 감소하는 등 범

죄율의 획기적인 하락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 및 지방검찰 실무는 복잡한 중대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과 수사·기소의 유기적 통합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실질적인 정의 구현을 위한 검증된 사법 모델입니다.

미국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 실무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사법기관으로서 살인·강도와 같은 중범죄로부터 음주운전과 같은 경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를 관할하며 강력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사이에 이해충돌 사유가 있거나 기존 수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경우에 혹은 검찰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실무적으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검사만 80명 이상을 배치하여 금융·사기·횡령 등 고도의 지능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지방검찰청의 실무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인 분리가 아닌 검사의 주도적인 수사 참여와 지휘가 중대범죄 척결의 핵심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없어진 상황인데, 그 특별검사제도가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지금 너무 많이 작동돼 가지고 참 그렇기는 한데 미국에서 시작된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원래 미국의 검사시스템을 그대로 특별검사제도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사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이런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독립검사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하고 있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특별검사제도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모순된 이야기인 것 같고 특별검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수사에서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 검찰에서도 당연히 그 모델이 적용돼야 하는 게 맞지요.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 개시권·지휘권·종결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의 직접수사 체계는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스스로 수사를 수행하거나 경찰에게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검찰의 요청이나 위임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절대 복종하며 수사를 진행합니다.

독일 검찰은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 조사를 시키는 형식을 취하지만 중대사건이나 복잡한 경제범죄의 경우에 수사 착수단계부터 깊이 관여합니다. 특히 독일은 지능화·강력화된 특정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점검찰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143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방검찰청이 토지 관할에 구애받지 않고 화이트칼라 범죄, 공직 비리, 조직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기

소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중점검찰청에는 검찰의 수사를 보조하기 위해 경제연구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수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독일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 역량은 세계적인 기업범죄 수사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2015년 발생했던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게이트 사건 당시에 브라운슈바이크와 뮌헨 검찰은 직접 내사에 착수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우디 전 회장을 직접 체포하여 기소하는 등 수사 전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회계조작이 발생한 와이어카드 사건에서도 뮌헨 검찰은 의혹 제기 직후 CEO를 전격 체포·구속하며 대규모 사기 투자 및 배임 혐의를 직접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쾰른 검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배당세 탈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 32명을 포함한 9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핵심 피의자인 전직 공무원과 변호사, 은행 관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피의자 1700여 명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를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전역에서 49개의 중점검찰청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검찰 실무는 복잡한 중대범죄에서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검사가 수사의 주역으로서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독일의 확고한 선택입니다. 독일 검찰 또한 복잡한 중대범죄에서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을 추구합니다.

독일의 실무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대범죄 척결의 핵심임을 보여 줍니다.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강력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독일의 직접수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범죄, 금융범죄 등에 대하여 특별수사부 세 곳과 특별형사부 열 곳 등에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검찰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적발하는 독자수사, 독자수사는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익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특별수사부는 경찰의 송치 없이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독자수사의 핵심 기관입니다. 일본 검찰의 독자수사는 주로 고도의 법률 및 경제 지식이 필요한 기업범죄 또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그리고 대규모 탈세 및 금융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경우에 독자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직소반 외에도 국세청 고발 사건을 맡는 재정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경제반으로 세분화되어 전문적인 직접수사를 수행합니다. 이는 국세통칙법이나 독점금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총장 등에게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직접수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무 모델은 수사와 기소의 일체화를 통해 권력형 비리와 지능형 경제범죄에 대응합니다. 검사가 수사관과 한 팀이 되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구조야말로 현대 경제, 권력의 부패에 대항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일본 검찰의 법제와 실무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수사의 위력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통상 과거에 일본 검찰 특수부의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 과거 일본 총리까지 관여되었던 록히드마틴 사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직접수사 사례가 역시 수사와 기소의 통합모델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대신 부부가 참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인지하고 직접 체포 및 구속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전직 법무행정의 수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부부를 검찰이 직접수사하여 체포한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총리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법 위반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직접수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세계적인 경영인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및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검찰은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사법거래—즉 수사협조자 형벌 감면, 플리바게닝 말하는 거지요—플리바게닝 제도를 실무에 적극 활용해서 내부고발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고도의 수사기법을 선보였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및 특별배임 혐의를 인지하고 곤 회장을 직접 체포했으며 회사 내부고발자와의 사법거래제도를 실무에 전격 도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록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나 일본 검찰은 수조 원대 기업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망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인 2024년에도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이 정치자금 후원회 수입을 조직적으로 누락한 비자금 사건을 특수부가 직접수사하여 현직 국회의원 등 8명을 기소하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파벌들이 후원회 수입 일부를 조직적으로 환원받고 수지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인지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주요 파벌 사무소와 의원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현직 국회의원을 전격 체포하고 관련자 8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무 사례는 복잡한 권력형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권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야말로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일본 검찰 독자수사, 즉 직접수사의 핵심 철학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인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례는 지능화된 현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회귀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본래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분리 체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중대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1988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하나로 합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모델의 탄생 배경에는 1986년 발표된 로스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복잡한 경제범죄를 비전문적인 기관이 수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낮은 유죄율과 비효율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스킬 경은 중대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력이 풍부한 법률가 즉, 검사의 전문적인 감독이 필수적이며 수사 방향을 설정한 검사가 직접 기소와 재판을 담당해야만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로스킬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로스킬 모델의 핵심은 수사관과 수사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하나의 팀이 되어 협력한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중대사기 사건의 경우 조세나 관세 등 분야를 불문하고 경력이 상당한 법률가의 전문적인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법률가가 초반부터 수사의 진행 방향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신문 내용이 잘못된 맥락으로 흘러가서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장이 수사 개시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수사는 수사팀장의 지휘 아래 검사와 수사관, 회계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문 내용 구성에 개입한 검사가 기소를 직접 담당해야만 사건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영국의 확고한 실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이름만 따온 상태인데 영국에서의 원래 중대범죄수사청하고는 전혀 모양이 다른 거지요.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사례는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 줍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참여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관리하는 구조야말로 현대의 지능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법체계라는 사실이 영국의 로스킬 모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검사의 지휘와 구체적인 직무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이 현대 중대범죄 대응에 왜 필수적인지를 명확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가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만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헌들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검사를 우리나라의 검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치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중대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을 단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핵심 동력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사례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휘가 보장될 때 비로소 거악 척결이라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 척결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청법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위배한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른바 영장주의를 선언한 조항으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장치입니다.

구속이나 체포·압수수색 같은 경우—강제처분이지요—강제처분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장주의는 근대 헌법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우리 헌법의 영장주의는 단순히 법관의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장 발부의 전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집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신청에 따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 일반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특정하게 검사만을 영장 신청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이 직접 영장신청권의 주체를 명시한 것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제도적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과거에 검사제도가 없이 그냥 판사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사가 일방적으로 체포·구속을 하던 시대에서 검사제도가 생김으로써 검사의 신청 없이는 법관이 자의적인 체포·구속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근대 검사제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는 그러한 검사의 역할에 더해서 다른 어떠한 수사기관에서도 검사를 거치지 않고는 이런 강제처분에 필요한 영장을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원과 어떤 수사기관의 중간에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준사법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헌법에 규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제수사에 대한 사전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강제수사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가장 큰 국가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강제수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먼저 그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기관으로 검사를 선택했습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 왔지요. 동시에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적법하게 수집

된 것인지, 과잉 수사가 아닌지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강제처분을 하기 전에 검사의 신청을 거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수사를 방지하려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장신청권이 단순히 서류만 전달하거나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는 그런 형식적인 권한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장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필요성이라든지 범죄혐의가 과연 있는가, 증거는 충분한가, 강제처분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영장신청권은 실질적인 수사통제권을 전제로 하는 권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영장신청권은 또한 기소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책임을 집니다.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수사 단계에서 위법이 발생하면 그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공소유지 자체는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체포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 또 그 진술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제수사 단계에서 불법이 발생하면 공소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강제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의 통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수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면 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료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해서 영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이 예정한 실질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하는 이런 제도는 검사의 수사 관여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사건을 넘겨받아서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영장신청권의 행사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또는 필요한 강제수사에 대한 어떠한 의견 제시나 관여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기소 단계에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사전 통제가 아니라 사후 통제에 불과하게 되겠지요.

우리 헌법은 검사에 의한 사전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검사가 수사에 일정한 관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검사가 강제수사를 요청하고 또는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을 직접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수사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대부분은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면담하거나 하지 않고 일단 기록을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경찰에서 신병을 유치장에 두고 있다가 사건 송치와 함께 신병도 검찰로 인계를 하면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구속된 피해자가 옮겨 오게 되지요.

이때 검사가 사건 송치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첫 의무가 구속된 피의자를 검사가 직접 확인을 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

이 없었는지,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를 직접 대면하고 또 본인이 맞는지 이런 부분부터 확인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검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병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의미는 기록을 보내는 것과 함께 신병에 관한 권한도 완전히 경찰 손을 떠나게 이렇게 해 놓는 게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요.

그런데 검사는 기소 여부만 판단하고 수사는 일체 하지 못한다 하면 그 구속된 피의자를 검사가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 본인의 진술이 맞는지, 자의적으로 한 진술이 맞는지, 그 진술 과정에 불법적인 경찰의 수사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 지금 이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법을 만들고 그것을 만약에 형사소송법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지요.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조사를 하려면, 그게 바로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인데 지금 공소청법에는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은 아예 삭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강제수사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장신청권의 주체를 검사로 정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전면적으로 분리해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헌법이 예정한 영장신청권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특히 검사가 형식적으로만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구조는 헌법이 의도한 기본권 보호장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는 우리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의 책임구조가 붕괴될 것입니다. 형사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관 또 기소기관의 권한을 나눠서 행정체계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형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적 구조입니다. 범죄피해자를 대리해서 국가에서 공소, 사소가 아닌 공소를 통해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논의할 때에는 권한의 배분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의 귀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책임구조가 명확하게 유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범죄혐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형사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형사사법 구조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지만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면 기소는 그 증거를 기초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두 단계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동일한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 기소한 검사 중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검사에게 결국에는 그 책임을 물

을 수밖에 없겠지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수사를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진행한 사법경찰관에게 그 기소에 걸맞은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휘라는 용어가 못마땅하다면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무성을 띤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결국에는 기소를 안 해야지요. 그렇지만 일단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 내야 되는 책임을 검사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형식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책임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만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게 되며 사건의 전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 말을 빗대 가지고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그런 위험한 말을 민주당에서 하시던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맞지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약사도 마음대로 처방할 수 없는, 판매할 수 없는 약을 우리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요. 그만큼 그 약이 신체에 미칠 영향이나 위험성을 고려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약을 우리는 두고 있는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처방전 없이 모든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맡기자고 하지는 않지요, 아무도. 오히려 그렇게 하자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지금 사실 99%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의사가 발부한 처방전에 따른 약, 그 약을 규제하고 있듯이 검사의 지휘나 검사의 수사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모든 통제 없이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한 다음에 서로 책임은 떠넘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기준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될 거고 검사는 그 자료를 기초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소유지가 어려워지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그 원인이 수사의 부족인지 기소 판단의 문제인지 또는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책임의 분산은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형사사법제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기관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되면 각 기관은 자신의 역할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려는 경향을 당연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만 할 것이고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증거의 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겠지요, 당연히.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건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책임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책임 구조가 분산되면 사건 처리의 기준도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구조에서는 수사의 방향과 기소의 방향이 하나의 기준 안에서 정해지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즉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했지만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검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해서 사건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식적인 분리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경우가 더 늘겠지요, 당연히.

실무적으로 검수완박,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고소인,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검사가 사건에 관여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3개월 내에 어쨌든 사건의 결론을 사법경찰이 내린 상태에서 검사가 받아서 다시 사건을 종결하니까 수사 진행이 빨랐지요. 그런데 이제는 사건이 계속해서 검사와 경찰을 오가면서 범죄피해자들이 도대체 내 사건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도대체 언제 해결될지도 알 수도 없는,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서 내가 민사소송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 제기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 수사 결과가 이삼 년이 걸려 버리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구조를 고려할 때도 책임의 통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의 수집 경위 또 진술의 신빙성,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합된 구조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구조에서는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에 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공소유지가 불안정해지고 무죄판결이 증가하거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번의 공소청법처럼 검사에 대한 범죄수사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에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라 그런 경우에, 지금도 사실 한 95%의 사건, 한 99%의 사건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금의 상황보다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무죄율이 증가하거나 책임 회피가 일어나는 경우에 결국에는 그 늘어난 만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거지요.

이제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욕먹을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경찰과 사법경찰은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할 겁니다, 일을.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그러한 사례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국민의 편익은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지요.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사법 절차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이므로 어느 기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책임 구조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권한만 분리하는 것은 제도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형식적인 분리, 완전한 분리는 형사사법 절차의 책임 구조를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소유지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을 논의할 때에는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 구조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영역으로 가서 강제수사의 통제 기능은 당연히 약화될 것입니다. 강제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건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검찰의 이때까지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난이, 비판이 제기됐던 분야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하면서 검사가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에, 압수수색·체포·구속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 수사를 직접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권한까지도 동시에 행사한다 하는 영역에서 가장 비판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통합을 통해서 중대한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수사를 개시한 사람이 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게 반면에는 가장 위험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시작하는 그 수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이 큰 거지요. 그러니까 강제수사를 본인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의 판단하에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강제수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수사개시권을 주지 말자 하는 주장에는 저는 충분히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수사요구나 보완수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검사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찬성할 수가 없고 그 논리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야 될 방향이 아니다.

자기가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건, 사법경찰이 수사해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가 오히려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직접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를 제한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동안 과거의 검찰을 비판했던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수가 있는데 지금 검사의 범죄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그냥 박탈해 버리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헌법에서는 강제처분에 대해서 엄격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의 발부 절차에서 검사의 신청을 요구함으로써 강제수사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통제구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결과 강제수사의 남용 또는 통제 공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장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된 기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이러한 통제를 이중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둘째는 검사가 신청하도록, 법관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기소 이후에 재판 단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거지요.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

의 신청을 거쳐야 하며 그 신청에 따라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둔 것은 단순한 형식을 둔 것이 아니고 강제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하라는 취지에서 마련한 장치지요. 법관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검사는 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기관의 판단을 다 거치도록 함으로써 강제수사를 그만큼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직접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법경찰관보다는 검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고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장신청권이 실질적으로 통제의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보완요구도 할 수 있고 직접 보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사법경찰에서 검사에게 신청하는 영장의 대부분은 검사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 그대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개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도 대물적인 강제처분,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대부분 발부를 합니다.

가끔 국회에서 왜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높은가 이것을 문제를 삼기는 하는데 실무적으로 본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핸드폰 그다음에 무슨 거래내역 이런 것에 대한 압수수색은 초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

그런데 신병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에 대한 단계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겠지요. 어느 정도 수사는 진행된 상태이고 과연 이 사람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계에서 경찰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을 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 가지고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그에 대해서 보니까 법원으로 가 가지고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다음 기각되면 그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처음 영장을 발부받아서 바로 구속을 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 당연히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경찰에서 그 보완수사요구에 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면 검사가 직접 그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히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직접 검사가 수사 개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인지수사하고 같은 선상에 두고 계속 검사의 권한 비대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 권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요.

강제수사에 대해서 결국 검사의 어떤 관여나 통제나 어떤 보완 이런 부분이 약화된다면 결국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재량은 그만큼 커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혐의 확인을 위해서 사실 수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강제수사를 조금 더 확대하려는 것은 당연한 경향일 거고요.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면 당연히 강제수사를 당하는 쪽의 기본권 침해는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

다.

또한 강제수사가, 즉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여부는 재판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그 판단 여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압수수색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영장 청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증거가 배제될 수가 있고 이는 공소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 돌렸는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났지요. 그런데 2심의 무죄 난 것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죄가 돼 가지고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1심 유죄하고 2심 무죄가 바뀐 게 사실관계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고 다만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만 1심과 2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그 절차의 위반 때문에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 배제된다, 그래서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요.

그만큼 수사한 검사나 또는 1심 재판을 한 판사까지도 그 증거수집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 판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같은 법률전문가끼리 또 같은 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그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만큼 압수수색의 절차라든지 적법성 이런 것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사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요.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검사는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말고 영장 청구만 판단해서 빨리빨리 법원에 넘겨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요 검사가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 보겠습니까, 자기가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자기 권한도 아닌데?

강제처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런 법률가에 의한 2단계 심사구조를 사실상 한 단계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은 강제수사에 대한 통제구조를 약화시킬 수가 있고 그 결과 영장신청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공소유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무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와 기소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유죄판결을 받아낸다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지요.

이 과정에서 공소유지라는 것은 단순히 재판에 출석해서 주장을 하거나 의견을 내는 이런 정도의 절차가 아니고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증거를 토대로 해서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까지 다 의미하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관계가 단절됐다, 단절되고 협력이 전혀 없다 이럴 경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재판 단계에서 공소유지의 안정성일 겁니다. 결국 공소유지가 불안정해진다는 말은 1심이나 2심 어느 것 하나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무죄가 나서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피고인은 좋겠습니다마는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뇌물 사건, 이런 경우에는 온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어떤 당사자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돼 가지고 마치 민사재판처럼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주고받는 공방의 정도가 사실 과거보다는 굉장히

세졌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직권주의적인 재판 진행이 굉장히 강했고 또 검사가 기소한 내용 그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훨씬 높았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법정에서 온갖 법리적인 주장들이 다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별로 제지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 기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어떤 실체적 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증거수집 단계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 때문에 무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결국에는 검사가 기소할 때 같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그 판단이 중심이 되겠지요.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 사람이 정말 실체적으로 어떤 죄를 안 지었다는 판단일까요? 미국 법정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낫 길티(not guilty)라고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지 이노센트(innocent)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무죄라고 그러는데 저는 무죄라는 의미보다는 법원에서 유죄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다, 유죄로 입증되지 못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따라서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 공소청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와 기소가 기능적으로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책임체계 안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검사는 언제든지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보완수사 되어서 오는 증거로 공소유지가 가능했던 거지요. 그런 구조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할 때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증거가 수집될 방향이 크지요. 그만큼 위법 수집 증거 논쟁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에서는 검사는 일체의 수사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경찰에서 올라온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사건 전체에 대한 이해 과정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요.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기소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공소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증거입니다. 증거는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적법하게 수집되어야 됩니다. 또 신빙성이 있어야겠지요.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면 재판 단계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과 그 증거를 통해서 유죄를 입증하는 사람이 완전히 따로 노는 이런 구조하에서는 결국에는 현재와 같은 고효율의 범죄 대응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무죄판결이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벌금이 구형되는 약식기소를 만약에 다 포함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2% 정도 무죄 선고될까요? 그럴 것이고 약식기소 된 부분을 빼고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만 놓고 본다면 한 3~4%

정도 무죄율일 텐데 사실 외국 어디보다도 무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무죄율이 낮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수한 제도인 거지요. 사법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해서 검사는 영장청구 단계에만 주로 관여하고 기소를 하는데 지금 무죄는 거의 잘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은 굉장히 잘 굴러가고 효율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 선진국 어디보다도 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사법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속하면서도 유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효율적인 구조로 간다 그래서 무죄판결이 올라가더라도 검찰제도는 없애겠다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방향입니다.

무죄판결이 증가하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흔들릴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고 피해자라면 더더욱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법절차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처벌을 통해서 법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유지가 불안정해서 무죄가 올라간다는 것은 법질서에 대한 신뢰, 당연히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권한 중에 범죄수사의 권한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주로 말씀드렸다면 같이 처리되려고 하는 중수청법까지 합친다면 결국 수사기관의 권한은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여기서 오는 부작용 또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쟁점 하나가 권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사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경찰과 검찰로 분리했었는데 검찰의 기능이, 권한이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그 기능 중의 일부를 떼 가지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었지요. 만들었는데 거기는 하는 일이 제대로 없고,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검찰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그 기능을 다 경찰에다가 그냥 몰아주겠다 하는 것이 중수청법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원래 중수청이 모델로 했던 것은 미국의 FBI 같은 제도였고 그러한 형태의 중대범죄수사청 모델은 우리가 과거에 많은 논의를 해 왔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원래는 원칙인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FBI도 그렇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고려했다가 안 그래도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법무부 쪽의 권한을 너무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못 하다가, 원래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다가 행안부로, 그러니까 경찰로 그냥 다 몰아준 거지요.

경찰에서는 거대한 행정경찰, 전체적인 조직이 있고 그중의 일부가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고 했지만 독립적인 수사가 전혀 될 수가 없지요, 경찰의 인사 구조상, 그런 지휘체계상.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의

한 조직을 더 키워 주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려고 하다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도 약사에게,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헌법질서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리입니다. 입법·행정·사법의 분리뿐만 아니라 각 권한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제도 설계입니다.

원래 우리 국회법에도 여당·야당, 다수당과 소수당 간에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들이 쭉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의석을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부터는 그냥 이런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은 싹 무시되고 있는 거지요.

수사에서도 이러한 권력기관 내부 간의 상호 견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서 거기에 수사 권한을 다 넘기는 것은 그냥 검찰이 무서우니까 경찰로 다 준다 이런 것 같은데, 검찰이 미우니까 경찰로 다 준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권한을 많이 가진 국가기관은 다시 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견제 이런 말이 곧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장치가 없이 지금 너무 졸속으로 법이 입법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가 운영 중이지요. 최근에 특히 특별사법경찰의 영역과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식품·금융·조세·공정거래·노동 분야 이런 데서는 특사경이 설치되고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검사에 의해서 그런 분야에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서 통일화된 기준으로 통제나 또는 보완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권한까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각 기관이, 각 지자체가 알아서 자기 수사를 하는, 그렇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A 어떤 구 또는 A 어떤 시에서 특정 정당의 시장이 있다가 상대방 정파의 누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하는 기업체를 못살게 굴겠다, 사법경찰 동원해 가지고 계속 수사시키면 되는 거지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지자체 그리고 모든 행정부서가 다 그 지자체장 또 그 각 부처의 장관에 딸린 사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병들이. 물론 그 부처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역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 인사권을 가진 행정부처 장관이 그 소속 특사경을 동원해 가지고 '어느 지역 어디에 불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수사를 해라' 그런 식으로 지휘하면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형사사법체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사경 제도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사실 특사경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요구들이 크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가 그냥 분리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이러한 여러 기관을 통제하고 일률적으로 수사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아질수록 조정 비용은 증가하고 사건 처리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당사자의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사경의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장시간 수사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또는 재산적인 피해가 막심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게 명분상으로는 권한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여서 권력의 분배라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 단계의 증가 또 기관 간 협의의 반복, 보완수사 요구의 반복, 판단 기준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건 지연과 행정 비효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당연히 더 높아질 것입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이 처음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아주 듣기 좋은 명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검경수사권 조정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사 지연, 수사 장기화, 미제 증가 이것 외에 검경수사권 조정해 가지고 어떤 게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된 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수사경과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수사권 독립됐으면 '아,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사하는 파트에 경찰의 우수인력이 몰려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안 가려고, 경찰에서 수사경과가 제일 인기 없는 분야가 된 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검사대로 답답하고 경찰은 너무 일이 많아서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건 처리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의뢰인들과 함께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과거에 6개월이면 결론이 나야 될 사건이 2년씩 걸리고 거기다가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둘 중에 하나 6개월에 한 번씩은 바뀌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사건 파악한다고 또 6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조사했다가 또 사람 바뀌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고소사건 등에 대한 처리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몇 배씩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절차가 빨라질까요?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라는 것이 조문화돼 있는 걸 보면 법률 전문가가 보더라도 도대체 어느 죄가 중수청에서만 담당하는 것이고, 중수청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중수청에서는 할 수 없는 사건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 지연이 가장 뚜렷한 분야가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 범죄들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의 비율이 2020년에는 11.8%였는데 수사권 조정이 된 2021년, 그러니까 1년 뒤지요. 1년 뒤에는 24.8%로 올라갑니다. 2배 이상이 갑자기 확 증가한 겁니다. 2022년에는 32.8%, 2023년에는 조금 떨어진 28%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수사권 조정되기 전에 비해서 2배 3배씩 6개월 초과된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복잡한 법리 판단을 요하는 배임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이런 지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경찰 단계 6개월 초과 사건 비율이 2020년에는 20.5%, 배임 사건의 경우에 6개월 넘게 처리 못 한 사건이 5건 중에 1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50.6%로 늘어납니다. 2건 중에 1건은 6개월 내에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에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에는 90일, 90.2일이어서 약 90일이었지요.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는 112.7일. 20일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가능했을 때는 20% 안팎이던 경찰의 3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이 2021년 이후에는 40~60%로 급증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검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처리한 피의자의 수는 2019년에 236만 명 정도였

는데 2023년에 15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3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은 6.8%에서 10.2%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피의자의 수는 줄었는데 3개월이 초과돼서 처리된 사건은 훨씬 늘었다는 거지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장기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더 못 된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은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에는 권한 분리의 원칙뿐만 아니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국민의 부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소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입법 과정에서부터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검증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의 법안을 만들 때는 법원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변호사단체, 학계 이렇게 조금 폭넓게 의견 청취를 하고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뭐에 쫓겨서 그랬는지 얼마 전에 시행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법 세트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발의된 법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금년 2월 달에 다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30년 동안 검토했는데 못 했던 재판소원제, 덜컥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 시행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지금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소원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다,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덜컥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취소되면 어느 재판, 1·2·3심 중에서 어느 것이 취소되는 것이냐.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취소되는 것이면 1심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것이냐,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바꾸면 되는 것이냐.

양문석 의원인가요. 국회의원직 박탈되는 형을 선고받아 확정돼 가지고 국회의원직 박탈되자마자 재판소원제를 이용하겠다고 했다가 재판소원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활용하려고 딱 마련해 놓은 건데 감히 양문석 의원이 먼저 쓰겠다고 했다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어떤 형이 확정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징역 한 5년 선고받은 사람이 재판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증거 판단에 대한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대법원의 해석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확정판결 받아 가지고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처분 인용됐으면 당연히 석방이 돼야겠지요. 그게 맞을까요?

어쨌든 다시 이번 법안으로 돌아와서, 결국 진영 논리에 갇혀 가지고 성급한 입법을 하면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회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겠지요.

공소청법안이라고 하는 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꾸는 그런 단순한 조직 개편의 문제는 아닙니다. 70년이 넘게 어떤 제도가 유지돼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전제

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관련 제도들 법률들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검토하고 바꾸고 해야 될 법안들이 저는 수십 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별도로 논의해서 될 문제인지.

이 공수처법을 바꾸면 과연 더욱 교묘해지는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그날 오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현장최고위인가요, 민주당 현장최고위에서 한 말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하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검사들은 빨리 태세 전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국민들께서 앞으로 어떤 편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정청래 대표가 더 받냐 이재명 대통령이 더 받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뜯어고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라. 당대표가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법 바꾸면서 지지층들한테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라. 이 법을 왜 하는지를 그냥 드러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또 검사들은 태세 전환하라. 검사들 협박하려고 만드는 법이라는 겁니다. 법왜곡죄 만들어 가지고 판사들 검사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중요한 법을 만들면서 검사들 태세 전환하라고요? 민주당에 기어라 이 소리입니까? 이 법이 왜 국민들께 필요한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입법은 한번 잘못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되돌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신중해야 되고 또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무리한 졸속 처리를 당장 멈추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충분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입법 속도와 강행 처리의 폭주입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은 자판기에서 커피 뽑는 것도 아니고 복사기에서 문서 복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법을 발의할 때 그 법이 정말 국가에 필요한 것인지,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나 또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늘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 보고, 한번 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또 바꾸면 된다 이러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누가 피해를 봐야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다 대고 입법이 너무 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정상적이라면 법 하나 바꾸는 게 그

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실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입법이라고 주장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일몰기간이 다 돼 가지고 빨리 바꿔야 하는 그런 법들 몇 개 없어요. 위원회 명칭을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로 바꾸거나 뭐 이런 겁니다, 다. 그리고 A 의원이 법안 발의하면 B 의원도 같은 거 내고 C 의원도 같은 것 내고. 그런 법들하고 이렇게 중요한 법들하고 같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인 작년 6월 11일 날 발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그렇게만에 78년 된 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는 건데 과연 한 번이라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일선 경찰, 사법경찰관들 의견은 들어 봤는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의견은 들어 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아마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 정도만 아시겠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생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지적해야 될 입법 과정의 문제가 국회 심의 과정의 철저한 형식화입니다. 법안 심사의 핵심은 상임위원회, 특히 소관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 전에 소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 법안들을 올리고 그다음 날 전체회의를 하고 그런 식이지요. 정부에서 만들었던 법안을 여당 내에서만 몇 가지 문구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자기의 전리품인 것처럼 법안 내용을 좀 뜯어고쳐 가지고 하루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이번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의 경우에 이러한 심의 과정이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정말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축조심사 전혀 안 했지요. 그냥 검찰에 대한 보복,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검찰을 문 닫게 하겠다는, 그래서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희한한 규정을 둬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있으니까 어떻게 뺄 수는 없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한 반나절 논의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반나절 논의를 하는데 그때그때 여당 내에서도 뭐가 의견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지 의원총회 끝나고 다시 바뀌고 또 여당 위원들끼리 모여서 또 바꿔서 오고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반대하면 표결하겠다 그래서 그냥 표결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된 법안을 만들 때는 그렇게 법사위에서 만들어 놓고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는 헌법상 최상위 입법기관입니다. 단순히 거수기처럼 다수결로 찍어 눌러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붕어빵 기계가 아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견을 좁히고 조정해서 하나의 튼튼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내고 이번에 우리가 만든 법안은 최소한 100년

은 갈 것이다 하는 정신으로 숙의의 전당으로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기능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치열한 심사 또 교섭단체 간의 끈질긴 협의, 공청회 등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서 비로소 구체화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국회법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숙려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건조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권 문제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얽혀 있는 법안일수록 여야 간에 좀 더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입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처럼 여야 간의 극한의 대립 속에서, 대립도 아니지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국회 운영하는 건데 오직 머릿수만 믿고 법안은 무조건 다 표결로 해 버리겠다,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겠다 하는 전제를 깔아 놓고 결론을 내는 형식적 절차를 국회에서 거치는 거지요.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의 칭찬 받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이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 검찰이라는 간판 떼기 이런 것을 결론을 정해 놓고 그냥 국회는 통과 절차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법조계에서 실제로 이런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우려가 크고요 학계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의 견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국회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다수결이라는 입법의 형식적 적법성은 간신히 충족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실질적 정당성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입법 과정상의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공소청법안 자체의 내용상 문제점 또 예상되는 부작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소청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보복 또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다툼이 앞선 이성적인 판단이 상실된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오랜 검찰에 대한 적개심, 민주당의 인적 구성을 이루는 과거 운동권들의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겠지요. 여기저기 묻어나 있습니다, 그냥.

가장 먼저 지적해야 될 부분이 국가 사법체계의 일관성을 파괴하는 기형적인 직제 개편입니다. 현재 검찰은 3심제 재판 구조인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이라는 직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고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사법단계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이자 고유명사 같은 성격이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에 대검찰청이라는 '대' 자를 붙여 주는 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대검찰청이라는 단어를 지우게 되는 감정적 이유만으로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그다음에 공소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법기관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 자를 떼려고 그냥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 보면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더 상급 기관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여기서 말하는 공소청을 다 합친 전체로서의 공소청 개념과 대검찰청의 역할

을 담당하는 공소청이라는 그 용어를 같이 쓰는 바람에 법을 보고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민주당 쪽 의원 한 분이 그러시던데, '국세청은 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이 있는데 대국세청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국세청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국세청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세청이라고 하면 중앙 역할을 담당하는 국세청을 의미하는 줄 아는 거지요. 그리고 심급에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청은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 대검찰청은 대법원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은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명칭부터가 벌써 '이 법의 목적이 뭐구나. 그냥 검찰 미워요 법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광역이라는 의미도 원래 고등이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지요.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경찰, 소방 등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구역 단위를 의미할 것입니다. 경찰에서 광역수사대라는 용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검찰에다가도 그냥 경찰과 같은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광역공소청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1·2·3심을 의미하는 고등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2심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고등이지요.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법의 특수성은 무시하고 검찰을 경찰과 대등한 행정기관의 하나라고 등치시키려는 의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소청의 명칭이 모호하고 헷갈리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국민에게는 불편만 줄 따름입니다.

민주당의 불필요한 표현 수정과 함께 불필요한 조문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검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엄격한 정치중립의무를 부담하고 있지요. 위반 시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이 공소청법에는 벌칙 59조를 신설해 가지고 정치 관여죄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제59조의 정치 관여죄는 검사가 제51조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공소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두고 있어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반성적인 고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사들 중에서 자신들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기소하라고 하는데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마라고 하는데 기소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을 경우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퇴임한 이후에도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검사라는 제도가 원래 법원에서 법관들이 하던 업무를 따로 떼가지고 검사가 하도록 이렇게 만든 제도기 때문에 모든 다른 나라에서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하고 거의 동일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고 법관과 거의 동일한 신분보장을 해 주고 있지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데 이 법에서는 검사가 이런 법률 전문가라는 본질적인 사실을 국민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망각하게 하려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은 단순한 범인 검거가 아니고 치열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고 또 피해자인 시민에게는 단 한 점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는 또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무고한 피해자에게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정교한 정의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기적 협응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환자를 한 번도 직접 진찰해 보지 않은 의사가 다른 사람이 쓴 진료기록만 보고 수술하러 가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처벌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소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결과물이겠지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가지고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넘어오는 기록만 보고 공소장에 서명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맞닥뜨릴 상대방 변호인단하고 공방을 하기에 벌써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피의자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은 다음에 아주 수사 초기부터 그 사건에 관여를 하고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사법경찰에서 수집하는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변호사들이 다 간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간파하지 못한 검사가 법정에 들어가 가지고 공방이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주장하는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주장이 도대체 뭔가, 왜 불법 수집이라고 주장하는 건가 이런 것을 이해하기 힘들지요.

물론 지금도 검사가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하는 사건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수사지요. 그렇게 중요한 1~2%의 수사에서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준비된 변호사들과의 공방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검사들이 반드시 유죄를 받아 주기를 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원망만 생기게 하겠지요.

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법통제, 그게 바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야기할지 모른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법조계와 학계에서의 우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서 경찰의 권한 비대화 우려 또 사건의 지연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과연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 자체는 과거 검사들의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 검사들이 문제였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폭압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검사들을 싹 없앨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까요?

지금 검찰의 두 손 두 발 다 자르고 입에 재갈 물리는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중수청에서는 아마 지금의 어느 수사기관보다도 강력한 수사 권한을 휘두르게 될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일선 검사들이 '우리가 과거에 참 잘못이 너무 많았구나. 우리가 권력을 너무 남용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과거 검찰에서 몇몇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방이 있었지만 그 사건 모두 정치인들, 특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항상 정치적인 공방이 많았지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다, 보복에 대한 다시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권이 늘 행사돼 왔습니다.

검사들 중에 사실 몇몇 검사들이 그 사건에 관여돼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들조차도 내가 사건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은 없습니다. 사건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수사를 하고 내 소

신껏 결론을 내도 어차피 한쪽에서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검사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A라는 정치인을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것을 기소를 하면 기소당한 정치인이 정치보복이라고 할 거고 그것을 기소를 안 하면 상대방 쪽에서 외압을 받았느니 봐주기 수사를 했느니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소청 검사도 마찬가지겠지요. 경찰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을 상대로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공소청에 보냈는데 공소청에서 그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 가지고 한다 한들 기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한 기소다' 이렇게 될 거고 기소를 안 하면 '경찰에서는 실컷 수사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 해서 상대방 정치 진영에서 또 공격을 당하겠지요.

그렇게 그런 사건이 몇 건 생기면 아예 공소청도 없애고 그냥 경찰이 다 기소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건가요? 그렇게 되면 경찰은 정말 정치 진영 어디로부터도 비난받지 않는 그런 신과 같은 수사기관이 될까요? 이건 정치보복일 뿐입니다. 이번에 검찰을 공소청이라고 이름 바꾸고 아예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특검은 입맛대로 다 만들잖아요.

지금 사실 과거처럼 어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고문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과거의 사례들은 발생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경우는 이제는 사실 없지요. 없는데, 이제는 왜 수사를 하느냐, 정치인을 상대로 왜 수사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다', 그런 수사의 동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런 정치검찰은 없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대장동 사건이 왜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검찰에서 인지해 가지고 그 사건을 다 수사해 가지고 들춰낸 겁니까? 민주당에서 과거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가 상대방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 제기한 그 사건이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검사가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사업이 단군 이래 아주 최대의 사업이고 내가 다 설계한 거야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되더니만 그 일당들이 1심 판결을 받은 것 검찰에서 항소 못 하게 포기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정치검찰 운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지금 재판이 정지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들 하나하나 한번 따져 보십시오. 검찰에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까? 처음부터 인지해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까? 정치권에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경선 과정 이런 과정에서 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고발을 하고 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결국 기소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검찰이 정치보복을 하는 검사라면 앞으로 기소만 하는 검사가 된다고 해서 정치보복하는 검사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똑같지. 여기에 민주당의 모순과 이중 잣대가 있는 겁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나 또는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독점했던 검찰이 그 권한의 크기를 이기지 못하고 일부 사건에서 어떤 비난을 받아 온, 비판을 받아 온 점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조직으로나 인력으로나 방대한 조직이 사실 경찰이지요.

경찰 중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마는 사법경찰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뒀고 그것에 더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는 거니까 경찰의 어떤 비대화 이것은 그냥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 권한을 박탈해 가지고 그냥 경찰에다가 몰아주기 한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에서 어떠한 수사를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아주 치명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경찰은 참 공정한 경찰이야'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들 서약이라도 하시고 이 법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에 조금만 불리한 조사를 하거나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 민주당에서 다 수긍하고 그냥 '경찰이 하신 거니까 우리는 달게 그냥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경찰이 인사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 여당 정부 고위직이나 여당 국회의원들 상대로 과연 수사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면 똑같은 논리로 인해서 경찰에서 앞으로 정부 고위인사나 여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겠지요. 그때는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 그 수사 못 하게 하지 마시고 수사해서 민주당 의원님 구속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비난의 목소리 없이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꼭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금 문제가,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특사경 부분인데요. 원래 사법경찰, 왜 사법경찰이라는 말을 쓰느냐? 행정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의 사법경찰이라는 것은 그 발단,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원래 경찰이, 행정경찰이 아무나 수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그런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모든 나라에서도 대부분 그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경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경찰조직의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에 있어서만은 검사의 지휘와 통제하에 수사를 해라 그 취지가 사법경찰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경찰수사권 독립 계속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사법경찰도 아무런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행정경찰 조직하에서의 상하관계에 의한 통제를 받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특출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철도공안사건, 철도 객차 내에서의 어떤 형사사건이라든지 노동 관련된 사건, 환경 또는 금융, 조세 이런 전문적인 업무 영역과 관련된 사법경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지요. 특별사법경찰이 되려면, 그 조직 내에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원래 검찰청에서 지정을 해 줘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검사의 통제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이라면 행정부서의 조직상 상관에 의한 지시는 받지 마라, 그 수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부당한 상급자의 압력으로부터 그냥 차단시키는 효과도 당연히 있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자기 부서 내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수사에 관여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나마 형식적으

로는 못 하게 해 놨었던 게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못 하게 그냥 그런 걸 없애 버리니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직상에서의 상급자가 그 수사에 관여하려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보직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의 상급자에 대해서 '내 수사에는 관여하지 마시오. 나는 공정하게 할 것이오'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 법을 만드는데, 너무 순진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숫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고 분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사회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피할 수가 없는데 결국 특사경 제도에 있어서도 이번에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관에도 특사경이 있는데요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검사의 이런 특사경에 대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루트나 또는 지휘권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현재는 세관의 특사경에 의해서 일단 신속한 구속수사가 바로 가능한 체제입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세관 행정공무원이 통관 과정에서 포착된 마약을 단서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관 특사경의 경우에 지휘권을 가진, 현재는 지휘를 할 수 있는 검사하고 실시간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의 경우에 마약거래방지법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사 목적으로 마약을 반입할 수 있는 그런 허가도 가능하고요, 긴급체포 이런 것에 대한 승인도 바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수사 개시와 동시에 검사와 함께 특사경이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체포한 다음에 바로 48시간 이내에 그냥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증거가 인멸될 염려도 훨씬 덜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관 특사경에 의해서 수사가 마쳐지고 송치가 된 다음에 검사는 또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검사는 당연히 마약 밀수범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공범 또는 다른 여죄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수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보완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공모자들이 더 있다 그리고 그 소재지 파악이 된다 이러면 바로 또 외국에 대해서 검사가 범죄인인도 청구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로 신속하게 검사와 특사경이 함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어떤 여죄라든지 또는 공범들에 대한 단서들을 확인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새로운 수사를 또 검사가 바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만약 특사경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특사경을 지휘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 밀수 수사는 세관 공무원만 하고 그 과정에서 검사는 일체 모르고 그것이 다 기소가 된 다음에만 검사는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수사 지연 문제는 생기겠지요.

세관의 특사경의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수사 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사건을 왜 세관에서 해야 되지? 경찰에서 하면 되겠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면 되겠네. 그쪽으로 사건 그냥 이첩해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수사 안 하겠다' 할 수도 있

는 거지요. 검사는 수사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으니까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고 영장 신청이 돼서 올라올 때까지 그 사이에는 검사의 어떤 신속한 수사를 위한 관여가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보완수사도 안 되기 때문에 수사 지체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수사가 됐을 때는 항상 상선을 따라가거나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른 거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로 항상 퍼져 가는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검사가 공범에 대한 정보, 여죄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또 세관에 내려보내 가지고 알려 주고, 수사 지휘도 못 하니까 그냥 알려만 주고 끝내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검사는 수사에 관여도 못 해, 수사 지휘도 못 해, 보완수사도 못 해, 그것 그냥 검사가 수사 안 하는 거지요.

마약사범에 대해서 검사에게 송치된 다음에 '제가 다른 상선도 조금 불고 그다음에 공범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할 테니까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상당 부분 마약 수사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그런 말 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할 거예요. '나 수사 못 해' 그리고 검사는 기소만 하면 되니까 '귀찮게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듣냐. 나는 네가 그냥 경찰에서 수사되어 온 것만 수사해 가지고 기소하면 내 역할은 끝인데 네가 공범이 있건 여죄가 있건 내가 왜 그것을 수사하냐. 어차피 수사도 못 한다'.

결국에 이런 특수한 형태의 마약사범이라든지 또는 단순 폭행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범죄단체, 조직폭력에 대한 어떤 징후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검사는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초기부터 경찰에서 다 파악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그중에 한 명만 그냥 잡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경찰에서 정하겠지요.

어떤 제도가 있고 그 제도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제도에 단점이 조금 있다고 해 가지고 장점까지 다 묻어 버리자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사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네요. 어제 보도된 자료를 보면 경북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150건을 시효가 지나서 무더기 종결을 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를 예고한 가운데 과거 특사경의 관리 소홀로 경북 일부 지역에서만 사건 150여 건이 공소시효를 넘겨서 무더기로 종결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영덕·울진·영양군청의 특사경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교통전담특사경이 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150여 개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노동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정 분야의 범죄 단속을 위해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2만 1263명에 이르는 특사경은 일반 공무원이라 형사사법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검사 지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검사의 지휘권마저 사라지면 특사경의 수사역량 저하와 사건 적체 등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복잡한 형사 절차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이고 자연스럽

게 사건 처리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나 인권침해 역시 수시로 바로잡기 어렵게 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들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식의 핑퐁이 생겨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게 불가피할 것 같다. 한상희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도 일반 경찰과 동일하게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순환보직 형태이고 경력도 적어 대책이 없다. 특사경 요건이나 경력, 윤리 통제 등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계의 지적까지도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 측이지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의 시민입법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 위법 수사, 부실 수사, 선별 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 둔 채 검찰수사 배제만 외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우려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라는 그 변호사님이 하신 이야기랍니다.

이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특사경 업무처리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보면, 2024년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48%, 한 절반 정도가 그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1년 미만이라는 겁니다. 특사경에서 송치한 사건 수 중에 기소율, 그러니까 송치를 했는데 실제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중앙부처일 경우에 44% 정도라는 겁니다. 특사경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실제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부처에서 입건해 가지고 송치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이 너무 경미한 사건이어서 형사처벌의 가치가 없거나 또는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에 기소유예를 해 주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소율이 40%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검사의 지휘도 그냥 받지 않게 하고 초동수사 같이하게 하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반면에 잘된 사례도 분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사경이 4년 걸린 미제 사건을 해결하거나 국제 사법 공조가 필요한 수사 성과를 낸 일도 없지 않다. 다만 검사의 지휘와 조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정 모 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의 확정판결을 이끌어 낸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과 검찰의 협업 성과였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운영자 신상 특정이 어려운데 문체부 특사경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IP를 추적해 해외 서버와 호스팅 업체를 특정한 끝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로 결제 계정 정보를 입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을 집행·분석해 정 씨를 특정해 냈다. 이 과정에서 대전지검이 사전 지휘로 압수 필요성을 보완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울산에서 특사경과 검찰이 공조수사를 통해서 불법폐기물 처리업체를 단속한 사례도 우수한 사례로 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특사경의 업무가 사실은 검사의 수사 관여가 완전히 배제됐을 때 가장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바로 노출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소청법안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우리나라 헌법 내용과 맞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많은 부작용들과 그 피해를 입게 되실 국민들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심과 의견을 내어 주셔야만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검찰을 미워해서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은 하시더라도 형사사법제도가 퇴보하는, 비효율적으로 되는 이 법안만큼은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한병도 곽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재섭)

(05시54분)

○의장대리 한병도 다음은 김재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의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공소청법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여야 의원님들께 일단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수요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숙의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자리에서 통과되

는 본회의 통과가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여야 간의 정쟁의 문제로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검찰에 대한 좋고 싫음의 문제로도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통제의 장치를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검찰이 보여 줬던 과잉수사, 선택적 수사, 정치적 논란 이러한 문제들은 늘상 지적돼 왔고 검찰 스스로도 이 문제를 충분하게 제대로 해결해 오지 못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와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개혁은 실제로 작동해야 개혁입니다.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그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 그 권한이 수행하던 기능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체 장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준비와 설계가 있을 때만 비로소 책임 있는 개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권한을 줄였다만 말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제는 약해졌고 책임을 이어 주던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질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형사사법체계의 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권력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치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일부 권한이 경찰로, 중수청으로, 특사경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새로 옮겨 간 권력을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통제하느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그 핵심은 비워 둔 채 법안만 서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소청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를 두고 있고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에 관한 필요사항,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지휘·감독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치운동 금지, 파면을 포함한 징계 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그리고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예외적으로 계속 수행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체계가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 개악 법안의 핵심적 문제는 검찰개혁의 결론을 곧바로 검찰청 폐지

로 가져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과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과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검사가 응당 해 왔던 법률적 통제 기능까지 약화시키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정상화와 검찰의 개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쪼개 놓는 것이 곧바로 검찰개혁의 정당화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을 해체하고 기능을 쪼개는 데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해체의 결과가 우리 국민들께 어떤 피해를 가져가느냐입니다. 더구나 공소청은 겉으로는 별도의 기소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넘겨주는 기록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기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법률 구성이 맞는지, 절차 위반은 없는지,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공소청 자체가 수사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조는 부재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견제합니까? 결국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수사기관과 대등하게 긴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기초로 움직이는 종속적 구조로 흐를 위험이 큽니다. 오히려 견제가 아니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검찰청의 공소 기능만 옮겨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평가, 법률 구성에 대한 판단, 증거와 절차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소청은 부실한 기소와 무죄 증가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악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특사경의 문제입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업· 협의와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와 지원은 지휘와 감독이 아닙니다.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지원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면 지휘와 감독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에 대해 법적으로 개입해 바로잡는 통제입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사경은 환경, 노동, 식품, 금융, 보건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곧바로 형사절차와 수사 실무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특사경 수사는 검사의 수사 지휘와 법률적 통제를 통해 그 한계를 보완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현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특사경이 송치

한 사건은 약 7만 건 수준에 이르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약 3만 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기소율이 낮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리 판단과 증거 구성, 절차 준수에 있어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까지 약화된다면 무리한 수사, 정치적 악용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사경의 권한은 그대로 두면서 그 권한에 대한 통제는 협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 그것이 과연 국민의 인권을 위한 방향입니까? 권력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약할 때는 통제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청법을 보면 이러한 통제의 밀도를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검사의 신분보장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립성은 그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보장과 독립성 위에서만 비로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를 보면 징계와 심사 장치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임을 묻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고 행정 조직과 유사한 통제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은 결국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 앞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역시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향은 더 독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더 쉽게 흔들리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장 문제입니다. 영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신체와 주거·재산을 제한할 때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하라는 헌법적 통제장치입니다.

그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작동 방식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점검, 증거의 적법성 확인, 공판을 전제로 한 쟁점 정리, 절차에 대한 통제,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야 영장은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면서 영장 청구라는 형식만 남겨 둔다면 그 권한은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결국 형식은 남고 기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빠지는 구조입니다. 헌법 조문을 그대로 둔다고 헌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조문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헌법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건심의위원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통제장치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시 통제가 아닙니다. 절차 안에서 계속 작동하는 통제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작동하는 사후 장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기존의 법률적 통제는 절차 내부에서 계속 작동해 왔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관여하던 상시 통제를 없애고 사후 심의를 넣는다고 해서 같은 수준의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는 약해집니다. 게다가 그 의견은 강제력이 아니라 참고 수준에 머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통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렇게 중요한 원칙이라면 민주당이 주도로 만든 특검에는 왜 그 원칙에서 제외됩니까? 특검에서는 수

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서 왜 검찰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외치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같은 기능이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금지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입니다. 특검에서는 가능하고 검찰에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기준일 뿐입니다. 원칙이라면 예외가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예외가 정치적인 이유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원칙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칙은 검찰이든 특검이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추진되는 변화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사법체계의 통제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권력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변화, 책임이 분명한 변화,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변화,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향은 그 위험의 비용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법적 실험입니다. 잘못된 검찰개혁의 비용은 우리 정치권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국민 그리고 피해자들이 부담합니다. 억울한 당사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왜 정치권이 벌여 놓은 일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도록,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지금의 개악은 개정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국민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정치권력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 그것은 결국 국민을 사실상 볼모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제도를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정상적인 체계로 돌아와야 합니다.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어떻게 긴장과 서로 책임지는 구조 안에 둘 것인지, 통제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한 채 무작정 속도만 내는 입법은 결코 책임 있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안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지금 이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통제는 약화시켰고 권한은 나눈다고 하면서 책임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형식이 남았지만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고 공소기관의 독립성은 흔들리고 헌법이 요구하는 통제 구조마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억울한 국민은 더 오래 고통받고 피해자는 더 늦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구조 개악의 부담은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변화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정상적인 형사사법체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필리버스터 법안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법안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계에서의 우려 그리고 언론에서의 우려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우려를 골고루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정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국무조정실이었나요 국무총리실이었나요, 산하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해부터 제가 꾸준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추진단 안에는 실제로 검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였던 분들이 극소수였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극소수의 검사들마저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누누이 저는 뇌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찰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대전제 안에는 검찰은 나빴다, 검찰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민주당의 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검찰이 배제되는 추진단을 구성해 놓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자문위원들 역시도 검찰의 목소리는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할 수 없다, 검찰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여기는 철저하게 해체되고 쪼개져야 된다라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서 저는 지난해부터 그 지점을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78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헌법 아래에서 유지되었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일거에 바꾸는 이러한 엄청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숙고할 시간이 대단히 부족했다라는 점도 입법절차상에서의 큰 문제로 저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1년, 2년, 3년 정도가 유지됐던 제도도 바꾸려면 숙의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78년 동안 우리가 유지해 왔던 법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수석이라고 하는 힘을 앞세워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이 법안들을 뚝딱뚝딱 처리해 버리고 결국 지금 새벽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의 부당성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가역적으로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바뀌어 버립니다. 기존에 검찰의 수사가 가졌던 나쁜 관행들 그리고 정치적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그 역시 국민의힘이나 야당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늘상 같은 논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아이를 정말 폭행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정도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찰을 없애 버리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 사이의 균형이 현저하게 파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가 되고 있느냐, 얼마큼 준비되지 않은 법안이냐, 얼마큼 준비되지 않은 제도이냐를 말씀드리려면 사실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들어가

게 되면서 해야 되는 법안들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난 10월 기준으로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루에 매일 3개씩의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야 될 정도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만들고 수사체계를 바꾸는 것은 많은 법령들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평균 3개 이상의 법안들을 처리해야지만이 실제로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하루에 3개 법안은커녕 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이는 두고두고 아마 우리 헌정사에 큰 책임을 짊어지고 민주당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굉장히 많았고 많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 악법들, 3법·4법들을 통과시키면서 그 당시에는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통과시켰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되었고 실제로 주거사다리가 끊기는 결과까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년을 자처하던, 민주당 집권 20년을 자처하던 당시의 민주당은 고작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결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무리한 법안의 통과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곧바로 결국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검찰개혁안 그리고 검찰개악안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그리고 이념과 정파만으로 밀어붙였던 부동산 3법과 그리고 검찰 악마화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건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계와 언론계의 우려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안에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차진아 교수,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개혁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나라가 망한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인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과 가장 어떻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이 형사사법체계에 관련해서 피해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진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차진아 교수의 인터뷰를 쭉 읽어 보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반문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나와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차 교수는 이런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이라며 압도적인 반대 여론만이 이들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폭거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역시도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관련해서는 그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터 없애야 한다,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경찰 중심 수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고 복잡한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가해자 편에서 수사를 설계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차 교수는 무조건적인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면서 보완수사 요구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경찰의 능력이 달리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이어 공청회에서 검찰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답하고 싶었다며 검찰이 곧 악마라는 감정적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어렵다, 국민들만이 이런 법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상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제도와의 균형이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지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차진아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특검이 누리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역시도 그 원칙에 따라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진아 교수의 일문일답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의 법문 규정에 반한다.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모순적이다. 입안자들도 결국 검찰청이라는 존재를 폐지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 아닌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부터 없애야 한다. 상설특검법도 폐지해야 하고 내란특검 등 3대 특검도 마찬가지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오류로 기소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인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수사하는 거 아닌가. 이 예외는 왜 인정하나.

경찰 중심 수사체계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경찰은 정치적 외압과 인사권 행사에 가장 취약한 국가기관 중 하나다. 14만 경찰의 극심한 승진 경쟁, 짧은 계급정년 때문에 한 번 승진에 누락되면 만회하기가 어려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무조건 영장 청구하고 온갖 걸 다 걸고넘어져서 큰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절대로 정권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조직이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 문제는 어떠한가.

살인, 강도,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높다. 그러나 복잡한 경제범죄들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만한 법 전문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해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가해자가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그 변호인이 경찰에 가서 수사를 설계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걸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하겠나?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검수완박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이 없다 보니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홀딩을 하거나 후임자에게 넘기기가 급급하다. 몇 개월 후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상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범죄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반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공청회에서 '검찰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저는 '나라 망합니다'라고 답하고 싶었다. 기본적인 치안이 흔들리고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지는데 민주당 개혁안대로 되면 민주당에 줄 서는 사람은 면죄부를 받고 죄 없는 사람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없는 죄도 억울하게 뒤집어써서 가혹하게 수사받게 될 것이다. 이건 유신 시절보다 더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예컨대 독일의 검사처럼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적인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거나 최소한 보완수사요구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고 일부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

경찰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계속 핑퐁만 하다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사건이 파기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되 대신 독일이나 유럽처럼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면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만큼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높은 나라는 없다. 검찰이 법 전문가로서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통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사한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밤 12시에도 여자가 혼자 도심을 걸어 다닐 수 있다며 감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사사법시스템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들을 막을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들만이 막을 수 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비판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서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한다. 검찰이 곧 악마라는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경찰에게 피해 입은 사람은 더 많고 국회의원과 국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훨씬 많을 것이다.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의 인권보장인가,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인가. 사적 복수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보장은 내팽개쳐도 된다는 것인가. 이른바 개혁이라고 하려면 나아진 점이 일부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아지는 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기존에 좋았던 점들만 사라질 것이다.

차진아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몇 개 언론에서의 우려들을 하면서 기사들이나 사설 몇 개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진보 매체든 내지는 보수 매체든 거의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진보 진영, 범보수 진영 모두가 사실은 이번 검찰개혁 그리고 사실상 검찰개악인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언론 사설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사설들을 제법 본 적이 있었고요, 그 속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조도 제가 제법 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나온 조선일보 사설 하나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를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

민주당이 공소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연이어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를 장악했으니 다 통과될 것이다. 검찰은 10월에 없어지고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이 창설된 지 78년 만이다.

검찰청 폐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국민 일상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당장 수사기관 간 혼선이 불거질 수 있다. 부패·경제 등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치고, 공수처와도 일부 겹친다. 쪼개기 수사와 사건 떠넘기기가 만연할 수 있다. 작년 11월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만 해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나누어 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수청이 수사우선권과 사건이첩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수사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한데 이 수사기관들을 통제할 장치가 다 사라져 버렸다. 민주당은 애초 두 정부 법안에 있던 검사의 영장청구·집행지휘권, 부당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한 수사중지요구권을 삭제해 버렸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조차 삭제했다.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다 없앤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세무·환경·노동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별사법경찰, 그러니까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사경 전체 인원의 절반 가량이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기피 보직이고 인사이동이 잦다고 한다. 수사의 전문성이 생길 리가 없다. 이 때문에 수사

의 상당 부분을 검찰의 수사 지휘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 그 수사지휘권까지 없애 버린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민생 현장에서 위법을 눈감아 주거나 권한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숱하게 벌어질 수 있다. 정치인인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해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특사경을 악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헌정사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언제나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악폐가 한둘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남겨야 한다. 민주당의 검찰 폐지법은 민생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보복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국민의 민생에 미칠 광범위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있었던 사설을 읽어 드렸습니다.

서울신문의 사설도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사설입니다. 풀보다 먼저 눕는 경찰에 수사권 몰아주기, 여당 책임지겠나.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제출한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오늘 오후 이를 강행 처리한 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도 같은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두 법안에는 경찰과 중수청 수사에 대한 검사의 견제 장치 등을 모두 삭제하는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주장이 대거 반영돼 있다.

당초 당정협의안에서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가 추가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던 대목도 사라졌다. 검사가 영장 청구·집행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했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도 못하게 했다.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폐지해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지방공소청장이 직무 관련 부당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수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때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나 같은 해 11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풍문조차 들리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 수사에 대해서도 늑장·봐주기 비판이 심각하다.

어제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다. 무슨 이런 황당한 장면이 다 있는가 싶은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검찰의 견제가 전무해진 경찰과 중수청 체제에는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게 됐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그 부작용이 머지않아 여권에 역풍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서울신문 사설을 또 읽어 드렸습니다.

보통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 헌정사, 그것도 너무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 죽 돌아보면 가장 힘 있을 때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정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그 가운데서 보통 많은 우려와 많은 반대가 있는 법안들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내지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편의와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는 무관하게 통과됐던 법안들은 늘 언제나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많은 비판 속에서 그 법안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통과되고 있는 이 검찰개혁 법안도 사실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읽어 드린 2개의 사설과 그다음에 학계에서의 우려들을 말씀드리면 결국 잘못은 정치권이 저지르고 정치권이 그리고 현직 정치인들이 이 바뀐 형사사법체계에서 이득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지옥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법안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 만들 때도 얼마나 정치권이 떠들썩했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노무현 행정부 때부터 이어왔던 검찰에 대한 악마화라는 커다란 프레임 안에서 공수처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공수처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하고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또다시 검찰개혁안, 사실상 검찰개악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들을 또 통과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누더기의 누더기입니다. 게다가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스스로 그것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처럼 본다는 것은 스스로 헌법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의식하고 법률로서 헌법을 넘어서는 위헌적인 법안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랑이 등에 탄 사람처럼, 이른바 개혁이라는 기치에 매몰되어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라는 호랑이 등에 타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호랑이 등에 타서 정말 앞뒤 보지 않고 달려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민주당도 그 호랑이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호랑이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할 것은 본인이 타고 있던 호랑이의 얼굴일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결국 민주당도 이 법안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서 그리고 내지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로써 이 법안을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필리버스터 자리가 아니고서야 이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할 기회는 거의 사라지는 것이고 불가역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나쁜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몇 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선에서도, 법조계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사입니다. '변호사의 58%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 10명 중 6명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변호사 2383명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검찰권 통제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의 찬반을 묻는 항목에 변호사 5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그리고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가 26.4%였고요.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가 26.1%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이다 24.3%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 해당 항목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한 변호사는 41%로 이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남용 차단 36.2%,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23.4%, 형사사법 신뢰 회복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설치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변호사 56.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9%가 반대하는 이유로 위원회 방식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를 꼽았다. 별도 기구는 불필요하다, 공소청에 수사 통제와 관할 조정 임무를 부여하면 된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변호사 88.1%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어야 하냐는 항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변호사들조차도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항목에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실무선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응답자 중 44.6%가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6%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묻는 문항에 2년 이상이라고 답한 변호사가 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 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변협은 법률 전문가로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중요한 의견을 담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와 관계 당국에 전달해 회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

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입법을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이 법안의 위헌성, 특히 검찰총장이라는 글씨가 적시되어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인가 법률기관인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검찰의 헌법적 지위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법조계의 화두가 됐다. 이 질문은 검찰청 폐지의 위헌 여부와 직결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립인 만큼 향후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위헌 논란은 현행 헌법에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헌법 제12조를 보겠습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12조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 제16조를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청’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헌법 제89조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쭉 넘어와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여기 검찰총장이란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법조인들은 검찰과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헌법기관인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청을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면서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 통설이라고 말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1948년 제헌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며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을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으로 본다면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인사 절차 대상으로 규정된 것일 뿐 대통령·국회·법원·헌법재판소처럼

설치 근거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사 역시 영장 신청권자로만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건 반대의견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법률로 검찰청을 설치·변경·폐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정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학계의 통설은 정부의 입장과 다릅니다.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실제로 실무진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그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법률기관으로 보고 일반 법률로서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네 글자가 남아 있는 한 이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를 마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이를 의식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공소청 설치법에 공소청장은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안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게 사실 지난해 기사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의장 명칭 변경을 시도하다 위헌 논란으로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소청장의 직위 역시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형사사법체계가 바뀜으로써 얻어지는 이득도, 실익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고 기존에 검찰이 잘하고 있었던 것마저 다 없애는 상황에 심지어 위헌 시비까지 걸릴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굳이굳이 그렇게 억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저의를 저는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어제 나왔던 사설 또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민주당 강경파 뜻대로 된 검찰개혁,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 어제 기사였고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사설입니다.

검사의 수사기관 통제 권한을 대폭 축소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처리를 잠시 늦출 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경우 제어할 방법이 사라진다. 식품·환경·노동·세무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을 통제할 장치도 없어진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당정청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중수청 개시 사건의 공소청 통보 및 검사의 수사 중지 요구권 삭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박탈 등이다.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취지는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검사가 수사 개시부터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은 사건 암장이나 핑퐁 수사를 막기 위해서다. 특사경의 지휘를 검사에게 맡기는 것은 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만큼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반드시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정청 합의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합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라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강경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 이유다.

민주당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루어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위원회의 활성화,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강화 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도 유명무실한 이들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기능케 할지는 의문이다. 검찰총장이라는 이름과 검사 전원 해임 외에는 강경파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당정청 합의안 도출 과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보완수사권 존폐의 논쟁이 당내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면서 또다시 강경파의 주장만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사 벌주기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소불위 검찰권이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 권력을 따르는 경찰로 대체된다면 검찰개혁은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저도 우려가 됩니다.

앞서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렸던 게 지금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 피해를 국민들이 보는데 이득은 정치인들이 누린다는 것인데요.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수사에 대해서도 늑장·봐주기 비판이 심각하다. 어제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다. 이런 황당한 장면이 다 있는가 싶은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사설에서 굉장히 뼈아픈 지점은 벌써부터 망가진 형사사법체계의 어떤 부작용으로서 정치인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수사가 적체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민주당의, 여당의 힘 있는 정치인들은 이 반사효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특사경 문제가 여러 군데서 다양한 각도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특사경 관련한 내용도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정청이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을 확정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기존 정부안과 달라진 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하에 축소했던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줄인 것이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와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고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도 제외했다.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제도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다.

특사경은 경찰이 아니지만 교정, 환경, 노동, 위생 등 특정 분야에서 경찰관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다. 이들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강제수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사경 인원은 2만 1263명이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경찰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을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특사경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특사경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감독원 직원도 특사경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만 명이 넘는 특사경이 독자 수사를 펼치면 범죄 대응이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절차적 위법이나 인권침해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검사가 이를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한다면 특사경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소속 특사경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될 경우 수사가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형사사법체계는 견제와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검찰에 대한 반감으로 꼭 필요한 권한마저도 빼앗는다면 자칫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한 비대한 경찰공화국으로 갈 우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절차다. 검찰 권한 축소라는 명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도 변화가 가져올 득실을 치밀하게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과거에 경찰들이 남용했던 권한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정당하게 내가 재판받고 수사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오히려 견제장치로서 검찰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에 검찰들이 이런저런 권력 남용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검찰 자체가 경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다 보니까 사실 과거의 문제점이었던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점이 78년 만에 다시 한번 새삼 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사경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 그런 문제 지적을 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좀 해 드렸습니다.

단독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조선 단독 기사인데 '법무부, 여당의 공소청법 조목조목 반박. 특사경 지휘 삭제에 인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대폭 차단한 공소청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국민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어제—17일입니다. 이게 그제 기사입니다—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해 마련한 공소청법을 심사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입법 요구권,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 수사 중지 및 직무배제 요구권 등을 삭제하고 공소청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안에 담겼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의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수정했다.

이날 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정청 협의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먼저 이 차관은 기존 대검찰청의 역할을 이어서 맡게 되는 기관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하는 수정안을 지적했다. 이 차관은 정부안에서 대·고등·지방 공소청으로 규정했던 건 법원과 동급이라는 검찰의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집행

등 공소청 업무가 각급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공소청의 명칭 변경은 검찰개혁 취지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현 대검찰청을 대신해 부를 경우 전체 조직을 아우르는 공소청 개념과 혼동되면서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검찰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의 집행 지휘의 본질은 재판의 집행 지휘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발부된 영장이 오류가 있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 확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도 우려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서는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 역시 설명자료를 통해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은 법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된 검사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 조항과 관련해서는 합수본 구성 등 집중 수사 사안이나 대형 참사 등 전문 수사팀 구성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권한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경우 이를 이행하는 부분에서도 공백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차관의 의견에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입법적 결단이라고 일축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이 차관은 공소청이라고 하는 기관의 명칭과 법조문의 규정 및 형식과 혼재되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여지가 크고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 내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가 아닌 시장이 수사 지휘? 검찰 잡자고 특사경 고삐 푼다’. 특사경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2만 1263명 규모의 특사경은 앞으로 금융·노동·환경·세무·보건 등 각 분야에서 검사의 통제 대신 각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아래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사경은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사 경험이 부족해 검사의 수사 지휘마저 받지 않을 경우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한 검찰개혁 재수정안을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친 안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재수정안은 법무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초안과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한 수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구체적 조항을 손질한 세 번째 법안이다.

정 대표는 특히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수정안을 처리할 예정

이다.

여기서부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데 불법 수사가 이루어져도 제어장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재수정안에서 공소청법에 담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권한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사는 각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인권침해적 수사를 이어 가도 이를 제지하거나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지휘에 나서기 어렵다.

정부는 1956년 산림·해사·전매·세무 등 특수 분야의 범죄 단속·수사를 위해서 해당 분야 공무원을 수사에 투입하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금융·노동·환경·식품·보건 분야까지 확대되며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는 특사경이지만 정작 범죄를 수사할 기초적인 절차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검사의 수사 지휘는 이 같은 빈틈을 보완하면서도 특사경이 각 분야의 비리나 범죄를 현장에서 단속·수사하는 협력체계로 발전해 왔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면서도 특사경의 경우 여전히 검사의 수사 지휘 아래 둔 것은 수사 관련 전문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각 부처, 기관, 지자체 등에 조회한 의견에서도 검찰개혁과 별개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가겠습니다.

수사의 질이 하락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송치 사건 절반이 불기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보편화하며 그 규모가 늘어난 탓에 검사의 수사 지휘하에서도 이미 수사의 질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만 2835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3만 2765건에 그쳤다.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범죄가 아니거나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의미다.

특사경 다수가 수사 비전문가라는 점이 핵심 이유로 꼽힌다. 2024년 기준 전체 특사경 중 48%가량은 수사경력 1년 미만이었다. 행정공무원이 순환직으로 특사경을 맡는 특성상 2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인원 비율은 35.3%에 불과했다.

부실 수사와 불법 수사 우려도 나온다. 특사경 지휘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는 지금은 특사경이 입건 단계부터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의 방향을 잡아 왔는데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모든 통제가 사라지고 수사를 다 끝낸 뒤에 결과만 검사에게 넘기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사경은 행정공무원 중심 조직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와는 무관하게 행정 목적에 따라 무리하게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반대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사건을 덮어 버리는 상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국민 피해와 직결된다는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행정공무원 중심 조직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반대로는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사건을 덮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검사가 아닌 각 부처와 지자체 내부에서 특사경을 통제하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문제가 여전하다. 정부 부처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다면 이는 비법률가가 형사절차에 관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명하복식 위계질서가 강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수사에 대한 상관의 외압이나 부당한 수사 지시가 내려와도 특사경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정적을 제거하거나 상대 당 정치인을 압박하는 용도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다음 달부터 인지수사권까지 확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체계 자체가 무너지면 결국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제상 상급자가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을 지휘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특사경 수사지휘권 박탈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의견입니다. '대책 없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적 제거에 활용될 수단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점들은 결국 민주당에게 부메랑처럼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힘을 빼는 또 다른 수정 사항으로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소속 수사관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경우 수사 경과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을 상하 관계로 규정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 추가 수사 필요성을 발견할 경우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구권 역시 이번 재수정안에서 지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재수정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설명했지만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는 중수청 수사가 통제받지 않는 깜깜이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에서 다루는 사건의 경우 공소청에 송치하기 전까지 누구의 어떤 혐의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일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가 사라지면서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건하고 나머지를 누락하거나 입건 후 뭉개는 경우를 통제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며 결국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중수청이 악의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한 수사 과정의 실수나 누락도 교정이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중수청의 경우 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이지요. 조항이 한층 세분화됐고 사법 개편 3법에 따라 법왜곡죄 역시 추가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은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논의 과제로 미뤄뒀다. 이거는 그제 기사라서요.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우려를 하는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공소청·중수청 법안의 민주당 최종안이 공개됐다, 그제 기사입니다. 하지만 검찰 권한 축소에 방점이 찍힌 나머지 그 공백을 어

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 권한이 분산된 것이 아니라 통제장치가 약화된 상태로 재편된 것이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여 범위를 대폭 제한한 데 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정부 초기안에서 삭제됐고 송치사건에서 추가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검사의 입건요구권도 제외됐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역시 폐지됐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통제장치가 약화됐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각 부처 소속 약 2만 명 규모의 특사경이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게 되는 구조에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권한이 남용되거나 사건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제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의 수사 관여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수사의 개시나 진행 여부가 개별 수사기관의 판단에 더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수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중단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수청과 경찰의 권한 구조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함께 주요 수사기관이 동일한 행정 체계 아래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사와 행정권력이 결합돼 형사사법체계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검찰 권한 집중을 문제 삼아 개혁을 추진했다면 그 대안 역시 권력 분산과 견제 강화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사경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환경·노동·식품·보건 등 특정 분야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특사경은 약 2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강제 수사와 절차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경험과 통제장치는 별개의 문제다. 검사의 지휘·감독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절차적 적정성과 인권 보호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 않더라도 송치 이후 추가 범죄 발견 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줄어들고 부당함을 시정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권한 축소라는 명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 구조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지금 제도 변화가 국민의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각기 다른 언론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같은 논조로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기사인데 제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언론매체 중의 하나인 오마이뉴스에서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를 냈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설익은 검찰개혁안이 현실화됐을 때 나타날 두 가지 시나리오'. 그러면서 소제목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개혁이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과 그 한계', 그 내용 중의 하나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한 방법론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한 헌법이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원칙적으로 한계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국민의힘 이런 야당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법안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헌법학계의 통설 그리고 현장에서 법조 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과반 이상 그리고 그 과반 이상 가운데서도 실제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90%에 육박,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나아가서는 법무부에서도 이번 법안의 우려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해 가면서 이 법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강경파에 끌려가서 결국 이 법안은 통과를 앞두고 우리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잘 인지하셔서 결국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는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양문석 전 의원이 재판소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많은 비판과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전재수 의원, 나아가서는 양문석 전 의원까지 사실은 바뀌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특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우려하고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우려를 하고 야당도 우려를 하고 언론에서도 우려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유력 여당 정치인들은 이 바뀌어지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국민들은 억울한 피해 그리고 제대로 재판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수사받지 못하는, 인권이 침해되는 결과에 방치될 텐데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문석 전 의원과 관련한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문석 재판소원, 한 지역 두 의원 문제에 여당 법사위원도 모른다. 4심제 만들고 부작용은 모르쇠 하고 있다'.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대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도 재판소원을 거론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메랑을 맞은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대법원의 반대에도 재판소원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놓고도 정작 속출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재판소원 사건에서 만약에 양 의원이 승소하

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둘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게 검토가 됐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러한 문제는 절차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 있는지 여부는 모른다, 저도 그 사실을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13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도 좀 헷갈린다며 법률적 해석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의원 부부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학생이던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일반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기망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중앙선관위는 양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보고 궐위 통지를 보냈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갑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양 전 의원은 재판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대법원 선고 후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실제로 재판소원을 신청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정지된다고 설명한 상태다.

문제는 이에 따른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양 전 의원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모두 인용되고 이후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온다면 당장 6월 재보궐선거에서 배출된 국회의원과 양 전 의원이 모두 공존하는 한 지역구 두 국회의원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효력을 정지하면 의원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제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 의원의 재판소원이 재판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일각에서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희 야당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토론에서도 그리고 법사위 회의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적인 트렌드다, 고로 우리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은 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박이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검사의 수사 관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17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해입니다. 저희 당 조배숙 의원님이 세미나를 열어서 관련된 공청회를 했던 내용을 여기서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유럽의 82.6% 그리고 OECD의 대다수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OECD 회원국의 압도적 다수가 검찰의 수사권 또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평의회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 46개 회원국 가운데서 38개국, 그러니까 82.6%에 이르는 나라가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33개국, 그러니까 71.7%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까지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세계적 추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지요.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 역시 검찰이 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교수는 또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서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 다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을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 권한의 인정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구상진 변호사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일본 등 대륙법계에서는 대체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서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은 사법경찰로 한정하고 검찰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검사의 경찰 통제가 대륙법계의 핵심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냐고 물어보면 연방·주 검찰 모두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의 대표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미국조차 실제로는 검찰이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미국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도된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직업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방검사의 직무규정에 연방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시돼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헌법 등 주법 역시 주검찰총장에게 지방검사장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에도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지만 1988년 설립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2013년 발족한 국가범죄수사청은 중요 부패범죄나 조직범죄 등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통합하여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에 기반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통합하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토론자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며 한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인 대륙법계 국가들의 흐름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대국가에서 거대한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검사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출범한 유럽검찰청이 유럽연합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수사하거나 회원국 검사 및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사례를 들고 있으며 오히려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적 수사·기소 통합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일본 검찰개혁안, 검찰청 폐지안의 가장 핵심적인 대전제인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법조 실무에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낼 수 있는지를 앞서서 많은 설명과 실증을 통해 말씀드렸다면 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적 추세라는 것 역시도 사실은 사실에 기반한 논지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다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리고 검찰개혁안의 대전제가 틀린 상황에서 이 법안을 추진해야 되는 진짜 목적은 정파적인 목적 말고는 저는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형사사법체계, 특히 이재명 정부하에서 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학계·법조계·언론계 그리고 야당과 정치계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저희가 많이 논의한 특사경의 문제 역시도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특정인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코미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처리했던 법왜곡죄 같은 경우가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기하거나 내지는 적극적으로 조작수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왜곡죄의 핵심인데 만약에 특사경이라든지 아니면 일선 경찰에서의 이런 관행들이 남용된다고 그러면 그 법왜곡죄의 철퇴는 당연히 그들부터 가게 될 것입니다.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굉장히 문란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람도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체계적인 논문이 있어서 앞서 제가 많이 소개를 해 드렸던 차진아 교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규범적 문제점과 현실적 우려’라는 제목으로 제가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결정되었고 그 후속조치로써 공소청 및 중수청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매우 날카롭다. 특히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 중수청에 검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특별한 지위를 둘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도 정부와 여당 간에 있었다. 이는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논리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나아가 검찰개혁의 결과가 검찰청의 폐지라는 점에서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제도의 폐지는 말 그대로 극약 처방이다. 더욱이 검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이고 굳이 검찰청이라는 명칭조차 폐지하면서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미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특히 헌법 제12조제3항과 제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헌법 제89조제16호의 문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책임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이 폐지된 검찰청에 비하여 그 기능이 약화되고 여러 역기능이 커진다면 검찰청 폐지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 여당 사이의 갈등을 보면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성공을 위한 조건들을 비록 충분치 못한 형태이지만 반영하려고 시도하는데 여당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성공보다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검사들이 중수청이나 공소청에서 힘을 가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 역력하다.

과거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사들 죽이기냐를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검사의 무력화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실패하고 결국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험성조차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검사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제1공화국 당시 권력의 측근으로서 검찰 이상의 권한 오남용이 있었던 경찰도 제3공화국 이후 민주화 이전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해서도 개혁은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지 그 기관의 폐지 및 무력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서 그 후속기관에 대해 검사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것들은 검찰개혁의 목표 자체를 의심케 하면서 이제는 그 후속기관들의 성공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검사 무력화, 삭초제근(削草除根)인가.

검찰개혁의 결론이 검찰청 폐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개혁은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치 전쟁을 하듯이 대상을 박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의 힘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힘이 결합하면서 압도적인 정치권력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검찰청은 폐지가 결정되었고 사법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충분한 숙의 없이, 신중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만 해도 20년의 세월의 논의 끝에 조심스럽게 추진되었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들이 불과 일련의 논의조차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것이 왜일까, 그것도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과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들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는 카를 슈미트의 적과 동지의 논리처럼 국가기관들조차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두고 내 편이 아니라면 제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로 인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공소청·중수청 법안들에서 눈에 띄는 검사 무력화, 그 원인과 문제점.

검찰청 폐지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이다. 말하자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기관이 공소청이고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기관이 중수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공소청 및 중수청의 설치를 위한 법안들에서도 검사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소청법안에서는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내지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인정 여부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이에 대한 찬성론은 기소 기능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대론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수청법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논란이 있는 것은 중수청에 검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둘 것인가의 여부이다. 정부 원안에서는 이를 위해 전문수사관 이외에 수사사법관 제도를 두면서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 인력을 흡수하려 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정부안의 수정안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사관들을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시킨 상황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결국 공소청과 중수청이 검찰의 기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위협받아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및 인력의 문제를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반면에 여당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검찰청의 기능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 말하자면 성공 조건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검찰의 무력화를 철저하게 관철하는 것에 대해 근본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공소청이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과연 메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오히려 통합하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누구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인가? 검찰청 폐지의 후속조치가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라는 것은 이들로써 검찰청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검찰청 폐지로 인한 수사 및 기소 기능의 공백 및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여당 중심의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에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먼저 공소청의 경우에는 검찰청의 기소 기능만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기 쉽다. 더욱이 검찰청에서 기소를 담당하던 검사들이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기소에 대한 노하우 문제도 해결된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소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기계적으로 기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기소라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검사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에 대한 기본 지식만으로 기소 담당 검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소된 사건이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의 법률 전문성 부족을 고려할 때 핵심 증거를 빠뜨린 것은 아닌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해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기소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약간의 보충·보완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증거 불충분

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가 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미 최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이후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비율이 높아졌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후 공소청에서 기계적으로 기소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범죄피해자인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범죄 피해로 한 번 죽고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아 또 한 번 죽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다뤄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소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환경, 노동, 식품 위생, 지식재산권, 금융, 조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82.3%가 경력 3년 미만이고 48%는 1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순환 근무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무엇보다 형사사법절차 및 수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교조화된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의 명제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마저 삭제한다면, 특히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영장 신청 및 영장 집행 시의 지휘감독권이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웃고 범죄피해자는 피눈물 날 것이며 비대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감독이 사라져 가시적인 실적 경쟁,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심지어 특사경 소속의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에 의한 정치 도구화 등의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

과연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국민의 인권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달성하여야 하는 절대 진리 그 자체의 목적인 것인가. 국민이 수단이고 수사·기소가 목적인가.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데 공소청법안처럼 공소청 검사를 일반행정 공무원처럼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 이외의 사유로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하라는 정치적 외압에 맞서 공소유지할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는가.

정부 여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폐지한 명분이 바로 정치검찰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째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신분보장을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인가.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가 아니라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의 정권 종속화, 권력의 시녀화가 아닌가.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검찰청 검사의 수사 노하우 및 법적 전문성 증발과 그 문제점.

공소청조차도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은데 중수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이른바 6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이유 그리고 최근 중수청의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서도 과거의 검찰의 6대 사건을 중심으로 일부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와 직접 연결된 문제, 법률전문성의 문제가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수사사법관 제도를 통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 인력을 흡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청 검사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는 부족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당의 반대로 인해 그마저도 정부안의 수정안에서는 포기되고 말았다. 이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중수청이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검사 인력을 흡수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는 준사법기구로서의 지위와 이를 위한 신분보장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공수처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중수청의 실패는 그와는 다른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중수청에서 검사 인력을 흡수하는 것만으로 중수청이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조직이고 새로운 업무이고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 정립도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누가 중수청장을 맡아서 초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수청의 성패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검사 인력의 흡수를 포기한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는 것은 폭포를 향해 나아가는 배에 조타수조차 두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사의 신분이 아닌 수사관으로서 더욱이 여당에서 중수청의 검사 흡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들이 얼마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이는 중수청의 법률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의 실패, 나아가 중수청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6조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단서와의 관계상 체계적 해석을 보자면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를 위한 것으로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청 국수본 본부장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중수청법안 제6조는 검찰청법 제7조와 구조 및 문구가 상당히 유사하므로 마치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을 검찰청 수준으로 보장한 듯한 외관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권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수사 개입을 제도화한 것을 숨기기 위한 포장에 불

과하다.

개별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공식적으로 행사된 사례는 몇 건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상당한 논란과 정치적·법적 책임 문제를 낳았다. 그리고 예컨대 김종빈 검찰총장처럼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자 사직하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사례도 있다.

검찰 조직을 비롯한 검찰청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직을 걸고 수사 및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정권의 외압에 맞서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사직한 용기 있는 검사들도 많았다. 그러나 정권에 맞서서 직을 걸고 수사한 사법경찰관리가 있는가? 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경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보장 등의 구조적인 조건의 문제인 것이다.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 그와 모순되는 정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 많이 제가 드렸으므로 조금 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다수가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역시도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을 때 수사 단계에서의 어려움, 난항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요 국가 역시도 수사·기소 분리 형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 대전제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은 당연히 검토돼야 되는 것이고 막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래 수사와 기소, 재판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매우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원님재판 같은 거지요. 수사에서 재판까지가 동일한 주체에 의해 행사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이 심각하였고 이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이 분리된 것은 근대적 형사사법제도의 성과이며 이를 검찰, 경찰, 법원이 각기 담당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의 역할 분담 내지 권력의 세분화를 통한 상호 통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의 세분화가 자기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계적인 분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기적인 연결 내지는 협력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공수처다.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이고 그렇게 반드시 관철돼야 되는 대의명분

이라면 특검과 공수처는 왜 거기에서 예외를 두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민주당이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 설치, 왜 검찰청 명칭을 폐기했나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검찰청 기소 기능의 담당 기관으로서 공소청, 수사·기소의 분리의 결과라면 왜 명칭 변경이 필요한가? 공소청 설치와 관련하여 어쩌면 매우 핵심적인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검찰청을 존치한 채로 수사 기능을 박탈하고 기소 기능만 남겨 두는 것이 정부 여당의 주장에 따를 때 검찰의 본질에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려는 것일까? 아니, 중수청은 논외로 하더라도 왜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기소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명칭 변경은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동일성 부정이고 둘째, 기관의 폐지와 신설에 따라 매우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해졌다는 것이고 셋째, 그로 인해 헌법 제89조제16호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 제89조제16호는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 그리고 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헌법이 명시한 헌법상의 기관이며 이는 법률로써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의장 명칭 변경을 시도하다 위헌 논란으로 포기한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헌법 개정 없이는 헌법상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총장 사문화를 통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법률상의 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이런 주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런 논란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둔 의미, 헌법 규정을 법률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각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률로 헌법 규정을 사실상 개정할 수 있다면 전체 법질서가 혼돈에 빠질 것이며 형식상 헌법 개정 없는 사실상 헌법 개정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실질적 위헌으로 인정되면서도 헌법 개정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각하 결정을 내렸던 헌법 제29조제2항도 법률로 사문화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굉장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권, 어떤 의미인가?

최근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에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주장들이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사가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헌법 조항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제1공화국 당시 경찰권의 오남용, 특히 4·19 혁명 당시에 경찰이 시위

대에 대해 발포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통제장치로 계속 기능해 왔다. 적어도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체포·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중간 단계로 기능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경찰의 과도한 영장청구를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영장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인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수사·기소의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면 영장청구권도 함께 사문화되는 것이 아닌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경찰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심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보완수사요구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영장청구권의 의미가 제한적으로나마 살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완수사권마저 부인될 경우에는 영장청구권도 함께 사문화될 것이며 이는 위헌적인 것으로 다투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마저 인정하지 않아 그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면 중수청 수사관이나 경찰청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과 신병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이 공수처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구속 기간은 경찰 10일과 공수처 20일을 합하여 최대 30일에 이른다. 그러나 중수청 수사관이나 경찰이 공소청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 공소청은 즉시 기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마지막 논점입니다.

중수청 설치,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로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검찰청 수사 기능의 후신으로서의 중수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었던 6대 범죄 등은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온당치 않다. 기소 기능이 없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생 기관인 중수청은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성격의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공수처가 제2의 검찰청이 될 우려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중수청과 공수처의 역할 중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수청과 공수처의 역할 중첩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다. 일반적 수사기관과는 달리 한정된 범위의 특별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이른바 특별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중

수청과 공수처의 공통 분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안 원안에서 9대 범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했던 것을 정부안 수정안에서는 공무원 범죄 등을 제외한 것도 이러한 업무 중첩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양 기관의 역할 중첩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무엇보다 특별수사기관으로서 양 기관의 성격이 중첩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설치된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이며 중수청은 현재로서 그 아류인지 아니면 홍콩과 대만의 염정공서·염정서를 모델로 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문제는 이러한 특별수사기관이 이중적으로 설치될 당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며 향후 양 기관의 역할 중첩 및 그로 인한 병존의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과 법률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관한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설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중수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다. 문제는 검찰의 후신으로서 법률 전문성이 뚜렷한 사건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중수청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이 어떻게 법률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적 사항이며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중수청이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중수청이 법률 전문성을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한편으로는 불과 반 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검찰청의 폐지와 중수청의 설치 시까지 법률 전문성을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검찰에서 초임 검사들을 훈련시켜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검사로 양성하는 데에도 최소 삼사 년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기간에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결국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청을 떠난 검사 인력을 흡수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인데 이를 추진하는 정부안이 여당의 반대로 인해 좌초되었다는 것은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에 매우 심각한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 설령 검찰청 검사의 일부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흡수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박탈할 경우 수사의 정권 종속성은 예정된 결과라는 점이다. 아무리 개별 사건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중수청장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해도, 상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있다 해도 이러한 장치는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검사 무력화가 아닌 국민 인권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이 논의될 당시에는 그 끝이 검찰청의 폐지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의 설치조차 검찰의 견제장치로서, 즉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만일 정부 여당이 처음부터 이를 계획했던 것이라면 검찰개혁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나아가 검사들의 권한을 계속 축소함으로써 오로지 기소에만 관여하는 것이 개혁이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적어도 현재까지 나타난 검찰개혁의 결과는 검사들의 밥그릇 빼앗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 중수청의 검사 인력 흡수에 대한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여당의 태도는 정부의 태도와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결국 공소청 및 중수청의 설치가 국민의 인권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는 검찰 죽이기가 더 우선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 민주적인 개혁이라면 그 과정이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강력한 정치권력에 의해 강행된 것이라도 사상누각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통과되고자 하는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필리버스터하는 동안에 죽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안들의 내용은 결국 검사의 힘 뺏기, 검사의 힘 빼기 이상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관 내지는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될 때부터, 검찰개혁추진자문단이 구성될 때부터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일련의 법 개정조차도 민주당 주도로, 정부 주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법률 간에 상충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기관 간에 상충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일단 당장 검찰은 없애야 된다라는 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망가트린다 그러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 직결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범죄 사건에 관한, 아주 직접적인 민생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리고 내지는 근본주의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거듭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는 국회의원들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을 때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사실상 법률로써 헌법을 뒤집는 이 법안들을 만들었을 때 이 나쁜 선례를 나중에 22대 국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지적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힘이 있다고 해서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한 그리고 법률로써 헌법을 뒤집을 권한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주신 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주신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검찰개악에 대해서도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게 반대투표를 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라고 우려한 만큼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민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바꿔 낼, 그리고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우원식 김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송석준)

(08시29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소청법은 삼권분립을 파괴할 수 있고 또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일환으로 보이고 또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상 인사를 드릴 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악법 처리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켜 주던 검찰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 공소청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를 하는 이 와중에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이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제도,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상임위를 통해서 그리고 법사위를 통해서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서 문제 있는 것은 다듬고 서로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다듬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렇게 상정된 공소청법을 비롯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무수히 반대했고 또 각 상임위에서 격론을 거치면서도 합의가 안 되고 일방 처리되고 법사위에서도 일방 처리되고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온 이 법안에 대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이렇게 여권 일방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가 어쩌면 가장 많은 법안들을 범여권이 강제로 일방 처리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제대로 국민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또 야당의 간절한 호소를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 처리되는 그 자체가 바로 존경받는 국회, 존경받는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스스로 저버리는 게 아

닌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처리되는 본회의장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까지 대한민국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발휘되기는커녕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상생을 저버리고 서로 조화의 정신을 저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 이 자리가 심히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 주신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주권,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번 필리버스터 바로 이곳에서 큰절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22대 국회, 부끄럽고 참으로 참담한 22대 국회의 이 모습에 제가 국민 여러분께 300명을 대표해서 또 우원식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과의 큰절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우리 모두가 변하기를 기대했고 변해 주셨으면 했지만 오히려 모든 상황은 악화일로, 오히려 비정상의 정도를 더욱더 심화시켜 가는 이 대한민국 22대 국회,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참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948년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면서 일제의 잔재,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맞이한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부존자원도 넉넉지 않은 대한민국이 나라를, 정부를 수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전쟁의 참화, 그것도 바로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참전하는 그야말로 역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참혹한 전쟁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바로 우리의 강토, 우리의 아름다웠던 자랑스러운 문화재도 많이 소실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또 우리 동족 간에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갈등, 심지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넘어서 지금은 이렇게 분단의 질곡의 시간이 더욱더 강고해지고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그 참화의, 폐허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간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서로 머리띠를 두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형님들, 누님들, 부모님들께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지난 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용적 제도를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각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 보니 대한민국이야말로 짧은 기간에 경제 고도 성장을 이뤄 내고 가장 아름다운 정치 민주화를 이뤄 낸 위대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을 배우자. 이것이 바로 노벨 경제학상 2024년 수상자들의 생각이었고 바로 그분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도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거대 여당에 의해서, 당시 시작은 야당이었지요. 야당 시절부터 지금 여당이 된 이 시점까지 아름다웠던, 아름다운 우리의 수많은 제도들, 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제도들이 하나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무엇입니까? 삼권분립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정치 제도, 정치체제가 존재해 왔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잘 다듬어진 바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또 정치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주권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들어가고 그 중심에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입법부,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해 주는 사법부,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 주고 또 우리 시대 정신을 반영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다시 환류를 해서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 가는 그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바로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순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잘 만들어진 삼권분립제도, 그것을 더 다듬고 더 잘 가꾸어 나가기는커녕 22대 국회 들어와서 그것도 민주당 거대 야당에 의해서, 이제는 여당이 된 거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제도가 처절하게 잔혹하게 무너지고 짓밟혀지는 현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나오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예.

○송석준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은 저보다 정치 선배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학도지만, 경제학자지만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은 바로 법조인이십니다. 법조인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시했던 것이 삼권분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예.

○송석준 의원 정성호 장관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제도는 삼권분립제도다.

그래서 저같이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제가 25년 국토부에서 근무를 했지만 행정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나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또는 이렇게 입법부, 저나 지금 여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같이 입법부에서 같이 일하는 입법부 구성원들이나 우리는 서로 제대로 된 민심을 받들고 시대정신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도록 사법부가 역할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그 제도를 다듬고, 아니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간 그 아름다운 민의의 전당,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의의 전당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늘 바로 공소청법이, 공소청,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그동안 대

한민국의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청이 헌법에 근거가 있고 또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공권력인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특히 수사권에 관해서 바로 검찰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검찰청은 과거 정부 수립 전후해서 대한민국이 이념적 대립에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 특히 공산세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 특히 민생현장에서 나타나는 강력범죄들 그리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조직범죄 또 지능적 범죄, 최근에는 정말 처음 들어 보는 온갖 보이스피싱이니 로맨스 스캠이니 각종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온 그 핵심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청 검사들이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근간은 바로 사법고시 그리고 지금은 로스쿨 출신의 전문가들로 그 담당하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같이 양쪽에서 역할을 뒷받침하는 변호사들과 같은 전문 법조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 정신에서 나오듯이 바로 민주주의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전제될 때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국민들, 우리에 주권을 맡겨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안전을 지켜 주고 각종 권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온 바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하나하나, 어쩌면 이렇게 무참하게도 잔혹하게도 무너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제가 반대 토론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바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법제도 특히 형사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마지막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검찰에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보완하면 됩니다. 또 운영의 문제입니다. 훌륭한 정부에서는 검찰제도를 훌륭하게 활용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바로 검사가 존경받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부를 만나면 바로 이 검찰이 잘못 활용되고 그 검찰이 힘을, 특정 권력을 비호하고 특정 권력의 시녀 역할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결국 현명한 국민들께서 심판하시고 국민들께서 따가운 시선으로 뜨거운 함성으로 제어를 해 주시면서 바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잘못된 검찰이 스스로 자제하고 자숙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하면서 다듬어 오고 다듬어 온 것이 지금의 검찰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찰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애겠다고 합니다.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의 동료 법사위원, 바로 민주당 법사위 간사께서 '드디어 오늘은 검찰이 폐지되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이 폐지되는 이 시점, 국민 여러분께서는 즐거우십니까?

정성호 장관님, 즐거우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검찰제도는 어제오늘의 하루 이틀 성숙되어 온 제도는 아닙니다.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서 어쩌면 삼권분립의 핵심,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공정하게 강제수사권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어져 온 것이 검찰청, 검찰제도였고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검찰제도를 공소청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검사들이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을 무조건 100% 뺏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행안부 소속인 공소청 그리고 기타 수사기관들에게 모든 수사 권한은 다 분산, 이제 흩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검사가 못됐기 때문에 그 수사 권한을 뺏어서 여러 기관에 나눠 줌으로 해서 수사의 강제 권한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권리가 더 보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다양화·다원화 그 자체로서 수사권을 서로 견제·균형할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또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수사를 받아 보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모함으로, 실제 또 본의 아니게 실수로 수사를 받으시면서 수사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수사라는 것이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되어야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지고 대한민국의 사회 안녕이,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사 현장에서 조작수사가 이루어지고 왜곡수사가 이루어지고 강압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고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삼권분립이 이루어졌고 또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수사 권한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사' 하면 일제 때부터 우리는 순사가 생각이 납니다. 경찰이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순사에서 상징되는 권력이 집중되는, 그 통치권력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수사 권한을 어디선가 컨트롤해 주기를, 어디선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그리고 거기에 전문 법조인 출신의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들이 국가적으로 선발이 되고 또 임명이 돼서 경찰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켜온 참 중심 국가의 기간 제도 역할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 검찰제도를 오늘 공소청법을 통해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사라는 말은 이제는 역사의 유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분명히 사법부의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룬 겁니다.

비록 검찰청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검찰청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국민들의 주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사법고시나 각종 로스쿨을 통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선발 과정을 통해서 엄격하게 구성된 그 검사들로 구성된 것이 검찰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은 행정부의 강제 권력인 수사권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도 하고 또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국민들의 버팀목이고 국민들의 수호자 역할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님, 제 말씀드리는 게 맞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예.

○송석준 의원 장관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들, 대한민국의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대한민국의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권력이 잘못되고 왜곡될 때는 바로잡아주는 핵심 균형추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당의 박형수 의원님도 검찰 출신으로서 사실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목놓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검찰제도 폐지에 대한, 바로 이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해 왔고 그거를 꼭 막아 내셔야겠다는 일념으로 이른 아침 이 순간까지도 이 자리에 같이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는 추측합니다. 바로 민주당 소속의 검찰 출신 많은 의원들 계십니다. 이분들도 속으로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가 뭔데, 정치가 뭡니까? 당대표가 무섭고 대통령이 무서워서 내 속으로 생각은 다른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당론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검찰을 없애야겠다. 검찰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안태준 의원님, 검찰 폐지에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확실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후회하실 일 있을 겁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제수사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또 이재명 정부 여러분들께서 모든 수사권을 행정부로 이제는 집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위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서 견제하던 그 강제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뿌리를 뽑고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제되지 않은 권력, 수사 권력이 과연 계속 이렇게 이재명 정부,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적들만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룡화된 무소불위의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스스로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자? 지금의 힘 있는 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지금의 힘 있는 자는 바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이 뒤에 계시는 우원식 의장일 겁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권력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권력, 지금 이재명 정부가 영원히 가겠습니까? 가려고,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갈 수도 있지요'. 어떻게?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연임제를 만들면 5년에서 끝나지 않고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 글쎄요. 지금 개헌 논의가 있지만 그렇게 무한 권력, 여러분들 획책하신다면 국민들께서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매를 드실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달도 차면 기울듯이 이제는 민심에 의해서 스스로 맡겨진 권력은 박탈될 것이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무소불위의 칼이, 무소불위의 강제수사 권력이 다음 행정권을 장악한 권력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여러분들의 목 끝을 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뒷목을 겨눌지도 모릅니다.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여러분들은 즐겁게 아무 죄의식 없이……

안태준 의원님,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이웃 동네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정중하고 친절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그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사 권력이 바로 존경하고 싶은 안태준 의원님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이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요. 근거 없이 왜곡되게…… 여러분들 지금 국정조사 하자 그러잖아요. 조작수사, 조작기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 조작수사하고 조작기소한 검사를 상대로, 그러한 검찰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리 당에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검찰이라는 제도는 견제와 균형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천칙으로, 철칙으로 배워 온 전통 법조인들로 구성된 검찰입니다. 그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조작수사, 조작기소를 했다라고 모함을 받고 있는 형국에 만약에 권력이 집중된 공소청 수사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왜곡하고 조작하는 수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 있는 권력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조작되고 왜곡된 수사를 할 때 그것을 누가 견제하겠습니까? 입법부가 찾아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수당은, 점한 정치세력은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무리한 수사·조사·기소를 하는 수사관들을 바로 탄핵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무소불위의 견제되지 않는 권력, 강제수사권을 가진 권력이 오늘 이 법에 이어서 바로 중수청법이라는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수처라는 것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이라는 수사권력들이 있습니다.

군검찰, 지금 기소권·수사권을 그대로 온전히 갖고 있는 군검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사 권한들이 이제는 견제 없이 마구마구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해서 행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 피해를 어떻게 막아 내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십니다. 법왜곡죄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힘을 가진 수사관들도 함부로 못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왜곡죄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힘 있는 자의 논리로, 처벌을 위한 논리

로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사법개악 3법 중의 하나가 형법을 개정을 해서 법왜곡죄라는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왜 그때 우리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했습니까? 법왜곡죄라는 것이 말 그대로 힘 있는 자의 논리에 의해서 왜곡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왜곡에 의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져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민의의 전당에서 그 법왜곡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이재명 정부, 바로 민주당이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없던 새로운 법왜곡죄라는 게 생겨나서 판사들 그리고 수사관들 그리고 행정부 이런 법집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법왜곡죄가 적용이 돼서 더욱더 무시무시한 칼날로 겁박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칼자루로 작동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바로 행정부, 권력의 힘에 더욱더 칼을 쥐어 주고 힘을 실어 주는 법왜곡죄야말로 이 공소청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고 행정부 중심으로 권력과 힘을 집중시켜서 독재로 가는 길목, 바로 그러한 가도를 만들어 내는 제도들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아름답게 만들어진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온 바로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바로 검찰이 갖고 있던 핵심 권한 중의 하나인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제는 공소청으로 전권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작동했습니다. 바로 영장과 수사 이런 행위 과정에서 법원에게 바로 영장 청구라든가 수사·기소를 할 때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 특사경이라든가 각 수사기관,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경찰이 수사해 온 결과가 부당하지는 않은가, 잘못 적용되지는 않았는가를 마지막으로 걸러서 사법부에 기소로서 마지막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검찰입니다. 그 검찰로부터 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완전,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완전 박탈입니다.

기소는 뭡니까? 죄가 있다라고 사법부에 넘기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잘되고 뭐가 못됐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기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에는 관여하지 마라, 수사를 한다는 사실도 보고받지 마라. 그냥 경찰에서, 각 수사기관에서 기소하라고 의견이 오면, 송치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판기처럼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기소·불기소.

그러면 공소청에서는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판단이요? 수사를 해야 재수사를 하거나 재수사 요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확인해야 기소가 제대로 된 건지, 기소를 제대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공소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만 허수아비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허수아비 공소청을 만들어서 자판기 기소 여부, 예스·노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무모하고도 무도하고도 폭압적인 행태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막아 주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잘 다듬어져 온 그리고 특정 권력의 무소불위 권한 제어 역할을 그래도 해 왔던 아름다운 우리 검찰제도를 이제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안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미운 검찰의 권한,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하는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서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행안부장관 밑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의 행정부 집행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준사법기관·준독립기관인 바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해서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하수인으로 데려다가 쓰겠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쓸까요? 국민들을 위한다면 견제와 균형의 지금의 검찰제도를 살려야 됩니다. 견제와 균형 역할, 강제력의 공정한 집행을 바로 사법부와 함께 담당했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폐지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그나마 온전히 유지돼 왔던 수사 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참히 밟아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찢어 버리는 그런 행위가 오늘 이곳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역할을 해 왔던 분들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이 검찰제도가 이렇게 무참히 없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상황들이 대한민국에 곧 닥쳐올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저는 의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검찰제도의 무자비한 파괴, 폐지를 정말 갖고 가고 싶으신 겁니까?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제 생각에 일응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의장님의 정치적 소양과 양심에 따라서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힘 있는 정치세력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두려워서 지금 의장님의 고유권한 제대로 행사 못 하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 안녕질서, 생명과 재산이라는 기본권을 지켜 온 정말 핵심 역할을 해 온 검찰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에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점을 저 이천시 출신 송석준 3선 국회의원이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고발드립니다. 막아 주셔야 됩니다.

이 검찰제도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 수사 권한이 행정부로 집중되고 그 권한은 견제가 되지 않고 바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로, 대한민국헌법이 정하는 국민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수사 권한 강제, 이런 영장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는 바로 특정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아 주셔야 됩니다.

검찰제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이제는 특정 입맛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결국 인권침해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민생의 파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은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야당

의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러한 와중에도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존속 이유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검찰이 미워서.

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이 미울까요? 바로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과거 시절에 이미 8개의 사건에 12개의 범죄로 5개의 재판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을 재판정으로 몰고 그분을 기소한 그분들이 바로 검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마터면 지난번 대선 직전에는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생기면서, 그것이 다시 최종 유죄판결이 났다면 하마터면 대통령이 못 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엄중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민주당은 바로 여당이 됐고 이재명 전 시장, 전 도지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 이제는 여당이 되고 나니 바로 나를 괴롭혔던 그 핵심 세력들을 혼을 내 줘야겠다, 그 혼날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위대한 존재를 뒷받침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는 뭔가를 해 봐야겠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검찰을 혼내 주고, 혼내 주는 정도를 넘어서 없애겠다, 니네들을 죽여 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검찰을 죽여 버리겠다고 달려들고 그것이 바로 공소청법의 탄생으로, 중수청법의 탄생으로 바로 이 국회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도 또 대한민국 국회는 특정인과 특정 권력을 위해서 남용돼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나쁜 제도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고 바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위를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원하는 진정한 민생 법안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제대로 된 예산 다듬어서 만들어 주고 국가적인 의사결정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시대정신을 받들어서 결정하는 곳이 이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왜 한풀이, 원풀이, 보복행위를 하고자 합니까? 바로 나를 수사하고 나를 기소한 너희들을 없애겠다,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 이런 심사는 아닙니까?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적어도 기소를 하고 적어도 수사를 하고 공소를 유지할 그런 검찰이었다면 그분들이 근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특정인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말 끔찍합니다. 동료 의원님 생각이 그동안 수사기관과 검찰에서 근거도 없이 왜곡해서 조작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까지 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라면 착각이고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게 대한민국의 다듬어져 온 아름다운 제도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폐지되고 짓밟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들을 짓밟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짓밟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다듬어져 온 제도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역사가 녹아 있고 바로 5200만 국민들의 뜻 하나하나가 스며 있는 그러한 제도들 아닙니까? 그 제도들을 특정인이 미워서, 특정인을 괴롭혀서 그래서 없애겠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만행이고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하고 무도한 행위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정인을,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물론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의 통수권자이고 온 국민을 대표하는 바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떠받들어지고 갖고 있는 힘을 무자비하게 행사하라고 만들어 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묻고 그래서 설령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제도라도 작은 목소리, 짓밟혀질 수 있는 소리라도 들어서 제대로, 국가행정 집행 현장에서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도 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그것에 의해서 피해 볼 수 있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라도 챙겨서 제대로 대한민국 행정부를 이끌어 가라고 만들어 준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대우받고 힘쓰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오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던 검찰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공소청을 만들어서 검사의 수사 권한, 수사에 대한 감시 권한을 완전 박탈을 해서, 떼내서 대통령 직속 행안부장관, 행안부장관 직속 중수청으로 떠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에 직접적으로 위배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닙니까?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왜 이 아름다운 잘 다듬어져 온, 78년간 성숙되어 온 검찰제도를 이렇게 무도하고 무책임하게 없애고 훼손하고 찢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자중하십시오. 이성을 회복하시고 제발, 오늘 오후 3시가 조금 넘으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조차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곧 표결에 들어갈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구성하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이 순간에라도 자숙하고 자성하고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인지해서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같이 이 공소청법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동료 의원들, 지역구 의원님들 또 아시는 의원님들께 전화 한 통화 해 주시고 지나가다 만나시면 소매라도 붙잡고 호소해 주십시오. 그 법 만들면 안 된다, 검찰제도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 이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신 차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는 찬성하고 앞장서서 통과시켜 왔지만 바로 이곳에서 공소청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이 시간 이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동료 의원 좀 설득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역사 동안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 낸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는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기본제도들을 야금야금을 넘어서 조곤조곤 잔혹하게 파괴하고 찢어발기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까? 삼권분립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이미 사법 악법 3법을 통해서 무참히 사법부를 찢어 버리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발로 밟아 뭉갤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직은 실감나지 않으실 겁니다. 법왜곡죄, 내란특별재판부법, 4심제, 대법관 증원, 겉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마치 잘못된 세력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아주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랑 비슷합니다. 노란봉투 하면 따뜻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노란봉투법의 실체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로 위장한 강성노조가 기업들의 경영권까지 침해하고 기업들의 의사결정 하나하나마다 쟁의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고 발목 잡고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손발을 묶는 법이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이미 벌써 경영 현장은 난리도 아닙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로 돼 있는 산업현장에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쟁의하자고, 교섭창구에 나오라고 기업인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한 경쟁의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경영 아이디어를 낼 그러한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인들이 이제는 허구한 날 소송에 휘말리고 쟁의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 달라고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더 한참 전에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실 아닙니까?

심지어 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각 부 장관들도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벌써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노란봉투로 만든 그 법에 의해서 국가 행정기관의 책임자든 기업의 책임자들이든 바로 강성노조에 의해서 이제는 끌려다니고 짓밟히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게 막연한 기대였지만 현실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폐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 꼭 내가 당해 보고 그때 가 봐야 아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최단기간 내에 52시간제를 강요하고 최저임금을 갑자기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보십시오. 뒷골목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농업 현장의 시설농들 현장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 벌써 한참 지난 그 시절에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만들어 낸 노동관계 제도로 인해서 지금 서민경제가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실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정책, 그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시행됐던 원전 폐기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온통 에너지 전쟁 아닙니까? 물론 태양광이니 신재생에너지로 요즘 보완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결국은 원전을 폐기했던 유럽 국가들이 후회하고 다시 원전을 가동하고 새로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사고로 환경피해를 입었던 일본조차도 원전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로 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된 제도 만들기 또는 제도 허물기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

하게 현실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에 심각한 위협으로, 문제로 다가오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목도하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바로 오늘 없애려고 하는 이 검찰청, 검사제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무지막지한 험악한 세상으로 몰고 갈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정부의 실패 사례 그리고 또 지금 이 정부가 얼마 전에 만들어 낸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도가 탄생하기 전에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이 노력은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잘못된 검찰제도는 당연히 바꿔야지요.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개선이 아니라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싹 자체를 뽑아서 밟아 버리고 태워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78년 동안 잘 다듬어져 오고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근저(根底) 역할을 해 왔던 검찰제도를 특정인이 미워서, 특정 권력이 미워서, 그분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수많은 국민의 대표자인 동료 여당 그리고 여권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충성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자중해 주십시오. 정말 후회하시고 크게 혼날 일이 머지않아 생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소청법을 처리하는 법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민주당과 여권 일방으로 또 강행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났을 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될 때 그 폐해와 독소적 현상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을 겨누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판을 파괴하고 폭파시키는 무지막지한 법이 될 거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간곡히 막아 달라고, 막아 주셔 달라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현상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통과된 바로 사법 악법 3법의 폐해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넣겠다고 법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으로 억울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것 억울하다, 바로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습니다.

하도 주변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은근슬쩍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4심제 헌법재판소원 대상에 재판을 끼워 넣어서 결국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4심제에 의해서 결국은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권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데도 잘못된 재판,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헌법소원에 의해서 결국은 사법부가 공정하게 내린 판결조차도, 범죄자에 대해서 확정판결이, 유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힘 있는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님들이 결국은 그 죄를 힘 있는

분들 말씀을 듣고 지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힘 있는 자, 그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으로 유죄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대통령 신분도 박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4심제,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는 이 나쁜 법 아닙니까?

이제는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1심, 안 되면 2심, 안 되면 3심, 대법원까지 가고, 거기서도 안 되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일반 서민들은 그저 개 끌려가듯이 끌려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현명한 재판관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공정하게 난 판결도 결국은 마지막 헌법재판소에서 힘 있는 자의 논리에 의해서, 돈 있는 자의 논리에 의해서, 백 있는 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판결이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최종 확정이 되고 결국은 힘 없는 자, 백 없는 자, 돈 없는 자들, 억울하게 내동댕이 쳐지는 그러한 법이 바로 4심제법,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아니었습니까?

그 법안이 그렇게 우리가 탄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목 놓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시행에 들어갔더니 지금 벌써 힘 있는 자들이 신나서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제발 우리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러한 나쁜 짓, 못된 짓, 무도한 짓, 무책임한 짓,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막아 주십시오. 이 잘못된 법들의 탄생을 막아서 대한민국의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제도를 지켜 주십시오.

사법 악법 3법, 우리는 무력하게 바로 이곳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했습니다. 4심제법으로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내몰고 법왜곡죄로 정당한 권력을,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을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강요, 겁박당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여기서 만들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만들겠다고 하지요. '대법관이 배로 늘어나니까 잘됐네, 미뤄졌던 재판 빨라지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은요 정반대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대법관이 12명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유능한, 이미 훈련이 잘된 법관들이 대거 이동을 해서 보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에 1심·2심, 사실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이제는 유능한 법관들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공석이 생기고 부족해져서 결국은 서민들이 맞닥뜨리는 1심·2심이 부실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빠진 만큼 대법관을 12명 늘리듯이 일선 사법부의 법관 숫자를 배로, 3배, 10배로 늘린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은 재원이 한정돼 있고 바로 공직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인원 하나 늘리기도, 조직 하나 늘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바로 국민들의 혈세

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원하는 것 다 해 주고 싶지요. 실제 문재인 정부 때 그랬고 이 정부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위 포퓰리즘이지요. 원하시면 예산 팍팍 풀고 원한다면 조직을 팍팍 만들어서 공직 세계의 환심을 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폐해는 이제는 몇 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 잘못 쓴 돈들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겁니다. 국가조직은 한번 늘려 놓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생 퇴직금으로 또 혈세를 받아 가게 됩니다. 그 조직 쉽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원 하나 늘리고 조직 하나 늘리는 것을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고 14명 있던 것을 12명을 늘려서 12명 전원을 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최고위 법관수를 늘려서 바로 내가 내 직인을 찍어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사법부를 법관 숫자를 늘려서 장악하는 이 황당한 일이 백주대낮에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폐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실 겁니다. 사법부가 장악이 되고 사법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억울한 분들을 위한 판결이 아니고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판결들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지옥, 이것이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이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바로바로 세웠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도 우리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재적 요소에 대해서는 강고하게, 단호하게 들고 일어섰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일어섰지 않습니까? 청년,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온 국민이 합세해서 불의의 세력,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길을 막아내 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화의 역사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민주당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의를 부르짖었습니까? 독재를 막아내겠다, 말로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사법부의 붕괴로, 사법부의 파탄으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은 한가하게 잠이 오십니까? 한가하게 밥이 목에 넘어가십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바로 이 사법 악법에 의해서 다가올 대한민국의 독재화의 길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속이 아파서 잠 못 이루는 국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설마설마 하면서 그 심각성을 이해 못 하는 국민들께서는 그냥 '글쎄, 더 두고 보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벌써 법왜곡죄로 재판정에서 판결 결과에 불만하는 바로 당사자들에 의해서 판사들이 지금 겁박받고 위협받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될 법정이 법왜곡죄에 의해서 이제는 눈치 보기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느 판사가 소신껏 신속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당사자들을 위해서, 권리구제를 위해서 판결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눈치 보기, 그런 판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 내가 법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잘나가기 위해서 바로 위의 권력의 총애를 받는 대법관 또 사법부의 간부들에게 잘 보여서, 권력에 잘 보여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판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독재가 자동으로, 자동장치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독재의 자동장치가 벌써 이 법왜곡죄 하나만으로도 가동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 그것을 아는 판사들은 매우 훌륭한 판사들이요, 이제 잘나갈 판사들이요, 권력이 잘못돼서 준엄한 판결을 하고자 하는 그 판사에게는 참혹한 인사 불이익, 경우에 따라서는 법 왜곡 혐의로 이제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공소청 수사관의 수사를 받아서 결국은 처단될 수 있는 무지막지한 현실이 바로 법왜곡죄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것이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판사 그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판결을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법왜곡죄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법왜곡죄를 적용하는 그 심판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수사 권력이 행정부의 권력으로, 이번 공수처법 탄생으로 검찰로부터 완전 박탈을 해서 바로 행정기관으로 넘겨준 것 아닙니까? 이제는 경찰청에서 그리고 공소청에서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바로 공정하게 진행할 판사들을 향해서 그 칼날이 가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판사뿐입니까? 이제 수사관 본인들도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입니다. '내가 위에 권력의, 힘 있는 자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나는 법왜곡죄로 수사를 받고 처단될 수 있겠구나'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사관을 믿어 달라, 재판관을 믿어 달라고 하지만 힘 있는 자가 겁박하고 있는데, 힘 있는 자가 뒤에서 노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소신 있는 수사를 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조차도 나쁜 제도인 것을 익히 알면서도 여기서 이 나쁜 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누르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뒤에 있는 여러분의 당대표, 여러분의 대통령을 의식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자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22대 국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23대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권한은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여러분들의 행사될 의사결정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무너뜨리는 행위인지를 여러분들은 자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벌써 네 번째 합니다. 저만 네 번째니까 정말 얼마나 그동안에 모든 악법들이 탄생했다는 방증입니까, 이게? 그나마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긴 시간 저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답답함을 호소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는 다행이고 정말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발언권이 수시로 정지가 되고 심지어 퇴장까지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22대 국회의 법사위는 바로 상하 양원제의 상원에 해당되는 조직 아닙니까? 국회 상원에 해당되는, 모든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마지막으로 법사위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담은 것인지, 자구·체계가 엉성하게 잘못된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거르는 그런 장이 법사위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해야 되고 가장 유능한 결정들, 가장 국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지는 마지막 관문이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그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수시로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당 간사조차 선임을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한마디로 22대 입법부의 가장 압축된 입법독재의 민낯, 입법독재의 생생한 그 현장이 법사위 아닙니까? 법사위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방 처리입니다. 안건도, 일정도 모든 것이 직전에 통보됩니다. 직전에 통보됩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안건을 만들고 의사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상의할 간사가 없으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눈 뜨고 도둑질하는 이 무자비하고 무도한 행위가 국회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하고자 하면 바로 토론 정지입니다. 또 심지어 발언권 정지, 심지어 퇴장조치, 벌써 독재가 나타나는 그 징후가 바로 이 국회 한켠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 악법 3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오늘 이렇게 공소청법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에 검찰제도가 사라지고 나면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해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고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한 무고함을 해소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 잘못된 법이 탄생하지 않도록 바로 신성한 국회 구성원들인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잠시 후에 있게 될 표결에서 반드시 이 공소청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학영 송석준 의원님, 방청객들이 오셔서 잠시만 소개해 드리고 또 계속하도록 합시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 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 어르신들께서 송석준 의원실 소개로 이렇게 방청하고 계십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송석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에 저의 지역구 어르신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오신 분들은 아홉 분밖에 안 되지만, 여덟 분인가요? 바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 큰일을 하셨을 거라고 좋은 평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제가 무기력하게 그동안에 무수하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결국은 이 악법들이 바로 다수의 횡포로 통과되기가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법이 이렇게 간절한 토론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다수 여당 그리고 추종하는 여권 정치인들에 의해서 바로 이 신성한 민의의 장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

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나쁜 현장을 지켜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같이 뜻을 함께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는 이 잘못된 결과가 곧 머지 않아 정상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제도의 탄생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한 개인, 힘센 한 사람, 힘센 몇 명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절대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통과된 사법 악법, 바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발아래 두고 사법부를 길들이고자 하는 이 사법 악법, 4심제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이런 것들이 바로 특정인의 죄를 지우고 특정인을 위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대한민국헌법 파괴행위고 삼권분립 파괴행위 아닙니까?

저는 사법 악법에 이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는 바로 오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법 또 바로 이어서 논의될 중수청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 오고 사회질서를 유지해 온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결국은 수사 권력을 행정부 직속으로 다 몰아가고 대통령의 그리고 힘센 여당의 입맛대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권력, 강제수사 권력을 멋대로 행사하겠다는 그 음흉한 속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독재로 가고자 하는 음흉한 민낯, 속셈이 바로 오늘 처리될 이 법들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소청법, 검찰청을 없애서, 검사제도를 없애서 바로 검찰이 갖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관여권, 수사 권한을 모조리 통째로 뽑아서 경찰로 넘겨주고 중수청이라는, 행정부장관 밑에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어서 모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다시 말해서 자판기처럼 중수청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그냥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요구할 권한조차도 안 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엄격한 삼권분립과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아름다운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출범한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진지하게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바로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심판을 했고 뒤집어엎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오기를 거듭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의 제도를 이렇게 뻔뻔하게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책임하고 무도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찢어 버리려는 겁니까?

존경하고픈 여당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조하는 범여권 의원님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시간 지나서 후회하실 일 제발 자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세 분의 의원님들밖에 안 계시지만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여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런 악법 더 이상 만들지 마시고 바로 오늘 잠시 후에 있게 될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표를 던져 주시고 기존에 만들어진 악법들 제발 폐지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사법 악법, 형법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사심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즉각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

법안 발의를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동대표발의 한 번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독재로 몰고가는 잘못된, 헌법을 파괴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악법 폐지에 동료 의원님들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장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 지역구에서 오신, 장호원 그리고 율면 복지관 소속 회원님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뒷골목에 가 보십시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 때 시행했던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건강 망치고 손님이 와도 제대로 손님을 응대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에는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치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기업이 52시간 규제를 없애 달라고 간곡히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 행정 지원, SOC 지원을 넘어서 52시간 규제까지도 같이 철폐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첨단산업들, 연구원들, 기업들이 제대로 된 미래성장동력을 연구개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를 없애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 눈치 보기에 바빠서 그 규제를 슬쩍 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속 빈 강정처럼 됐지 않습니까? 바로 잘못된 규제가 대한민국의 산업을 좀먹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란봉투법, 3월 10일 날 시행을 앞두고 '그것 제발 시행 중지해 달라, 다시 한번 제대로 다듬어 보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하소연하고 국민들과 함께, 경제인들과 함께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여권 여러분들은 강성노조의 눈치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시행되니까 요즘 산업 현장마다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나와라, 경영진 누구, 이사 나와라'……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집중해야 될 기업인들을 갖다가 노동쟁의 대상으로 마구마구 끌어내리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그 칼끝은, 잘못된 노란봉투법의 폐해는 결국 '대통령 당신 나와라', 민노총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관, 너 나와라. 당신들이 협상 당사자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형국까지 오지 않습니까? 잘못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행정부가 어쩌다가 사고 한번 당하게 되면 이제는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제도의 폐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발목 잡을 것입니다. 바로 강성노조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 우리 공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찾아야 될, 제대로 된 경영을 해야 될 현장에 경영 간섭을 하면서 발목 잡고 대

한민국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논의되는 공소청법, 이것이 통과돼서 검찰제도가 없어진다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의 칼끝이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여기저기 권력의 입맛에 맞게 휘둘러지면서 민권,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될 것이고 독재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독재화를 보장해 주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악법을 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야당 의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르짖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강행 처리하고자 합니까?

자중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장관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제발 이 법이 혹시 이 곳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게 통과된다면 반드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꼭 요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에 정성호 장관님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도 반영이 안 돼서 이미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준비는 철저히 하신다고 하지만 노란봉투법 때도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 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만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경제계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게 기업 발목잡기……

(「불법 비상계엄이 경제를 망쳤어요」 하는 의원 있음)

누가요?

(「불법 비상계엄이요」 하는 의원 있음)

불법 비상계엄이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목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지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아름다운 제도, 소위 검찰제도가…… 특정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빌미로 이 모든 검찰제도를 다 없애겠다 또 현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검찰 미우니까 없애겠다, 이렇게 특정인을 보고 78년간 다듬어 온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를 한순간에 짓밟고 한순간에 불태워 버리겠다는 그 구상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바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소의 뿔을 자르겠다고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고픈 야당 의원님들, 제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 여당인데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픈 여당 의원님들, 제발 저의 이 간절한 외침을 국민들의 목소리로 제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잘못된 공소청법의 표결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검찰이 잘못되면 잘못된 환부를 고치면 됩니다.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특정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는 것 이것은

바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초가삼간을 빈대 잡겠다고 하다가 태워 버리는 엄청난 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당의 일부 실세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 공소청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현상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행정 각부에 있는 수사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의 법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재산권, 생명, 기본권을 지켜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행정부의 견제, 특히 강제수사 권력의 견제 권한을 없애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사 권력은 지금도 경찰청, 공수처 그리고 군검사 그다음에 49개 유형의 행정 각부에 특별사법경찰이라는 특사경이라는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행정부의 이런 강제수사 권한을 지휘하고 견제하고 지도하면서 사법부의 판사들과 함께 검사들이 사법의 양대 축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대 축이라고 하는 검사제도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갈라 놓고 찢어 버리고 짓밟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소청법입니다. 검사들의 수사 권한, 수사관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 흩어져 있는 수사 권력들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행정부에 있는 권력들은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이제는 장관들의 지휘를 받고 자기의 직속상관의 지휘를 받고 편파적인, 왜곡된, 조작된, 때로는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힘센 자들을 위해서 수사, 약자들은 무자비하게 방치하고 짓밟는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져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역할을 해 왔던 검찰제도를 오늘 이 공소청법을 제정을 해서 바로 검사들을 수사 권한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너희들은 자판기처럼 기소 여부만, 수사기관에서 준 결과에 대해서 가부 여부만 판단하라는 자판기로 이렇게 내몰고 그야말로 격하시키려는 그 법이 바로 오늘 공소청법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무권유죄 유권무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강제수사 권력의 편파적인, 견제 없는 권력에 의해서 보호될 것이고 약자들, 권력 없는 우리 서민들은 이제는 어떤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해 달라고 애기를 해도 수사 안 합니다. 잘못된 증거가 나오는데도 외면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억울한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이 법이 되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바로 수사관들을 찾아가서 회유하고 구워삶아서 자기들에 유리한 수사를 유도해 낼 수 있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된 수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민들을 내팽개치고 힘 있는 자들과 백 있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을 위한 잘못된 검찰제도 해체 행위 즉각 멈춰야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면서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현장에서…… 또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검찰의 힘 빼기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엄청 혼란이 왔던 것 아닙니까?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놔 보니까 결국은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지고 검찰은 일이 적어지니까 일부 검찰들은 좋대요, 편해서. 그런데 그래도 수사에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은 유지했는데 막상 일을 도맡은 일선의 경찰들은 너무나 수사할 일들이 많은데 수사 인력은 부족해서 얼마나 현실이 힘든지 제가 그 고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검경수사가 잘못됐으니 좀 다시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선 경찰들도 제대로 공정하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검찰들도 나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억울한 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그런 식의 검찰개혁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간곡히 간곡히 주장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무조건 뺏어서 이제는 공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격하시키겠다 바로 그 완성 행위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희생으로 내몰 수 있는 이런 검찰제도 폐지 즉각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3시부터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소청법, 검찰제도를 폐지하는 이 악법의 탄생을 막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묵묵부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우리 하소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양심이 있는 분들은 침묵이라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반박을 합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계시지만 일방적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제기됐던 사안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법안이 강경파를 소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고 어제는 또 막판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걸 끼워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안 처음 마련될 단계에서부터, 특히 이것 제정법안 같은 것은 충분한 국민들 공청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이 쟁점 법안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청법, 이런 법은 상임위에서조차도 전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정해서 올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토론 종결시켜서 그냥 표결로, 다수결의 위압으로 이 잘못된 제

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탄생한 사법 3법 악법이 그랬고 또 노란봉투법이 그랬고 온갖 악법들이……

엊그제는 또 국민투표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법이 겉으로는 제대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선관위의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적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권한까지도 겁박하는 그런 황당한 법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는 또 지금 여권에서는 개헌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자…… 개헌의 명분 뭐 그럴싸합니다. 그렇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최종, 주권자들의 국민의 기본권 그다음에 국가의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국가 제도인데 그것을 우리 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또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독소적 조항은 최대한 빼서 문제없는 것처럼 포장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냐? 바로 개헌의 가도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는 바로 오늘 만들어지는 중수청 등 무소불위의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혹시 차기 권력에 의해서 내 목을 향할지 모르니까 바로 내 권력을 더 영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한 대통령 연임제 같은 개헌을 또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독재의 음흉한 속셈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그동안에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범죄혐의자로 재판받던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문제가 있던 분이기 때문에 더 성찰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진정한 적폐, 진정 잘못된 제도를 고쳐 나가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누적된 잘못된 제도를 없애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본인이 재판정에 서 보고 수사를 받아 봤기 때문에 억울한 자들을 더 챙겨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강성노조에 힘 실어 주기 악법들만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이 그래서, 강성노조들이 기업들을 에워싸고 얽어매고 경제의 숨통을 조여 갑니다.

상법 시리즈, 우리가 상법 원·투·쓰리를 통과시킬 때 이걸 주도한 민주당, 여권에서는 그랬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언필칭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기업들을 소송의 지옥으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여지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 아닙니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이것은 경영진들이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민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것보다는 주주들의 눈치 보기, 그 주주의 중심에는 해외 투기자본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 투기자본들이 이제는 바로 기업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거기다 집중투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자사주 의무소각제도, 기업들은 여러 가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 또 M&A를 위해서 자사주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싹 다 살라 버려서 주가 띄우기에 앞장선 겁니다. 물론 주가를 올리는 데는 3개의 법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경영권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또 이런 투기자본에 의해서 결국은 기업의 미래 가치, 미래 성장동력 만드는 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해진 것이 바로 상법 원·투·쓰리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왔고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중 삼중으로 기업들을 노조에 의해서, 강성노조에 의해서 얽어매고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현실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키워 온, 대한민국의 이렇게 위대한, 부강한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낸 것이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노동자들의 희생정신 서로 그것이 조화돼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제도 보완은 해야지요. 노동권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지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그 노동자들, 강성노조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여 주고 지금 또 이렇게 공소청법, 폐지를 통해서 특정 권력에게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줘서 독재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기업가들을 억압하고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소를 키우고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맞습니다. 파이팅, 송석준!」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경영학을 하시고 언론인 출신이신 신동욱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법사위에서 신동욱 위원이 옆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의 현실을 누구보다 직시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 동료 위원으로서 같이 힘을 보태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님, 힘내시고 더 강력히 싸우셔서……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우리 당의 핵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분은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 이 공소청법의 탄생이 다가오는 무서운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오늘 저의 이런 간절한 외침을, '쟤네들 또 그냥 형식적으로 필리버스터 24시간 이렇게 시간 때우는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에 스며 있는 대한민국의 무서운 현실에 대한 예고, 경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이 공소청법 탄생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검찰제도가 사라지고 이제는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들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특정 권력을 비호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 권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독재화로 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감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어느새 다 사라지시고 한 분만 계시는데 꼭 저의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악법, 대한민국을 독재로 몰고 갈 수 있는, 소위 견제되지 않는 수사 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료 의원님, 제발 잠시 후에 있을 표결에 반대표를 던져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검찰의 역사를, 78년의 역사를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표현하는 의원님은 처음 봤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정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찰의 78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78년이었나요?

(「저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 78년의 역사가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지금 표면으로 나타난 검찰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제도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로 다듬어져 온 전체의 일부로서의 검찰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는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검찰의 일부 문제는 있었지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견제 장치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고 또 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어땠습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 주기, 국회 법사위장에 불러내서 청문회로 괴롭히고 국감장에서 괴롭히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검사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수사했던, 민주당 관련자들을 수사했던 바로 그 검사들입니다.

그러면 왜 더 문제 많은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오로지 자기들을 수사했던 검사들만 공격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잘못되고 왜곡되고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말이 근거가 없다는 걸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 3명을, 중앙지검장서부터 핵심 3대 검사를 동시에 탄핵을 시킨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무도한 짓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원장을 바로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 여당이 탄핵을 했습니다. 결국은 비교적 이 정부에 친화적인 인사들이 많이 포진한 헌법재판소에서 다 이의 없다, 기각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모하고 무책임한 탄핵을 바로 검찰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검찰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바로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가결시킨, 탄핵 가결된 그 검사들이 아무 이유 없고 잘못이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된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면서도 바로 78년 검찰이 잘못됐다, 78년 검찰이 독재의 도구로 쓰였다?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궤변이십니다.

바로 검찰이야말로 이재명, 힘 센 권력자를 향해서도 굽힘 없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재판정에 세웠던 그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검사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고 왜 이렇게 처벌하려고 법왜곡죄를 만들고 법관을 증원하고 그래서 왜곡된 판결을 유도하려고,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고 합니까? 왜 사법부를 발아래에 두려고 합니까?

곧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러지요? 왜곡수사, 왜곡기소, 조작수사, 조작기소, 나를 향하면, 힘 있는 나를 괴롭히면 왜곡이고 조작입니까?

제발 왜곡하지 마시고 조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국정조사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악법들을 탄생하게 된 그 과정, 누가 사주했고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 바로 입법, 우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 특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부터 1차 특검, 2차 특검, 3차,

소위 내란 비상계엄 특검을 1차, 2차, 3차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고 특검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권력의 독재화를 추구하는 그 음흉한 행위에 대한 특검이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는 거의 완성돼 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화를 위한 가도 만들기, 사법악법,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사법악법 탄생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곧 탄생하고자 하는 공소청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검찰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독재화하고자 하는 그 민낯, 늑대의 민낯을 갖고 있는 양두구육의 그 속셈을 저는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현명한 판단과 그 통찰력으로 바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탈을 쓰고 독재화로 가는 이 저의와 그 속셈, 바로 늑대의 속셈, 늑대의 저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고,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제어해 주시고 응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저의 길지 않은 필리버스터, 바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원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최형두)

(10시33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최형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다시 AI 디지털 도시로 도약하려는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봄이 왔건만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야 될 광복 81주년에, 이 적토마의 봄에 대도약을 꿈꿔야 되는데 우리는 근대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기둥을 허물고, 더욱이 그 엄정해야 될 법 집행에 기초와 질서를 허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우리 정치가 얼마나 처참하고 길을 잃었는지 절감했습니다.

알파고의 아버지,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가 서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은 그 유레카의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알파고 대 이세돌 대국에서 미국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고수 이세돌을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 국회의사당에서 또 장외에서 정치싸움에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와 장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양 최고의 지성과 전략이 집약된 바로 그 전략게임이 미국의 인공지능에게 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사건이 대문명사 전환의 첫 시발탄,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했던 유레카의 순간이라는 것을 중국의 지도자와 장군들은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운이 달려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미국은 AI 문명 전환기 그 주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치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우고 그해 가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난해 비상계엄과 그 끔찍한 헌정파괴의 순간이 이 의사당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일으키고 서방에, 전 세계에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정치를 복원시켜야 했지만 그러나 정치는 더욱 갈라졌고 더욱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제 정당 간의 분열이 아니라 거대 정당, 거대 여당에서 한 정치부족이 정부 여당 전체를 지배하는 끔찍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공지능(AI), 그 문명의 대전환기, 유레카의 순간을 목전에서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문명국가들의 법집행·반부패·수사 시스템의 표준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루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해 주고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파사현정의 골조를 우리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60주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 대한민국 경제 번영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당시 대통령은 식민지 원수였던 일본과 재수교를 추진했고 그때 야당의 지도자 고 김대중 대통령은 유일하게 그 한일협정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것임을 찬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동의 위기에 우리는 동맹국으로부터 새로운 의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6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기 위해서, 6·25 남침 전쟁을 막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 그 동맹의 약속, 그 동맹의 대가를 위해서 당시에도 우리는 지정학적·전략적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남십자성 아래에서 목숨을 잃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건설, 우리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피를 흘리고 또 멀리 독일에서, 그 깊은 지하 막장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 가며 외화를 벌고 간호사들이 독일의 병자들을 보살피며 외화를 벌던 그 비극을 되

풀이하지 말자고 과학기술 입국의 꿈을 세웠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에게 우리도 미국처럼 과학 국가가 될 수 있는 과학기술연구소를 하나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후진국의 지도자가 무슨 다른 요구 조건이 아니라 과학기술 입국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소를 지어 달라……',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홍릉에, 하늘도 그 땅을 예비해 두었는지 그 산의 이름이 천장산이었습니다, 천장산. 하늘이 감추어 주었던 땅 천장산 아래, 바로 그 홍릉에 KIST를 세웠습니다. 미국 바텔이 설계했고 미국 공병대가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KIST에는 존슨 기념강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KIST에, 당시에 국민소득도 얼마 되지 않고 한국에 오면 과학기술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선진국에서 공부해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과학자들이 가난한 대한민국, 내 고국을 살려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미국에 있었으면 더 잘살 가족들의 아쉬움과 또 미국의 연구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홍릉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과학기술 국가의, 기술 대국의 반도체와 통신과 소재와 로봇까지, 자동차, 철강, 모든 기초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일협정을 둘러싸고 그렇게 치열하게 반대하고 학생들 데모도 많고 그랬지만 야당의 위대한 지도자는 국가의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방식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글로벌 지정학 체스 게임에서, 그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서 대한민국을 친서방, 자유민주공화국, 시장경제 국가로 수많은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또 백범은 이 나라가 위대한 문화 대국이 될 것이라고 꿈꿨습니다. 그런 나라를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분열되었고 근대 민주주의의 기둥이자 삼권분립의 기둥이자 엄정한 법 집행 또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부패 수사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빌런들의, 악한들의 범죄로부터 힘없는 여성, 약자 또 정말 법밖에 모르는 시민들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형사사법 집행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길을 잡아야 됩니다.

마침 오늘부터는, 이 필리버스터에 오늘 새벽부터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이것조차도 여당은, 그 다수 여당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연단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마음대로 표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24시간조차도 야당에게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뺏어서 수차례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수결로 밀어붙였던 그 사안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수 야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국민들과 여당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그 순간마저도 반쪽을 내고 심지어는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부터 우리 여당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으신 것을 조금 긍정적 신호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양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이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문명사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 우리 공화주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경제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우리 약자들의,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울타리, 국가의 사법체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교각살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저는 여러 근거자료와 함께 또 각국의 검찰제도와 함께 또 그동안 우리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광복 81주년입니다. 미국은 독립 250주년이라고 합니다. 지난 연초에 국회의 대표단으로서 라스베이거스 CES에 갔더니 미국은 독립 250주년 미국을 어떻게 다시 위대한 나라로, 위대한 공화국으로,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로, 위대한 과학기술 대국으로 만들 것인가 새로운 플랜이 넘쳐 있었습니다.

지난해 광복 80주년, 그 80주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광복 100주년을 향해서 이미 5분의 4가 지났고 그 남은 5분의 1, 20년 동안 광복 100주년 더 큰 대한민국, 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더 훌륭하고 더 꼼꼼하게 국민을 살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꿈꾸는 시기여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분열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 광복 81주년의 우리는 지금 이 공소청법·중수청법 같은 우리 사법체계, 우리 법집행체계, 파사현정의 기분을 허물고 우리 약자의 울타리를 오히려 부술 수 있는 이런 법체계를 추진을 멈추고 광복 100주년의 나라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반성했으면 합니다.

정치는 우리 유레카의 순간, AI 인공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을 놓쳤던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여야 정당 간에 협치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도 여야 정당 간 협치로 함께 이뤘습니다. 지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여야가 함께 막았습니다.

지금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그 무렵에 눈을 감고서 오로지 하나의 푯대만 세워서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해제를 신속 해제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저도 마침 그날 마산에 상가를 다녀오면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 여당의 의원님, 야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담장을 넘어 들어와서 그 표결을 뒤늦게 살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30여 명도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들어오지 못해서 50여 명이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을 하는 순간 다 같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결의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자 새벽 3시에 당사에 모여 있던 우리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계엄 해제를 빨리 집행하라고 호소하고 독촉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민

주주의를 함께 복원할 수 있는 힘과 협치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치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여당 사정도 걱정입니다. 특히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여당 간 또 여당 내에서 일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대통령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법무부장관까지, 정성호 장관 나와 계십니다만 우려하게 만든 이런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정당체계마저도 악화된 것 아닌가. 그나마 그전의 정당은 정당 내부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또 토론을 거쳐서, 의원총회와 최고위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강경한 정치 부족, 물론 우리 야당 내에도 그런 정치 부족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힘이 센데 그 힘센 집권 여당 내에서 더 강력한 정치 부족이 지금 당을 지배하고 당정을 이끌고 당정을 흔드는 그런 위험한 정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숙고하고 우리가 과학기술로 그리고 새로운 규제 완화와 새로운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의 인물, 혁신의 경제를 이야기한 슘페터가 슘페터의 역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선거를 하고 선거에 목숨을 걸고 지금처럼 정치적 부족으로 쪼개진 이런 나라에서 혁신을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마침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새벽부터 온전히 야당 의원들에게만 필리버스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점을 매우 좋은 전조로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마시고 조금 아껴 두시고 절제와 관용과 균형으로서 이 나라를 함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슘페터의 역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공화정으로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슘페터의 역설도 허물고 슘페터의 혁신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이끄는 등대국가, 라이트하우스 스테이트(Lighthouse State)가 되었다. 등대가 되었다. 그리고 GPS, 글로벌 피벗(Global Pivot) 국가가 되었다. 이런 역사를 한번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검찰에서 검찰제도가 무엇인지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경험한 바 있고 또 기자로서도 법조기자를 가장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들은 풍월도 있고 또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그 나라의 법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처럼 우리 여당의 의원님들이 10시간씩, 12시간씩 이 필리버스터를 쪼개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원래 이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성토론하는 이런 엉뚱한 전통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세계 민주주의 전당의 표본이 될 만한 이곳에서 만들었다는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제 필리버스터가 야당이,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다수당의 강경한 질주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하고 국민들에게도 왜 이런 것인지 그래서 24시간 동안이라도 다시 한번 숙고해 주는 그런 시간을 허용했다는 것을 저는 하나의 큰 변화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그런 계기를 발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또 선배·동료 의원들이 과연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 법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대통령도 걱정하고 정성호 장관도 걱정하고 수많은 법조인들이 걱정하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눈엣가시 같은 몇 가지 사건에 얽매여서 그 작은 가시인데 그게 대들보인 줄 알고 그것을 뽑아내려다가 우리 초가삼간을 허물어야겠느냐, 빈대 잡으려다가 집을 태워야겠느냐, 못된 송아지 뿔 고치려다가 소를 잡아야겠느냐, 이런 반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어제가 아닙니다. 지난 주말이 3월 15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유혈 항거의 도시 마산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3·15 묘지에 왔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참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큰 진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여러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법안 혹시 우리가 필리버스터에서 간곡하게 여당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법은 재의결로 보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국립3·15 묘지에 와서 민주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초당파적으로 호소하셨던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3·15를 이야기하느냐?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핵심 요지는 근대 우리 사법 집행체계의 근간,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제도를 없애고, 드디어 '검찰'이라는 이름도 없어집니다. 이제 경찰이 모든 수사와 이런 형법 집행의 중심이 되는 데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느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놓았느냐?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제가 딱딱해서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준비된 장표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루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서, 레미제라블 그 영화 다 아시지요? 왼쪽은 자베르 경감입니다, 경찰이지요. 오른쪽은 그 유명한 장발장입니다.

이 레미제라블 시대에는 검찰이 없었습니다. 경찰과 법원이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굶주림 때문에 빵조각 하나 훔친 죄로 엄청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만일 검찰제도가 있었다면 조금 더 살폈을 것입니다.

자베르 경감은 검사의 수사보완 지시라든가 검사와의 법률적 적용 협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베르 경감은 스스로의 강력한 정의감 하나로 저 빵을 훔쳐서 10여 년간 감옥 생활 하다가 이제 나와서 그러다가 또다시 해서 성당에서 은식기를 훔친, 그러나 그 신부님이 그거 내가 줬노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이게 검찰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역사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과 유럽 시민혁명의 산물이었습니다. 경찰과 법원만으로는 인권도 보호가 안 되고 공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근대 민주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제도가 국내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특히 정치권들이 언제나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이 야당일 때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비판합니다. 여당은 왜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느냐, 우리가 여당인데 왜 이것 아직까지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느냐, 끝없이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제도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15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레미제라블까지 올라간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자 차진아 교수를 불러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핵심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등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 그리고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이 폐지된 검찰청에 비해 그 기능이 약화되고 여러 역기능이 커진다면 검찰청 폐지 자체의 정당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진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더 눈여겨봤던 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역할을 못 했던 우리 현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1공화국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의 측근으로서 검찰 이상의 권한 오남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이기붕은 경찰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지휘했습니다. 올해 66주년 3·15 기념식에 앞서서 3월 14일 토요일에는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경찰청 청장이 영령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6년 전 3월 15일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 광복 15년 만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12년 만에 저질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악랄하고 치밀한 조직적 범죄 선거에서 마산 시민·학생들이 당일—그 당시 인구는 10만 명도 안 됐을 겁니다—수만 명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큰 대도시에서는 그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산의 아들로서 왜 마산 사람들만 유독 그 시기에 그렇게 많이 나갔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산 시민·학생들에게 경찰이 총탄을 발포했습니다. 이기붕이 그랬다 그랬는지 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기붕이 했다는 말 같은데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 했답니다. 그래서 발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때 다녔던 무학초등학교 담벼락에는 총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그 총탄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에만 지금 확인된 열사들만 열 분이 경찰의 총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66년이 지나서 경상남도경찰청장이 우리 3·15 영령들에게 사과하고 참회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이제 세계적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청·중수청 이런…… 우리 경찰의 새로운 혁신, 경찰의 새로운 품격 이런 걸 믿기 때문에 이 법으로 해서 우리 사법 질서나 형 집행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특히나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법률적 판단과 법 집행의 효율성을 망가뜨리는 이것은 새롭게 태어나고 3·15 영령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경찰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걱정합니다.

그때 그 경찰에게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라고 지시했던 사람 이기붕—당시 내무부장관—내무부장관은 총살당했습니다, 4·19의 법정에서. 이기붕은 비극적 최후를 스스로 선택

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엄청난 권한 오남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국 역사를 살펴보면 검찰이 그렇게 우리 민주주의를 훼방하고 방해하고 그랬습니까? 검찰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공화국 때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족이었습니다. 이기붕과 그 수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시민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이 그 총탄으로 3월 15일 그리고 3월 15일 이후에 세상을 떠나고 비로소 민주주의재단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1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3공화국 이후는 누가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중앙정보부였지요.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 5공 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혁해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이제 국가정보원, 우리가 개혁을 해서 그런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우리 공화국의 폐해가 적었던 검찰을 아예 뿌리째 뽑아서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위반되는 일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중진이시자 참 점잖키로 유명한 정성호 장관까지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당의 어떤 합리적 결정, 포괄 정당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특히 정부 여당의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부족주의로 똘똘 뭉쳐서 강경파들이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개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애 버렸습니다. 문명국가의 표준입니다.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의 표준이 검찰제도입니다. 장발장 시대에는 없었던 제도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왜 세계가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장발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중앙정보부, 경찰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혁할 때는 그걸 없애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지켜야 되고 시민들을 보살펴야 되니까 그걸 개혁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경찰에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가고 또 경찰의 처우도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찰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가장 수준 높은 우리의 민중의 지팡이이자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3·15 때는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 경찰 파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데 해당될 겁니다. 민중에 대한 몽둥이이자 시민을 총탄으로 쏘던 조직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국가기구를 우리가 개혁해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도 국가정보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에게는 글로벌 지정학의 이 위기에서 최고의 정보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 주고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조리 없애서 최소한의 사법, 법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 장치도 다 허물어 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경찰을 개혁했듯이, 중앙정보부를 개혁했듯이,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혁했듯이 그렇게 개혁하면 됩니다. 검경 수사 분리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임에도 당시에 거대 야당 민주당의 목소리 또 진보적인 법조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특별한 사건, 정말 검

찰이 꼭 관여해야 될 사건만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방식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당시 우리 당 내에서 다른 지지자들도 반발이 심했습니다만 용감하게 선택해서 여야 협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이런 편파적인 수사, 법 집행으로 옥중에 계십니다. 똑같은 사건의 당사자는 지금 아무런 수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중에 가 계신 분은 검찰 수사로 옥중에 가 계셨고 지금 아직도 옥중에 안 가 계신 똑같은 사건의 다른 분은 여당 의원이신데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측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지금 옥중에 있는 우리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소수당으로서 한계도 느꼈지만 그러나 당신이 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당했던 그런 사건들도 기록해서, 진보적 시민사회의 여론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검경 수사 분리를 굉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허물고 또 지금 그렇게 했던 분은 옥중에 계시고……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경찰을 다시 제1공화국 수준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시에도 내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총지휘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파쇼란 말이 몽둥이 다발을 파쇼라고 그럽니다. 그걸 경찰 파쇼라고 합니다. 경찰 파쇼 시대로 도로 돌아갈 것이냐.

지금 이 법도, 우리가 공소청법·중수청법에 걱정하는 것이 행안부장관 물론 저는 우리 행안부장관님 윤 장관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과거 1공화국 때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돌아갔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때 총탄을 발사하게 했던 그 내무부장관을 4·19의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법정은 총살형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총살형을 두려워했던 이기붕은 왜 비극적 선택을 온 가족과 함께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3·15 의거 66주년, 부정선거를 총으로 진압하고 총탄으로 진압하고 몽둥이로 진압하려고 했던 그 경찰 파쇼 국가가 가능했던 자칫하면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개혁을 완성하자, 이 법은 멈추자. 마침 오늘 필리버스터도 더 이상 야당의 시간을 잠식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한 이 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자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3·15 의거 국립묘지에 와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도 저는 여러 순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 모든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우리 당 지도부는 그것이 헌정 질서의 지속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공소 취소를 하고 우리 사법 독립을 허무는, 삼권분립을 허무는 무지막지한 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공화국의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면 대통령 임기 이후에 그 분노한 민심의 파도는 어떻게 막으시려고 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간곡하게…… 대통령께서 이 다수 여당 내에 강력한 강경한 정치적 부족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국회에 한 번 더 재의결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당파와 정치적 부족으로 쪼개진 이 분열의 공화국을 통합의 공화국으로 만들면서 AI G3 국가로, 세계에 우뚝 솟는 국가로, 퇴임할 때 대통령이 국민의 박수를 받는 국가로 만드는 자랑스러운 공화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라고 간곡히 호소했는데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들어 주십시오. 3·15 국

립묘지에 오신 대통령께 마산의 아들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1공화국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3·15 국립묘지에 묻히신 그 열사들이 바로 당시에…… 지금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따르면 모든 수사와 형벌 체계의 기초를 경찰이 지게 되고 그 경찰을 행안부장관이 지게 되고 행안부장관 위에 대통령이 있고, 이기붕 위에 이기붕이 있고 이기붕 아래 최인규가 있고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몽둥이로 때려잡고 총탄으로 죽이게 했던 그 지휘체계가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것, 그 당시에 만일 정성호 장관 같은 법무부장관이 계셔서 법무부장관이 그 지휘계통을 막을 수 있었다면 그런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교훈도 살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3·15 영령들 앞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생각하셨다면 이 법도 멈춰 주십시오. 이 법을 우선 여당 의원님들이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그리고 만약 이 강경한 정치적 부족주의에 의해서, 정치적 부족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지금 여당의 실태를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면 대통령께서 재의결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3·15 영령들도…… 제1공화국 당시의 사법체계, 법집행체계, 정부의 지휘체계가 만든 것이 바로 3·15 때 경찰의 발포였다는 사실을 한번 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역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공소청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를 만일 강제로 중단시킨다면, 저는 혹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않고 좀 더 숙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지 않으면 48시간이라도 할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체력이 버티는 한 할 테니까 48시간이 걸리든 72시간이 걸리든 필리버스터 멈추지 마시고 다시 숙고하셔서 이 법안을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본회의 연단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 아니라 제가 육체적 한계 때문에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호소하고 또 호소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하지 마시고 더욱더 이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미제라블 장발장 또 1공화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대 검찰, 사법제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겪을 것인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공소청 설치 법안, 만일 오늘 오후에 예정대로 강행하신다면 통과되겠지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오후에 올리시겠지요. 국회를 장악했으니 다 통과되겠지요.

검찰을 일본에서도 검찰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도 한자로는 검찰이라 그러지요. 이것 대정부질문은 아닙니다만 정성호 장관님, 검찰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동아시아권은 다 그렇게 쓰고 있지요? 하기야 중국은 우리랑 체제가 다르니까. 일본 검찰이 거긴 주로 대륙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전통 법체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선진적인 법제를 도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이 아니더라도 영어로는 프로시큐션(prosecution)이라고 해서 프로시큐터(prosecutor)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게 근대 사법의, 근대 법집행의 기본체계이자 표준입니다.

세계적 문명국가, BTS의 나라, 오스카상과 모든 세계적 문화 대상을 휩쓴 문화대국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이라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권한은 공소청으로 이관되겠지요.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8년만입니다. 이것은 단지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검찰청에 가서 호소할 길도 없고 경찰이 뭘 해 주지 않으면 검찰에 가서 '검사님, 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세요'라고 호소할 곳이 사라집니다. 물론 한 켠에서는 검찰이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검찰에 탄원도 하고 경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검찰이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10월 가을이 되고 법집행이 되면 국민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청회 한 번 하셨습니까? 군사작전 하듯이 법사위에서, 제가 아까 언급한 강경한 정치적 부족, 그룹 몇 사람들이 밀어붙인 겁니다.

수사기관 간 혼선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부패·경제 사건 같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곳저곳에서 동시에 쑤셔 대는 너무 지나친 법집행에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수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견제가 아닙니다. 이건 혼선이 되겠지요.

쪼개기 수사, 사건이라는 것이 큰 맥락이 있는데 쪼개기 수사도 하고 또 힘들고 귀찮은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이런 떠넘기기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도 그렇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나눠 가지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검찰제도를 두었느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다 하고 합니다만 특별히 또 여기의 문제는 경찰과 다른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생·노동 대단히 광범한 분야에, 그냥 공무원인데 이분들이 그 특별한 법 분야에서만 특별사법경찰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법률의 동일한 잣대, 법률의 엄밀한 해석을 통해서 법집행을 정확하게 해 줄 그런 기준대가 되었던 것이 검찰이었습니다. 그것을 통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기관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검찰이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서는 정부가 이 강력한 정부 여당 내 강경파들에게 밀리면서도 끝까지 살리려고 했던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부당수사를 한 경찰에 대한 수사정지 요청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경찰이 모든 걸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은 이리 될 경우에…… 중요한 사건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국민들의 피해가 끝나지 않았고 범죄자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유착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찰·검찰을 둔 것은 신속한 범죄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또 인권 기준을 통해서 악의 근원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이런 제도를 엄밀하게 만들려는 견제와 절제와 균형과 통일성의 기준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서 많은 혼란이 생길 겁니다.

경찰도 어떤 경찰이……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검경 수사 분리 이후에 경찰에 수사가 몰려서 경찰 조사과가 기피 부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어느 단계에서 빨리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좀 마무리해 주고 검찰이 수사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많은 수사를 못 하게 됨으로써 수사 기

능도 저하되고 심지어 기소 사건 자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기구인 OECD는 이런 논란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부패수사 총역량이 감소된 것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그동안 조금씩 낮아져 왔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국격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그것도 통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걸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업무가 없어집니다.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다 없앤 것입니다. 어떤 국민 피해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지켜봐야겠습니까?

그리고 세무·환경·노동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휘라는 말이 거슬리면 동일 수사 기준 협의 뭐 이렇게 바꾸었으면 거슬리지 않았을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수사지휘라는 말이 거슬렸는지 동일한 수사 기준…… 그리고 정부가 입법할 당시, 시행령을 만들 당시의 엄밀한 기준이 뭐였는지를 해석해 주고 특별사법경찰관의 법집행을 도와줄 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됐을 때 특별사법경찰을 수없이 많이 두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검찰과 그걸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 버렸습니다.

지금 특별사법경찰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이 경력 1년 미만입니다. 검사도 초임 검사가 서툴고 또 경찰도 처음 임용되면 의무감, 사명감은 넘치지만 아직 사건에 대한 분별력 같은 게 떨어져서 어떤 때는 과도하게 나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경험의 차이인데 그 경험의 불일치를 통일시켜서 이 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된 취지를 정부가 똑같은 기준으로 정말 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는……

예컨대 같은 사건인데도 A지역, A시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는데, B시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은 그 사안이 엄청난 것인 양 막 잡아넣어서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사법상의 혼란과 낭비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장치가 검찰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없애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특사경이 참 고달픕니다. 고달픈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에서는 좀 기피 보직이라고 합니다. 인사이동도 잦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사명감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경험을 축적할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법과 시행령이 명한 기준대로 법집행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세무·환경·노동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갈 때 내가 금방 부서 이동을 해 가지고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세무·환경·노동 등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은 이미 법을 피해 가기 위한 온갖 노련한 방법으로 그것을 방어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저항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검찰이 그 사건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 사건은 과거에 A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났습니다, 이걸 안내해 주는 사람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수사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해야 될 세무·환경·노동 집행이 들쑥날쑥, 어떤 때는 오남용도 생기고 어떤 곳은 해야 되는데 너무 저항이 거세고 또 변호사를 부른다 그러니까 겁도 나고 해서 덮어 버리고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자문 이런 것을 좀 살려 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에서는 사라졌습니다.

특사경들이 사명감으로 현장에 나갔는데 저항도 거세고 그리고 변호사를 부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주눅이 들거나 법집행의 엄밀함에 대해서 자신이 사라져서…… 예컨대 검찰에서 그건 확보된 증거가 이러이런 것이니까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그건 과거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면 당당하게 그 당사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할 텐데 막 달려들고 하면 특사경이 무슨 배짱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미필적고의까지 겹치면 고의를 눈감아 주는 경우까지 생기겠지요. 또 어떤 경우는 사명감이 넘쳐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 범죄영화에서 보고 특사경이 일반 경찰 같은 건 줄 알고 법집행을 하려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특사경은 자기가 담당하는 법률만 갖고 하는 것인데 경찰이라는 이름이 잘못 혼동이 돼 가지고 인권 침해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의 지휘를 누가 합니까? 정치인인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합니다. 이분들이 수사지휘를 해요. 그러면 A 정당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요식업체가 B 정당의 정치인을 주로 후원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면 특사경이 가서 그곳 뒤지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만약에 있다면 무슨 기준으로 B 요식업체에 가서 단속하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고 그걸 소명해야 되니까 지자체장이 자기의 정적이나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이나 누구 손보려고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악용을 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아까 제가 3·15 때 내무부장관 총살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장관이 내무부장관 아닙니까? 중수청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이거는 꼭 한번,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 다 감안해서 제발 재의결을 요청해 달라고, 이것도 이 문제입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검찰청 제도는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개입 문제가 끝없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문제가 정치에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런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난 정부 때는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찰청을, 왜냐하면 검경 수사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일선 경찰들에 대한 인사 같은 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려는 그런 것을 했더니 그건 치안본부로 분리된 독립기관에 대한 침해라고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을 관장하는데 그건 당연하고 당시에는 경찰국도 못 하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중수청을 좌지우지하게 만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헌정사상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장관이 수사에 언제든지 개입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겁니다.

1960년 대통령선거는 안타깝게도 야당의 후보였던 장면 후보가 미국에서 병원 입원 중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면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후보는 당시 이승만 후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건 투표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무투표로 당선됐을 텐데 당시에 부통령이라는 제도가 있는 바람에 이기붕이 부통령 되려고, 그때는 이승만 박사는 노령이어서 뒷전에 있고 이기붕이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옛날에 야인시대니 보면 생생한 현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붕이 대통령 되려고 경찰을 총동원해 가지고 빚어졌던 게 3·15 부정선거고 3·15 그때 우리 마산시민들을 총으로써 사살한 악행의 기록입니다. 그 제도적인 것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공화국 때 경찰의 잘못은 당시 내무부장관을 총살시키고 그 내무부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하게 된 이기붕과 그 일당들이 스스로 비극적 최후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또 꾸준히 경찰의 처우 개선, 경찰에 대한 대우—경찰에 우수한 인재들이 예전에도 많았습니다만—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적 경찰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터폴 총재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인터폴 총재,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 경찰의 수장도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경찰기구가 개혁을 통해서, 3·15 때 마산시민을 총으로 쏴 죽였던 그 악행의 경찰기구가 개혁되어서 세계적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폴 총재까지 나왔던 겁니다. 인터폴 총재가 누구냐 하면 우리 국민의힘의 김종양 의원이십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경찰을 인터폴 총재로 전 세계에서 지지했던 겁니다. 왜? 믿을 수 있는 나라니까요.

당시에 러시아가 인터폴 총재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럽 차례라고 압력을 막 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럽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 될 경우에 인터폴의 적색수배제도를 통해서 푸틴이 자기의 정적을 전 세계에서 수배하는 데 인터폴을 악용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 쪽 인물은 처음부터 제척되었습니다. 김종양 의원이 당시에 아시아 담당 부총재였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우리 경찰의 수준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총재가 되었던 것이겠지요. 경찰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구에서 부총재를 하던 김종양 당시 부총재가 바로 그런 국제적인 기대와 여망을 듣고 인터폴 총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 경찰이 그만큼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권한의 집중은 남용을 부르고 또 독선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근대 민주주의가 그래서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을 만들게 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검찰을 두고 또 일부 부분은 공수처를 두고 이렇게 한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이 한껏 올라와 있는데 선진 제국에는, 선진국가에는 없는 엄청난 권한과 또 선진국가에서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는 지휘계통을 부여해서 경찰을 다시 후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인터폴 총재 국가의 경찰 나라에서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합니까? 1공화국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휘계통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은 그래도 훈련받고 교육받고 시민의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법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도 없고 또 기준도 잘 모르는 수많은 전국의 특사경은 도대체 어떤 법적 기준과 통

일성으로 완강하게 저항하는 특별사법경찰 단속 대상들에게 적법한 통일된 그런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멈춰 주셔야 됩니다.

자, 검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레미제라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우리 검찰이 권력에 약한 건 사실이었지만 또 권력에 저항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조부 기자를 출입할 때 보면 우리 검찰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금과옥조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사악함을 깨부수고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이런 신념이 없으면 검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굴신도 하고 권력의 외압에 굴종도 하고 출세를 위해서 엉뚱한 충성도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검찰을 지키는 정신은 파사현정이었고.

그리고 의회내각제 때문에 우리보다 정치인의 입김이 훨씬 센 일본에서 정치개혁을 가져왔던 다나카 록히드 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동경지검 특수부가 우리 검찰 특수수사의 하나의 전범처럼 회자되고 항상 강골로서 권력에 굴신하지 않고 정말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특수수사를 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수사가 아니고도 대한민국 인권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박종철 사건 때였습니다.

박종철 군은 저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지만 부산 출신으로 얼마 전 OECD 대사로 내정된 백태웅 교수의 후배이자 제 대학 과 친구였던 박종운의 후배이자 서클 후배였습니다. 백태웅과 박종운을 찾으려고, 당시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해서 희대의 반민주적인 전두환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기대에 따라서 공부에 매진할 것이냐를 고민하던 박종철의 하숙집을 덮쳤습니다. 당시에 공안 경찰이었습니다. 데려가서 물고문을 시작했습니다.

70년대는 더 가혹했을 테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혹시라도 학생운동 언저리에서 조금 계셨던 분이라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분실에서 20일 동안 밀실수사를 받아 봤습니다. 박종철 군이 물고문 치사로 세상을 떠난 직후고 당시에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물고문의 위협은 받았지만 그 밀실에서 욕조에 물을 채워 넣고 너도 곧 물에 담그겠다는 위협은 밤낮 잠도 안 재우고 20일 동안 받았지만 경찰들이 마지막에 실행은 못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괴롭혔지요.

그런데 박종철 군은 그 선배들, 백태웅·박종운의 소재를 대라고…… 아마도 박종철 군이 2학년이고 저학년이기 때문에 잠시 서클에 몸 담았었지만 당시에 학생운동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들이 편하게 잠깐 은신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후배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 박사과정 공부를 포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있는데 그때 시기에 박종철 군의 저 사건을 그 엄청난 시대, 전두환 시대 역시도 경찰 시대였습니다. 전경환이라는 사람은 경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전경환 커넥션, 전경환이면 다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안전기획부도 뒤에서 가끔 나타나서 혼내고 보안사도 서슬이 퍼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사건도 숨겨질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언론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검사였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가, 지금은 검찰청 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침이 되면 기자들이 주요 검사실 순회를 합니다, 마치 의사들 왕진해서 순회하듯이. 그래서 일부러 취재를 하기 위해서 떠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검사가 취재하라는 암시를 줍니다. '요즘 경찰 큰일 났어, 학생 하나가 죽었다는데' 이걸 들은 신성호 기자는 다른 검사실로 갑니다. 다른 검사에게 '학생이 하나 죽었다며, 경찰의 밀실수사 때문에?' 이렇게 떠봅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그렇다네 큰일이지' 바로 물어봅니다. '서울대학이지?' 떠보았습니다. '그래, 서울대학교의 인문대학이었다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 출입하던 중앙일보 기자가 급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다니는 저학년 중에 최근에 소재가 없는 친구를 찾습니다.

검찰이 그나마 열려 있던 언론의 통로를 통해서 경찰의 가혹수사를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박종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 간부들은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냅니다. 그래서 경찰을 기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연사처럼. 적법한 수사절차 과정에서 돌연사처럼……

그런데 이 사건을 이어받은 동아일보 기자들이 김충근 기자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제 목숨도 김충근 기자가 살려 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김충근·황열헌 이런 용감한 기자들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1보는 똑같은 석간신문인데 동아일보가 중앙일보에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취재를 확장합니다. 죽었으면 거기가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어? 그러면 변사가 나면 그걸 진단하는 의사는 어디지? 찾습니다. 그래서 남영동 분실 가까운 중대 부속병원. 그 당시 당직 의사를 찾습니다. 그게 당시 부검의, 아마 내 기억으로는 황적준 선생이셨나. 황적준 박사.

이 박사도 당시에 경찰이 입 다물라라는 엄청난 외압을 가했을 텐데 용감하게 흉부 압박이 있었다, 뭔가 물을 마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물고문 사건으로 일파만파 번집니다. 그럴 때에 경찰은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검사들이 당시에 전두환의 배경을 업은 전경환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경찰의 무지막지한 독주, 밀실수사,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 말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권력에 숨죽이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이것 사고 난다, 언젠가 이것은 고쳐야 된다.

우리 검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경찰이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도 받지 않고 저렇게 마음대로 인신을 구속하고 고문하는데 우리 검사는 뭐 하려고 어려운 공부해서 고시되었나 이런 자조감에 한탄하던 검사들이 드디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검 검사가 서울지검 형사부의 안상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인데 정형근. 안상수와 서울법대 동기·동창이었던 당시 안기부에 파견돼 있던 검사입니다.

권력기관은 서로 견제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도 경찰이, 특히 공안팀이

너무 오버한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검사와 또 한 사람의 안전기획부에 파견되었던 정형근.

두 검사가 부검에 직접 참여합니다. '탁 치니 억' 하며 죽었다는 것이 아닌 부검을 직접 현장에서 합니다. 부검을 할 때 경찰 간부들이 왔지요. 전두환·전경환의 든든한 배경을 가진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장, 대공분실장.

제가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도 서대문구치소에 있을 때 박종철 사건으로 잡혀 들어와서 앞줄에 포승줄 묶고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대공분야에서는 엄청난 공로를 쌓았고 경찰에서도 언터처블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잡아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수많은 언론인들의 노력뿐 아니라 양심 있는 종교인들,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안상수 검사가 없었다면 그리고 당시에 정형근 검사가 안기부에 파견되지 않았다면 그 서슬 퍼런 전두환·전경환의 막강한 백을 가진 경찰 간부들이 사건을 덮으려고……

우리 가끔 느끼지만 옛날 공안 쪽 경찰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때려 패고 그랬습니다, 뒤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도 내 밑이고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경로로는 내무부장관이나 아니면 전경환이 직접 검찰 간부에게, 서울지검 검사장에게 '야, 그 사건 덮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그 검사가 사건을 덮었으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6월 민주혁명이 가능했습니까?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토크빌의 순간'인가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폭정이 최고조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폭정이 막 억누를 때는 사람들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엄청난 시민혁명이 터져나오는 순간은 바로 폭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렇게 용감한 검사들이, 용감한 의사가, 용감한 언론인이 나서서 무고한 학생을 물고문으로 죽였던, 바로 '백태웅의 소재를 대라. 박종운을 찾아내라'라고, 단지 후배라는 이유로 아무 영장도 없이 대학생을 데려가서 물고문을 시키던 그 인권 말살,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소련의 KGB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자행되던 그 나라를, 그 겨울공화국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검사였고 언론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중수처법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해집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역사에서 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느냐? 왜 삼권분립을 강조하느냐? 왜 사법, 형사 집행 과정에서도 검찰·경찰 또 특사경 또 공수처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견제와 균형, 절제와 엄밀한 법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 용감한 검사들 덕분에, 검찰이 경찰의 변사 사건…… 변사 사건 덮으면 끝입니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변사였다. 박종철 군이 원래 심장이 약했던 모양이더라. 그냥 본인의 강박감에 죽었다', 덮으면 검찰이 '그 변사 보고서 좀 보자. 안 되겠다. 다시 부검하자' 이렇게 안 했으면 밝혀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에는 장관님, 그게 가능합니까? 경찰에게 그런 요구 할 수 있습니까?

곤란하신 모양이네.

보십시오. 우리 검찰의 역사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선량한…… 제도에 역기능도 있지만 제도에 이런 순기능이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될 때 세상에, 여기 국회의사당에서 어느 현직 의원이 저를 원조 공산주의자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 기사를 막 흔들었습니다. 전두환 시기에 국가안전기획부가 기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기도 사건', ML당 사건이라고 약칭으로 불렀는데 안기부는 그 사건 이름을 ML당 기도 사건이라고 썼습니다. ML당을 만든 사건하고 ML당 기도 사건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장난쳐 가지고 ML당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 대학 선배와 대학 친구들이 무더기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민정당사 점거 농성 사건으로 3년째 수배 중이었는데 수배 중에 그 친구들과 몇 차례 어울린 게 문제되어서 말단 종범으로 그 그림표에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당시 제 공천 과정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떨어뜨리려고 현역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서 국회 회의장에서 흔들었습니다. 그게 국가안전기획부 발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당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었습니다, 황교안 검사.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였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연루돼서…… 저는 공소유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민정당사 사건으로 관련돼 있었는데 그 사건의 말단 종범처럼 딱 들어가는 바람에 국가보안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탄핵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여당에 있는 유일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이름이 거명되었고 광화문의 시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어서 저런 놈이 여당 의원이냐고 당시에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대통령후보를 뽑았는데 그 대통령후보도 국가보안법 위반자였습니다, 김문수 후보. 바로 87년에 같은 시기에 국가안전기획부가 무리하게 수사해서 공안사건으로 만들 때 같이 그 죄목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사면·복권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다 이루어져서 저는 석방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도 국가안전기획부는 4·13 호헌조치를 앞두고, 4·13 호헌조치 직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국에 시민 민주화운동의 물결이 퍼져 나갈 때 그것을 막으려고 ML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당초에는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주사파 정당을 만들었다, 북한과 내통한 놈들이 시위의 배후에 있다라고 기획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북한과 연루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숨어 있던 학생들 방에 있던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된 책들 몇 권 가지고 ML당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소 단계에서 서울지검 공안부가 딱 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ML당 기도 사건으로 만든 걸 보고서, 여기서 그 아무리 막강한 국가안전기획부도, 검찰의 최소한의 순기능을 발휘한 순간이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고서 '이게 무슨 ML당 사건이냐고, 애들 책 몇 권 읽은 것 가지고서'. 그러나 워낙 국가안전기획부의 사건 배후에 또 엄청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적용하되 이 사건의 이름을 지역노동자연맹 추진 사건으로 바꿉니다, 이른바 지노맹 추진 사건. ML당 사건하고 지노맹 추진 사건하고 사건 명칭부터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엄혹한 시대에도 검찰이 순기능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직접 겪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라는 것은 따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

렸다시피 이것은 장발장 시대, 레미제라블의 시대에서 없던 것을 프랑스혁명과 유럽의 근대 민주주의가 완성되면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인권의 보루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부패수사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상징으로서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발 좀 숙고해 달라.

오늘 야당의 힘 없는 목소리를 일일이 반박하지 않으시고 남은 시간을 오롯이 야당에게 양보한—당연한 일입니다만 한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참 감사합니다—그런 아량을 바탕으로 이 법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3·15 국립묘지에 참배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법이 그 구조상 자칫하면 3·15 의거를 불렀던, 3·15 부정선거를 불렀던 그 헌법 체계, 그 수사지휘 체계랑 똑같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법이 혹여 통과되더라도 한 번 더 국회에서 살펴 달라 이렇게 재의결 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아마도 필리버스터가 좀 더 길어지면 정치적 부족주의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치는가를 설파한 미국의 책을 가지고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치적 부족주의의 그 유혹과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꼭 재의결 요청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그래서 검찰의 순기능을 보여 준 순간, 1986년이니까 올해가 사실 6월 민주혁명, 올해로 꼭 40주년이지요. 50년입니까? 40주년이지요. 40주년입니다.

올해 6월 민주시민혁명의 40주년 해입니다. 이 시기에 그 6월 민주혁명의 불씨를 살리고 엄청난 공안 경찰의 밀실수사와 고문수사로 점철되었던 그 악행을 중단시켰던 것이 검찰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환기해 주시고, 검찰을 개혁하면 됩니다. 검찰을 죽이지는 맙시다. 문명국의 수치입니다. 문명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공화국 때 이기붕이 부통령이었는데 사실 이승만 박사가 당시 고령이어서 거의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합니다. 이기붕이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경찰에게 발포를 지시합니다. 부정선거를 지시합니다. 그런 경찰도 그 뒤에 처우개선 또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경찰은 인터폴 총재, 김종양 인터폴 총재를 배출할 정도로 세계적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개혁했고.

국가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 옛날에 야당 하던 사람들, 여당조차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반죽음이 되어 돌아와야 했던 그 기구도 지금은 국가정보원이라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정세 속에서, 위기상황에서 보호하고 미리 간첩도 탐지하고…… 지금 그것도 간첩을 못 잡게 해 놨으니까 큰 문제입니다만 국가정보원도 개혁해서 새롭게 세계의 자랑스러운 기관으로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검찰을 없애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 분리, 우리 당시 여당일 때 소수당이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참 똑같은 사안으로 한 사람은 아무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검경 수사 분리를 당시 다수 야당과 함께 합의해서 검찰개혁을 이루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도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같이 개혁하면 될 일을 왜 없앱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과유불급이며 교각살우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문명법치국가의 기초를 허무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36시간이고 48시간 계속할 테니까 멈추지 마시고 계속 토론해서 이것은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도 사정을 보면 저도 답답합니다만 당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장관 인터뷰도 하고 여러…… 답답하고 대통령도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최소한 문명 법치국가의 기준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밤에 뒤집고 엎고…… 누가 이것을 좌지우지합니까, 누가?

민주당 의원 160여 명 중에 누가 이 문제에 제일 적극적입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커졌는지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주는 조건으로 공소 취소를 검찰과 거래했다고 말할 만큼 엄청난 족장, 정치적 부족의 족장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그리고 김어준에게 달려가서 당정 보고를 통해서 통째로 다 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당대표님 그리고 법사위원장님, 그분들 영향에서 벗어납시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제도라는 것은 장발장 시대에는 없던 제도고 프랑스혁명과 근대민주주의 혁명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더구나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를 보다 신속하게 처벌하고 가려내기 위한 장치였고 모든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제도다, 이거 하나.

또 더 하나 문제는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보듯이 올해 40주년인 6월 민주항쟁의 그 불씨를 살렸던 그런 인권의 보루로서 기능도 한 적이 있다, 그 기능을 살리고 잘못된 기능은 죽이고 이렇게 개혁을 하면 될 일이지 왜 다 죽이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다 보니까 경찰도 다 못 하는 노동, 환경 이런 일반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지휘하고 또 외청에서 지휘하는 그런 사건들인데, 소방 등등이 많겠지요, 다음에 어업도 있을 테고. 수만 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힘듭니다, 현장에 나가면 저항도 심하고 유혹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힘든 부처다 보니, 힘든 일이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1년마다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동일한 기준을 가지기도 힘들고, 그때마다 '이것 이렇게 저항하고 뻗대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특사경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 부처와 특사경을 관장하는 외청에서 특사경은 검찰과 함께 수사지휘 문제를, 수사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남겨 주세요 그랬는데 다 빼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민생의 엄청난 고통…… 어떤 경우는 의욕에 넘쳐서 애먼 사람을 잡게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단속 대상자가 너무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서 포기하게 되어서 정작 단속해야 될 사람 단속 못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힘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법을 이렇게 법왜곡죄 이런 것 해 가지고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앞으로? 법왜곡죄 해서 당장 1호로 대법원장을 했습니다만 그게 정말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문명국의 수치스러운 일인데 오죽하면 국민통합위원장이지요, 국민고충위원장이십니까,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시던 그분까지도 이야기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어제 쯔양이라고 유튜브로 유명한 분인데 쯔양이 지금 엄청난 악한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법왜곡죄 4심제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실까요? 저기 보면 검사가, 경찰이 사건에 엄청나게 치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험에 따라서 또는 업무의 집중도에 따라서 사건을 놓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면, 저게 옛날에 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김웅 검사 이야기입니다. 38년간 무사고 택시 운전사인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고 경찰 조사 결과는 이 사람이 신호위반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김웅 검사가 현장에 가 봤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딱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현장이라는 것을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를 했지요. 잘못하면 할아버지 운전기사는 그냥 그대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목이 되어서 없던 죄를 짊어질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두 번 현장에 가 보고 '이게 좀 이상하구나', 왜냐하면 할아버지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하소연하니까. 그런데 모든 피의자는 아니라 그러지요.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하는 것이 그렇고 또 경찰 수사도 뭔가 미진한 것 같고 해서 현장에 가 보니까 그 현장에서는 경찰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사고를 냈으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쳐야 되는데 유독 한두 명만 다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심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변호사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미흡함 또 왜곡 혹은 누가 유착이 돼서 봐주면서 그 사건이 묻혔을 때 그것을 캐내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서 경찰에게만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미 검수완박을 하면서 현장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경찰에 과부하가 걸려 있고, 가 보니 당사자에게 오히려 이 수사를 빨리 하려면 증거를 찾아 오라고 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사건의 전문성도 필요한데 일이 많은 경찰이 어떻게 다 일일이 공부해서 그걸 찾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축적되어서 시스템에 안착될까요? 그 전에 벌써 조사과 형사들이 힘들다고 다른 부처 옮겨 달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수사가 많다 보니까 범죄자들을 소환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정치권 수사는 소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재심 사건 변호사 말씀이 이제 범죄자들에게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 없는, 이전에는 검사들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법 적용도 많이 했고 사법연수원에서도 교육을 받고 해서 동일한 기준, 검사로서 항소심도 가고 또 삼심제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등검찰청에서 지적도 받고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층층이 견제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단계에서 끝나 버리면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좀 더 엄밀하게 하려고 힘 없는 사람들조차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들이. 변호사 비용의 증가를 부르겠지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사실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결국 이게 불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경찰 초동 단계에서 부실수사가 돼 버리면,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일체 통보를 안 하니까 검찰은 이런 사건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 경찰

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훈련 경험에 따라서 또는 정도에 따라서 또는 그 사건 피의자와의 유착 정도에 따라서 이 문제가 덮어질 수가 있습니다. 초동수사가 안 돼 있으면 뒤에 검찰 보완, 검찰에서만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경찰이 이 문제를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과 상의하도록 돼 있으면 그런 식으로 종결할 수가 없겠지요.

발달장애인 성추행 사건이라고 한때 언론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변호사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장애인 인권변호사가 누굽니까? 약자를 도와주는 대표적 변호사 아닙니까? 검찰 보완수사가 사실상 막혀, 지난번 검수완박 당시에 이미 막혀 있어서 그것 이야기한 건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못 하게 됐습니다,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는 장애인 사건 이런 것들은, 그때 5대 사건인가요? 선거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해서 대상이, 그때도 이미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변호사 사건 이렇게, 지적장애인 같은 약자를 보호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처벌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가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장애인 인권변호사 김예원 변호사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장애인과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입니다.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때는 검찰을 살렸으니까 그래도 당시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검찰을 없애 버렸으니까 더 심하지요.

검수완박의 중재안에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그때만 해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 조항을 두는 바람에 여죄 수사는 물론이고 진범, 공범의 처벌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걸 검찰 수사에서 보완하면서 진짜 진범과 공범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검수완박을 하면서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아예 이것도, 이제 단일사건도 더 이상 검찰이 관여 못 하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지요.

그래서 김 변호사가 경험에 기반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매매 여성이 무슨 성폭행이냐 하며 가해자를 감금·상해 혐의로만 입건했다. 검찰에서 혐의를 추가해야 하는데 범죄의 동일성과 단일성이 없으니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발견해도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나마 보완수사라도 하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니 이것마저도 못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살다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문을 이해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경찰이—지난해라고 하면 2021년입니다—불송치한 사건 중 5.6%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했고 그중 가해자가 기소된 사건은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경찰이 수사를 잘해서 종결했기 때문에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서 미흡하게 처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변호사협회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것은 그때 그래도 좀 한가한 이야기가 된 셈입니다. 지금은 그조차도 불가능해지게 막혔으니까요.

다음 사안 보시지요.

이미 검수완박 때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조차도,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강행으로 밀어붙였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워낙 여당 내 강경파들의 공격이 거세고 하니까 위원장도 사퇴했고 남은 기간 동안 반쪽으로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고 이미, 18일이니까 언제입니까? 그제네요.

정부가 설치한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좌초할 만큼, 이 자문위원들이 좌절할 만큼 이 법안이 심각합니다.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의를 하다가 다 날아가 버린 거지요.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가 16명으로 구성·출범했으나 현재는 9명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자문위원 6명은 지난 1월 추진단이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법안에 반발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반발했으면 여당 내에서 좀 더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박찬운,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중도적·진보적 법조인으로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맡으셨지요. 이분이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검찰개혁, 이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없애 버렸으니까 개혁이라는 말도 쓸 수 없겠지요. 이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운 전 위원장이지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엊그제 문화일보 인터뷰입니다.

결정이 어려울 때는 다수에 이익이 되는 방향, 즉 0.1%가 아닌 99.9%를 위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것을 전건송치라고 합니다—부활이,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은 돼야 되고요, 또 공소청의 전건송치가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 문제는 좌우,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떠나 가장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다 빠졌습니다. 당정 협의하면서, 당대표께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통째로 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박찬운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검찰개혁 자문위원단

장으로 위촉되신 분입니다. 성공적인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이 우선이고 또 국가의 범죄 억제 기능, 즉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약화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고 못된 송아지 버릇 고치겠다고 뿔 고치다가 송아지 잡는 교각살우를 걱정하고, 대통령께서도 과유불급을 이야기했던 이유도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목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잘못된 검찰권 남용을 막고 또 하나는 국가의 범죄 억제 기능, 즉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은 약화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동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다 저버리게 됐다는 것이지요.

개혁의 목표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국민과 시민사회에 너무 복잡한 의제를 던지면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심플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박찬운 전 위원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지금처럼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줘서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사건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문제가 없는 사건이 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전화 한 통 하면 끝날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을 보지 않고서는 사건의 진상을 알기 어려운 사건 모두를 경찰에게 보완을 요구하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잘못 기소한 검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기본적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책임의 원칙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법안을 밀어붙인 의원님들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면 검찰이 이것을 남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찬운 전 위원장 말씀입니다. 남용 가능성은 모든 수사에 상존한다. 그러나 그것에 맞는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우매한 판단이다. 지금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도 없고 인지수사도 할 수 없다. 과거 검찰권 남용이 가능했던 권한이 모두 사라졌다. 검찰 보완수사는 경찰 직접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완수사는 새 범죄를 발견하는 목적이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겠나. 연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80만 건인데 그 보완을 보완수사요구에 의존하면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피의자가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유명무실해진다.

지금 이른바 2020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수사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박찬운 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건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됩니다. 1차 수사권 조정 결과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대목이었습니다. 경찰이 능력이 없어서라거나 고의로 사건을 암장, 사건을 덮어 버리는 걸 암장이라 그럽니다. 사건을 암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중복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전건송치는 크로스체크, 즉 교차검증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또 덧붙이기를, 물론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게 좋지만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

면 중대사건만이라도 전건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중대사건은 사건 범위를 정하면 된다. 대체로 중수청 사건이 될 것이다. 경찰 사건도 중대사건 범위를 정하면 된다. 예컨대 범죄 처벌형이 징역 5년이나 7년 이상이면 중대범죄로 해서 전건송치하게 하고 낮으면 현재 불송치 제도를 적용하게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보완수사권은 정치적 고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 논리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보완수사권 유지와 폐지는 모두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순기능이 큰지를 봐야 한다. 즉 공리주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대 다수의 행복, 최대 다수의 이익이 될지를 놓고 결정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원칙에 맞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99.9%는 일반 형사사건인데 이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일정 보완수사를 거친 다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절차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 사건은 검찰권 남용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나머지 0.1% 혹은 1%가 안 되는 사건이 검찰이 인지수사와 직접수사를 함으로써 종종 검찰권 남용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작은 소수의 사건 때문에 수십 년간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형사절차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다수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물론 소수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해선 확실하게 방지책을 만들면 된다. 보완수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두 겹, 세 겹 자물쇠를 채우면 된다.

검찰이 가진 수사역량을 보존·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대형 금융비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담당하고 있다. 수사역량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다. 수많은 직접수사를 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거다. 이러한 수사능력 자체는 폄훼할 수가 없다. 이런 수사역량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만들어지는 것이 중수청인데 이곳으로 우수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옮겨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를 뽑아 중수청을 채우면 된다지만 수사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그 선의는 이해한다. 그들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했기에 여기까지 왔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주된 방향성이라는 것도 동의한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교조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될 수 있지만 벗어나면 안 되는 궁극의 목표라고는 볼 수 없다.

검찰권 남용 피해를 겪은 이들은 검사 수사권 박탈은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검찰은 단순히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부정의 대상이 됐고 급기야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 악마화가 자리 잡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99.9% 사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찰 보완수사 권한까지 없애자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 아니냐.

이게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 산하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여당의 이런 밀어붙이기 입법 때문에 사퇴하신 분입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의 말씀입니다.

중수청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이나 거대 부패를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3개 기관은 경쟁 관계이면서 협력을 통해서 대형 중대범죄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 사실규명을 할 수도 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과거 수사기관이 경찰·검찰로 단

순했는데 3개가 되고 경우에 따라 특검도 생기게 되면 오히려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서로 미룰 수도 있고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수사기관 간 과열경쟁으로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보듯 자칫 위법수사 논란도 벌어질 수가 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잘못 개혁했다가는 국민의 원성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내주게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이다.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검찰개혁에서 정치 논리와 법 논리를 뒤섞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잘 만들어서 국민이 호응하면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잘하는 것이 정권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분이 물러나시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물러나실까요? 이런 호소조차도 여당 안에, 지금 상정된 안에 실리지 않았고 통째로 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이것은 뭐 다른 신문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면 정권 유지조차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면 됩니다. 잘못된 불, 살짝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고 빈대 잡겠다고 집 삼간을 다 태워 버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범죄수사 총 역량, 과연 보존되고 있습니까? 경찰은 과도한 수사 집중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사퇴했느냐? 조용히 자문하는 것보다 내 의견을 언론과 정치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문위는 보완수사권에 관해 지난 1월 말부터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고 대체로 일치된 견해, 즉 제한적 유지를 정리해서 이미 추진단에 전달했다.

그리고 추진단은 6월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성안한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형소법 개정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합의는 미리 이루어져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선거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것을 아마도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결론을 내면 전부 공소청에 보내고—아까 말씀드린 전건송치입니다—검사가 검토 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한 뒤 종결하는 방식이 가장 나은 시스템이라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 확인, 즉 보완수사조차 할 수 없게 하면 불완전기소나 소극적 불기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권한에는 남용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한다고 검사제도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수사 기능을 없앨 것인가? 역설적으로 묻는 겁니다. 보완수사 존폐는 공리주의적으로 결단할 문제다.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면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막아서 얻는 이익보다 일반 국민이 형사 절차에서 겪을 억울함이 더 커진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경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가 경찰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검사에게 왔는데 경찰의 선의만 믿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피의자가 거꾸로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잦아지면 결국 수사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낳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검찰권 남용을 제어하려는 시도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된다면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 즉 국가가 범죄를 막아 주는 기능이 약해져서 불안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도 제어해야 하지만 국가의 범죄 억제 기능은 높여야 한다, 이 목표의 균형이 곧 우리 전 사회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수사는 가급적 신속히 끝내고 경찰·검찰 등 단위마다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잘못 고치면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된다. 개악으로 끝나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내주게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지금 오랫동안 자리 지키고 계시는데 정성호 장관님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법무부장관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공청회 한 번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걸 드디어 지금 표결하려고, 오늘 오후 4시쯤에 이 필리버스터도 끝장내고 하시려고 할 텐데 저는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으니까 끝내지 마시고 좀 길게 토론해 주십시오. 길게 토론해서 정성호 장관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이 대목도,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대목도 한 번 더 감안해 주십시오.

정부 여당입니다. 여당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당의 뜻은 살피되 국가의 이익, 국가의 범죄수사대응 총량의 이익을 높여야 되는 법무부장관의 진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꼼꼼히 읽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작아서 제가 원문을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 잘 보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무위원석에서)

예.

○최형두 의원 의장님, 보입니까? 저 글자 보입니까?

○의장 우원식 예, 여기 잘 보입니다.

○최형두 의원 저 자리에 묵묵히 앉아 계시지만 저는 참 필리버스터를 해도 정부, 당정 간에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걱정하는 것을,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고 초선 의원들 모셔서 그 이해도 구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한번 멈춰 서서 생각해 주십시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여러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마침 제가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여권 내 강경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 장관 답변입니다.

보완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의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별건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선고되는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사가 제대로 된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하려면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남겨 놔야 된다.

질문, 여권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이 결국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성호 장관 답변, 증거를 보완하라고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찰의 선의에만 기대야 한다. 사실상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지요. 제도라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사법독립을 이야기하고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제도적으로 계속 끝없이 완성시켜 온 까닭은 한 인간의 선의, 한 집단의 선의, 한 권력의 선의에만 모든 걸 맡겨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부의 독주를 의회가 견제하고 의회가 비판하고 또 의회의 독주를 정부가 재의결 요청 방식으로 또 예산의 증액 요청에 대해서 그 증액 심사의…… 감액권이야 국회의 전권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산을 늘리는 문제는 정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도 이게 다 삼권분립이고 국회·정부·법원이 3개의 기둥으로 나란히 상호 견제해 주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법만, '경찰이 선의로 모든 것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악마인 검찰은 손 떼라' 이것이 이 법의 골조라는 것을 장관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실상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 3·15 국립묘지에서 열린 3·15 66주년 추모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셔서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에 참여하셔서 그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3·15 부정선거 당시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왜 경찰이 몽둥이와 총으로 진압했겠습니까?

그 체제가, 그 지휘체계가 지금 새로…… 더불어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수당 강경파들이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 표결하려고 하는 이 법의 위험성 그 구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찰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폴 총재도 대한민국, 자랑스럽게도 우리 의사당 내에서 김종양 의원이라는 저분이 세계의 압도적인 경찰기구의 지지를 가지고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경찰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만, 그러나 모든 제도라는 것은 그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서 검찰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최소한 수사 과정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로비를 받은 그리고 검찰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만 경찰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뭘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또 힘센 사람이 인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유로 부탁을 하거나 하면 그게 덮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검사들이야 목숨 걸고 권력과 싸워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있는데 경찰은 그런 구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남겨야 한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인터뷰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 버리는 걸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로 개혁의 99%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때문에 김어준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로 거래했다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그 통로가 되었을 텐데 나중에 대정부질문에서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진심이 검찰한테 남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찬운 위원장의 인터뷰 답변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야 지금 여당에서도 일부 그것이 공소취하의 무슨 통로 채널 아니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와 관계없이 박찬운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도 누군가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기소도 유지되고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오늘 곧 표결될 수 있는 공소청법에 대해서 정부도 반대했고 여당도 제발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민생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올해는 1980년 6월 시민대항쟁이 있었던 그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올해는 이세돌·알파고 대국이라고 하는 AI·인공지능 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이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10주년이 되기도 하는 해입니다.

이런 시기에 바로 그 민주 시민대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 드렸던 사건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경찰과 그것을 밝혀내었던 검사, 언론, 의사, 심지어 안기부에 파견되었던 검사, 그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검찰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에 전경환, 전두환의 배후를 입었던 경찰의 공안파들의 힘이 셌어도 견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월 시민대혁명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알파고·이세돌의 10주년이다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그 당시에 중국의 지도자와 장군들은 깜짝 놀라서 AI·인공지능 혁명을 시작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각축하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사건도 놓쳐서 그냥 다른 정치 이슈에 골몰하다가 지금 3위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정치는 어떠냐? 지금 과연 이런 법을 해야 될 때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잘못됐으면 경찰을 개혁하면 되고 안기부가 잘못했으면 안기부를 개혁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국정원을 새로 만들었고 경찰은 인터폴 총재 국가, 인터폴 총재를 배출할, 김종양 총재를 배출할 정도의 그런 훌륭한 경찰이 모범 국가가 되었는데 검찰은 왜 그렇게 못 바꾸느냐. 그렇게 바꾸자고 여야가 합의도 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검찰을 싹 없애 버리려고 하느냐.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골몰할 때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라는 인식에 대해서 정 장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가 지금 이 법이 아니라 법무부가 선정한 10대 민생 법안부터 좀 처리해 달라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인데 여당은 이 정부의 간청조차 외면하면서 이 법에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걸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목소리도 과감하게 외면하고 족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퇴행적인 지금 정치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전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집단 소송법, 친일파 재산 환수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는 법집행을 또, 이런 걸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왜 검찰을 없애는 데만 혈안이 되어 이렇게 하십니까? 검찰은 6월 시민대혁명을 만든 그런 제도적 순기능도 발휘한 적이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발장 시대에는 없었던 근대 민주주의의 산물인데, 인권보호와 국가의 부패수사 총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데 왜 문명국가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만 지우려고 합니까? 대신에 이런 법안 하셔야지요. 야당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 장관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이민정책 추진도 절실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제와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에 가도 우리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민정책, 비자정책 이런 문제 좀 해 달라, 일할 사람이 없다고 정말 절규하고 계십니다. 한국을 이민 오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걱정도…… 뭐 이미 다 끝났습니다만 이렇게 걱정하시는 대통령의 진심을 저희가 믿고 싶은데, 그렇다면 혹여 오늘 저희들의 간곡한 절규와 호소를 외면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내가 당초에 이야기했고 또 야당도 그렇게 간곡히 호소했던 대로 검찰개혁이 과유불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 다시 한 번 더 재의결해 달라라고 미루시고 정부가 시급한 민생입법 함께 서두릅시다.

대통령의 걱정이 이런 겁니다. 3월 17일 자 한국일보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과 관련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자처하시는 분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 법안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200자 원고지 아홉 장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문제로 아홉 장이나 글을 쓰게 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당정이 협의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대해 김어준 씨가 못마땅해하는 발언이 담긴 언론보도를 공유함으로써 김 씨 주장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다 아실 테고,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대통령이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런 요지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대로 있습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사건 암장이라고 그럽니다—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시도록 하나하나 국제 지표와 사건 통계 지표를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강성 지지층 요구대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면 기득 세력의 재결집과 반격 계기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정치 지형이 바뀌었을 때 개혁법이 착근되지 못한 채 원상복귀될 수…… 아마 박찬운 위원장이 이 법 밀어붙이면 정권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비슷한 맥락 같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여기서 대통령도 지금 정부 여당을 억압하고 있는 정치적 부족의 한 족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대통령을 상대로 공소취하 거래했느냐라고 과감하게 묻는 족장이 우리 정부 여당의 공식 지휘체계를 벗어나서도 있습니다.

정치적 부족주의, 우리 당에도 정치적 부족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수 의원들이 그것을 막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이런 정치적 부족주의와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정당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것도 부족한 판에 정당 내에서 한 정치적 부족이 강력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근대 정치가 부족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삼국통일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리버스터 시간이 길게 주어지면 정치적 부족주의에 관한 미국의 석학 책도 제가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통령은 강경파의 반발이 강성 지지층…… 이것을 최근의 정치학 용어로는 정치적 부족, 같은 정당 내에서도 강경파 중도파 개혁파 온건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한 사람을 거의 교주처럼 모시는 정당 내에서의 정치적 부족, 우리 당도 그런 게 있다고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강경파의 반발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즉 민주당 내의 강성 부족이겠지요—선명성 경쟁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 것이다. 특히 다른 목적이라는 언급을 두고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경파와 입장을 같이하는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어준 씨로 대표되는 친문재인계 구주류와 친이재명계 신주류 간 권력투쟁으로 번지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있다.

정말 대통령의 인식도 좀 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법안 멈춰 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면 됩니다.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옥중에 가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검사 출신이면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 공감했고 그리고 검경 수사 분리, 우리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의 반대 목소리 있었지만 소수당의 한계 또 검찰개혁이라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큰 목표를 위해서 그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분은 검찰 수사받아 가지고 지금 감옥 가 계시고, 옥중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분은 검경 수사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도 못 하다 보니까 경찰 수사받지 않은 채 지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평, 이것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 버려서 참 되돌이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한 달 동안 다수당의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해 오신 일들을 한번 반성해 보시고 이제는 멈춰야 된다, 그리고 이미 해 오신 일들도 다시 생각해서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법조계가 바라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해 놨더니, 법왜곡죄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장부터 딱 제1호 대상으로 고발하셨지요? 법왜곡죄를 했더니 범죄의 피해자들이 범죄의 가해자들로부터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서 판사와 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대드는 통에 끝나지 않는 범죄 피해, 이것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국회에 와서 호소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유튜브로 유명한 쯔양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김장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쯔양을 괴롭히던 그 범죄자들이 이제는 수사·재판했던 사람들 모두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그러니 쯔양의 고통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여기다 또 4심제 하겠다고 하니까 쯔양은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심지어 이제는 앞으로 아직까지 검찰 기소 단계까지 안 간 사건, 법무부장관도 걱정하시고 대통령도 걱정하신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워낙 많은 사건에 경찰이 치여서 경찰이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사건 실체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범죄 피해도 전혀 구제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범죄 가해자들은, 그 가해자들이 목적성이 있었고 원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범죄 수사에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고용해 가지고 끝없이 하고 4심제 가고 법왜곡죄로 수사하는 경찰, 검찰, 법원 판사 괴롭힐 텐데 이게 우리 다수당 의원님들이 바라던 사법개혁입니까?

우선 지난 1개월 동안 있었던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다음에 또 뭡니까? 4심제 여기에 대한 것들도 너무 나갔습니다. 이것도 되돌이키셔야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중수청법, 공소청법인가요? 이런 것도 멈추셔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48시간 계속 필리버스터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논의해서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지금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고칠 기회를 여당이 야당과 다시 협의해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BTS의 나라, 다음에 오스카상을 휩쓸고 골든글로브를 휩쓴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

령의 멘토라고 했던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법원, 지난번에 선거재판 앞두고, 대통령선거일 앞두고 대법원이 급하게 선거재판을 결론 내렸다고 지금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막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선거재판 우리 다 겪어 봤지만 그것 1년 내에 다 끝내야 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대법원이 결론 내겠다 하니까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대법원까지 확정판결 해서 무죄 나올 줄 알고?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것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그것은 누구나 제대로 법률을 아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있는 사건이지요. 파기환송했다고 그때부터 지금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데, 그것도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판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대통령의 사건 재판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한 게 있었다면 정말 통합적인 정치를 하고 국익과 민생을 보살피는 정치를 해서 지금처럼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나중에 퇴임 후에 그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살펴보면 좋겠네. 그리고 이미 70세 가까운 고령인데 뭘 굳이 그것을 갖다가…… 그런 국민들의 선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다 없애겠다고 이렇게 법을, 제도를 바꾸고 사법체계를 흔들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위협하는 큰 족쇄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의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대 대법원장, 초대 대법원장에서…… 가인, 대법원에서는 정말 사표(師表)로 생각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대법원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과연 그 문제로 이미 재판 다 중단됐고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정말 일을 잘하셔서 그걸 보니까 일정 부분 잘못,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 아닙니까?

죽 한번 자세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가인의 가르침 이것은 나중에 시간 내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왜 대법원이라는 데는 소신을 갖고서 그렇게 해야지만 선출직, 지금 우리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이야말로 권력 순위 1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대법원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물론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카드를 흔들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무섭고 해도 대법원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조차도 임명권자의 견해에 따르지 않고 양심 있는 판결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로 선출된 권력이 자칫 권력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위해서 저지를지 모르는 남용과 오용을 견제하는 표준을 대법원이 세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쫓아내고 그렇게 해 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 대법원장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힘에, 눈에 거슬

리면 쫓아내는 세상인데 다른 법원 판결을 믿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내가 맞는데 저 뒤에 무슨 다른 권력자가 개입해서, 사건에 개입해서 내가 억울한 처사를 당했다 그러면 법의 질서가, 법의 권위, 재판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의 권위, 대법원의 권위, 대법원의 독립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소불위의 관세권,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이게 미국 대법원, 슈프림 코트 스트라이크스 다운 트럼프스 태리프스(Supreme Court strikes down Trump's tariffs) 이런 겁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스트라이크스 다운 해야 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의 견해를 이어 간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달리 해석해 볼까요? 선출된 권력이 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선출된 권력의 견해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숙명이다. 연방법원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비난을 쏟아 냈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역대로, 우리 미국 대법원도 그렇습니다만 로버츠 대법원장도 초대 대법원장 존 제이가 세운 전통을 높이 칭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초대 대법원장 가인의 가르침을, 가인에 대해서 여야가 있습니까?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야가 평가가 엇갈리나요? 그렇다면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었다면 지금 법왜곡죄라든가 대법원을 흔드는 이런 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인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 사법 3법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법원장도 위기 때마다 대통령의 압도적 권력에 휘둘리고 그 압력에 휘둘리고 그 판사들이 대통령 권력에 위협을 받을 때조차도 미국이 세운 삼권분립의 전통, 초대 대법원장의 그 담대한 용기 이것을 푯대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 대법원장 존 제이를 두고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기틀을 만들면서 큰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 초대 대법원장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영국과 프랑스 전쟁 중에 대법원장을 불러서 중립법 위반 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대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법무부장관도 변호사도 아니고 또 다른 정부—즉 사법부지요—다른 브랜치(branch)의 수장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삼권분립 원칙이 이런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지만 종종 진보적 판결도 해왔습니다. 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의 견해를 이어간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분은 사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종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지명했든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미국의 삼권분

립이라는 전통, 미국의 사법독립이라는 전통에 더욱 주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곧 내년부터인가 스물 몇 명을 계속 순차적으로 증원하겠지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대법원을 다 채운다고 하는 견해도 이것 정말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법원들은 정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대법관들이 일부러 음해할 리도 없습니다.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15쪽.

다음, 우리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통령께서 걱정하시고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도 이야기했던 대목이 이겁니다.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가를 부패범죄로부터 막아 내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몇 년 사이에 검경 수사 분리 그리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이 검찰이 물론 잘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 와중에 OECD 산하 반부패기구에서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부패수사라는 것은, 요즘 더욱 정교해지기 때문에 요즘은 조폭들이 뭐 시장 돌아다니면서 삥 뜯고 그러지 않습니다. 조폭들이 지능적인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고 자금세탁하고 마약 거래도 치밀한 방식으로 점조직으로 하고 이것 잡아내려면 경찰관 한 사람, 경찰서 한 곳의 정의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수사 능력.

사실은 지금 검찰이 욕을 먹는 게 인지수사, 특별수사. 그것 때문에 잘한 것도 있고요. 특별수사 때문에 검찰이 전 국민의 박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하고 정치의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개망신을 당한 적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검찰의 수사는 99%는 일반인들의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올라온 사건기록을 마지막으로 검토함으로써 문제가 없는지,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 새로운 실체적 범죄, 실체적 증거는 없었는지를 그것을 살피는 게 검찰 업무의 99%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력범죄 이런 것들은 마약사범 이런 것들은 정말 경찰이, 한 지방청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에 마약국을 두었고 또 옛날에 파친코 등 잡는다고 강력부가 그렇게 힘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같은 선진국에서도 각 국가 특히 선진국가의 부패범죄 수사 능력을 매우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성장을 좀먹는 것이 부패이기 때문에, 부패. 그런데 이것이 한 나라만의 반부패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반부패 수사를 철저히 해서 자금의 불법세탁이나 이동을 막았는데…… 아니, 한국 같은 나라가 그게 뻥 뚫려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큰데 그쪽을 막 무역하는 것처럼 해서 불법자금세탁 이루어지고 하면 세계가, 선진국의 경제가 부패범죄에 침식당하기 때문에, OECD가 우리 검찰 도와주려고 만든 기구도 아니고요. 부패범죄 수사 능력을 매우 중요한 선진국 간의 협력 의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방지작업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의장이 우리가 한창 검찰수사권을 없애려고 할 시기에 한국 검찰의 수사력과 형사 공조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법무부에 설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부패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법 조항에서 일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법이, 이번에 올라갈 공소청법 이런 것들이 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검찰청이 맡아 온 반부패,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이렇게 해서 약화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영어 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실제로 실사단도 방문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이것은 한겨레신문 기사 같은데, OECD가 검찰수사권의 축소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부패 수사 역량, 범죄 수사 능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 실사를 왔습니다. 이거 우리 검찰청에서 와 달라고 부탁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걱정이기도 하지만 선진국과 거래가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에 이런 구멍이 생기면 선진국에서의 반부패 수사도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표준, 그래서 국제협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라고 약칭합니다—한국을 방문해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OECD 실사단은 이런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ECD는 한국의 검찰 수사 역량 약화의 입법이 추진된 시기에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서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정부질문에서도 법무부장관에게—지금 안 계시네요. 잠깐 비우셨는데—OECD에서 실사단 결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검경 수사 조정에 뭐 하려고 OECD가 갑자기 달려왔냐고 그러지만 OECD의 주요 목표입니다. 백태영 교수가 이것 때문에 갔습니까, 혹시?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면 이런 것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OECD는 경제기구일뿐 아니라 사회 문화 범죄에 관한 기구입니다.

부패범죄 수사 능력, 이게 OECD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년 감시하고 심사합니다. 이게 약화됐다는 평가 나면 이것도, 이게 뭐냐 하면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 주가지수도 이렇게 되면 위태롭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지만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이런 부정한 거래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이 범죄수익으로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고 우리 국가가 문명국가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채권지수에 포함되고 그랬던 겁니다, 지난 정부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박찬운 위원장이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걱정하시던, 모든 걱정하는 대목에 나왔던 것이 국가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약화시킬 것이다. 검찰의 잘못된 뿔을 잡는다고 아예 그냥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니냐. 정상적인 정부 여당이면 당연히 해야 될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실제로 지금 자꾸 너무 그러니까 OECD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OECD의 검찰 역량 강화, 검찰이 아니더라도 검찰 대응…… 갑자기 키울 수 있습니까? 검찰은 그냥 죽여 버리고 지방청의 경찰서에서 나누어 지던 그걸로 갑자기 부패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니고 인지수사, 권력 수사하면서 편향성 보인 그런 게 문제일 텐데 그것만 고치면 되지 지금 이거 전체를 다 날려 버리면 정말 교각살우가 따로 없습니다.

영어 대목을 읽어 보면 지금 낫 임플리먼티드(not implemented)라고 돼 있잖아요, 실행되지 않았다. recommendation 3.b 범죄·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행되지 않았다. OECD가 한국 정부에, 한국에 보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워킹그룹,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범죄수사 자원이 법 집행 당국에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다.

SPO가 아마 슈프림 프로시큐터 오피스(Supreme Prosecutors Office), 대검찰청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기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의 수사 자원이 2018년 이후에 바뀌지 않았다. 2018년이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 조정하면서 검찰수사권에 대한 끝없는 공격과 비판이 이어졌을 때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각살우가 이런 겁니다. 잘못된 부분 개혁하면 되지요.

그리고 이야기했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옥중에 계시지만 그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정당한 법적인 판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의 일부 반발 또 강경파들 여론을 무릅쓰고 검경 수사 조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막강한 야당과 함께. 왜냐하면 개혁할 부분은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못마땅해서 개혁하면 될 일을, 우리가 개혁에 저항한 적이 없어요. 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공청회도 하지 않고 싹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걱정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이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자료인데요. 대통령께서 요즘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조작한 놈 아주 그냥 처단을 해야지요. 주가조작이 뭡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지요. 그런데 1심 무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이가. 2021년에 한 번…… 2022년 어느 정부 때입니까? 확 늘었다가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찰이 이런 중대한 자본시장 범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수사권을 조정하더라도 남부지검에 있는 자본시장팀 이런 것들은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없애 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가조작 세력이 좋아하겠지요. 치밀하고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국제적인 그런 카르텔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까? 그리고 범죄자들이 그걸 악용해서 빼먹는 게 좋습니까? 그로 인해서 눈물 흘릴 수많은 시민, 투자자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패범죄 수사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통계가 그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 한번 보십시오. 무죄율 추이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났을 겁니다, 지금 이게. 저게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아까 OECD 반부패 기획단은 권고대로 2018년 이후에 반부패 수사 리소스를 좀 더 늘려라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2018년 이후에 전혀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검찰 뭐 이렇게 하고 남부지검 자본시장 수사팀도 아마 당시에 정치권에서 심한 견제와 추궁을 받았을걸요. 그러니까 수사 안 하지요. 철저하게 끝까지 뿌리 캐지 않습니다. 왜? 검사도 사람이고 정치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소는 했는데 입증을 못 해 가지고 무죄율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다른 여러 측면도 있겠지만 그 추세가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는 자꾸 늘어집니다. 국민들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피해가 구제되고 정의가 구현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계입니다만 다음 보실까요?

특검 이것도 우리 정치권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검사 한다고 지방의 검찰청 검사 전체를 발령해서 수사를 해댑니다. 그사이에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2025년까지 미제사건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검사는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베테랑 수사 인력이 유출되고 수사 의욕은 저하되고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3대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사건 적체가 심화됐습니다. 검찰이 민생경제범죄, 특히 지능범죄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수사해서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데…… 검찰이 박수받던 것이 대개 이럴 때, 큰 경제 사건을 제대로 잡아서 피해를 복원해 줬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경찰 미제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입니다. 더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도 다음 국정감사 때나 행안위원회에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뭐냐 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를 가급적 억제하고 못 하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다 강화시킨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등록 기간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경찰도 조사과에 있는 분들이 힘들다, 너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털 건 털고 빨리 검찰과 공조할 건 공조하고 해야 되는데 모조리 여기서 다 하고 검찰하고는 일체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 사건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통령도 걱정하고 법무부장관도 걱정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사퇴하셨지만 지금 여당의 이 검찰개혁안—검찰개혁 아니지요. 검찰폐지안이지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사퇴로써 저항 의지를 보이신 박찬운 위원장이 걱정한 대목 그대로입니다.

검찰의 남용권이야 규제하고 억제해야 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가 발화하지 못하도록 초동에 바짝 옥죄고 하는 이런 기능 자체는 줄여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하는 기능 중의 대부분이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를 정치화시켜 버리는 것은 매우 위태롭다, 그걸 다 걱정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여당의 초선의원들까지 대통령님 모셔 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했는데 왜 이런 법이 계속 강행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암장 사건, 아까 법무부장관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잘합니다. 잘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선의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 그것이 근대 사법제도의 특징이자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잘못 하나가 신뢰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그게 없도록 항상 조금 불편하지만 서로가 견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게 해 놓으니까 사건이 그냥 묻혀 버리는…… 그렇다면 사건은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했는데 경찰이 인력 부족이나 사건 수사 능력 부족이라든가 또는 너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판단의 착오 또 때로는 경찰 내 일부 사람과 특정 이해관계자의 유착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이 묻혀 버린다면 검찰은 볼 겨를도 없이 국가가 해야 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또 추가 범죄에 대한 단호한 예방과 차단 이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이 3년 새 41%가 늘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도 26% 감소했고 이미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그래서 제가 다시 환기시키면, 법무부장관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이제 이런 사건을 덮어도 모른다. 그러면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경찰에 와서 고발하고 빨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요청했는데 경찰에는 사건이 몰려서 또는 경찰 내부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특히 지능범죄 같은 것은 그동안 검찰이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축적되지 않아서 못 하는 사이에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이 묻혀 버린다면, 사건 덮어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옛날 같았으면 사건이 묻히면 검찰에 갑니다. 검찰에 가서 '이거 좀 해 주세요' 부탁하는데 지금 검찰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검찰청에 가도 호소할 데가 없어지게 됩니다. 검찰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른 채 넘어갑니다.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초동수사 단계에서 좀 더 엄밀한 법 적용과 증거 절차,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소는 했는데 무죄가 나옵니다. 자본시장법 무죄 사건율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엄명하신 자본시장에서의 부정행위·사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겠습니까?

24쪽 보시겠습니다.

쯔양이라고 이분 유명한 유튜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쯔양을 질시하고 시샘하고 쯔양을 끝없이 괴롭힌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쯔양 사건이라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만든 범죄……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쯔양이 추가 피해를 봤겠지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할 텐데 이 가해자들이 재판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해자들은 또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동원하겠지요. 변호사를 쓰겠지요. 그러면 쯔양은 변호사를 쓰지 않고서는 이걸 입증하기 힘듭니다. 경찰 수사는 늦어집니다. 검찰은 수사를 들여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4심까지 가겠다고 재판소원까지 합니다.

쯔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났다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 쯔양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까 심신미약의 피해자들 또 힘없는 사람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재판소원까지 가 가지고 끝없이 결과를 늘릴 겁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선거법이고 무슨 법 해도 재판소원까지 가면 임기 다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없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고발했더니 가해자가 오히려 더 설치고 가해자들이 끝없이 재판소원까지 가고 또 그 가해자의 수사를 하는 사람을 법왜곡죄로 괴롭힌다면 이건 정말 여당 의원들도 전혀 생각지도 않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전, 한 열흘 전까지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에 단 이틀간 접수됐던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36건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얼마 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도 있습니다. 이분들 다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할 뿐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조롱하는 것이지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추행범이나 협박범 같은 사람들에게 재판소원으로 다시 판을 깔아 주는 게 사법정의입니까?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이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하면 현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폭증한 헌법재판소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각각의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늦어지면서 사법정의 실현의 시간도 길어질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왜 대법관이, 벤치가 10명…… 9명인가요, 브레드런(brethren)이? 9명이지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연방제 국가니까 주법원 이렇게 나오면서 다 거쳐지게 됩니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인권과 미국의 번영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의 판례를 변경할 때만 올라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1심 재판이 너무나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정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구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 필요한 것은요 오히려 1심 판사 또 1심 판결의 기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거법 사건 좀 힘센 여당 의원이라고, 권력자라고 1년 내에 안 끝내면 다른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선거법이 엄밀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선거법을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요, 그냥. 법이 있는데 권력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삼심제에 따라서 1심·2심에서 신속한 사실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원의

집중적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대법관을 36명까지 늘려서 뭐 마두로처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대통령한테도 결코 유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도 너무 심각하게 국민의 큰 원한으로, 국민의 눈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다음번에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지옥을 만들었나라고 물을 것이다. 지금 그 걱정들을, 무슨 공소청법·중수청법 이것 때문에 여당에서 이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같은 분도 통탄하고 걱정하시고 사퇴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여당 초선들 만나서 제발 좀 살펴 달라고 했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부족이, 어떤 족장이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예를 듭니다.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어서 검찰은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미국 FBI와 미국 연방검찰에 근무했던 한국계…… 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게 한국일보 인터뷰 사진입니다. 미 연방검사와 FBI 수사관은 원 팀입니다. FBI가 아마 장관님, 중수청 같은 거지요? 중수청이 FBI지요, 지금 모델이? 연방검사와 FBI 수사관은 원 팀으로 움직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이게 여기 검찰 간부로까지 근무해 보신 한국계 연방검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 전문 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 국회 법사위에서 불러서 한번 청문회 해 봤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검사는 수사 안 한다, 선진국 검사는 수사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수사합니다. 수사 전략과 법리 구성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수사관 없이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영장 신청 같은 단계마다 수사 논의를 합니다.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고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테랑 수사관도 수사에는 보완이 필요하고 또 변수가 발생할 때 바로 보완하지 못하면 그 비효율 때문에 사법질서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미국에도 보완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미 법무부의 검사업무지침, 저스티스 매뉴얼(Justice Manual)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이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검찰·경찰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쩌면 더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입니다, 특사경. 식당을 하면, 요식업 하면 식당에 오는 위생 담당하시는 특사경도 있고 농업·어업 모든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특사경이 있습니다. 노동도 많고요.

이 특사경들을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에 특사경은 검찰과 계속 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안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특사경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사경이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신문 기사를 보면 지금 특사경이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됩니다, 특별사법경찰. 이분들은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분야에서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때때로 중대한 사건은 생명의 위협을 감당하기도 해야 되고 대체로 좀 험한 일이지요, 사명감이 큰 일

이지만. 그래서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개는 1년 정도로 이렇게 근무 기간이 짧다고 합니다. 엄밀한 법집행을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방검찰청마다 이런 사건들, 또 지청마다 사건에 대한 일관된 매뉴얼과 지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건을 기소해서 또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래서 신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보자면 인공지능 같은 거지요. AI지요, AI. 잘 훈련된 LLM 같은 겁니다. 검찰에는 그 통계를 가지고 이 사건은 검사들이 아는 거지요. 검사들이 공부도 많이, 사건 판례도 많이 연구했고 기소도 해 봤지만 이런 사건은 재판에 가면 유지될 수 없다 있다를 검사들은 어쨌든 훈련하면서 쌓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사경들은 현장 근무도 피곤한데 그걸 공부하거나 따로 그 복잡한 사건, 특히나 상당수는 현장에서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특사경한테 걸려서 단속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잘못하면 폐업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는 엄청난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특사경의 사건 처리에 대해서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봄으로써……

검찰이 특사경을 통해서 무슨 부정을 하겠습니까? 물론 검사가 '저 집안 아는 집안인데 그거 왜 단속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치면…… 이렇게 돼서 검찰이 없으면 특사경을 누가 하느냐? 지방행정기관장이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느 군수가 '지난번 선거 때 대구상회 그 사람 말이야,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위생 한번 단속해 봐' 그런 걸 했을 때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검찰이 있으면 특사경의 사건 처리 결과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특사경도 무슨 조짐을 발견했는데 이걸 상의할 사람이 생기니까 특사경들이 오히려 검찰과의 협력을 요청했는데도 그것도 지워 버렸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안을 갖다가요.

그래서 지금 검찰 잡으려다가 특사경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특사경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걸 포기해서 사건이 묻힐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아주 집요한 무엇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테고 또 중대한 사건인데 겁이 나서 못 할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 특사경에도 끊임없이 일률적인, A지역에서의 특사경 활동과 B지역에서의 특사경 활동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사안은 같은 법안에서 같은 시행령으로 똑같은 의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별도 생기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과잉 조사, 남용되는 걸 통제할 장치도 없고 또 묻어 버리는 것을 통제할 장치도 없어지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를…… 국민의 권익과 또 국민이 범죄로 입은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받고 또는 그런 범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범죄의 총량을 억압·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부패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존하는가 이 걱정 때문에 법무부장관, 박찬운 위원장, 대통령까지도 제발 이념에 치우쳐서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자고 호소했는데 오늘 올라온 법안은 대통령 말이고 법무부장관 말이고 박찬운 같은 그런 전문가의 말이고 다 무시되었어요. 그래서 제발 멈춰 달라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찰과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경찰조직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올라온, 표결에 부쳐질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보면 당초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약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강경파가 다 무시했습니다. 정치적 부족, 그 족장의 지시였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의심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하게, 급기야 이걸 했다고 대통령이 공소 취하 거래했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취하 거래했다면 그것도 무서운 범죄고 그런 범죄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뿐 아니라 법무부장관 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아무 관계없는 수많은 학자들, 무엇보다도 특사경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조차 이것 있어야 된다, 검찰과 수사를 협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없으면 특사경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이 제대로 단속해야 될 일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단속되지 않는 그런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공소청법 최종안에 보면 검사의 직무 관련 조항 관련해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가 삭제됐는데 당시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 중 하나로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에서 빠졌지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은 경찰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도 검사의 지휘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민생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생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단속 기준 같은 것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주로 특사경이 누구냐 하면 세무·환경·노동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의 사법경찰입니다. 사법경찰이지만 경찰관이 아닙니다. 이분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신분증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현장에 나갑니다. 단속도 합니다. 세무서도 막 조사도 하고 그러지요. 해야 되고요.

이 특사경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하는 기능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다 할 수 없는 일에, 경찰이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보건과 세무와 환경과 노동을 특사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사경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만 1263명입니다. 그러니까 특사경 전체 인원의 약 48%, 절반이 경력 1년 미만입니다. 특사경 규모와 담당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경력이 짧고 형사절차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서 수사 상당 부분을 검찰 지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이것은 좀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까지 빼면 어떡하느냐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도 특사경이 있습니다. 안경업체 대표 한 사람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서 작년 11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특사경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보통 구속영장까지 신청되면 검찰에 협의도 하고, 여기는 검찰의 지휘라고 했습니다만 지휘라는 말이 거북하면 검찰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지휘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걸 삭제해 버려 가지고 이분이 영장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 안경업체 대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타 브랜드 디자인을 모방한 안경, 선글라스 49종을 국내 도매업체에서 납품받거나 중국 공장에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수십만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사경의 영장이 기각되자 수출입 신고 내역과 회계 자료, 매출 자료를 확보하도록 특사경을 지휘했습니다. 이런 지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해 봤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세관에 있을 거요', '그런 주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발주 기록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저지른 범죄의 규모를 다 밝혀낸 것이지요.

그래서 검찰은 특사경의 영장이 기각되자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수출입 신고 내역과 회계 자료, 매출 자료 등을 확보하도록 특사경을 지휘했습니다. 특사경을 가르쳤다는 것이 좋겠지요. 결국 법원은 최종적으로 안경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왜? 증거가 보완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이것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특사경은 의혹이 있었지만 치밀한 법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뜻밖에 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서 동종업계 사람들에 심각한 재산 피해를 준 이 업자가 오히려 특사경의 허술한 수사 때문에 면죄부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십만 개의 부정 브랜드가 유통되는 우리 시장과 기업들의 가치를 침식하는 범죄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지휘권이 사라지면 전문성이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사경 문제만 보더라도 개정해야 됩니다. 너무 갔어요. 너무너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을 죽 요약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 제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른바 사법 개악이라고 합니다만 사법 관련 법률 시리즈는 지금 우리 사법 질서, 사법의 체계 또 결국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상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오늘 상정할 법안이라도 일단 보류하셔서 재논의를 하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혹시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당초 걱정했던 점을 우리 야당도 더 걱정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더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 요청을 해 달라고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조차도 박탈하는 이런 문제가 어떤 계기를 가질 것인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이른바 민주당표 검찰개혁·사법개혁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을 폐지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을 허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 성공하려면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믿을 만하고 낫고 대법원보다 헌재가 훨씬 낫고 믿을 만하다는 것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암장되는 사건이나 경찰에서 장기화된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나마 검찰이라는 조직이 경찰을 견제하고 경찰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견원 간의 그것처럼 검경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영화 소재로도 잘 될 만큼 유명합니다만 그런 권력기관·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있는 것이 투명하게 만들고 한쪽의 부정을 막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지금 정성호 장관도 걱정했듯이 사

건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없애고 만든 중대범죄수사청, 미국은 아까 FBI하고 연방검찰 관계를 봤습니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이 미국 FBI 같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미국 FBI는 어터니 제너럴(Attorney General), 미국 법무부장관 그리고 연방검찰 이 사람들이 수사 단계부터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대형 범죄를 FBI와 연방검찰, 법무부가 국가의 범죄, 국가 차원의 범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무부장관도 걱정하시고 검찰개혁위원장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걱정했던 것이 그걸 싹 없애 버리면 미국에서는 가능했던 그 시스템을 검경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수사지휘조차도 이제는 법무부장관, 어터니 제너럴이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하게 만든 이것은 지난해, 지지난해 다수당의 정책과 태도와도 크게 차이 납니다.

당시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가 경찰공무원들의 인사의 공정성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는 민정수석실을 처음에 없앤다 그랬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만한 경찰국을 만든다 그랬을 때 그 경찰국이 행안부장관 산하에 있다고 경찰의 독립을 해친다고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수청의 수사지휘를 행안부장관에게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정말 국민을 위한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됩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말만 혁명한다고 됩니까? 다 없애 버리면 누가 우리 국민의 법익을 지키고 누가 국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를 억제합니까? 보완수사는 범죄의 증거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기소와 공소유지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됐습니다. 수사 개시·종결도 마음대로 합니다.

검경 간의 갈등 같은 것이 영화에도 자주 소재가 되고 더러 검사가 좀 더 악한 역할을 하고 경찰이 정의로운 역할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또 거꾸로 실제로는 경찰의 부패를 검찰이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상호견제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수사 개시도 경찰이 하고 종결도 경찰이 하고 검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경찰이 던져 주는 기록만 가지고서 기소를 하는데 기소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인터뷰에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무슨 일이 있는지, 또 경찰이 수사를 종결 처리하거나 수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의식 정도는 해야 그 수사가 암장되거나 사라지거나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국가의 수사 총량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처리될 법안의 핵심은 오는 10월 문을 닫는 검찰청 대신에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할 것인가…… 지금 둘 다 안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이라든가 여당 내 온건파는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검사들의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까운 것이지요. 증거 보완조차도 안 되면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형사법 제도의 틀 안에서 보면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 버렸습니다만.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 뒤에 다시 사건을 그대로 송치해 버리면 검사는 더 이상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까 특사경 사건을 한번 보셨습니다만 수십만 개의 유명 브랜드 안경을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팜으로써 많은 안경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그 브랜드를 만들고 했던 그 업체한테도 피해를 끼친, 시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던 안경업체 대표를 특사경의 조사 결과만으로 논의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자칫하면 그 시장의 유통질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정부가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통상 외국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왜 우리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외교적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특사경의—지식재산처 소속 특사경이었지요—법원에서 기각된 수사 서류를 보고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한 전례처럼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대충 해 놓고 또는 수사를 아예 기소도 하지 않게 이첩도 하지 않게 묻어 놓고 해 버리면 국가가 해야 될 범죄수사 역량, 범죄 억제 능력이 감퇴되는 것이지요. 검찰은 단지 그냥 송치되는 사건만 기소하게 되면 그 기소의 핵심적인 증거도 보강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찰은 엄청난 사건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복잡한 사건은 검찰과 처음부터 공조하거나 검찰과 협의하면서 신속하게 그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가닥도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도 무혐의 처리될 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건 떠넘기기까지 일어납니다. 처리가 지연되거나 뒤늦게 문제가 생기면 기관끼리 책임 공방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사건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차명 주식투자를 한 장면이 포착되어서 수사를 받아 온 어떤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아직 기소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본 사건입니다. 이거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법 만들어 가지고 너네 당 출신 의원 하나 막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오해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효율성을 넘어서 수사·기소 기관 간의 견제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호 장관 자리에 계신데 정성호 장관이 필리버스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돈을 받고 사건을 덮어 버려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견제를 통한 균형, 상호견제 이게 민주적 기구의 거버넌스 구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OECD에서—부패수사 총량이 대한민국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라—보낸 서한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만, 이게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경찰 수사는 아예 공소청,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검찰청 이름인데 검찰 자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거기다가 수사도 못 하게 해 놓았으니 남부지검의 자본시장수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방법도 없지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지금 수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니 대통령도 걱정하고 여당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사기꾼과 도둑놈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잡아낼 능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통계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자본시장 기소 사건에서 무죄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마땅히 해 줘야 될 자본시장을 보호하고 또 아까 상표 같은 이런 것,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잡고 또 억울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 주는 것이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가 범죄 전체를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다, 억제한다, 국가의 범죄 억제 능력 이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을 스스로 낮추려는 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십니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표적수사를 한다, 결국 과거의 검찰이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공소청은 이제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빨을 다 빼놨습니다.

공소청보다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조차도 표적수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중수청이나 경찰의 표적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막으시려고 합니까? 특정한 수사기관이 비대해지고 통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의원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올해가 6월 민주대항쟁 40주년입니다. 6월 민주대항쟁의 시발은 뭐였습니까? 전두환 독재였지만 그 시발은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당시에 전두환 독재 그리고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경찰 인사의 배후였다고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정권의 실세가 뒷배경에 있는 경찰은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영장도 없이 학생들을 하숙집에서 막 데려가서 물고문 수사를 해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 시절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 시절에 의문사가 참 많았습니다. 갑자기 저 교외선 철도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경찰, 특히 공안경찰, 여기 계신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시기에 공포를 경험하셨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백태웅의 소재를 찾겠다고 이번에 OECD 대사 가시는 백태웅 교수, 그 고등학교 후배가 운동권 서클에 그렇게 깊숙이 가입한 것도 아닌데 백태웅의 소재를 알 것이라고, 또 박종운의 소재를 알 것이라고 영장도 없이 데려가서 물고문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검찰과 국가안전기획부에서도 ‘경찰 저것 저렇게 하다가는 사고 한번 낼 거야’. 저도 밀실 가서 20일 동안 물고문 압력받으면서 조사받았습니다. 그 공포가 어떤지를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것을 막아 내느냐? 그게 왜 시민혁명, 위대한 민주대항쟁으로 이어졌느냐? 용감한 검사 때문이었습니다. 용감한 기자 때문이었습니다. 용감한 의사 때문이었습니다. 경찰만 두면…… 그때 그 경찰들도 아마 사명감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국회 때 같이 국회의원을 했던 권인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불위 경찰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가를 다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공소권 남용, 검찰의 수사권 남용 그걸 걱정하신다면 이제 완전히 통제장치도 없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80년, 40년 전 박종철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검사들이 ‘이것 큰일났다’, 변사 보고가 올라오니까 알게 된 거지요. ‘탁 치니까 갑자기 억 죽었다.’ 왜냐하면 변사 처리를 하려면 경찰도 검찰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런 보고할 필요 없지요?

유상범 수석님, 이렇게 되면 박종철 때처럼 경찰에서 변사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상범 의원 의석에서 — 할 필요 없지요.)

할 필요 없지요.

그래서 검사가 안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 뒤에 박처원이라든가 치안분실 뒤에 엄청난 배후가 전두환이고 전경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대찬 검사도 공개적으로 저항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변사 보고서가 들어온 것 보고 ‘치안분실 드디어 사고쳤구나’ 그래 가지고 당시에 아침마다…… 지금은 검찰청 검사실을 기자들이 출입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법조를 출입하던 한 20년 전부터인가 그리 됐는데 그전에 30년, 40년 전에는 아침이 되면 서소문의 검찰청사를 기자들이 한 바퀴 좍 순회를 합니다, 아침에 커피도 마시면서.

현 검사가 중앙일보 기자한테—신성호 기자입니다—딱 흘려 줍니다. ‘큰일 났어. 경찰이 결국 일을 저질렀네. 학생이 하나 죽었대’ 딱 이랬습니다. ‘뭔데?’ 물어보니 더 이상 이야기 안 해 주지요. 다음 방에 갑니다. 신성호 기자가 노련하게 물어봅니다. 옆 검사실 가서 ‘어휴, 큰일 났대. 서울대 학생 하나가 분실에서 죽었다며?’ 이렇게 넘겨짚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는 ‘아,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2학년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 큰일 났어.’ 검사들이 힘에 눌려서 말은 못 하지만 그 당시에 변사 사고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생각하고 소극적이지만 언론에 흘린 겁니다.

중앙일보 1면에 납니다.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가 서울대 출입기자한테 알립니다, ‘야, 1·2학년 중에서 인문대 학생 중에 실종됐거나 지금 학과에서 소재가 파악 안 되는 사람 찾아 봐’. 그게 언어학과 박종철이라고 중앙일보가 10시 반 마감 전에 확인합니다. ‘일보, 서울대 박종철 군 물고문 사망’, 1단으로 조그맣게 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물을 먹었다고 막 경을 쳤겠지요.

이 당시에 경찰에 출입하던 김충근 기자 또 황열헌 기자 이런 용감한 기자들이 나갑니

다. ‘이게 변사면 검시를 한 의사가 있을 것 아니냐,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치안분실이 용산에 있었는데 용산에 있는 용산병원 한 군데 당직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것 검사가 알려 줬겠습니까? 안 알려 줍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직 의사가 누구입니까?’, ‘어제 아침에 검시 하나 한 것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도 입단속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대공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기자의 용감한 취재에 흉부 압박으로 인한, 또 안에 물 같은 것도 좀 있었다 이렇게 양심의 신고를 합니다. 그게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그럽니까? 변사 신고 때문에 검찰이 그 단서를 찾은 겁니다. 검찰은 수사를 착수하기 위한 이런 언론과의 공조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언론이 더 용감하게 취재를 못 했고 그 의사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묻혔을 겁니다.

그래서 보도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경찰이 뭐라고 발표합니까? ‘탁 치니 억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그래, 그러면 한번 부검을 해 보자’가 됐습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안상수 검사가 등장하고 당시 국정원에 파견돼 있던 정형근 검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분들도 ‘아니, 공안수사도 필요하고 하지만 학생들을 막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때려 죽이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견제와 같은 수사권력기관이지만 한 권력기관이 지나치게 발호하는 데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했기 때문에 드디어 위대한 6월 시민항쟁의 큰 실체적 진실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걱정이 돼서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누군가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중수청 또 경찰의 표적수사는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이제 견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검찰이 과거처럼 들여다보지를 않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걱정했는데도, 대통령이 신신당부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여당은 누구의 여당입니까? 정부 여당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치적 족장, 부족의 족장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습니까? 그 족장은 드디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공소 취하를 가지고 법무부와 거래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정치가 정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정치적 족장과 그 정치적 부족의 힘에 휘둘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올라오면 재의결하십시오. 지난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재의결해 달라’ 이렇게 돌려보내십시오.

지금 공소청법, 공소청 수사권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거나 경찰이나 중수청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이런 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

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관의 선의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된 송아지 뿔…… 버릇을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습니까?

만일 그런 경우라면 66년 전,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단호하게 불의와 막대한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마산시민 학생들을 총으로 사살했던 그 내무부장관, 경찰 책임자들…… 그러면 경찰을 해체해야 됩니까? 경찰을 고쳐서 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찰이 이기붕 같은 그런 악당, 이기붕의 수하였던 그런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고 그런 명령 내린 사람들 지휘체계를 잘라 버리면 경찰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찰은 인터폴 총재를 배출할 만큼 세계적인 경찰기구의 모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의 김종양 의원이 그 살아 있는 증인 아닙니까, 인터폴 총재?

검찰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뭘 이렇게 다 없애 가지고 사법 집행절차의 근본을 다 흔들고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의 앞으로 수사라든가 기소 자체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사안을 만드시냐 이겁니다.

오늘 너무 지나쳤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더 하겠습니다. 책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밤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가 많습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 아니지만 검찰 출입을 오래 해 봤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다음에 이처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각국의 검찰 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만든 각국의 검찰 제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도 밤새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각국은 검찰 제도를 유지하는가, 대한민국에서만 검찰을 없앨 것이냐……

형사·사법 제도는 추상적 원칙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강조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아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검경 수사·조사 분리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 조사 보완 권한 이런 게 사라짐으로써 약자와 특히 장애인들, 우리나라의 소수 약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당시에 장애인단체 변호사 또 재심 사건 변호사의 호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떤 정치 부족이 창궐해서 어떤 족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 없는 나라의 최대 피해자는 약자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는 반년 남짓 뒤면 검찰 없는 나라가 됩니다.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개혁추진단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난해 10월에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법안도 만들어 놓고 또 자문위원장에 민변 출신 진보적 법학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분조차도 걱정하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

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FBI와 연방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진리인 듯이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족장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검찰 제도라는 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레미제라블 시대,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의 시대에는 없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과 근대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인권 보호와 신속한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해서 경찰과 법원 사이에 검찰이라는 제도를 모든 선진국가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 경험이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이른바 개혁 담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 권성동 의원은 검사로부터 피해를 봤지만, 검찰 수사의 피해를 보았고 정치적인 피해까지 봤지만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고 여당과 협력해서 검찰개혁을 상당 부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에서는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점점 그것을 더 악마화 하면서 지금 검찰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것하고 집단 전체를 악마화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에 관련된 것은 검찰의 기소와 검찰의 일 중에 99%의 사건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정치인들이 걱정하고 정치인들이 비판했던 일은 주로 권력범죄에 관한 것이었고 인지수사, 특별수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각살우 한다고, 교각살우가 되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 검찰에서 모든 보완수사권도 빼앗아 버리고 더구나 경험과 기준의 통일을 위해서, 보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특사경의 수사지휘 협의도 빼앗아 버리면 도대체 이 나라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도개혁에 대한 환상도 큽니다. 법이 바뀌면 현실도 자동으로 바뀔까요? 제도의 작동은 축적된 운영의 결과입니다. 급격한 구조 변경은 공백과 혼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경 수사 분리 과정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식거래를 했던 동료 국회의원 하나가 탈당도 하고 했습니다만 검찰, 경찰 핑퐁 하면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나 보호하려고 국회가 똘똘 뭉쳐서 이런 짓을 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개혁에는 그 시행착오로 인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정치인들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치릅니다. 그래서 박찬운 전 위원장님처럼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회 전체 이익과 피해를 비교형량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검찰 없는 나라의 최대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보완수사 그동안 많이 논의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는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런 논의를 수렴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본질은 직접수사인데 이게 박탈하면 기소 오판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같은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의 책임은 범죄로부터 선량한 피해자를,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속하게 격리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만일 국가가 마피아로부터, 깡패 조직으로부터, 아주 악랄한 어떤 사기집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왜 있어야 됩니까? 검찰은 왜 필요하며 경찰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근본 문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야당만의 주장이라면 당파적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정부 여당 내에서, 진보적 법학자까지 걱정하는 대목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다음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유시민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뿐 아니라 문명사의 수치란 말도 진보진영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브로드하게 넓혀서,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는 걸 보니까 진짜 좀 숙고하시나요? 저는 사실 오전에 시작을 하면서 그전에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원래 소수당이 다수당의 표결에 밀려서 소수당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다수당 동료 의원들에게 제발 재고해 달라고 호소하는 절차인데 그것까지도 다수당에서 그 시간 동안 모든 상임위의 논의를 독점해 놓고, 더구나 충분한 숙의 절차도 무시해 놓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소수 야당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생각해 달라고 절규하는 그 시간까지 뺏어 먹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새벽부터 돌연 여당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엄청난 변화의 전조인가, 일말의 양식이라도 찾았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엄청난 통계도 갖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왜 문명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로도 중요한지, 더구나 세계에 우뚝 솟은 글로벌 모범국가, 모든 세계 시민들이 가 보고 싶어 하고, 존경하고 열광하는 BTS의 나라, 오스카의 나라, 모든 글로벌 문화대상을 휩쓴 문화대국, 세계 최고의 반도체의 나라, 세계 최고의 조선의 나라,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의 나라 그리고 비상계엄 하나로 웬만한 나라 같았으면 시장이 무너지고 국가가 큰 혼란에 빠졌을 텐데 바로 그날 밤 시민과 국회가, 더구나 당시에 여당 쪽까지 힘을 합쳐서 민주주의를 복원시켜 내는 그런 레질리언스(resilience)한 나라, 세계가 감탄한 나라, 이 나라에서 문명의 수치 같은 이런 법, 어떤 사법제도의 하나의 문명의 척도, 문명의 한 계단이었던 검찰 제도를 통째로 없애고 삼권분립을 허물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서 멈추자고, 멈추어 달라고 지금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하면 오후 4시에 바로 표결하지 말고 제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테니까 조금 더 숙고해 주십시오.

아마도 숙고하러 다 가신 것 같지요?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다 지켜보시는 국민은 없겠습니다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고 그러실까 봐……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민주주의,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왜 여기에 나와서 당랑거철도 아니고 이것 다수로 밀어붙일 것이 뻔한데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 민주주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광복 81주년 동안 식민지의 폐허에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보릿고개를 딛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앞으로 인구도 줄여서 스스로 소멸하는 첫 번째 문명국가가 될지 모른다는 큰 위기감, 그리고 정치가 이제는 정당 간의 대립으로도 모자라서 거대 여당 내에서 한 정치적 부족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상황에 이른 이런 정치적 파편화, 분열, 이것이 광복 81주년 동안 성공으로 이끌었던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그리고 개혁된 검찰 제도, 박종철 군 같은 이런 무고한 학생들을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영장도 없이 데려가서 물고문으로 죽이고 했던 그런 국가가 되지 않도록, 그게 40년 전 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수사도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그리고 그냥 범죄가 묻히지 않도록 법치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 나라는 권력범죄는 처벌도 안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식거래하다가 그 주식거래도 대통령도 아주 분노하는 위장된 거래임이 드러나서 탈당도 했는데 그 국회의원 누가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아마 앞으로 다 피해 갈 겁니다. 4심제까지 갈 겁니다. 임기 초에 무슨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해도 4심제까지 가려면 엄청 걸릴 겁니다.

진정 필요한 개혁은 대법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1심법원이 제발 빨리 법 절차대로 법정기한 내 재판을 끝내서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해 주고 보상해 주고 범죄자는 처벌받도록,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대법원장이, 1심 재판이 한참 늦어져서 선거법 재판의 기준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선거법 재판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서 대법원장을 흔들고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삼권분립을 그대로 허무는, 법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그냥 선출된 권력 발 아래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법원을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미국 대법원에서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지막지해도 대법원의 판결 앞에서는 승복했습니다. 바로 관세협상, 관세를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익이 걸려 있고 미국 대통령의 체통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미국 대법원은 비록 자기가 공화당 정부 시절에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일지언정 미국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삼권분립을 우리 국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삼권

분립, 우리 보수당, 대한민국 광복 81년의 한 축이었던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정치적 책임을 다 못 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권도 잃었고 또 우리가 추천했던 대통령후보가 탄핵당하고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나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1년간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우리 정당의 앞선 지도자들,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켜 온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그중의 하나가 삼권분립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독재정부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삼권분립을 대놓고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출되었기 때문에 사법부보다 월등한 권한이 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삼권분립의 기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판,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용기 없음으로 해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삼권분립의 기초마저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 온 법의 지배, 법치라고 하는 원칙도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우리 당이 아무런 견제기능을 못 하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집권여당 내에서—저는 전체 집권여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지금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정치적 부족이 그 족장을 중심으로 집권여당을 좌우하면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한편에는 우리 당의 무력함, 우리 당의 잘못도 있습니다. 크게 반성하고 크게 개혁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수의 여당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지키자, 함께 이거는 허물지 말자.

지금 비상계엄을 했던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 심지어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뛰어 들어와서 함께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봉쇄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 50여 명은 의사당에서 가까운 당사에서 계엄해제 시간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다가 해제가 된 이후 정부가 신속하게 계엄해제에 대한 국무회의를 열지 않자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그다음 날, 계엄해제 결의가 있었던 2시간 뒤에 했습니다. 50명이 함께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정당, 우리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빼앗겼고 또 온갖 비판과 심지어 수모도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은 광복 81주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켰던 법의 지배, 삼권분립입니다.

왜 삼권분립이냐? 이것이야말로 근대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근대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받아들인 서방 서유럽 국가들이 번영을 먼저 시작하고 이 원리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였던 서방 국가들, 친서방 국가들,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이 번영했던 원칙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들은 '번영한 국가들에서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와 포용적 제도'라고 했

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차이를 들었습니다. 왜 같은 한반도에서 오히려 부존자원이 훨씬 적은 대한민국은 변영하고 북한은 저렇게 되었을까?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사진처럼, 위성사진을 보면 왜 한반도의 남쪽은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한반도의 북부는 저렇게 암흑의 천지가 되었을까?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딱 알파벳 세 글자를 썼습니다, 'WOW'.

그게 가능했던 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거할 수 있고, 또 법원이 처단하고. 지금 경찰의 수사권, 경찰의 인사권, 중수청 수사권 모두 행안부장관에게 주자고 하시는데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때 그랬습니다.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내무부장관이 온갖 악행을 다 했습니다.

그날 밤 마산시민, 1만여 명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몰려나오자 이기붕의 지시를 받고, 사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기표지에 아마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장면 박사가 미국에서 투병 중에, 선거후보 등록 이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기붕이가 당선되려고 대통령 못지않은 호가호위를 하면서 온갖 권세를 휘둘러서 내무부장관을 지휘하고 내무부장관은 경찰을 통제하면서……

마산시민들이 항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도시에서는 큰 저항이 없었지만 유독 마산 사람들은 1만 명이 뛰어나와서 이러네요. 경찰봉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총은 쏘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에만 10명이 총탄에 숨졌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김주열 열사였습니다.

엊그저께, 지난 일요일 날 마산에서는 3·15 국립묘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또 3·15 특별법이 제정된 지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셔서 3·15 민주의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민주주의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살펴야 될 부분이 그 대목입니다.

지금 삼권분립 또 수사기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1공화국 시절에, 경찰 파쇼 시대에…… 지금이야 경찰의 수준이 높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제도의 건전성은 한 사람의, 한 기관의 선량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공화국 때만 그칠 줄 알았더니 5공화국 때까지 거기에 나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 박종철 사건에서 보듯이 수많은 민주인사, 학생들을 영장도 없이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견제하는 수사기관이 없었다면, 검찰이 없었다면 국민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이게 모든 것이 삼권분립,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법은 법원을 통해서 그 기준을 보편적 기준,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

또 하나 근대국가의 가장 큰 발명장치라고 하는—막스 베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관료제를 통해서 숙련된 공무원들, 지혜의 사람들, 지혜로운 분들, 아주 오랫동안 숙련되고 많은 공부를 했고 전문성을 쌓아 왔던 그 공무원들, 국가공무원제도를 통해서, 즉 행정부를 통해서 선거에 항상 표를 위해서 매달려야 되는 입법부가 입법으로, 예산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발전하도록,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또 국가가 하나의 원칙 속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그걸 지켜 주는 것이 법원이고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저희 국회인데 이게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상황은 보면 모든 것을 선출된 권력인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래서 99%는 꼭 해야 될 일인데 그 1% 잘못한 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한 제도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온다고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냥 선거로 뽑아서 우리 의원들이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따로 뽑고 판사도 여기서 선거로 뽑고 공무원들은 여기 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이 번갈아서 그 임기 동안 다 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대국가의 고전이라고 하는 삼권분립,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에 앞서서 영국의 정치학자 존 로크의 정부론은 왕권신수설을 부인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몽테스키외는 사법권을 보태어 삼권분립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것 있지요. 많지요. 검찰개혁 필요하지요. 그래서 검찰개혁 하자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혁하면 될 것을 싹 없애 버립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 검찰이라는 제도는 삼권분립, 몽테스키외의 정신 이런 것들이 개화되던 시기에, 바로 레미제라블의 시대, 장발장의 시대, 자베르 경감의 시대에는 없던 새로운 근대 문명의 근대 민주화와 인권과의 보루로서 검찰제도를 만들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앞선 문명국가이자 문화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테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삼권분립, 몽테스키외……

삼권분립이 불가능한 체제는 전제정, 이분이 그 몽테스키외 책을 번역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왜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따로 구분하는가, 그리고 법의 지배, 좀 더 나아가자면 왜 검찰제도가 탄생했나……

제가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공화국을 지탱하고 또 미국이란 나라를 지탱하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공화주의가 있습니다, 공화주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고대 문명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태생지라고 하는 아테네 같은 경우—아테네, 도시국가였지요—민주주의의 표본으로, 고전으로 해석되고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얼마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화정을 택했던 로마에 대해서, 로마사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민주정으로만, 의회로만 구성되지 않고 정부와 또 법원을 따로 구성하는 이런 삼권분립까지 갔습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다수 여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면서 정치학자 박상훈의 글을 자주 읽어 봅니다.

박상훈 '고전으로 읽는 민주주의', 몽테스키외…… 저는 두꺼운 책을 볼 시간이 아직 많지 않아서 최근에 신문에 기고한 박상훈 박사의 글을 봤습니다. '고전으로 읽는 민주주의',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자유를 권력으로 이해했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을 가져야 자유롭다고 여겼다. 그래서 민회에 참석하고 행정관과 배심원을 번갈아 맡아 법을 만들고 집

행하고 적용하는 일을 인민이 직접 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인들의 자유는 데모크라시, 즉 데모스(인민)가 크라시(통치)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말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나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자유는 권리가 되었고 권력은 인민이 아니라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에 위임된다. 권력을 가진 자의 권리는 제한된다.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이해충돌 가능성을 두고 엄격한 심사를 받고 공익에 봉사하도록 선서하며 위반 시 모욕과 처벌을 받는다. 주기적으로 파면과 재신임에 대한 인민의 평결도 거치며 권력은 나뉘고 견제됨으로써 남용을 막는다.

현대 민주주의는 인민 권력론이 아니라 제한 정부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권리를 가진 인민은 자유롭고 권력을 가진 정부는 책임을 지는 일종의 균형 정부론이 필요했는데 이 일에서 몽테스키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현대 정부가 만인의 평등한 자유를 위해 잉태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사상적 기원에 대해 알고 싶은가. 그러면 법의 정신을 읽어야 한다.

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하늘에 감사했다. 나로서는 정부가 있는 시대, 즉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정부의 신민으로 태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한 하늘의 뜻에 감사한다. 플라톤이 철인의 통치론을 전했다면 몽테스키외는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 사랑할 만한 정부의 통치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몽테스키외는 1689년에 태어났다. 로크의 시민 정부론이 이미 발간되었던 그 해다. 로크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상실한 정부는 전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 역시 자유를 정부론의 기초로 삼았다. 다만 로크의 경우 잘못된 정부를 뒤엎는 혁명론에 집중했다면 몽테스키외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정부론을 세우려 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만물은 자신들의 법을 갖고 있다. 신에게도 신의 법이 있고 자연에도 지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법칙이 있다. 인간 역시 불변의 법칙에 지배되지만 놀랍게도 인간만이 신이 정하고 자연이 부과한 법을 끊임없이 위반하고 스스로 정한 법마저 바꿔 댄다.

인간만이 지성과 감성을 가졌기에 창조주를 잊고 타인의 존재를 잊고 자기 자신조차 자주 잊는다. 그렇기에 철학자들은 도덕의 법으로 경고해야 했고 입법자들은 정치 관련 법과 시민 관련법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했다. 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해야 하는 인간만이 정부를 만들어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통치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몽테스키외에게 정부는 필요악이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보기에 정부는 인간의 본질에서 발원한 가장 인간적인 산물이다. 이 점에서 몽테스키외는 로크의 최소 정부론보다 홉스의 최대 정부론에 가까운 듯이 보인다. 하지만 홉스와도 아주 다르다.

자연 상태 속에서 홉스가 말하는 인간은 힘을 추구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존재다. 그 귀결은 내전이고 혼란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리바이어던 국가다.

몽테스키외는 다르게 생각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과 열등함을 자각한다. 그리고 그 귀결은 국가가 아니라 사회다. 그런데 사회를 이루자마자 인간은 자신이 나약하다는 감정을 상실하고 만물을 정복

하려 한다. 지배하고 장악하려는 욕망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를 대신할 근대적 대체물로 몽테스키외는 다양한 중간 집단과 결사체의 역할을 중시했다. 이익집단 다원주의에 대한 최초의 발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과거 인민이 직접 통치하던 소규모 도시 공화정 때와는 달리 현대 공화정은 대의 정부여야 한다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중요한 기여였다. 인민은 통치할 수 없다. 통치는 인민이 적법하게 선출한 대표에게 맡겨야 한다. 인민의 탁월함은 통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잘 뽑는 데 있다. 몽테스키외는 통치자와 인민이 대표나 매개, 균형자 없이 직접 결합하면 그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 인민도 통치자도 더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주의가 온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여론 독재나 팬덤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다. 권력은 책임의 사슬로 묶어야 하는데 인민을 권력자로 만들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폭정이 온다.

요즘 우리 여야 정당에서 간혹 보는 팬덤 현상도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몽테스키외는 그의 매우 긴 이름이 말해 주듯이 전형적인 법복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법학은 물론 고전에서 신학문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22세에 보르도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었으며 27세에는 사망한 백부의 유언으로 재산과 작위는 물론 보르도 고등법원장이라는 관직까지 물려받았다. 이른 나이에 경력의 정점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인간과 정치, 사회를 분석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법원장 12년을 끝으로 관직을 팔아 돈을 마련한 뒤 파리로 떠났다. 관직 매매가 합법인 시대였다. 그 뒤 영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를 돌아보며 연구하며 본격적인 저술가의 길을 걸었다.

법의 정신의 서문은 라파엘로의 그림 앞에서 기죽지 않고 '나도 화가다'를 외친 코레조 이야기로 끝난다. 몽테스키외 역시 앞선 위대한 철학자들이 쓴 저작을 보면서 감탄했지만 결코 용기를 잃지는 않았다. 몽테스키외에게 법의 정신은 20년의 작업이었다. 나중에는 백내장으로 눈이 급격히 나빠져 3명의 조수를 구해서 구술로 집필을 완성해 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이제 나도 정치 철학자다!'.

약간 추상적인 내용인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처한 이야기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몽테스키외 고전의 '법의 정신'을 번역한 교수 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훈 정치학자의 다른 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우리 정당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 때문에 도저히 문명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법들이 지금 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의결되고 있습니다.

참여와혁신이라는 기구에 있던 박상훈 정치학자의 글입니다, 팬덤과 인기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

한동안 사람들은 정당 정치를 무척이나 재미없어 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프로듀스 101'이나 '고등래퍼', '미스트롯'처럼 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후보를 뽑으면 안 되냐는 의견을 낸 사람이 많았다. 인기투표도 하고 팬덤의 형성도 볼 수 있어야 정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당들은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확대해 왔다. 여론조사와 국민선거인단을 통해

후보 경선을 했다. 팬덤 추종자를 가진 정치인도 등장했다. 공천을 위한 경선은 요란해졌고 당대표 선거도 대통령선거만큼이나 주목을 받았다. 당원 가입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어느 정당이나 팬덤 당원 문제로 고심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지금 우리 이 법도 이런 정치 과정 속에서 강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법무부장관까지 걱정하는 법안이 왜 정부 여당의 표결로 강행되는 것입니까?

덩달아 저질 정치 유튜버들이 끝도 없이 늘었고 이제는 이들이 정당정치를 대신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어느덧 정치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여론 지지와 팬덤 지지자만 가지면 당대표나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성큼 우리 앞에 왔다.

민주정치에서 공직자 선거는 시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자 과정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적법한 대표를 파견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권력을 운용한다. 권력의 원천은 시민이고 시민에게서 공권력의 정당성이 발원한다.

반면 국민 참여형 경선이나 인기투표, 팬덤 현상에서 스타와 대중 사이의 권력 관계는 스타 편향적으로 변한다. 민주적 선거제도와 인기투표형 경선은 모두 이른바 국민 참여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민주적 선거의 경우 선출된 사람은 소속 정당의 공약에 기초를 둔 시민 대표이자 또 그 때문에 책임성의 윤리를 부과받는다.

반면 스타는 팬들을 대표해 선출된 것도 아니고 특정 정견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전자가 시민과 대표 사이의 주권 현상을 특징으로 한다면 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시장적 교환 관계의 특성을 더 많이 갖는다.

물론 공직선거도 인기투표적 특징을 가질 수 있고 팬덤이 지배할 수 있다. 그러면 정치는 민주적 이상과는 멀어지고 점차 선출직 군주정에 가까워진다. 인기와 팬덤은 시장 지배력을 구현하는 상품이 되고 결국 주권은 시민이 아니라 팬덤과 인기를 가진 특정 정치인 개인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시민에게는 자유를, 통치자에게는 책임을 부과하는 체제라면 팬덤 정치나 인기투표적 정치는 특정인의 자유를 위해 열성 지지자들이 헌신하는 체제에 가깝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의 파괴 양상을 보여 주는 하나의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는 정치적 부족주의, 심지어 한 정당 내에서도 강력한 정치적 부족이 정당 전체를 좌우하는 그 양상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4시간 남은 줄 알았더니 지금 18분도 안 남았네요. 갑자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준비한 게 많은데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그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주십시오, 슬라이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다수당이 이끌고 어떤 경우에는 독주하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표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숙고해 주고 이 법안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 시간을

저희들에게 몽땅 양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토론 없이 오롯이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를 오늘 처음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나마도 24시간 만에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모처럼 관용을 그리고 정말 원칙을 지켜 주셔서 필리버스터를 소수 야당 의원에게 오늘 새벽부터 오롯이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여야가 다시 한번 국회에서 협치를 만들고 또 광복 81주년의 대한민국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위에서 발전시키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하면서 모두에 AI 인공지능, 문명 대전환의 유레카의 순간이 꼭 10년 전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 정치만 그걸 몰랐다라고 통탄했습니다.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인공지능 대혁명의 유레카의 순간은 바로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때 만났던 유발 하라리는 넥서스에서 유레카의 순간이 그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정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야 모두 정치, 정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걸 보고서 중국의 장군들과 중국의 지도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나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박혔을 텐데 중국의 장군들과 지도자들은 큰일 났다, 미국의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동양의 최고 전략 게임인 바둑에서 뒤진다니.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중국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은 10년 목표로 AI 대국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우리 정치는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 지난 81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위대한 성과는 앞선 지도자들 또 앞선 여야의 지도자들이 만든,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서 함께 만든 성과였다 생각합니다.

그 성과는 바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 그래서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야기했듯이 '번영하고 성공한 나라에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와 포용적 제도가 발휘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말이 민주주의 공화국이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 암흑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 그런 제도 위에서…… 아무리 이전에 독재정부라도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와 법치를 이렇게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제도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우리의 검찰 제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다수 동료 의원들에게는 큰 공적이 되었습니다만 레미제라블의 시대,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의 시대에는 검찰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프랑스 혁명과 유럽의 민주주의 혁명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검찰이 국가가 범죄를 아주 체계적으로 억제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또는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의 그 무고함과 억울함을 충분히 살필 수 없었던, 자베르 경감 혼자 다 판단해야 했던 문명 이전의

그런 제도를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고안된 제도가 검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제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검찰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많이 찬성했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검경 수사 분리 당시에 검경 개혁법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찰조사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경찰에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은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의 지배가 없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찰을 큰 천적으로 생각하고 제도를 없애려고 합니다만 올해가 6월 민주대항쟁 시민혁명, 1987년 6월 민주시민, 민주대항쟁의 40주년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 대학 동기이자 OECD 대사로 최근에 임명된 백태웅 군을 잡으려고 또 박종운을 잡으려고 고등학교 후배이자 서클 후배였던 아무 죄도 없는 박종철을 대학교 하숙방에서 데려가서 공안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밝혔습니까? 용감한 검사, 용감한 언론인 또 용감한 의사가 밝혔습니다.

그 당시 공안경찰은 전두환의 그리고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의 막강한 배후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국가안전부도 저러다 큰일 나겠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무소불위로 달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곤히 잠자던 대학생을, 백태웅 잡겠다고 박종운 잡겠다고 영장도 없이 데려가서 물고문을 시작합니다.

더 큰 사건은 그로부터 학생이 물고문당해서 죽었지요. 죽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밝혀 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진하는 공소청법에 결정적 결함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검사들은 박종철 고문치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런 전두환 독재, 전두환·전경환의 경찰을 좌지우지하는 그 막강한 권력 배후가 있었어도 당시에 변사 보고를 검찰이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검사는 그 변사 보고를 보고 드디어 걱정할 일이 생겼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취재에 응했고 언론은 그걸 특종으로 이어 갔습니다. 용감한 후속 취재가 이어져서 당시 검안을 했던 의사가 용기를 내어서 물고문이었음을 밝혀 냈습니다.

당시에 공안분실의 검찰·경찰 권력자들 뒤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공 분야에서는 신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박처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고 오늘날 인권을 바로 세우고 경찰의 가혹수사를 멈추게 하고 우리 21대 때 국회의원 같이 했던 권인숙 전 의원에 같은 그런 야만적 폭력을 휘둘렀던 경찰의 수사를 막았던 제도가 누구입니까? 검찰입니다.

검사가 권력에 빨리 굴신하고 또 권력을 잡겠다고 오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

분 검찰 활동은 보완수사요구권이 보여 주듯이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범죄자를 좀 더 정확하게 처벌하고 또 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이고 문명국가 법치의 집행장치입니다. 그런데 1%의 인지수사, 권력수사, 특별수사에서 어떤저떤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검찰을 다 없앱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과유불급이요, 교각살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시간을 온전히 우리 당에 양보해 주신 그 관용과 그 원칙대로 오늘 이 법안은 보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법안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거요, 지금 검찰·경찰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아시지요, 특별사법경찰관? 노동 사건, 세무 사건 또 산림 사건도 합니다, 산림 사건. 우리 일상에…… 그분들은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이 아니고 그냥 지방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 가서 때때로는 아주 거칠게 반발하는 범법자들을 상대하면서 법과 시행령의 취지를 집행합니다. 그게 특사경입니다, 특사경. 특사경이 2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 특사경은 '우리는 1년 정도밖에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엄밀히 잘 모른다, 검찰에 좀 자문받도록 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사경도 검찰의 지휘와 협조를 못 받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안,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 대통령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법무부장관도 걱정을 합니까? 정부 여당은 원팀 아닙니까?

저희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무너질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수사 역량, 범죄억제 능력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말 재고해 주십시오. 공소청법, 중수청법……

지난 일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저희 마산에 오셨습니다. 마산 국립묘지에 오셔서 3·15 의거를 이야기했습니다.

3·15 의거 당시에 누가 총탄을 발포했습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누구의 지휘를 받았습니까? 이기붕 그리고 내무부장관입니다. 지금 중수청법 이거 행안부장관이 중수청 다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 검사하고 FBI가 같이 공조합니다. 이것 세상에 없는 제도입니다.

○의장 우원식 최형두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중인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정말 재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책임을 지고 광복 100주년의 더 큰 나라로 만들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 81년 동안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와 일선의 법집행에 엄청난 혼선과 교란과 결국 힘없는 국민들의 눈물로 돌아올 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도 과유불급이라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가 이 법안을 제대로 좀 해 보겠다고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가장 진보적이고 대표적인 법학자도 지금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이 법안은, 보완수사요구권조차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범죄 억제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걱정하고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 지금 도대체 누가 이 법안을 이끌고 있습니까?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우리가 지켜 온 지난 81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국가로 성장했을 때는 바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와 법 집행의 엄밀성 또 우리가 박종철 사건, 앞으로 3·15 부정선거에서 보듯이 경찰과 검찰의 견제…… 우리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남겨 주자는 것은 대부분의 경찰 사건, 99% 형사사건에서 그냥 암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건의 중대성이 묻혀지지 않도록 검찰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경찰이 인식해서 그 수사를 더욱 완벽하게 기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의 일입니다만 우리나라 법치와 마지막으로 법 집행의 일선 현장이 무너지는 그 걱정을 뻔히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재고해 주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보류하시고 다시 한번 정부 여당, 특히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했던 권고안도 다시 검토하셔서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문제, 다음에 행안부장관이 지휘하게 되는 중수청의 문제가 빚을 수사 독점의 문제, 권력 수사에서 빚어질 편향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이 법안을 보류할 것을, 굳이 표결한다면 반대 표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1인 서면동의)

(15시22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결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태선 의원, 모경종 의원, 박용갑 의원, 장종태 의원, 정준호 의원, 차지호 의원, 정춘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3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4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넣을 때 이런 실수 없도록 좀 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는 17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조금 전 명패수를 179매로 발표했습니다만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더 나왔기 때문에 명패수를 180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8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8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4)

(15시49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공소청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빨리 와서 투표하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를 안 한 분이 있네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서 공소청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경호대원들이 모두 다 승진했습니다. 팀 승진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불법계엄 당시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우리 의장 경호대가 보여 준 책임과 또 헌신에 감사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의 안전을 오로지 경호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12월 3일 밤이. 그런데 우리 경호대 전체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회의장을 안전하게 잘 경호를 해서 국회의 담을 넘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경호대원들이 속해 있는 서울경찰청 또 국회경비대 소속인데 거기의 기관장들이 택했던 선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속에서 용감하게 흔들림 없이 정의로운 선택을 한 것이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일을 아시고 전원 승진을 결정해 주셔서 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칭찬해 주세요, 사무총장」 하는 의원 있음)

물론 사무총장 잘했지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승진시키고 싶은데 여기서 승진하면 국회의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승진할 자리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국회경비대에 가서 그때 이후로 처음, 사실은 국회의장이 국회경비대에 간 건 처음 있는 일인데 경비대에 가서 새로운 경찰청장 그리고 국회경비대장과 함께 승진하는 분들의 가족까지 다 모시고 그리고 함께 축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5)

(15시54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신정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입니다.

방금 우리는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틀어쥔 검찰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공소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는 법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민주적인 국민의 방패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그 거대하고 어두운 권력의 피해가 얼마나 참

담한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검찰 캐비닛으로 상징되는 검찰의 비열했던 수사 방식, 그 한 단어가 오랜 시간 국민을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조롱해 왔습니다. 검찰 캐비닛 앞에서 국민은 결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고 독점된 권력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어 왔습니다. 그 검찰의 캐비닛을 오늘에야말로 비로소 부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과 검사와의 대화를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졸 출신의 대통령께 학번이 어떻게 되냐며 전 국민 앞에서 조롱을 서슴지 않았던 검사들의 태도는 그간 검찰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했던 대통령을 향해서 끝내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몰아붙였던 그 흑역사는 검찰개혁이 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는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지만 국민은 한 번도 그 요구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공소청, 중수청 논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과 갈등 속에서도 국민은 끝까지 중심을 붙잡고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라, 권력을 쪼개고 국민 앞에 책임지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차가운 밤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를 지켜 낸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다면 지난 몇 달 동안 끝없이 가짜뉴스와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도의 완성을 향해 국회를 견인해 온 것 또한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오늘 이 중수청법안은 그 시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온 국민주권시대의 또 하나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어떤 권력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서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정신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는 그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다시는 그 낡은 권력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결연함으로 22대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의 기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법안(대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본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신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달희)

(15시59분)

○의장 우원식 먼저 이달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달희 의원입니다.

위대한 교부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거대한 강도떼와 무엇이 다른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힘없고 빽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정의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울타리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78년간 이 나라의 사법질서를 지탱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장 우원식 이달희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6시 2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0인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희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의원 진정한 개혁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지 마치 전쟁을 치르듯 대상을 박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을 개혁하자면서 사법부를 없애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극약처방이자 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화려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끔찍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토록 숭고하고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양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특별검사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수사기관에는 수사와 기소의 독점을 허락하면서 오직 검찰청의 수사권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입니다.

게다가 헌법 제12조제3항과 제16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영장 청구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89조제16호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을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 법률만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헌법상 기관인 검찰총장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은 약자의 방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법은 강자와 범죄자를 위한 거대한 도피처가 될 것입니다. 검

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 채 경찰이 넘겨준 수사만으로, 서류만으로 기계적인 기소를 하게 된다면 핵심 증거가 빠지거나 법리적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치솟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필터링이 사라진 부실한 기소의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유죄를 받아야 할 흉악범과 대형 사기꾼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무죄로 풀려날 개연성이 있는 입법입니다. 결국 억울한 국민은 범죄의 피해로 한 번 더 죽고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며 비웃는 허탈한 판결에 또 한 번 죽게 되는 끔찍한 비극이 내포된 제도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조세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마저 폐지된다면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과 무리한 수사로 인해 범죄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선량한 일상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억지스러운 법안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검사 무력화입니다.

현행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확실한 신분보장을 받기에 살아 있는 권력의 부당한 외압에도 직을 걸고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징계 처분만으로도 쉽게 이직·파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신분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정권의 서슬 퍼런 압력에 맞서 소신껏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권력의 발밑에 꿇리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마땅하거늘 이 법안들은 수사와 기소를 정권에 완벽하게 종속시키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권력자의 방탄을 위해 국민의 피눈물을 밟고 세운 이 사상누각 같은 가짜 개혁 법안을 부디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세 번째 필리버스터를 단상에 서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같은 자리에 세 번이나 선 이유는 다수 여당이 소수 야당을 무참히 짓밟는 모욕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꿈틀거려서라도, 이 자리에 서서라도 국민들께 이 현실을 호소하고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우리 야당이 하는 필리버스터의 마지막이길 바랐습니다.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제한토론을 위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세 번 이상 네 번, 다섯 번까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중동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환율도 1만 5000이 넘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민생 법안도 아닌데 이런 개악법을 전쟁 치르듯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법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과 함께 탄생한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휘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이전하는 법입니다. 이름은 중대범죄수사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걸어 두고 속으로는 개고기를 파는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입법입니다. 78년의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여야 합의도 없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강행 처리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는 법은 사회공학의 도구로서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8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해체하는 것은 파운드가 말한 법의 본질적 기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그의 저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혁명은 모든 것을 빈터로 만든 뒤 그 위에 이상적인 제도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이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제도가 담고 있는 지혜마저 함께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약 230년 전의 경고장입니다.

78년 전 우리 선조들께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설계할 때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자의적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지혜, 일제강점기의 폭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 제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소의 뿔을 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지금 이 국회에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중수청 법안이 어떤 경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6년 1월 12일 중대범죄수사청 제정안을 처음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시 2차 입법예고안은 9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별도로 두는 이원화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에서 강경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는 2월 24일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수사 범위를 9대에서 부패, 경제,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사법관제도를 폐지하여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수정된 정부안이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3월 11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공청회와 함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위원회는 법안을 조문별로 검토하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3월 17일 3차 회의에서 단 2개의 쟁점만 삭제된 채 야당이 제시하는 쟁점은 미해결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고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수청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은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제기한 다수의 쟁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묵살로 미

해결된 채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 행안부장관 지휘권의 범위, 수사 범위의 경계, 공소청과의 관계 설정, 인력 확보 방안 이 중요한 문제들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는 납득이 되십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1948년부터 이 나라의 형사사법을 지탱해 온 78년의 체계가 오늘 이 시간 단 한 번의 본회의 표결로 해체되어 갈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충분히 알고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조차 쟁점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체계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제한토론이라는 제도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그 법안의 내용을 국민 앞에 충분히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라는 제도의 78년 역사와 그 공과, 이재명 정부 경찰개혁의 실체, 수사·기소 분리론의 허구, 중수청 법안의 조문별 문제점, 헌법적 위반 소지, 국민 삶에 미치는 실제 피해,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이 법안이 설계된 진짜 내포하고 있는 목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서로 하나씩 근거와 함께 짚어 가겠습니다.

78년의 체계를 해체하는 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면 그 해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변화를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국민들께 그 실상을 상세하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법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이 위대한 법의 정신을 짓밟고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피해자들입니다. 특히 변호사를 채용할 돈이 없는 서민은 영문도 모른 채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죄,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어 줄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억울한 자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죽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과 위선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서 왜 정부 입맛대로 쓰는 공수처와 특검에는 그 막강한 수사·기소 통합 권력이 그대로 주어집니까?

이 법안의 진짜 목표는 명백합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발밑에 두고 수사관들의 신분 보장을 박탈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끔찍한 수사의 정치 종속화가 나타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절차 잃은 기형적 개혁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의 낙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면 여러분 이 법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말 양심을 걸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 정부에서 이 법이 똑같이 올라왔으면 여러분들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때 찬성하시겠다면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전원 반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법안이 해체하려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개혁의 명분이 타당한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탄생했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독립 외청으로 설계된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중추를 이루어 왔습니다.

건국 초기 검찰의 설계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켜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통제하고 사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입법자들은 일제강점기 경찰 권력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할 경우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이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는 제도 설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78년 전 이 나라 법치를 설계한 선배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국 이후 수십 년간 검찰은 권위주의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굴욕을 반복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유신체제 아래서 검찰은 정권의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기소하고 민주화운동가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도 검사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검찰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수호자였습니다. 이 점은 본 의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은 서서히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달라졌습니다. 1988년 검찰청법 전면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제화되고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과 민주화 이후의 검찰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단순화하는 오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부 정치검사 때문에 오명을 쓴 검찰을 무조건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나라 법치주의의 역사에서 수행해 온 순기능은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수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재임 중 저지른 범죄를 이유로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것은 당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후 검찰은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부실대출 비리를 수사하며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삼성, SK 등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을 수사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중앙일보 정효식 기자는 26년 2월 12일 자 칼럼에서 한국 검찰은 수십 년간 힘 있는 자들을 상대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수사 역량을 축적했으며 주가조작이나 대선자금 수사를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검사들의 수사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남용을 수사하고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검찰은 소임을 다했을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판과 함께 권력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쳤다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는 검찰개혁을 반복해서 시도해 왔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 2020년 국회를 통과하고 21년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21년 공수처 설치,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존속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검찰개혁의 과정에서도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검찰의 78년 기록입니다. 공과 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과가 있다고 해서 공까지 지워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공을 살리고 과를 고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립니다. 그리고 틀린 처방은 병을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병을 만들어 냅니다.

검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의 문제, 운용의 문제, 문화의 문제입니다.

먼저 구조의 문제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개시하고 영장을 청구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형성된 선입견이나 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면 자신의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기소 후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검사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적 문제는 검사에 대한 외부 통제 기제를 강화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며 기소 재량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기관 자체를 해체하지 않고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운용의 문제입니다.

검찰 권력의 남용은 상당 부분 인사권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검찰총장과 고위 검사직 임명에 대통령의 의중이 깊이 개입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둔감하고 죽은 권력에 날카로웠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인사 구조를 개편하고 검찰총장의 임명 절차를 독립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없애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은 문화의 문제입니다.

엘리트 의식, 폐쇄적 조직문화, 내부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것은 제도 설계의 문제라기보다 조직 운영의 문제입니다. 검찰조직을 해체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문화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25년 10월 12일 신문 칼럼에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강화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교수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의 문제는 실재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기관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대신 기관 자체를 없애 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약 처방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두고 수술부터 하려고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메스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빈자리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 기관을 세우려 합니다. 이는 검찰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력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법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괴로워할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특히 고액의 변호사를 채용할 돈이 없는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어 줄 것이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좌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과 위선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원칙이라면서 왜 정부 입맛대로 쓰는 공수처와 특검에는 그 막강한 수사·기소 통합 권력을 그대로 쥐어 줍니까? 이 법안의 진짜 목표는 명백합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밑에 두고 수사관들의 신분 보장을 옥죄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수 있는 끔찍한 수사의 정치종속화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하는 이 절차 잃은 기형적 개혁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낙원이 되지 않도록 이 야만적인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대에 동참해 주십시오.

수사권력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중수청법안을 밀어붙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와 그 추진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의 이유로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그러나 중수청을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두고 공소청 검사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킨 이 설계가 어떻게 독립성 강화입니까? 정말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법안의 설계는 정반대 방향이어야 합니다. 명분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법안의 설계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 속도의 이유를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검찰 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이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및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리고 집권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검찰청 폐지였습니다. 2025년 6월 4일 취임 이후 불과 3개월 22일 만인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들을 나란히 놓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후 3개월 22일 만에 검찰청 폐지가 결정되었고 이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뒤따랐습니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사 구성도 이 맥락에서 읽힙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 지기의 최측근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는 민변 출신의 박찬운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찬운 교수마저 지난 3월 9일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당내 강경론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이끌기 위해 임명된 전문가가 그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며 중도 하차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전문가조차 이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정부에서 이토록 빠르게, 이토록 급진적으로 기관 해체 수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몰아붙일, 우리 민생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우리 외교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 부분은 늦추어도, 천천히 해도, 국민적 공감을 얻고 해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을 없애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이미 균열이 드러나고 있는 이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됩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일법안이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중수청법안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미 25년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두는 근거조항을 정부조직법에 새긴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공소청법안이고 세 번째가 중수청법안(대안)입니다.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3월 17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이틀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시행일도 26년 10월 2일로 동일합니다. 공소청이 없으면 중수청도 온전히 작동할 수가 없고 중수청이 없으면 공소청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기능은 수사와 기소라는 형사사법의 두 축을 나누어 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식, 즉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공소청이 어떻게 넘겨받아 기소로 연결하는지에 관한 절차적 규율은 형사소송법에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배관 설계도를 아직 그리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스스로도 최종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마침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찍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진 채 나머지 조각들을 먼저 끼워서 서두르고 급하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며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적 뼈대 없이 기관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법률시스템이 아니라 행정적 선포에 가깝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정부 여당이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무책임한 경우도 드물다고 여러 언론에서 사설과 기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 법률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12일 중수청법안을 최초로 입법예고하고 2월 24일 재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3월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3월 11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공청

회와 함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찬반 진술인들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만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차진아 교수와 송영훈 교수의 진술인 의견은 이후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한 꼭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월 16일 2차 소위에서 여야는 많은 쟁점을 확인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이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후 2시에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안을 반영해서 대안으로 처리했습니다.

소위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구조에서는 소수의 의견, 야당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그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입법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여당의 공포형·통보형 입법 과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하면 공포하고 야당에 통보하고…… 협의, 논의? 안중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안 대안이 의결되어 같은 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안 발표에서 소위 처리까지 하루, 두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틀, 야당과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쟁점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입법입니까, 아니면 다수 입법독재에 의한 통보입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무시될 때 그것은 단순히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161석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국민의 의견이 틀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힘이 곧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국민 여러분,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논리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조차 내 편이 아니면 무참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특히 고액의 변호사를 채용할 돈이 없는 서민은 영문도 모른 채 본인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죄를,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은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서 왜 정부 영향이 미치는 공수처와 특검에는 그 막강한 수사·기소 통합 권력을 그대로 쥐여 줍니까? 이 법안의 진짜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밑에 두고 수사관들의 신분 보장

을 박탈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끔찍한 수사의 정치 종속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절차, 이런 기형적 개혁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 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낙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위험한 도박을 당장 멈추게 해 주십시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사법권이 행정권과 분리되지 않아도 자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앞세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정당화합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명분입니다. 언뜻 들으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년 9월 19일 발간한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론적으로 권한 집중을 막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정보 단절과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리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회 스스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그 간극이 얼마나 깊은지를 주요국 사례와 중수청법안의 조문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수사·기소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FBI가 수사를 담당하고 연방검사가 기소를 담당하는 체계를 수사·기소 분리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FBI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연방검사는 대배심 절차를 통해 수사 방향을 사실상 지휘하고 영장청구의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며 수사 초기부터 기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대배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핵심 증거 수집 능력 자체가 연방검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연방검사만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FBI 요원은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증인을 소환하거나 문서의 강제 제출을 명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 기록, 이메일, 기업 내부 장부 등 복잡한 범죄 수사에서 핵심이 되는 모든 증거가 이 대배심 소환장을 통해 확보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FBI가 수사하고 연방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이것을 수사·기소 분리의 성공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미국에는 FBI 외에도 마약단속국인 DEA, 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인 ATF, 미국 국세청 IRS 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수십 개의 연방 수사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다원화는

미국 역사의 특수한 산물이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상황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이야기하는 영국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1986년 왕립검찰청(CPS)을 설치하면서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기소를 공식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함께 보여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은 왕립검찰청(CPS)과 별개로 중대 경제범죄와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사기수사청(SFO)이라는 기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하나의 기관 안에서 행사하는 통합형 수사기관입니다. 소속 수사관과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팀을 이루어 일하는 이른바 로스킬 모델(Roskill model)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대사기수사청 스스로 이것이 영국의 일반적 형사사법 관행에서는 예외적인 구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판단이 수사 방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범죄의 몸통을 잡을 수 없는 것을 영국 스스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왕립검찰청(CPS)만 보여주고 중대사기수사청(SFO)은 보여 주지 않습니다. 영국 제도의 절반만 인용하고 국민들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검찰청장 지침인 DDP에는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경찰에게 어떤 조언을 제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당정청 협의안의 핵심 수정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 영국 사법체계의 핵심에서 따온 정부 원안의 제45조를 삭제했습니다. 정부 원안의 제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입건요청권과 의견제기권을 규정한 조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물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악법이 탄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독일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형사소송 체계에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입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사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검사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세계에서 형사사법 인권 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실은 수사·기소 통합이 곧 인권침해를 낳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논리 근거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다음은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검사, 예심판사, 재판부의 3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대 범죄 사건의 경우 예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부가 판결합니다.

언뜻 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사가 예심판사에게 수사를 청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긴밀하게 관여합니다. 단순히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둘로 나누는 중수청·공소청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프랑스를 분리론

의 근거로 드는 것은 프랑스 제도를 오독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법체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운영의 분업일 뿐 기관의 분리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하고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일 기관에 귀속되는 이 구조를 분리하자는 논의는 진지하게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통합형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표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이 왕립검찰청(CPS)를 설치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선진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체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경찰 스스로 기소하다 보니 기소율이 지나치게 높고 무죄 판결이 빈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립검찰청(CPS)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의장 우원식 이달희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대전 대덕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쳤고 지금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재난 대응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는 장관입니다. 의장은 국민 안전과 재난 대응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행안부장관과 차관의 교대 출석을 승인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달희 의원,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의원 중앙일보 정효식 기자는 26년 2월 12일 자 칼럼에서 '영국은 원래 검찰 없이 경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해 오다 높은 무죄율 등의 문제로 1986년 왕립검찰청(CPS)을 뒤늦게 도입한 것이며 우리 형사사법 제도 개혁 논의와는 출발선과 방향이 정반대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던 체계에서 수사를 분리하려는 것이고 영국은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던 체계에서 기소를 분리한 것입니다. 문제의 성격과 해법의 방향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왕립검찰청 도입 이후 영국에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강간 사건의 기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 감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성범죄 사건 기소율 저하 원인 중 하나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소통 부재를 지목했습니다. 수사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이 불충분할 경우 왕립경찰청은 자체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기소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우원식 의장,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사회교대)

국회입법조사처는 왕립검찰청 설치 이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증거 활용의 비효율이 나타났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왕립검찰청이 수사 단계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조기 수사 자문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분리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소기관이 수사 단계에 다시 개입하는 제도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제도입니다. 영국 스스로가 순수 분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통합의 요소를 재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해 중대 경제범죄에 한해서는 별도의 통합청 기관인 중대사기수사청(SF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영국과 법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영국은 영미법 체계이고 한국은 대륙법 체계입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할 때는 법체계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중수청 법안은 그 검토 없이 제도의 외양만 가져와서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본 의원은 분리론에 대한 비판이 본 의원만의 견해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국회의 공식 기관인 법학·법조 전문가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록으로 남겨 놓은 문제들입니다. 그 기록들을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보 단절이라고 이름 붙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면 기소기관은 수사기관이 구성해서 넘겨준 기록에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어떤 증거를 선별하여 기록화하느냐에 따라 기소기관의 판단 자체가 그 기록의 틀 안에 갇히는 구조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정보 단절이라 표현하며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에서 검사는 수사 단계부터 관여하여 위법 수집 증거를 걸러내고 인권침해적 수사 방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기능은 검사가 수사관과 함께 사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작동합니다. 검사가 없는 수사 현장에서 이 통제 기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에 의하면 갈등과 책임 전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은 중수청의 미진한 수사 기록을 받아들이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며, 이 증거로는 못 이긴다는 공소청과 무능한 공소청이 다 말아먹는다는 중수청 사이의 갈등도 예견된다고 언론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의 당정청 협의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45조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진행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제도적 경로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 버린 사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과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제기한 이중 통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리를 통해 권력 집중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행안부장관이, 공소청은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하며 두 장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둘로 나뉘었지만 그 모두를 대통령이 통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분리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 양쪽을 동시에 장악하는 이중 통제 구조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일보에서는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까지 장악하면 사

실상 모든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며, 공산·독재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나라 중에 이런 곳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성룡 교수는 이 구조는 형사사법의 한 축이 완전히 정치화되는 것으로 읽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도, 유럽평의회 소속 약 47개국의 대부분이 검사의 직접수사, 수사지휘, 법관과 동등한 유사한 지위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정보 단절, 언론이 예견하고 있는 책임 전가 그리고 학계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중 통제 구조 이것이 분리론이 실제로 만들어 내는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상과 국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확인한 현실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박한 현장의 목소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자가당착적인 논리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패널들은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을 지휘하고, 영미법계인 영국조차도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이 되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중대사기수사청을 따로 두고 있다는 것이 반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변호사 패널이 2015년에 업무를 마치고 기숙사 엘리베이터에서 과로사로 쓰러진 고 이상돈 검사를 언급했던 것이 본 의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80여 년간 지탄을 받는 검사들만 있었습니까? 이상돈 검사와 같이 민생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했던 검사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쿠테타가 일어났다고 군대를 해체하면 국가안보가 무너지듯이 제도를 고쳐 쓸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렇게 없애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 자해행위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절대권력이라며 검찰 분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하는 통합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주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정보 단절의 문제, 언론이 예견한 책임 전가의 구조, 전문가

가 확인한 정치화의 경로, 이 모든 문제가 공수처와 특검에는 면제되고 검찰에만 적용된다면 그 논리는 원칙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방패와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정보다 더 잔혹한 폭정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는 이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철저히 짓밟힌 채 오직 특정 세력의 영달과 검찰 무력화라는 분풀이식 정치적 목적만 달성되는 기형적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억울한 국민, 특히 변호사를 채용할 돈도 없는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수사에 관여하지도 못한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판결이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억울한 자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죽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과 위선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원칙이라면서 왜 정부 입맛대로 임명하는 공수처,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라는 막강한 통합 권력을 그대로 쥐여 줍니까?

이 법안의 진짜 목표는 명백합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밑에 두고 수사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끔찍한 수사의 정치 종속화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기형적인 개혁은 아무리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훗날 역사가 오늘 이 국회의 결정을 돌아볼 때 국가의 사법체계를 붕괴시킨 최악의 입법농단이라고 기록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붕괴가 불러올 평범한 국민들의 눈물을 막기 위해 이 야만적인 입법폭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분리론을 구현한 중수청법안의 조문들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18일 의결한 중수청법안 대안입니다.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야당이 제기한 쟁점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 바로 그 대안입니다.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예고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나누었는데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상 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서 이름만 바꾼 검사를 중수청에 심어 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이 반발을 수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2월 24일 재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사관을 1급부터 9급까지의 단일한 수사관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행안위 대안 모두 이 일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 제도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중수청 수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국회 심사도 되기 전 입법예고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압력에 의해 사라진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의 법적 전문성을 담보할 핵심 인력 설계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결정된 것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 조율을 우선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수사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중수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정부 제출안에는 경제범죄와 마약범죄 등을 중심으로 범위가 재조정됐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언론 기고문에서 선거범죄를 중수청 수사권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은데 전문성 갖춘 선거전문 수사인력에 의해 집중수사가 안 되면 소멸시효에 걸려 기소조차 못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정청 협의 결과 기존 정부안 제45조와 수사관 겸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기형적인 악법을 만든 것을 독소조항 제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엄이도종의 고사처럼 강경파 주장에 채택된 독소조항 몇 개를 지워서 그들끼리의 타협안인 중수청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더 기형적인 악법이 되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쟁점사항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 임명에 대통령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와 같은 소위 심사에서 확인된 쟁점 대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설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수청법안 제3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제1항,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이 이 법안의 모든 문제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왜 행정안전부장관입니까? 이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래 지방자치와 선거, 지금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석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거지요. 국민의 안전관리, 경찰행정을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수사와 법률을 다루는 것은 법무부의 전통적인 소관입니다. 실제로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수사기관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수사기관을 두면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통제하고 이것이 다시 검사를 통한 수사지휘의 변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비판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법률과 무관한 행정안전부에 수사기관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낳는 결과를 보십시오. 법률 전문성이 없는 행정부처의 장관이 중대범죄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6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일반적 지휘·감독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분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분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적 지휘·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안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예산 배분, 인사 기준, 수사 우선순위 지침 등이 모두 일반적 지휘·감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수사 자원의 배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행안부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청 역시 행안부 소속 기관임에도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장관의 직접 개입을 법률로 차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같은 행안부 소속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원칙을 깨고 일반적 지휘·감독권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경찰에는 허용하지 않은 것을 중수청에는 허용한 셈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이면서 한 기관에는 수사지휘권을 차단하고 다른 기관에는 허용하는 것은 입법 논리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설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2026년 3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위원의 질문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변명입니다. 행안부장관은 인사권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이유에 대해 괴물 청장을 막기 위한 문민통제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장이 권력을 휘두르는 괴물 청장이 될까 봐 두렵다면서 수사권과 인사권을 모조리 틀어쥔 행안부장관은 괴물 장관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생각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의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 제도입니다.

경찰청 역시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이제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한 사람이 전국 경찰과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동시에 관할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수사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한 부처로의 집중입니다.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5공 때로 돌아갈 권력의 경찰 지배'.

오는 10월 해체되는 검찰을 대신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싼 논의가 너무 저급하다.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을 대신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마약·사이버, 9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며 여당 강경파 의원과 당원이 반발하는 건 코미디 같다. 집권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수사·기소권 분리가 대원칙이라고 전제하는 것부터 억지다. 공소청이 경찰과 중수청의 구속영장청구기, 자동기소장치가 될 판인데 고민이 전혀 없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 구조를 근거로 이름만 바꾼 검찰청 운운하는 것은 헛말이다.

정부안은 검사를 중수청으로 많이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수사사법관=제2의 검사'라는 주장은 뜬금이 없다. 이름이 사법관이라고 해도 영장청구권도, 기소권도 없는 사법경찰관일 뿐이다. 사법관에 혹해 중수청으로 넘어갈 검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조사에서 이전 의사를 보인 검사는 910명 중 7명, 0.8%에 불과했다. 설사 검사 상당수가 넘어와도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은 검찰청이 아니라 제2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될 뿐이다.

공소청법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금지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검사 보완수사권 부여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것도 한심하다.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이 미진할 경우 자체 재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현실을 모르는 건지, 애써 눈을 감은 건지 모르겠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온건하고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여권은 지금 지나친 집단 흥분 상태다.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때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펼쳐질 게 명약관화한데 여당 의원들은 실상과 동떨어진 강성 발언만 쏟아 낸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냈고 차기 국회의장에도 거론되는 박지원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 절대 반대를 앞장서 부르짖고 있다. 상당수 의원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펴는데 검사의 수사 보완 요구를 경찰이 뭉개면 대책이 없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보완을 요구해도 처음 수사와 별 차이 없는 결과를 그대로 보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정권 또는 여당 의원의 범죄는 경찰·중수청이 먼저 수사하지 않는 한 공소청 검사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올린 자료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건 이만저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조금만 복잡한 경제범죄나 정치인·공무원의 뇌물·배임 범죄는 유죄 선고받기가 어려워진다. 중환자 진단 의사와 집도 의사가 별개로 움직이면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지 않고 덮어 버리면 그냥 암장된다. 지금 경찰의 김병기·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수사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보면 수사권을 검사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과 중수청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 정말 위험하다.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로 두고 행안부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중수청장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까지 장악하면 사실상 모든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산·독재국가 말고 정상적인 나라 중에 이런 곳이 있나?

윤호중 장관도 그렇지만 역대 행안부장관은 여당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국수본과 중수청 수사를 통제해 민감한 사건을 여권 입맛대로 굴려 갈 수 있다. 민주세력

이라면서 내무부장관이 경찰을 지휘하던 5공 이전 시절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것인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내용 안 어디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폐해가, 정말 개악된 악법이라는 게 펼쳐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잘 짚은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이 구조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경찰,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직접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안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청장에게도 허용하지 않은 권한이 이 규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중수청장 임명 구조를 보겠습니다.

법안 제7조제3항과 제9조에 의하면, 7조 중수청장은 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안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2항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안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9명의 위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제5항,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합니다. 그 추천 명단에서 행안부장관이 1명을 제청합니다.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여러 단계의, 세 단계의 임명 절차가 보이지만 실질을 보면 어떻습니까? 9명의 구성 중에서 정부위원이 많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도 행안부장관이 지명합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부터 제청, 지명까지 전 과정에서 행안부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임명 절차입니까?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역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청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성적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직접 기소 사건 6건 중 유죄 확정은 검사의 수사보고서 위조 혐의를 기소해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게 유일하다.

유사한 임명 구조를 가진 기관이 이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수청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이보다 더 직접적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기 2년, 중임 불가 조항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짧은 임기는 청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2년마다 새 청장을 임명할 기회가 대통령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임기 중 최소 두 번 이상의 중수청장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정권과 밀착 구조의 제도화입니다.

제7조제5항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헌법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항은 중수청장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여당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2조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는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자본시장법, 마약류관리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 수십 개 법률에서 정한 범죄들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중대범죄등에 포함됩니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표현이 문제입니다. 법안은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마약범죄를 수사하다가 관련 자금세탁 혐의가 나오면 그것도 수사할 수 있고 그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인 횡령이 드러나면 그것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파생되는 연결고리를 따라가면 이론적으로 어디까지든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위 심사에서도 직접 관련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시되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런 의견은 묵살된 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 조항은 더 심각합니다. 중수청법안 제2조는 사이버범죄를 중대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14호까지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하고, 여기에 더해 기술유출범죄 중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이중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 설계에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실의 사이버범죄는 하나의 사건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등 복수의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수청이 관할하는 조항 위반 혐의와 경찰이 관할하는 다른 조항 위반 혐의가 동일하게, 동일 피의자에게 동시에 적용될 때 어느 기관이 수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관할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대규모 보이스피싱이나 가상화폐 사기사건이 터졌을 때 중수청과 경찰이 이건 우리 관할이다라며 서류를 빼앗기는 사이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이버범죄 수사는 초기 디지털 증거 보전에서부터 자금흐름 추적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사대상 조항이 기관마다 나뉘어 있으면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지금 경찰청의 국수본에 사이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이걸 법에 이원화를 하면 중수청에 언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이 배치되어서 국가의 사이버범죄를 밝혀 낼 수 있겠습니까?

셋째, 사이버범죄는 기술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합니다. 특정 조문 번호를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법안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을 때 중수청이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제43조제3항이 더해집니다.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도 실질적으로 중수청 측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수청이 원하는 사건은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제43조 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은 중수청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 중수청 소관인지, 경찰 소관인지, 공수처 소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관할 구조 속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제1항을 보면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을 때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대상인 사이버범죄나 다른 범죄 중에서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관들이 자신의 근무평점에 유리한 사건은 경찰로부터 가져오라고 하고 불리한 사건은 경찰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경우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핵심 수정사항 중 하나가 중수청법 정부안의 제45조 삭제였습니다. 정부안의 제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입건 요청권과 의견제기권을 규정한 조항이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 조항이 사실상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지휘하는 통로가 된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협의안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제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독소조항 제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45조 삭제가 진짜 해결인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에서 두 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함께 처리하려면 최소한의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이 알아야 기소를 준비하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의무는 바로 이 최소한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을 몽땅 삭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대안에는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공소청이 알 수 있

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때가 되어서야 공소청은 그 사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사이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진술은 이미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기소 단계에서 증거 부족을 발견해도 공소청은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진 구조에서 중수청이 이미 종결한 수사를 다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법체계에서 뺑뺑이 수사가, 우리 사법체계가 뺑뺑이 사법체계가 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박탈은 사법 필터의 실종이라 규정하고 경찰이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사건이 검경을 오가는 이른바 사법 뺑뺑이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오늘자 영남일보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언론 사설에서는 이런 구조에 대해 공소청은 '이 증거로는 기소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중수청은 '공소청이 무능해서 다 말아먹는다'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소조항을 뺀 것이 아니라 공소청이 중수청 수사에 관여하는 통로를 막음으로써 검사의 법적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작동할 여지 자체를 제거한 것입니다.

중수청법안에서 제45조 삭제와 함께 공소청법안에서도 조용히 처리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제2호는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조제3호는 이를 '협의·지원'으로 바꿉니다. 지휘·감독을 협의·지원으로 바꿈으로써 검사의 통제 기능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환경·노동·식품위생·지식재산권·금융·조세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직 수사관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사경의 82%가 경력 3년 미만이고 48%는 1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검사가 이들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웃고 범죄피해자는 피눈물 날 것이며 가시적인 실적 경쟁,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심지어 특사경 소속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치도구화 등의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정작 범죄피해자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이 목적이어야 할 제도 개편이 그 목적을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행안위 법안1소위 중수청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관련성이라는 모호한 단어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문이 파편화되어 있어 중수청과 경찰 간에 누구 관할이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밥그릇 다툼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핑퐁 게임처럼 사건이 떠넘겨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약 없는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국가에 의해 두 번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중수청 산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치나 관할 구역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핵심 뼈대인 전국 조직망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정하게 내버려둔 이른바 포괄적 위임 입법의 전형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지휘의 한계가 모호하여 장관이 예산 배분이나 인사, 수사 우선순위 등 행정적 권한을 무기로 사실상 수사 방향을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에는 없는 막강한 수사 통제 권한을 장관에게 쥐여 준 셈입니다.

중수청장의 자격으로 15년 이상의 수사, 재판, 변호사, 법학교수 등만 명시했을 뿐 정당 활동 이력에 대한 제한 조항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장에게는 이 규정이 없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언제든지 청장으로 임명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청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가 필요하고 행안부장관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그리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3명 등 6명을 행안부장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안소위 과정에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강한 주장이 있었음에도 청장 임명에 정권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 산하에 그 위원회가 소속되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지방청 조직 구조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지방청·지청의 단계 구조 쟁점과 이어지는 문제로 각 지역 지방청의 구체적인 하부조직을 어떻게 짤 것인지 법에 전혀 정해지지 않아 껍데기만 있는 상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정원 상한의 법률 명시 여부입니다.

중수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통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의 거대 수사기관이 얼마나 큰 인력 규모를 가질지 국회가 법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대통령령만 고치면 마음대로 수사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백지수표를 입법부가 행정부에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입니다.

범죄 수사가 겹칠 때 중수청이 원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중수청장이 본인들이 귀찮거나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수사는 경찰 등에 떠넘길 수 있는 중수청이 수사를 골라 먹는 사실상 수사뷔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홉 번째, 6급 이하 수사권 임용권 관련입니다.

6급 이하 실무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갖는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관들은 수사 본연의 소신보다 인사권자인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열 번째, 수사관 결격사유입니다.

수사관 결격사유로 전과자나 퇴직 후 2년이 안 된 공소청 소속 검사 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인이나 정권과 유착된 특정 성향의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수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배임·횡령,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수사, 성남FC 후원금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언제든지 중수청의 1급·2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퇴직 후 임용 제한 대상 직위 확정 미완성입니다.

수사관으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력을 위해 편향된 수사를 일삼았던 수사관이 퇴직 후 청와대나 기타 중요한 정치·행정 요직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의 편향된 수사로 인해 수사상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열두 번째, 6급 이하 수사관 채용시험 주관 기관의 미결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사관 채용 시험조차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수사관도 사실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수청의 모든 수사관은 행안부장관의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열세 번째, 징계위원회 설치 기관 및 구성 미결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중수청 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장관이 임용권뿐만 아니라 징계권까지 직접 관할하게 되므로 수사관이 권력에 불리한 수사를 할 경우 언제든 징계라는 칼날로 수사관을 파면하고 쫓아낼 수 있는 확실한 생사여탈권을 행안부장관이 쥐게 된 것입니다.

열네 번째,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부실한 수사관을 솎아내기 위한 적격심사위원회를 총 6명으로 구성하고 행안부에 설치했습니다. 결국 기존 정부안이었던 9인 체제에서 행안부장관이 직접 위촉·지명하는 위원들의 비율이 높은 6인 체제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직접 지명하는 적격심사위원 3명에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1명이 더해져 사실상 행안부장관이 원하는 방향의 적격심사가 가능해진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마음에 안 드는, 특히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관을 찍어 낼 수 있는 수사관에게 목을 채운 조항이 완성된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인사위원회 설치 기관입니다.

수사관의 승진, 전보 등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임용·징계·인사가 전부 행안부장관 산하에 묶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에 완전히 종속되는 권력의 형사사법 시녀화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15개 쟁점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쟁점, 수사 독립성에 관한 쟁점, 수사관 인사·신분 보장에 관한 쟁점입니다. 이 세 범주가 모두 미결인 상태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무시되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될 수 없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다른 수사기관장에게는 있는데 중수청장에게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 포진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 그 친위대 인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수청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17조 결격사유 조항이 제25조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수청법 제25조는 공직임용 제한에 대한 조항인데 '수사관으로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해 두 번째 쟁점인 수사의 독립성까지 망가지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위대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돼 수사관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수사를 하는 정치 수사관이 은퇴 직후 청와대나 기타 중요한 정치·행정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수청장 및 수사관의 정당이력 제한이 누락됨으로써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이 편향된 수사를 자행하고 이로 인한 보상으로 수사상 독립성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사관 인사·신분 보장에 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갖는지, 중수청장이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임용권을 갖는다면 수사관 인사 전반에 장관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도 6인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두느냐, 중수청에 두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대통령령에 대한 과도한 위임에 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법안은 실제 수사 범위의 세부 기준, 정원 상한,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지방청 단계 구조 등 전부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의 핵심 설계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안부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헌법학에서는 이를 포괄적 위임입법이라 하며 법률이 본질적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어느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중수청의 실제 작동 방식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법 완성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면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22대 국회의원이 집니까? 이 피해는 모두 국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 인력 구조의 현실적 불가능성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법안의 조문상 문제와 별개로 이 기관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수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수사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대검찰청이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현직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검사는 단 7명이었습니다. 비율로는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수청은, 저희가 법안소위 할 때 행안부에 물었을 때 지금 있는 검찰청 1만여 명을 나누어서 공수청에 7000여 명, 중수청에 3000여 명으로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약 3000여 명의 규모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자원하면 수사관으로 전환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910명 중 7명만 희망했다는 수치는 이 특례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중수청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수사관은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될 수 있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신분 보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에서 전직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청이 문을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 개악 법안 통과 이후 벌써 146명의 검사가 사직했다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의 경우 검사 수가 1년 전 8명에서 절반인 4명으로 줄었고 복잡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11개 중점 검찰청의 전담 수사인력도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청이 아직 운영 중인데도 이 지경입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경제범죄 수사에서 금융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판단하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단기간의 훈련으로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6개월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출범해야 합니다. 수천 명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수청을 어떤 인력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인력 충원에 실패해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일까요? 정치인입니까?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 설치에 수반되는 현실적 비용의 문제도 짚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검찰

청 및 지청이 총 67곳이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 출범하면 이 67개의 청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가 생깁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검찰개혁추진단 내부에서는 기존 검찰청사를 공소청이 사용하고 중수청을 위한 별도 독립 건물을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새롭게 청사를 건설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기존 타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이용하고 기존 행정기관을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중수청법안을 심사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본 의원은 김민재 행안부차관에게 중수청 청사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차관은 중수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 확보조차도 불투명한 기관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어떤 전문인력이 오고 싶겠습니까?

중수청 설치·운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약 3000명 규모의 신규 기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청사 확보 비용,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됩니다.

정원 65명의 공수처도 5년여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중수청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 비용이 어느 수준이 될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이 총 얼마인지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 공식적인 추산을 단 한 줄도 제출하지 않고 본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규모도 모른 채 기한만 정해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두 기관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형사소송법이 먼저 개정되었어야 합니다.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의 절차, 증거 이송 방식, 보완수사 요청의 법적 근거가 모두 형사소송법에 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형벌권은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 권력이므로 어떤 제도보다 높은 완결성을 요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중수청 출범을 먼저 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역할 애매한 중수청…… 이대로는 사건 피해자 부담만 증가한다', 중앙일보 25년 10월 30일 자니까 검찰청 해체와 공소청·중수청 분리에 대한 그 시점에 나온 사설입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력이 대폭 약화하면서 개점휴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별검사팀에 대규모 인력 114명이 파견된 데다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검사 사직 러시가 146명 이어진 탓이다.

금융·증권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의 경우 검사 수가 1년 전 8명에서 절반인 4명으로 줄었다. 복잡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11개 중점 검찰청의 전담 수사인력도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그나마 남은 인력들도 검찰청 해체 법안 통과 이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뒤숭숭한 분위기의 검찰이 됐습니다.

이런 수사 공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검찰청 해체 법안을 처리한 영향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검찰개혁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듯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은 사라지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중수청의 조직 규모와 수사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으려면 아직 1년이 남았지만 벌써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검 수사가 길어지는 것도 검찰의 인력난을 심화하고 있다. 현재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는 수도권 대형 검찰청인 수원지검의 전체 검사 정원과 맞먹는다. 이렇게 많은 인력을 장기간 파견하면 기존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간 허리급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차출되면서 일선 검찰청에는 초임과 부장급만 남은 곳도 있다고 한다.

일단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중수청은 1차 수사기관으로 보인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설명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과 관할이 중첩되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이 단지 1차 수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을 견제·통제하는 성격까지 포함한다는 뜻인가. 이처럼 제도의 설계자들조차도 중수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일관된 답이 없다는 것은 우려할 상황이다.

만약 경쟁을 위해 두 기관에 중복된 관할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경찰과 검찰의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둘은 서로 전혀 다르다. 그 당시 경찰과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중복적 관할을 가졌던 이유는 검찰이 수사통제 기관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이를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 위법·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어차피 기소권자인 검찰에 사건이 다 모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중복적 관할의 부작용이 적었다.

하지만 중수청은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일뿐이다. 그럼에도 두 기관이 같은 사건을 다루도록 설계할 경우 현장에서 중복 견제가 아니라 중복 회피가 벌어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나 대형 사건은 두 기관이 서로 맡겠다고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겪는 소액 피해나 사회적 약자의 범죄 피해는 그 반대다. 피해 규모가 적은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에 민생 사건은 고소장 접수조차 어렵다. 장애인시설 내 학대, 직장 내 추행과 같이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어려워 정황·행동증거, 신체·심리 변화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풀어 가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방법이 열린다면 직접 사건 처리보다는 그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을까. 혹여나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사건을 수사했다가 결론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혼란은 어찌할 것인가. 두 기관을 경쟁시키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조직의 생리를 외면한 탁상공론자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관할 중복을 방지하고자 중수청은 중대범죄만 수사하라고 법을 만들어도 이 문제는 쉽

게 해결되지 않는다. 마약사건을 중수청 관할로 정한다 해도 그 안에는 마약 제조자나 유통자가 있고 마약을 주된 범죄의 미끼나 도구로 사용하는 자도 있다. 점조직과 공범으로 얽혀 있다. 어디까지가 중대범죄인 마약범죄인가. 던지기 수법을 통해 1회 투약한 자도 중대범죄자로 보아야 할까. 진화하는 신종 기술로 나날이 늘고 있는 신종 중대범죄는 어떡하나.

대통령령으로 실시간 중수청의 수사개시 범위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 변화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같은 사건이라도 사회적 관심도가 달라지면 그 해석의 여지를 이용해 사건을 서로 가져오거나 떠넘기려 할 수 있다. 중대범죄인지 아닌지 갑론을박하는 사이 범죄자가 도망가고 주요 증거가 인멸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뿐만 아니다. 수사기관이 새로 생기면 관련 법령과 규칙이 폭증하며 제도가 몹시 복잡해진다. 지금도 형사소송법 외에 행안부령의 경찰수사규칙, 대통령령의 일반적 수사준칙, 경찰청 훈령·예규 등 수십 개의 지침이 존재한다. 여기에 중수청이 생기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규칙과 중수청 수사준칙 그리고 수십 개의 중수청 지침이 우후죽순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형벌권은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권력이므로 어떤 제도보다 높은 완결성을 요한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조차 없다. 어려운 제도를 급하게 만들면 조문 중복이나 누락, 해석 충돌과 같은 혼란을 피할 수 없는데 법률 비용은 그만큼 크게 증가한다. 절차가 기관마다 다르게 쪼개지면 그 단계마다 법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좋을지 몰라도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중수청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의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일이다. 법률가들이 쌓아 올린 경험과 합리적 대안이 제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때에야 비로소 가난하고 배움이 적은 사람들 그리고 생업에 바빠 권리 주장조차 어려운 시민들이 억울함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문제도 있습니다. KICS는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 개시부터 형 집행까지 모든 정보와 문서를 공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전자적 관리체계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이 시스템은 전혀 다른 두 기관이 연동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KICS 개편 작업이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보도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남아 있어서 자칫 10월 공소청·중수청 신설 때 완성될 수 없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에서도 만약 출범 일정에 맞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도 수사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사권 조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준비기간이 오히려 더 짧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공소청도 함께 출범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국민들이 겪을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수청이 출

범하면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국민의힘 최보윤 법조인, 수석대변인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논평한 것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없는 세상,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다.

이재명 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습니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 주던 마지막 사법 안정망을 무너뜨린 폭거입니다.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부터 드러납니다.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습니다. 초동에서 외면당한 피해자는 끝내 침묵 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법조계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조사에서 변호사 10명 중 9명이 검찰청이 사라져도 최소한의 보완장치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민변 소속 진보 성향 법조인들조차 모든 권력은 반드시 더블체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은 이번 법안을 두고 국가폭망법, 지옥문이 열린다는 극언까지 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겪을 고통이 자명하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권한만 막강해지고 책임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쪼갠다지만 실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요 사건은 서로 맡겠다고 경쟁하겠지만 평범한 국민의 소소한 사건은 오히려 외면당하거나 기관 사이에 떠돌게 될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법률 비용이 국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진 지금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되돌릴 절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정의가 자동으로 보장되진 않습니다. 생활범죄와 민생사건을 지탱해 온 장치가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곧 국민의 혼란과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청 폐지의 본질입니다. 개혁이 아니라 국민 보호 장치의 제거입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가 지워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누구도 법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 낼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준비도 없이 시행일이 오면 우리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이 법안을 AI에 딥러닝시켜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악법인지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중수청법안, 공소청법안 등 현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하거나, AI가 가상의 사건을 통해 검찰청의 자리를 중수청·공소청이 차지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프롬프트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권 충돌이 첫 번째 단계로 나타납니다. 수만 명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기획 파산 사건이 터졌다고 AI는 먼저 가

정했습니다.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가 보여 주었듯 이런 규모의 경제범죄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전세금, 노후 자금을 하루아침에 날린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고소장을 들고 수사기관으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것은 사이버 금융사기이니 우리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법안 제43조에 근거하여 피해액이 큰 중대 경제범죄이니 우리가 수사한다고 하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하라고 명령합니다. 공수처는 배후에 고위공직자가 있다는 단서를 잡아 공수처, 우리 관할이라고 나섭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들이 서로 서류를 빼앗고 뺏는 사이 골든타임은 흘러갑니다. 범죄자들은 이 기관 저 기관으로 불려 다니며 진술을 맞추고 핵심 증거가 담긴 디지털 자료는 파쇄되며 범죄 수익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관할권 다툼으로 범죄자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어부지리가 현실이 됩니다.

AI가 가상한 두 번째 단계는 이 법안의 구조가 만든 수사 방해의 경로가 나타납니다.

천신만고 끝에 중수청의 한 수사관이 사건을 맡아 권력 실세의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의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순간 이 법안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고 일반적 사항에서는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관은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수사인력을 다른 사건으로 재배치하거나 수사 방향에 관한 의견을 청장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직접 수사하라거나 덮으라는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인사권과 예산권을 쥔 상급기관의 의중은 수사 현장에 전달됩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도 검사 개인은 이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이 지휘권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에게는 그 방패가 없게 법이 마련됐습니다.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장관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AI는 3단계에서 서류 배달부 공소청의 재판 패소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기소만 남은 상태로 공소청으로 넘어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현장에서 '서류 배달부 검사'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 또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해서 만든 기록을 트럭에 실어 법원으로 갖다주는 역할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의 숨소리 한 번 들어 보지 못한 채 텍스트로만 읽은 기록을 들고 법정에 들어선 공소청 검사는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 변호인단과 맞서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절차상의 미세한 흠결을 파고듭니다. 복잡한 금융거래의 빈틈을 찾아내는 대형 로펌 앞에서 보

완수사권이 없어 뒤늦게 기록만 건네받은 공소청 검사는 단 한 번의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무너집니다. 수사기관은 머리 없는 손발이 되고 기소기관은 손발이 없는 머리가 되는 기괴한 형국이 법정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판사의 입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나서고 전 재산을 잃은 서민 피해자들은 법정 밖에서 쓰러집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가 AI가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되었을 때 가상으로 사법체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그려 준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수청법안의 조문들—제6조의 행안부장관 지휘권, 제32조의 수사관의 취약한 신분 보장, 제43조의 선택적 이첩 구조, 제45조의 삭제로 사라진 공소 검사와의 연결 고리—이 조문들이 실제로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AI가 만들어 본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든 사전 검증을 합니다. 항공기는 시험 비행을 하고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걸린 이 거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은 아무런 사전 검증도 없이 2026년 10월 2일이라는 시한에 맞춰 실시됩니다. 실패할 경우 그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인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법이 제 역할을 잃을 때 권력의 폭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려는 이 입법 폭주야말로 법의 탈을 쓴 폭정입니다. 개혁이라는 화려한 명분 속에는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참혹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권한조차 빼앗긴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의 폭력에 한 번 죽고 자신을 짓밟은 가해자가 법망을 비웃으며 빠져 나가는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는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지독한 모순이자 위선에 불과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토록 숭고하고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왜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와 특별검사에게는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라는 막강한 통합 권력을 고스란히 쥐여 주는 것입니까? 결국 이 법안의 진짜 목적은 인권 보장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 발밑에 꿇리고 수사관들의 신분 보장을 박탈해 권력에 순종하게 만드는 수사의 정치 종속화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오직 다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인 제도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 내는 마

지막 방파제를 국회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뼈아픈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영의 논리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만을 바라보며 이 파괴적인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과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의 문제는 제도 설계가 나쁘다는 정책적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 일련의 법안들이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는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나쁜 것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2조제3항입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 제16조입니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두 조항 모두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주거에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가장 침익적인 상황에서 영장 청구 주체로 검사를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듯 헌법이 여기서 검사를 명시한 것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기본권 침해를 일차적으로 통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검사는 수사기관과 법원 사이에서 기본권 보장의 필터 역할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헌법이 직접 전제한 존재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검사의 권한 행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수청 법안이 만드는 구조에 있습니다. 법안 제17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사의 실질적 주체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입니다. 그런데 당정청 협의 결과 중수청의 수사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제45조가 몽땅 삭제되었습니다. 제45조의 삭제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기록을 송치할 때 비로소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를 검사가 현장에서 통제하는 구조가 법률로 차단된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는 헌법이 상정한 독립적 심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차진아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사가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적 문제는 권력분립 원리에서 도출됩니다.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분립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법적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학계는 이 점에서 수사기관이 행정권력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권력분립 원리의 요청으로 이해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는 수사기관을 행안부장관의 직접적 지휘·감독 아래 두면서 수사관의 신분 보장은 현행 검사보다 약화시킨 중수청법안의 구조가 사

법권 독립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의 근거는 중수청법안 제6조와 제32조입니다. 제6조는 행안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임명권도 행안부장관이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권의 대상인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어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지휘권을 가진 자가 파면권도 함께 갖는 이 조합은 수사관이 상급 기관의 의중에 반하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이 강력한 신분보장이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의 실질적 주체를 그 기반이 없는 존재로 교체합니다.

세 번째 헌법적 문제는 헌법 제89조제16호와의 충돌입니다. 이것은 중수청법안이 아니라 공소청법안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검찰청 폐지라는 동일한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함께 짚어야 합니다.

헌법 제89조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이 직접 이름을 명시한 헌법상 기관입니다. 공소청법안 대안 제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는 존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전혀 다른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한 뒤 그 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이 상정하는 검찰총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실질적으로 사문화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 없이 헌법 조항을 법률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례 없는 우려가 아닙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도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다 위헌 논란 때문에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직위는 법률로 바꿀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 전례가 가르쳐 준 교훈입니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는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법률로 헌법 규정을 사실상 개정할 수 있다면 전체 법질서가 혼돈에 빠질 것이며 형식적 헌법 개정 없는 사실상 헌법 개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이 위헌임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근거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은 헌법의 틀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법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흔드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체된 검찰청과 이미 출범한 중수청 사이의 법적 공백을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불안정성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적법절차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2조제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적법절차 원칙은 단순히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그 절차 자체가 적정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 원칙을 형사절차상의 제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해석해 왔습니다. 국가가 수사권이라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이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서 적법절차 원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째는 증거 연계의 공백입니다. 현행 체계에서 검사는 수사 단계부터 수사관과 함께 법적 판단을 내리며 증거를 검토합니다.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떤 진술이 공소 유지에 필요한지를 수사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가 걸러지고 피해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검사가 수사관의 위법한 수사 방법을 현장에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중수청법안 제17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 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하는 제4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 검사가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때 비로소 기록을 받아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법절차 요건을 형사사법 전문가가 점검하는 구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면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 인권침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위법 수집 증거에 기반한 구속 상태를 감내해야 하고 법원은 훼손된 증거 구조 위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피해자 보호의 공백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같은 기관에 있을 때 피해자는 검사에게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새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을 따로 상대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한다’고 하고 공소청은 ‘우리는 기소만 결정한다’고 할 때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전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는 중앙일보 기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경찰청에 갈 일 한 번 없고 검사를 대면할 일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것이다. 환자가 되어 치료를 받기 전에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렵듯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작동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요성을 평범한 시민이 사전에 알기는 어렵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사는 범죄 피해자의 대변자이자 경찰 수사에 사법통제를 하는 준사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리·부패를 막는 과정에서 검찰은 믿기 어렵고 경찰은 믿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적법절차 원칙은 피의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낳은 절차적 공백은 결국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범죄 피해자들에

게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돌아갈 것입니다.

평등원칙과 선별적 수사 위험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등원칙과 선별적 수사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평등원칙은 단순히 법률을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국가가 수사권이라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특정 대상에게 집중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수사의 개시 여부, 수사의 강도, 사건의 이첩 결정이 피의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사건을 수사하고 어느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수사기관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경우 이 재량이 유독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장 임명부터 수사관 인사까지 행안부장관과 대통령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성룡 교수는 이 구조의 핵심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안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각종 위원회를 통해 검사 인사는 물론 사건의 기소 여부, 검사의 승진·파면까지 모두 관여해도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형사사법의 한 축이 완전히 정치화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는 추상적 우려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수청법안 제43조제3항은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반대로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하고 싶은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가져오고 수사하고 싶지 않은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모두 법률로 허용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가져오고 어떤 사건을 내보낼지의 판단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수사가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로를 법률이 열어 두는 것이며 헌법 제11조가 금하는 자의적 차별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헌법적 문제들은 다수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제기해 온 경고와 맥을 같이합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직접 인용하며 검사의 준사법기관적 지위가 헌법적으로 보완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직무상 지위와 신분보장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결정에서 검사의 권한 행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중수청법안의 구조는 헌법이 검사 제도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이 준사법기관

으로서의 지위는 중수청법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삭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아울러 정재기 변호사는 유엔이 1990년 9월 검사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이 검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규정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헌법뿐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 참여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국제표준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비준한 국제기준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수사관의 신분보장 약화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고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면직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법안의 적격심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제1항,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았을 때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수사관 적격심사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3항, 적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이 수사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수사관의 면직을 건의한다.

제4항,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관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한다.

제6항, 제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적격심사 대상자의 의견진술, 수사관 적격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적격심사 조문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이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낮은 평점을 받은 수사관을 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를 통해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관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또 전문가 교수는 이 법안을 유럽평의회 회원국에 번역해 보여 주었고 법치국가로서의 개선인지 퇴행적 개악인지 평가를 받아 보고자 제안했습니다. 답을 알면서 묻는 말일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법치국가에서도 수사기관을 행정부처 장관에게 종속시키고 수사관의 신분보장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김성룡 교수가 오죽하면 이런 읍소와 같은 제안을 했겠습니까.

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경고가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3월 11일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진아 진술인을 비롯한 반대 측 의견은 이후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사실상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부분이 채택되지 못한 채 민주당 다수의 표결로 통과된 법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전문가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만들어진 법률이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법안을 밀어붙인 정치인들, 우리 국회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이 위대한 법의 정신을 짓밟고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억울한 자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죽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과 위선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서 왜 정부 입맛대로 쓰는 공수처와 특검에는 그 막강한 수사·기소 통합 권력을 그대로 쥐여 줍니까?

이 법안의 진짜 목표는 명백합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발밑에 두고 검사들의, 수사관들의 신분보장을 박탈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끔찍한 수사의 정치 종속화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절차 잃은 기형적 개혁 악법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의 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낙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깨어나서 이 법에 반대해 주십시오.

경찰청 강력범죄·성범죄 수사 공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기형적으로 분리되어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을 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할 피해는 바로 이 지연입니다.

먼저 강력범죄와 성범죄 수사 영역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수사의 속도와 법적 판단의 정확성이 피해자 보호와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현행 검찰청 수사체계에서는 검사가 강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영장청구의 법적 요건을 판단하고 증거수집 방향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개입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법적 증거능력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수청이나 경찰청 수사관이 법적 기소 가능성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전문 법조인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뒤 공소청 검사가 처음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구조에서 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나 절차적 하자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통스러운 진술 과정을 마쳤고 범죄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단절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수사 공백은 이미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25년 9월 국민의힘이 개최한 검찰 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문수정 변호사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2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미비점을 발견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지침상 명시된 3개월 내 해결은 사문화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적체된 사건들 중 진행 상황을 통보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는 현장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앞에서조차 일선 경찰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검사가 뭐라 하든 똑같은 서류 그대로 다시 보낼 거다'. 이것이 수사기관들 간의 통제 기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원이 없는 서민 피해자들은 국가기관이 범인을 잡아 유죄를 확정해 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배상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동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버립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늦게 진행한 탓에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마지막 경로마저 차단되는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하루하루 마음에 천 근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업에 전념하지도 못합니다. 이 수치 뒤에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경제·금융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할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역에서 이미 심각한 수사 공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현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문 수사인력의 이탈은 경제·금융 범죄 분야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금융·증권 범죄 전담부서의 검사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남아 있는 인력마저 검찰청 해체 법안 통과 이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동요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해체가 공식화되기도 전에 전문인력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금융 범죄 수사에서 전문 검사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주가조작, 횡령·배임, 분식회계, 불법 대출 비리와 같은 사건들은 회계·금융·법률 지식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최고 수준의 법률·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이에 맞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가 증거 구조를 설계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관이 수집한 기록을 공소청 검사가 뒤늦게 받아 법정 대응을 준비하는 구조에서 복잡한 경제사범들이 얼마나 더 많이 무죄로 법정을 나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할 경우 그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인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일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권력형 부패를 더 효과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늘어날수록 권력형 부패 수사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6년 2월 3일 특정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지만 검찰은 엿새 만에 경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주식 거래 의혹은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로, 공무원 사망사건은 종로경찰서로 나뉘었습니다. 편파 수사 의혹은 서울경찰청에서 다시 공수처로 이첩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세 기관에 쪼개져 각각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반반 수사와 3분의 1 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중수청까지 추가된 이후의 구조를 예고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직후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할지 알기 어려워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사건 핑퐁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중수청 기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겹치고 이첩을 둘러싼 신경전이나 수사 지연도 예상된다. 머리 아픈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와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다. 과거 정치검찰보다 더한 정치중수청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수사에서 관할 혼란이 낳은 가장 심각한 결과는 수사 시기의 상실입니다. 부패사건에서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멸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삭제되고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이 맞춰지며 핵심 물증이 사라집니다. 누가 수사해야 하나를 논의하는 사이에 범죄자가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법이 보장해 주는 셈이 됩니다.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은 이 역설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지 않고 덮어 버리면 그냥 암장된다. 지금 경찰의 여권 의원 공천헌금 수사와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보면 수사권을 검사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과 중수청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또 한 언론 논설위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해체하는 수술 과정에서 정작 또 다른 수사권력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모순의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검찰에만 적용되겠습니까? 경찰과 중수청에 집중되는 권력에는 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망양보뢰의 참극이 수사 현장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사 공백은 수사기관 내부의 제도 문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국민들일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기고에서 법과 제도의 복잡성이 누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절차가 기관마다 다르게 쪼개지면 그 단계마다 법률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좋을지 몰라도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

지금도 고소·고발 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어느 검찰청 관할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되면 국민은 추가로 한 가지 판단을 더 해야 됩니다. 자신의 피해사건이 중수청 소관의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찰 소관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 전문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수청 법안 제2조의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소위 심사에서도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그 판단을 일반 국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제도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잘못된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첩 절차가 기다립니다. 이첩되는 동안 시간이 흐릅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공소시효는 다가오는데 피해자는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지식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원이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포기합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먼저 탈락하는 것은 가장 힘이 없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검찰개혁의 취지가 국민의 인권 보호라면 개혁의 결과가 오히려 국민의 형사사법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재피해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범죄 피해자는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수사기관이 관할을 다투는 사이 구제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부패 피해자는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표류하다 암장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수청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어 줄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억울한 자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죽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과 위선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원칙이라면서 왜 정부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공수처와 특검에는 그 막강한 수사·기소 통합 권력을 그대로 쥐여 줍니까?

이 법안의 진짜 목표는 명백해 보입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발밑에 두고 수사관의 신분 보장을 박탈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끔찍한 수사의 정치 종속화가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절차 잃은 기형적 악법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 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낙원이 되지 않도록 이 야만적인 입법 폭주 반대에 동참해 주십시오.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경제범죄 피해자, 부패 피해자가 중수청법안 시행 이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피해를 막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지 않고도 검찰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몇 안 되는 정치검찰을 잡으려다 사법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한 변호사 패널이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군을 해체하면 국가의 안보는 무너집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과오가 있다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고쳐 써야 마땅하다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더미 같은 기록에 파묻혀 민생범죄와 싸우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수많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노력마저 적폐로 몰아 조직 전체를 해체하는 것은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스스로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사퇴 다음 날인 3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친정부 인사 박찬운 교수의 해당 페이스북 글 전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제 이견이 없다. 문제는 개혁의 방향과 방식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 논의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집단적 착각에 가까운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는 다음 다섯 가지가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본다.

1,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이다.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검사는 기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다. 다만 직접수사가 가져오는 권한 집중과 남용의 위험 때문에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이를 지휘·감독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를 이유로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개혁의 정답처럼 유통되고 있다. 이는 비교법적으로도, 제도사적으로도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향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 버렸다. 이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2,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

수사·기소 분리를 강하게 외치는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과거 검찰권 행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나도 안다. 나도 분노했다. 나도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개인적 경험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절대선의 서사로 굳어졌다는 점이다.

이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면 검찰개혁은 실패한다는 믿음에 도달했다. 이는 논리적 설득의 결과라기보다 반복, 감정의 축적이 만든 세뇌에 가깝다. 제도 개혁이 감정 정치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3,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검찰 공격은 결국 모든 검사를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검사가 무슨 말을 하든 '검사니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이는 제도적 신뢰의 붕괴가 낳은 비극이다.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신뢰 없이 작동할 수 없다. 특정 권한의 남용을 비판하는 것과 하나의 직역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우리는 그 선을 이미 넘어

섰다.

집권세력이 검사를 악마화해서 얻을 것은 없다. 그들도 공무원 조직에 불과하니 다뤄야 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악마화는 사실 집권세력이 무언가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제도 개혁에 대한 위험한 환상.

한국의 개혁 담론에는 유독 법률만 바꾸면 현실이 즉각 바뀐다는 순진한 믿음이 깔려 있다. 5년짜리 정권이 법 몇 개 고치면 한 세기 가까이 작동해 온 국가 시스템이 매끄럽게 재설계될 것이라는 환상이다.

그러나 제도가 작동하는 것은 법문이 아니라 축적된 운용의 결과다. 급격한 구조 변경은 필연적으로 공백과 혼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낳는다. 그럼에도 개혁 주도 세력은 이 위험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한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무책임한 실험에 가깝다.

5,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

지금 개혁 주창자들은 검사의 직접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실패한다고 주야장천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백, 비효율적 사건 처리, 억울한 피해 가능성은 애써 외면한다. 분명한 것은 그런 개혁의 비용은 정치인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제도 개혁은 최소한의 공리주의적 관점, 즉 사회 전체의 피해와 이익을 비교하는 기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논의는 그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분노에 기초한 개혁, 단순한 구호에 기댄 개혁, 제도 전체를 파괴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개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지금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정교한 설계다.

다섯 가지 요인 하나하나 보십시오.

첫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과 둘째,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동기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셋째,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배제하려는지 설명합니다. 넷째, 제도 개혁에 대한 위험한 환상은 중수청 법안이 왜 현장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는 이 법안의 피해를 결국 누가 감당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지금 추진되는 방식이 진정한 개혁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개혁 진영의 내부에서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기관을 해체하지 않고도 검찰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 인사의 실질적 독립성 강화입니다.

검찰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검사 인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해 온 데서 비롯됩니다.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관철되고 그 총장의 의중이 일선 검사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정부 측 인사의 비중을 줄이며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없애지 않고도 가능한 개혁입니다.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둔감하고 죽은 권력에 날카로웠던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 문제의 핵심이 기관의 존재가 아니라 인사의 정치화에 있다면 인사 구조를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들이 수사의 계속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권고가 수사 결과에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속력 있는 심의·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수사의 외부 통제를 실질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높이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수사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할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살아납니다.

셋째, 공수처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새 기관을 또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공수처의 인력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수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넷째, 검사 윤리 강화와 내부 감찰시스템 정비입니다.

검찰 문화의 문제는 제도 설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수사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부 제도를 강화하고 위법 수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사후책임 시스템을 강화하고 무리한 기소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절차를 만드는 것도 검찰 문화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도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의해 완성됩니다.

다섯째,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추진입니다.

어떤 방향의 개혁이든 그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여야 합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사법체계는 국민 모두의 일상과 직결되는 법입니다.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된 개혁은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사회 갈등을 낳고 제도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개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제시했던 검찰개혁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검사들을 이유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군대를 해체하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안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학계와 법조계,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 논의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방향들입니다.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검찰을 개혁한다면 그 기본 방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정의 구현은 기관을 해체하지 않고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체계의 진정한 쇄신은 범죄자를 떨게 만들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자의 방탄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식이 기관의 급진적 해체여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점진적이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78년에 걸쳐 형성된 판례와 수사 관행, 기소 기준, 공소 유지 노하우가 검찰이라는 제도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에 담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험으로 전수되고 조직문화로 체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기관을 해체하면 이 축적된 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미 우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수청이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공수처의 경우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정원 65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이었음에도 설립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수청은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기관입니다. 이 규모의 기관이 처음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작동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그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 내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6년 10월 2일이라는 시행 일정은 준비 상황에 비추어 극도로 촉박합니다. 쟁점이 대부분 미해결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이 없고 인력 확보 방안이 없으며 청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조차 착수하지 못했고 출범 일정에 맞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법안은 있는데 그 법안을 실행할 인프라가 이때까지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2021년 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도 수사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약 3000명이 넘는 규모의 중수청과 약 7000명 이상 규모의 공소청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은 오히려 더 짧습니다. 더 작은 변화에도 혼란이 있는데 더 큰 변화를 더 짧은 시간에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셋째,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개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수차례 반복된 교훈입니다.

2004년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되다 좌초됐습니다. 21년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되었고 그 결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없이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역대 개혁의 결과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합의 없이 강행된 개혁은 다음 정권에서 뒤집어지고 제도는 반복되는 쟁점의 대상이 되고 국민은 불안정한 제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감당합니

다. 제도의 안정성 자체가 법치주의의 요건입니다.

오늘 강행되는 중수청법안이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중수청 법안이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개혁의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준비 없이 서두른 탓에 국민에게 오랜 혼란을 안겨준 졸속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수청 법안이 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똑같은 법이, 그때 여당에 의해서 이 법이 올라왔으면, 이 똑같은 법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찬성하셨겠습니까?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미해결 쟁점, 형사소송법도 없는 기관 출범, 0.8%의 인력 지원율, 이건 검사들한테 물으니까 0.8%만이 중수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훗날 중수청의 수준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호소한 내용이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규탄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한의 분산이 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수청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소위 말해 지금까지 누렸던 권한을 대폭 축소당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또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습니다. 특수사법경찰,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어 중수청에 입건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 적발 시에 그 사람을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박탈당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 개시 시에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권한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박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든, 과잉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하든지 간에 공소청 검사는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청 개혁입니까? 국민의 인권 보장 장치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소의 뿔을 바로잡다가 소를 죽여 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 버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짜 문제는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인 경찰을 관장하고 또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 적격심사를 통해 면직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중수청이 선거, 부패, 금융 등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뜻을 거스르기가 힘들게 되는, 즉 수사기관의 독립성·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범죄 수사,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장관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부 장악, 입법부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를 완전히 통째로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왕 중의 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 공화국이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화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의 공화주의의 본질인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검찰개혁을 피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온전하게 보장해 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법안이 아닙니다. 민주당 그들만의 법안이며 반공화주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철폐되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려고 하는 것은 결코 검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으켜 온 자유와 법치와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을 끝까지 지켜 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충정을 널리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가 자유와 법치와 민주공화국을 끝까지 지켜 낼 수 있도록 꼭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꼭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에 대해서, 이 법안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

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 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빠르게 추진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조문의 설계와 입법 과정의 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법안이 추진된 동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들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집권은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기 전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집권 이후 이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달라진 정황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 결정을 뒤집은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고발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결정 자체도, 그 이후 고발 사건의 수사 처리도 집권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흐름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전 검찰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관련 사건들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사하던 그 검찰을 해체하는 법안이 취임 직후부터 전속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작년 9월 26일 검찰청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1월 12일 입법예고하고 2월 24일 재입법예고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 3월 18일 본회의 상정까지 집권 9개월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78년 형사사법체계가 단 9개월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법체계를 처리하는 게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팎이 외부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3월 17일 하루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협의안을 전격 발표한 날 오후에 곧바로 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법안을 잘 만들기보다 빨리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바로 권력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원천봉쇄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하루빨리 빚어 내기 위한 방탄의 시급함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임위 심사 현장에서 이 무도한 입법폭주를 온몸으로 겪어 낸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이 표결로 강행 처리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 외친 절박한 기자회견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방탄과 수사장악 시도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이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개악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국민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하여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방적 지휘·감독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을 사실상 정권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뜻입니다. 정치 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장후보 추천도, 중수청의 인사도 정치인이면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임되는 행안부장관의 영향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 예속 수사기관입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를 조금 손봤을 뿐 중수청 수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수사체계 혼선, 견제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며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방탄 입법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수사 장악 입법에 맞서겠습니다. 사법 장악, 개악 시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법안소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표결로, 여야 합의 없이 표결로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원 전원이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 한 전문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던진 '무엇이 그토록 시급했는가?'의 답이 조문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관 결격사유 조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소청 퇴직 검사만 차단하면서 그 외의 경력자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이 정작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임용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수사관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력의 입맛에 맞게 편향된 수사를 일삼던 수사관이 퇴직 후 청와대나 기타 중요한 정치·행정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의 편향된 수사로 인해 수사상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야당 때 이런 법이 여당에 의해서 발의되었으면 정말 찬성하시겠습니까? 찬성하셨겠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칙 조항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안의 시행일을 26년 10월 2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일부 결격사유 조항의 시행을 28년 10월 2일까지 유예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특정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 정권 임기와 맞닿아 있는 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특정 인사에게 임용의 경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설계입니까?

중수청법안 제43조의 선택적 이첩 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중수청은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공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수사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은 직접 수사하고 여당 실세가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나 경찰로 이첩할 수 있는 것이 이 조항의 범위 안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사의 선택권이 정치적 판단과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공수처의 5년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결격사유의 선택적 설계, 부칙 특례의 시간적 구조, 이첩권의 재량, 이 세 가지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법안의 구조에 대해 '수사관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수사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꺾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치밀한 독재의 완성일 뿐입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이 악법의 실체를 고발한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의 규탄사를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간사의 규탄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폭거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수사체계에 혼란이 오고 이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아울러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폐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수청법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와 정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네들의 불리한 수사는 묻어 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의 주구인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중수청의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장관 소속의 청장후보추천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인사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 등 중수청 수사관의 인사권을 행안부장관이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누구입니까? 행안부장관은 정치인이자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입니다. 이 행안부장관이 인사권을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또 수사에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중수청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중수청이야말로 수사 독립기관이 아니고 권력에 종속돼 있는 예속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독소조항인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열어서 최하위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적격 심사 기간은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검사를 적격 심사해서 면직되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은 어제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 적격심사위원회를 활성시키겠다는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행안부의 인사권을 중수청에 집중시키느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수청장이 괴물청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이고 최소한의 장치라고 합니다.

청장이 괴물청장이 될 수 있다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장관이, 수사권을 전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장관이 오히려 괴물장관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중수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권세력의 비리를 덮어 주고 그리고 집권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라 자명합니다.

중수청법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되고 수사 사법권과 전문 수사관이 수사관으로 일원화되는 것 등 조금 수정되고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화장을 했다고 해서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본질은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 중수청 법안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를 가지고 오고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겉으로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수사권력을 더 직접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화된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받던 검찰을 해체하고 정치화에 더 취약한 구조의 새 기관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개혁입니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의 논리로 개혁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대사가 그 증거를 직접 보여 주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검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른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당시 치안본부는 내무부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달리 외청으로 독립되지 않았고 사실상 경찰의 총수는 내무부장관이었습니다. 정권 실세가 내무부장관에 앉아 경찰 조직을 직접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전날 1월 13일 당시 김종호 내무부장관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직접 방문하여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이 수사기관이 행정 장관의 직접 지휘 아래 놓였을 때의 현실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권은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공식 확인을 통해 당시 정부가 안기부장,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청와대 비서실로 구성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최소 2회 이상 열어 사건을 은폐·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정권력의 통제 아래 놓였을 때 은폐와 조작이 정부 전체의 공식 회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노한 국민은 6월 항쟁으로 일어섰고 결국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 참사를 낳은 구조에 대한 역사의 답이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1991년 경찰청법이 제정되어 치안본부는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고 내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장관이 직접 지휘하

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사가 가르쳐 주었고 대한민국은 그 교훈을 법률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중수청 법안은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립니다. 1991년의 역사가 차단하려 했던 바로 그 경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장을 지휘하는 구조—를 이 법안은 제6조의 명문으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중수청법안은 묻게 만듭니다.

중수청법안 제6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의 통제 아래 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면 그 구조는 어느 정권이든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개최한 검찰해체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였습니다. '인민재판부'라는 표현이 과격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우려들을 들어 보시면 이 명칭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님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MK파트너스 김종민 변호사는 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산당이 직접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중국이 유일한 사례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중수청의 구조를 겨냥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그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며 수사관의 신분 보장이 취약하여 상부 지시에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수사기관 설계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정치화된 수사기관의 구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세연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수사 현장의 피해자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규모 조직 사기나 대규모 금융범죄 피해자분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는 검사님들을 본인들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있고 이분들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여 당당하게 소신 있게 공소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인 지위 보장조차 되지 않는다면 위 법안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의 신분 보장이 사라질 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5조는 징계처분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척결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적 장치인 신분 보장을 박탈하는 것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만들어질 조건을 법률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할 능력이 있는 피의자와 신분 보장도 없이 외압에 취약한 공소청 검사가 법정에서 맞선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인민재판부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정치권력의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신분 보장이 취약한 수사관들이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합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가져오거나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권력에 불편한 수사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은 논리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구조는 현재의 권력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도 올바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란 권력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의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권력의 지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도 언젠가 권력의 반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법안이 만든 구조가 자신을 향할 때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논리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조차 내 편이 아니면 무참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어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국민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웃음을 갖다 줄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절차 잃은 기형적 개혁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의 법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의 낙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위험한 도박을 당장 멈추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78년의 역사와 그 공과,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실체와 추진 경과, 수사·기소 분리론의 허구, 중수청법안의 조문별 문제점, 헌법적 위반 소지, 중수청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정한 개혁의 방향 그리고 이 법안이 설계된 진짜 목적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하면 중수청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지금 세 번째 이어 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본 의원은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저는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

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의 단상에 이렇게 자주 오르게 된 것은 야당의 몽니라고 보이십니까?

대화가 차단된 국회의 기록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끝까지 이 단상을 지켰다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것들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개정도 없고 인력과 청사와 전자시스템, 그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청 폐지 시한에 기계적으로 맞춰진 중수청법안이 졸속 강행 처리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두어 정치권력이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그 장관이 사실상 청장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과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이는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한 부처에 경찰과 중수청 모두를 집중시키는 모순입니다.

아울러 신분 보장이 취약한 수사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저항할 수 없는 구조를 법률로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탄핵이나 금고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와 달리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는 것,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 공수처의 운영을 개선하여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은 본 의원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는 과제들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되어 26년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36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전문 수사 인력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권력자와 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중수청법안의 구조적 문제들이 그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신분 보장이 취약하고 청장은 2년마다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하며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습니까?

현실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형 경제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청장이 바뀌고 수사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는 반대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다음 정권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칼이 움직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신뢰는 추락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호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은 공수처 설립 이후 5년여의 경험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소규모 기관인 공수처에서도 그랬듯이 그보다 훨씬 큰 중수청이 같은 구조적 문제

를 안고 출범할 때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강자도 약자도 권력자도 일반 시민도 동일한 법 앞에 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의 지휘 아래 들어가면 법은 권력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반대편을 공격하는 칼이 됩니다. 그때 법치주의는 이름만 남고 실질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개혁, 민주적인 개혁이라면 그 과정이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강력한 정치권력에 의해 강행된 것이라도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준비 없이 강행된 제도는 강한 바람 앞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의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둘째, 삼권분립입니다. 입법·사법·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는 어느 한 권력이 나머지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수사권이 행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다수의 힘은 다수를 잃었을 때 그 힘을 반대 방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 언젠가 권력의 반대편에 섰을 때 중수청법안이 만든 구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수사기관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권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범죄 피해자, 내부고발자, 권력 비리를 고발하려는 시민들,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정한 수사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토론을 마치며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첫째,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낳는 문제들을 끝까지 감시하고 챙겨 가겠습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표적 수사의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마다 국민 앞에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이 설계된 목적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챙기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공수처 운영 개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날까지 계속 챙기며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셋째, 헌법적 문제가 있는 중수청법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만든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입헌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과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검찰이 완벽한 기관이라고 믿기 때문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키고자 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제도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나라를 살아갈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제도를 설계할 때 내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을 때도 그 제도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인가, 내 자녀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제도가 피해자의 편에 서 줄 것인가, 내가 권력자의 비리를 고발했을 때 그 제도가 고발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이 단상에서 본 의원이 지킨 것은 이 한 조항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은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정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본 의원은 오늘 중수청법안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이것은 저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 대한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같은 말을 드립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멈춰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교흥 이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신정훈)

(20시51분)

○의장대리 김교흥 다음은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검찰개혁법안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안은 여러 차례 입법예고와 공청회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강한 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초안의 한계와 결함을 하나씩 고쳐 온 결과물입니다.

검찰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던 초기 안에서 출발했지만 인력 구조와 자격요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손을 보고 다듬고 개선해 왔습니다.

처음 제기되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와 법률가 자격 문제 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중수청 내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서 검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 출신에게 상위 지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조인인 수사사법관에게는 별도의 지위와 신분 보장을 부여해서 사실상 검사와 전관에게 유리한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안에서는 수사사법관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전원을 수

사관이라는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임용·정년·징계·신분보장 등도 모두 수사관 단일체계에 맞춰서 적용토록 해서 검찰 출신이 중수청 내부에서 별도의 상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중수청장 자격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중대범죄수사 경험, 인권 감수성, 행정조직 운영 능력 등 두루 갖춘 인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전관 변호사 시장과 검찰 카르텔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실질적인 수사, 인권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인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검찰의 또 하나의 또 다른 간판이 아니라 독립된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입법예고안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쟁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중대범죄가 9대 범죄로 뭉뚱그려져 있었던 것을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그 안에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죄명을 하나하나 법조문 번호까지 적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어떤 정권도 대통령령만 바꿔서 고무줄 수사로 범위를 넓힐 수 없도록 국회가 법률로 직접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특히 가장 우려가 컸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의 안처럼 코에 걸어도 사이버범죄, 귀에 걸어도 사이버범죄가 되는 포괄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일상적인 인터넷범죄나 단순 온라인 분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는 중대 사이버 공격에만 적용되도록 좁혀 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게 범위를 잠가 놓았는데도 중수청에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쥐여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 지배구조 우려를 낳았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은 과감하게 걷어 내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식상 지휘권은 없더라도 검찰이 초기에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 가능하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사실상 수사지휘 또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조항입니다.

현재 경찰이나 국수본은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3세 미만 청소년·아동 성범죄와 선거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통보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독 중수청에만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검사 통보 의무를 두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의 문고리까지 쥐고 서는 그런 구조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쥔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수사기관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개혁의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개혁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제해야 될 대상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틀어쥐고 남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수사권한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재판을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검찰개혁과 중수청 법안이 지향하는 핵심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검찰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초안이 나왔을 때는 검사들도, 국민의힘도, 족벌 언론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하고 요구했습니다. 중대범죄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시하라고 요구했고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빼라고 요구했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장치를 넣어 구조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대로 하나씩 고쳐 나가자 그제서야 이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면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장관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지휘한다는 견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견제를 거부하는 특권 카르텔이 아무리 강고한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권 행사가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지방자치행정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적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대개 국민들은 검찰권 행사를 불신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검찰권 행사를 믿거나 반박이나 반론에 대해서 의심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반박이나 이런 것에 여전히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언론의 인기영합주의, 정치적 경쟁 무대에서 확대 재생산되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통로로 활용됩니다.

수사·기소의 독점으로 인한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로 인한 폐해는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이재명 대통령님과 같은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 일반의 피해자는 더 이상 회복할 수도, 회생할 수도 없는 피해를 입고 삶이 파탄이 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을 정도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저 또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전과가 가장 많은 국회의원으로 낙인찍기가 꽤 유효하게 통용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경쟁자로부터 전과 5범이라는 소리를 숱하게 듣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과자 프레임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인한 전과인지, 어떤 사유로 인해 그렇게 거론된 전과인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기소 내용이 사후에 재판을 통해서 해명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전과 프레임은 그 내용보다 횟수에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제 다섯 차례 전과기록 중 두 차례는 학생운동과 농민운동 과정에서 형사처벌된 민주화 관련 사건입니다. 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기록이라 최소한 4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변명의 여지라도 있습니다. 나머지 두 차례는 나주시장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으로서의 행정적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장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무엇이 공익과 지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체장으로서의 행정적 판단에 대한 잘잘못을 가치 판단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두 차례의 전과는 금품과 관련된 전형적인 공직비리나 개인 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오로지 현장에 발생한 문제를 기관의 단체장으로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것들도 사사건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면 현장 행정은 주눅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천심사나 또 청와대 검증 절차에서 그 공공성이나 도덕성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 호남지역에서 무소속 재선 도의원과 무소속 재선 나주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저를 시장직에서 끌어내린 자들은 지역의 정치 토호 세력과 결탁한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저를 옭아맨 화훼단지 사건은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이미 2006년도 8월에 검찰로부터 단체장의 정당한 행정행위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새로 부임한 지검장의 부당한 지시로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었던 상황에서 자신들이 불과 1년 전 내렸던 검찰의 판단을 무단히 뒤집어 버린 것이

었습니다.

훗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검찰에서 지휘했던 화훼단지 사건의 재조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곽상도와 함께 그 사건을 지휘했던 주임검사였습니다. 그들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기소했던 강기훈은 저와 같은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교도소에서 함께 1년 가까이 지냈던 학생운동의 동지이자 친구이기도 합니다.

1991년 유서대필 사건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조작했던 그들이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또다시 나주의 화훼단지 사건에 개입하고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로 저를 시장직에서 끌어내린 자들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의 칼날이 누구를, 어떤 목적을 향해서 행사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유서대필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강기훈은 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 심신이 피폐해지고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험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20년이 넘는 끈질긴 진상규명 투쟁을 통해서 2015년도 대법원 재심 판결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잃어버린 그의 청춘과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는지 처참한 지경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검찰에서 채택한 필적감정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필적감정에 대한 검찰의 증거채택은 결코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실수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고의적 범죄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삶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사법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습니다. 저 신정훈을 나주시장직에서 끌어내렸던 화훼단지사업 또한 바로 표적·짜맞추기 수사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정치검찰의 의도를 다시 한번 짐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당 사건은 대규모 현대식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국가보조사업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가 80%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경남 고성의 폐광지역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주의 화훼단지사업도 폐광산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건설 중인 화훼단지가 오염된 토양이었지만 토경재배가 아닌 양액재배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공정이 80% 이상 이미 준공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대부분이 투입되었고 축구장 4개 크기의 대규모 비닐하우스 골조 공사와 비닐 피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단 사업을 중지시키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건지 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지방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광해방지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현행법에서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우스를 존치한 상태에서 광해방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했고 상급기관인 전라남도·농림부와 협의했으며 최종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쳐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라는 감사결과에 근거해서 준공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미 현장의 적법성 여부나 사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중단의 실효성 그리고 현실성

을 함께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물의와 관심이 집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 공무원들은 문제가 된 현장을 회피하지 않고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시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받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많은 정치적 목적의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에서조차 시장으로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라는 판단으로 무혐의 종결처분한 것은 그나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상황이 바뀌면서 또 검찰의 저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광주지검장은 부임하면서부터 '나주시를 손보러 왔다', '시장을 잡으러 왔다' 하는 소문을 내면서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 수사는 좌표가 정해진 전형적인 표적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였습니다. 마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판박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검찰 권력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팩트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짜고 표적을 정해서 짜맞추기 수사로 죄를 만들고 조사할 수 있다는 것, 검찰은 그러한 취지로 압박하고 또 조사를 강행해서 그런 특혜시비라는 각본을 정해 몰고 갔습니다.

수많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리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검찰은 지금껏 유례없는 배임죄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광주지검 특수부가 최초에 내린 판단과 같이 단체장의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판단해서 비록 실패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행정적 판단에 사법적 단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체장의 정책결정을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개의 정치적 사건은 표적 수사 사건, 그 사건의 정치적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고한 공직자들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동시에 시장으로서 직무가 즉시 정지되었고 지방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분투했던 지방정치의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은 민의가 아닌 검찰의 기획수사와 토착 향판의 사법 판결로 좌절되고야 말았습니다.

단체장으로서 적극적인 정책 결정은 민선시장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현장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법적 규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장단점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 상황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현장 행정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이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해서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로서 당연한 임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당시 나주시청의 공무원들 그들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정당하고 합리적이었다는 그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배임 판결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에서 파면되었고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넘어 여전히 적지 않은 비용과 함께 정치적 비난을 감당해야 될 상황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처럼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풀 때마다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좌고우면하거나 복지부동하기 일쑤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감사에 걸리거나 투서라도 들어가서 검찰의 표적이라도 되면 나만 피해자가 된다 하는 생각이 훨씬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리고 지방자치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민원을 피해 버리면 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하겠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현장에서 하루하루 삶을 꾸려 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을 섬겨야 하는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자치의 일꾼으로서 시장이나 공직자들이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이나 창의적인 행정, 능동적인 행정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훼단지사업에서도 제 지시에 따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적극적 행정, 창의적 행정은 늘 관행이나 법규와 충돌하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동반해야 합니다. 정치적 개선은 정치인의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적극적인 행정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중앙정치권에서만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느끼는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압수수색 한 번 들어오면 그런 행정기관에는 온통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소문이 퍼지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마치 한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는 저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생산하는 보리는 수요가 많지 않아 계약재배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 사료용으로 수확하도록 하고 그 수확 비용의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해 줬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우수 행정으로 채택할 정도로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조차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정치적 고발에 의해서 좌초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던 마을택시도 그런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급식, 농번기철 마을 공동 급식도 이러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또 재단이 되는 아픔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농민들이 야적한 벼를 처리하면서 나주시가 운반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시장의 선심적 비용이라며 또 고발되고 한참을 지역사회 언론에 오르내리는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문서에 적힌 글자 그대로 고발하면 검찰은 그대로 수사합니다.

저는 법치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만능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단 고발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 자체를 넘어서는 문제를 들춰내기도 합니다. 검찰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리는 데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현장의 공무원들은 그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재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소신껏 일하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과거 지방자치 현장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창의적 행정에는 하나같이 발목을 잡는 불순한 기도가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는 창의 행정이라고 표창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에서는 고발당해서 검찰수사를 받는 일들을 부지기수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설거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는데 접시를 깨지 않으려면 설거지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 공직

사회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은 사라지고 공무원들은 법규만 들여다보는 보수적인 행정, 복지부동의 행정이 만연하게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창의적인 행정은 과거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례가 없고 뒷받침하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호재 삼아서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기계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법치 만능주의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현장의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와 기소 관행에 기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정기관, 감사기관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아닌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2009년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참담한 검찰수사를 받을 때 대통령님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통령님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정치 놀음에 희생된 수많은 성실한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참여연대가 2023년도 5월 검찰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검찰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각종 자료를 모아서 만든 책자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어떻게 이런 방대한 자료를 다 모았을까 싶을 정도로 경이로운 350페이지에 이르는 데이터였습니다. 검찰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왜, 얼마나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던 한 해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4812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6건으로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검사에 대한 약식기소 외에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관장·관할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법치주의 울타리에 안주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

그해 검찰이 처분한 형사사건 146만 건 중 기소된 건이 60만 건이라고 하니 기소율이 41.6%를 기록했지만 판검사 기소율은 사실상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러니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민원성 고소고발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소율 0%라는 것은 검사의 지위가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 미루어 짐작하는 대목입니다.

오랜 세월 검찰은 검찰 출신을 임명해 온 민정수석비서관과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통해서 역대 대통령실 그리고 정권과 음양으로 유착해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로 참여정부에서는 검사의 파견을 받지 않고 문재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바 있습니다. 이때 검찰조직에서 느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비서관은 언제나 검사가 앉아 있어야 정권의 동향도 살피고 정권이 요구하는 입맛에 맞는 수사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원천을 차단해 버린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이미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피해가 심해지자 현직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은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지만 검사 사직 후에 대통령실 임용, 그 후에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검사 퇴임 후 1년간 대통령실 임용 금지, 대통령실 퇴직 후 2년간 검

사 재임용 금지토록 하는 검찰청법이 재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20년 말에는 다시 검찰 출신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게 됩니다. 검찰, 그들의 권력을 향한 집념이 그토록 무섭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직의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이관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추천 기능만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은 법무부에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고 강력한 수사기관인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까지 설치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직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 기능 상당 부분을 법무부에 이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의 권력까지 움켜쥐게 되었고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에 현직 검사를 지명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견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이로 인해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뿌리째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판이 아무런 현실적 강제를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이고 언론에서 떠들어도, 심지어 국회에서 공식발언을 통해서 질책해도 윤석열 정권은 거의 소귀에 경 읽기 수준으로 대응하고는 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끄러움이라도 있었지만 지난 3년의 윤석열 정권은 아예 그런 일말의 체면조차도 없는 민낯이었습니다.

검찰 정권을 증명하는 사건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의 북한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 수사 무마 의혹 수사,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수사 그리고 김만배와 50억 클럽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김만배 검찰 수사 무마 및 재판거래 의혹 사건 수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총장 이정근 게이트 수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 공정위의 학벌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이 사건의 목록들은 2023년도 5월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라는 일종의 증거 사건으로 발표한 사건 목록입니다. 이 사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작한 수사가 있었고 대통령이 후에 개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의 북한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 3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놓고 자기가 속한 정권을 향해서 칼을 꽂은 사건일 것입니다. 한직 중의 한직이라고 여겼던 대전고검 검사에 있던 사람을 일약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자기를 발탁했으니 무조건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발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에도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검찰개혁은커녕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면서 문재인 정부를 맞서 몸집을 키웠고 그 결과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이나 시행 과정에 이권이 개입하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마땅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적 문제를 다루는 검찰이 정책결정 과정까지 사법적 수단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정치의 역할을 갉아먹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선택받는 지도자는 그 신념과 통찰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마련이고 한때 그 정책을 두고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수사를 한다면 어떤 정책 결정자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결정 자체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정책결정이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아예 누구도 정책을 자유롭게 구상하거나 시행할 수가 없게 되고 국민 앞에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어서 그 공약을 정책으로 옮겨 실행했는데 그 정책의 결정 과정을 수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수사나 다름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마저 수사로 옭아매겠다는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검찰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뇌물이나 명백한 불법사항이 없는 한 정책결정 자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거나 수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책결정자는 모든 정책마다 신중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이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결정에 대한 수사는 실패가 두려워 복지부동하는 것처럼 임기 동안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자리만 지키라는 말과 결코 다르지 않은 몰상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14개의 사건 목록 중 절반인 7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관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정권이 출범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대선에서 상대 후보를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상대 후보가 국회의 다수당인 제1야당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했는데 이런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 우리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를 통해 정치를 통제하면서 상대방을 탄압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황당한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 줬고 평생 해 온 일이라고는 수사밖에 없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해야 할 대통령이 국정을 오로지 수사하듯 다루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은 공동체의 최소한의 윤리규범일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수사 역시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은 모든 사안을 사법적 수사와 기소 대상으로 삼았고 또 얼마나 영악스러웠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사건 목록은 역으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작위적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 당대표까지 그들이 지난 3년간 벌인 무도한 짓의 근원은 그들은 뼛속까지 검찰일 뿐이라는 자각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검사 정권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검찰행정의 실행 방식으로 시행령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해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축소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서도 비할 바 없는 극을 달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기능 재편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인사 검증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국민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지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던 검찰에게 정부 인사정보권을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하무인의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역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의 근거로는 치안 또는 경찰과 관련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습니다.

과거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서울대 로스쿨 박정훈 교수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대한 해석에 기초해 있으며 경찰 통제기관은 행안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위원회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해 버렸을 정도입니다.

시민단체와 여러 관계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김순호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

니다.

김순호 국장의 임명은 소위 자기들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쓴다는 검찰식 철학의 민낯을 보여 주는 인사행정이었습니다. 시행령에 의한 통치의 핵심 사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검찰 수사권의 원상회복이었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사지휘권 문제서부터 수사의 개시, 종결권까지 현실에 맞는 의견 조율을 통해 부족하지만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가 할 수 없었던 수사의 범위를 모두 없애 버렸고 사실상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고 봐도 하등 이상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은 검찰개혁의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사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행령 통치는 법에 위배되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요소도 다분했는데 법의 취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은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있어서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여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한동훈이 권한 침해라며 주장한 논거를 보면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마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권한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 제98조의2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항에는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항에는 ‘의장은 제4항에 따라서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항에는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매우 무겁게 들리지만 실제 탄핵이라는 제도는 특정인을 처벌하는 개념보다도 정치적인 불신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 탄핵은 일종의 취소 같은 개념이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2025년 봄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탄핵은 헌법에 정한 국회의 기본적인 권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국회가 탄핵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마치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탄핵이 마치 대통령만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누구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고 노회찬 의원님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 아니냐’ 하는 말로 우리 사회의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너무 기울었음을 통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판사, 검사 등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죄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묻혀 버렸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으로 수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면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검찰이 당연히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하는 문제를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5% 수준이고 100건의 재정신청을 하면 실제 기소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5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사건을 덮고 무시하면 이런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고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국회의 탄핵제도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이를 잘못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탄핵을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6개월간 직무 정지의 처벌을 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한 검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2023년 9월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탄핵했는데 1호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차장검사는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했고 이 건은 국회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검사가 피해자를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는 역사상 첫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동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공수처에 안동완 검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공수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권한밖에 없었고 법원도 인정한 보복 기소를 한 검사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국회가 대신 그 사람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2호 탄핵은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핵심 이유는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인데 이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측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손준성 검사는 같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뉴스버스가 증거로 제시한 고발장에는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은 비어 있었고 고발 대상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고발 대상란에는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까지 총 11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해당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2021년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상당 부분 증거들도 나타났지만 손준성 검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이 혐의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3호 탄핵은 이정섭 검사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방역법을 위반하여 재벌가가 소유한 용인 골프장 식당에서 7명이 모여 식사를 했고 주변의 부탁을 받아 가사도우미로 일할 사람들의 전과를 조회하거나 기록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따지

면 방역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검사들 범죄의 기소율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조사 결과는 검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 집단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당의 독선으로 탄핵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의 탄핵이 최종 결정이 아니기에 현실에서 기각될 탄핵을 의석수만을 믿고 함부로 추진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발의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새로 창당하는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요청을 했고 다시 그것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기각 판결에 따라 다시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절대 찬성해서는 안 될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에 찬성했고 그 이후로 새천년민주당의 말로는 참혹했습니다.

2017년도 박근혜 탄핵은 비박 세력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탄핵에 찬성한 세력은 사실상 국힘 내부에 살아남았는데 이유는 국민 다수가 선택한 탄핵이었기 때문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서대필범으로 몰렸던 강기훈은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이 아무런 죄가 없는 강기훈을 유서대필범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강기훈에 대한 미안함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담당 검사가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의 검사와 동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90년도 4월 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합당 판인 민자당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순으로 87년 6월 항쟁은 88년 총선에서 평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고, 당연히 제1당이 민정당이었지만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87년이 시민항쟁이었다면 88년은 시민의 투표항쟁이라고 불러도 좋을 지경입니다. 사실 88년 총선의 결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87년 민주항쟁은 그 이후에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으로 퍼져 나간 상황에서 90년 3당 합당은 80년 민주항쟁 이전의 원상회복이자 민주화의 위기였습니다. 이때부터 학생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다양한 부분에서 투쟁이 이어졌는데 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학생이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시위는 더욱 확산되었고 이로부터 두 달간 연쇄적으로 분신이라는 불행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분신으로 인한 애꿎은 희생이 계속되던 중 당시 서강대 총장이었던 박홍 신부는 서강대 메리홀 기자회견에서 '죽음의 블랙리스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고 이용하려는 반생명적인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 주장했었고 이어서 그는 배후세력을 전대협과 같은 이들이다라고 규정한 뒤

이들은 그늘에서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물귀신 공법으로 물 마시듯 폭력을 전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고 5월 8일 정부는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서동권 안기부장, 최병렬 노동부장관 등을 모아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분신 사건에 대한 배후 수사를 결정했는데 당시 정구영 검찰총장도 분신 사건에 대해 조직적 배후세력이 있다면서 전국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기설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의 분신자살이 발생했고 노태우 정권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을 비도덕적인 세력, 죽음의 세력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핵심으로 강기훈이 지목되었고 그는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줬다,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기설과 강기훈의 필적이 교묘하게 이용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기훈의 필체가 김기설의 유서 필체와 같다는 이유를 들어서 강기훈에게 자살방조죄가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은 사실상 폭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매일 뉴스의 머리를 장식하던 시절 저는 나주에 있었습니다. 매일처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었으니 저도 역시 별 의심 없이 대필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생각이나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언론에서 나온 대로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 버린 것인데 제가 평생을 함께해 왔던 강기훈 동지이자 친구에게 사죄해야 될 과오였습니다.

제 자신이 2009년이 되어서야, 나주시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되고 시장직 박탈 선고를 받았을 때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당시 강기훈이 느꼈을 절망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나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조작했던 바로 그 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건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조작 사건의 피해는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조작 사건의 희생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신 강기훈 동지에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강기훈이 수사받던 당시 여러 인권단체나 천주교 등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 조작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니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지만 90년대 초반의 우리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검찰 수사를 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그래서도 지극히 중요하고 당연했습니다. 검찰 그들이 켜켜이 쌓아온 과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였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만 보더라도 애초에 광주지검은 배임죄 무혐의를 처분했습니다. 아마 당시 검사는 뇌물이 아닌 한 시장의 정책적 결정사항을 형사적 기준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느닷없이 자신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수사를 재개해서 기소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검사들은 검사동일체라는 황당한 문화를 통해서 위에서 하라면 어떤 수사도 다 하는 양태를 보였고 오늘 이전까지 우리가 보게 된 검찰 역시 손톱만큼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강기훈 동지가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바뀌면서 느낀 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검사들은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대표 시절 검찰의 폭력적인 수사 행태를 보면서도 강기훈 동지의 사건에 대해서 기시감이 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장동 범죄 프레임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선 지자체 현장의 상황은 모두가 달라서 단체장들이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정책결정은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책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성남FC 광고비 문제였는데 그 광고비를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 인기를 얻은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고 만약 이런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면 스포츠팀을 가진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되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버젓이 검찰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었고 이제까지 검찰의 현주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무도한 검찰의 시대는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토록 꿈꿔 왔던 검찰개혁이 시작된 오늘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평생을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저서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보의 미래.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연구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집단 광기와도 같았던 당시 현실은 대통령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방문객들과의 만남은 끊어졌습니다. 사저로 찾아오려는 사람들의 접견도 끊어졌습니다. 대신 연구에 더 몰두했습니다. 이 책의 많은 분량은 그 시기에 집필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 그 시기, 대통령은 독서와 사색과 글쓰기에 침잠하는 것으로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비정한 상황을 혼자 다 감내해야 했던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현실의 고통을 이겨 냈습니다. 비극적 모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황, 대통령은 모든 짐을 혼자 끌어안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책의 연구는 그렇게 중단되었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자,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경선 때부터 생긴 현상이다. 눈을 마주치게 하려고 노력한다. 사인을 해 주고 사진을 같이 찍으면 좋아한다. 정겨운 모습들이다.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이들이 한마디 해 달라고 한다. 무슨 말을 할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이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처한 오늘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대답이 쉽지 않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다한다. 아이들도 쫓긴다. 아이들 교육에 인생을 다 바치는 부모들 이야기, 경쟁에 쫓기는 아이들의 이야기, 모두들 힘들다. 고통스럽기까지 한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전략은 교육이다. 그것도 경쟁 일변도의 교육이다. 과연 적절한 성공 전략인가,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과연 경쟁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경쟁주의 교육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후자도 심각한 문제이거니와 여기에서는 경쟁으

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만 생각해 보도록 하자.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다. 최고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패자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어릴 때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확률이 낮다. 그리고 한길에 너무 몰린다. 차를 운전할 때는 막히면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우회하려고 해도 우회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승자도 영원할 수 없다. 승자도 혼자 성공할 수는 없다.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격차는 갈등을 낳고, 갈등은 사회불안을 낳는다. 지나친 경쟁은 인간성을 황폐하게 하고 결국 사회를 파괴할 것이다. 이탈하기도 어렵다. 경쟁을 거부하거나 경쟁의 대열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공할 수 있는가, 환경이 개인적인 결단으로 이탈하기가 어렵다.

신선이 되는 것, 해탈하는 것도 결국은 극소수의 사람만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도 실패가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대답이 쉽지 않다.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들의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성공하고 난 후가 중요하다.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자.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 뒷날의 큰일보다 당장의 작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진보의 세상,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진보의 정책,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정치의 장에서 결정한다. 정부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한다. 국회는 누가 움직이는가? 물론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의원 개개인은 별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결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정당이 움직인다.

대통령도 중요하다.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큰소리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적어도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일과 돈이 필요한 일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무슨 회견, 담화, 선언, 이런 일을 하지만 여론이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없다. 제도적으로 결정권은 정당에 있다. 결국 정당이 중요하다. 그것도 국회를 지배하는 정당이 중요하다.

정당과 정치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익과 여론과 표를 따라 움직인다. 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다. 그런데 표는 또 이익과 여론을 따라 움직인다. 이익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여론은 누가 만들고 움직이는가?

지난 10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소야대의 구조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88년 이래 진보의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슨 힘이었을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개혁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론의 대세를 밀어붙인 것이리다.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교란될 뿐이다. 궁극적으로 시민이다. 교란되는 이유는 시민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다.

정치, 정책과 우리의 가치와 이해관계와의 인과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여간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야바위 같은 논리와 선전이 난무한다. 오랜 역사 동안 그랬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시민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이 담긴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서전 '운명이다' 일부를 낭독하면서 발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하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구경 삼아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평일에도 수천 명이 봉하마을을 찾아왔다. 주말과 휴일에는 1만 명이 넘었다. 신혼여행을 오기도 하고 가족 휴가로 오기도 했다. 관광버스 회사가 손님을 모집해서 오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 봉하 아방궁이라는 말을 퍼뜨린 탓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아방궁이냐고 했다.

낮에는 방문객 인사를 하느라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귀향을 결심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대통령 임기를 마쳤다고 해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낙관적이고 낭만적이었던 것 같다.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다. 아직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 전직 국가원수처럼 산 것이 문제였다.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당선인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부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표시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근히 정말로 그래 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을 만한 약속이 아니었다.

나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였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엄중 중립을 지켰다. 소위 BBK 의혹과 도곡동 땅 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어떠한 원한을 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조금 불편하게 만든 것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가 만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통일부가 왜 생겼는지 조목조목 말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서명·공포를 거부했다. 내 소신과 다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안에 내 서명을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정부의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서명을 실제로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늦게 의결되는 바람에 내가 퇴임할 때까지 정부에 송부되어 오지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것 말고는 이명박 대통령을 불편하게 만든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임기가 아직 남아 있던 공공기관과 공기업, 문화·언론 분야 단체의 기관장을 몰아냈다. 소관 부처와 감사원, 검찰 등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했다.

봉하 들판에 오리를 푼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08년 6월 12일 마침내 나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다. 청와대는 내가 사저로 가져온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퇴임하면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었던 e지원 사본을 봉하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예전에 대통령들은 재임 중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는 기록물도 퇴임할 때 폐기하거나 사저로 가지고 갔다. 가장 중요한 역사기록이 모두 없어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려 18년 집권했지만 3만 8000건의 공식문서와 영상기록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3만 건의 전자기록과 15만 건 정도의 문서기록을 포함해서 20만 건의 기록물을 남겼다. 그 이전 다른 대통령이 남긴 기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했고 전자기록을 포함해서 모두 826만 건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주었다. 그중 일부는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 말고 누구도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이었다.

임기 막바지에 직접 이 작업에 매달렸다. 나는 봉하마을 사람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을 열었다. 대통령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을 일반 국민에게 토론하면서 공유하고 싶었다. 참여정부와 함께했던 학자들과 손잡고 연구재단을 만드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2008년 3월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김백준 총무비서관을 만나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4월에는 문재인 비서실장이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여러 차례 전화로 협의하고 양해를 부탁했다. 봉하로 가져온 e지원시스템 사본은 다른 어떤 통신망과도 연결돼 있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민간인 인사자료나 국정운영의 기밀을 담은 자료를 내가 가지고 간 것인양, 이 사본을 이용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인양 황당한 주장을 연일 언론에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국가기록물법 유출이라고 하면서 공개적인 반환을 요구했다.

나쁜 소식이 연이어 날아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가 무섭게 부산상고 동문 정화삼 씨가 월급사장으로 있었던 제주도 제피로스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이해찬, 한명숙 총리 주변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 동향이 포착되었다. 국세청이 오랜 후원자였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이어 내가 허리수술을 받았던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과 김수경 수도약품 회장 부부를 세무조사했다. 나중에는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도 세무조사를 했다.

이 모든 조사의 최종 표적은 노무현이었다.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았다. 심지어는 내가 자주 가던 식당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여러 건의 고발과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2008년 10월부터 시작했던 책 작업에 매달렸다. 주제는 진보주의 연구였다.

정상문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4월 9일 강금원 회장이 구속되었다. 그는 뇌종양을 앓고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4월 19일 검찰이 정상문 비서관을 다시 체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홈페이지에 급히 글을 올렸다.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발짝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에서 저를 평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급히 청원서를 썼다. 검찰수사팀 교체를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피의자의 권리라도 지키고 싶었다. 편지 말미에 16대 대통령을 빼고 이름만 썼다. 쓰기는 했는데 보내지는 않았다. 모양이 좋지 않았고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보내 봐야 아무 소식도 없을 것이라고 참모들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참여정부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갈 만한 기업들은 조사할 만큼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 주변에는 사람이 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심하지 않아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권위도 신뢰도 더 이상 지켜야 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의 공명심과 승부욕입니다. 사실을 만드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보통 인간으로 이 청원을 드립니다. 형사 절차에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설사 그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나 역사의 죄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제가 수사에서 대응하고 이 청원을 하는 것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아침 8시 봉하마을을 떠나 버스를 타고 서울 대검찰청에 갔다.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총리들과 장관들, 청와대 참모들이 와서 배웅을 해 주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버스를 향해 노란 국화를 던졌다. 봉하에서 검찰 청사까지 5시간 20분 내내 취재차량과 방송헬기가 따라왔다. 문재인, 전해철 두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건호가 관련됐다는 500만 달러, 아내가 받아 쓴 3억 원과 100만 달러 그리고 정상문 비서관이 횡령했다는 12억 5000만 원, 문제는 이 세 가지였다. 500만 달러는 순수한 투자거래이며 퇴임한 이후에 알고 건호가 손을 떼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3억 원과 1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경위와 사용처를 진술했다.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은 내가 알지 못한 일이었다. 모두 진실 그대로 이야기했다.

아무도 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노무현은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자기 잘못을 아내한테 떠넘긴 못난 남편이 되어 있었다. 회갑 선물로 박연차 회장이 주었다는, 내 회갑 때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소위 명품시계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나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검찰 소환조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노무현 때문에 도매금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분노, 노무현이 진보의 미래를 망쳤다는 원망을 쏟아 냈다. 노무현이 죽어야 진보가 산다고 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이런 말을 들으니 더 미안했다. 내가 그분들을 그렇게까지 아프게 한 줄을 나는 몰랐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잘못, 나의 실패, 나

의 좌절까지도 이해하면서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고마웠지만 그럴수록 그런 분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었다. 대통령을 하려고 한 것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꾼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것이 나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원망할 수 없었다. 나는 야망이 있어서 스스로 준비하고 단련했지만 그들은 나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권력의 세계로 끌려 들어왔다.

고향에 돌아와 살면서 해 보고 싶었던 꿈을 모두 접었다. 죽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사는 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재판 결과가 어찌하든 이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20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았다. 마치 물을 가르고 달려온 것 같았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 원래 있던 그대로 돌아가 있었다.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대통령은 진보를 이루는 데 적절한 자리가 아니었던 것 아닐까.

마지막으로 본 세상.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거실로 나왔다. 어제저녁 건호와 함께 집 뒤뜰과 주변 잡초를 뽑았다. 겨울에 발을 수술한 후로 아내는 걸음이 불편해 건호와 내가 주로 했다.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며 모자의 정을 나누느라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던 탓인지 아내는 아직도 곤히 자고 있었다. 늘 쓰던 거실의 컴퓨터를 켜고 여러 날 간직해 두었던 생각을 가만가만 자판을 눌러 가며 한 줄씩 적었다. 다 쓴 다음 바탕화면에 저장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자판을 누르는 소리에 아내가 깬 것 같았다. 인터폰을 들어 경호관을 불렀다. 파일을 열어 문장을 손본 다음 수정한 글을 다시 저장했다. 회색 콤비를 걸치고 현관으로 나와 캐주얼 단화를 신었다. 꾸물거리다가는 건호나 아내가 따라나서려고 할지 모른다.

현관에 경호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와대에서부터 나를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정문 경비라는 의경이 거수경례를 했다. 가볍게 답례를 하고 집 담장을 따라 걷는데 담장 아래 잡초가 보였다. 어릴 때 뛰어다녔던 생가 고샅길이다. 잡초를 뽑아 길가에 던졌다.

봉하산 등산로 입구 마늘밭에 마을 주민 박 씨가 있었다. 마늘 작황을 물어보았더니 신통치 않다고 했다. 정토원으로 가는 산길에 올랐다. 봉수대 근처까지 올랐다 발길을 돌렸다. 내려오다가 오른쪽 부엉이바위로 갔다. 발아래 아내와 건호가 잠들어 있던 집과 복원공사를 하는 생가터가 보였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손수건은 내가 몸에 지닌 유일한 것이었다. 담배가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없다고 했다. 가져오라고 할지 묻기에 됐다고 했다. 아내의 지청구를 들어가

면서 수십 년 동안 담배를 수도 없이 끊었다 피었다 했던 일이 떠올랐다.

정토원에 가서 선진규 법사가 계신지 보고 오라고 했다. 경호관이 돌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앞으로 그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니 인간적으로 미안했다. 그러나 곁에 뒀다가는 더 큰일이 날 것 같았다. 봉하 들판을 내려보았다. 고개를 들어 해가 떠오르는 남동쪽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일출시간이 지났지만 두터운 구름과 자욱한 안개 때문에 아직 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곧 태양이 솟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섰다.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마을의 정겨운 산과 들을 찬찬히 눈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평화로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계십니까? '아, 기분 좋다' 그 웃음 섞인 한마디가 지금 이 본회의장까지 들려오는 듯합니다.

78년 만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78년 동안 휘둘러 온 그 검찰의 암흑 시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제야 너무 늦은 보고를 이렇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검찰로 인해 잃은 것은 그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 정치와 권력, 민주주의를 지독한 고민과 깊은 사유로 마주했던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진보는 무엇인가, 먹고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철학자였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을 어떻게 하면 더 누려 볼까가 아닌 권력을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 검찰의 힘이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무현을 검찰의 칼날에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발 한 발 참 더디지만 끈질기게 걸어왔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광장으로 나온 엄마들, 국정농단의 겨울 손에 촛불을 꼭 쥐고 서 있던 시민들, 내란의 밤 응원봉 하나를 들고 나와 어둠을 밀어낸 빛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 손에 쥔 가장 밝은 것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 시민들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했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제는 그 깨어 있는 시민이 노무현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란의 밤 아스팔트 위에 서 있었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살아 돌아온 노무현입니다. 불의에 화를 낼 줄 알고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자기 안의 가장 밝은 것을 꺼내 드는 시민, 그 시민들이 바로 이 시대의 노무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민주주의 본령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번번이 정치 공방에 희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대한 국민은 중심을 붙잡았습니다.

검찰 권력을 해체하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국회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질타와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여기까지 밀어 올린 힘, 기득권 카르텔의 교묘한 속임수와 방해를 끝

내 간파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현실로 바꾸어 낸 힘은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8년 만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완수사권을 두고 인권과 책임 사이에서 더 나은 해법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과제까지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집단지성의 힘으로 풀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검찰의 나라가 아닌 시민의 나라를 꿈꾸며 주신 것, 이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것, 검찰개혁과 수사와 기소 분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주신 것, 그 길 위에 함께 버티고 걸어와 주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고동진)

(22시57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고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치·도곡·삼성 강남병 고동진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구태에만 머물러야 하는가, 또 왜 이치에 맞지 않는 담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체 왜 영혼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정치인 본인들의 양심을 저버린 채 책임 방기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배경적 논의의 최초 시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때부터 시작돼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쳐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서 수사와 기소가 아예 분리되는 동시에 기관 자체가 나뉘면서 중수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집는 일을 추진하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 방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을 신설해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간 검찰의 경우 공소는 검사만 제기해서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이는 공소권 행사의 적정화를 통한 기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검사의 독선 또는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 기소편의주의 즉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조항과 결합해서 검찰 자체가 일부이기는 하나 그동안 정치 권력화되어 온 면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일부 검찰에 문제가 있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검찰 자체를 잘 개혁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문제가 있던 검찰을 붕괴시키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문제만 발생시키는 그 연속선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수청의 문제는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금일 상정된 중수청법을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6조를 한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법리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이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뭐가 일반적이고 어디까지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법률에 이런 표현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참 갑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7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행안부장관은 중요한 정책 또는 일반 사무행정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안에도 민주당과 행안부에서는 검찰청법의 자구와 비슷하다, 또 그런 입법 사례가 없다며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중요 정책과 사무행정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조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대체 뭐가 문제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꼭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 그렇게 들어가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져 보자면 '일반적으로' 이 표현에는 수사에 대한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수청이 본래 수사를 하는 곳이니까 행안부장관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중수청이 하는 수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우기면 뭐라고 맞대응할 논리가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행안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과거 입법례가 없다, 이런 말들은 저는 다 핑계로 들렸습니다.

입법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 정한 법규정의 테두리에서만 법을 만들고 바꾸는 곳입니까?

제가 제안했던 대로 행안부장관은 중요한 정책 또는 일반 사무행정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조문 자구입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런 표현의 사례가 없어서 반영하지 못하겠다, 어찌 이렇게 궁색하고 옹졸한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매모호한 법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중수청의 목을 스스로 조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민주당과 행안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검찰청법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청법 관련 제8조를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의 전제는 검찰사무로 전제되어 있어 중수청처럼 사무에 대한 전제가 없는 일반적으로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검찰청법의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후단에 나와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비한 즉 수사의 성격이 아닌 단순 사무행정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전제가 없어서 조항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전제되는 사항이 없으면 행안부장관이 꼭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수사관들의 전반적인 수사 방향에 대해서 이건 이런 방향으로 수사해라, 저건 저런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전체 수사관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을 막기 위해서 그 전제되는 상황을 '중요한 정책 또는 일반 사무행정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를 바꾸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이러한 모호한 표현 하나, 이것 자체가 단순한 문구의 문제가 아닌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장치가 된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법률은 명확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기관의 권한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해석의 여지를 무한히 열어 두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반 행정 전반에 대한 지휘와 감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내일은 수사 운영 전반에 대한 지휘와 감독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특정 사건을 둘러싼 환경이나 방향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한 단어가 중수청의 독립성을 해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명확한 개념이 행정부 내부의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국무위원입니다. 그 장관이 일반적으로라는 포괄적 권한을 근거로 중수청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중수청의 운영 전반에 관철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열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권력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후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향후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장관의 지휘가 있었을 때 그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감독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행위인지 현실적으로 서로 구분이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고 권한을 행사한 직원은 언제든지 일반적인 감독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흐릿하게 만들고 행안부와 같은 상위 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조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법률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스스로를 구속하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권한을 부여할 때는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그 한계를 설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법률이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며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성은 현장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수청 내부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장관의 정당한 감독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개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과잉 순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장관의 의중을 폭넓게 해석하고 스스로 수사의 방향을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어도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입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은 과거의 사례를 답습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단지 입법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거부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해서 보다 정교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중요한 정책 또는 일반 사무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이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행정부로서 필요한 관리 기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안입니다. 이는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정책적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통제 기능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절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일반적으로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권한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조문은 단순한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성격을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이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가 좌우될 수 있는 불신을 낳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라는 모호하고 위험한 표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그 대신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정한 규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적 책임입니다.

다음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규정입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7조제1항을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즉 업무 분장을 정하는 법입니다.

제37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 조문의 어디를 보더라도 행안부장관이 수사 또는 그 사건에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행안부장관은 본인 업무도 아닌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지휘·감독한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기존 검찰의 사례를 따져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즉 검찰의 경우에는 애초에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직무 범위에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안부장관은 원래 정부의 조직을 관리하고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자리인데 수사에 관한 직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대범죄와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월권적으로 지휘·감독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행안부에서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변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청법을 보겠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아시다시피 이 조항은 그간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관여할 수 있다는 많은 지적을 받아 온 규정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검찰을 개혁한다고 해서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또 검찰을 아예 없애 버리고 중수청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기존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또 다시 가져온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 때 행안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런 조문은 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을 뿐이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질서 유지 차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도로아미타불 즉 처음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안부장관이 기존 법무부장관, 중수청장은 기존 검찰총장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되는 구태의 모습에 더해서 대통령의 입김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이재명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질적으로 정무적 성격이 강한 국무위원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는 어디까지나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권력의 의중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원칙이자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문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사실상 사건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치적 개입의 통로를 열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조문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이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일 경우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이라는 명목 아래 수사의 방향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신호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수청 내부에서도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수사를 축소하거나 방향을 조정하는 자기 검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조문은 행정법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는 법률상 명확한 권한 근거와 직무 범위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장관의 법정 직무 범위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중수청법을 통해 특정 영역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조직법 체계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며 행정 권한 배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정합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는 향후 권한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역시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행안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여 부당한 지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거나 책임을 묻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감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당한 지휘·감독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개입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조문은 민주적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분산과 통제의 강화에 있어야지 권한의 형태만 바꾼 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존 검찰청법의 문제점을 인식하

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문제적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를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께 혼란만을 줄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문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만약 일정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에 따른 정책적 감독과 관리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조문을 유지한다면 중수청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중수청장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왜냐?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에는 똑같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수청도 경찰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사례를 빗대어 중수청장도 동일한 결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행안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그 사람의 정치 이념을 검증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어제까지도 민주당 당원이었다가 임명되기 하루 전날 탈당해도 그냥 그대로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법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며 그중에서도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임명 직전까지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사는 단순한 행정 작용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권력의 행사입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이 수반되는 만큼 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원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만으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 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만으로 충분했다면 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별도 정당 이력에 대한 결격 사유를 두었겠습니까? 이미 과거의 입법례를 통해 수사기관장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

고 하는 점이 공감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입법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면 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역시 현실을 외면한 논리입니다. 청문회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정치활동이나 성향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그 사람의 객관적·데이터적 이력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청문회에서 검증하라' 이런 식의 주장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또한 청문회 자체가 정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격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은 권력형 범죄를 포함한 중대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수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수사 범위, 수사 강도 등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쌓이게 되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도의 신뢰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애초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수사기관 내부의 독립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장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조직 내부의 수사관들 역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킬 우려로 연결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사역량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재차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한 선언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담보되어야 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이미 입법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존재한다면 동일하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도 똑같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최소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임기 중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적 통제장치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중립성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장치가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중수청법은 수사권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와 중립성 확보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통제는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책임과 통제는 뒤따르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언론에서 표현하는 우선수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첩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 제43조제3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안을 자세히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은 그 정당한 사유라는 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수청의 이첩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을 법률상이든 또는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법률에 담기에는 경직성이 있다. 수사준칙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정작 오늘 올라온 중수청법을 꼼꼼히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사준칙이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 이런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개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구속력 있는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있어야 중수청이 그 세부 기준을 무조건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텐데 그 위임규정이 없다 보니 향후 중수청이 그 기준을 정할지 아니면 안 정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사실상의 상위 수사기관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병렬적 수사기관 체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첩요구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

니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첩 요구가 반복될 경우 일선 수사기관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기보다는 중수청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왜곡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첩요구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될 경우 실제 수사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따라 타 기관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간 이후 수사 결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초 수사기관과 이첩을 요구한 기관 중 어느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은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첩 요구가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특정 사건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파장 등을 이유로 선택적 이첩 요구가 이루어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사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기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외부적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통제장치의 부재 역시 큰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중수청 그 스스로라면 이는 자기 판단에 의한 자기 권한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첩 요구의 타당성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 예컨대 일정한 심의위원회나 사법적 통제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장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첩 요구에 대한 불복절차 역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수사기관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대한 이견을 가질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다면 사실상 일방적인 권한 행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 작용에 대한 통제원리, 특히 권력 분산과 견제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적 가치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중수청의 이첩 요구권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강력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책임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법률 또는 최소한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해야 합니다. 수사 효율성, 중복 수사의 방지,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추상

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요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또는 수사준칙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속력 있는 위임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법률상의 위임 규정 없이 하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첩 요구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절차적 장치를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첩 요구에 대한 불복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타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첩 이후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수청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균형은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사기관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입니다.

법안의 제42조제1항을 보면 '수사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당의 경우는 정당법에 의해서 명확한 개념 그리고 정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든 정당법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치단체에 대한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치단체인 것입니까? 법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모임까지도 포함을 해서 말하는 겁니까?

제가 이 문제도 법안소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단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오늘 법안에서는 당초 내용 그대로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단체'라는 글자 4개만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컨대 A라는 수사관이 정치단체에서 활동하고 또 B라는 수사관이 다른 정치단체에서 활동을 했을 때 정권의 말을 잘 안 듣는 수사관은 정치 관여죄로 처벌하고 말 잘 듣는 수사관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이중잣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단체로 볼 수도 없는 곳인데 여기는 정치단체라고 특정해서 지적하고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제51조(정치 관여죄)를 보면 '수사관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 규정까지 둬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나의 편향적인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수사관들은 이재명 정권이 무서워서 더욱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명확성 원칙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누구라도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요구되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정치단체라고 하는 개념이 아무런 정의도 없이 사용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떤 단체가 금지되는 대상인지, 어떤 활동이 허용되는 범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결국 법률이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과 같이 이미 정치활동과 관련된 법률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새롭게 끌어와서 형벌 규정과 결합시키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방식입니다.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불명확 개념을 도입할 경우 법 해석의 혼란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에서의 자의성 역시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조항은 수사관의 기본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반드시 명확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광범위한 금지사항을 설정하고 나아가 중한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현실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와 모임이 존재합니다. 정책 연구를 하는 시민단체, 특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모임, 직능단체, 학술단체 등 수많은 조직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 어떤 게 정치단체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활동이 잠재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캠페인에 동참하는 행위조차도 해석에 따라서는 정치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관들이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조차 스스로 위축하게 해서 이른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건강한 의견 교환과 토론 문화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선택적 집행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두고도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잣대가 작동할 경우 법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인데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은 오히려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활용될 여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사관이라고 하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택적 적용 가능성은 조직 내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사관이 권력에 비판적인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과거의 활동을 문제 삼아 정치 관여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권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수사관들을 통제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 나아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부분 역시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에 비해 상당히 긴 공소시효를 적용하면서도 그 구성요건은 불명확하게 두는 것은 형벌권 행사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문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은 언제든지 과거를 끄집어내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수사관들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향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수사의 적극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정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법률이나 최소한 하위법령에는 직접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의 연계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 등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활동의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아가 형벌의 수준과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규제가 실제로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결국 법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규정은 그 취지와 달리 권력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로 작용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항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수청 인사위원회의 문제입니다.

법안에서는 중수청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7명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그 7명은 중수청 수사관 2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 행안부장관 추천 2명, 중수청장 추천 1명, 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계산을 해 보면 결국 이 인사위원회 자체를 행안부에 설치하고 그 인원들을 보면 사실상 행안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사위원은 중수청 수사관 2명, 중수청장 추천 1명, 행안부장관 본인 추천 2명까지 도합 5명이 됩니다. 즉 전체 7명의 과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장관 마음대로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사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준 및 기본계획의 수립.

두 번째, 수사관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수사관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수사관의 임용, 전보, 승진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특히 수사관 신규채용이라든지 임용 또는 승진 기준 등을 행안부장관이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장관이 중수청 수사관들을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경찰의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경찰청 자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5조를 보면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면 인사위원회는 행안부가 아닌 중수청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도 행안부장관이 아닌 중수청장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중수청의 인사권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해 본 사람입니다. 인사권은 곧 조직 장악력이며 인사를 쥐고 있는 주체가 조직의 방향성과 문화 나아가 의사결정 구조까지 사실상 좌우하게 된다는 것은 조직이론에서도 너무나 알려진 사실입니다.

(3월20일 24시 경과)

특히 수사기관에 있어서 인사권은 단순한 행정적 권한을 넘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인물을 채용하고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조직 전체의 성향과 행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물을 채용하고 이러한 모든 인사권의 핵심 기능을 외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장악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중수청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보겠다는 어떤 입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설치된다는 점 그 자체가 상징하는 바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 조직의 인사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기구를 중수청 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두겠다는 것은 중수청을 독립된 기관으로 보지 않고 사실상 행안부의 하위조직 또는 외청 수준으로 위치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수청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 구성 비율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원이 과반을 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의사결정이든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인사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 특정 권력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관철시키는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사 기준의 설정과 신규 채용, 승진 기준까지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 조직의 DNA를 설계하는 수준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특정 유형의 인재가 선발되고 특정 성향의 인물이 승진하게 되며 결국 조직 전체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중수청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전문성

을 구축하기보다는 외부 권력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구조는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와 직무수행 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자신의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외부 권력의 의중에 따라 인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인식하게 될 경우 공정한 경쟁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방향의 수사나 판단을 해야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경우 이는 조직 전체의 판단 기준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내부에서조차 법과 원칙이 아닌 눈치가 작동하는 구조가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인사위원회의 설치 위치와 구성 방식은 단순한 조직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 입법의 목표라면 그 출발점은 인사권의 독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이 외부에 종속된 상태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사례를 재차 보겠습니다.

경찰은 인사위원회를 경찰청 내부에 설치하고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정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균형 잡힌 설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대해서만 행안부가 인사위원회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권한을 행안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진행과 의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위치는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행안부장관이 직접 지명한 인물을 앉히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전체 의사결정 방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위원장은 중수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등 보다 중립적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인사위원회가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법안은 중수청이라는 조직의 외형만 새롭게 만들었을 뿐 그 내부를 작동시키는 핵심 권한구조는 여전히 행안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을 분리하고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는 것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운영 방식과 권한 배분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중수청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 역시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다음은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박탈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파면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를 일반행정공무원처럼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이나 적격 심사 이외의 사유로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채 소신껏 기소하고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적 외압에 맞서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을 폐지한 명분이 바로 정치검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신분보장을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을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가 아니라 수사,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의 정권 종속과 권력의 시녀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중수청의 수사관의 적격심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 제29조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았을 때에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조 제3항과 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항 적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이 수사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수사관의 면직을 건의한다. 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한다.

문제는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검사의 경우 검사는 통상 3급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3급 이상의 수사관 역할을 하는 검사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으면 그때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중수청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수사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매해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으로 특정 수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2년 연속 최하 등급으로 나올 경우 또는 같은 직급에서 총 3년 이상 나올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면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모든 수사관이 일괄적으로 2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장관이 의도를 가진다면 일부 특정인에게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줘서 적격심사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검찰청법 제39조를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39조 1항을 보면 검사에 대해서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동조 제4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동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즉 바꿔 말하면 검사는 검찰청법 자체에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이 일괄적인 7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중수청의 적격심사와 기존 검찰청의 적격심사가 다른 것은 기존 검찰청의 검사는 7년마다 일괄 적격심사를 받는 것과 다르게 중수청으로 넘어간 검사—3급 이상 수사관을 말합니다—검사는 행안부장관의 의중대로 최소 2년만 지나면 경우에 따라 일부 검사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고 적격심사를 거쳐 결국 면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수청법의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의 근무성적평정, 즉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2년 만에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독소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최소한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는 7년 이상마다 받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기존 입법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치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적격심사 제도의 구조를 결코 단순한 인사관리 장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의 방향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수청법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제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권력이 수사관을 선별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7년마다 일괄적으로 적격심사를 받는 것은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평가가 아니라 일정한 주기와 기준에 따라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특정인을 겨냥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중수청법은 어떻습니까? 특정 수사관이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최하 등급을 받게 되면 이른바 적격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기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제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는 결코 순수한 평가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 수사관이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수사관에 대하여 2년 연속 최하 등급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격심사 대상이 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결국 면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평가를 가장한 통제이며 절차를 가장한 압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구조가 선택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수사관이 동일하게 2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 구조라면 그나마 형평성의 문제가 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만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의도를 가진다면 특정 수사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부여하여 적격심사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특정인을 겨냥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하는 순간 그 법은 더 이상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사관들은 더 이상 법과 증거만을 보고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이 살아 있는 권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수사가 자신의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 수사의 방향 자체를 바꾸게 만드는 구조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는 위축될 수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객관적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수청법은 그 제도 자체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평가를 통해 수사관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적격심사 조항은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독소조항입니다. 최소한 검찰청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즉 7년 이상이라는 일정한 주기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존 입법례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중수청이 중대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를 관할할 수 있게 되는 문제 조항을 보겠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중대범죄 등 기준을 보면 부패·경제·마약, 방위사업·마약 등의 중대범죄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관련 범죄로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관련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두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 법안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즉 중수청장이 마음대로 모든 사건을 엮어서 중수청의 관할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법안소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과 행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 등의 범위와 그중에서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개념은 단순한 정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어떤 개념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어를 설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통해 권한의 경계를 설정하고 국가 권력의 작동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수사권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의 경우 그 범위는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직접 관련성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나 한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법 기술상의 미비가 아니라 권한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어 해석의 여지를 넓혀 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접 관련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살펴보면 이 표현은 법률적으로도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범죄가 부패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매우 넓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흐름이 일부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동일한 인물이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건의 배경이나 맥락이 유사하다는 이유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판단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이 특정 기관장, 즉 중수청장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사실상 모든 사건을 중수청의 관할로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권한의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그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수청장은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근거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얼마든지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며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성은 수사기관 간의 관할 충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중수청의 관할에 해당하는 여부를 두고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수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이는 수사기관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의 판단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결국 이는 수사기관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

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자신들의 관할로 편입시키기 위해 직접 관련성을 확대 해석할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기준에 의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조항이 정치적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수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 관련성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이 객관적인 법적 기준에 따른 건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국민의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조항은 법률 체계 전반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 체계에서는 관할과 관련된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범죄의 종류, 발생 장소, 피의자의 신분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명확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권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기준을 도입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기존 체계와도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직접 관련성의 개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에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제시하여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준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또는 수사 준칙에 대한 명시적 위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직접 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 일정한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통해 해당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수사기관 간의 관할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여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사권 확대의 근거로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결국 권력 집중과 권한 남용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최소한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법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지 권력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앞세워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그 후속 기관으로 설치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그간 정치 세력화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 안전장치를 만들든 그런 검찰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지 아예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기존 검찰 기능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그냥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이런 식의 접근이 온당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사망이 좀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수많은 나라들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도식적인 분류나 근본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통상적으로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하는 것은 경찰의 법리 오인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검찰 직접수사의 이점은 속칭 거악 사건, 즉 사회지도층 수사에서 두드러지는데 경찰과 비교했을 때 경찰이 과거에 군사 정권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현존하는 속칭 살아 있는 권력을 직접수사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검찰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필두로 권력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사들이 그 직을 걸고 수사를 해 왔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엄격한 신분보장과 그 단독 기관성이 경찰의 권력 종속적 조직보다 거악 사건 수사에 있어서 큰 이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한 번 수사한 것을 다시 수사해서 매번 나쁠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도를 물려준 일제부터가 경찰 단독수사로 인한 높은 무죄율로 골머리를 앓다가 검사가 직접수사하는 제도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의 유병언 사체를 발견한 경찰이 그 사람을 단순 노숙인의 시신으로 판단해서 화장시키려고 했지만 검사의 유전자 확인 지시로 사체가 유병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 이외에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을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서 누명을 벗겨 준 이러한 사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검찰의 경우는 송치 전 수많은 사건을 직접 지휘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송치 후에는 경찰 수사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범죄나 중요 경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관들을 차출해 따로 수사팀을 꾸려 직접수사 하기도 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에서 검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찰은 검사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검사는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산하에 독자적 수사 인력이 없어 독일의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대부분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다만 경제범죄, 부패범죄, 특허범죄 등 특수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경제범죄 담당 부서를 개편해서 전문화된 부를 설치한 중점 검찰청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사는 중요 사건에 대하여 직접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수사의 주재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지만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강제처분권 등도 인정되고 있으며 검사는 경찰에 요청 또는 위임하여 수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의뢰 대부분은 요청에 해당되며 검사와 경찰 간 관계는 엄격한 상하관계에 의한 수사 지휘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협력관계에 의한 수사 지휘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합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한 일반 형사 사건도 경찰의 조서만으로 부족할 경우 검사가 피의자,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 직원은 주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아 경찰은 독립된 1차적 수사를 하고 검사는 2차적 보충적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도 법적으로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개 지방검찰청에는 특별수사부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수사부에서는 검찰의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활용하여 중요 인지 사건 등을 직접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본은 검경 간 상호협력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검사와 사법경찰 직원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수사의 통일성·공정성·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관할 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 지시·지휘 권한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수사 종료 후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경제 범죄 사건은 그 범죄 성립을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경찰의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은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 대응에 능하다면 검사가 더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건의 해결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은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 하도록 하는 건데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득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외과의사가 진단을 하고 수술은 다른 의사가 또 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검찰 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기소의 분리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제도의 본질은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점에 있음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권력의 세분화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계적인 분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연결 내지 협력을 통한 효율성의 확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소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원칙이라면 공수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 기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관과 검사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이후에 그에 대한 기소를 다시 검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특검제도입니다.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라는 원칙이 특검이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면 공수처의 예외 등과 함께 묶어서 볼 때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수사·기소의 분리 주장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청 검사

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검찰청 검사가 인사권자의 정치적 외압에 의해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검은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도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제도적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기존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맹목적 불신과 이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도를 급격하게 재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시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전체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해소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은 검찰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또다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이나 공소청처럼 권한을 무조건 분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분산된 권한 사이에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에서 수사의 미진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했을 뿐이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의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고 공소청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사건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이러한 연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를 전제로 한 전략적 판단이 어려워지고 기소 단계에서는 수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전문성의 분절이라는 문제도 야기가 됩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경제범죄, 금융범죄, 부패범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률적 판단과 수사적 판단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버리면 이러한 통합적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기관이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건 해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공조수사의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날 범죄는 최근 캄보디아 사건을 보더라도 점점 더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사이버범죄, 국제 조직 범죄 등은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구조는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대응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와 기소가 일정 부분 통합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단일한 창구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과 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검찰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을 해야지 기능 자체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 등을 분산시켜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균형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이름이 바뀌고 조직이 재편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느냐입니다. 작금의 논의는 조직의 형태와 권한 배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정작 운영의 원칙과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형사사법 개편 논의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급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식은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국민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중수청법은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권한 구조, 통제 장치, 인사 시스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정교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이 중요한 만큼 그 내용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완성도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제도를 해체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화장실 좀……

○의장대리 어기구 예, 다녀오십시오.

○고동진 의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택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중수청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최초 상정돼 이번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실제 논의를 하며 걸린 시간은 단 5일에 불과합니다. 딱 닷새 심사하고 본회의까지 전광석화처럼 넘어온 것입니다. 제가 행안위 소속이기 때문에 또 법안1소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전부 참여를 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정말 필요해서 제가 역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했던 반도체특별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표발의한 게 지난 2024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된 건 올해 1월 29일이었고 이걸 계산해 보면 총 1년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으로도 넘어간 그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제가 제출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은 어떻습니까? 법안을 발의한 게 지난해 9월 22일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도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기초인 소부장 발전, 저는 그 기틀을 만드는 소부장협회 신설을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7일에 제출했는데 이 또한 산자위 법안소위에 아직까지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들은 늑장 처리하거나 또는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고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도구로서 중수청과 같은 악법들만 강행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로 개탄스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다수가 틀린 결정을 하면 국가와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소수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들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 권한을 쥐고 있는 다수석의 정당이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보여 주

는 매우 심각한 징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적 법안 처리 문제, 즉 법안 처리 속도의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공정하지 않은 선택이며 또 굉장히 나쁜 정치적 의도입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 그리고 소부장협회법과 같은 핵심적인 산업 법안들은 수개월, 수년씩 지연되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반면, 정권의 이해와 직결된 중수청법은 불과 닷새 만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직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 절차입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입니까?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은 완전히 뒤로 밀리고 이재명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사체계를 엉터리로 재편하는 법안만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넘어 입법 권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로 운영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힘은 언제나 책임의 절제가 함께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책임 있는 다수의 모습이 아니라 힘을 앞세운 일방적 결정의 연속입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충분한 숙의 없이 반대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입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독주, 즉 입법 독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주는 결국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선택적 입법이 반복될 경우 국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법안은 수년이 걸리고 어떤 법안은 단 며칠 만에 처리가 되는가, 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법안은 지연되고 권력과 관련된 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가 틀릴 수도 있고 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 그리고 끊임없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기본 원칙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입법 권한이 권력을 위한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고 그 권한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그 가치는 아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절대다수를 차지한 권력일수록 더욱 강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내부에서 그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그 역할은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지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지 않으면 권력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

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만 믿고 폭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셔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며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깊이 우려하며 지금의 선택적 입법과 일방적 강행 처리 방식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한 기업에서 40년을 일해 왔고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요즘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2018년인가에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도 경고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어제 상정된 중수청법과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위험신호를 가려내기 위해 다른 나라와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갔던 치명적인 실수를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맞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뿌리 깊은 양극화를 극복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분명히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법안이 왜 민주주의의 위기신호이자 양극화된 정치의 표본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탱크나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라 제도 내부에서 합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서서히 붕괴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의 붕괴는 더 이상 갑작스럽고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징후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경쟁자를 정당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태도, 둘째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행위, 셋째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용인 또는 방조, 넷째 언론과 사법기관 등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지금의 중수청법안 추진 과정이 이 네 가지 징후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상호 관용입니다. 이는 서로를 비록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상대일지라도 정당한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야당의 문제 제기나 우려는 합리적인 정책 논쟁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중수청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이 아니라 마치 과거의 잘못된 체제를 옹호하는 행위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

임은 정치적 경쟁을 협의와 타협의 과정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로 만들어 버리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적 규범의 약화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도적 자제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 스스로 권한을 절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수청법안 추진 과정은 이러한 자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 강행 처리·통과시키려는 시도는 형식적으로 합법일지라도 민주주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제도는 단순한 다수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축조심의를 하면서 모든 것에 진짜 열심히 임했습니다. 17개 조항이 남고 또 그것이 9개로 줄어들고 5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9개, 5개밖에 남지를 않으니 그때는 표결 처리로 들어갔습니다. 법안소위는 상식적으로 볼 때 쟁점 사항이 있으면 또 시간을 가지고 숙의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서두르냐라고 항의를 했을 때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운영되는데 그 전에 법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세팅을 해 놓고 법을 밀어붙이는 것밖에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절대 여당의 숫자에 밀려서, 마지막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 말씀은 드린 사안이지만 이것을 반대했을 때 다수결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진짜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견제와 균형의 약화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유지됩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을 살펴보면 오히려 권력이 새로운 형태로 행안부에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한다는 명분 아래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서 그 기관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구조는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배치가 충분한 견제장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권, 지휘권, 조직통제권이 행안부와 같은 특정 권력에 집중될 경우 이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민주주의의 붕괴는 종종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는 효율성과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집중과 견제장치의 약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 붕괴의 중요한 배경으로 극단적 양극화를 지목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상대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여야 간의 신뢰는 거의 붕괴된 상태이며 어떠한 사안도 협의

와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양극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와 같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시스템이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 될 경우 그 안정성과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이 경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규범과 관행에 의해 유지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치인들이 이를 존중하지 않고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민주주의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수청법안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 개편입니다. 그 추진 방식과 내용이 민주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단순한 형사사법 개편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하나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정치적 경쟁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개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단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계속해서 재편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떻게 통제되고 얼마나 공정하게 행사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법률 조문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와 규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중수청 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입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거수표결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이 거수표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행 처리된 그 현장을 지키면서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우스갯소리로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머릿수로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해도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행태가 의회독재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여당이었다가 또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 절대 숫자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의회라고 하는 곳이, 국회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흘러온 관행이 있었고 저는 국회의원 초선이지만 법사위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가져갔었다고 그러고 법안소위는 표결로 처리하

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즉 숫자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조정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해 내는 숙의의 공간이 바로 의회고 국회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법안소위원회는 그러한 숙의민주주의가 가장 밀도 있게 구현되어야 하는 장소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위원회 단계에서조차 충분한 토론과 합의 없이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해 버린다면 이는 입법 과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법률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기본 규범이며 특히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법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입법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인 숙의와 검토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다수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치와 타협의 과정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의사결정 수단일 뿐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충분한 토론과 설득 그리고 조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숫자의 우위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입법 속도를 높여 주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법률과 그렇지 않은 법률은 그 정당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그 법률을 모두의 합의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의지로 인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의 의견이, 소수 야당의, 소수라지만 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안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수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제도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와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위원회에서의 일방적 처리 관행은 국회 전체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앞서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검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입법 과정 전체가 형식화되고 국회가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한 건의 법안 처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는 체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체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생각은 다르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점을 가능한 찾아내서 차이를 좁혀 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표결이 반복된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협치에 대한 기반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입법 과정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 결과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도출된 결론은 더 큰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단순히 법안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논의하고 조정하는 곳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수당은 숫자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소수 의견을 더 듣고 존중해 주시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야당 역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노력 속에서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며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다시 한번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입법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수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우려는 이 기관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권한 구조와 인사 시스템, 지휘·감독 체계가 그것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관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설계라면 중수청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압

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그 권한은 철저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구조 속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관이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면 그 순간 수사는 정의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수청 법안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성격은 결국 그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인물을 채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승진시키며 어떤 사람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과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중수청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신규 채용과 승진 기준까지 그 틀 안에서 결정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관들로 하여금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태도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휘·감독 체계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하고 나아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이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실천하는,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될 경우 대통령의 의중이 수사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권력구조상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정 사건, 특정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표현, '정당한 사유'와 같은 불명확한 기준, '정치단체'라는 정의되지 않은 개념 등은 모두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이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질 경우 매우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수사관의 과거 활동을 문제 삼아 압박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적 감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법률의 모호성은 권력의 재량을 확대시키고 그 재량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될 경우 수사기관의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직문화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자신의 판단과 법적 양심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기보다는 조직의 분위기와 상부의 의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사와 징계, 평가가 외부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수사관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권력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 수사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건에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수사기관은 점점 권력친화적인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수청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권력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면 정치적 경쟁자나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반대로 권력에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국민들은 수사를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이 단순한 조직개편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 자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권력의 분산과 통제 강화가 아니라 권력의 재집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같이 권력의 핵심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제도의 설계가 곧 권력의 작동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그 기관이 어떤 원리와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행안부와 같은 특정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권력이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의 독립성, 지휘·감독 구조의 재설계, 법률 용어의 명확화, 외부 통제장치의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마지막까지 남았던 쟁점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구조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중수청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 피해는 단순히 정치권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제도는 선의에 의존해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시간 끌기도 아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대의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치안과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데 더해 중대범죄 수사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이는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강한 힘을 가지는 만큼 반드시 분산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필연적으로 남용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대 민주주의 핵심 원리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 모두는 이견이 없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집중될수록 오남용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의 정신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 온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조를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존의 행정·치안 권한을 넘어 중대범죄 수사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문제이며 그 결과로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국가행정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난관리, 치안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을 통한 치안 권한은 국가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집행력을 수반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까지 행정안전부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능적 통합이 아니라 권력의 중첩과 집중을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 집중이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될 경우 가장 먼저 약화되는 것은 견제 장치입니다. 견제는 권력의 외부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치안과 행정 그리고 중대범죄 수사까지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면 내부에서의 자기 통제만으로 충분한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수사 권한은 일반 행정 권한과는 차원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력을 수반하며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권한은 반드시 엄격하게 분산되고 다층적인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된다면 이는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권력 구조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국민에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권력이 올바르게 행사되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함께 존재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 특정 사건은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가, 왜 어떤 사건은 지연되는가, 왜 어떤 사건은 크게 다루어지고 어떤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주의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권력 집중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오랜 기간 동안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다른 정치적 상황에서 그 권한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설계할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적 사고이며 민주주의 국가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권력 집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경험해 왔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곳에서는 항상 견제가 약화되었고 그 결과 권력 남용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한 채 다시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권력은 나누고 견제는 강화하고 투명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이러한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권력을 한 곳에 모으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한번 집중되면 다시 분산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결정이 잘못될 경우 그 영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최대한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로의 권력 집중은 질서유지 명목 또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본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강해지고 견제는 강화되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됩니다. 이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는 행정안전부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균형잡힌 권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권력 집중이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어떠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권력 집중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권한의 물리적 집합에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왜곡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권력이 분산된 구조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권력이 특정 기관이나 특정 인물에 집중될 경우 의사결정은 점점 단선화되고 비판적 검토 과정이 약화되며 결과적으로 오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치안·행정 그리고 중대범죄 수사까지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이러한 의사결정의 왜곡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과 달리 매우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수사 방향, 수사 강도, 수사 우선순위와 같은 중요한 판단들이 사실상 하나의 어떤 권력축 아래에서 조정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수사의 본질적 가치와 충돌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권력은 항상 명시적인 지시 형태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직 내부의 분위기, 인사권, 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수사 전반에 걸쳐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제도적으로 통제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 내부의 문화 자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점차 조직의 방향이나 상부의 기조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권력 집중이 이루어진 많은 경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인사권과 수사권의 결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동시에 인사에 대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방향의 수사를 수행한 인물에게 유리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수사의 독립성은 사실 무력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때 인간의 선의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안되고 있는 구조는 선의의 권력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선한 권력자를 가정하는 체제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전제로 이를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권력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로의 권력 집중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는 견제장치의 약화, 수사 독립성의 훼손 그리고 국민 신뢰도의 하락이라고 하는 매우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번 약화된

견제장치는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강화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집중된 권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제도적 경직성과 권력의 자기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를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효율성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견제를 약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정책 논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와 헌법적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단지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견제는 강화되어야 하며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 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이 이재명 정권에 유리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되고 불리한 사건은 지연시키거나 축소되는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심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 법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매우 중대한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언제나 공정해야 하고 동시에 공정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중수청이 운영되는 형태를 상정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수사의 선택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심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와 같은 특정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관이 수사를 주도하게 될 경우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어떤 사건은 지연되고 어떤 사건은 대대적으로 수사되고 어떤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는가. 이 제도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 반응입니다. 이런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수사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국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실제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의심을 받는다면 그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에서 과정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정당하더라도 과정이 의심받는다면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적 수사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적 수사란 단순히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어떤 사건을 후순위로 미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을 포함합니다. 즉 수사 착수 시점, 수사 범위 설정, 압수수색 여부, 소환 시기 등 모든 과정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며 이 선택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선택적 수사 논란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외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 자체로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을 지휘·감독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외부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며 국정운영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인사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은 수사가 정치적 고려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다라고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에 유리한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불리한 사건은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정당성입니다. 또한 제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확신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의 선택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심이 지속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도가 끊임없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수사 결과는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해 왔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나 방식이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은 모두 수사의 공정성 자체보다 그 과정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는 곧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수사는 더 이상 법과 증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수사기관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떠한 기반 위에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동시에 공정하게 보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게 우려하며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선택적 수사가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왜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의심을 낳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는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의사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건을 인지할 건가, 언제 수사를 착수할 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할 건가, 강제수사를 언제 실시할 건가, 누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인지 등 모든 과정은 선택의 문제이고 이러한 선택이 축적되어서 하나의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외부의 영향력과 결합할 경우 그 선택의 방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게 직접적인 지시의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간접적인 영향력입니다. 조직은 위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상위 권력의 의중은 명시적인 지시가 없어도 암묵적 지시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유스러운 조직의 작동 방식이지만 수사 영역에서만큼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분위기나 상부의 기조가 개입되는 순간 수사는 객관성을 잃고 방향성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수사 속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의심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수사에서 사건의 복잡성, 증거 확보의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제도 구조상 외부 영향력이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확산되는 순간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급격히 약화됩니다.

수사 범위의 설정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조직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외부의 영향력과 결합될 경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관성이 유지되지가 않는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국민들은 그 차이를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의 결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설명 가능성의 부족입니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 과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또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구조에서는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과정을 신뢰하기 위해 제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제도 자체가 의심을 받는 구조라면 그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확신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의 선택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심은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중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 논의는 단순한 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우려하며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설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수청 내부의 전문성과 판단력의 약화 문제입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행정적·정치적 지휘가 영향을 미칠 경우에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과 전문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 같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들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 법리 또한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단순한 지시나 통제만으로 결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내부의 자율적 판단과 전문적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이 강화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전문성과 판단력이 점차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의 전문성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구조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수사관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법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전문성이 축적이 됩니다.

특히 중대범죄 수사에서는 판단의 미세한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으며 증거의 해석 방식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오직 수사관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지휘가 개입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순수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부의 기대를 고려하게 되고 그 결과 판단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성의 위축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설계되면 그 제도 속에서 활

동하는 구성원들의 행동 역시 그 방향에 맞추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판단보다는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행정 조직에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일 수가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는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전문성의 축적이 단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전문성은 개별 사건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누적으로 쌓여집니다.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판단 기준이 조직 내에 축적되고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외부 지휘가 강화된 구조에서는 이러한 축적 과정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방향의 수사가 반복되거나 특정 유형의 사건이 강조되는 경우 조직의 경험 역시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사역량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특정 영역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 전반의 법질서가 흔들릴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억지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나 금융범죄와 같은 영역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범죄를 적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범죄 은폐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판단력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내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 대한민국 수사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와 효율성을 이유로 이를 약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수사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판단이고 그 판단은 전문성과 독립성 위에서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수청 내부의 전문성과 판단력 약화 문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제도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규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 개인의 경험, 직관 그리고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지휘가 강화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점차 부차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방향과 결론이 조직의 상부에서 설정돼 있는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은 항상 위계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상부의 기대와 기조는 다양

한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하부 조직에 전달됩니다.

수사는 특정 방향에 맞추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증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기조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되기 시작하면 수사는 점차 객관성을 잃고 방향성을 띠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중대범죄 수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고 정치적·경제적 영향이 결합되는 경우를 우리는 다수 봐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의 방향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즉 법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던 문화가 점차 조직의 기조와 상부의 방향을 고려하는 문화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사의 질을 근본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책임 구조의 왜곡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판단에 대해 명확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외부 지휘가 강화되는 구조에서는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상부의 기조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상부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묻기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과 판단력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판단기준이 조직의 자산이 되고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정확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외부의 지휘가 지속적으로 개입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축적 과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정 방향의 판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조직의 경험 역시 그 방향으로 편향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사 역량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외부의 지휘를 통해 단기적인 효율성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인 국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수사의 본질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정확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오직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때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 내부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이른바 중수청법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재편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넘어 수사권력 자체를 특정 권력축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

들을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자면 이 법안이 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감독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치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며 국정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사입니다. 이러한 장관이 중수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조적 보장을 통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그 구조적 보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정치적 위치에 있는 장관에게 부여될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실제로 그러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조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수청장의 당적 이력에 대한 기준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적 보유 이력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사가 중수청장을 맡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는 언제든지 가장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 설계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이러한 기준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타 기관 수사 사건에 대한 강제적 이첩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사건을 강제적으로 이첩받을 수 있는 구조는 기존 수사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수사는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의 사건을 일방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이는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권한이 정치적 영향력과 결합될 경우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가져와 처리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치관여죄와 관련하여 정치단체의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명확해야 하며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단체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수사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기준은 곧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수청 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권은 조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의 인사가 행정안전부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될 경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방향의 수사를 선호하는 인사가 중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범죄의 관련 범죄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중대한 문제입니다. 관련 범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석에 따라서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가 중수청의 관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특정 기관에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은 명확한 기준 아래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권한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자의적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은 개별적으로도 심각하지만 이들이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인사권의 결합, 모호한 법적 기준 그리고 강제적 사건 이첩 구조가 다 같이 함께 작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기관에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산과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견제되어야 하며 그 견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맞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그 공백을 메꿔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년 전 총선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됐습니다. 절대적인 거대 여당에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소수 야당입니다. 이러한 국회 구조 속

에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꼭 지켜봐 주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때 민주주의는 건강해지고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2년 뒤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수청 법안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나누어질 때 건강해지고, 견제될 때 올바르게 작동되고, 균형을 이룰 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의 법안은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또 오늘, 이제 어제가 됐네요. 어제 상정된 중수청법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필리버스터가 없는 국회, 부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여당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어기구 고동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서범수)

(02시58분)

○의장대리 어기구 다음은 서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의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대전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고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먼저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와 아울러 큰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쾌유를 빕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실종자 분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장은 아직도 긴장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구조와 수색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럴수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부상자 치료

와 가족 지원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소방대원과 구조대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역시 이 비극 앞에서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사고 수습과 구조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모든 지원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전 화재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행안부장관님 대전에 가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무위원석에서)

예.

○서범수 의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단지 하나의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이 어디로 꺾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이름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중대범죄를 수사하겠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좋다고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표어가 번듯하다고 제도가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해서 그 안에 담긴 것이 모두 개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봐 왔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명분을 앞세웁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으고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고 국민의 자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손을 더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법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정상화도 아닙니다. 수사의 독립을 세우는 법도 더욱더 아닙니다.

이 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보다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 놓는 법입니다. 이 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권력분립의 긴장을 더 느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관이 나를 수사하는지, 어느 기관이 책임지는지 더 불분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점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왜 지금 나왔는지, 왜 이렇게 서둘러 처리되었는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밀어붙이는지 그 정치적 배경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권력은 시점으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언제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를 만들었느냐보다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제도를 만들었느냐가 더 본질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나 알고 있듯 오랫동안 여러 형사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적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던 사안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억하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2심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의 주장이나 언론의 해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유무죄를 미리 확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묻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선거법 사건을 가진 대통령, 여러 개의 중대한 형사재판을 안고 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자신을 둘러싼 재판들이 줄줄이 멈춰 서고 그와 동시에 수사와 기소와 재판의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입법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진다면 국민이 과연 아무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핵심 질문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잇따라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멈췄고 위증교사 항소심이 멈췄고 대장동, 성남FC 사건도 멈췄고 법인카드 사건도 멈췄고 대북송금 사건도 멈췄습니다.

법적으로는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계속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에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소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입법이 연달아 추진되었습니다. 법왜곡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청법까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3월 10일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3월 18일에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흐름을 보고도 아무 연결도 느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개인의 재판이 정치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이끄는 권력이 수사기관의 구조를 바꾸고 법원을 둘러싼 제도를 바꾸고 대법관 구성의 틀까지 바꾸려 든다면 그 자체로 이미 공적 권력과 사적 이해의 충돌 우

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야당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라면 너무나 당연한 경계심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민주주의국가든 권력자가 자기 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추진할 때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훨씬 더 넓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설명을 더 줄였습니다. 견제장치는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몰아붙이며 넘어가려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 법안의 진짜 성격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 법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이 법이 정말 역사에 남을 개혁이라면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이 법이 정말 검찰개혁의 정답이라면 왜 수사권을 더 독립적인 구조로 보내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가져갑니까?

여기에 이 법의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정치검찰이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행안부장관 소속 중수청입니다. 검찰권의 비대화를 비판하더니 결국 행안부 수사권의 비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있는 수사권은 위험하고 행안부 아래 놓이는 수사권은 안전한 것입니까? 검사는 못 믿겠고 장관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의심하면서 정치인 출신이 대부분인 행안부장관 체계의 중립은 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며 행안위에서 의결된 법안 역시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소청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나 검사의 입건요청권, 특사경 지휘 조항 등은 삭제했지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이라는 근본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왜 위험합니까? 행정안전부는 원래 정치의 흐름과 무관한 곳이 아닙니다. 행안부장관은 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 보임되는 자리입니다. 행안부장관은 내각의 조직을 책임집니다. 행안부장관은 국정운영의 정치적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그 장관의 지휘·감독 구조 아래 중대범죄 수사권이 놓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남깁니다.

특히 대통령과 정권의 이해가 걸린 사건, 정권 핵심과 가까운 인물들이 관련된 사건, 권력형 비리, 정치자금, 대형 경제범죄와 같은 사안에서 정말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수사는 법전 속 문장만으로 독립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구조 속에서 독립되어야 합니다. 인사권으로부터의 거리, 예산권으로부터의 거리, 징계권으로부터의 거리, 정치권력으로부터 거리, 그 거리가 확보돼야 비로소 독립이 작동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수청은 그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과 더 가까운 조직입니다.

이 법의 또 다른 문제는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가 국민에게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명확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범죄를 담당하는지, 누가 사건을 가져가고 누가

넘기는지, 갈등이 생기면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는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공소청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정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말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사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더 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다가 넘기고 어떤 사건은 중수청이 가져가고 어떤 사건은 서로 관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고 책임은 희석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대놓고 잘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관은 많은데 정작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그것이 국민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대범죄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회계, 금융, 권력형 비리, 조직범죄, 국제범죄 등은 단순히 법률 조문만 안다고 되는 수사가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 수사팀 간의 유기적 협업, 기록과 판단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갈라놓은 다음 수사와 기소를 각기 다른 조직에 분절적으로 맡기면 그 전문성과 연속성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실제로 인력 문제도 이미 우려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검찰 인력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중수청은 출발부터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만들어도 사람이 없고 간판은 걸어도 실무는 비고 법은 통과됐는데 실제 수사는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엉성한 출범은 결국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는 무능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택적 수사입니다. 전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역량이 없으면 권력이 관심 갖는 사건만 앞세우고 나머지는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권력은 항상 말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더 공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구조가 잘못 설계되면 능력 있는 사람도 왜곡됩니다. 견제가 없으면 좋은 의도도 권력의 편으로 흘러갑니다. 정치권력과 너무 가까운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개혁의 이름으로 출발해도 결국 정권의 온도를 잃는 조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점에서 중수청법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각각 따로 떨어진 입법이 아닙니다. 하나는 수사를 흔들고 하나는 재판을 압박하고 하나는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흔들고 하나는 대법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 시기에, 한 정권 아래, 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도입 취지를 떠나 현실정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 처벌한다는 설명은 표면적으로는 정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건 당사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았을 때 그 판단 자체를 형사고발의 대상으로 밀어 넣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그 판단을 둘러싼 형사고발이 이어진 장면은 바로 그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 줬습니다.

재판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국민에게 한 번 더 구제의 기회를 주자는 말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확정력과 안정성, 사법체계의 종국성, 재판 지연과 헌재 과부하 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를 급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전체 사법시스템의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시행 일주일 만에 100여 건이 접수되었다 합니다. N번방 성범죄자 조주빈과 협박범 구제역 등 이 사회를 좀먹는 범죄자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여기에 합류하실 겁니까? 제도가 사회를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권력자가 자기에게 불편할 수 있는 수사와 재판의 질서를 주변부터 하나씩 흔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없애고 수사는 새로 짜고 판결은 다시 다투게 하고 판사는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시키고 대법원 구성도 바꾸는 길을 열어 놓고 그 와중에 대통령 자신의 재판은 멈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중수청법을 단순한 검찰개혁의 법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하나의 법률안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입니다. 더 큰 그림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서로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체계에서 권력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닿는 체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강 간 균형입니다. 그다음 무너지는 것은 법적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국민이 국가권력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입니다.

정치권력은 정권이 바뀌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남습니다. 오늘 한 정권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든 구조는 내일 다른 정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혁은 언제나 현직 권력자에게 가장 엄격해야 합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사건과 무관한 제도를 만든다는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를 내세워도 그 개혁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고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것이 검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균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과 행정부 산하에서 정치권력 외에 통제되는 수사권 집중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는 것과 권력기관을 더 정치적인 구조로 옮겨 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와 재판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이 수사, 기소, 재판 구조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적 의심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정권이 정말 떳떳하다면 왜 더 넓은 합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정말 자신 있다면 왜 더 정교한 설계를 내놓지 않습니까? 정권이 정말 국민만 보고 있다면 왜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다는 신뢰를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 없이 야당이 반대하면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이고 법조계가 우려하면 기득권 수호라고 몰아붙이고 국민이 불

안해 하면 개혁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부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권력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이 스스로를 견제받는 구조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이 외부 압박 없이 판단할 수 있다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국가형벌권이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청법은 멈춰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신의 재판과 무관하다는 국민적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 판사와 재판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넓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 순서를 거꾸로 세우면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편의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편의를 거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자기에게 불편한 제도를 없애고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정치를 거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개별 법안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 문제로 봐 주십시오. 수사구조가 흔들리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흔들립니다. 재판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법치의 실태가 흔들립니다. 권력분립이 흔들리면 결국 가장 약한 국민부터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야 합니다. 지금 따져 물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정권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재판은 권력의 부담을 덜어 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 한 사람의 정치적 필요에 맞춰 다시 짜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상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지금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서 동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78년간 존속해 온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2개의 새로운 기관이 들어섭니다.

둘째, 검사에게서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와 공판 유지만 담당하며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확정된 당정청 최종안은 수사개시 통보 조항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 내용을 모르는 나라, 이것이 이 정부가 설계한 새로운 형사사법입니다.

셋째, 법왜곡죄가 신설되어 판사와 검사의 법적 판단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23조의2로 신설된 이 조항은 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3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는데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법을 근거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법왜곡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왜곡죄의 현실입니다. 법을 만든 바로 그날 대법원장이 고발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넷째, 재판소원이 도입되어 확정된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거센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헌재에 의해 취소되는 구조입니다.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입법 과정에서 여러모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회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돼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참모가 공개적으로 송구를 표명하는 사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다섯째,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확정된 이 조치는 약 2년 후 시행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을 12명이나 늘리는 것입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개혁의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딜레마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섯째, 바로 어제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검찰에서 떼어 낸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의 세 기관에 넘기는 이 법안은 장관의 지휘·감독권 아래 수사를 놓겠다는 설계입니다. 2026년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대안이 바로 그것이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여섯 가지를 나열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하나의 정권 아래서 불과 10개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권을 재편하고, 기소권을 재편하고, 재판권을 재편하고, 헌법재판의 범위를 확장하고,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고, 판사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형사사법의 수사·기소·재판 전 단계를 동시에 뜯어고친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5월 28일 대선공약집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대법관 증원을 핵심 사법개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날인 6월 4일 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달 검찰청 업무보고를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라며 30분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검찰과의 대화가 아니라 검찰의 해체가 이미 결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야권은 이 일련의 입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이자 사법권력 독점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팩트를 말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재판을 심리하는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고,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그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만들고, 그 수사를 담당할 세 기관을 행정부 산하에 만드는 일이 동시에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사저널은 이 상황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일까 아니면 한 사람만을 위한 안전판 설계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던지고자 합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이 모든 일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것인지, 수사를 독립시킨다면서 왜 장관 지휘 아래 두는지, 기소의 공정성을 높인다면서 왜 검사에게서 수사를 알 권리마저 빼앗는지, 재판의 정의를 바로잡는다면서 왜 판사를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지 이 모순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8년 8월 2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30일 초대 권승렬 검찰총장이 취임했고, 이후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46명의 수장이 이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검찰은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기소,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쥔 검찰은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로 대표되는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하다, 이 씁쓸한 말이 검찰의 간판처럼 굳어졌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행은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참담하다는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싸울 힘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검수완박 당시 전국 18개 검찰청 검사장이 대검에 모여 검사장 총사퇴 카드까지 꺼내 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습니다. 78년 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칼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것 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칼을 뺏은 다음입니다. 칼을 뺏었으면 그 칼이 다시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게서 빼앗은 수사권이라는 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 세 기관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 이것이 과연 검찰보다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특검법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전원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모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현실입니다.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로서는 최초로 헌법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옮겨졌고 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찰청 폐지 그 자체가 아니라 폐지 이후의 설계가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빼앗은 칼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누가 그 칼을 쥐게 할 것인가, 그 칼을 쥔 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이 정부는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을 하고 있지만 그 답이 위험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고 청장은 2년 단임으로 교체되고 사법통제 장치는 전부 삭제된 기관, 이것이 검찰을 대신할 새로운 수사기관의 모습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수사기관의 행정부 소속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비교법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설계한 분리 방식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은 수사·기소 분리의 전제조건입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기소기관과의 분리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갔습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 조문은 이 법안 전체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사기관, 이것은 독립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한 부서입니다.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분은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참고인이었습니다. 찬성 측에서조차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공청회에서 제6조 단서에 대해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왜입니까? 경찰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지휘권을 검찰에서 떼어 낸 수사권을 받는 기관에는 왜 인정합니까?

홍준형 교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이라는 괴물을 때려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그 다음이 없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관료제 틀로 통제하려 들 공산이 크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권력의 문제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 있었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독립이어야 합니다. 수사권을 정

치인 장관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빼앗긴 검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10월 2일 이후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를 받아 봅니다. 현장에 가 본 적도 없습니다.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증거를 직접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 뭉치만 보고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공소청 검사의 현실입니다. 일선 부장검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서류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모든 견제 권한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개시 통보, 입건 요구권, 수사 중지 명령권, 직무 배제 요구권, 수사 협조 조항 등이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기관은 서류만 보고 기소한다. 그 사이에 국민의 인권을 지켜 줄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재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이 정부는 재판까지 손을 댔습니다.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이 세 가지가 2026년 3월 12일 같은 날 공포되었습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별도의 법왜곡죄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가 만든 법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나라, 이것이 삼권분립의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재판소원, 확정판결을 헌재에서 뒤집는 사실상 4심제입니다. 대법관 증원 14명에서 26명으로 현직 대통령이 12명을 새로 임명합니다.

법왜곡죄로 판사를 위축시키고 재판소원으로 불리한 판결을 뒤집을 길을 열고 대법관 증원으로 우호적인 사법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 판사들을 수사할 기관으로 행정부 산하에 중수청을 만든다. 이것이 사법 독립의 강화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체계적 장악입니까?

2026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이 한 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그 규정에 없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그럼 국수본부장은 누가 지휘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공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중수청법 제6조의 장관 지휘권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국수본에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공수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마저 우려되는 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검사에게서 수사권이 박탈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삭제됩니다. 특사경 2만 명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휘합니다. 경찰 국수본에 대한 지휘권도 행안부로 합니다. 법왜곡죄로 판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이 뒤집어집니다. 대법관 12명이 새로 임명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정권 아래에서 10개월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도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각각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 나름의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합치면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적 해체와 재구축입니다. 그리고 재구축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권력의 집중. 수사권은 행안부로 집중됩니다. 기소권은 견제수단 없이 방치됩니다. 재판권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위축됩니다. 사법부의 구성은 대법관 증원으로 재편됩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의 강화입니까, 약화입니까? 이것이 국민의 인권 보호입니까, 권력의 자기 보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17일 X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 대통령 자신의 과잉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수사·기소·재판 전 영역을 동시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불편한 과잉 아닙니까? 이 법안은 그 과잉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찰 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사법 전체를 하나의 정치적 의지 아래 재편하려는 패키지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부품 하나를 통과시키면 나머지 패키지 전체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바로 이 자리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형사소송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은 3개의 축으로 서 있습니다, 수사·기소·재판.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법원이 재판합니다. 이 세 개 축은 서로를 견제합니다. 수사기관이 함부로 수사하면 검사가 불기소로 걸러냅니다.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면 상소제도로 교정됩니다. 이것이 78년 동안 작동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 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한꺼번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고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중수청과 행안부 소속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두 기관 모두 같은 장관 아래에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는 사라지고 하나의 행정부 라인 안에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소 축은 어떻습니까? 공소청 검사에게서 수사권, 수사지휘권, 입건 요구권, 수사 중지 명령권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검사가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기소기관이 수사기관을 견제하지 못하면 기소는 수사기관이 올려 보내는 서류를 추인하는 행

위에 불과합니다.

재판 축은 또 어떻습니까? 법왜곡죄로 판사의 법적 판단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이 뒤집어집니다. 대법관 12명이 새로 임명됩니다. 재판의 독립성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형사사법기관인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에 매달리는 사냥꾼 증후군을 막을 수 있지만 경찰에 과도한 재량권이 가지 않도록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상호 견제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세 축이 동시에 무너지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부가 수사하고 견제 없이 기소되고 위축된 법원이 재판하는 구조, 이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 벨트의 시작점에 행안부장관이 서 있습니다.

형사소송 체계에서 사법통제란 무엇입니까?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강제 처분을 할 때 그것이 적법한지를 사법기관이 사전·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법 통제가 없는 수사권은 국민에 대한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검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기관으로서의 역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하거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사건을 확대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 등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당정청 최종안은 이 모든 것을 삭제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 삭제, 입건 요구권 삭제, 수사 중지 명령권 삭제, 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공소청·중수청 수사 협조 사항 통째로 삭제,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서 사법 통제 수단을 없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 스스로가 수사 협력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2026년 3월 11일 보도자료에서 중대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난도 법리 해석이 필요해 협력 차원에서 수사 개시 통보 조항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고 6일 만에 삭제했습니다. 왜입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수사 개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사법 통제까지 함께 잘라 낸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사건을 확대할 때 누가 이를 막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민간위원 15명이 회의를 열어 심의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내부 이의제기 절차요? 장관이 지휘하는 조직에서 부하 수사관이 상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법 통제의 핵심은 신속성과 전문성입니다. 수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는 즉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해 온 것이 검사였습니다. 그 검사의 권한을 전부 삭제하고 대체 장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설계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통제 해제입니다.

사법 통제 해체는 중수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정청 최종안는 약 2만 1000명 정도의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까지 배제했습니다. 특사경이 누구인지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 식품, 환경, 노동, 세무, 보건 등 전문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특사경은 2025년 기준 약 2만 1263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 경력 1년 미만의 순환 보직입니다. 식약처에서 식품 안전을 검사하다가 수사를 맡게 된 공무원, 환경부에서 행정 업무를 하다가 수사를 맡게 된 공무원, 이들이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절차를 온전히 숙지하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었기에 이들의 수사가 법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의 지휘 없이 특사경의 역량만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지적했습니다. 법을 모르고 수사하다가 그 수사 자체가 법왜곡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산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야심 많은 지자체장은 특사경을 자신의 사병처럼 활용해 정치적 입지를 한껏 높일 수도 있다.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이 상황을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 삼중 위협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스스로도 특사경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침해 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권침해를 감독·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해 놓고 며칠 뒤 삭제해 버렸습니다. 누구의 요구에 의했습니까? 여당 강경파의 요구에 의했습니다. 인권보호보다는 정치적 타협이 우선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검사를 특정하여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는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체계 적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해석 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검찰청 검사 이외의 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는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제도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만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합니다. 군 검사는 수사를 합니다. 공수처 검사도 수사를 합니다. 특별검사도 수사를 합니다. 오직 공소청 검사만 수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검사인데 왜 공소청 검사만 수사권이 없습니까? 이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법리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입니다. 법체계의 일관성이 깨지면 그 틈 사이로 국민의 권리가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사건을 인지합니다. 행안부장관의 일반적 지휘 아래 수사를 개시합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부당한 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실상 자기 완결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기록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이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 현장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증거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서류만 보고 이 사람의 인생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방식으로 경찰을 견제합니다. 독일은 검찰이 사법부에 속하면서 경찰과 협력합니다. 일본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불기소처분을 견제합니다. 모든 나라가 분리하면서도 견제의 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끈을 전부 끊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 삭제,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의무 삭제, 양 기관의 협력조항 삭제, 심지어 중수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이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 직위를 겸임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인적 교류조차 법으로 차단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이렇게 단절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이 단절의 틈 사이에서 국민의 인권은 누가 지킵니까?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수사할 때 기소기관이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기소기관이 서류만 보고 기소할 때 수사기관은 이미 손을 뗀 상태입니다. 국민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공백 속에 방치됩니다. 이것이 형사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설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행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2월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가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소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 77%, 701명,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 0.8%, 7명입니다. 910명 중 7명만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찰 전체 구성원 573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수청 희망자는 6.1%,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마약수사직 153명만이 유일하게 중수청 희망자 37.9%가 공소청 희망자 26.1%를 넘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국회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의 신분이 갖는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종래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단언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되는데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가지 않으면 누가 수사합니까? 중대범죄, 내란·외환·부패·경제범죄, 마약범죄 이것들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입니다. 78년간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노하우, 국제 공조 네트워크, 디지털 포렌식 역량 이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검사 7명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했을 때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할 새로운 기관이 탄생했다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력 부족으로 수사 성과는 미미하고 조직은 공동화되었습니다. 검사들이 공수처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대형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는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같은 검사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상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당하는 모순, 이 모순이 현실화되면 중수청은 일상적인 수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번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홍석 변호사는 이를 두고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짐작에 기댄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도박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운명을 도박에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 법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합니다. 중수청법은 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로,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위험한 방식으로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의 상호 견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법통제가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특사경 2만 명이 통제 없이 수사를 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공소청법과 충돌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킬 장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 출범 즉시 마비가 올 것입니다. 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형사소송 체계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중수청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조문별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이 법의 아홉 가지 독소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사 독립을 선언해 놓고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모순된 법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5조도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조문인 제6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독립을 선언한 조문 바로 뒤에 장관 지휘권을 규정했습니다. 제5조의 약속과 제6조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전홍규 변호사는 이를 두고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 우려라고 했고 차진아 교수는 이 단서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법의 첫 번째 독소이며 가장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둘째, 청장 임명부터 추천위, 인사위, 징계위, 평정까지 전부 행안부가 진다는 것입니다. 장관 지휘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의 인사구조 전체가 행안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고 위원장도 행안부장관이 지명합니다. 9명의 위원 중 행안부차관, 법무부차관이 당연직이고 위촉 3명도 장관이 임명합니다.

수사관 임용과 관련해서는 5급 이상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6급 이하는 장관이 직접 임용합니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6급 이하 징계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고 징계처분도 장관이 합니다.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설치하고 위원장도 장관이 지명합니다.

적격심사위원회는 6명 중 장관이 위촉·지명하는 위원이 3명입니다.

평정과 관련해서는 평정기준을 장관이 마련하고 결과를 전보, 승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 승진, 징계, 감찰, 적격심사, 평정, 수사관의 인생 전체를 행안부장관이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조직에서 수사관이 장관이 불편해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셋째,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소방청, 모든 수사권이 행안부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미 경찰청 수사인력 3만 명과 국수본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명 규모의 중수청까지 들어오면 공수처를 제외한 대한민국 사실상 모든 수사조직이 한 장관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1차 수사기관들에 권한이 집중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무부장관마저 우려하는 행안부 비대화, 이것이 세 번째 독소입니다.

넷째, 수사범위는 끝없이 넓고 관할은 혼란스럽고 경찰과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제2조의 중대범죄 목록을 보십시오. 내란, 외환, 사기·공갈, 횡령·배임,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마약류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사이버범죄, 법왜곡죄까지, 여기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무한 확장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성영훈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검찰청법, 공수처법 대비해서 제도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핑퐁과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범위는 넓고 관할은 불분명하고 경찰과의 충돌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다섯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름의 수사 흔들기 장치가 법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제44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30~200명의 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된 15명이 심의를 합니다. 언뜻 보면 인권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구조가 다릅니다.

사건관계인에는 피해자와 그 변호인까지 포함됩니다. 반복 신청을 막는 장치는 없습니다. 입건 전 조사까지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반복 심의를 신청하여 수사를 지연시키는 합법적 방패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도 문제입니다. 위촉권자가 중수청장, 지방청장입니다. 기관장이 위촉한 위원들이 그 기관의 수사를 견제한다?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정당화 기구가 될 위험이 큽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여섯째, 검찰인력 이식이 전제인데 검사들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칙 제4조는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면제, 시보 면제 또는 단축까지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인력의 대거 이동을 전제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검사 910명 중 7명만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짐작에 기댄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인력이 없는 수사기관, 공수처의 실패가 그대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일곱째, 법왜곡죄까지 수사범위에 넣어 행정부가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2조제1호 사목은 형법 제123조의2에서 정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는 법왜곡죄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 이것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설계입니다. 중수청은 이첩요청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사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는 나라, 이것이 일곱 번째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협력도 견제도 없이 완전히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제24조는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25조는 수사관이 퇴직한 후 2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합니다. 인적 교류가 법으로 차단됩니다.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이 만나지도, 이야기하지도, 협력하지도 못하는 구조, 수사관은 자기가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고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단절의 피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증거가 부실해지고 결국 피해자와 국민만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수사권력을 정치권력 아래에 두는 위험한 재편입니다.

이상 아홉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장관 지휘권, 인사 종속, 수사권 비대화, 관할 혼선, 수사 흔들기, 인력 부재, 행정부의 사법부 수사, 기소·수사 단절, 이 아홉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집중입니다.

수사권이 행안부로 집중됩니다. 인사권이 장관에게 집중됩니다. 관할이 중수청으로 집중됩니다. 견제장치는 삭제됩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 본래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견제장치 없이 행정부로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검찰이라는 하나의 괴물을 해체해 놓고 더 큰 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준형 교수의 말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검찰이라는 괴물을 때려잡기만 하면 된다는 건지 그 다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는 법안의 조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이재명 정부 사법경찰개혁의 전체 경과를 짚은 뒤 공소청법의 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중수청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이해하려면 이 법이 나오기까지의 역사를 먼저 짚어 봐야 합니다.

이 법은 하루아침에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을 둘러싼 기나긴 줄다리기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일련의 입법 조치가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체계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오랫동안 주종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보조기관이었습니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 전까지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에 복종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대칭적 구조에 불만은 경찰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축적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수사권 조정이 시도되었으나 좌초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점을 몹시 후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숙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되 검사에게는 기소권과 보완수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기능을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합의문을 기초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사개특위 위원 간 합의 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이 국회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공소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에게 선별적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전건송치 원칙이 폐지된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건 처리의 일차적 판단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되었습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셋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협력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지휘·복종에서 상호협력으로 재규정되었습니다. 다만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송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기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넷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조항으로 인해 검사가 직접 작성한 피의자진술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려워졌습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 법률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된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 중수청법의 사상적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 조정은 시행 전부터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적체가 심화됐습니다.

인하대학교 홍승기 교수는 논문에서 2020년 형소법·검찰청법 개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적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줬으나 경찰의 수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수사 업무가 늘어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자 경찰 내부에서 수사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중수청 인력 기피 문제의 전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검경 간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이 다시 불송치하면 사건이 오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사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검경 간 사건 핑퐁을 양산하여 수사 지연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과 불시 수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령 수준의 조치에 불과했고 법률 차원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대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작동하려면 사법 통제장치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개정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남겨 두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검사가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완전하나마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건 적체라든지 수사 지연, 검경 핑퐁이 발생했습니다. 견제 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제 장치마저 삭제한 중수청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20년 개정법에서는 검사에게 남겨 두었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수사지휘권 이 모든 것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는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홍승기 인하대학교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의 존속은 절대적인 전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없이 수사권을 넘겨 주면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는 담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경험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권의 조정이었지 수사권의 이전은 아니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의 사법 통제 기능을 남겨 두되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상호 견제의 틀은 유

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박탈하고 사법 통제장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삭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개혁이 수술이었다면 지금의 개혁은 해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수사권 조정이 수술이었다면 그 중간이었던 2020년에 일어난 일은 절단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때는 2022년 4월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었고 5월 10일 취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곧 취임하면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위기감이 민주당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2022년 4월 10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즉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분리하여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법 시행을 3개월 유예를 하되 그 유예기간에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관—이것이 바로 오늘 상정된 중수청의 원형입니다만—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대안 없이 서두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론은 확정되었습니다. 4월 15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 전원이 서명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격렬한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2022년 4월 22일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4개 분야를 삭제하고 부패·경제 2개 분야만 남긴다.

셋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5개에서 3개로 감축한다.

넷째,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6개월 내에 완성한다.

다섯째, 법안은 공표 후 4개월 후 시행한다.

이 합의문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 합의안마저도 중재안도 결국 시기만 늦춘 검수완박이다라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 전원도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의 집단 저항이었지만 국회의 입법 의지는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월 26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안을 수정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적극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되 보완수사를 유지

한다는 합의문 내용에서 보완수사권을 박탈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으로 나아갔습니다.

4월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박병석 의장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6시간 48분 만에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5월 9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고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되어 이 법률이 확정됐습니다. 정권 교체 하루 전에 차기 대통령을 겨냥한 법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가 검찰의 수사 영역에서 빠졌습니다.

둘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그 사건을 직접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원칙이 법률화되었습니다.

셋째,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에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중수청 설립이 법적 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중재안 합의문 제5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은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이 법안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달에 검찰총장 출신 차기 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밀어붙인 법입니다.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그 합의는 4일 만에 깨졌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변경이라는 절차적 수단으로 6시간 48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고등검사장 전원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172명의 여당 의원 서명으로 밀어붙인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입법 과정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켜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킨 이른바 꼼수 탈당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는 2023년 3월 23일 이 사건을 심리하였으나 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갈리면서 결국 기각됐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 개혁의 정당성은 훼손됩니다. 합의를 깨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 직전에 밀어붙인 법이라는 꼬리표는 이 법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오늘 이 자리,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법은 검수완박의 완결판이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9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이 법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법률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 다수는 민주당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시행령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를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에 대해 그 2대 범죄의 하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최대한 넓게 설정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에 해당했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 뒤에 넣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위법이 줄여 놓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다시 넓히려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모법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법무부 주도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른바 수사준칙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행령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없애 버리면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집을 수 없는 설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권력을 위한 것인지 바로 이 법안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조직 해체로 해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를 거친 뒤 이루어진 이 선거에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검찰개혁의 결정적인 정치적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발표된 대선공약집에는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진짜 무게는 취임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표현 속에 검찰청 폐지라는 전례 없는 구상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직후인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면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후 10개월간 전개될 형사사법 대격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취임 당일인 6월 4일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법사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속도전이었습니다. 정권 초기의 정치적인 자본이 가장 강할 때 가장 논쟁적인 법안부터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6월 22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라며 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검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국정기획 관계자는 검찰은 2차 보고 때 검찰개혁 공약을 정리한 책자를 만들지 못해서 못 가져왔다고 했다, 이후 프린트한 물건을 봤는데 거기에는 검찰개혁 공약은 없고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폐해만 적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과의 대화가 아니라 검찰의 해체가 이미 결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대상이지 협의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2025년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핵심 국정과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세부계획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정상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달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만찬 회동에서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합의했습니다.

8일 21일에는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는 데 기준이 다 무너졌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기소해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한참 돈 들여 고생 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가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

이 발언에는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개인 경험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여러 차례 검찰 수사와 기소를 경험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동기가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이 질문은 이 법안의 정당성을 따지는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개혁이 권한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전면적 개혁을 꺼내 들었다고 했습니다. 권한 조정이 아니라 조직해체, 수술이 아니라 폐기, 이것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정치적 맥락도 달랐습니다.

쿠키뉴스는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권력 분산 차원에서 개혁을 시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과의 정면 대립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었습니다.

2025년 9월 7일 대통령실, 정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중수청의 소속 부처 문제는 행안부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지, 행안부에 둘 것인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같은 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사권 집중 문제를 들어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마저 행안부 소속에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집단 퇴장한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되어 법률이 확정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6년 10월 2일 시행됩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규정한 새로운 형사 사법의 골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이루어진 3단 체제가 모두 해체됩니다.

둘째,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됩니다.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판 기능이 이관됩니다. 대검찰청은 대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은 고등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됩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은 유지되지만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됩니다.

셋째,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부 산하에 신설됩니다.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에 법왜곡죄까지 더한 범죄를 수사합니다. 수사권은 이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의 모체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본회의 통과 이틀 뒤인 9월 28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이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동우회도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이라는 골격만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 구조, 수사 범위, 인사 제도, 수장 임명 방식, 사법 통제장치, 이 모든 것은 별도의 조직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조직법이 바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입니다. 정부조직법은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하는 것은 조직법이 결정합니다.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라고 적혀 있어도 조직법에는 어떤 대안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 정치인 장관이 지휘하는 행정부의 하부 조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치인 장관이 지휘하는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물이 바로 중수청법입니다.

다음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과 자문회의 논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다루어졌고 어떤 쟁점이 묵살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다음 날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추진단의 임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 180여 개 및 하위법령 900여 개의 제·개정안 마련 그리고 하부조직 설치,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편성 등 실무 준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0월 24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6명의 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흥미로운 인물들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방법과 내용에는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성 자체가 검찰개혁 지지를 전제로 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10월 29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위원장은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며 얼추 정리하니 15개에서 20개가 논의 주제가 될 것 같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출범 시한을 맞추기 위한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운영에 대해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끼칠 일은 없다. 어떤 쟁점에 대해 위원장 역시 n분의 1의 지분만 가질 뿐, 그는 또한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라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이 발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원칙이 어떻게 무시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문위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기능을 전혀 남기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보완수사 권한을 둘 것인지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박 위원장 자신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때 권한 남용과 무책임은 검찰의 수사 남용보다 오히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12월 4일 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문위의 논의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1항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를 완전히 뺄지를 두고 토론했으나 의견이 갈렸다고 했습니다. 즉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공소청법 공소검사의 직무에 수사 관련 내용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춰 수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였습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총 네 차례 회의에서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

니다. 기존 계획처럼 9대 범죄를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과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붙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자문위원이 절반 가량씩 나눠진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계일보는 자문위원회를 크게 강경파와 신중파로 구분했습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강경파는 나머지 수사는 경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중수청이 9대 범죄 전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신중파는 수사 범위를 줄이면 검찰개혁 이후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자문위원 사이의 의견 합치가 어려운 사안이라 자문위는 다수와 소수 의견 정도로 찬반 의견을 정부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는 독자적으로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1차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자문위가 붕괴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자문위원 4명이 동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성진, 김필성, 서보학, 장범식, 한동수, 황문규 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전면적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16명으로 출범한 자문위에서 6명이 빠진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법안이 자문위원 의견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자문위 의견과 반대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은 특별 수사기관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4대 범위로 좁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안은 오히려 9대 범죄로 확대됐고 거기에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까지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자문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수사사법관 이원화 구조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이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에도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사법관이란 검사·판사·변호사 출신에게 부여하는 별도의 지위였습니다. 사퇴위원들은 이를 검사 출신들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들은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 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의 검찰을 대신하여 제2의 검찰청을 설립한 뒤 검사들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도록 해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문위원 6명의 사퇴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26년 3월 9일 박찬운 자문위원장 자신이 사퇴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면서였습니다. 그는 사퇴 공지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했고 전건 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의 자문을 맡는다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하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성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회,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전문가들로 채운 자문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16명 중 6명이 뒤통수를 맞는 모멸감을 표현하며 사퇴했고 위원장까지 감성적 접근이 앞선다면서 사퇴했습니다. 남은 위원은 9명입니다. 16명으로 시작한 자문위원회가 절반 가까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이 법안은 전문가의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문위의 의견은 참고에 그쳤고 법안은 추진단과 정치권이 독자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이 4대 범죄로 좁히자고 한 수사와 범죄는 9대 범죄로 확대되고 결국 6대 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수사사법관 이원화가 법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검찰권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경고한 법안이 그대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박찬운 위원장이 취임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문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개혁, 전문가를 모아 놓고 전문가가 반발하여 절반이 사퇴하는 개혁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 나온 1차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여권 내부의 반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와 법무부가 각각 같은 날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 설계가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1차 입법예고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겠습니다.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기존 검찰의 6대 범죄에 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3개가 추가된 것입니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여 놓았던 것을 이번에는 9대 범죄로 오히려 원래보다 늘린 것입니다.

둘째, 중수청의 조직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사법관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며 전문수사관은 1급에서 9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것

은 현행 검찰의 수사 플러스 수사관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기 위해 별도의 수사사법관 직제를 만들고 직급 유지와 승진 연한까지 보장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셋째, 행안부장관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명시되었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놓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 청장과 전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넷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여권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서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이견이 전혀 없다며 수습에 나섰고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개별 의견은 자제해 달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함구령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수청 법안 중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다.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조계의 반응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 법안을 검찰청 시즌 2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검찰을 문재인 정부 이전의 체제로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2개의 조직으로 쪼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사실상 검찰청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이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조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문제다, 검찰이 지내온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동일한 구조로 중수청에 이식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조차 정부안을 비판하는 상황 이것이 1차 입법예고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경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행안부 소속이면 괜찮고 법무부 소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냐,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주변에서 간다는 검사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6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됐다. 9대 범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된다고 우려했으며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도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소관 부처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차 입법예고안은 여당, 야당, 검찰, 경찰, 학계, 자문위원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전방위적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시사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수사사법관 도입 등 조직 구성안이 정치권의 반발과 법조계의 실효성 논의에 부딪혀 동력을 잃은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입법예고를 통해서 법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차 안이 사면초가에 빠지자 정부는 전면 수정에 나섰습니다. 2026년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입법예고안은 1차 안과 두 가지 핵심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청 시즌2라는 비판의 핵심이었던 이원화 구조를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자문위원 6명이 사퇴하면서 요구했던 핵심 수정 조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검찰 출신에게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 유인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수사 범위가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1차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이버범죄 등 일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왜곡죄가 추가됨으로써 최종 범죄 목록은 단순한 축소가 아닌 재구성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재입법예고안은 1차 안의 가장 극렬한 반발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수사 범위의 광범위성, 청장 임명의 행정부 종속성, 인사·징계의 장관 집중, 이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껍데기를 바꿨을 뿐 뼈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교수의 사퇴는 바로 이 재입법예고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소신과 함께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성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문위 수장이 감성적 접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입법예고안의 실패와 재입법예고안의 수정, 자문위 붕괴를 통해서 법안은 마침내 당정청 최종 합의와 행안위 의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다음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정 대표는 이 합의안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독소조항을 삭제했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삭제된 것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었습니다. 즉 검사가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삭제된 것입니다. 이것은 독소의 제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장치의 제거입니다.

최종안에서 삭제된 조항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전국 약 2만 1000여 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금융, 식품, 환경, 노동, 세무 등 전문 수사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이 법률 전문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둘째, 수사개시 통보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중수청법 제45조가 통째로 폐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수사하는지 기소기관이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셋째, 검사의 입건 요구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넷째,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위법한 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직무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검사의 직무 범위가 법률로만 규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법령, 법률 플러스 시행령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법률로 한정하여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를 확대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던 경험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사의 수사기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로 못 박은 것입니다.

중수청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왜곡죄가 수사 대상 범죄에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이 판사의 법적 판단을 수사하는 구조가 법률에 명시된 것입니다. 또한 6대 범죄의 세부 목록이 법률에 직접 열거되는 방식으로 구체화돼 있습니다.

이 최종안의 형성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 그리고 핵심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사경 수사 지휘권 삭제, 수사 중 검사 관여 조항 삭제, 이 결정문이 자문위의 토론이나 전문가의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물을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정청 합의안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반대 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소청법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법안입니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대안, 이 법안의 뿌리를 추적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서 시작하여 2020년 경찰의 1차 수사권이 넘어가고

2022년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2대 범죄로 축소되고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추진단과 자문위원회가 논의하였으나 자문위가 절반이 붕괴하고 1차 입법예고안이 전방위적 비판에 직면하고 재입법예고안으로 수정했으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이고 당정청 최종안에서 모든 사법 통제 장치를 삭제하고 행안위 대안으로 확정된 것이 바로 이 법안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사설은 이 합의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정이 끝내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 검찰을 사실상 식물로 만드는 법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수사권이 비대해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아예 없앤 것이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뭉개더라도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구조에 대해 형사소송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 그래서 범죄 대응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수완박 그리고 검찰청 폐지, 추진단 논의, 입법예고, 자문위 붕괴 그리고 당정청 최종 합의까지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숙의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문위원 16명 중 7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경찰이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법조계가 검찰청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910명 중 7명만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로 삭제되었고 정청래 대표가 19일 처리한다고 말한 대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숙의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 권한 재편과 행안부 비대화 그리고 사법 개편의 위험, 이 패키지 개편의 구조적 위험을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검찰개혁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수청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해체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이 한 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검찰도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한민국 경찰 수사의 독립적 사령탑인 국수본부장에 대해 통제 공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수사사무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를 차단한 것이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독립성 자체를 이상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질문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게 돼 있다. 행안부장관이 할 수 없다는 법은 아니고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 수사에 대해 개별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인데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가 지휘하느냐'. 윤 장관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규정이 없다'.

이 규정이 없다는 세 글자에 이 대통령은 즉각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제처 등에서 국수본부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하게 정리하라'.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처럼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국무회의 대화가 갖는 의미를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통제 공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수본이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설계된 것은 수사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를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프레이밍한 것입니다. 수사 독립이 아니라 통제 공백, 이것이 이 정부의 수사기관관입니다.

둘째, 이 인식이 중수처법 제6조의 장관 지휘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국수본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제6조에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법률신문 칼럼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국수본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행안부 산하기관인데 경찰에는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 준 것, 이것은 중수청이 독립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통제 가능한 기관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대통령의 지시가 실현되면 경찰과 중수청 모두가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시사저널은 이 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청도 행안부 소관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검경 수사권 모두를 정부 지휘하에 놓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찰국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경찰 수사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25년 8월 폐지시켰습니다.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은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통령이 같은 행안부에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법제화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시사저널은 이 모순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국수본에 대한 지휘권을 행안부 등에 둘 경우 경찰의 독립적 수사 보장이라는 국수본 설립 취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소관의 경찰국을 만들었을 당시에도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행안부장관의 국수본 수사지휘권을 법제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경찰 수사의 정

치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발상이자 여당 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수사 외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장관의 경찰 통제와 국수본 지휘권 부여 문제 등은 경찰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국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은 경찰이 이 지시에 즉각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는 아직 지휘권 법제화가 진행 중이지만 중수청에 대해서는 이미 제6조에 장관 지휘권이 확정돼 있습니다. 중수청은 법으로 통제되는 기관입니다. 국수본도 조만간 법적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경찰 수사인력 3만 명과 중수청 수사인력 3000명을 모두 지휘하게 됩니다. 공수처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사실상 모든 수사조직이 한 장관 아래 놓이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 구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리가 수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다는 것이었는데 효과적 통제장치 없이 행안부장관에게 집중된 경찰과 중수청 수사권력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무부장관에게 경찰이 수사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선진국의 입법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의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나라,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구조를 이 정부는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모든 수사권을 한 장관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이 문제였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분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는 하나의 그릇으로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하나의 괴물을 해체해 놓고 행안부라는 더 큰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룡 행안부의 구체적 문제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2026년 1월 12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경찰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논의나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은 외교적 표현이지만 그 이면에는 적극 수용이 어렵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시의 의미를 분석해 보자면 국수본은 2021년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수사사무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를 차단하고 국수본부장을 독립된 수사 사령탑으로 만든 것이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독립적 지위를 통제 공백으로 보고 행안부장관에게 지휘권을 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찰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시가 실현되면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직간접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중수청은 제6조에, 장관이 직접 지휘합니다. 경찰은 지휘권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의 일반수사권은 사실상 경

찰에 집중됩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기관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입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범죄, 절도, 사기, 폭행, 성범죄,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기관은 경찰뿐입니다. 경찰 수사인력 약 3만 명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1차 관문을 독점하게 됩니다.

검찰이 있던 시절에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사건을 뭉개거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이 견제 장치가 모두 사라집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시정조치 요구권도 없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뭉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은 통제 불능의 거대 권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회 통계에 따르면 경찰 수사의 오류를 검찰의 2차적 검토로 연간 6만 3000건을 바로잡아 냈습니다. 이 6만 3000건의 안전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퍼블릭 보도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2026년 1월 20일과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이것은 20년 넘게 지켜 온 불문율의 파괴입니다.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2003년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검찰총장이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준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은 청와대 출입을 최소화하고 국회 출석도 자제하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리적으로 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이 독립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정권 수사와 직결되는 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검경이 과연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의 장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것인지 청와대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경찰 업무는 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사, 다양한 사회의 일상과 관련돼 있다.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알면 치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치안 정보가 필요하면 행안부장관을 통해 전달받으면 됩니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정례적으로 앉는 것은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경찰 조직 재편은 국수본 지휘권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찰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년 3월 17일 경찰 신임 임용식에서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5년 12월 업무보고에서도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치경찰 확대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도 이미 자치경찰기획단이 설치되었고 국가·자치 경찰 사무 배분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된 모델입니다.

수사 분야에서도 현장 수사 부서에 전문수사관 12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경력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 자체는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 조직은 전례 없는 대격변기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수사 관할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중수청 제43조가 바로 그 충돌의 제도화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약 3만 명은 일반 범죄 전반을 수사합니다. 행안부 소속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약 3000명 규모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등을 수사합니다. 행안부 소속입니다. 장관이 지휘·감독합니다. 소방청 역시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는 원래 지방자치·선거관리 지원, 재난·안전을 주관하는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의 수사권과 중수청의 수사권이 모두 올라탔습니다. 한 부처가 대한민국 전체 수사권의 90% 이상을 관할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민변 박용대 부소장은 경찰청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면 권한 집중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권에 따라, 장관 성향에 따라 이상하게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행안부가 비대해지고 통제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가 전부 행안부장관 관할에 있다, 과도한 권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권력기관화된 검찰에 대한 개혁으로 실시하는 이번 법안에 행안부 권력기관화라는 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다수 들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룡 행안부 문제의 본질입니다. 검찰이라는 하나의 거대 수사기관을 해체했지만 그 수사권을 분산시킨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는 더 큰 그릇에 모았습니다. 검찰 권력의 집중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행안부 권력의 집중은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적어도 법무부장관 아래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순수한 행정부처입니다. 정치인 장관이 이끄는 행정부처 아래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수사의 정치적 도구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검찰·경찰·중수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법부 개편, 즉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을 짚은 뒤에 이 모든 개편이 합쳐졌을 때 어떤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패키지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것이 재판소원제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1일 국회 법사위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3월 10일 같은 날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과 함께 공포 후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내린 최종 판결이 헌

재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4심제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라며 반박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국민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만 연간 5만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연간 1만 5000건 이상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치국가의 기둥입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그 결과를 신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원고는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고는 패소 판결을 수용하고 마음을 준비합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이 확정의 의미가 흔들립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불안정해집니다.

기우종 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경고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년간 공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아도 대기업과 법적 분쟁이 생기면 몇 년에 걸쳐 소송에서 이겨도 회사 자산을 다 쓰고 껍데기만 남는다. 그런데 대기업은 재판소원으로 또 분쟁을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자본력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무한정 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헌재가 이 사건 폭증을 감당할 수 있느냐도 핵심 쟁점입니다. 대만은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뒤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8배 폭증했습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엄격한 사전심사제를 두고 접수 사건의 90% 이상을 각하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정안에는 이러한 남소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사저널이 보도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우려가 핵심을 찌릅니다. 법 시행하면 헌재 사건 300~400%가 폭증할 것이다. 헌재가 폭증하는 재판소원 사건을 처리하느라 일반 국민의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고 그사이에 법원의 확정판결도 불안해지며 결국 피해는 가장 약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재판소원이 확정판결을 뒤집는 제도라면 법왜곡죄는 판결을 내린 판사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123조의2로 신설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법왜곡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재량권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법왜곡죄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왜곡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축효과입니다. 판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재판할 때 자신의 판결이 나중에 법왜곡으로 수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식하게 됩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면 감옥에 간다는 공포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법관이 정치적 눈치를 보며 판결하는 나라, 이것이 사법 독립의 종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중수청법과 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수청법(대안) 제2조제1호 사목은 법왜곡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판사를 수사하는 구조,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됩니다. 약 2년 후 시행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대법관 12명을 새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은 대법관 증원은 한정된 사법자원을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급심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대법원 인원을 거의 2배로 늘리면서 하급심 법관은 늘리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접하는 1심·2심의 재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분석을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면 친여 성향 대법관을 구성하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재판소원과 결합하면 더욱 커집니다.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도 헌재에서 뒤집고 대법원 자체의 구성을 바꿔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이중의 안전장치,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사법개혁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는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추진, 특사경 사법 통제 해제. 기소는 공소청 검사의 모든 견제 권한 삭제, 서류만 보고 기소하는 구조, 보완수사권 미부여. 재판은 법왜곡죄로 판사를 위축시키고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을 불안정화시키고 대법관 12명 증원으로 사법부 구성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의 세 기둥 수사·기소·재판이 동시에 하나의 정치적 의제 아래 10개월 사이에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강화가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사법체계의 일방적인 재편입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핵심 고리,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에 두는 장치가 바로 오늘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입니다.

다음은 이 패키지 개편의 구조적 위험을 종합 설명한 뒤 중수청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의장대리 어기구 쉬었다 해요.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서범수 의원 그동안 검찰개혁의 경과, 경찰권한 재편, 사법부 개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쳐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온 개혁의 일관된 명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행안부장관이 지휘하는 중수청과 행안부 소속인 경찰로 갔습니다. 검찰에서 빼앗은 기소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견제 수단이 삭제된 공소청으로 갔습니다. 사법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왜곡죄로 위축되고 재판소원으로 불안정해지고 대법관 증원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견제가 아니라 권력의 재배치입니다. 검찰이라는 한곳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해체한 채 행정부라는 다른 한곳으로 재배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홍준형 교수의 말을 상기하겠습니다. '검찰이라는 괴물을 때려잡기만 하면 된다는 건지, 그다음에는 없다'

과거 검찰개혁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등 사법통제 장치를 남겨 두었습니다. 2022년 검수완박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되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쿠키뉴스가 분석한 대로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개혁이 권한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전면적 개혁을 꺼내 들었다' 보완이 아니라 뒤집기, 수술이 아니라 해체, 이 차이가 가져올 위험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78년간 축적해 온 형사사법시스템의 노하우, 검찰과 경찰 사이의 암묵적인 협력관계, 수사관과 검사 사이의 실무적 신뢰, 법원과 검찰 사이의 제도적 균형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리셋됩니다. 새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수처의 5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출범 5년, 기소 6건, 유죄 확정 1건 이것이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접근의 현실적 결과물입니다.

가장 불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검찰 수사와 기소를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를 경험한 당사자가 수사기관을 해체하고 수사를 통제할 새 기관을 자기 행정부 아래에 만들고 자기 재판을 심리하는 사법부의 구성을 만들고 자기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 일련의 조치가 순수한 공적 개혁인지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인지를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은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일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안전판 설계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이자 사법 권력 독점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를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의도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선한 의도로 만든 법이라 해도 그 법이 만든 구조가 권력 집중과 사법 위축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나쁜 법입니다. 의도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구조는 위험합니다. 이 패키지 개편으로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겠습니까?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 권력자와 피의자가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중수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변호인이 반복 신청하여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뭉개도 기소기관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한 번 더 다툴 기회를 줌으로 자본력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무한정 끌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가 판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과감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수사를 피하고 싶은 권력자에게는 여러 겹의 방패가 생기고 피해를 호소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구제수단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이 경고한 중소기업은 껍데기만 남는데 대기업은 재판소원으로 또 분쟁을 끌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정확하게 이 구조를 지적합니다.

국민은 형사사법체계의 무엇을 기대합니까?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는 것,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재판이 예측 가능하게 끝나는 것, 이 네 가지 기대 중 어느 하나도 이 패키지 개편으로 더 잘 충족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로 수사가 지연됩니다. 검사의 사법 통제가 사라져 위법 수사를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서류만 보고 기소하므로 실체적 진실이 어려워집니다.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립니다. 법왜곡죄로 판사가 위축됩니다. 검사 0.8%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며 인력 마비가 예상됩니다.

언론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수사권이 비대해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아예 없앤 것이다.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뭉개더라도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불안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사법·경찰 개혁 전체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검수완박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까지,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특사경 2만 명에 대한 사법통제 해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행안부장관 아래 놓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의 행정부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공소청법과 결합하면 수사·기소의 단절이 법제화됩니다. 법왜곡죄와 결합하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결합하면 삼권분립 해체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이 패키지의 정점입니다. 이 부품 하나를 통과시키면 나머지 패키지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수청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는 본 필리버스터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수청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가장 첫 번째 조문 제1조 목적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법이든 첫 조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칙까지 하나의 일관된 설계 논리로 관통돼야 합니다. 목적 조항은 그 법의 존재 이유를 규범적으로 선언하는 동시에 이후 모든 조문을 해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1조부터 시작합니다.

제1조는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법의 첫 문장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법 전체의 성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조문이 현행 검찰청법 제1조와 거의 동일한가? 현행 검찰청법 제1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중수청법 제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검찰청법 제1조는 검찰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돼 있습니다.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이라는 수식어구를 앞에 하나 더 붙인 것이 전부입니다.

행안위 전문위원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유사하게 조직, 직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현행 검찰청법 제1조가 있음을

적시하면서 정부안 제1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에 관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인사가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설립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관 설치법의 목적 조항은 단순한 서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기관의 정체성 규정 기능입니다. 이 기관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확인합니다. 둘째는 법 해석 준거 기능입니다. 이후 모든 조문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 때 법원과 행정기관은 목적 조항에 비추어 목적론적 해석을 합니다. 셋째, 통제의 기준 기능입니다. 이 기관이 목적 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가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때 그것이 위법하거나 월권이 된다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할 때 목적 조항에 무엇이 쓰여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느냐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기관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작동하는지를 규범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 조항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안의 제안이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민의 권익 보호, 인권 보호 향상, 이 세 가지가 이 법의 설립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1조(목적) 조항 본문에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민의 권익 보호, 인권 보호 향상,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뿐입니다. 수사의 독립성도 국민의 권익 보호도 인권 보호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의 독립성이 법문에 새겨 넣기에는 실제 법 설계와 너무 충돌하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목적 조항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생각, 즉 구체적 가치보다 규율 범위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려면 이후 조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이 검찰청법 제1조를 그대로 모방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찰청법은 1949년 9월 26일 제정 이래 77년의 역사를 가진 법률입니다. 수십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조문이 다듬어지고 판례와 학설이 쌓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확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 제1조는 검찰청이라는 기관의 법적 정체성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준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검찰청법의 목적 조항이 수사의 독립성이나 인권 보호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검찰청법 안의 다른 조항들이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사의 직무 독립을, 제37조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제38조는 사실

상 파면 불가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퇴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신분 보장이 검찰청법 목적 조항의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 중수청법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31조는 '수사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언뜻 보면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란 무엇입니까? 제28조의 적격심사 규정에 따르면 수사관 중 3급 이상의 자로서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2년 이상 또는 같은 계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 하위 등급으로 3년 이상 평정받은 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요? 이것은 제37조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에 수사 사건 처리 결과, 수사절차상 위법·과오 여부를 포함합니다. 즉 수사 결과가 평정에 들어가고 그 평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나면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행안부장관이 평정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수사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나쁜 수사관을 내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수사관이 검사와 달리 사법경찰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며 법적인 객관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수사 결과가 근무평정에 반영되어 사실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법의 신분 보장 구조와 비교하면 이 법이 얼마나 다른 설계인지 분명해집니다.

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08도11999 판결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하였다'.

준사법기관, 철저한 신분보장,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객관의무, 이 세 가지가 검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수청 수사관은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검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지위입니다. 신분보장은 일반 공무원 수준입니다. 객관의무는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의 목적 조항을 형식적으로 모방했지만 그 목적 조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던 조문들은 모두 배제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결정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검찰 제도를 지지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를 검사가 그러한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준사법기관의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그것도 매우 광범위한 중대범죄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그 수사 권한의 행사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신분보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한과 보호의 비대칭입니다. 수사관에게는 막대한 권한을 그리고 그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는 최소한만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채로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중수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는 바로 행안부장관입니다.

저는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 법의 제안이유서에는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조문은 그와 정반대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 법의 진정한 내용입니까? 당연히 법조문입니다. 제안이유서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설명 자료이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실제 법적 효력은 조문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그 조문들이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6조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제18조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자는 행안부장관입니다. 제23조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행안부에 설치하고 징계처분 주체는 행안부장관입니다. 제32조 인사위원회는 행안부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지명합니다. 제33조 적격심사위원회 6인 중 장관 영향권 위원이 3명입니다. 제37조 근무성적평정 기준은 행안부장관이 합니다.

이 6개 조항을 나열해 보면 과연 무엇이 보입니까? 중수청 수사관의 채용·인사·징계·평정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 수사까지 행안부장관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학에서 조직의 독립성은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 즉 인사·예산·업무 방향에 대한 외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이 법에서는 중수청에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이 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합니다. '행안부가 비대해지고 통제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요약합니다. 제안이유가 말하는 독립성과 실제 조문이 만들어 내는 종속성 사이의 간극, 이 법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균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 조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조 목적 조항은 짧지만 그 짧음 속에 이 법의 설계 논리 전체가 응축돼 있습니다.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이 법이 중수청이라는 기관의 행정적 골격을 만드는 데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 조항에 없는 것들을 다시 나열해 보겠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이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가 없습니다. 행정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없습니다. 사법통제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법이 지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안이유서의 아름다운 언어와 법조문의 냉혹한 설계 사이에 메워지기 어려운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이 이 법의 출발점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균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법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이 아니라 수사 권력을 행정부에 집중시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조(목적) 조항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중수청법 제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의 표제는 권한남용 금지입니다. 수사기관의 일탈을 막겠다는 선의가 담긴 조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조문을 꼼꼼히 읽고 그다음 조문인 제6조와 나란히 놓아 보면 이 조항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언이 얼마나 공허한지 즉각 드러난다고 봅니다.

제5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 직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장만 보면 흠잡을 데 없습니다. 헌법을 언급하고 기본적 인권을 내세우며 공정과 중립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선언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장치가 이 법안 어디에 존재하는가? 인권을 보호하겠다는데 수사기관이 인권을 침범했을 때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교정하는 독립적 통제 구조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5조의 선언을 법적으로 담보할 독립적 장치는 이 법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5조는 마치 건물의 현관에 새긴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와 같습니다. 구호는 새겨져 있지만 건물 내부에 비상구도 없고 소화기도 없고 안전점검관도 없는 격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합니다.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의 영장을 요구합니다.

이 조항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사되지 못하도록 사법적 통제를 헌법 수준에서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은 이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습니까? 제5조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바로 그다음 6조에서 행안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에서 그 수사기관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

습니까? 헌재가 선언한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이 법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근본적인 의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6년 3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열린 중수청법 입법공청회에서 이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논의됐습니다. 전홍규 변호사는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전홍규 변호사가 이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전문가였다는 점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참석한 전문가조차 장관 지휘권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청회 이후 언론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공청회 논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단서조항의 법적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도 같은 공청회에서 수사 범위에, 대통령 일임으로 인해 제도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공청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부장관의 인사권이나 징계·부적격심사 등을 통해 수사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사 독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도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제5조(권한남용 금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직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중립, 권한남용 금지 세 가지 가치를 담은 조문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법률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입법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공정·중립 선언이 헌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그 법률이 실제로 중립성을 보장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수사관에 대한 정치운동 제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수청법 제42조도 재직 중 정치 관여를 금지합니다. 이처럼 재직 중 금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임용 전 정치 경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임명권자인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이 구조에서 금지 조항이 과연 실질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공정·중립이 실현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반복적으

로 제기되는 논점은 역시 인사 독립입니다. 수사관의 임용, 승진, 징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수사관은 직업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단을 굽힐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중수청법의 인사 구조를 보겠습니다.

제18조에 따르면 5급 이상의 수사관은 청장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의 경로를 거칩니다. 6급 이하는 장관이 직접 임용합니다.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상의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6급 이하는 행안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제37조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마련하고 그 결과가 승진과 전보에 반영됩니다. 임용, 징계, 평정의 모든 단계에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작동합니다. 이 구조에서 수사관이 장관의 의중에 반하는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제18조에서 제37조까지 인사규정을 종합해 보면 임용, 승진, 평정, 징계의 모든 단계에서 행안부장관의 영향력이 작동합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은 수사처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이 확인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통령 등 행정부의 구체적 지휘·감독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의 인사 구조는 이와 명백하게 다릅니다. 인사 독립이 없습니다.

제26조, 제28조의 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찰관 임명은 인사위원회 추천 3인 중 장관이 청장 의견을 들어 제청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행안부장관이 지명하고 행안부 추천위원 2명이 포함됩니다. 피감찰기관의 소속 상급부처 장관이 지명추천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독립감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행안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이 구조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독립감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수청 법안은 인사 독립도 외부 독립감찰도 지휘 차단도 없습니다.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야당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이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6조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 최대의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5조가 이 법의 외관이라면 제6조는 이 법안의 실제 작동 구조입니다. 제5조에서 어떤 선언을 해도 제6조가 그것을 현실에서 결정하는 권력 구조를 규정합니다.

제6조 법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른 범위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행정법에서 지휘·감독 관계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행위에 명령·지시를 내리고 그 이행을 확인·통제하는 법적 권한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그 범위가 특히 광범위합니다. 조직운영방침, 인사관리, 예산집행, 업무처리기준, 교육훈련, 수사기관 전반에 관한 장관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일반적인 지휘와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두 가지는 명백하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수사정책 지침은 일반적 지침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어떤 사건에 수사관 몇 명이 배치되는지를 직접 결정합니다. 특정 수사관을 전보·파견하는 인사결정은 일반적인 지휘에 해당하지만 핵심 수사관을 교체하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동력이 소멸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경찰법 제14조제6항은 일반적·구체적 구분 대신 행안부장관이 국수본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차단조항을 두었습니다. 일반적 지휘를 허용하되 구체적 사건은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법은 일반적 지휘를 허용하고 구체적 사건도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 놓았습니다.

6조 단서조항을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단서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 대상을 중수청장만으로 한정합니다. 장관이 일선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문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관은 청장만을 통해 개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차단조항이 아닙니다. 지휘 경로를 청장으로 단일화한 것입니다. 경찰법 제14조제6항에 지휘·감독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금지를 둔 것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권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단서조항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청장만을 지휘한다고 명시한 것은 그 범위에서 장관의 지휘권이 법령상 근거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한인 동시에 수권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이 청장에게 특정 사건 수사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청장은 이를 담당 수사팀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서조항에 의해 전혀 차단되지 않습니다. 청장만을 지휘한다는 것이 청장을 통한 지휘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법 해석의 기초입니다. 장관, 청장, 수사팀으로 이어지는 명령체계는 이 단서에 의해서 완전히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내사 단계는 구체적인 사건인가 아닌가, 특정 유형 범죄에 대한 수사 방침·지침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 이 경계의 불명확성은 장관 측에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장관은 자신의 지시가 일반적인 지휘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광범위한 해석지들을 갖게 되고 그 주장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가 설정하려는 일반적 지휘와 구체적 사건 지휘의 경계가 현실에서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운영은 개별 사건들의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올해는 경제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정책지침은 일반적 지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특정 기업 비리나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자원 배분을 직접 결정합니다. 이번 분기에 마약 수사 실적을 강화하라는 업무 지시도 일반적 지휘처럼 보이지만 특정 지역, 특정 조직에 대한 수사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반과 구체의 경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8조에 따른 임용권, 제23조에 따른 징계권, 제37조에 따른 평정권 이것들은 모두 일반적 지휘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 지휘를 통해 특정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을 전보하라는 명시적 지시 없이도 특정 사건의 수사 동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정 사건 담당 수사팀장을 낮은 평정을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해당 수사팀에 대한 예산·인력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관이 이것은 일반적 지휘라고 주장하고 청장이나 수사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그 분쟁을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 이 법안에는 없습니다.

법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실시간 분쟁 해결이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위계상 상급자인 장관의 판단이 사실상 우선합니다. 일반적·구체적 구분이 실효적 제한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제6조의 위험성은 추상적 수준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 가장 중요한 증언은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직접 한 발언에서 나옵니다.

경향신문 2025년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신문 2025년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발언은 중수청법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직접 한 것입니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법안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현직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입니다. 역대 행안부장관의 이력을 보면 정치인 출신 비율이 많습니다. 행안부가 선거 관련 행정, 지방자치단체 감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장관이 중수청의 수사를 지휘·감독한다면 정치적 고려와 수사 방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특정 정권을 위해 만들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구조는 이후 모든 정권이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집권 세력이 선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같은 장관 지휘권 구조를 활용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중수청이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룡 행안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행안부장관 아래 어떤 조직이 집결되겠습니까? 첫째,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경찰관 약 13만 명, 수사인력 약 3만 명, 전국 259개 경찰서. 둘째, 중대범죄수사청 설계 규모 약 3000명, 전국 지방수사청 네트워크. 셋째, 소방관. 소방관 약 6만 5000명으로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현장 집행력과 정보 수집 능력, 이 세 기관이 모두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수사권과 집행력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가 하나의 부처에 집중됩니다. 이것이 우리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수사기관 관할 이외에도 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 선거 관련 행정 지원 기능, 재난 안전 관리, 공무원 인사 총괄, 국가정보와 사업 관리, 이 권한들과 수사권의 결합은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지자체 감독권과 수사권이 같은 부처에 있을 때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형성됩니다.

이 우려는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뉴시스 2025년 7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수사기관이 집중과 결합될 때 행안부의 권한 범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선거 관련 행정과 수사기관의 집중이 결합될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권과 함께 같은 부처 산하에 중수청이 있다면 특정 지자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수사 강도, 수사 시기가 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적 접근이 형성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조항을 통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선거 관련 행정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선거 관련 수사와 선거행정이 같은 부처 산하에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선거관리 범죄의 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이며 그 수사기관이 선거행정 부처의 장관 지휘를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그동안 중수청법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조문별로 살펴본 문제들을 하나의 구조적 그림으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문제를 열한 가지로 정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대한민국 형사사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지 아니면 위험한 권력 재편인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 제1조와 제6조의 충돌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서는 수사의 독립성,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법안의 핵심 가치로 제시합니다. 제1조(목적)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및 인사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제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제5조(권한남용 금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조문인 제6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 단서의 의미를 풀어 보면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방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분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선언과 행안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부여하는 설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모순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8조(임명자격), 제9조(후보추천위원회), 제19조(결격사유)가 만드는 구조를 보면 정치경력자가 중수청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8조는 중수청장의 임명자격을 규정합니다. 15년 이상의 수사·법률사무 경력,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경력 합산도 가능합니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활동 이력, 선거 출마 이력, 정치자금 기부 이력, 특정 정파와의 밀접한 관계 이러한 정치적 이력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공수처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5조제2항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격을 두면서 제6조에는 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공수처법의 중립성 보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중립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향조차 없습니다.

제8조제1호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사무라는 요건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정당의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경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 합산이 가능하므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력의 소유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제9조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행안부장관이 지명합니다. 9인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행안부차관, 법무부차관이 당연직입니다. 위촉 3명은 행안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이 구조에서 정부 측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의석은 5석입니다, 행안부차관, 법무부차관, 위촉 3명.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

니다. 정부 측 5명이 반대하면 어떤 후보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입니다.

송영훈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이 구조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중 한 명만 친정부 내지는 친여 성향이면 쉽게 정권의 의중에 맞는 인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지적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도의 수학적 구조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19조는 결격사유를 열거합니다. 공무원법 제33조의 일반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선고자, 탄핵·파면 후 5년 미경과자 그리고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전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라도,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라도 법률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42조 정치 관여 금지는 재직 중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재직 중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의 정치관여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임용 전 정치경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다가 중수청장이 된 뒤 형식적으로 탈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재직 중 정치 금지의 취지를 임용 전에서부터 무력화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조항을 연결하면 하나의 사슬이 완성됩니다. 느슨한 임명자격은 정치 편향적 인물의 진입을 허용합니다. 행안부가 쥔 추천 과정은 그 편향 인물을 걸러 내지 못합니다. 정치경력 결격 부재는 최종 방화벽마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슬의 끝에서 장관 지휘를 받는 청장을 장관 영향권에서 추천하는 자기순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이 법안의 인사·징계·감찰·평정체계는 하나의 통제 사슬로 연결돼 있으며 그 사슬의 정점에 행안부장관이 있습니다.

제18조는 임용권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5급 이상은 청장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입니다. 6급 이하는 장관이 직접 임명합니다. 중수청 수사관의 인사권이 행안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3조는 징계권을 정합니다. 청장과 5급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6급 이하는 행안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파면과 해임의 처분 주체는 임용권자, 즉 대통령 또는 행안부장관입니다.

제33조의 인사위원회 7명 중 행안부 추천 2명과 행안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이 포함됩니다.

제34조의 적격심사위원회 6명 중에서도 장관 위촉 1명과 장관 지명 수사관 2명이 포함되어 장관 영향권이 3명에 이릅니다. 부적격 결정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 즉 4명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에서 장관 측 3명이 반대하면 부적격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적격심사가 신분 보호가 아니라 장관의 거부권 행사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37조가 가장 교묘한 통제 도구입니다. 이 조항은 평정기준을 행안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합니다. 수사 사건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 위법·과오 여부를 평정에 포함하고 그 평정 결과를 전보와 승진에 반영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현실에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장관이 선호하지 않는 수사를 진행하면 평정이 낮아지고 평정이 낮아지면 승진이 늦어지고 전보가 불리합니다. 직접적인

수사 지시가 없더라도 인사 평가체계 자체가 수사 방향을 유도하는 간접 통제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이 이 메커니즘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 인사 통제의 경로도 훨씬 정교합니다. 각각의 제도가 독립적인 역기능이 아니라 임용·승진·징계·감찰·적격심사·평정 등으로 이어지는 통제 사슬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사관의 독립적 판단이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인사 종속 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제43조는 수사기관 간 관계를 규정하면서 관할 충돌과 수사 핑퐁의 가능성을 법률 안에 내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43조제3항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수처만 예외입니다.

제43조제3항은 반대 방향의 이첩도 가능하게 합니다.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이첩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수청이 가져갈 수 있고 중수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는 이 구조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는 것은 막대한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수사 핑퐁과 지연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 수사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관할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관할 충돌은 관료 조직의 내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사이 수사는 지연이 됩니다. 증거가 산일되고 관계인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피해자는 무기한 기다려야 합니다. 수사의 신속성은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이지만 이 법안은 그 원칙을 제도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제44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라는 명목 아래 수사 지연과 수사 흔들기의 통로가 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저하게 갖추지 못한’이라는 기준은 극히 모호합니다.

사건관계인의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피의자는 물론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조사자·진정인·피진정인 그리고 이들의 변호인과 대리인까지 포함됩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까지 심의 대상입니다.

이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피의자 측이 반복적으로 수사 심의를 신청합니다. 수사팀은 심의 절차에 대응하느라 실질적인 수사가 지연이 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인 위원의 판단은 회의마다 편차가 크고 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수사 책임의 소재가 흐려지고 수사 지휘체계가 교란됩니다.

제44조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열거합니다. 신청사건 심의뿐 아니라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청장·지방청장·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이 사건심의기구인지 수사정책결정기구인지 불명확합니다. 외부 통제라는 이름 아래 수사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위촉권자가 중수청장과 지방청장이고 위원장도 청장이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기관장이 위촉하고 선출하면 외부 통제가 내부 정당화로 전환됩니다.

핵심 사건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수사 독립을 강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수사를 흔들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이 법안에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수청에 부여되는 물리적 강제력과 정보수집 권한은 막강한 반면 그 권한의 행사를 통제하는 장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45조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삼단봉, 방탄복 등 수사장비의 사용을 법정합니다. 제46조는 유치장 설치 권한과 경찰관서·교정시설 사용 협조 요청권을 부여합니다. 제48조는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자료교환과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49조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까지 허용합니다.

이 모든 권한이 행안부장관 산하의 단일 수사기관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권한에 비례하는 외부 통제장치는 무엇입니까? 감찰관 제도는 있지만 감찰관의 임명에도 장관이 제청 절차에 관여합니다.

독립적 외부 감시기구는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감찰관법이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감찰관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법안의 내부감찰 구조는 자기감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확대되고 통제는 축소되는 비대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칙의 임용 특례는 이 법안이 선언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법안 스스로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가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 전체의 0.8%에 불과합니다.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전체 5737명 중에서도 중수청 희망자는 6.1%인 352명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중수청의 핵심인력이 되어야 할 검찰수사 경험자들이 중수청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출범 즉시 심각한 인력 공백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래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인력 문제입니다. 소규모로 출발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고, 출범 초기 구속과 기소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동운 처장 스스로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이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제19조제4호는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그런데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해 이 규정은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수청이 2025년 10

월 2일 출범하므로 출범 후 최초 2년간은 공소청 검사 퇴직자가 바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 본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양 기관 사이의 인적 차단을 설계하면서 부칙은 2년간 그 차단을 해제합니다. 법안의 선언과 부칙의 운영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중수청법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고 공소청법과 결합하여 작동합니다. 그 결합의 결과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소멸입니다. 네 가지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첫째, 수사개시 통보 조항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기소기관이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입건요구권 삭제입니다. 검사가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셋째, 수사중지명령권과 직무배제요구권,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제동장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넷째,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사협력 조항 자체가 통째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수사개시 통보가 없어지면 수사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정부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인사가 정부 법안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하고 사퇴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24조는 수사관의 공소청 파견·겸임을 금지합니다. 제25조는 수사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제한합니다. 인적 교류까지 법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견제도 없고 협력도 없고 소통도 없는 완전한 단절 구조입니다.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의 실체를 파악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완전히 폐지한 것입니다. 현재 약 2만 1000명의 특사경이 식품, 환경, 노동, 금융, 위생 등 전문 분야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이 경력 1년 미만의 순환보직 공무원입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 본 적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특사경 실무자의 99%가 수사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조차 특사경은 순환근무로 평균 근무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며 누군가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삭제되었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는 이 삭제의 결과를 세 가지 위험으로 정리했습니다. 위법수사, 부실수

사, 선별수사입니다.

검사의 지휘 없이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경우 형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수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증거 수집·보전이 불완전한 부실 수사가 상례화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소속 장관의 의향에 따라 특정 사건만 골라 하는 선별 수사도 우려됩니다. 정 변호사는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백 건씩 공소시효를 넘겨 방치해도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2만 1000명의 특사경에게 사법통제 없는 독자 수사권을 부여한 결과입니다.

열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검사 910명 중 7명만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는 설문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의 설계 규모는 약 3000명입니다. 이 조직이 내란, 사기·공갈, 배임·횡령, 자본시장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이끌어야 할 검사 출신 경험자들이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 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 63.5%, 근무 연속성 유지 49.6%.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의 신분과 직급을 잃고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차진아 교수가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 신분이 갖는 차이를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공수처는 100여 명으로 출발했고 인원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 수사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3000명 규모의 중수청이 같은 문제를 겪으면 그 파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사건들은 국가 경제 질서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입니다. 이 법안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법 제123조의2에서 정한 범죄를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는 법왜곡죄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령 적용 요건을 위반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수사를 행안부장관 소속의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그 구조적 의미를 풀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임하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핵심 구성원인 법관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수사기관을 통해 사법부에 직접 투사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에 의해 열리는 것입니다. 공소청 검사도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므로 기소기관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기소기관과 재판기관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안의 핵심 문제 열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장관 지휘권이 유지되는 한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것입니다. 야당 인사를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여당 인사를 수사하지 않으면 봐주기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

은 어느 한 정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제도가 만들어 내는 구조적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정권이 바뀌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정권이 정치 수사를 주장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진영이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 패턴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의 삼성 수사를 둘러싼 논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싼 논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둘러싼 논란, 이 모든 논란의 공통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존재 가능성이었습니다.

정치 수사 논란이 상시화되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이 됩니다. 유죄 판결이 나와도 정치적 수사의 결과라는 의심이 남고 무죄 판결이 나와도 정치적 봐주기라는 의심이 남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결론에 대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상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쾌한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핵심 기능인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정치 수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어 왔다는 비판, 살아 있는 권력에는 수사의 칼날이무디다는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수사권을 다른 정치 권력 아래 두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대한 정치 수사 의혹이 중수청에 대한 정치 수사 의혹으로 형태만 바뀌어 재생산되는 것은 해결이 아니고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징계·평정이 행안부장관 체계 아래 통합되어 있는 한 수사관의 독립적 판단은 구조적으로 위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자신의 승진과 전보가 장관 영향권에 놓여 있음을 압니다. 제37조가 수사 사건 처리 결과를 평정에 반영하도록 설계한 이상 수사관은 자신의 수사 결정이 인사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그 구조 자체가 자기 검열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용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수사관이라도 시스템이 그 용기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결국 시스템이 이깁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를 구조적 유인 왜곡이라고 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공식 목표인 공정 수사를 따르는 것보다 비공식 유인인 인사상 이익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수청법의 인사·징계·평정 체계는 이 왜곡을 제도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들의 기피와 이탈 현상은 이 메커니즘의 현실성을 증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조직 내에서 고립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 이미 관찰되었습니다. 100여 명 규모의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3000명 규모의 중수청에서 같은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수본, 공소청의 관할이 겹쳐지는 영역에서 사건의 이첩과 반려가 반복될 것입니다. 제43조가 양방향 이첩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보다 기관 간 경쟁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현장의 일선 기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3개 수사기관의 관할이 교차하는 사건이 더욱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범죄처럼 여러 범죄 유형이 복합된 사건에서 관할 다툼이 첨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횡령은 중수청 관할이고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경찰 관할이며 그 단체장이 전직 고위공직자라면 공수처 관할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누구의 사건인가라는 다툼이 수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발생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큰 사건은 중수청, 남은 사건은 경찰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은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현장의 합리적인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충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수사는 지연이 됩니다. 증거가 산일되고 관계인의 기억은 희미해지며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상황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중수청에 고소했는데 경찰로 이첩되고 다시 중수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6개월이 지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부연 반복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수사권력이 행안부장관 아래에 집중이 됩니다. 경찰 수사인력 약 3만 명과 중수청 수사관 약 3000명이 한 부처 장관의 지휘체계 안에 놓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장치는 모두 삭제됩니다. 2만 100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법률 전문가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흔들기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법관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중수청장을 장관 영향권에서 추천하고 인사·징계·평정을 장관 체계로 통합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던 검찰개혁입니까? 여러분이 바란 것은 수사권력의 독립과 공정이었지 수사권력의 정치화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란 것은 국민의 인권이 더 잘 보호되는 형사사법이었지 사법통제가 사라지는 형사사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란 것은 수사기관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수사기관이 다른 정치권력 아래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검찰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 분노를 배신하는 것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우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 분노를 이용하여 또 다른 권력 집중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더 나은 선택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네 시간 동안 이 법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1조부터 부칙까지 51개 본칙 조문과 8개 부칙 조항을 살폈습니다. 공청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사례를 확인하고 공수처의 선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력을 행안부장관이라는 다른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권력 재편입니다. 독립을 선언하면서 통제를 설계하는 이중적 법안입니다. 견제장치를 전면 삭제한 채 국민의 인권을 수사기관의 선의에 맡기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첫째,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명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둘째 인사·징계·평정 체계를 행안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넷째 특사경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섯째 법왜곡죄 수사를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여섯째 국회 인사청문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 여섯 가지 방향은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진정한 개혁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면 검찰의 문제를 재생산하지 않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법안은 그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또 다른 권력 집중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 되려면 수사기관이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검찰로부터도 행안부로부터도 청와대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자유로운 수사기관, 그것이 법의 지배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또 다른 권력 집중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 되려면 수사기관이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검찰로부터도 행안부로부터도 청와대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자유로운 수사기관, 그것이 법의 지배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서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덕흠)

(07시43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기 사무총장님, 행안부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절임배추 지역의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된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의 재난과 국민안전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로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검찰 시스템 개편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또다시 다수당의 표결로 처리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착잡합니다. 터무니없는 악법들에 대해 계속해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작은 돌멩이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토론이 지난달 사법파괴 3법에 맞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가 되면 강제 종결되고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저를 착잡하게 만듭니다.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 그 법률의 제안 이유와 목적을 읽어 보십시오. 그 이유와 목적은 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악이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로 인해 소송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아비규환이 연상됩니다. 아비규환은 불교의 지옥인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에서 겪는 고통의 참상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대한민국 실질적 10심제, 사법 루프 다이어그램이라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경찰의 수사에 따라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하여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 법왜곡죄의 재판이 1심, 2심, 3심, 4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 검사가 무혐의 또는 기소를 내리면 그 검사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또 별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1심, 2심, 3심, 4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무죄 또는 유죄판결을 내리면 그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또한 1심, 2심, 3심, 4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마저도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법왜곡죄로 고소되어 또 별도 수사와 재판의 굴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왜곡죄로 인한 별도 수사나 기소, 재판을 한 주체에 대하여 다시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소송 지옥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체제 같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열어 놓은 소송 지옥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고통이 연상됩니다. 이

는 마치 불교에서의 지옥인 아비규환을 떠올리게 하고 이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미 이 해괴한 법은 사법 불복의 창구로 변질되어 사법체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이제 일주일이 조금 넘었지만 고발당한 인물만 30여 명에 달해 벌써부터 사법 불복의 창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드는 법안은 그 이유와 목적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번 국민투표법 처리를 시도할 때도 명백한 위헌 조항인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처벌 조항을 회의 상정 직전 슬그머니 빼고는 공직선거법에 추가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중수청 설치법안에서 검사 수사의 지휘·통제 조항을 통째로 빼고 중수청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를 슬그머니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법왜곡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수청이 수사해야 합니까? 어느 수사기관이 먼저 법왜곡죄를 수사할지 규정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안을 서로 떠넘기게 될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만든 법안인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법안의 어느 부분에 국민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까? 기존에 통과시킨 악법 3법과 결합하여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아비규환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만에 하나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국민을 위하는 이로운 법이라면, 국가의 범죄 수사를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역에 대한 법 개정이라면 토론과 숙의를 거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마치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만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특별히 검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검찰을 존치하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없어지면 누가 이익을 얻겠습니까? 바로 범죄자들입니다. 부작용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선량한 일반 국민들입니다.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상현 교수의 논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계에 관한 고려사항'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중상해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DNA 재감정 등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거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12년보다 중한 징역 20년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살인으로 주범 2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주범의 살인 고의를 명백히 밝혀냈고 공범 4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외에도 보완수사를 통하여 사안을 명확하게 규명한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그 예시를 모두 읊자면 무제한토론의 모든 내용을 그걸로 채워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완수사가 금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사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와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서라는 것은 애매하고 두루뭉술하게 진술된 것도 마치 명확하게 진술된 것처럼 기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류만으로 판단할 때 오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인권침해는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의 삶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십수년 전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법관 앞에서 이루어진 심리 결과를 토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구속 전 심문 제도를 활용하여 영장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에 있어서조차도 심문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만 심사를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판 가능성의 위험을 인식하고 판사의 대면 심리를 통해서 이를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형사변호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제한 기록만을 보고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이는 형사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최소한 의뢰인을 직접 대면해서 면담을 하고 기록을 토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구두로 진술하는 사실관계를 일일이 맞춰 가며 그 간극을 확인하며 법원에 신청할 만한 유리한 증인을 찾아 면담하는 등의 업무는 형사변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사가 생동감 있는 직접 심리를 통해 심증을 형성하여 판결과 결정을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담 등 사실관계의 직접 파악을 통하여 변론의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 반해 왜 유독 검사에 대해서만은 귀를 막고 눈만 열어 주어 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겁니까?

특히나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므로 정리된 자료가 발언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발언을 정리한 서류의 뉘앙스는 이를 작성하는 사람의 의도를 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작성자가 악의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판단자를 기만하려 할 가능성마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설사 수사기관이 그와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애매하고 두루뭉술하게 진술되었음에도 마치 명확하게 진술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당사자도 열람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조서화되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조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는 오판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서 이외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의 경우 부당한 예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 초기에는 증거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직접심리를 모두 마친 후에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에 한해서만 제출받아서 자신이 직접심리를 통해 형성한 1차적인 심증을 토대로 증거능력 있는 수사기관 생성 증거를 대조·검토 하면서 최종적인 심증을 다지게 됩니다.

검사의 경우 변화된 제도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형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국 수사에서 상당 부분 물러나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됨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이 박탈된다면 아무런 직접심리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단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경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록에만 의존한 채 심증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어느 대법원장도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을 향해 수사기관의 조서와 수사기록은 던져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

까? 이는 본인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바를 통해서 판단하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최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하향 조정된 것도 이런 고려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한 모순입니다.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이전처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조서에 의존하여 당사자들의 변명과 진술 내용을 이해한 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것과 모순되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없이 서류만 심사하게 되면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있어 오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조제된 기록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물로서의 오판이므로 당연히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단순히 수사권의 부여 또는 미부여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검사에게 공소제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단연 상식적인 것입니다.

기존의 수사체계는 검경 관계에 관하여 이미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과 사법 통제를 위하여 대륙법계의 검사 수사지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인식하에 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됨으로써 확립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 요구는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이미 수십 년 전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 끝에 실패했던 제도이고 현재 운용 중인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도 같은 문제가 여실히 노정된 바가 있으므로 중수청을 신설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유일한 보완수사 수단으로 남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앞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시 조사하는 등 앞선 수사 내용의 결과물에 따라 후속 수사의 방향과 방법은 끊임없이 수정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앞선 과정을 수사 중인 수사 주체로서는 뒤따를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로써 보완수사를 갈음한다는 주장이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게 이행될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보완수사 요구가 수십 차례 될 수도 있음은 수사라는 작업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자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차적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받아 본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를 하였고 첫 번째로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실시한 결과 자세한 내용은 참고인 갑이 안다는 진술을 확보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를 토대로 참고인 갑을 조사하자 피의자의 범행 관여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나 증거물이 은닉된 곳은 자신도 모르고 참고인 을이 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인 을을 조사해 봤더니 자신이 증거물을 모처에 은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모처를 압수수색하여서 해당 증거물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증거물의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해소할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다시 피의자를 조사하여 사안을 규명하였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대상자의 조사에 이들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집행 및 압수물 분석에 길게 잡아 열흘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러한 수사는 통상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입니다.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철폐되어 이러한 사안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한다고 가정하면 전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는 후 단계의 수사 진행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완수사를 단계적으로 1차적 수사기관에 요구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다섯 번의 보완수사를 거쳐야 하며 이 정도 규모와 내용의 보완수사가 공소청과 1차적 수사기관을 오가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째서 2주면 끝나는 일을 몇 년간 질질 끌어야만 하는 이러한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나마 계산을 해 보자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에 3개월이 초과되는 경우가 2022년 기준 45.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완수사기간을 수사준칙상 이행기간인 3개월로 삼는다고 할 때 위 보완수사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1건당 3개월, 총 5건으로 1년 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강제수사로서 품이 많이 드는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발부·집행과 압수물 분석에는 3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높으며 각 단계별 이행통보를 수령한 검사가 이를 검토하고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대략 2년 이상의 수사기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1차적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과 검사도 인사이동 등으로 수사 도중에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또 각각 최소한 2~3개월의 추가적인 수사 지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활용하여 2~3주면 마칠 수 있는 보완수사의 완료에 2년 6개월이 넘는 그런 초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기존에 검경 간 발생한 것일 뿐이며 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중수청과 공소청을 도입한다면 갑자기 1차적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이행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긍정적인 사정 변경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시로도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이나 부작용 방지책도 민주당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사법체계를 붕괴시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맹목적 질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2022년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서 보완수사요구권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시각이 그러한 이상, 앞으로도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가 성실하게 이행되리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보완수사 지연과 해태의 문제는 일선 경찰에 비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수사 경쟁과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른바 실적이라는 사건을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수청의 보완수사 이행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중요 인지사건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며 그렇게 되면 중대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시에 2~3주면 마칠 만한 규모의 보완수사도 만약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일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인지 중수청인지를 불문하고 보완수사가 완료되는 데에 수년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일차적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그러한 보완수사가 전부 이행되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검사는 사실상 보완수사요구를 포기하고 송치된 내용만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오판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하게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 전가로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둘러싼 난맥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우려를 봅니다.

해당 견해는 어떠한 송치사건 수사에서 파생되는 수사 단서를 빌미로 기존과 같이 주요 사건의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전제한 것입니다.

사건 동일성 개념을 강화함으로써 송치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에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송치한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검사 단계에서 범죄 단서가 확인된 것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수사 단서 확인 및 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었던 범죄의 단서가 암장되게 되고 또 택하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진지

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하여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방적 지휘·감독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을 사실상 정권 영향권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정치검찰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검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 견제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보십시오. 결국은 민주당도 그때 가서 '아, 우리가 그때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도, 중수청의 인사도, 정치인이면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부임되는 행안부장관의 영향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 예속 수사기관입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를 조금 손봤을 뿐입니다. 중수청 수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수사 체계의 혼선, 견제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처리를 중단을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후대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이 대폭 약화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는데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결국은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좌지우지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검찰을 없앤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국민 여러분, 맞는 것입니까?

이제는 과거 검찰 시절보다도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중수청법, 이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상정된 위원회 대안의 제안 이유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미사여구 아닙니까?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민의 권익

과 인권 보호 향상 도모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한다고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하면 이 법안이 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통제하면 결국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덮어 버리는 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을 독립성 확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권한 남용을 해도 통제할 사법적 장치를 다 떼어 내 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수사받는 시민들의 인권 도대체 누가 지켜 주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백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지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안의 도입 여부와 제안이유만 봐도 이 법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명성, 그런 경쟁과 특정 정치세력의 방탄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인질로 삼은 이 폭거를 낱낱이 해부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중수청을 사법부와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슈퍼 옥상옥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안 제2조 2항 다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 한 줄의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접 관련성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애매모호한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국민도 중수청의 수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는 야당 정치인, 비판적인 언론인, 밉보인 기업인에 대해 직접 관련성을 핑계로 무제한적인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합법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 무한대의 권력을 쥐여 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지역구는 인구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하는 작은 농촌지역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은 이러한 거창한 권력 다툼과는 거리가 먼 그저 땀 흘려 농사짓고 장사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국가의 사법시스템은 바로 이런 평범한 국민들이 억울한 사기나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인을 잡아 권리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수사 역량의 정수를 모아 만든다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작 그 목적을 정치적 반대파 탄압과 사법부 길들이기, 법왜곡죄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권력을 방위하는 데 쓴다면 정작 우리 서민들을 울리는 진짜 민생범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권력의 친위대 창설 법안일 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수사기관이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은 참담하게도 '아니요'입니다.

수사기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중립적으로 편향적이 아닌 정치권력으로부터 떠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하고 거대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를 수사할 이 거대한 기관을 현직 정치인인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련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지금 심지어 장관이 수사청장을 직접 지휘를 하고 감독하도록 법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수청 산하 조직이나 이런 것이 모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권이 언젠가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치명적 결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3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언론이 사설에서도 이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의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정권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법안을 보면 과거 검찰 시절보다도 더 끔찍하고 노골적인 권력의 수사 개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수사청의 수장인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또 어떻게 뽑습니까? 법안 제7조 3항을 보겠습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민주적 절차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추천위원회가 문제입니다. 그 후보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

번 법안 제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 2항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제청할 때마다입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제청할 때마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9조 3항에 보면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을 합니다.

9조 4항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차관, 행안부차관을 비롯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포장을 했지만 또 결국 그 위원을 임명하고 위촉하는 사람도 행안부장관입니다. 위원장을 지명하는 사람도 또 행안부장관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장관을 추천하게 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정권의 회전문 인사 시스템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석한 송영훈 변호사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행안부장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 아래 권력의 심기만을 살피는 하수인 청장을 앉혀 놓고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원천 봉쇄해서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사법장악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할부대로 전락할 이 거대한 수사기관이 이제 다른 기관들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하는지 법안 제43조를 통해 생생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제43조 2항을 보십시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43조 3항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공수처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경찰이 피땀 흘려서 권력형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놔라 하면 경찰은 무조건 사건을 통째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권 실세를 향한 수사는 모조리 뺏어 와서 덮어 버리는 권력의 블랙홀을 합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 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 개시 조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또한 중수청이 사건을 넘겼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의 입건 요구권마저 흔적 없이 지워 버렸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수청 수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지적했듯이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건을 하고 뭉개 버려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입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장치가 없습니다. 악의적인 권한 행사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단순한 실수나 누락조차 교정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참담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이 기형적인 수사기관이 어떻게 견제 없는 괴물로 전락하여 비전문가적인 행정관료와 정치인의 손에서 표적수사와 깜깜이 수사를 자행하게 될 것인지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들어낸 이 법안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무너지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가 특히나 일반 서민과 우리 농민들, 빽 없는 분들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경고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고 참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강경파가 폭주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8건의 사건 중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범죄 수사 권한을 해체하고 쪼개서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 버리려는 이 법안은 권력자들을 향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권력 방탄법에 불과합니다. 특정 정치세력과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재물로 바치는 이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범죄를 덮어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수사와 권력 사유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밀실에서 합의한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개시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발견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의심되어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에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수청에서 다루는 중대범죄 사건은 공소청에서 송치하기 전까지 누구를 어떤 혐의로 수사하는지 외부에 일절 노출되지 않는 깜깜이 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주거나 악의적으로 사건을 뭉개도 공소청 검사는 이를 교정하거나 통제할 수단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예.

○박덕흠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이른바 중수청법의 뿌리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 속에서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 구상에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검찰의 기능을 분리·축소하는 방안으로 중수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고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한 공감과 합의를 얻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었습니다.

관련하여 당시 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지 2022년 6월 발간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평가와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라는 논문 일부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민주당은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통과를 목표로 강행하여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입법하기로 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보니 민주당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법을 온갖 편법을 총동원하여 무력화했다.

법안의 내용은 검찰이 담당하던 6대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

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를 하고 선거범죄는 올해 12월까지 수사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정작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결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과 함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되었는데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수사기관 전반을 정비하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검찰이 하던 일을 못 하게 하려면 해당 역할을 어떤 기관이 담당할지도 동시에 제출되어야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수사권 박탈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대안은 나중에 마련하자며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의 속내는 '검찰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증발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은 2021년 시도되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보다 더욱 졸속적인 법안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지만 어떤 수사기관이 담당할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검찰이 왜 6대 범죄를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맡아야 하는지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데 만약에 경제와 부패범죄는 검찰, 4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그 근거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더욱 난립하여 수사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목표일 뿐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22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완결하지 못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구상을 다시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수청 설치 논의도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2024년 8월 29일 황운하 의원안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11일 민형배 의원안으로, 2026년 3월 3일 정부안, 2026년 3월 4일 이용우 의원안, 2026년 3월 6일 정춘생 의원안이 차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에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어서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되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과거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핵심 쟁점들이 이번 본회의 상정 대안에서는 과연 제대로 해소되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 첫 번째로 짚어 볼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과연 독립적인 수사기관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놓인 조직인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

독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제6조 조문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조문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사항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구체적 사건은 청장만 지휘·감독한다고 하니까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2026년 3월 16일에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조항을 두고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소위 회의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은 중수청법의 큰 쟁점 중의 세 번째가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위임 구조, 임용권, 중수청장 인사위원회,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조항까지 전부 묶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행안부장관께서는 정부조직법상 수사 기능 자체가 없는데 그런 장관이 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해식 위원은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행안부장관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맞다,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준해서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민 위원은 다시 행안부장관에게는 사법 기능이 없는데 법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종합 판단이 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2명, 인사와 임용 구조 역시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는 단순한 일반 조항이 아니라 중수청 전체를 행정안전부의 권한 구조 안에 두는 출발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열어 둠으로써 독립성과 종속성 사이의 긴장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짚어 봐야 할 것은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일수록 공정성과 중립성은 더욱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안은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 그것이 실제 제도 설계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 관련 조문부터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권한남용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사관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문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후 5년 경과 여부 등은 들어가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직접 담보할 만한 그런 장치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 소위 회의록에서는 더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은 중수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 이탈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지난 회의에서도 제기했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런 취지가 중요하다면 중수청장뿐만 아니라 수사관에게도 같은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달희 위원께서도 이에 가세해서 수사권 독립이 중요하다면 정치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며 경력채용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정당 활동을 하던 사람이 그대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중립 장치를 분명히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 국가수사본부장, 지방자치경찰위원 등 다른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의 정당 활동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왜 중수청 직원들에게는 이런 조항을 넣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나 다른 유사 제도에는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를 두면서 왜 중수청장과 수사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두지 않는 것입니까?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라면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 활동 이력, 최근 당적 보유 여부, 경력채용 구조 속에 정치적 편향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 장치가 법에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결국 사람을 누가 고르고 누가 임용하고 누가 징계를 좌우하느냐에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중수청법(대안)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추천 절차에 여러 기관, 단체가 참여하니까 분산된 그런 구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또 수사관 임용 구조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행정안전부, 위원장을 지명하는 사람도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위원 임명·위촉권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 보이지요. 그런데 출발점과 구성 권한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 탄압, 정치 탄압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지만 권력에 밉보인 여당 정치인에게도 화살이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여당·야당 똑같이 봐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대표 간의 갈등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중수청법이 통과되면 밉보인 여당 의원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서 수사를 받아서 기소시키면 결국 재판 끝 날까지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야당만의 탄압이 아니라 밉보인 여당 정치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형평성, 중립성을 보장시켜서 권력 집중을 막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바로 교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치인들이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조시대, 왕조시대보다도 더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합법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구조가 돼서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막말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도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먼지 털어서 좀 갖다 대서 이것 수사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수청법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중수청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견제할 수 있는 그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법안은 언론들 역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지금 이 경찰과 중수청이 유일 수사 권력 된다면'이라는 사설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존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했다. 각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 온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삭제했다. 세무·환경·노동 등 각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사경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 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이다.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청법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진다.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사경이 아무런 수사 지휘도 받지 않을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한다면서 경찰·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아예 뭉개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모 의원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일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사설에서도 말했듯이 우선은 여당에 대한 유리한 수사 뭉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여당 국회의원, 여당의 정치인들한테도 다 적용됩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정치검찰이 있어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검찰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치경찰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로 가면 더 심한 정치경찰이 생겨서 만에

하나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보복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는다 하면 이 중수청을 가지고 똑같이 잣대를 대서 보복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그나마 공정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못 하면 결국은 앞으로 우리 정치 일을 하시는 정치인들 정말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도소 담벼락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심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살아오면서 또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 또 여야 의원님들, 심사숙고해서 이것 견제장치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몇 분 안 계시는데, 박지혜 의원님 감사합니다. 송재봉 의원님 또 정연욱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왜곡죄로 경찰과 판검사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정치적 권력으로써 침해하고, 재판소원제로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고 하고 국민들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신 임기 내에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소청·중수청법으로 검사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들추지 못하게 하는 이 법들이 모두 시행됩니다.

이는 마치 독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본인들한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 이룩한 이 민주주의의 의도가 다수결이면 무조건 맞다는 그런 전제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결이 다수의 폭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충분한 숙의와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19대에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이 원칙이 이어져 왔습니다. 숙의하고 토론하

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서로가.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그렇게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지 않을 때 소위에서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시 증인채택 문제도 여야가 합의해서 했습니다. 여야 간사가 반대를 하면 통과를 안 했습니다. 표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증인 신청도 표결로 다 하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충분한 숙의 토론의 장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토론과 숙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한 국가의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랜 시간 지켜 온 정치적 관행은 무참히 파괴됐고 의회민주주의 전통도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양보와 수정, 절충과 타협으로 여야 간 더 많은 구성원이 동의해서 만든 대안은 이제 국회에서 흔적 없이,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상대 정당을 타도해야 할 적이 아니라 국가를 함께 운영할 파트너로 인정하는 태도, 즉 품격 있는 인정이 사라질 때 민주주의가 파국으로 치닫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또 정치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이 법적 한계를 넘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도 다수결의 그늘을 지적한 부분이 나옵니다. 억압은 국가권력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여론과 다수의 도덕, 관습 역시 개인을 제약하는 힘으로 작동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인류 전체를 강탈하는 행위다. 그 의견이 옳다면 진리를 빼앗는 것이고 틀리더라도 진리를 더 분명히 이해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를 억누르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 다가갈 가능성 자체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밀은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특정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확신 아래 다른 사람들이 들어 볼 기회조차 봉쇄해 버린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일체의 토론을 차단해 버릴 수는 없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지는 탓에 자기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이 상이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 보고 나아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조모 따져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명한 사람치고 이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밀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에 대한 진리를 담은 이러한 통찰을 19세기에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정치학자와 전문가들이 우려한 다수결의 허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변질됐고 그 가

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행해지는 민주당의 다수결의 폭정, 반헌법, 반의회의 상징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형사사법제도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 내는 피해는 단순한 행정적 혼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억울한 구속으로, 누군가의 무고한 기소로, 누군가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파탄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완이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78년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일이라면 애초에 헌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다른 법체계적, 논리적 정합성을 갖춘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밀어붙인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게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체계에 적용될 수가 있는 말입니까? 형사사법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이어 붙여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에서 법이란 다수의 의지가 아니라 보편적 이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 국어사전에 나온 '보편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그 지점, 법은 거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사람의 의견을 그리고 충분히 많은 시간 속에서 취합하며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그 유명한 정언명령을 선언했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인간은 고사하고 인간 사회를 규율하는 법을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법은 소중한 우리 땅에서 소중한 우리의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오랜 기간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비정합적이고 무논리적이고 과정도 결과도 정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악폐가 한둘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폐지법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전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보복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 보복이 결국은 여당 정치인에게도 간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민생에 미칠 아주 광범위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서둘러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나 같은 해 11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풍문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님 어떻습니까?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의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장면이 다 있겠습니까 싶은 그런 국민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원식 의장,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사회교대)

검찰의 견제가 전무해진 경찰과 중수청 체제에서 결국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통곡을 하게 됐다는 그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작용이 머지않아 여권의 권력에 밉보인 사람한테 역풍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도 생각하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어느 한 기관의 입장을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범죄를 다루는 형사사법체계가 실제로 잘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돼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보는 자리입니다. 이 법안을 놓고 국회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중대범죄를 더 잘 다루게 만드는가 아니면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국가의 역량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조광훈 공판과장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몇 가지 대안 제시'는 처음부터 분명한 경고를 보내 왔습니다. 조광훈 공판과장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급하게 만드는 논의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안감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수사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조직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중대한 범죄를 어떻게 밝혀내고 어떻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재판까지 이어 가는지를 통째로 바꾸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조광훈 과장 논문의 특히 힘을 실어 주는 대목은 중대범죄의 성격입니다. 중대범죄의 경우에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는 물론이고 증거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해한 뒤에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검사가 중대범죄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면 아무리 사안이 중하고 복잡하더라도 송치된 기록을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게 되고 공소를 제기할 사건이라도 심도 있는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단순한 사자(使者) 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대범죄는 겉으로 보이는 사실만으로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돈의 흐름 하나, 진술의 모순 하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하나, 관련자들의 역할 분담 하나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패범죄든 경제범죄든 구조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수사 단계에서 포착한 사실의 의미가 공판 단계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판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될지를 수사 단계부터 내다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와 공소를 제도적으로 갈라놓으면 수사기관은 공판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사건을 넘기고 공소기관은 수사의 맥락을 온전히 체득하지 못한 채 기록을 받아서 처리하는 구조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공판과장이 말하는 '단순한 사자 역할'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단절의 위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중대범죄 사건에서는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공소를 제기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체득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법리와 증거관계를 토대로 정교하게 공소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미한 사건에서 송치 기록을 중심으로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중대범죄일수록 수사와 공소의 실제적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누가 수사하느냐

그거 못지않게 수사에서 공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할 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중대범죄 대응의 완성도입니다. 수사는 공판을 향해 설계되어야 하고 공판은 수사의 맥락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사건이 복잡할수록 부작용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기관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중대한 사건을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처리하는 국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공판 과장의 논문은 그 점을 정면으로 묻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논의되는 구조가 그런 능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수청 설치를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 중수청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부재, 수사기관의 난립,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대한 장애 요소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강한 수사권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 보호는 약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사건은 혼선에 빠지며 그렇게 흔들리는 절차 속에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중수청 설치를 두고 단순한 조직 재편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 전체의 흔들림으로 봐야 한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법통제의 부재라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수사권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자료 확보,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한 국가 권력입니다. 이런 권한은 누구 손에 있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통제입니다, 통제. 새 구조를 논하면서도 그 수사권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통제가 되고 점검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강한 권한은 언제나 더 엄격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데 중대범죄 수사처럼 권한의 강도가 큰 영역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수사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누가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난립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중수청을 설치한다면 수사기관의 난립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방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도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와 국민 불편, 실무적 충돌까지 언급을 합니다. 기관이 많을수록 결국은 책임이 흐려지게 돼 있지요. 또 절차는 복잡해집니다. 또 사건은 이리저리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결국 그 부담은 제도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을 겪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형사사법절차를 어떻게 체감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의 실체가 분명해집니다. 새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좋아질 것이라는 설명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국민이 겪는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절차입니다, 절차.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는지, 더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더 정확하게 진실에 접하는지, 그 결과로 국민이 더 보호받는지,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대범죄의 수사에서 그 네 가지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이상 우리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숙고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서둘러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박수민 의원님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무제한토론 서두에서 거대 의석을 필두로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이 마치 골리앗 같고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이 조약돌로 그 거인을 상대해야 하는 다윗의 심정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론은 이 토론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현 부교수의 논문의 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과거의 부분적 조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사와 기소, 통제와 책임의 구조 전반을 다시 짜는 전면적 재설계이며 그 성공과 실패는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얼굴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김상현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통과될 중수청 법안이 일선 수사현장의 혼란과 그로 인한 개인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또 억울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중수청 법안 문제가 헛된 기우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재봉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또 박정하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감사드리고 의장님과 행정안전부차관님 또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영호 박덕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의원 바뀌셨네.

○의장대리 김영호 의장님은 방금 전 교체가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수민)

(10시15분)

○의장대리 김영호 다음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재봉 의원님 또 박지혜 의원님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찰 특수부는 일본의 동경 특수부에서 그 아이디어가 건너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책임제라서 의원들의, 다선 의원들과 그 다선 의원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깊습니다. 계파정치가 아직도 있고요. 이런 일본적 환경에서 정경유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경에서 검찰 특수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탄생했습니다. 거악을 척결한다는, 첨단 범죄·지능 범죄를 차단한다는 선의의 목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새로운 환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탓이기도 하고 사법의 탓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은 정치권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고소·고발을 남발했습니다. 결국 정치가 결정할 일을 서초동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검찰의 역할은 커져 갔습니다. 비대해졌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떠한 국가 조직도 헌법적 통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헌법적 통제가 아니라 헌법적 혼란입니다. 기능이 잘 정리되고 잘 작동하면서 그것이 견제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었고 최대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방법은 검찰 특수부를 축소·폐지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부 공안부, 형사1·2부 공안1·2부 정도로 해서 특수부 없이, 견제되지 않는 특수부 없이 검찰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검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간단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소한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최소한의 방식이 아닌 최대한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입니다. 저는 이 방법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주의 공화정을 유지하는 대전제하에서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진 사법권력, 검찰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최대한의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의 조치를 하면서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혼란을 파생합니다. 실험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피해는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약자에게 전가됩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 이러한 과정들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어떻게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짧고 단순해지면 동시에 그것이 견제되기 어렵습니다. 인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은 균형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보호하면서, 증거주의에 기반하면서 그리고 재판정에서 밝혀지는 소송의 원칙에 입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그 모든 사법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과 비용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이 과정이 길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원스톱으로 돼 있는 것과 투스톱으로 돼 있는 것은…… 당연히 시간과 비용을 늘어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정이 혼선이 없도록 잘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개혁조치를 택하면서 최대한의 보강이 아닌 빠른 개혁, 일단 해 보자는 실험적 개혁에 돌입했습니다. 해서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개편할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새집을 짓기 전에 헌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는 상태에서 견뎌 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새집이 없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야 되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 국민들은 새집이 서기 전까지 실험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최대한의 개혁조치로 보강장치 없이, 준비 없이 진입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후속조치는 딱 한 줄입니다, 1년 안에 구체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1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작년에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이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뜻을 피력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부조직법 개편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기소와 분리라는 대원칙을 추진해 간다면 그것 속에서 실행조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국민 편익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 속에서 시간이 급하다는 또 다른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중수청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실험적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저는 민주주의란 민주적인 질서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돼 가는 것, 하나로 통합돼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그 과정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일단 기본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생활 규칙 그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단속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사를 해야 되고 경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소를 해야 되고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넘어서 판사가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서, 법치주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기본 장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국 헌법이 처음에 입법·행정·사법을 설계할 때 사법 기능 중에서도 수사 기능 그것은 행정부에 뒀습니다. 경찰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 내용을 기소하는 검찰은 역시 행정부에 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판사는 사법부로 분리했습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기소를 넘어서 동경 특수부의 사례를 따 와서 검찰 특수부가 시작됐고 정치가 사법화되면서 정치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지 않고 서초동에 의존하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검찰 특수부의 권력은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과잉 비대 권력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 헌정 자체가 흔들리는 비극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최대한의 조치, 기소·수사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기소·수사 분리는 어떻게 잘 집행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지금 중수청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의 입장을 조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공화정의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이 조화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법이고 사법부 독립입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과학적 집행입니다.

검찰 특수부가 원스톱 패키지로 수사와 기소를 일치화시켜서 신속하게 거악을 척결하

겠다는 그 취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매우 견제적으로 작동했어야 합니다. 그만큼 예리하고 그만큼 인권이 유린될 수 있고 그만큼 헌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사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적용돼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특수부는 무제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가 무제한적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당 정부, 국민의힘 정부, 양대 정부를 거치면서 커져 왔습니다.

특검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전 정권 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있었고 또 박근혜정부로 이어져서는 이명박 정부,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전 정부 수사, 정적 제거 수사가 진행됐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검찰 특수부는 무제한적으로 커져 왔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대한민국헌법을 위협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선제적으로 느끼고 끊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게 돌아서 검찰개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에게 좋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특수부만 축소했어도 됩니다. 폐지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근원적인 최대한의 조치, 수사·기소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법이 있고 중수청법이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할 것이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많은 범죄는 결국 경찰이 담당합니다. 경찰이 하는 일 중에서 조금 어려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하게 됩니다.

제가 벌써 수사기관들을 나열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시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니,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같이 하니 견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견제기구를 하나 만들자. 그게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는 검찰 자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조치 앞에서 공수처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토론을 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생략했습니까? 생략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바쁘시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다 챙길 수 없는 일을 저희가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국회에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이런 세간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사를 견제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마당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원스톱이 헌법적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투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견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성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졌던 문제는 이제 끊어 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끊어 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투스톱 서비스로 바뀌었을 때 기관 간에 특히 공공기관 간에, 정부 간에 발생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확고한 현상은 핑퐁 현상입니다. 이것이 내 책임인가 귀 기관의 책임인가, 이것이 내가 할 일인가 귀 기관이 할 일인가.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은 지역구에서 민원을 많이 상대하십니다. 민원은 주로 구청, 시청,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등 행정기관들로 집중됩니다. 그러면 학교 앞 어린이 안전지대의 횡단보도 문제는 누구의 담당일까요? 교장선생님께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구청장님께 얘기하면 될까요?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일단 학교에 얘기합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가 불안하다, 좀 넓혀 달라, 스쿨존으로 만들어 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관리하시는 분이지 학교 앞 도로를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학교 앞 도로를 관리하는 경찰청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의 문제이고 어린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움직입니다. 횡단보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스쿨존을 좀 확보해야 되는지, 승하차존을 좀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그러면 승하차존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조금 축소하고 도로를 넓혀서 학부모들이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내려 줄 수 있는 승하차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구청과 시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도로를 넓히는 건설 예산도 필요하고 준공검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매일 건너는 저 횡단보도 저것을 좀 더 안전하게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내려 주는 승하차존을 안전하게 만드는 이 마음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경찰서, 구청, 시청을 거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서 주로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기관 간 조율을 신속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대충 1~2년 걸립니다. 왜 1~2년 걸리느냐? 이곳에 승하차존을 만들려고 해도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년 예산에 없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경을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그조차도 또 시의회·구의회를 걸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적인 절차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촉진해 내는 것이 기관 간 협조의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일은 저의 지역구인 서울 자곡동 초등학교 앞에서 들어왔던 민원을 다뤘던 생생한 제 체험입니다. 이렇게 기관 간의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이곳은 서로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서민들의 비용과 시간 부담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도는 절대 낙관적 기대 속에서 짜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 것이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는 기본 취지입니다. 제도는 선의대로 집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악용되는 수많은 사례를 저희는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악용 사례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게 그 제도를 선용하려는 아름다운 미담 사례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란 중립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한 안전한 방식으로 짜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어떻습니까? 기관 간의 핑퐁 문제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제어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경찰서, 구청, 시청을 쫓아다녔던 그 일이 이제 내가 범죄 피해를 받았거나 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 경찰서, 공소청, 중수청을 쫓아다녀야 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치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검수완박 시도가 있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그 이후 평균 수사 기간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해결 사건은 급증했습니다. 시중에서는 도대체 수사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 변호사를 쫓아다니고 읍소해도 변호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키워 낼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범죄피해를 받았습니다.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이것이 중대 수사인가, 고위공직자 수사인가, 일반 수사인가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될 겁니다. 대체로는 경찰이 할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접수했는데 전국에서 일제히 접수됩니다. 얼마 전에 벌어졌던 생생한 현실입니다. 실화입니다. 이렇게 불거지면 이것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야 될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수사가 접수되면, 사건이 접수되면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보완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점을 보완해서 오라고 확고히 지적을 해 주든지, 이런 지적의 권한이 있든지 일정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즉 공권력 수행기관 간의 서열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며칠 내에 민원을 화답한다는 식의, 며칠 내에 수사를 보강한다는 식의 일정 통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헌법적 원리도 아니고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협업의 룰, 견제의 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을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잘할 것이다라는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맹점, 그런데 결국 눈을 감는 맹점. 대한민국국회는 법률가 출신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법률가 출신이 이렇게 많은 국회에서 이런 맹점을 왜 그대로 두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저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된 이상 재판은 중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에 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상의 수사와 기소를 당하지 않는 그 보호의 취지는 대통령의 업무에 집중하는 공공의 이익이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에 응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 중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 헌법기관 중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내란·외환이 아니고서 형사상의 소추에 응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열정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것은 공익에 저해됩니다. 그러니 미뤄 두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기본 취지에서 봤을 때 기존에 형사상의 소추를 당했고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재판은 연기될 수 있다. 저는 이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덮어놓는 것이지요. 왜냐? 지금은 재판에 신경 쓰지 말고, 형사상의 소추에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해라. 무엇에 집중하느냐? 민생에 집중하고 국익에 집중해라.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집중해라. 그것이 대한민국헌법의 취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국익에 집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 개혁하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오얏나무 밑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서 파생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검찰개혁 수사·기소는 밀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혹시 한 사람을 위한 개혁은 아닙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강하게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정부 측 답변입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조항은 원래 검찰청법에 있었던 조항입니다. 즉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서 원래 있었던 것을 그대로 따온 조항입니다. 그러니 정부 측 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듭 반문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하자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검찰청법의 조항을 그대로 따온다는 것이 합리적인 답변입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도 기존의 조항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다 쓰겠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답습식으로 기존의 검찰청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 이게 개혁입니까, 카피입니까?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는 비대해진 특수부에서 불거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야 된다는 것에 믿습니다. 그러면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고 더 좋은 수사청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중수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수청과 공소청은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

나의 범죄피해, 보이스피싱 이 사기 사건의 피해를 제안했을 때 경찰이 다루고 이게 캄보디아까지 연계된 중대수사면 중수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신속히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영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수청이 신속히 움직여

야 됩니다. 중수청이 다시 신속히 움직여서 추가 수사,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뭔가 필요하다, 다시 공소청이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중수청이 열심히 할 겁니다. 공소청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관들 간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선의에 기반한 낭만적인 제도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법은 없는 것입니까? 저보고 지적만 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해법을 얘기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미 선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보면 '접수된 민원은 며칠 내로 답변해야 한다'라는 시간의 통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 조항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압박이 됩니다.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지금 검찰청과 공소청 관계에서 며칠 내로 서로 답해야 한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이 설계하고 있는 수직적 서열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기관들,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저희는 국민들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습니다. 저희는 부적절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4년 만에 바뀌어야 합니다. 그 압박 속에서 저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4년의 시간을 주지만 그 시간을 허투루 썼을 때는 저희는 배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4년에 한 번 저희는 채용을 점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회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출입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는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그 활동 상황이 국민들께 알려져야 합니다. 투명해야 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견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은 언론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저희의 실시간 일정이 다 노출이 되고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언론의 수직적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박수민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은 언론입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제 활동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희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직접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공무원들, 대통령이 지휘하는 거대 행정부 권력은 누가 통제합니까? 첫 번째, 저희 입법부가 통제합니다. 국정감사를 합니다. 예산을 저희가 따져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지휘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시험을 붙었건, 고시를 붙었건, 특별경력채용이 되었건 채용된 헌법 권력은 선출된 헌법 권력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직적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 관계는 왜 형성이 되었느냐?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선출된 권력은 국민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이 통제하는 선출 권력은 당연히 경력직·정무직 채용 권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의장대리 김영호 박수민 의원님,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지금 방청객들이 오셔서 잠시 소개를 하려 합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의 소개를 통해서 경남 거창군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을 대신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민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대리 김영호 박수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발언을 이어 가십시오.

○박수민 의원 이렇게 입법부는 국민의 통제를 받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통제를 받고,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행정부가 인허가를 하고 등등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패가 꼈을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제삼자,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해서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통제보다는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입법부는 국민의 통제를 받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벌여 놓은 일이 잘못됐을 때 최종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것,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법원,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입법부의 통제보다는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대법원을 조직하는 방법, 법원을 조직하는 방법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판사의 재채용이라든지 법원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면서 조선왕조를 벗어나서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저희가 드디어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을 때 이 정신을 실현했습니다. 1947년이기 때문에 어느새 80년 돼 갑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 온 이 중요한 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법 적용을 잘못하면 법왜곡죄로 재판 걸겠다’. 사법부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기소·수사 분리도 해 놨습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했을 때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관리돼야 됩니다. 감당 가능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힘 있는 사람도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중수청 가고 경찰 국수본 가고 공소청 가고 재판 가고 재판도 이제 3심제가 아니라 4심제로 간다 그러고 판사도 법왜곡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몸 사리기에 들어갈 것이고…… 이 시간과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시간과 비용 때문에 개혁을 하지 말자 그게 아닙니다.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원스톱으로 붙어 있었을 때, 검찰에 붙어 있었을 때 시간과 비용은 적습니다. 그런데 권력 남용과 민주적 통제 범위를 넘어설 위험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투스톱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투스톱 서비스는 한 곳에서 처리될 것이 두 곳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시간과 비용이 적절히 늘어나도록, 국민들이 감당 가능하도록 통제하는 견제 보강 장치가 필요합니다.

액셀러레이터가 들어가면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강해지면 액셀러레이터가 좋아져야 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중수청·공소청에는 이런 균형의 원리, 견제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조항 자체를 통편집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 너무 많아서 국회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사법적 사안조차 저희가 맹점을 안고 통과시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안타까움에 호소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터졌습니다. 경찰에 전화할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수사할까,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로 보낼 것인가? 아니다. 이거는 중수청 사건이니까 중수청으로 가야겠네'. 벌써 시간이 흐릅니다. 중수청으로 갔다 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에 가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며칠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일정상의 통제가 있든지 그리고 중대 사건이 중수청에 갔는데 수사가 지연된다 하면 공소청에서 수사 촉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든지 이래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수직적 관계를 만들면 중수청은 불편할 겁니다. 왜냐, 위에서 통제할 테니까. 그런데 그 통제는 누구를 위한 통제입니까?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통제 아닙니까? 그런 불편은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민주공화정 아닙니까?

민주주의 현대국가란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질서 속에서 통합되고 조화돼서 공화롭게 살아 나가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조화돼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역시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툭하면 고소하고 툭하면 고발하고……

원래 예전부터 고발·고소 좋아하는 집안치고 잘되는 집안이 없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수민아, 고소 좋아하는 집안치고 잘되는 집을 못 봤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집안입니까? 툭하면 고소하고 툭하면 고발하고 대통령도 고발하고 국회의원도 고발하고 장관도 고발하고, 그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저는 이런 것 좀 고쳐 보려고 국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정치적 고발·고소에 오히려 휩쓸려 있습니다. 이 현상을 잘 못 벗어나는 저도 애처롭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애처롭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 탓하기 전에 저희 국회의원 스스로, 정치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치로 풀 일은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고소·고발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못하면서 결국 검찰이 정치화되었다고 검찰만 해체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이유는 정치권이 고소·고발의 유혹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극대화돼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벌써 두 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들이 탄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지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밝혔고 사과 반성문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청과 공소청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그러면 공소청과 수사청이 분리됐을 때 그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

의 부담이 국민들께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무엇이냐? 수사가 지연되면 며칠 내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일정상의 통제, 시간상의 통제 아니면 보완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지휘·지시할 수 있는 공소청의 개입권, 견제 권력, 이것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안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수사청의 수사관과 공소청의 검사는 잘 협력해야 한다는 일반 취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돼서 전 세계 최빈국으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동족간의 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잿더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물려주셨습니다.

시대에 맞게 고쳐 가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어떤 시대도 그 시대의 도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숙제는 일본을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를 막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배고픔을 떨치고 산업화를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드디어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민주공화정의 권력을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해 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화의 시조 김영삼 대통령을 저희의 대통령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더 큰 신화로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우리 시대에 맞게 잘 굴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잘 굴려 가겠습니까? 민주주의 기본질서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조화롭고 발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하고 조화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치인은 구체적인 제품, 프로덕트로 제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운영을 견제해야 합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제도는 선의에 기반해서만 잘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악용은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뛰어 가고 누군가는 빨간불에 건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그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너비, 파란불의 초록불의 시간 그리고 초록불의 남은 시간까지 요즘 보여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대충 그어 놓으면 알아서 맞춰서 잘 걸어갈 거야' 이게 제도를 짜는 사람의 임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걸음이 느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뛰어서 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빨간불에도 건널 것이다, 청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들이 횡단보도에 녹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는 지금 국민들이 받은 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시간과 돈의 관리 범위가 잘 설계되어 있습니까? 힘없는 사람도 도움받을 수 있고 힘 있는 사람도 도움받을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도 도움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도움받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기관

들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라고 정신교육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통제장치, 견제장치 제도를 넣어야 합니다. 시간, 며칠 내로 일을 끝내야 한다라는 시간을 통제하든지 누가 누구 지휘를 해서 지적을 해 나가게 하든지 수직적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맹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점을 놓고서 우리는 왜 300명의 국회의원이나 있는데 그중에 지금 너무나 많은 수가 법률가인데 이런 것을 토론하지 못하고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결국 정치가 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싸움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일로 국민의 시간을 절약해 주자, 관리해 주자, 국민의 사법비용을 관리해 주자 이게 싸움입니까? 이런 싸움은 수백 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가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개혁인가, 그냥 검찰청·중수청이 무한적으로 오랜 시간 일하게 하는 무한 루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 없이 달라진 현상들이 보입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제 관찰은 맞을 겁니다. 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도대체 이렇게 늦게 수사해도 되는 겁니까?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더 빨리 의혹을 수사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깨끗한 후보로서 서게 하든지 부적절한 후보면 못 나서게 하든지 이것이 상식의 판단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상식의 판단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상식의 판단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방치되고 있습니까? 수사·기소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사와 경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 우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사법고시 붙고 그런 분들이 중추를 구성했었고 이제 로스쿨 우수 자원들도 가셨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우수했던 것은 신분보장입니다. 검사는 독립적 신분이 상당히 보장돼 있습니다. 근평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심사를 7년인가 한 번 정도 받고 또 그리고 검사의 징계 자체가 권한이 별도로 독립화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는 것입니다. 외풍에 덜 휘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소신 있게 신속하게 일을 했던 것이고, 경찰은 일반행정 공무원하고 동일한 신분보장밖에는 없습니다. 외풍에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이게 정치적 독립성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독립성을 존중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검사가 일으킨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정치권이 일으킨 것 같기도 하고 둘 다가 합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세 번째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견제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민주적 헌법 통제 밖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작용은 공백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큰 실험입니다. 그리고 신체상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 그것이 수반될 수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한 실험입니다.

국민들 모두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이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미리 예측하시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왜 국회의원 300명을 뽑습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고 우리는 일상에 머무를 때 당신들은 앞서서 나라를 설계해라, 나랏일을 봐라, 그래서 저희가 뽑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박수민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기관 박수민은 헌법기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수청법의 맹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점을 토론하지 않고 치유하지 않고 지금 통과시키려는 우리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신문 기고문을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박수민만의 얘기인지 아니면 일반인의 시각인지 우리는 검증하고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실린 기사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민주당 의원이셨지요—인터뷰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실수를 되풀이할 텐가…… 중수청 신설 땐 혼란만 가중된다', 2025년 7월 8일 작년도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께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에 단순해야 한다. 국민들이 다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형사절차를 공부하게 만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첫 대목부터 제가 걱정한 부분이 직격되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소를 투 스텝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복잡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성 속에서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를 통제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통제 못한다는 게 제 걱정입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의원은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새로운 기관 난립 시엔 결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안정적 사법시스템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저희가 검찰을 개혁한다면 그 기본 취지는 헌법적·민주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져서 저희 민주정 자체, 민주공화정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피해가, 범죄피해가 구제가 안 되거나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리고 변호사 채용 등등으로 비용이 급증하거나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금태섭 전 의원의 단순한 지적과 충언이 아닙니다. 이미 통계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수사는 5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다. 평균 수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미해결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그 통계 속에 숨어

있는, 녹아 있는 아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한다면 이제는 기관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시간상의 통제라든지 서열상의 통제를 넣어야지만 그나마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과 피해가 관리 가능할 터인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맹점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에 여러모로 깊숙이 관여해 왔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조직 논리에 따라 검찰개혁을 방어하는 일을 맡았다. 이후 언론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통해 검찰개혁을 외치다 검찰 수뇌부에 찍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옷을 벗었다.

금태섭 당시 검사의 당시 화제가 됐던 칼럼이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직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제 기억에 그 당시 한겨레신문에 실었었고 이것이 당연히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동시에 검찰 내에서는 이 기사에 따르면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것을 계기로 옷을 벗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검찰개혁의 핵심 방향성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이 아이디어를 진보진영에서 초기에 구체화한 인물이 금 전 의원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검찰개혁 공약을 직접 조언하기도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그의 아이디어가 문 후보의 공약에 들어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일원으로 검찰개혁의 진행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지켜봤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또다시 새로운 기관들을 만드는 식의 복잡한 제도 개편은 오히려 사법시스템에 큰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겼는데 변호사들조차 형사사건을 많이 안 하면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검사의 옷도 벗었고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 아이디어까지 제안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의 잉태를 시켰던 금태섭 전 의원도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로 인한 수사·사법기관의 난립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걱정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혼란과 피해는 뭡니까? 결국 피해를 구제받아야 되는 일반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과 아픔이 폭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1년 전에, 1년 전이 아니지요. 7월이면 한 8~9개월 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미 지적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8~9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저희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생기면 혼란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리로 인해서 불거질 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강 장치를 논의하고 설계하고 토론했습니까?

제가 행안위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검찰청법에 있어서 그대로 따다 붙였다.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시대에 맞게 조문 한 자, 한 자를 새로 써도 성에 차지 않을

지경인데 검찰청법에 있어서 그대로 갖다 붙였다? 저는 이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국민들께 늘어날 수 있는 혼란과 비용과 아픔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8~9개월 전에 언론에 나와서 검찰개혁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 한 지적조차 저희는 토론도 못 하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개혁은 검사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근본적으로 검사를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다만 무작정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보다는 특수부 등 인지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가 오늘 이 대목을 열 번 백 번 읽어도 아깝지 않은 대목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를 괴롭히고 검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권력이 비대해져서, 너무 거대해져서 헌법적·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을 위해서 절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특수부 폐지를 이 무제한토론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이 하는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은 존재해야지만 일정이 관리되고 핑퐁이 견제돼서 국민적 시간과 국민에게 늘어날 수 있는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식의 원리를 작년 정부조직법 개편 때 가을에 다 말씀드렸었고 이것에 대한 화답을 기다려 왔습니다. 화답은 없었습니다. 수사지휘권 자체는 토론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과 공소청과 수사청 간의 관계는 아주 모호하게 표현된 정부안만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안은 다시 더더욱 큰 공백 속에서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의 사설을 하나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최근의 사설입니다. '지금 이 경찰과 중수청이 유일 수사 권력 된다면' 하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각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 온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삭제했다. 세무·환경·노동 등 각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사경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 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이 되어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이다.

경찰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소속기관장에게 직무 배제

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청법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진다.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사경이 아무런 수사 지휘도 받지 않을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민주주의 헌법질서는 기관 간의 상호 견제, 그런데 이것은 수평적인 상호 견제가 아닙니다. 저희 입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언론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법부는 우월적 지위에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존중해도 심의권은 국회에서 가지고 최종 결정합니다. 이것도 국회의 우월적 지위입니다.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행정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독립시켜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권력이 비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자유당 시대 잊었습니까? 몇십 년 전이면 잊으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국민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입니까?

일제시대 때 가장 강력했던 공권력, 악질 공권력은 순사 아니었습니까, 순사? 경찰이었습니다. 자유당 때도 경찰 권력이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경찰을 견제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살아왔고, 그런데 그 검찰 권력이 다시 특수부를 통해서 비대화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부만 없애도 되고 굳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면 그것이 파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견제장치 없이 국민들에게 비용과 아픔과 시간을 강요하는 사법적 실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그리고 경찰 권력이 부패했을 때 견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이 논리를 조선일보 사설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찰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한다면서 경찰, 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아예 뭉개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인 것이다.

공소청, 중수청을 난립시켜서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 아픔을 볼모로 들어가는 이 실험은 왜 하는 것입니까? 국민적 비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검사만 바라보고 하는 이 개혁은 그럼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 사람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고, 정권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중에 중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자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운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덮어두면 되는 일을 분란을 키우고 있고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의 수사는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불거졌다면 빨리 의혹을 해소해서 깨끗한 후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출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은 왜 다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중수청·공소청 간의 무한 핑퐁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신속히 밀어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 저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작년 이데일리 금태섭 전 의원의 인터뷰 그리고 최근 조선일보 사설에서 잘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안의 문제점을 조항별로 해설해 가면서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리고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차피 작년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1년 후 전환되는 것이고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중수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항별로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목적을 설명한 조항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말한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즉 중대범죄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다룰 중대범죄를 규정한 것입니다. 법안을 보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형법 제2편 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등등등등 해서 형법상에 있는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에 해당하는 죄가 중대범죄고,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 제21조·22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몇 조, 몇 조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특가법상의 범죄인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부패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등’ 이것은 금융 범죄, 마약 범죄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를 기술한 것입니다. 즉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즉 방위산업에 관한 범죄도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등등’, 이것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범죄도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경제 사건, 금융 사건 또 마약 사건, 사이버 사건 이런 범위들을 주로 가지게 됩니다.

제2조 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즉 이 법에 따르면 중대범죄에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도 포함된다, 이렇게 딱 대상을 지적한 조항이 있습니다.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 즉 이것은 추가로 정부기관 등에서 중수청이 다뤄줬으면 하고 고발할 수 있는 죄목을 중수청의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즉 중수청은 앞에서 얘기한 부패, 경제, 금융, 마약, 방위산업, 산업기술 유출 이런 범죄와 공수처 그다음에 공소청 이런 곳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범죄 그리고 국가기관이 중수청이 다뤄 줬으면 하는 범죄 이런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런 정도를 중수청의 업무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 범위에 대한 제2조고요.

제3조를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1항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2.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둔다’, 즉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밑에 설치되는 중수청인데 광역에는 지방중수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검찰청이 있고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은 중수청 본부가 있을 것이고 지방중수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그 설치의 근거와 구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직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것은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범위는 앞의 중대범죄의 개념 규정, 부패, 마약, 방위산업, 산업기술 유출, 금융범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수사권한입니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권한남용 조항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한남용이 제도적으로 견제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면서 저는 그 견제 장치를 계속 제안했지만 반영된 것은 적습니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조항의 문구는 아름답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소속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던 통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이것을 법무부 밑에 두지 않고 행안부 밑으로 가져온 것은 수사 기능을 조금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왜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냐 질문했고 정부 측 답변은 과거 검찰청법에 있었던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검찰개혁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저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끊어 낼 것은 끊어 내야 개혁이 되는 것이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두고 검찰청법에 있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이 시점에 검찰청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유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저는 수차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 놓고,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고, 이게 개혁입니까, 개악입니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를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 저희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혹시 한 사람을 위한 공소 기능 해체가 아니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사안이고 복잡한 사안이라서 국민들이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뽑아서 온 헌법기관들이 이 가능성, 이 위험성, 이 맹점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야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저 거수기로 전락해서 법 통과만을 밀어 가고 계십니까?

제6조를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다시 말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다 지휘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 필요합니까? 검찰개혁 하는 것에 이 조항이 맞습니까? 이 조항이 불거져서 결국 나중에 중수청 개혁이 다가오는 일은 없겠습니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었습니까? 조국 사태에서 시작해서 추미애,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으로 비화돼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생되었던 그 일련의 과정에 혹시 이 조항의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이런 측면을 제기했지만 진지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저의 외로운 문제 제기로 그쳤고 오늘 통과를 앞두고 이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이 뽑아서 보내 주신 헌법기관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견제하고 막고 토론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를 뽑아 주신 국민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막고자 막고자 또 막고자 해도 모르쇠처럼 밀어 가고 밀어 가고 밀어 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하고 구체적·개별적 사건에서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는 이 조항, 이 조항을 읽으니 다음 조항들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을 계속 읽으면서 이것을 남겨 두고 이것이 통과되는 것을 버젓이 보면서 토론을 이어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고 오히려 앞의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5조,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제5조, 이 조항은 남아야 합니다. ‘소속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쓰고 있지만 바로 그다음 조항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한다라는 행안부장관의 개입 조항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미사여구로 선언하고 뒤에서 뒷문을 열어 놨습니다.

정부 측 답변 논리는 앵무새 같은 얘기였습니다. 검찰청법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다, 검찰청을 개혁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검찰청법에 있어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항·2항은 다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저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꼭 필요한 조항들로 인정합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하고 행안부장관이 결정해서 제청하면…… 아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행안부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한 분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수사기능을 가

진 기능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공수처의 사례에 따라 국회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점을 설명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해서 행안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절차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국회에 두면 여야가 함께 참여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당연히 견제 기능이 더 세집니다.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면 행안부장관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아까 제6조에서 보셨듯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권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이 법안을 읽어 나갈수록 느껴집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년 임기고 한 차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조항으로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결국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수사·사법 기능에 15년 이상 근무·종사했던 사람이 중수청장 후보군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여기도 대상이 되겠지요.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 조항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중수청은 집행기관이고 이것은 법 이론과 법률 전문지식을 당연히 숙지하고 수여를 받아야 되지만 대학의 연구실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있었던 분들이 실전 수사 조직을 지휘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저의 걱정은 있지만 타협 가능한 조항입니다. 후보군의 유형으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지 조직을 지휘하는 수사 조직 지휘자로서 뛰어날 수 없다라는 일반론을 뛰어넘는 예외의 경우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제 생각을 관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조항은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견을 제기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견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가 걱정했던 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조항

에 들어 있습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보추천위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여기까지를 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소속돼서 설치되고 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지명합니다. 행안부에 두는 9인 위원회인데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임명한다, 이게 요약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휘·감독도 하고,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도 9명을 행정안전부에 두고 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장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직원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중수청장은 과연 독립된 기관입니까? 독립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 수사가 유야무야 늘어지고 있듯이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정치적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신중 검토하라고 지시했듯이 또 권력자인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에서는 공소를 취소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중수청에서 수사 포기와 수사 취소로 번질 여지는 없습니까?

제도는 항상 선의에 기반해서 설계하지 않는다. 모든 경우를 가정한다.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를 다 가정한다. 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선의에 기반하면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착한 마음으로 선의로 행동하고 원시자연 상태에서도 더 좋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동양에서 법가사상이 출발하고 서양에서는 법치주의가 발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 공통의 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고 그 법치주의를 통해서 법치주의를 최소한의 기반으로 하고 그 규칙을 넘어서 더 조화롭고 협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도는 어떻게 짜야 됩니까? 가급적 많은 경우를 예상해서 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무리 봐도 행안부장관이 일반 지휘도 하지 구체적 사건 지휘도 청장 통해서 하지 청장후보추천위원회도 행안부 소속으로 두고 그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도 행안부장관이 결정하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4항.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는데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1. 법무부차관, 2. 행안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 9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 법에 이미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행안부

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세 분인데 그중의 한 분은 여성, 이렇게 아홉 분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주요 리더급 회장, 기관장들이 거명이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이분 같은 경우는 사법부 소속이고 변호사협회장 이분은 변호사들이 뽑으시는 협회장이니까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것도 로스쿨 이사장이니까 민간이지요. 이 세 분은 민간입니다. 세 분 민간이고 한 분 사법부고.

문제는 법무부차관, 행안부차관 이 부분은 정권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같은 의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2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3명 그중에 여성 1명 포함한 이것은 누가 임명합니까? 행안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즉 위원회 9인 중에서 법원행정처차장, 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로스쿨 이사장 이 넷 빼고 5명은 행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차관, 즉 정권과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5 대 4. 9명 중에 정부 측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반을 일단 확보해 놓고 시작한 겁니다. 과반이라고 뭘 다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정도 해놨고 또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한번 보겠습니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한다. 3분의 2입니다.

회의는 언제 소집하느냐? 행안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9명 중에서 세 분이 요청하면 열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번 열리면 재적입니다, 재적.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후보추천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 6항을 보겠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3배수 추천을 해야 되지요. 행안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8항. 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서 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9인으로 구성해서 3분의 2 의결을 거쳐 3배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행안부장관 거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중수청장이 탄생합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2분의 1이었으면 9명 중에 5명이 이미 균일한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위원회를 왜 행안부에 두느냐입니다. 행정안전부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외청이면 행정안전부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맞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막강한 수사권력을 가져서 헌법의 민주적 통제에 어긋날 수 있었던, 위협했던 검찰청을 개혁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견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독립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 편익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이 없습니다. 행안부장관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다분히 있고요. 다행히 3분의 2라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경우는 독립기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수사·사법기관을 만들 때 최근의 지혜는 가급적 독립시킨다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서 여야가 한꺼번에 한데 모여서 견제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조항에 그런 것이,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행안부장관, 행안부에 그냥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청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 조항입니다.

제10조(차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둔다.

2항,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것은 청장과 차장의 설치기 때문에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제1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지방수사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그 지방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항, 지방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4항, 지방수사청 차장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것은 지방에 설치하는 지방수사청, 지방검찰청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직인데 거기에 청장과 차장을 둔다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이하 수사관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다음 조항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제13조(수사연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3항,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 등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제14조(그 밖의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수사관 외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제15조(직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와 13조, 14조, 15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청장, 차장이 있고 그와 함께 수사관이 있고 수사연구관이 있고 그 외에 일반 직원이 있다 이

런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관, 수사연구관 그 밖의 직원 그리고 직제를 통해서 이것을 조합한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지금 이게 검찰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 수사기능을 갖고 있는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입니다.

검사는 애초에 법률가인가 수사관인가 아니면 둘 다를 다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기소 분리 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왔던 현실이고 이제부터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고 수사는 수사관이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기능을, 기소기능을 함께 담당했던 검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수사를 선호하는 사람은 수사관이 될 것이고 기소를 담당할 사람은 공소청에 남는다, 아마 이렇게 저희가 일반론으로는 얘기하고 그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을 겁니다.

문제는 중간 과도기입니다. 수사 기능이라는 것이, 수사 역량이라는 것이 이것도 몇 년 해 본 사람이 즉각적으로 수사의 포인트를 잡아내고 증거를 찾아 나가고 심문의 기술도 배우는 것이지 아무나 하루아침에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자를 상대로 범죄를 자백받아서 피해자를 구제해 낸다는 그것이 의협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들이 범죄수사 역량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존의 수사 기능을 함께 담당했던 검사들…… 검찰에도 수사관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검찰수사관들이 넘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검사의 기소 기능과 수사 기능도 함께했던 검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검사의 몸을 두 쪽으로 쪼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 역할을 할지 수사 역할을 할지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검사로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수사관 이외에 별도 특별한 지위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기소 기능은 없고 수사 기능만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수사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과도기입니다. 지금 수사관들을 뽑아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작동할 때까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출 때까지는 기존의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투입이 되어야 국민적 피해와 불이익이 적지 않겠습니까? 거대 개혁을 하면서 작은 피해는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측되는 피해는 가급적 세심하게 관리해서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현대적이고 지능적이고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시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검사가 옮겨올 수 있는 지위와 구조가 조금 더 배려됐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항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수사 역량의 이전 부족, 흡수 부족 문제를 중수청이 어떻게 극복해 낼 거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잘 해낼 것으로 또 선의로 기대하면 되는 겁니까? 또 그냥 선의로만 기대하면 중수청이 착착착 새로운 사람 다 뽑아 가지고 국민의 피해 없이, 불이익 없이 수사 역량을 끌어올려서 부패범죄, 금융범죄, 방위산업범죄 이런 중대범죄들 착착착 신입사원 뽑아서 다 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제 일이면 저는 자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국민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감보다는 조심성으로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사관·수사연구관·일반직원이라는 세 가지 그룹, 항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당분간 몇 년, 제가 봐도 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람 뽑아서 다 한다 그러면, 과거에 일했던 사람 새로운 사람 이렇게 모여서 하면 그래도 과거에 일했던 분들이 많이 모여야 역량이 빨리 올라가고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이게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사이에 웃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범죄자 웃는 개혁은 해도 되는 겁니까? 수사·기소 분리하는 그것 때문에 범죄자는 웃고 국민들은 피해 보는 개혁은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읽었던 신문 기고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진짜 검찰개혁은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이 일반상식을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혜는 벌써 1년 전에서부터 다 논의가 됐던 것이고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인데 지금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일방 통과되고 있습니다. 맹점입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3장 수사관, 제16조(수사관의 구분)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수사관으로 단일화된 것 이것은 항구적으로 맞습니다, 1급에서 9급까지. 그런데 단기적으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검사들이 넘어올 수 있는 유인 체계를 해 놓은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안 넘어오는 것은 좋은데 검사들이 가지고 있던 수사 역량이 안 넘어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그러면 지금부터 착착착 수사 역량이라는 것을 단기간에 다 쌓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내일이면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맡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하나라도 더 세심하게, 하나라도 더 꼼꼼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직급별로 역할을 구분한 조항으로서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제18조(수사관의 임용)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존의 5급 이상 공직자들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 사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항,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 이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3항,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직급별로 최종적으로 누가 어떻게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용하느냐, 장관이 임용하느냐 또 일부 중수청장에게 위임해서 임용하느냐의 문제로서 이것은 일반 사례를 따른 것이라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가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를 적은 거라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간격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분, 3년 이내 혹은 5년 이내에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분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했는데 이 부분 뒤에 또 정치적 중립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강하게 제안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또 뒤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보면서 이것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토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타협적으로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0조(수사관의 신규채용) ①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수사관 신규채용 때는 당연히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우선이고, 그래서 신규채용하고 다만 경력채용을 할 수 있다는 병행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고 평이하다고 할 수 있고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22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행안부장관이 하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부의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근거를 만든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4항,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부 위임규정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제21조(시보 임용) 1항, 5급 이하 수사관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5급 수사관: 1년.

2. 6급 이하 수사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급 수사관은 1년 동안 시보, 그다음에 6급 이하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시보로 활동하고 채용된다. 이것도 기존에 저희 공직에서 갖고 있었던 큰 문제없고 합리적이었던 제도입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항,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서 계산하지 않는다.

시보 기간에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징계에 따른 정직 기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기술적 조항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입니다.

3항,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거나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3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 사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당연히 시보 임용 기간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척한다, 배제한다, 면직한다 이런 조항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조항입니다.

제22조(수사관의 승진),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5급 이하 수사관으로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항,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수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근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임용의 방법,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및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6급 이하는 승진시험을 볼 수 있고 5급 이상은 근무성적과 경력 등에 따라서 승진한다는 일반적 근거 조항입니다.

제23조(징계) ①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6급 이하 수사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즉 저희가 공직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의 문제인데 5급 이상은 총리실 소속의 징계위원회를 두고 6급 이하는 행안부 소속에 둔다. 즉 중수청에 두지는 않는다. 이게 그래서 좀 더 객관성과 독립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독립성은.

그런데 여기에 곱씹어 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행안부장관입니다. 전체 징계위원회가 행안부장관에 있다면 이건 상당히 행안부의 권한이 세지는 문제지요. 그래서 상당히 견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5급 이상은 총리로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행안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의 징계권이 과대해지는 문제는 견제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토론을 거쳤던 부분인데 그럭저럭 타협이 된 사안입니다.

그다음 항을 보겠습니다.

수사관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사관의 임용권자(제18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절차 및 의결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수사관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부분은 징계 의결과 징계부가금 의결에 따른 세부 절차들을 기술한 것으로서 큰 특이점은 없고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파견 및 겸임 금지)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공직임용 제한)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이 부분 24조, 25조는 수사관은 공소청에 가서는 안 되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관 간 분리의 문제인데 이건 수사·기소를 분리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항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법은 전체 1급에서 9급 수사관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수사관이 공소청에 가서 2년 후에는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연결고리, 인적인 교류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항이 아직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세밀히 저희가 어떻게 인력이 이동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고 예측을 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이 항구적일 뿐 아니라 과도기적으로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완조항도 필요하고 그런 세심함이 필요한데 이렇게 분리하는 조항들만 들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26조(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두며, 중대범죄수사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관은 수사관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관은 10년 이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직 또는 사무에 재직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재직·종사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 제4항의 추천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3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수사관인 사람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하고, 임용 당시 수사관이 아닌 사람은 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⑥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⑦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중수청에는 중수청 업무를 감찰할 수 있는 감찰관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내부 감찰관이지요. 그리고 이 감찰관은 내부에서도 선발될 수 있고 외부에서도 뽑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선발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감찰관은 2년짜리고 연임할 수 없습니다. 사법기관이, 사법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스스로 감찰관을 두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항은 큰 특이점은 없고 다만 이 감찰관이 잘 지정이 돼서 활동이 돼야 됩니다. 중수청이 작동하면서 사문화시키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적 근거는 일단 설치됐기 때문에 잘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조항입니다.

조항들을 좀 건너뛰어서 이제 중요 조항들만 제가 한두 개 소개하겠습니다.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조항입니다.

①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3년 이상 받았을 때에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적격심사 조항입니다. 즉 근무성적을 평정해서 최하위를 2년 연속 받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받아도 3년 받으면 적격심사 대상이 되고 올라가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수사관에서 면직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② 수사관 적격심사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심사위원회를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이 수사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그 수사관의 면직을 건의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관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한다.

제1항에서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적격심사 대상자의 의견진술, 수사관의 적격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3년 정도 띄엄띄엄이라도 세 번 정도의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당연히 적격심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격

으로 판정이 되면 면직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검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가 7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검사가 받는 신분보장 조항이 경찰과 검찰을 다르게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찰도 우수하고 검찰도 우수한데 결국 신분이 보장이 돼서 외풍을 덜 타느냐, 더 타느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이 적격심사는 수사관들을 상당히 압박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어차피 공복이기 때문에 압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압박이 외풍을 탈 수 있는 신분보장 약화와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아쉽게 이에 대한 토론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더 토론되고 논의되고 종합적으로 비교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조항 같이 보겠습니다.

30조(직권면직)입니다.

① 임용권자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사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을 때.

등등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심신장애 그리고 또 다양한 징계 사유에 해당해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할 경우에 면직된다는 조항입니다. 당연히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심신장애 상태가 발생하면 면직되는 조항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조항도 하나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제3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수사관은 탄핵(중대범죄수사청장에 한정한다),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신분보장 조항입니다. 검찰청의 경우에는 7년마다 적격심사가 있었고 여기는 그런 것은 없고 근무성적 평정을 2년 연속 최하위를 받거나 세 번을 최하위 받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년짜리 적격심사와 2년 연속 최하위점과 세 번 최하위점을 받으면 적격심사 들어가는 것, 이것의 차이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신분보장은 7년에 한 번 적격심사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능할 경우 당연히 근평이 최하위점도 나올 수 있지만 조직에서 정치적 외압에 밀려서 2년 연속 최하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5년 동안은 그 대통령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특정 정권에 잘못 보이면, 연속 2년 근평을 최하위점 받으면 적격심사 대상에 들어가고 면직될 수 있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토론을 제안했는데 또 토론이 생략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요한 쟁점 조항들을 제가 조금 지적해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제3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인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고 신규채용에 관한 것도 정하고 임용, 전보, 승진에 대한 것도 정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수사관 전체에 대해서 인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인사를 다루는 것을 그 소속기관에 두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둡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인사도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큰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격심사위원회도 34조에 따르면 행안부에 둡니다. 이 부분 행안부장관의 권력이 계속 커지는 느낌입니다.

37조에 보면 적격심사의 사전 전제가 되는 근무성적 평정입니다. 여기도 보면 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관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서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평정기준도 행안부장관이 만듭니다. 이것도 행안부장관이 하고 저것도 행안부장관이 하고 다 행안부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무직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외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조항을 법에 써 놨습니다. 그러면 정부기관 간에 상호 협력하는 거지 상호 배척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상호 협력 조항이 있다고 해서 상호 협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기관 간에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고 혹은 위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습니다. 그 조항 자체도 허술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으니까 이제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 시작 때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지적했던 주요 문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저희의 할아버지 세대, 아버님 세대의 고생의 결과, 그 피땀 어린 헌신의 결과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제군주가 법도 만들고 포고령도 내리고 원님재판도 하고 그런 시대는 결국 인권이 유린되고 왕족과 아부하는 귀족만 잘 살게 되더라, 그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삼권분립이 나온 것 아닙니까?

법 만드는 기관은 국민이 직접 뽑아서 통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공직자를 선출하되, 시험으로 뽑되 선출된 권력, 입법권력이 견제해라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진행한 일에서 잘못이 있으면 독립된 사법부가 견제해라. 이렇게 전제군주의 권력을 3개로 쪼갰을 때 가장 혜택받는 것은 국민이다. 저는 민주공화국의 설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설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치의 본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통합되고 통일돼서 행복하고 안

락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물적인 기반, 정신적 기반을 물려받았습니다. 제도적 기반도 갖추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게 더 좋게 고쳐서 더 잘 운영하면 될 뿐입니다.

도쿄 특수부에서 시작한 검찰 특수부는 대한민국에 건너왔고 저희는 그 장치를 최소한으로 쓰기보다는 과잉으로 키워 냈습니다. 저는 그 잘못이 검찰 특수부에 앞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툭하면 고소하고 툭하면 고발하고, 원래 고발 좋아하는, 고소 좋아하는 집안치고 잘되는 집이 없다고 하는데 어려서 부모님께 들은 그 격언을 지금 이 순간 여야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이 누적돼서 검찰 특수부가 커졌고 그것이 헌법적·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에 후유증과 반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관리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기소와 수사를 원스톱 서비스하던 검찰이 기소·수사 분리 원칙 아래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면 이것은 투스톱 서비스입니다. 투스톱 서비스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도 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제도 설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투스톱 서비스가 생겨났을 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이 이 제도 설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를 바라보고 검찰개혁을 하면 안 된다. 검찰개혁은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하여야 한다’. 검찰개혁에 직접 관여했던 전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말을 지켰습니까? 이 말 속에서 중수청을 탄생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제가 누누이 들은 말은 시간이 어느새 부족하다, 검찰청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들은 국민만 바라보고, 그중에서 힘없고 백 없어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국민들을 바라보고 설계한 설계입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반대토론에 나선 겁니다.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소명은 지금 이 순간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분석하고 토론드린 중수청법은 복잡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세세히 이해하시고 예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법률가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률가들의 전공사항인 이 사법제도 개편조차 진지하고 충분한 숙고와 토론이 없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배지의 무게는 언제 작동하는 것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시작하면서 저희 지역구와 동료 의원들께 거듭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 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번을 하더라도 의미 있게 하고 싶다. 나의 시간, 박수민의 시간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보내 준 이 4년의 시간만큼은 가장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제게 주어진 정치적 환경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정말 의미 있게 보냈었는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법안 하나만은 최선을 다해 보고 싶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수청법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받았던 압박은 이러면 법안 심사가 너무 길어진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힘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의지할 데 없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느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중수청으로 만들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국회의석이 그사이에 바뀔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청만 없애 놓고 이제 중수청을 탄생시키면서 또 시간이 없다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동경 특수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문제였다면 특수부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직접수사가 비대해져서 문제였다고 하면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권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검찰, 검사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간의 핑퐁 문제, 공무원 간의 핑퐁 문제가 이미 불거져서 미처리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수사·기소 기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피해, 그 속에서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비용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조화해 나가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기본이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되고 국가기관 간 협력을 해야만 이해 갈등이 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정의 구체적인 장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법안에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만든 것은 법무부장관 밑에 있을 때 생겼던 모든 부작용들을 고쳐 보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 사건을 중수청장을 통해서 버젓이 지휘할 수 있는 조항은 왜 아직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입니까, 카피입니까, 아니면 답습입니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금일 법안은 이 기본 취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이 국회에서 그 많은 법률가들이 땀을 쏟아야 하는 품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좋게 고쳐져야 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고쳐져야 합니다.

저의 안타까움을 전달드리고 무제한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영호 박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성권)

(13시10분)

○의장대리 김영호 다음은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산 사하구 이성권 의원입니다.

오늘 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률 무제한토론에 앞서 어제 대전 공장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

다.

어제 대전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고 5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안타깝게도 4명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네 분의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이 겪고 계실 애타는 심정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실종자분들의 신속한 구조와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치료와 유가족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수습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최선의 가치임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우리 국회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수사기관 신설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운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함께 중수청법마저 집권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법안소위가 열리고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로써 강행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17건의 쟁점사항이 있었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쟁점사항 5개를 남겨 두고 추가적인 논의,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인 졸속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정치 실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는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충분한 숙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빛의 속도로 졸속 강행 처리된 것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법률체계와 해석 그리고 경험 축적, 기관 간의 협력, 절차적 통제가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하는 고도의 국가적인 행위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적인 행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를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아닌 세대와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지혜, 경험 그리고 전통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개혁할 수 없는 국가는 보존할 수 없는 국가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아니했습니다만 또

한 제도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한순간에 갈아 치우는 방식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버크의 저서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수평이 되게 맞추려는 자들은 절대로 평등을 이룰 수 없다. 모든 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시민들로 이루어지는 법이어서 그중 어떤 부류가 최상위에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평등화하려는 자들은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변화시키고 전복시킬 뿐이다.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땅 위에 두어야 할 것을 그들은 공중에 세움으로써 사회라는 건축물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 그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재봉사 단체와 목수 단체들은 찬탈 중에서 최악인 자연적 특권에 대한 찬탈을 통해 당신들이 그들에게 강요한 지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인간 정신의 왕성한 생산력에 따라 저절로 자라는 힘을 어떤 것이라도 파괴하는 행위는 물질세계에서 물체의 분명한 활동 속성을 방해하는 짓을 도덕세계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질산 소다에 함유된 기체의 팽창력이나 전기 그리고 자기의 힘을 만일 우리에게 파괴할 능력이 있다면 없애려고 덤비는 것과 같다.

나는 어떤 자가 감히 자신의 나라를 백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자신이 좋을 대로 그 위에 갈겨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오만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열렬한 공상적 선의로 가득한 자라면 자신의 사회가 자신이 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구성되기를 기원할지 모른다. 그러나 훌륭한 애국자이고 진정한 정치가라면 자신의 국가에 현존하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최선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할 것이다.

고수하려는 성향과 개선하려는 성향이, 능력이 같이 가는 것이 정치가에 대한 내 기준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두 그 생각에서 천박하고 실행에서 위험하다.

에드먼드 버크의 이런 말에서 가장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대라고 할지라도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혁은 시민적·정치적 집합체를 분해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버크는 얘기했습니다.

즉 버크는 급진적인 개혁은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다는 오만함에서 나오며 이는 필연적으로 공포, 독재, 사회적 질서 붕괴라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급진적 행위와 결합할 때 그 개혁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급진적인 개혁이 역설적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논리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연관됩니다.

검찰개혁의 결과가 검찰청 폐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에,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을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와 국민께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폐지는 극약처방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의 체계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급진성의 후과에서 자유롭고 개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문제점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행보를 차단하겠다면서 신설기관인 중수청은 정치적 편향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절한 수사 통제 없이 수사관의 임의적·자의적 행보를 보장하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한 결정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주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사람의 철학가가 주장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인 영국 철학자 칼 포퍼입니다. 칼 포퍼는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사회를 한꺼번에 변혁시키려는 전체주의적 유토피아주의를 거부한 것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칼 포퍼는 작은 개혁은 사회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악을 고치기 위해서 작은 조정들을 단계적으로 누적시키는 방식을 '점진적 공학'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칼 포퍼의 저서인 '열린사회와 그 적들' 중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 공학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방법론적으로 건전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채택하는 정치가는 그의 마음속에 사회의 청사진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인류는 어느 날엔가는 이상국가를 실현하고 지상에 행복과 완전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바랄 수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완전이란 도대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요원하며 인간의 모든 세대가 어떤 요구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 그 요구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 줄 제도적 방법이란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일 것이다. 그들은 고통을 당할 때는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점진적 공학자는 최대의 궁극적 선을 추구하고 또 그 선을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사회 최대의 악과 가장 긴급한 악을 찾고 그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국가 권력은 언제나 위험스러운 필요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계해야 할 것은 간섭주의적 계획에 따라 국가에 더 큰 힘을 부여하고서는 우리가 감시를 소홀히 하며 민주적 제도들을 더욱 강화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유를 상실하면 계획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우리는 상실하게 된다. 백성이 복지 계획을 시행할 힘이 없는데 국민 복지 계획을 실천에 옮겨서는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우리가 계획을 너무 많이 하면 혹은 우리가 국가에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하면 자유가 상실되게 된다. 이것은 계획의 종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우리에게 점진적 사회공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유토피아적 혹은 전제적 방법을 거부하게 한다. 또한 이런 고찰은 어떤 이상적 선을 수립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악들과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

말씀드린 내용은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 줄 폐단을 지적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드는 것처럼 급진적인 변혁은 사회를 카오스로 치닫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고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흡수하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었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관련 수사에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를 보고도 눈감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수사와 법률 전문성 부족, 수사기관 간 핑퐁 등으로 수사 지연과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소지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작동되는 방식에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수사 지연과 억울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결과물이 기대했던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 포퍼의 주장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 보자면 작은 개혁은 실패해도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구조개편은 실패할 경우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와 국가 변혁은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어야 하며 과단성보다는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청 해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는 기관 신설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은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억울한 피해자가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의 극단적인 검찰개혁 그리고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혁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선명한 의식의 발로, 본인 스스로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이러한 의식의 발로이고 국가가 정권의 실험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개혁은 반대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드는 급진적인 개혁일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 전체가 투영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에 투영된 국민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 체계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도 불안해집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국민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당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두고 '이심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뜻이 같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형사사법 시스템은 민심 이반의 모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로 보는 중수청 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청 해체로 인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구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만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중수청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영국에 관한 사항을 일부 발췌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권 체계는 검사 등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우리나라의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의 수사체계와 유사한 구조이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설치하는 개편안은 영국의 수사·공소 기관의 구조와 닮아 있다. 영국은 수사와 공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영국의 수사·공소 기관에는 왕실기소청, 경찰, 중대사기수사청, 국가범죄수사청이 있습니다. 이 중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국가범죄수사청은 수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미범죄나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국가범죄수사청은 마약, 자금세탁 등 중대범죄를 담당하며 중대사기수사청은 중대하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담당합니다. 중대사기수사청은 매년 10건 정도만 소관 사건으로 선정하여 연간 60건 내외의 사건만을 유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수사 권한은 일정 부분 중복되는데 국가범죄수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과 중대사기수사청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중대사기수사청이 사건의 인계를 요청하면 경찰이나 국가범죄수사청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영국 경찰은 주민 직선 지방치안위원장, 지방치안패널,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청장의 사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왕립기소청과 중대사기수사청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며 국가범죄수사청은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각각 장관급 소관 부처가 의회에 책임을 지고 기본정책의 결정 등 일정한 권한을 갖지만 각 청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상의 독립성을 가진다.

이렇게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진술인의 발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은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전문 수사기관도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의 검찰과 경찰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의 마약단속국이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의 범죄유형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간 형태의 수사기관으로는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있다.

20여 년의 논란 끝에 도입된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이며 홍콩의 염정공서 혹은 대만의 염정서가 공무원의 부패를 전담하는 경찰의 특수조직인 것과 달리 검사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다.

현재 중수청 법안들을 살펴보면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 범죄의 태양, 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송치 전 검사와 수사할 사항인 증거 수집의 대상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때 검사는 공소청 소속 검사인 것으로 보이며 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에 있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로서 주도적인 역할은 할 수 없고 의원입법안들에 따르면 검사들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아예 없다.

말하자면 현재 법률안들에 따르면 공수처가 영국, 뉴질랜드의 입법모델을 따라 검사들이 중심이 되어 수사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수청은 검사를 배제한 채 수사관 중심의 수사기관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적지가 않다.

검사의 역할을 배제 또는 축소한 상태에서 검찰청 수사기능의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모순이고 검사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공수처와의 관계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공무원범죄 등을 배제한 것만으로 공수처와 중수청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제받지 않는 중수청의 폭주 가능성과 대비책에 대한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 사설에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존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각 분야 범죄의 제1차 수사를 맡아 온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삭제했다. 세무·환경·노동 등 각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사경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이 되어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이다.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청법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완전히 사라진다.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사경이 아무런 수사지휘도 받지 않을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한다면서 경찰·

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아예 뭉개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 들 때 제2의 정치검찰·정치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도 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발췌한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수사관이 여러 요인에 의해 특정인을 혼내 주거나 봐주는 식의 수사를 할 때, 수사를 미루거나 사건을 암장하려 할 때 대비한 검사의 감시·견제 장치도 없어진다. 정치중립 문제 때문에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휘하는 경찰과 수사청은 그런 측면에서 더 취약하다. 지능형·권력형 범죄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배후 권력 및 자금력을 이용해 이런 취약점을 마음껏 악용할 수 있다.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사법시스템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파괴해서는 안 된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로 판검사를 겁박하는 소송이 남발하고 재판소원으로 재판제도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이제 수사·기소 체계도 그렇게 되려 한다.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고 선량한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 힘들어진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기대하기 힘들다. 사법적 각자도생 시대가 닥쳐온다.

이렇게 매섭게 언론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2025년 11월 간행물인 ‘인권과 정의’에 실린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의 법 정책적 문제’라는 글에 대해서 일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의 구조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경찰청이 병존하는 형태로 수사기능의 중첩과 비대화가 예상이 된다.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세 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놓일 경우에 사법적 성격의 수사기능이 행정권력에 종속되고 과도한 수사권력의 집중 현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이관함에 따라 종래 법무부에서 관장하던 수사기능이 대폭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게 되어 검사의 신분에서 새롭게 수사관으로 전환될 필요 인력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중수청에 대규모 검사파견제도를 실행할 것인지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직법부터 통과시킨 것이다. 공소청법의 제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수사관의 경우 전체 인력 중에 공소청에 남아서 수사에 전담할 인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검찰수사관들이 전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관점에서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배치나 직권면직은 피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전직 유도 등 합리적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수사관의 근무처의 선택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적절히 배분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검찰청 해체라는 급진적 기구 개편은 수사 권한의 민주적 통제보다는 행정적 지휘체계에 따른 권력 종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을 가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면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 통제 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사 역량이 저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사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경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서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 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의 0.8%인 7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고작 6.1%인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를 해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4.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에 수사 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가 고작 0.7%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에 불과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서 일부를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의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은 법률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그런 기준에서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가는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전문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중수청에 대한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 제도가 폐지되었고 검사 인력의 흡수는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인다.

여타의 의원입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는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안—원안입니다—원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극심한 반대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는 중수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사사법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 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다시 한번 발췌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혹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바로잡는 수사 통제는 어디로 갔을까.

지적장애인이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반복적으로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시청자가 늘어날수록 후원금이 쌓였고 폭언과 학대는 점점 수위를 높였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피해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상은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확산됐다.

앞으로 이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를 해야 할까? 단순 폭행이나 모욕으로 보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온라인 생중계와 수익 구조를 이용한 착취라는 점에서는 또 사이버범죄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수청 사건일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니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보기에도 한편으로는 애매하기도 하다. 이처럼 관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통제의 부재가 만든 사각지대를 보여 준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게임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형사사건의 책임을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지의 문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민생 사건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지연시킬 때, 부실하게 조사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할 때 뚜렷한 대응 방법이 없다. 감찰이나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후적·예외적 통제에 그칠뿐 일상적인 사건의 잘못을 바로잡는 통로가 아니다. 이의신청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제도여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이 없는 사건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둘째, 수사기관 간의 상호 회피를 막을 방법이 흐릿하다. 주목받는 사건은 언론과 여론의 감시가 작동해서 수사기관이 앞다퉈 달라붙는다. 반면 증거가 취약하고 피해 규모도 작은 민생 사건은 품은 많이 들면서 성과가 도드라지지 않는다. 관할 경계에 놓인 사건일수록 다른 기관에 떠넘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수사 통제가 약해진 구조에서는 이런 사건이 대충 종결되더라도 이를 끌어올릴 제도적 손잡이가 없다.

셋째, 기소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과거 검찰의 우수한 수사력은 검사 개인의 법률가로서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수사의 책임을 오롯이 지는 주체였기 때문이다. 수사가 부실하면 기소 자체가 어려웠고 엉성한 기소는 공소기각 결정이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인사평가와 개인 경력에 반영됐다. 그런데 앞으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기관이 보낸 기록을 그대로 받아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축소가 된다.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아도, 증거가 불충분해도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없는데 그 결과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은 거창하지가 않다. 수사 통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수사 통제의 공백을 메우는 형사검사의 보완수사는 직접수사 개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기록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충실한 기소나 공소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완수사는 송치된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빠진 부분을 메우는 수사 통제 기능을 한다.

보완수사요구 제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 수사지휘 폐지 이후에 졸속으로 도입된 보완수사요구는 구속력이 없고 요구와 동시에 검찰 사건번호가 사라지면서 관리와 추적이 어렵다. 경찰이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없기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수사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보완수사 남용이 우려된다면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한계를 정하면 된다. 보완수사의 범위를 사건 동일성 내로 한정하고 기간과 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면 충분히 통제할 수가 있다. 실제로 스토킹 사건으로만 송치된 장기간 친부 성폭력 사건이 보완수사를 통해 친족 강간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에 이른 사례는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 준다. 법원 역시 이 사건 보완수사를 동일성 범위 내의 적법한 수사로 보았다.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한계를 넘어설 만큼 절차와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검찰 사건번호를 유지한 채 기한을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충실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이 수사관과 지휘라인에 귀속되는 구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기초부터 허물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그 기초는 수사기관의 간판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어떤 절차로 이어지고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에 관한 약속이다.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긴 곳은 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예원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또 다른 말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형사사법체계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보다도 완결성이 높아야 합니다. 완결성이라는 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시스템이 최소한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도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설계되면 안 됩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이 지적은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이라는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

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증가한 것으로 이것을 퍼센트로 보면 34%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50.4일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17일이 더 걸리고 기존의 처리 속도보다 34%가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75.1일이 걸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112.7일이 걸려서 무려 50%의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6~50%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법무부 보고서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께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하고 잦은 변경으로 인해 유발된 수사 지연 문제는 경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검찰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확대되어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담긴 수사 지연에 관한 언론 보도문 일부를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4년 9월 30일 자 중앙일보의 '수사권 조정 이후, 배임죄 수사 지연 2배로 늘었다'는 기사문의 일부입니다.

'복잡한 법리 판단을 요하는 배임 사건의 지연은 더 두드러졌다. 경찰 단계의 6개월 초과 사건 비율이 2020년엔 20.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0.6%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이버 사기의 경우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90.2일에서 지난해 상반기 112.7일로 20일 이상 늘어났다'.

두 번째는 2024년 10월 10일 자 경향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제목은 '경찰 맥 빠졌나…… 사건 처리 기간 줄고, 재수사 지시는 늘어'라는 기사의 제목인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에 대한 인정과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 즉 375건에서 9.6%, 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사건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어났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의 과오에 대한 보완 혹은 재수사 지시는 늘었다는 뜻이다. 사건 처리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경향신문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조선일보 2025년 5월 14일 자 기사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문 정부 때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처리 기간 313일→484일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에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기간이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대폭 줄고 경찰 수사지휘권마저 폐지되면서 두 기관이 서로 사건을 주고받는 핑퐁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언론사의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모든 내용이 잦은 형사사법체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특히 급진적인 변경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혼돈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언론들이 강하게 질타 내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성이 약하고 수사 역량이 저하될수록 수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중수청의 신설이 수사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입법적 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적 숙의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가 되는 쟁점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를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까지 일방 통과를 시키고 오늘의 본회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수사의 정권의 종속화 혹은 그러한 제도화한 중수청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향방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외형상으로는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최초 발의된 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일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관계를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유사하게 밀접한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과의 관계와 같이 수사에 대해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수사권을 기소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인사·직무에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관여 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정부안은 현재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동일한 구조임.

다음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이첩요청권, 이첩권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중대범죄 수사에서 경합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중대범죄 수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수사 체계를 단일화하여 수사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수사기관 간의 경쟁 체계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하고 조직 간 경쟁을 추구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수사개시 후 검사 통보 등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및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렇게 국회 전문위원은 중수청법 조항대로라면 행정안전부가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지휘받는 구조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독립성을 지니는 구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중수청과 행정안전부의 관계가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처럼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우려를 낸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는 나름의 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과 흡사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인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과 언론들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신중 판단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는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 주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 판단을 의견 제시였다고 항변을 하지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언론과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 정부는 경찰청 신설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의 '치안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와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제2조에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둔 바 있습니다. 경찰국은 치안 사무에는 법률상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을 향한 정치적 간섭이라며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2022년 당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안 사무 간섭 배제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역사에 반하는 개악이라고까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권 보장 역시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리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내로남불식 해석, 이중인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수청법상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불개입에 관한 법률적 조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법 제16조제2항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법 제14조에서는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라 함은 대통령령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둘째,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셋째, 국가중요시설의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넷째,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상의 치안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사무로 규정하지 않고 치안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을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와 같은 지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법률 조항에서 나타나듯이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하지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가 없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청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흡사한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은 인정하여야 될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고 관련 사안별로 독립성 논쟁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기관이 정치권력 도구나 민주주의 질서 위협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수사가 정권의 통치기능으로 종속되거나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분투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거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고 국민과 언론과 국회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중수청 설치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검찰청이 해체된 이후에 공수처를 제외한 사실의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견제와 분산을 통해 각 기관의 월선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월선은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특정 부처의 산하로 모든 수사기관이 편입되면 기관 간의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지, 장관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이 핸들링되지 않을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라도 국회는 중수청법에 대해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상에서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조항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법 제2편 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그리고 제122조,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그리고 두 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세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다섯 번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섯 번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곱 번째, 형법 제123조의2에서 정한 범죄. 여덟 번째,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아홉 번째,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열 번째,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으로 보자면 내란죄와 외환죄를 비롯하여 경제, 사이버, 방위사업, 마약, 부패까지 사실상 존재하는 형사사법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를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왜곡죄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중수청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에 따른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고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과연 직을 걸고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중수청 수사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검찰청 해체에 따른 현행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의 특성상 현행 검사가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이유를 담고 있는 다수의 기사를 발췌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적격심사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듯 검사가 신분을 보장받는 이유는 첫째,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 확보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공소 제기 업무를 수행할 때 정권이나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보장입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 판사에 준하는 엄격한 신분보장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의 독립된 지위가 필요합니다.

넷째, 신분 안정 및 소신수사 때문입니다. 신분 불안으로 인한 소신 없는 수사나 부당

한 인사조치 위협을 줄여서 정치검사화를 막고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검사의 신분보장 필요성에 대해서 과거에 갑론을박이 많았기는 하지만 신분보장을 통하여 소신수사를 보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결을 보이는 글을 일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25년 11월호 간행물인 '인권과 정의'에 실린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의 법정책적 문제'라는 제하의 글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된 이래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당시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래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이다. 정부조직법 부칙의 상세한 규율도 없고 검찰청법 폐지도 함께하지 않은 채 단지 검찰청의 명칭만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제7조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재배치는 국가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어 왔다. 검찰수사관을 중수청으로 재배치하는 문제는 이러한 헌법상 신분보장 원칙과 조직 개편 필요성 간의 균형점을 찾는 복잡한 문제로서 공무원 임용령상 전직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력 규모 및 기능의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 검사의 배치 문제, 수사관의 행정적 승진체계의 불일치, 직무상 권한 분담의 혼란 등이 예상이 된다. 검사와 수사관을 단순히 양 기관에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 및 신분보장 원리에 저촉될 수가 있다.

검찰수사관 등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제4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행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검사의 사무는 단순히 기소에 국한하고 수사 기능의 박탈과 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악인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소유지와 수사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의 양날의 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 집행 감독, 사회적 약자 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지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 정부조직법은 검찰 기능을 공소청과 중수청의 이원 구조로 단순화하면서 검사의 본질적 직무 중 수사를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로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가하려면 공소유지의 전제인 수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야 하는데 양 기능의 분리로 인해 범죄자가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적 허점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무리한 급진적 개혁으로 검사의 직무가 축소되어 대량 퇴직이 발생한다면 형사사법 전문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약화될 것이다. 이는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고 검사의 인권 보호 및 공익 수행 기능을 약화시켜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신분과 직무 보장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만 이를 외면할 경우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구 검사징계법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업무 등을 통해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검사에 대하여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청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수청법이 통과될 경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의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 수사관이 소신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윗선의 하명을 받들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통하여 수사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조항이 중수청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신 있게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권력 범죄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으며 경제와 부패 범죄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국민들의 형사사법체계 신뢰도의 저하는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정치인의 이름으로만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형사사법체계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설계자의 이름으로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와 칼포퍼가 경계한 변혁의 급진성의 후과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수청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이로울 것이냐를 기준으로 놓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수청법이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전문가들, 대한변협 그리고 언론의 사설 내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신설에 앞서서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과거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중수청 설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수사권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라는 매우 본질적인 권력구조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는 졸속적이고 내용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논의 과정은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추진단이 주도한 각종 토론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중수청 설치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권력 분산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일관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중수청법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구조가 과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입니다. 수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수사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검찰이 축적해 온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과연 새로운 조직으로 온전히 이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단순히 조직을 분리한다고 해서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 인력 간의 유기적 협업 그리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형성된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분리·재편될 경우에 오히려 수사 공백과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거나 혼선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개혁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수사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수사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수사는 권력의 편의에 따라 설계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부터 중수청 설치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재편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법체계의 연속적인 구조 변화가 과연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헌법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기능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수사와 그리고 기소의 유기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되고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수사권력의 배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처리 지연과 책임소재 혼선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능이 충분한 준비 없이 구조적으로 변화할 경우 어떠

한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사체계를 재편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보다는 정치적 필요가 우선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홍승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경수사권조정 입법에 대한 평가,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한번 길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전개에 대해서 과정을 한번 짚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 이어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종전 형사소송법은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였으나 2020년 개정 형소법은 경찰에게 불송치권을 인정하면서 불송치사건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사건의 불송치가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하여야 한다. 경찰은 고소 고발 사건을 불송치할 때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통지를 받은 쪽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다.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서는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불송치결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 경찰의 요구는 송치 전 수사의 자율권을 요구하는 수준이었을 뿐 불송치결정과 같이 기소권에 준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불송치결정은 검찰권의 본질인 기소권의 일부로 해석된다. 사실행위로서의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인정하는 것은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으로 이해되지만 사법적 처분인 불기소에 준한 결정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인 직권주의 사법체계와 맞지 않다. 수사단계의 수사종결은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이전에 수사기관이 행하는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에 해당된다. 그러나 검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유무죄 판결 선고와 유사한 종국적, 실체적 사법 판단이다. 당사자주의 형사구조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도 캐나다에서는 경찰이 기소권을 행사한다. 한편 당사자주의의 원조인 영국이 기소권을 검찰인 CPS에 이관하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2022년 5월 9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봉쇄되었다.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고발인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발사건의 상당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한 단체 혹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내부자 고발에 의한 사건이므로 입법적으로 공익적 성격의 고발이 위축될 것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봉쇄로 고발사건 연 3600건이 사라질 것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별건수사 금지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어떠한 법리적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검찰수사권 제한이다.

2020년 2월 4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리고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한 바가 있다. 그런데 2022년 5월 9일 개정 검찰청법에 의해 그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되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었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조직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2022년 5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다. 임기 중 공포를 위하여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까지 변경하며 행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검수완박의 전개를 전제로 검찰권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의 내용을 검토하며 검찰과 경찰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현행 검수완박의 전개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글을 맺을 것이다.'

검찰권의 의의에 대해서 똑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근대 검찰의 탄생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을 다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검찰은 1808년 나폴레옹 형사소송법에 의해 탄생하였다. 사법기능 분리 원칙을 채택하여 수사 및 소추는 검찰이, 예심수사는 수사판사가, 재판은 판결법원이 관장하게 했다. 1808년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는 수사판사에 대한 감독 권한, 중죄에 대한 독점적 소추 권한, 최고사법경찰관의 지위가 인정되었으니 형사사법의 중추로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부터 형집행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라인강 주변 라인란트에 보급되었고 점차 프로이센으로 확대되어 독일제국 형사소송법의 기본이 되었다.

프로이센에서 검찰의 탄생이 프랑스의 자유주의적 형사사법과 같은 방향을 이루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장관의 지휘에 종속적인 검찰을 창설하여 판결의 독립성을 내세워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법원을 통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프로이센 검찰이 보여 준 권력의 시녀 역할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었고 검사에게 법관과 동일한 수준의 신분을 보장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형사소추를 막고 진정한 법률의 수호자로 만들자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1846년 7월 1일 법률에서 검사의 객관의무를 규정한 이래 1848년 3월 혁명 후 1849년 프로이센 전역에 검찰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검찰이 혁명에 의한 자유주의적 사상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1877년 형사소송법에서는 객관의무를 명문화하였는데 이것이 검사의 객관의무 규정의 기원이라고 한다. 검찰을 법률의 수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편으로 법원에 대하여 절차 준수를 감시하고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요구하며 잘못된 판결에 불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권한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수사절차에서 경찰을 통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륙법계에서 검찰은 행정부가 법원을 통제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니 법원과의 사이에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사절차에서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경찰 권력을 법치국가원칙에 의해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법치국가원칙의 대변인으로 부를 수가 있다. 한편 검찰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급속한 근대화의 시기, 전체주의가 강조되는 시기에 검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독일 나치시대와 일본 군국주의의 검찰이 통치의 중추였다고 강조한다.'

방금은 근대 검찰의 탄생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영미의 검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법계 수사구조는 국가라는 형벌권의 주체를 상정하지 않고 형사소송도 개인 사이의 분쟁으로 파악하는 점에서 유럽의 직권주의 수사구조와는 모습을 달리한다. 영미법계의 검사는 피해자를 대리한 경찰의 소추대리인이자 형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이므로 경찰수사의 지휘 통제와는 거리가 있다. 영국의 사법은 시민사회에 위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 경향이 강해 중앙집권적 국가경찰도 거부하였다. 1985년에서야 영국에서 검찰이라고 할 만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가장 최신의 검찰이지만 가장 무력한 검찰이라는 평가까지 받는다.

미국은 영국의 영향으로 사인소추 제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영국과는 달리 식민 초기부터 검찰제도가 확립되었고 독립 무렵에는 미국의 고유한 지방검사로 정착하였다. 유럽 본국에서 내몰린 이민자들이 건국한 독특한 전통에서 사회 전체가 범죄의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검찰과 주검찰로 이원화되어 대부분 지방검사를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다음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혹은 수사지휘권과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주장이 과도하여 형사소송법 제195조 그리고 제196조의 개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찰청과 검찰청이 주체로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통령 앞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조정을 약속하였기에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 검경의 논의에 맡겼다고 한다.

전해철 전 민정수석은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완전 개정하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경찰의 요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부분적인 수사권 조정안을 타협책으로 제시했으나 경찰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195조를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에 의미가 없다고 강경하게 고집을 부려 타협이 불가했다고 회고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경찰이 욕심을 부렸는데 허준영 경찰청장의 공명심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점을 몹시 후회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단절과 지휘체계의 혼란 부분에 대한 분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고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이다. 헌법상 정부에 속한 행정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실질적 보장은 장관의 국회에 대한 책임과 그 장관의 지휘체계에 의해 보장된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수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회에 대해 종국적 책임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따라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그 수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계통에 있을 필요가 있다. 구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들이 검사의 지휘계통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사법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는 검사의 지휘를 통해 통제됨으로써 그 지휘계통이 법무부장관으로 연결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연결된다. 의회민주주의와 장관책임제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도 마찬가지로 사법경

찰관, 검사, 법무부장관으로 연결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휘체계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고리를 확보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자치경찰제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확인된다.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권에 관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의 검찰이 직권주의적 검찰과 같은 방식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연방수사국도 검사의 지휘 밖에 있으나 연방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연결되므로 무리가 없다. 일본에서는 송치 전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송치 후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이다. 일본도 도도부현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경찰의 본래 업무인 치안은 현장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지시·복종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역이다.

국가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법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장과 검사를 각 관청으로 규정하여 내부적 지휘관계의 통제하에서도 외부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검찰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검찰제도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도 행정경찰은 경찰 내부의 행정적 지휘와 통제에 따르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와 통제에 따른다. 프랑스에서 일찍부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한 이유도 경찰조직 내 지휘계통에 따라 사법경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조직 내 상관인 행정경찰의 부당한 관여나 통제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검사 또는 수사판사의 지휘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그가 속한 사법기관에게 요청하거나 그 기관으로부터의 명령이나 지시에만 따를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그 임무가 종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가 속한 사법기관에 각종 수사행위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 또는 수사판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각 국가별 민주적 정당성과 또 지휘체계의 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지금부터는 중수청법의 문제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가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고, 영국 철학자 칼 포퍼는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곱씹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한

국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정치인 관련 수사에 과연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패를 보고도 눈감는 모습을 손쉽게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와 법률 전문성 부족 그리고 수사기관 간의 핑퐁 등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고 수사 지연과 억울한 피해의 당사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결과물이 기대했던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칼 포퍼 그리고 에드먼드 버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칼 포퍼의 주장에 숨어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개혁은 실패해도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구조 개편은 실패할 경우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와 국가 변혁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어야 하며 과단성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청 해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와 기소를 맡는 각각 기관의 신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은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억울한 피해자가 보호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의 극단적인 검찰개혁,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국민의힘은 개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선명의식의 발로이고 국가가 정권의 씨름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개혁은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드는 급진적인 개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 전체가 투영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에 투영된 국민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 체계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도 불안해집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국민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당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두고 '이심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뜻이 같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형사사법 시스템은 민심 이반의 모태가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과 그리고 언론, 국민들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청 해체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구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만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중수청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영국에 관한 사항을 한번 일부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권 체계는 검사 등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우리나라의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전의 수사 체계와 유사한 구조이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설치하는 개편안은 영국의 수사·공소기관의 구조와 닮아 있다. 영국은 수사와 공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영국의 수사·공소기관에는 왕실기소청, 경찰, 중대사기수사청, 국가범죄수사청이 있다. 이 중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국가범죄수사청은 수사만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경미 범죄나 일반 범죄를 담당하고 국가범죄수사청은 마약, 자금세탁 등 중대범죄를 담당하며 중대사기수사청은 중대하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담당한다. 중대사기수사청은 매년 10건 정도만 소관 사건으로 선정하여 연간 60건 내외의 사건만을 유지하여 처리하고 있다.

각 기관의 수사권한은 일정 부분 중복되는데 국가범죄수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과 중대사기수사청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중대사기수사청이 사건의 인계를 요청하면 경찰이나 국가범죄수사청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영국 경찰은 주민 직선 지방치안위원장, 지방치안패널,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청장의 사각 체제로 운영이 된다. 왕립기소청과 중대사기수사청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며 국가범죄수사청은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각각 장관급 소관 부처가 의회에 책임을 지고 기본 정책의 결정 등 일정한 권한을 갖지만 각 청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상의 독립성을 가진다.

이렇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을 했던 진술인의 발언 자료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전문 수사기관도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검찰과 경찰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의 마약단속국이 후자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 기능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의 범죄유형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간 형태의 수사기관으로는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있다. 20여 년의 논란 끝에 도입된 공수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을 모델로 한 것이며 홍콩의 염정공서나 대만의 염정서가 공무원의 부패를 전담하는 경찰의 특수조직인 것과는 달리 검사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다.

현재 중수청 법안들을 살펴보면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 범죄의 태양, 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송치 전 검사와 수사할 사항인 증거수집의 대상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때 검사는 공소청 소속 검사인 것으로 보이며 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에 있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로서 주도적인 역할은 할 수 없고 의원 입법안들에 따르면 검사들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아예 없다.

말하자면 현재의 법률안들에 따르면 공수처가 영국, 뉴질랜드의 입법 모델을 따라 검사들이 중심이 되어 수사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수청은 검사를 배제한 채 수사관 중심의 수사기관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검사의 역할을 배제 또는 축소한 상태에서 검찰청 수사 기능의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모순이고 검사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공수처와의 관계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공무원 범죄 등을 배제한 것만으로 공수처와 중수청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의 형태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수청이 통제받지 않아서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구권조차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에 기사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 국회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각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 온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삭제했다. 세무, 환경, 노동, 각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 명가량의 특사경이 검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 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이 되어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이다.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처법 조항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사경이 아무런 수사 지휘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한다면서 경찰 그리고 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아예 뭉개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언론의 사설에서 지금 현재 중수청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일부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서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제2의 정치 검찰, 정치 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통제받지 못하는 중수청은 똑같은 정치 중수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장 우원식 이성권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천준호 의원 등 16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한 후에 순서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권 의원님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다음으로는 3월 18일 자 다른 언론사의 사설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발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수사관이 여러 요인에 의해 특정인을 혼내 주거나 봐주는 식의 수사를 할 때, 수사를 미루거나 사건을 암장하려고 할 때에 대비한 검사의 감시·견제 장치도 사라졌다. 정치 중립 문제 때문에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휘하는 경찰과 중수청은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취약하다. 지능형·권력형 범죄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배후 권력 및 자금력을 이용해 이런 취약점을 마음껏 악용할 수 있다.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파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로 판검사를 겁박하는 소송 남발, 재판소원으로 재판 제도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이제 수사·기소의 체계도 그렇게 되려고 한다.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고 선량한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기 힘들어진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기대하기 힘들다. 사법적 각자도생 시대가 닥쳐온다.

사법적 각자도생 시대가 닥쳐온다는 언론 사설의 지적이 정말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이 아닌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2025년 11월호 간행물인 '인권과 정의'에 실린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의 법정책적 문제'라는 보고서에 대해서 일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의 구조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경찰청이 병존하는 형태로 수사기능의 중첩과 비대화가 예상된다.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세 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놓일 경우 사법적 성격의 수사기능이 행정권력에 종속되고 또 과도한 수사권력의 집중 현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이관함에 따라 종래 법무부에서 관장하던 수사기능이 대폭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게 되어 검사의 신분에서 새롭게 수사관으로 전환될 필요인력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중수청에 대규모 검사파견제도를 실행할 것인지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직법부터 통과시킨 것이다. 공소청법의 제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검찰수사관의 경우 전체 인력 중에 공소청에 남아서 수사에 전담할 인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들이 전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관점에서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 배치나 직권면직은 피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전직 유도 등 합리적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검찰수사관의 근무처의 선택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적절히 배분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검찰청 해체라는 급진적 기구 개편은 수사 권한의 민주적 통제보다는 행정적 지휘체계에 따른 권력 종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경찰권력을 가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기능이 약화되면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통제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수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

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 있어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해 드린 통계입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검사 910명 중에서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에서 고작 0.8%로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 중에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그래서 법률적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수청이 신설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로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3.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 수사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업무 선호가 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였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 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 인력의 흡수는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중수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사사법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 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년에서 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행안위원회의 입법공청회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일부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바로잡는 수사 통제는 어디로 갔을까.

지적장애인이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반복적으로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시청자가 늘어날수록 후원금이 쌓였고 폭언과 학대는 점점 수위를 높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피해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상은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확산됐다.

앞으로 이 사건은 과연 어디에서 수사해야 할까? 단순 폭행이나 모욕으로 보면 경미한 사건이니 경찰이 수사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온라인 생중계와 수익 구조를 이용한 착취라는 점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중수청 사건일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니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이처럼 관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통제의 부재가 만든 사각지대를 보여 준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게임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어지는 형사사건의 책임을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민생 사건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지연시킬 때, 부실하게 조사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할 때 뚜렷한 대응 방법이 없다. 감찰이나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후적이고 예외적 통제에 그칠 뿐이고 일상적 사건의 잘못을 바로잡는 통로가 아니다. 이의신청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제도여서 다음 단

계로 나아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이 없는 사건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둘째, 수사기관 간 상호 회피를 막을 방법이 흐릿하다. 주목받는 사건은 언론과 여론의 감시가 작동해 수사기관이 앞다퉈 달라붙는다. 반면에 증거가 취약하고 피해 규모가 작은 민생 사건은 품은 많이 들면서 성과가 도드라지지 않는다. 관할 경계에 놓인 사건일수록 다른 기관에 떠넘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수사 통제가 약해진 구조에서는 이런 사건이 대충 종결되더라도 이를 끌어올릴 제도적 손잡이가 없다.

셋째, 기소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과거 검찰의 우수한 수사력은 검사 개인의 법률가로서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수사의 책임을 오롯이 지는 주체였기 때문이다. 수사가 부실하면 기소 자체가 어려웠고 엉성한 기소는 공소기각 결정이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인사 평가와 개인 경력에 반영됐다. 그런데 앞으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기관이 보낸 기록을 그대로 받아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축소된다.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아도, 혹은 증거가 부족해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그 결과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은 거창하지가 않다. 수사 통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수사 통제의 공백을 메우는 형사검사의 보완수사는 직접수사 개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기록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충실한 기소나 공소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완수사는 송치된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빠진 부분을 메우는 수사 통제 기능을 한다. 보완수사 요구 제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 수사지휘 폐지 이후에 졸속으로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는 구속력이 없고 요구와 동시에 검찰 사건번호가 사라지면서 관리와 추적이 어렵다. 경찰이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 수사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보완수사 남용이 우려된다면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한계를 정하면 된다. 보완수사의 범위를 사건 동일성 내로 한정하고 기간과 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면 충분히 통제할 수가 있다. 실제로 스토킹 사건으로만 송치된 장기간 친부 성폭력 사건이 보완수사를 통해 친족강간으로 기소돼서 유죄 사건에 이른 사례는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 준다. 법원 역시 이 사건 보완수사를 동일성 범위 내의 적법한 수사로 보았다.

보완수사 요구 제도를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한계를 넘어설 만큼 절차와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검찰 사건번호를 유지한 채 기한을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충실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이 수사관과 지휘라인에 귀속되는 구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기초부터 허물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그 기초는 수사기관의 간판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어떤 절차로 이어지고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에 관한 약속이다.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기는 곳은 언제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또 새로운 제안 사항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드는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김예원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말을 짧게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보다도 완결성이 높아야 합니다. 완결성이라는 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관계없이 시스템이 최소한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도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서 설계되면 결코 안 됩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서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가 되어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를 한 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라는 법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즉 34% 증가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50.4일이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다.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다. 2019년도에는 75.1일이 걸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112.7일이 걸려 약 50%가 증가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매우 뚜렷하였다. 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기한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 36%에서 50% 선까지 급증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미제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 2019년 9%에서 2024년 28%, 횡령은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로 늘었다.

이렇게 법무부 보고서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중수청에도 견주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있고 사이버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에 노출돼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잦은 형사사법체계의 변경, 특히 급진적인 변경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혼돈이 확인되는 보고서를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성이 약하고 수사 역량이 저하될수록 수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점입니다. 중수청의 신설이 수사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입법적 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의 정권 종속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이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신중판단이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가량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주는 선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판단을 의견 제시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의 지적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률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서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수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불개입에 대한 법률적 조항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렇듯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가능하나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없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보유·행사하고 있습니다.

○의장 우원식 이성권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의원 예.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본회의장에 모인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또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또 논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성권 위원입니다만 지난주에 공소청법과 관련해서 입법공청회를 마치고 그리고 법안심사소위를 세 차례 거치고 난 다음에 행안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뒤집을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과연 충분하게 논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17개의 쟁점사항이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5개까지는 좁혀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5개와 17개의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이 5개의 쟁점에, 남아 있는 쟁점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그야말로 중수청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행안위에서 졸속적으로 의석수를 활용을 해서 강행 표결 처리를 했고 그게 이번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과 그리고 악에 대한 개념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선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의식에서 기반해서 내가 추진하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천국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착각이 결국은 그 국가와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소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수청법뿐만 아니라 공소청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들의 손으로 사법파괴 3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것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 21대 국회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장악한 국회에서 입법독재, 한마디로 연성독재를 해서 이어서 행정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는 삼권분립의 가장 중요한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까지 무너트리려고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역사가 오늘의 현장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0인 서면동의)

(16시07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결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 김남희 의원, 박민규 의원, 박지혜 의원, 이용우 의원, 황정아 의원, 차규근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8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2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8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5)

(16시32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투표 다 했어요?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7674)

(16시33분)

○의장 우원식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천준호 의원 등 16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천준호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취지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신속히 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 및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및 증거 조작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큽니다.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시급합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우원식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655)

(16시36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서영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20일, 어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 기관,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의 목적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조작기소를 행하였다는 의혹과 그 증거가 쏟아져 나옴에 따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며 다시는 이러한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와 관련하여 법원,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호반건설, 쌍방울, 부산저축은행 등 다수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서류제출 요구를 통한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은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50일간 실시하고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서영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 및 2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예지)

(16시40분)

○의장 우원식 먼저 김예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의원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을 끈 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먼저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기에 앞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삶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을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안타까움과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갑작스러운 비보 앞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그 슬픔은 감히 제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서도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신 소방대원과 구조 인력 여러분들의 안전을 함께 기원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예지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6시 43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0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예지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의원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해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비극이 단순한 사고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남겨진 과제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마주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국회에는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닌 국가기관입니다.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선 저의 마음 또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중간에 교체하실 때 가신다고 또 누가 다시 오셨다고 알려 주셔야 제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거나 혹시 교체하시는 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여기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예지 의원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에 대해 나왔을 때 굉장히,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 이 말이 잘 와닿을 수 있을까 하면서 다양한 지인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알권리, 즉 정보접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그런 설명을 했더니 '그것 어차피 통과하고 어차피 할 거잖아. 그런데 왜 해?'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게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잘 보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곧 BTS의 공연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필리버스터 외에 주목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잊혀지고 묻히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 필리버스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가 뭔지 잠시만 쉽게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고 그 본뜻이 저의 필리버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다른 형식의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장치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한마디로 무제한토론인데 무제한은 아닙니다. ‘종결을 해라’ 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24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동안 이 합법적인 최후의 보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수당이 어떤 안건, 이번에 올라온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인데 보통은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하실 때 법안에 대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조사에 관한 거지요.

통과시키려고, 내일 당연히 통과되겠지요. 그런데 통과시키려고 하실 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원래는 시간제한이 없어야 되지만 있게 계속 발언을 이어 가서 나중에 표결을 좀 늦추도록, 합법적인 방해 전략입니다. 합법적인 방해를 죄송한 마음으로 24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업무로, 저도 바쁜 사람인지라 의원님들 바쁘신 줄 아니 다른 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건 통과를 최대한 늦추거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안건이 왜 문제인지, 왜 우리가 이걸 방해하는지를 알려야 되는데 저의 24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국정조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정조사가 뭐야? 국정감사는 들어 봤는데 국정조사는 처음 들어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정감사랑 국정조사는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르지만 우선은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국정감사는 가을에 하고 국정조사는 아무 때나 요청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내용이고 국정조사는 지금처럼 어떤 사건을 직시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정조사에 대한 건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점자 자료를 이용하고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하듯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빛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주로 촉각이나 청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의 온도, 공기의 긴장, 지금 앞에서 다른 말씀 하시는 의원님들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책임의 무게 같은 것들입니다.

국회에 오기 전에 저는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분명한 형상으로 그려 본 적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든든한 소나무처럼 어떤 상황에도 푸른색을 잃지 않는 존재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면서 시간이 지나도 그 기준이 흐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믿어 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정치를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좀 달랐습니다. 정치의 모습은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채 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분명했던 기준이 흐려지고 또 본질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지켜야 할 원칙과 책임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아닌지 사실상 깊이 고민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정치는 헌법의 경계를 보아야 하고 또 권력의 한계를 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그 결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무게를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의 이 정치는 너무 자주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보다 유불리를 그리고 제도보다 진영을 또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효과를 앞세우는 모습이 반복되는 듯합니다.

저는 대개는 장애인 정책을 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권한 역시 정치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책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표결하기 위해서 국회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벽에, 배리어(barrier)에 막혀서 표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각오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1차 때부터 2차 표결에까지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계엄은 위헌 위법이라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당론이나 정치적 유불리보다 앞서서 사안마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는 여전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음표도 많습니다.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엄격히 구분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되는 이 국정조사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 국정조사 요구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삼권분립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듣고 사회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하지만 사실 먹고살기 바쁘고 그런 상황에 그리고 저의 필리버스터를 소수의 분들이기는 하지만 보고 계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 삼권분립이 뭔가를 좀 설명하고 가야 저의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나라를 세 가지 역할로 나누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건 하나의 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드리고 싶은데요. 축구 경기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법은, 국회가 입법부로 되어 있는데요. 규칙을 만듭니다. 축구를 어떻게 할지 규칙을 만듭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손을 쓰면 안 된다, 오프사이드는 이럴 때 적용한다 같은 그런 규칙입니다. 규칙이 법이지요. 법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입법기관 종사자지요.

그리고 행정이 뭐냐? 정부, 축구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겠지요. 규칙에 따라서 실제로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들, 선수들이 뛸 운동장을 관리해야 하고요. 고르지 않으면 선수들이 뛰다가 부상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다지는 것도 해야 되고요, 유니폼을 준비하고 또 관중들이 여러 분들이 오시다 보면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경하고 축구를 즐기고 응원할 수 있게 돕는 운영팀입니다.

그러면 사법은 뭐냐? 오늘 사법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사법은 법원입니다.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즉 경기 중에 누가 반칙하나, 아까 정해 놓은 룰, 처음에 입법기관에서 정해 놓은 그 규칙을 누가 반칙했는지 어겼는지 규칙을 판정하는 그런 심판들입니다. 이건 레드카드를 누구를 줄 것인가 또 미리 못 봤으면 영상을 보고 판정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사법부를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분리해야 할까요? 심판이 사법이라고 그랬고 규칙 만드는 사람이 입법이라고 그랬고 또 행정은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요, 만약에 하나로 합쳐 놓으면. 규칙도 만들고 운영도 하고 심판도 하고 혼자 다 하면 중간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자기 팀에게 유리하게 심판을 할 수도 있고 지고 있는 경기를 이겼다고 할 수도 있고 규칙이 없는 굉장히 엉망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축구 경기로 대충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삼권분립을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 역할을 절대 한 사람이 하지 못하게 딱딱 나눠 놓았는데요. 서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잘하나? 그런데 혼자 이걸 다 하면 가끔 놓칠 때도 있고 그러겠지요. 실수를 할 때도 있겠고 일부러 놓칠 때도 있겠고. 그래서 심판이 이상하게 판결하면 운영팀에서 항의하기도 할 수 있겠지요, 이걸 나눠 놓으면. 그런데 운영팀이 돈을 마음대로 쓰면 규칙 만드는 사람들이 조사를 할 수 있겠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느 한 명의 팀이 또 어느 한 명의 힘이 너무 세져서 관중들 또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입법, 법을 만들고, 국회가 하고요. 또 행정, 법대로 일을 하고 운영을 하고요, 정부가. 또 사법, 법대로 판단 법원에서 하고요. 이런 삼권분립은 너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감시해서,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제대로 잘 운영해라라는 어떤 하나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왜 사법기관, 법원이 되겠지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지는 제가 지금 쭉 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삼권분립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흩트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의 본질인데요.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서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온 권력분립의 금도가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 자리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명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은 겉으로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겠다 하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정치의 영향력 아래 두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개별 수사 과정까지 정치적 기준을 투영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

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요. 자칫 사법의 정치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에 대해서 단순한 옹호의 입장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검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조봉암 선생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사법적 희생양이 되었던 그 비극 그리고 유신시절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을 통해서 민주화의 열망이 내란으로 왜곡되었던 시대 그리고 전두환 정권 당시 부림 사건을 통해 평범한 시민들이 조작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례는 검찰이 권력에 종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PD 수첩 사건도 있었고요. 박근혜정부 당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의 갈등도 있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검찰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방패로도 때로는 창으로도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문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검찰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깊어졌다는 점 역시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단순히 정치검찰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교훈일까요, 아니면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넘보는 순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 요구안은 그 본질적 해법인 제도적 독립성 강화 대신 국회라는 정치권력이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위험한 방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행정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안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정치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요. 또한 향후 수사 방향에까지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권력이 밀실에서 검찰을 이용했다면 지금은 공개된 공간에서 정치가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식으로 그 모습이 변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가 그 과정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의 공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축구경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입법부 그러니까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눈치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정을 하겠지요.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위축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

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또 법과 제도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정치적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이 뒤로 밀리고 오직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이 주목받는 사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에게 어떤 법치주의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은 권력의 분리를 통해서 어느 한 기관도 절대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 요구안이 갖는 헌법적 위험성과 제도적 문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국정조사 요구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 드리고, 그래야 공감을 하시고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구연월일이 있습니다.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자 이름이 있고 ‘등 14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조사의 목적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또 선택적 증거 채택 등 조작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남용되었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 그리고 협박했고 그다음에 2,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를 했고 3,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했고 4,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그리고 5,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했고 6,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건의 핵심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 또한 본인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면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음.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접견과 소주·연어 등 음식물 수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 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성태 등 핵심인물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당시 정부 인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선택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자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대표적으로 통계조작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가격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등에 압박하여 통계를 조작했다며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던 검찰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작'이라는 표현을 '수정'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애초부터 기획된 과잉수사였음을 방증하는 것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정부 문서 등 증거에 대한 자의적 해석, 왜곡된 법리 적용 등 조작기소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최근 재판부에서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5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고발했던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하하여 이러한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졌음.

아울러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대선개입과 여론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표적수사에 나섰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음. 특히 명예훼손죄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등 직접수사를 강행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비판이 잇따랐음.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며 다시는 이러한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함.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나. 위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다. 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

라입니다. 위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마.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4. 조사 시행위원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20일부터 한다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들었던 바에 의하면 우선 조사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착잡하기는 합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제가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가장 먼저 읽히는 단어, 여러분은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뭘까요? '조작'입니다. 이 요구서는 조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총 열두 번 등장합니다.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통계

조작, 증거 조작, 표현은 조금씩 다르고 사용 쓰임새도 다릅니다만 결론은 하나로 보입니다. 이 수사는 조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진 결론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조사라는 것은 결론을 어떻게 보면 열어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이 뭔지, 문제는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결과보고서로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요구서는 출발점부터 결론이 닫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맞는 사례들을 이렇게 죽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조사라는 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 판단을 강화하는 절차에 가깝기 때문이지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조작이라는 판단이 어디에서 내려져야 하는가입니다. 수사가 위법했는지, 증거가 조작되었는지,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열두 번 반복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며 조사 이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정부의 정책과 집행 과정,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하나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수사 또는 재판의 결론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이렇게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요구는 이미 수사·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결론을 다시 검증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의 범위를 넘어서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특정 사안은 제도와 정책 또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의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특정한 정치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정조사의 중립성과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기소 또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살기 바쁘신 분들은 또 이런 사건을 잘 접해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같이 봤어야 됐는데 제가 그것 못 하고 넘어간 점에 대해서 다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요구안에 대한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결국 이번 요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 영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삼권분립에 대해서 쉽게 설명했었는데요. 이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판단과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확정된 사법 판단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사법 기능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의 형식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론까지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사법적 판단은 더 이상 법정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흔들고 결국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모든 작용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재심이나 상소 등 법이 예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정당성을 다시 평가하려 한다면 이는 법이 마련한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고 정치가 법 위에 서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수사 강도와 대상의 형평성 문제 또 피의사실공표 관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특정 사건을 둘러싼 과잉수사 논란이나 정치적 파장을 동반한 수사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특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결 방식이 정치적 개입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을 정치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선택된다면 수사는 또 다른 왜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항소를 취소한 이례적 판단 역시 수사와 공소 유지가 정치적 환경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것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통제입니다.

다시 저는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 요구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밝혀 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더라도 조사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국정조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제출된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

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 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즉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또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서 일본에서도 의회의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판례로도 다수 차례 확인됩니다.

다음,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서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에 의거해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분명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크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범위 그리고 명확한 목적 안에서 절제되게 행사될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증인출석 요구 또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현장 조사 등 국가기

관과 공직자 또 때로는 민간인에게까지 상당한 부담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필요성과 비례성, 목적의 정당성과 범위의 적정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 어느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가와 같은 정파적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그리고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 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는 과거의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런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또 현장 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구체적 절차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정책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집행의 실패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상의 문제, 국가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반면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 사건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 위원회가 대통령의 재무정보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제2심 항소법원은 의회의 조사권이 입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범위는 결국 입법권과 동일한 한계를 가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의회가 조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행정부나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상 기능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회는 법 집행이나 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당시 연방대법원도 대통령 관련 자료에 대한 소환장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요구가 진정한 입법 목적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요구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해당 요구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당파적 목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국정조사권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한계와 절제를 전제로 하는 권한이며 그 행사 방식이 입법 목적을 벗어나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는 오히려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원리가 바로 권력분립의 원칙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며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권리·의무와 책임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 권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또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수와 소수, 찬성과 반대, 정당과 정파가 경쟁하는 공간이므로 정치의 논리가 법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사실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법은 여론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

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절차의 중복이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사건 국정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 관계자 또 정부 부처 관계자 그리고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의장 우원식 김예지 의원님, 제가 사회 보는 것을 이제 끝내고 이학영 부의장님께서 보십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예지 의원 감사합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입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의혹 국정조사 역시 유사한 시사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그리고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또 자금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7년입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대통령선거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특정 정치인의 주가조작 및 투자금 반환 문제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건은 사실관계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또 발언 순서, 조사 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

쟁이 벌어졌고 또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민들 또한 이를 제도적 통제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결국 사건의 실체적 판단은 검찰 수사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정치적 파장이 클수록 국정조사가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서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013년입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 댓글 활동, 여론 조작 의혹 또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사건 자체가 공정한 선거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국정원 관계자와 수사책임자 등을 불러 댓글 활동의 조직성 여부 또 지휘체계,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조사했고 또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원칙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사 과정은 극심한 정쟁 속에서 운영됐고 주요 증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제도개혁보다 정파적 해석 속에서 다루어지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특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리면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총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민간인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예방과 현장 통제 그리고 사고 후 조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국회는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과 현장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과 법적 책임

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책적 개선 논의와 행정시스템 점검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줍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구서의 표현을 보면 이미 조작수사 또 기획수사, 정치검찰이라는 이런 규정적, 정해 놓은 표현이 많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이미 설정된 정치적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사는 결론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실에 따라 판단이 형성돼야지 판단을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사실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는 방식은 조사라기보다 정치적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고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하여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그리고 증인 채택 또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을 단지 정치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헌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앞세워서 별도의 판단을 시도할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여론을 통해서 사실상의 압박이 형성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가 다뤄야 할 행정적·정책적 통제의 대상인지,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또 조사 결과가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항소와 상고 등 사법적 구제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개입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를 추진하는 것이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중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간 충돌을 일으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하나의 선례로 남는 경우입니다. 만약 국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용인한다면—이미 할 것 같지만—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아니면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재조사 또 사법부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재심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는 곧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은 정치적 적대의 무기를 만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특정 사건을 다시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정쟁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해법 또한 분명합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면서 수사기관 내부의 견제 장치를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와 기소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면서 외부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 제도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예컨대 수사 단계에서의 기록 공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통제장치를 강화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와 인권보호 기준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것 역시 국회의 본령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특정 사건을 겨냥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도록 그 목적이 정해져야 합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 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국민적 상처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가 수사와 재판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접근입니다. 검찰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권력의 개입이 아니라 권력의 절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개혁은 특정 사건을 향한 정치적 재판이 또 정치적 재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을 세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인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국회는 재판을 대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하면서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역할을 넘어서는 순간에 권력 분립의 균형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그 피해는 법과 제도에 의존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곧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제도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는 오직 공정한 법과 안정된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 수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법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며 절차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침해받는 것은 힘없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문제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또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

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는 국민은 이를 사실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고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준은 파괴하기 쉽습니다. 파괴하기는 매우 쉽고 빠르지만 한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더 강한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권력 간 균형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권력분립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원칙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헌법이 정한 역할 분담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행사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제가 있을 때 비로소 권한은 품격과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국정조사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그 절제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자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본질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통제에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조사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그 권한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단기적 이익이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합

니다. 우리 절제하고 있습니까? 저는 절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권한을 가진 기관일수록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행사를 넘어서서 권력 간 균형을 깨트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러한 균형의 붕괴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사후적 대응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사건의 진위를 정치적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권한남용 방지 장치 마련 또 인권 보호 기준 확립, 수사기관의 책임성 제고와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도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 투쟁의 연장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넘어서는 순간에 헌정질서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국회가 스스로의 한계를 지키고 원칙을 준수할 때 그 권한은 더욱 강한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헌법이 정한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의 판단이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에 기반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보면 특히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대통령 관련 여러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조작 기소였다는 의혹을 전제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서 검찰이 또 항소를 포기하였거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다시 나서서 수사 과정과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사실상 사법 판단의 결론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 다시 판단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절차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의 결론을 다시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어

떤 판결도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석의 힘에 따라서 사법 판단이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그 피해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분들께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께 돌아갑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갑니다. 법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한계를 지킬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의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헌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헌법은 권력을 허용하는 문서이면서 동시에 권력을 제한하는 문서입니다. 허용과 제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지금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지키고 있습니까?

현재 국회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됐지요.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이 본회의장에서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오늘이었지요—중수청법 또 공소청법 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미—21대 국회지요—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역시 엄격히 제한되었고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수단도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 등등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물론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었지만 임기 만료 폐기가 되었고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주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22대 국회에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해법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제도를 통한 개

선이 되어야지 특정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입법을 통해서 대응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개별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련된 제도가 진짜 제대로 원하셨던 목적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 해법 역시 제도개선과 법률 정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의 공소취소 권한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래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치적 고려나 조직 내부 판단 등 비법률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할 사안이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취소로 종결될 경우에는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권 남용이나 부당한 공소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우재준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고동진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등에 의해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처럼 사람을 겨냥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한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단지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시고 계신데 정작 그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즉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야말로 위험한 일임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문제 그리고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 둔 채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도는 완결되지 않았고 논쟁은 진행 중인 상황이지요.

이처럼 제도적 논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 내린 사건을, 결론을 우기는 사건을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개선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제도 위에 올려놓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것이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수사 책임

의 분산과 권한의 분절을 통해서 오히려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적하는 다수의 연구와 논문들이 존재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그런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이러한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자꾸 여러 차례 기소 등등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제가 준비를 해서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니까 모두가 어려워하시고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실제 피해를 당하실 때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모두가 다 아실 것 같은 수사에 대한.

수사는 뭔가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증거 찾는 거지요.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나 검사가 왜, 어떻게 이 일을 저질렀나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범인을 쫓고 증거를 모으는 그런 모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경찰이나 검사께서 돋보기를 들고, 아니면 구체적인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범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증거물을 봉투에 담는 것 같은, 모으는 그런 걸 수사라고 하지요.

또 고소·고발 얘기가 제 필리버스터 내내 나올 텐데요. 아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제가 얘기했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고소를 고발이라고 하고 고발을 고소라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 경찰이 될 수도 있고 검찰이 될 수도 있고요. 경찰이 먼저 되겠지요? 어쨌든 수사기관에다가 사건 좀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단계,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고소는 내가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당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옆에 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다, 제가…… 이학영 부의장님이 지금 계시나요? 부의장님이 저를, 이것은 가정입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예지 의원 가정을 했을 때 이학영 부의장님이 저를 막 때렸어요, 이유 없이.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맞는 것을…… 지금 어떤 의원님이 계십니까? 저희 당의 누구 계십니까?

(○柳榮夏 의원 의석에서 — 유영하 있습니다.)

유영하 의원님께서 보고 제가 고소를 못 해, 고소장도 못 써, 변호사도 못 구해 그러면 고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고발입니다. 고소랑 고발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제 말 중에 계속 고소·고발 얘기가 나오는데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어휴 머리 아파, 내가 왜 저런 걸 들어야 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들려 드려야 하는 저의 입장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공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공소가 뭐야? 공소가 채소도 아니고 뭐야?' 이

런…… ‘머리 아프다’ 이게 수사 결과에서 범인이나 범죄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면 검사가 법원에다가 ‘이 사람 재판에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판단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게 공소입니다, 판단됐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사님한테 ‘재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한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크게 그런 것은 아닌데 괜히 말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재판해 달라고 판사님한테 요청하는 게 공소다. 혹시 제가 틀리면 여기 법조인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정정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소, 기소 얘기도 계속 나오지요. 제가 기소 어쩌고, 기소 어쩌고…… 재판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인데요.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범인을 재판에 세우는 것 그게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수사 끝났고 벌을 달라고 판사님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피의자였는데 그게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범인은, 고소나 고발 당시에도 피의자입니다, 범인은. 범죄의 의문을 갖는 그런 범죄 상대는 피의자였다가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기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고소·고발로 신고가 되면 수사를 해 가지고 증거를 모으고 그다음에 기소, 공소제기를 증거,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니까 재판에 넘기자 요청하고 그리고 기소라는 것은 이게 확실하다, 범죄 사실이 확실하니까 재판으로 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소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오니까 아마…… 되게 헷갈려요, 공소가 뭐고 기소·공소가 그게 그거 같고 기소가 그거 같고. 하여튼 기소는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아주 명백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런 단어들을 제가 계속해서 쭉 언급을 할 테니까 나중에 또 조금 리마인드 해야 될 시점이 오면 다시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우선 아까도 제가 읽어 드린 바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작’이라는 말이 열두 번 나온다고 했지요. 이미 조사 방향이 정해지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 방향을 만들고자 하는 국정조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게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덫을 놓습니다. 진실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곧아야 하는데 그런데 제시한 이 지도는 이미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해 놓고 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맡긴 것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이어야 하지 정적을 가두는 창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안개를 걷어 내는 그런 바람이어야 합니다. 가려진 사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획된 혼란입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서 온 국민이 길을 잃게 합니다.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배리어, 바리케이드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배리어일 뿐입니다. 진실을 억지로 구부리면 결국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의 광장으로 끌어내서 조작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사법부라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도끼로 찍는 일과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

다.

여기 국정조사 안건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판 회유 주장 반박도 있고요. 또 검찰청 안에서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런 것도 역시 조사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다라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매우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 법들 이미 어제 그제 통과가 되었고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저처럼 합법적 방해 행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에 굉장한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들, 이것은 통과만 됐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사건들 또 여러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 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있었고요 다양한 법들이 다 통과가 됐지요.

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검수완박에 의해서 고발인 즉 본인이 고소할 수 없는 사람, 만약에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삼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정활동 초반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굉장히 여러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런 개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지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말한 분이 계십니다.

‘범죄자 천국을 만드는 검수완박, 힘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이 중앙일보 기사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있는 범죄 피해자를 10년 넘게 도왔다. 그들은 대부분 별로 말이 없다. 무언가에 대해 말해도 되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았다.

20년 이상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허리 디스크가 터질 때까지 도망갈 생각을 한 번도 못 하고, 친부에게 성폭력당한 아동은 고통스러워도 그저 아빠와의 특별한 비밀 놀이라는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시설에서 폭행으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한 중증장애인도 단 한마디 저항의 말을 못 했다. 그 삶의 끝은 단순 변사로 처리되었다.

장애가 있어서,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또 돈 없고 배움이 적어서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서 이 사회가 얼마나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을 포함한 문명국가에서는 범죄 피해를 당해도 개인적으로 보복할 수 없다. 오로지 국가를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범죄자에 갚을 수 있다. 특히 국가 소추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열어 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구할 수도 없다. 오직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해 줘야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이게 사법 신뢰의 바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삼았다. 옛날 애

기지요, 이미 다 통과됐고요. 그 안에 숨은 정치적 손익계산을 차치하고라도 이 당론이 실제 입법에 이르면 힘없는 서민들의 소소한 사건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쳤다.

수사권 조정 후 이미 약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굳이 이의 제기하지 않아도 공평하게 두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난생처음 범죄 피해를 봤거나 장애나 연령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송치나 이송이 뭔지 잘 모른다. 검사나 판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보는 이도 적지 않았다.

이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두 번째 기회는 동아줄 구실을 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해도, 경찰의 법리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괜찮았다. 어차피 사건은 검찰로 전부 넘어갔으니까.

설사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도 검찰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해서 새로운 증거도 붙이고 또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의 추가 진술을 받을 수도 있었다. 검찰이 사건기록을 보강했기에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별 무리가 없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검사는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 외에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전면 폐지됐다. 처음에 수사권 조정이 시행될 때만 해도 사실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는 정치 검사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고 경찰에서 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기에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생처음 보는 광경이 잇따라 펼쳐졌다. 예전 같으면 6개월 안에 처리될 사건이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써 제출해도 증거를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는 일도 생겼다. 피해자가 당한 범죄의 죄명별로 다 고소장을 쪼개서 쓴 뒤에 각각 다른 과에 제출하라는 황당한 소리도 들었다.

범죄자가 온갖 변명을 하며 숨어 다녀도 범인을 잡아 오지 않고 지명수배만 내린 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 상태의 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을 다른 관할 경찰서로 넘겨 여덟 차례나 사건이 이송된 적도 있었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이 사건 기한 관리를 했기에 이 정도로 심각한 수사 지연은 있을 수 없었다.

겨우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하고 다시 몇 달이 지나 불송치결정, 즉 경찰에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을 한 경우 불송치가 났을 때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불송치결정을 하면 그 이유를 적은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게 의무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다.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불송치결정서를 받아 보면 사유는 두세 줄이 고작이다. 이 지경이니 도대체 불송치 이유의 어떤 부분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감도 오지 않았다. 과거 당연하게 보장받던 두 번째 기회, 즉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그 두 번째 기회는 이의신청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돈이 있는 그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됐다.

더욱 암담한 사실은 이 모든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가 경찰의 역량 부족 탓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 폭탄을 갑작스럽

게 떠안은 경찰수사관들의 번아웃 현상과 혼란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왜 이런 퇴보한 시스템을 자신 있게 밀어붙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사이 피해자들은 절규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시도도 했지만 정작 범죄자는 멀쩡히 활보했다. 이러니 범죄신고를 한 내 잘못이라는 자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의 후폭풍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한 채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전체 형사사건의 1%도 안 되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 박탈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경찰수사가 엉망이라도 수사를 계속 뭉개다 공소시효 완료로 기소조차 못 한 채 사건이 날아가도 책임을 묻거나 사태를 되돌릴 대안이 전혀 없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든 더는 캐거나 보태거나 들여다보지 말고 검찰은 넘어온 기록 그 자체만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게 검수완박이기 때문이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없이 무조건 기소만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권력은 편중되면 부패한다. 수사권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공권력이기에 반드시 그 통제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편중된 수사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마저 사라지면 누가 가장 살판날까? 당연히 범죄자들이다.

안 그래도 올해부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데 여기에 검수완박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갑자기 빼앗아 수사 총량을 증발시킬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범죄 총량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범죄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고관대작들은 법이 어떻게 변하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다.

기어이 검수완박을 하겠다면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경찰에 일임된 수사권을 통제하고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서 오로지 경찰만 수사하게 되더라도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통제 권한은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 경찰이 양질의 증거를 적시에 확보하고 있는지,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가 법을 악용해서 수사기관을 우롱하지는 않는지 검찰이 볼 수 있어야 한다. 힘들어서 말 못 하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검찰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직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기에 힘없는 서민 피해자의 억울함을 제도가 해결해 줘야 한다.

검수완박을 고집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정치적 입장에 얽매일 일이 아니다. 범죄자 전성시대를 열 엉터리 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이 글은 중앙일보의 2022년 4월 14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가 쓰신 글입니다. 저의 생각과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안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사건이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형사사건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쉽게 풀어 쓴 글이 없을까 좀 찾아봤는데요, 문체부에서 발간하는 '손끝으로 읽는 국정'이

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점자로 발행되는 월간지인데요 거기에 같은 김예원 변호사가 기고했던 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형사사건이라니!' 이런 제목으로 쓰신 글인데요.

"'3억요?' 놀라운 액수였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보름 동안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전화금융사기 등) 일당에게 보내 주었다는 돈이 무려 3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일생을 모아 온 전 재산이었고 여생을 보낼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퇴직 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밤낮으로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은 돈이었어요. 그 세월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기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겪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가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범죄 피해를 당하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느끼고 그 이후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 막막해합니다.

저는 10년이 넘도록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해 오면서 피해자가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피해 그 자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피해자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것은 피해를 입기 전까지 혹은 피해를 입던 중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 바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 이야기를요.

형사사법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맞는 벌을 받기까지 국가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면 쉽겠네요. 흔히들 소송이나 재판이라고 하면 '돈을 안 갚아요', '내 땅을 돌려받고 싶어요' 같은 이유로 법정에 가는 일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형사소송은 이런 민사소송과 많이 다릅니다. 만약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재판을 거는 경우에 돈을 꿔 준 사람(원고)이 돈을 안 갚는 사람(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양쪽이 하는 이야기, 가령 '빌린 적이 없어요' 또는 '빌렸지만 갚았어요' 등 그런 것만 듣고는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고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증거를 확인하면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의 반대편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판사에게 소송을 내는 것을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이 국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법에 적혀 있어야 그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법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다고 저절로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대충이라도 수사기관(가령 경찰)에 알려져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알려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고 종이로 써서 내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 중에는, 제가 주로

지원하는 장애인이나 아동 중에는 직접 고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도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적어 낼 수도 있겠지만 돈이 만만찮게 들어가니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글에는 없지만.

고소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몰래 일어나는 환경파괴 범죄나 동물학대 또 중간에 여러 사람이 이어져 있지만 모두 몰래 숨어서 하는 마약 범죄, 권력이나 돈에 관련된 부정부패 범죄 같은 것들은 피해자가 없거나 누가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잡아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은 바로 고소장이 들어오기보다는 고발(피해자 아닌 목격자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것)이나 인지 또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직접 보거나 들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라고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가 휙휙 자꾸 바뀌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라고 김예원 변호사가 말합니다. '용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라고 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내용들이 고소나 고발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하고 싶다면, 나라에서 법으로 죄라고 규정한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죄가 안 되었던 것이 죄가 되어 처벌받기도 합니다.

2020년 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성적인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내려받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법정에 가보면 겨우 야동을 다운받은 것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냐는 피고인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불법 촬영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은 범죄 피해가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으로는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소는 제가 아까 계속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이런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써 놓은 월간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이게 기고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다양한 내용들, 필요한 내용, 진술할 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국정조사 건으로 돌아와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사화된 내용들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정권 따라 요직-한직 오가는 검(檢), 악순환 끊는 게 개혁 첫걸음' 2025년 7월 27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배제되고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다가 지난 정부에서 밀려났던 간부들은 대거 요직에 올랐다.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문 정부 당시 각각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대변인 등 요직에 기용됐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이른바 한직을 돌았다. 앞서 발탁된 노만석 대검 차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적 거리를 뒀다는 평가를 받는 간부들이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부 출신 간

부들 중 신자용 법무연수원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등은 사의를 밝혔고 일부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은 이번 인사로 물갈이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 정부 때 검찰에서는 친윤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중 인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 눈치를 보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간부들을 계속 요직에 두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지우기식 인사로 일부 간부들이 요직과 한직을 오가는 일이 반복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던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총장 패싱 인사가 빚어지면서 권력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전면에 대거 배치됐다. 그런 간부들 중에는 살아 있는 권력에 소극적 수사로 보답하거나 권력이 눈엣가시로 여긴 인사에 대해 과잉수사를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권과의 친소 관계가 암묵적인 인사 기준이 되면 원칙과 소신을 펴기보단 권력의 의중을 살피는 검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검사들의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사설이었습니다.

조작기소 관련 사설도 가져와 봤는데요. '조작기소 국조 여, 법왜곡죄·재판소원 혼돈부터 수습하라' 2026년 3월 19일 자 사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단독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의 의도대로 국정조사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이런 전례를 무시한 채 속도전을 벌일 만큼 조작기소 의혹이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사건들을 조작기소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입법권 남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우 의장을 향해 '헌정사에 또다시 큰 오점을 남겼다'라고 직격한 데 이어 어제도 항의 방문을 했다.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사법 3법의 예고된 후과가 불과 일주일, 그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법왜곡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가 고발됐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범죄자는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유튜버 쯔양 측 변호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불안에 떠는 상황을 사법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책 마련이다. 법왜곡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해서 판사와 검사가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판소원제 역시 헌법재판소가 각하 기준과 심판 요건을 엄격히 설정해서 4심제 남용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도 어제 범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사설이 그 전이네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고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까지 삭제한 법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논란 많은 사법·검찰 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혼돈을 수습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집권당의 도리다. 듣도 보도 못한 혼란에 많은 국민이 어안이 벙벙한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기 바란다'. 무겁게 직시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검사들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 이것은 지금 일이 있기 전, 2025년 11월 11일에 조선일보에 실렸던 사설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비리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직후 사건 담당 수사·공판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의 최고위급인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했다. 검찰의 집단 움직임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특정 사건 재판 처리와 관련해서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검사장급 부장 7명은 10일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문에 책임이 있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총장대행의 핵심 참모 전원이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대검 연구관들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 전국 검사장 18명도 노 대행의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대행은 전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내 책임하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했을 뿐 구체적 경위와 법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전국 8개 주요 지청장들도 집단성명을 내고 같은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장문을 발표한 검사장 18명과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한 대검 부장 7명은 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임명한 요직인 전국 지검장 15명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정치적 편 가르기와 검찰 악마화로 국면을 바꿔 보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의 법 상식과 정의감에 너무도 동떨어졌다. 대장동 일당이 6000억 원 이상을 차지하게 만들어 준다면 법치가 어디에 있나. 힘으로만 누르면 검란(檢亂)은 국민적 반발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지난해 11월에 나온 사설이었습니다. 이것은 2025년 11월 11일에 있었던 사설이고요.

11월 26일, 이어지는 사설이 또 있습니다. '기세 높던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왜 피하나' 이것이 있네요.

여야가 25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뜻이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업자들이 성남시 수뇌부에게 특혜를 받아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개발이익 7800여억 원을 사실상 독식한 범죄다. 1심 판결이 나오자 검찰 수사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다. 항소 마감 날,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한 항소장을 들고 법원 앞에서 대기했지만, 한밤중에 검찰총장대행 등 수뇌부가 제출을 막았다.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고, 과정도 급작스러웠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당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됐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당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보유하게 됐다' 이 말은 가졌다……

이들이 향후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누구도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법무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했다고 하고 검찰총장대행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퇴임했다.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퇴임했다.

야당은 물론 경실련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도 함께 들여다보자는 취지였다. 정청래 대표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고 표현하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조작기소 의혹까지 추가했다.

이렇게 기세가 높던 민주당은 야당이 민주당 요구에 모두 동의하자 이번엔 국정조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권의 외압 여부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하자고 한다.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정권의 압력이 있었다면 권력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린 행위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국민이 눈 뜨고 봐야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외압이 없었다면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억울할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라고 조선일보 사설 2025년 11월 26일 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이어지는 3월 7일 내용입니다. 해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관련 사건 뒤집는다는 여, 법 왜곡 홍수 날 판'이라는 제목 아래 2026년 3월 7일 자 사설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며 '범죄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에 얘기한다'며 '조작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수사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면회 온 회사 관계자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구치소 녹취록을 들어 조작기소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씨는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사건의 피의사실은 북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냐는 것으로, 이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줬느냐 여부가 아니다. 수사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사건의 피의사실은 북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는 것으로, 이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줬느냐 여부가 아니다. 수사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 검사는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 녹취 내용이 일방적으로 짜깁기됐다고 했다.

이 녹취록은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진위 여부도 법무부는 확인 불가라고 한다. 민주당 주장이 확실하다면 이 정권의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은 1심 공판 준비 단계에서 중단됐다.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사건이 조작됐다면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과 위례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 7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가리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관련 사건이다. 왜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국정조사를 한 뒤에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일부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 증거능력이나 법리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검사가 사건을 통째로 조작하고 판사가 이를 알면서도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집권당이 자신들 사건만 골라내서 조작 기소를 문제 삼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설된 법왜곡죄를 동원해서 사건에 관여한 판검사를 처벌하자고 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판사가 엉뚱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에 하나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판사가 엉뚱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은 2026년 3월 7일 사설이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항소·상고 포기, 과연 공익의 대표자인가’라는 사설이 중앙일보에 2026년 2월 23일에 올라왔네요.

‘검찰의 선택적 항소·상고 포기, 과연 공익의 대표자인가’, 2026년 2월 23일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엇갈렸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충분한 경위 설명 없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재판의 진행 과정과 검찰의 대응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증거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압수수색영장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결정이다. 검찰이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한다면 압수수색을 잘못하는 바람에 유죄가 되어야 마땅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헌상했다고 자인한 격이니 검찰은 철저한 반성부터 표명해야 옳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상고 포기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다.

최근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의 잇따른 항소 또는 상고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 포기로 7000억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없애 검찰 안팎에서 맹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 포기로 7000억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없애 검찰 안팎에서 맹비난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재판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재판에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도록 했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선고를 내렸을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사회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다른 판단이 나왔다면 상급심 판단을 한 번 더 구하는 게 3심제의 취지에 맞고 과거 선례도 그랬다. 유독 여권 유력 정치인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권력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검찰청법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으로 항소·상고 포기를 반복하는 검찰에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중앙일보 2026년 2월 23일 사설이고요.

한국일보 2026년 3월 19일 날 올라온 사설로 또 이어집니다.

'여당·국회의장 합심한 공소 취소 국정조사 강행, 역풍 없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밀어붙이셔서 제가 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합니다.

이르면 19일 국조 실시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은 21일, 지금 필리버스터 합법적 방해 중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및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처리하고 계십니다.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 국조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고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2시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17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보냈다. 여당과 국회의장이 속도전을 위해 합심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정한 국조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3개 사건이 포함돼 있다. 국조 후 필요시 특검을 거쳐 조작 기소 의혹이 밝혀지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대통령 1인을 위한 국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과오를 청산하기 위한 국조라는 민주당 설명은 허술하다.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조 추진위라는 당 차원 조직이 있는 마당에 공소 취소라는 의도가 감춰지겠나.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국정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여야 합의와 협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라는 제도 취지에 맞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국정 현안에 대해,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여야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라는 제도 취지에 맞다.

이 취지에 안 맞네요, 안 했으니까.

여야 합의 없는 국조는 1999년 IMF 환란 관련 국조가 유일하다. 국조의 정치적 정당성과 국회 운영의 중립성의 차원에서 우 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한 중재에 끝까지 힘을 쏟기 바란다.

힘이 많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을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힘을 쏟아 주셔야 되는데 가셨네요. 어쨌든……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까지 중지된 상태다. 정치권에는 퇴임 후 사법리스크 해소가 이 대통령의 최대 고민이라는 얘기가 오르내린다. 여당이 각종 무리수를 두고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사정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위해 사법체계를 훼손한다는 우려를 사는 것 자체가, 우려를 사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을 스스로 욕보이는 일이다. 힘으로 무리수를 둘수록 역풍은 커지기 마련이다.

사법체계를 훼손한다는 우려를 사는 것 자체도 정부 여당은 굉장히 스스로를 욕보이는 일이라고 한국일보 사설 2026년 3월 19일 자에 썼고요. 같은 한국일보 사설 3월 10일—이전에 쓴 내용입니다—‘중동 위기 급박한데 대통령 공소취소 밀어붙이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 선거 압승이 예상되는 만큼 강성 지지층만 결집해도 충분하다는 오만한 태도다.

검찰의 그간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파를 가늠할 수 없어 경제가 휘청대는 위기 상황에도 아랑곳없다. 국론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편을 갈라서야 되겠나.

국론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편을 갈라서야 되겠나…… 되겠습니까?

국정의 우선순위를 냉철하게 헤아리는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보여 줄 때가 아닌가. 민주당은 9일 토론회를 열고 공소취소 여론몰이에 속도를 냈다. 앞서 공소취소 모임에는 소속 의원의 60%가 넘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6일),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 놓겠다’(9일) 그렇게 거듭 압박했다.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 가운데 4건, 즉 대장동·위례·쌍방울 대북송금·김용 경선자금 이렇게 4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이미 보고돼서 제가 합법적 방해를 하여야 합니다—석 달

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검찰개혁 필요성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소취소를 윽박지르며 재판에 관여하는 행태는 헌법질서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법의 영역인 공소를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사법권은 입법권의 하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적 정의의 잣대를 들이미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급박하게 대응하는 총력전을 펴면서 다른 쪽에서는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에 사로잡혀 검찰을 옭아매고 있다. 분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다. 검찰에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오기만 남아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개혁을 명분으로 사법체계를 쥐고 흔들 때가 아니다. 사리에도 타이밍도 맞지 않는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여당은 재고하길 바란다라고 한국일보 사설 2026년 3월 10일에 기고된 사설입니다.

서울신문에도, 3월 19일입니다. 얼마 전 2026년 3월 19일의 사설입니다.

조작기소 국조 여, 법왜곡죄·재판소원 혼돈부터 수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단독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의 의도대로 국정조사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돼 왔다. 이런 전례를 무시한 채 속도전을 벌일 만큼 조작기소 의혹이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사건들을 조작기소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입법권 남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우 의장을 향해 헌정사에 또다시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직격한 데 이어 어제도 항의 방문을 했다.

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사법 3법의 예고된 후과가 불과 일주일 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법왜곡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가 고발됐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범죄자는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유튜버 쯔양 측 변호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불안에 떠는 상황을 사법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책 마련이다. 법왜곡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해 판사와 검사가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판소원제 역시 헌법재판소가 각하 기준과 심판 요건을 엄격히 설정해 4심제 남용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 설치법도 어제 범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고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까지 삭제한 법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논란 많은 사법·검찰 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혼돈을 수습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집권당의 도리다. 듣도 보도 못한 혼란에 많은 국민이 어안이 벙벙한 현실을 무겁게 직시하기 바란다.

서울신문 2026년 3월 19일 사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박상용 검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박상용 검사님은 일면식도 없지만 중요한 말씀이 많아서 대신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상용 검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박상용 검사님이 의원님들께 보내는 포스팅입니다.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불법입니다. 소위 조작 수사 등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오늘 의결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아마 내일 의결할 것입니다. 제가 약 20시간 전에 알려 드리는 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위원회가 시작되어서. 아무튼 그래도 최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대상 사건은 첫째 대장동 사건, 2. 위례 사건 3. 김용 사건 4. 대북송금 사건 5. 통계조작 사건 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7.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등입니다.

제가 관여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장 큰 이익의 귀속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파생 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2026년 6월 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위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년 9월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위 국정조사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국정조사, 위 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행정부 소속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입법부가 왜 그에 관여를 합니까? 왜 관여하지? 삼권분립이 보장된 대한민국헌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당이 입법도 하고 사법·행정도 다 하는 일당 독재의 나라입니까?

헌법기관이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제발 위헌과 불법의 국정조사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셔서 제가 전달을 해 드렸는데 멈추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불법 국정조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

로 여기에는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출처가 진행자, 제가 스크립트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보통 초반에는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사적인 질문도 하는데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어 술파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간 국정조사 같네요, 이 프로그램이.

박상용 검사님이 대답합니다. '안 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진행자, '많은 분이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연어 파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히 검사가 연어회 술을 먹여서 사건을 조작했다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권력자들이 국민들이 그렇게만 알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박상용 검사가 대꾸를 안 하면 그렇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A부터 하여튼 끝까지, Z까지 설명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방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연어랑 술 먹였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적도 없고요.'

사건의 본질,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야욕의 결합.

진행자가 말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최근 이야기를 나눠 보지요. 이른바 대북송금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박상용 검사 대답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에 돈을 보냄으로써 한 사람의 사업가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한 분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려 하셨으며 그 중간에 계신 한 분은 경제적·정치적 이익 둘 다를 얻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진행자, '등장인물을 영화로 비유하자면 주인공 쌍방울, 이재명, 이화영 이렇게 스리톱(3-top)인 사건이군요. 요약하자면 우리 적대국가인 북한에 수십억 원을 퍼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초청을 위한 것이라는 게 공소 사실이지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술과 연어를 먹여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의 개요를 좀 더 짚어 주시지요'라고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박상용 검사가 대답하십니다. '시작은 2018년도였습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정치인이 그 흐름에 탑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 도지사들을 데리고 북한에 갈 때 경기도지사만 빼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18년 7월 경기도는 대북사업을 위해 평화부지사로 대북 전문가 이화영 씨를 영입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가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불, 약 75억 원을 약속하지만 대북제재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북한에서는 계속 독촉이 오고 이화영 부지사가 코너에 몰리자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며 사업권을 약속하는 시나리오가 된 것입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수사팀이 실체적 진실을 잘 밝혀냈는데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한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어느 순간 인정을 하지요.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박상용 검사가 답합니다. '이 사건이 확 풀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정원 문건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북한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씨가 직접 국정원 문건이 있으니 뒤져보라고 핵심 제보를 해 줬습니다. 재판부의 직권 영장 발부로 확보한 문건에

는 북한 실세들이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위기이다라고 절박하게 이화영 씨에게 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화영 씨는 왜 자백했을까요?'

박상용 검사가 답합니다. '당시 이화영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민주당에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배신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 증거가 밝혀지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자기가 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압박이 너무 거셌지요. 부인이 법정에서 정신차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결국 변호사가 바뀌면서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저쪽에서는 연어와 술을 먹여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대답합니다. '이화영 씨의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화영 씨의 당시 진술은 확정판결이나 기소의 근거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즉 그 진술 없이도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조작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어 술 파티요? 처음엔 호화 연어회라고 하더니 나중엔 1만 원짜리 연어 도시락이라고 말이 바뀝니다. 당시 수사관 카드로 24만 원 정도 결제했는데 교도관과 피고인 등 24명 정도가 똑같이 먹은 공식적인 식사였습니다. 검찰청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이상 음식은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지요.

또한 술을 마셨다는 시간대에 이화영 씨 본인은 술을 안 마셨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술을 먹여 회유했다면 자백하는 사람이 술을 마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맨정신에 자백했다는 건 본인 스스로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요?'

박상용 검사가 답입니다. '쌍방울 측에서 술을 샀다는 시간이 6시 37분인데 7시에는 변호사가 옵니다. 그 23분 사이에 검찰청 출입기록도 없이 몰래 들어와서 생수병에 담긴 술을 교도관들 눈을 피해 마시고 흔적도 없이 치웠다는 건데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입니까?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현지 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답합니다. '당시 이화영 씨를 변호하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민주당의 입맛대로가 아니라 진짜 변호인으로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고 이화영 씨도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씨가 설 변호사에게 전화해 질책하며 사임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범관계에 있는 측근이 변호인을 교체하도록 압박한 심각한 사법 방해이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안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다시 말합니다. '공직자이자 검사로서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잘 압니다.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직접 호소하게 됐습니다. 검찰개혁이나 공소취소 논란은 결국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검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쳐 써야지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면 결국 사람이 아픈

법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하는 검찰의 본질을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인터뷰를 해서 또 요즘에 계속 이 인터뷰가 회자되어서 저도 한번 들어 보았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내용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방송 진행자가 묻습니다. '현재 민주당 측은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검찰은 박 검사님을 포함한 수사팀을 말하는 거겠지요?'

박 검사는 대답합니다. '예, 당연히 저를 포함한 대북송금수사팀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중간에 팀원이 바뀌기도 했지만 저를 포함해 3명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모를 다 아시겠군요? 그렇다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용 검사가 대답합니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다 안 되니 별건으로 대북송금 사건을 터뜨렸다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본래 특수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입니다. 여성·아동조사부와 형사1부, 감찰 담당에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쌍방울 압수수색영장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제가 감찰 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했고 당연히 증거인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수사 도중 이화영 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진 것입니다. 뇌물에는 대가성이 따르기 마련인데 조사 결과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며 자연스럽게 대북송금 사건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별건수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추적하다 뇌물이 나오고 그게 대북사업으로 연결된 하나의 맥락이군요?'

박 검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별개의 부서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입니다. 검찰 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자백했던 시점과 계기는 무엇입니까?'

박상용 검사가 답합니다. '결정적 계기는 이화영 씨가 알려 준 국정원 문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지은 죄만큼 벌은 받되 민주당의 배신자가 되기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백하기보다 물증이 나왔으니 어쩔 수 없이 자백한다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23년 5월경 검찰과 이화영 측이 모두 동일 법원에서 직권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서 북한 관련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자 6월경부터 아주 구체적인 자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자백했나요?'

박상용 검사가 대답합니다. '현재 이화영 측이 증거 부동의를 해서 구체적 내용을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북사업과 방북을 위해 기업이 필요했고 돈이 갔으니 방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당시 입회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현지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박 검사님 대답하십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임명했지만 철저히 피의자인 이화영 씨를 위해서 직업윤리에 맞게 변호했습니다. 이 씨도 그를 깊이 신뢰했지요. 그런데 자백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 측에 소식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설 변호사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유를 물으니 김현지 팀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이 사건의 공범관계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측근이 변호인을 사실상 잘라내 진술을 컨트롤하려 했다면 이는 서양 기준으로 명백한 사법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매우 중대한 구속사유로 봅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어떻습니까? 장소와 시간 등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라고 묻자 박상용 검사가 답합니다. ‘이화영 씨의 주장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자백한 뒤 파티를 했다더니 나중에는 파티를 해서 자백을 강요받았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시점도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를 오갑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시간입니다. 이 씨는 2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상 소주를 샀다는 시간부터 설주완 변호사가 입회한 시간 사이의 간격은 단 23분입니다. 23분 만에 소주 4병을 사서 페트병에 옮기고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서 검찰청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또 흔적을 지운 뒤 변호사를 맞이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원고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지. 우선 술 파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어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호화로운 연어회였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연어초밥, 나중에는 연어도시락, 연어덮밥으로 말이 계속 바뀝니다. 당시 제가 24만 원 상당의 수사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때 수사팀 모두에게 같은 메뉴가 나갔습니다. 한 그릇에 1만 원 정도 하는 회덮밥이었지요. 거기에 연어가 들어가 있으니 결국 연어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파티가 됩니까? 또한 외부 음식인지 내부 음식인지를 따지는데 저희가 검찰청 안에서 직접 밥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제공한 도시락이었을 뿐입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언론보도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작년 9월경 법무부 특별 점검팀이 조사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의심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했고 이날 박상용 검사 사무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연어회덮밥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박상용 검사가 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 4병과 물 3병이 구입된 시각이 18시 37분입니다.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가 조사실에 들어온 시각은 19시경입니다. 즉 남는 시간은 단 23분입니다. 민주당과 이 씨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23분 동안 누군가 소주 4병을 500㎖ 생수병 3개에 나눠 담고 도보로 5분 거리인 수원지검 당직실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13층 저희 사무실까지 오는 동안 두 번의 보안 태그를 찍어야 하는데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은 채 보안을 뚫고 들어와야 하지요’, 기록이 없지요. ‘그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마치 물인 것처럼 술병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김성태 회장이 술을 마시고 이화영

씨는 그걸 지켜봤다는 건데 7시에 도착한 설 변호사는 술 냄새조차 맡지 못했습니다. 교도관도 수사관도 검사도 몰랐다는 겁니다. 23분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지요.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법무부 점검팀이 당시 교도관 27명을 조사했지만 술이 반입됐다거나 마시는 걸 봤다는 진술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명확한 목격자는 없는 건가요?'.

박상용 검사 답합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었다면 난리가 났겠지요. 그래서 서울고검에서도 이 사안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것입니다. 위계라는 것은 속였다는 뜻입니다. 즉 법무부 수사 결과로도 교도관들도 몰랐다, 속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진행자 다시 묻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2년 가까이 재판과 수사를 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이야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답합니다. '맞습니다. 2023년 7월경 민주당 측에서 검찰 압박을 받은 것으로 옥중서신을 써 달라는 식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 나온 옥중서신에는 압박 내용도 없었어요. 그러다 점점 진화하더니 2024년 4월 1심 마지막 재판에서야 이화영 씨가 술을 마셨고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다시 본인은 술을 안 먹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상식적으로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기억이 바뀌기 어려운 그런 중대 사안인데 이를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최근 재판 기록 유출도 논란입니다. 재판장이 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박상용 검사 답합니다.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단 방지와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하지도 않은 그런 기록들이 무차별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을 다 보고 오는데 그 앞에서 증거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유출된 기록에는 교도관 등 수많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론전을 위해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검사님께서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세 번이나 조사를 받으셨다고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박상용 검사 대답합니다. '굉장히 황당합니다. 저는 오히려 제대로 조사해 달라는 입장인데 그쪽은 정작 핵심인 술파티 의혹은 묻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하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지니까 그 내용이 조서에 남는 게 싫은 겁니다. 대신 수사 서류의 사소한 오타나 지엽적인 그런 부분만 약 1000페이지 넘게 쌓아 놓고 질문합니다. 본인들이 정해 놓은 결론에 반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저는 총장님과 장관님께도 나를 술파티 의혹으로 정식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달째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조사 후 날인을 거부하셨는데 보도도 있었습니다. 검사로서 이례적인 결정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상용 검사 답합니다. '세 번째 조사 되었습니다. 술파티는 묻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

조사하더니 이제 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어 술파티 조사받으러 왔으니 그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대검에 물어봐야 한다며 회피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수사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조서에는 날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해 주면 그때 날인하겠다고 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공소취소를 위한 기구까지 만들었습니다. 통상 문제가 있다면 재판이나 재심을 통해서 다투는데 왜 공소취소라는 방식을 택할까요?'.

박상용 검사가 답합니다. '그건 아주 중대한 헌법적 문제입니다. 아주 중대한 헌법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분쟁의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는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그런데 공소취소는 사법부가 쥐고 있는 사건을 권력이 강제로 뺏어 없애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사건을 뭉개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박 검사님 다시 답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취소한다? 그걸 과연 누가 판단하게 됩니까? 결국 특검이 판단하게 됩니다. 왜 사법부가 아닌 권력이, 특검이 판단해야 합니까? 이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의 제1 원칙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임명한 특검이 사건을 판단해서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취소하는 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임명하신 특검이 사건을 판단해서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취소하는 꼴입니다. 이걸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치주의 붕괴이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정당한 재심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재심은 사법부가 판단하는 공정한 절차입니다. 전 국민이 이 절차를 따르는데 왜 특정인만 다른 국민보다 더 평등해야 합니까?'.

이건 뭔가 답변이 조금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 '더 특권을 얻어야 합니까?'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이 절차를 따르는데……' 동일한 절차를 전 국민이 따르지요. '왜 특정인만 다른 국민보다 더 특권 있는 것을 받아야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과거 영상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박 검사님께서 과거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 내며 당황하게 했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당시 800만 불을 줬다는 사건의 시기, 장소, 전달 방법이 다른데 본 적 없느냐는 질문에 박 검사님은 본 적 없다, 재판에서 정리될 문제다라며 단호하게 대응하셨지요'.

박상용 검사 답입니다. '본 적 없는 것을 없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기소한 사건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선고되었습니다. 박 의원님은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셨는데 그때 법원에서 잘 주장하셨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진행자가 또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에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더 나쁘다라는 글을 올려 박 검사님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걸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대통령'이라고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질문도…… 그렇습니다.

박 검사님이 답합니다. '우선 해당 녹취가 대북 송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기도 전에 순방 중이던……', 당시 얘기를 해야 돼서 '이 대표'로 했었군요.

‘이 대표께서 그렇게 급하게 올리신 걸 보면 이 사건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도나 살인보다 나쁘다는 비유는 의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강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죄더군요. 결국 대북 송금과 무관한 녹취를 억지로 엮어서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국의 지도자급 인사가 사안을 숙고하지 않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추진되며 사실상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라고 진행자가 묻습니다.

박상용 검사 답변입니다.

‘머릿속 상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무지개의 일곱 빛깔을 머릿속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무지개는 모든 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사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고 공판은 그 증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해야 할 사람이 증거를 못 모으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사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한참 전에 쉽게 설명한 바 있지만 여기 다시 반복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 공판은 그 증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공판에서 그 증거를 입증하는, ‘그런데 입증해야 할 사람이 증거를 못 모으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운전자에게 좌회전은 안 되니 우회전만 해서 목적지까지 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회전만 해서 가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결국 집에 못 갈 수도 있는데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격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국민만 제시간에 제대로 된 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도 논란입니다. 이게 왜 국민에게 중요한가요?’

박 검사님 답변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더욱 밀접한 문제입니다. 택시 타면 금방 갈 길을 무조건 버스만 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검찰에서 전화 한 통, 사람 한 명 불러서 확인하면 바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굳이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라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을 왜 폐지하려고 할까요? 제가 형사부에서 이화영의 뇌물과 대북송금을 밝혀냈던 것처럼 그런 수사를 아예 못 하게 막으려는 겁니다. 권력에 대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익이 있다면 누구라도 설명해 보십시오. 납득이 가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말합니다.

‘검수완박 이후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상용 검사 답입니다.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민생 사건이 검사 한 명당 수백 건씩 쌓여 있습니다. 저도 370건 정도인데 다른 곳은 500건, 700건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하지 말라고 하니 사건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결국 젊고 유능한 검사들이 사직하고 있고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선출된 권력에 비선출된 권력이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박상용 검사 답변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이비 이론입니다. 우리 헌법상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저는 비선출직이라 하지만 국민 3000만 명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았습니다. 그 정당성을 수치화해 본다면 웬만한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제가 더 많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적 정당성은 투표 숫자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은 투표 숫자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나옵니다. 특정 기관은 정당성이 있고 어디는 없다는 식의 이론은 검찰과 법원을 자기들 발아래 두겠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참칭입니다.’

이게 인터뷰 내용이고요.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이 있어서 공유를 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목이 ‘전영기의 과유불급, 이재명 대통령과 검사 박상용’ 이렇게 나오네요.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타이틀이고요.

로마법 시대부터 법치주의 근간을 지탱해 온 이 격언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기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가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사건의 발단은 3월 4일.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태 ‘이재명에 돈 안 줘. 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라는 온라인 기사가 표출된 지 49분 만에 SNS에 글을 올렸다. 증거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조회 수는 순식간에 30만 회에 육박했다.

‘필리핀에서 기사 표출 49분 만에 반응’이라는 제목이 다시 나오고.

대통령의 한마디는 대선 전 자신에 대한 대북송금 관련 제삼자 뇌물 사건 기소가 증거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읽혔다. 민주당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3월 11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19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친명계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인데 이 이름부터 대통령이 얼마나 공소 취소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이상한 장면도 연출됐다. 김어준 씨의 방송이 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소 취소를 거래하려 한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것이다. 청와대는 음모론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며 불쾌해했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김 씨의 주장대로 또 그가 미는 정청래 대표 주도로 검찰의 최소한 수사 관찰권마저 배제된 강경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겉으로 화를 내는 듯해도 실상은 김어준 뜻대로 법안이 처리되는 모순된 상황이 의아스럽다. 무슨 일에서든 쿨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통령이 유독 공소 취소 이슈 앞에서 조급해 보이는 이유가 뭔가. 뭘까?

공소 취소는 증거 부족이나 법령 폐지 등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선례를 찾기 어렵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검사한테 공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여당이 입법권을 동원

해서 행정부(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하면 안 된다. 직권남용 혹은 삼권분립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권력 앞에 홀로 선 박상용 검사(45)의 반론은 차갑고 정교하다. 그는 수원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로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박 검사는 자신의 SNS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조작을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공소장이나 판결문의 어느 부분이 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될 수 없어'라는 타이틀이 또 등장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김성태의 논란이 된 발언 내용이나 이화영의 연어회 술파티 주장은 애초부터 공소 사실에 들어 있지 않았다. 제삼자 뇌물죄 공소장의 요체는 김성태가 북한에 건넨 3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의전 비용이라는 점이지 두 사람 사이의 돈거래가 아니었다. 또한 술 파티 의혹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이화영 본인의 증거 부동의로 인해 처음부터 공소장이나 유죄 판결문의 판단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것. 즉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정작 재판의 본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진정으로 억울한 조작의 희생자라면 문명국가가 마련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바로 재심이다. 재심.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도,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사건의 피해자들도 법원에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증명받았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부당했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도다. 권력의 힘으로 공소장을 찢으려 해서는 안 된다. 죄가 없다면 권력의 비호가 아닌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그만이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려 할 때 법치는 무너진다. 어떤 국민도 다른 국민보다 더 평등할 수 없다. 특권은 정답이 아니다.

전영기의 과유불급이라는 칼럼 같이 보이네요.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그 외에도 권력이 한곳에 모이면 얼마나 부패하는지에 대해서 오피니언, 댓글 읽어 드립니다라는 칼럼입니다. 여기에 협조하신 분은 김예원 변호사입니다.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중앙일보 2022년 4월 30일에 남긴 글입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입니다.

질문,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보복수사 또는 수사무마와 같은 무소불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수사청, 중수청을 만들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이 역시도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수청은 이미 만들어졌네요.

답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을 신설한다라는 식의 핑계를 대면서 모든 수사권을 한곳에 몰아주는 방식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권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이 한군데로 몰리면 악용 소지도 높고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해지거든요.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중수청은 결국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기소하지 못하는 곳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의 주체가 달라질까요? 결국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존에 제기됐던 압박 수사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기소 주체가 중요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하게 하되 투명한 정보 공개나 인사권을 통해 일부가 전횡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입니다.

‘법치국가일수록 권력은 분산되어야지요. 삼권분립이 있는 이유입니다. 검찰도 공무원 본연의 기능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답변을 합니다, ‘민주당이 애초에 내놓은 안은 오로지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한곳에 모아 놓는 게 어떻게 권력의 분산입니까? 오히려 거대한 권력의 창출이지요. 권력에 대한 통제나 수사에 대한 통제는 무언가 하나를 신설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청을 만든다며 우왕좌왕하는 중에 발생하는 범죄들이 중간에 붕 뜨면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면 과연 누가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마치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검찰이 공무원으로서 잘 수행해 왔던 기본적인 직무조차 못 하게 막음으로써 피해 보는 건 오롯이 국민이에요. 오히려 검찰은 지금 유례없는 워라밸을 경험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또 묻습니다, ‘민주당은 검찰만 잡으면 정치보복을 못 할 것이라는 헛된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만큼 유능해지면 경찰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데요. 당신들이 데모하던 학창 시절을 벌써 잊었나 봅니다’.

답변을 합니다, ‘저는 경찰이 무능하거나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거기 모여 있는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경찰이 훨씬 더 많은 인력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제할 건가요? 대안 없이 검찰만 잡으면 끝난다,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호도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검찰과 경찰은 범죄자를 잡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훼손시킬 정도로 정치적으로 변질을 시켜 버리면 그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또 질문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사람에게 수사도 할 권리를 주다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답변을 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원칙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수사를 일임하고 경찰의 성과가 결국 검찰의 성과가 되는 구조라 자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범죄자나 권력자 눈치 보지 않고도 내 일만 잘하면 범죄자 잡는 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 굳이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한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국은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곳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다만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가 사인소추주의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 억울하니까 이 사람 재판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은 3년 전 검찰수사권을 일부 신설했습니다. 커다란 악을 막기 위해서는 커다란 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 그런 부정부패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답변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상 1차 수사단계가 거의 마비되는 경험을 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사건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졌어요. 가해자는 그사이에 모든 증거를 인멸해서 이사하고 경찰은 가해자가 이사한 거주지 관할서로

사건을 계속 넘기기 바쁩니다. 결국 불송치로 끝났어요. 피해자는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말이지요.

예전에는 사건이 검찰에 한 번 송치되면 그 기한 관리나 공소시효의 관리가 일률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사건을 처리해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애초에 수사의 책임자가 누구인가도 매우 불분명해졌어요. 경찰은 1차 수사권 종결만 갖고 있고 그렇다고 종국적 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지요. 검찰은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딱히 자세히 들여다볼 일도 없지요. 그렇게 서로 네 탓 하기 너무 편해진 그런 거예요'.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다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경찰의 가용한 수사역량이 일어나는 범죄를 모두 처리하기 어렵기에 제도적으로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장 우원식 의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예지 의원 감사합니다.

'보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신데 저는 그 보충의 주체가 꼭 검찰이어야 하는가에는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라고 질문자가 말하자 답변합니다.

'저는 검찰이 경찰에 수사통제를 하는 주체가 맞다고 봅니다. 검찰은 기소의 주체이자 수십 년간 그 일만 해 왔습니다. 어디에도 이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없지요. 애초에 검찰과 경찰을 별도로 뽑는 이유는 검찰이 법률 전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형사와 형사법에 대한 법률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증거법에 대해서는 고도의 이해를 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뿐만 아니라 판례나 여러 지침이나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법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라는 식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실었던 기고문이었고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쟁, 현장 목소리 반영이 먼저다', 법률신문에 2026년 3월 14일 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같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검사는 기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증거와 사실관계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 전건송치 폐지가 만든 수사통제 공백도 함께 논의돼야'라는 부주제가 달려 있고요.

관련되어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그 안에 실제 형사사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변화가 범죄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실무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은 실효성이 없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론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처럼 신속한 보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나마 몇 가지 대안이라고 언급되는 것들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무상 운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먼저 위원회 중심의 사후 통제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 수사심의위원회나 사건심의위원

회와 같은 구조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에 배치된다. 형사사건은 기록 몇 장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건의 흐름과 수사과정 전체를 이해해야 적절한 판단이 가능한데 위원회라는 방식은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균질하게 확보하기도 어렵고 위원 선임 또 일정 조율,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결과보고까지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 이는 곧 사건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책임소재를 흐리게 만들어 수사기관이 위원회로 책임을 전가할 위험이 크다.

다음으로 공소청에 기소 전 간단한 조사만 허용하겠다는 대안은 실효성이 없다. 강제력이 없는 조사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혹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 추가 확인한 내용으로 기소 판단을 변경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조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정합적인 제도설계 없이 조사는 허용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완수사요구에만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방안 역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이미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 법체계에서는 수사 전 과정에 대한 일관된 통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보완수사요구 단계에만 부분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겠다 하는 것은 통제구조의 정합성에 배치된다. 수사 전반에 대한 통제 없이 기소 직전 단계에만 형식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채 책임부담만 공소청에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실질적인 수사통제가 아니라 책임만 떠안기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보완수사권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 책임의 근거다.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물을 근거로 기능한다. 검사의 기소 판단은 기록을 받아 읽어 보고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다. 재판에 넘어갈 정도로 증거가 충분한지, 그 증거가 법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복잡한 증거법칙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사건의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판단이다. 그 결과 무죄가 나오거나 위법한 증거가 배제되거나 공소기각이 되면 그 책임은 기소권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기소권자에게 기소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주지 않는 구조라면 책임을 지우면서 수단은 빼앗는 모순이 발생한다.

보완수사는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다. 기소 판단에 필요한 자잘한 사실들을 수사통제의 일환으로 채워 넣는 필수적인 실무절차다. 범죄일람표의 일부 수정, 계좌번호의 착오 정정, 피해범위 보완, 범죄사실의 일시·장소 정정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들조차 실무에서는 모두 보완수사에 해당한다. 이런 사안들을 전부 1차 수사기관에 다시 보내 처리하도록 하면 사건처리 속도는 급격히 늦어지고 그사이 증거인멸이나 증거소실의 위험이 커진다. 보완수사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 사건기록 자체가 표류하게 되고 수사와 기소 모두에서 동력을 잃게 된다.

보완수사권 남용이 걱정이라면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제도설계로 통제하면 된다. 보완수사 범위를 사건 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고 보완수사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거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직접 보완수사 중 영장청구가 필요하다면 상급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강화할 수도 있다. 문제는 보완수사 자체가 아니라 남용 가능성이고 이는 법령이나 지침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셋째, 전건 송치 폐지가 만든 구조적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건 송치 폐지가 가져온 문제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통제장치를 걷어 낸 제도 변화이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다 보면 과잉수사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부실수사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조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1차 수사권이 강화될수록 사후적 통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상적인 점검과 통제가 함께 작동할 필요가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모든 사건이 기소권자에게 전건 송치되면서 개인이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한번 더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구조가 작동했었다. 그러나 전건 송치가 폐지되면서 수사기관이 입건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체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통로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 다른 문제는 사건이 어느 1차 수사기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경찰, 중수청, 특사경 중 어디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촘촘함이나 법률 판단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를 과연 법 앞의 평등으로 볼 수 있을까. 전건 송치는 수사 주체에 따른 이러한 편차를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수사 통제 비용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과거 전건 송치 체계에서는 국민이 국가 차원의 재검토 구조를 사실상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이 비용을 들이게 된 것이다.

중수청이 신설되어서 대응이 더 복잡해질 경우 법률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나 내부 고발, 첩보로 시작되는 사건은 애초에 이의신청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전건 송치를 성급히 폐지한 것은 수사 통제의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일부 이전한 제도 변화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수사기관 간 책임과 협력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형사사법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형사사법 제도가 정치적 갈등 속에서 반복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협력관계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현재 구조에서는 수사관이 송치 또는 불송치 단계까지만 사건을 담당하고 이후 재판 과정이나 판결 결과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설사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는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관 간 협력을 법조문에 선언적으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 실제 협력이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전건 송치를 전제로 기소권자가 사건을 한번 더 검토하는 구조는 형사사법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완결성이란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성실성이나 도덕성에 상관없이 시스템 자체가 최소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송치된 사건을 기소 전에 다시 살펴보는 과정은 단순한 절차적 반복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전장치에 가깝다. 형사사건 하나가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에 법률가에 의한 검토가 한번 더 주어지는 것

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형사사법 제도 설계는 상징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논의 역시 기관 간 권한 논쟁을 넘어 수사와 통제 구조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실무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기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집권여당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크나큰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타났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정규 수사기관이 집권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수사 대상에는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 기관이 정권 핵심부나 권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또 이 사람을 기소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그런 것부터 계산하게 되고 결국 소신 있는 판단보다는 문제 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국정조사로 돌아와서, 조작기소 의혹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조직에서의 의견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의 압박 속에서 검사 개인이 소신 있게 발언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권한남용을 막겠다는 명분이 오히려 또 다른 권력을 비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합니다.

수사와 소추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고 헌법이 검찰에 일정한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특정 사건, 특정 검사, 특정 판단을 겨냥해서 압박하고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수사와 기소는 더 이상 법과 증거가 아닌 정치적 파장과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계산이 개입되는 순간 형사사법시스템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이고 수사와 기소의 기준은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이 아니라 권력과 분위기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수당과 대통령의 이해관계에 부역하기 위해 수사·소추 기능의 본질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검찰이라는 집단을 견제하려는 것이기 이전에 수사·소추 기능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은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 곧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권력과 정보, 자원과 인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정보, 자원과 인맥이 없는 사람일수록 공정한 법 집행과 국가의 책임 있는 개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대응체계 전반이 느슨해질 경우에 그 피해는 결코 고르게 분산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제도의 빈틈 속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약자는 오직 국가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믿음 위에서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검찰 기능의 약화와 사실상의 무력화가 그로 인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합니다. 이는 특정 기관을 옹호하자는 취지가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기관도 무오류의 존재일 수는 없으며 개혁의 필요성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되며, 특히 약자 보호의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허물어뜨리는 방식이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제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구조의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은 늘 약자였고 그 점에서 검찰 기능의 축소는 단순한 권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 보호체계 전반의 약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쉽게 방치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거나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외부 개입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일수록 초기에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건의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사·기소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이 줄어들게 되면 피해는 장기간 은폐되거나 반복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장애인과 아동, 노인과 같이 보호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신고 이후 실제로 보호를 받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피의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위험한 환경에 계속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이 남아 있기는 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법 공소청법, 이미 통과된 그런 법들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고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그런 국가보호범죄 등 6개 범죄만 다루는 중대범죄수사청만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늘 의원실에서 민원으로 받고 있는 그리고 또 저의 의정활동의 주된 대상이신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학대를 당하게 되면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로지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현장에서 문제시되는 경찰의 부실수사 또 늘어나는 경찰 불송치 건수 또 경찰이 불송치하면 제삼자의 고발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노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은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삼자가 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건이 그대로 억울하게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 폐기됐고 22대에서도 발의했던 바 있는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게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돼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아니면 스토킹범죄 피해자, 아동,

노인, 외국인 등 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공익 고발 제도를 통해서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어서 피해자 권리보호체계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는 놓아두시고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이유를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2차 피해와 권리구제의 단절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범죄사건에서 기소 여부는 단순히 형사처벌의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자신의 피해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보호절차와 권리구제의 문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건이 중간에서 종결되면 피해자는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받을 기회 그 자체를,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은 언제 하시려고 하는지 굉장히 묻고 싶습니다. 알고는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손해배상, 보호명령, 접근금지, 시설변경, 후속 보호조치에 대한 여러 절차 역시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약자에게는 형사절차 하나가 단순한 처벌절차가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가 짧아지거나 끊기게 되면 피해자는 다시 침묵과 고립 속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현장대응기관 전체가 위축될 우려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또 사회복지기관, 권익옹호기관, 상담소 등은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장 먼저 만나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 사이에 '어차피 사건이 기소까지 가지 않는다. 결국 입증 부족으로 끝난다. 문제를 제기해도 실효적 조치가 없다'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접수와 초기 개입 그리고 후속조치 전반이 소극적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도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된다는 믿음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법 집행 단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수록 현장대응체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구조 안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들이 반복되어 온 현실을 마주해 왔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의 일이니까 많이 잊혀졌을 것 같습니다.

2005년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 인화학교에서 교직원들이 5년 이상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학대와 집단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초기 수사는 이루어졌지만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감정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사건은 수년 뒤에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로소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법인은 학교와 거주시설인 인화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가족 없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주요 피해대상이 되면서 범행은 장기간 은폐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아동과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잔혹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국민에게 각인시켰고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배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법인 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현실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경기도 양평의 거주시설인 송전원에서는 거주 장애인 학대와 여성 거주인 성추행, 사후피임약 강제 복용 등 중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습니다. 또 가평의 루디아의집

은 2014년 보조금 횡령과 학대 혐의로 1차 행정명령을 받았고 2017년에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다시 행정명령을 또 받았고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종사자들의 장기적·반복적 가해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으로 올라오면 2024년 울산 북구 태연재활원에서 생활지도원 20명이 입소 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고 CCTV로 확인된 폭행만 약 890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장애인 학대가 결코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 시설 구조와 권력 불균형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구조적 범죄임을 보여 줍니다.

아주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밝혀진 게 최근이지요, 계속되었으나. 인천판 도가니라고 불리는 색동원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담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장기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시설에 들어온 때부터 피해를 당해 왔다고 진술했고 다양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단순사고로 보기 어려운 그런 여러 진술들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말하면 죽이겠다, 응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협박을 진술한 것은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권력 우위에 선 자가 얼마나 쉽게 장애인들의 몸과 삶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1·2차 심층조사보고서는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남성장애인들 또한 시설장으로부터 폭행 등의 학대를 당했고 또 조직적으로 시설 종사자들이 그런 학대에 가담했다는 진술도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상당수가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자였습니다. 그러나 송치단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수사기관이 장애인 피해의 특수성과 진술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당시 경찰이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성폭력 상담기관들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안내하지 않고, 이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석을 저지해서 결국 여러 장애인 피해자분들이 신뢰관계인 없이 진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요.

이런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성폭력과 학대를 당한 장애인 피해자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수사를 받고 진술에 있어서도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당한 뒤에도 또다시 고립된 시설로 가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 당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 문제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충분히 개입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검찰개혁을 이유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들로 인해서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3월 19일 검찰은 색동원 시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일들, 보완수사를 통해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는데요. 앞으로 가능할까요?

장애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에 강간한 행위가, 그리고 또 드럼스틱으로 장애인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십 차례 때린 학대행위까지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보완수사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대검에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진술 분석을 의뢰하고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색동원 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면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범행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연계해서 정신과 치료 등과 함께 주거이전비,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혐의를 소명해서 구속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이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뢰성 있는 진술을 확보해서 추가 수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가능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밝혀지지 않았던 수사에서, 그런데 보완수사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정말 밝혀지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은폐되었으면 큰일 났을 추가 범죄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통과돼서, 필리버스터를 했으나 통과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국정조사는 조작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낭떠러지로 몰아세우는 그런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런 행정의 미비, 행정의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미 통과돼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이 두 법들이, 이미 통과되었으니 할 말은 없지만 시행되면 색동원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 장애인 학대 별거 아닙니다, 중대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수사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돼도 진술조력인 그리고 신뢰인의 동석, 알렸어야 함에도 알리지 못한 이런 것들 또 하겠다고 알려 줘도 거절한 이런 것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되물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은 억지로 짜맞추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측, 앞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서 개선해야 되는 상황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 낼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가 미흡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거하게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밝혀내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수단이 사라질 경우에 그 피해는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자는 힘 있고 돈 많고 인맥이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 조력이 필요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해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또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피해자가 피해를 오롯이 겪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것

입니까?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심각한 이런 학대 사건 같은 문제들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안타깝게도 늘어나고 있고 왜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나고 있고…… 수사 과정이, 그런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학대 피해 후에 후속조치들을 하는데 수사권은 없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되는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 의심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가 많아졌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전히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거나 내기 어려운 또 내도 들어 주지 않는 그런 대상들의 학대와 인권 침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학대는 일반 폭력사건과 다르게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장기간 숨기거나 아니면 그 피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경우가 마치 돌봐 준다는 이유로 그러지요. 그래서 증거 확보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잘 안 됩니다. '내가 돌봐 줬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 더 긴 호흡의 수사 그리고 더 촘촘한 보호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검찰 기능이 축소되고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될 위험이 커진다면 이러한 사건에서 약자를 위해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적 통로는 좁아지거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임기 만료 폐기됐고요. 그래서 또 했습니다. 논의도 안 됐더라고요. 법사위 법안이라 그런가 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지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간혹 장애인 관련 행사에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물어보면 '통증을 느끼는 곳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면 거기만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통증을 느끼는 곳이 어디십니까?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빨리해야 하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2년이 넘도록 들여다보지도 않으시는 이 법안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의 법안이기 때문입니까?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해야지요. 앞에서 과거 역사도 여러 가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현안들 또 가장 아파서 중요한 우리 사회의 부분들 왜 챙기지 않으십니까?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례와 치사 등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등에 대한 학대를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해도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도 냈으나 다른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당 인사께서 하신 바 있어서, 왠지 그 논의도 안 알려 주실 것 같아서 다시 이 법안에 담았습니

다. 장애인학대범죄에 국한합니다. 필요합니다. 장애인학대 특례법에 있는데 정치적 악용 운운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리고 장애인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담검사와 전담경찰을 지정하고 검사가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장애인 권익의무기관의 장에게 피해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수사와 재판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 수사권과 보완·통제 기능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돈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신고하고 진술하고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목표하신 바입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시민단체나 공익기관이나 권익옹호기관 등이 대신 고발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경우 다시 검찰 단계에서 충분한 재검토를 받을 수 없는 부재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이 묻히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을 때 보완수사와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절차적 사다리가 이전보다 짧아졌고, 짧아졌거나 사실상 없어졌고 그 결과 이런 장애인 학대와 같은 구조적 범죄에서 권익옹호기관이나 대리 고발 주체들이 문제 제기를 주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학대 사건은 본래부터 명확한 물적 증거나 즉시성 있는 진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릴 경우 사실상 다른 대책이 없어지는 문제가 큽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적 안전판, 그 안전판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장애인의 여러 가지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준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택일은 2006년 12월이고 발효일은 2008년 5월 3일입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에 가입했습니다. 국내 발효일은 2009년이었습니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

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 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 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토착지역·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또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등 이렇게 이런 우려나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일반 논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법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에 있어서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2조인데요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입니다. 일반논평 1호, 2014년 협약 제1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은 인권 보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이며 다른 인권의 실현에도 필수적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이미 구체적으로 법 앞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더 나아가 민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부정되어 온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조가 장애인의 권리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본 조항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가지는 법 앞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본 조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법적 능력에 관한 논의를 위한 쌍방향 포럼을 여러 번 개최하였다. 전문가, 당사국, 장애인단체, 비정부기구, 조약 모니터링 기구, 국가인권기관, 유엔기관이 참여해서 12조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한 추가 지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검토된, 여러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근거하여, 협약 12조에 따라 당사국이 가지는 의무의 정확한 범위에 대하여 보편적인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실제로 인권 기반 장애 모델은 기존의 대리 의사결정 패러다임에서 지원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본 일반논평은 12조의 다양한 구성 요소로부터 찾을 수 있는 일반적 의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일반논평은 협약의 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기반하여 12조를 해석한다. 3조에 기술된 일반 원칙은 천부적인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과 자립의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균등한 기회, 접근성, 남녀의 평등, 장애 아동의 발달 역량에 대한 존중 및 그 정체성의 보존을 위한 권리의 존중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가 모든 곳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즉 국제인권법 아래 그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이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당하는 상황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공공 비상 상황에서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조 2항에 따라 이 권리의 훼손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의 훼손에 관해서 이와 동등한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협약 4조 4항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이 기

존 국제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권리는 국제규약 조항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권은 다른 국제 및 역내 인권조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법 앞에서의 평등을 말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이런 절차조력, 진술조력 등의 사법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려하듯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은 사실상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괴리 있는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다.

다시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지금 현황,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저 말고, 제 말을 하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공부 많이 하셨다는 교수님들의 글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전원 교수이십니다. 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색동원 얘기를 하면서 경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했는데요. 보완수사권 문제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는 제 얘기였고, 법전원 교수님이십니다.

'보완수사권 문제의 경과는 이렇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보완수사 없는 세상을 진짜 원합니까? 제가 갑자기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 곡학아세하는 폴리페서가 되었습니다'. 원래 진보 인사이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한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하면 불편해지나 봅니다. 어디서나 좀 그렇기는 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쌓아 놓은 명성에 왜 스스로 먹칠을 하냐고 말합니다. 제가 이러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저의 직업적 양심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형사사법절차를 경험하고 연구해 왔고 지난 몇 달간은 이 첨예한 논쟁 현장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세상이 어떨 것인지 명확하게 그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그런 세상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입니다. 자고로 지식인은 진실을 말해야 하고 거짓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지식인의 삶이라고 저는 배워 왔습니다', 저도 배워 왔습니다.

'수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형사절차 시스템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양 유럽에서 만들어진 근대 형사절차가 일본을 통해 이 나라에 들어왔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 80년을 운용한 제도입니다.

우리 형사절차는 소위 대륙법 계통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대륙법하에서의 검사의 주된 기능은 경찰의 수사통제와 전국적·통일적 법 적용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프랑스와 독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검사는 수사의 기본 주체로서 경찰을 지휘 통제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독일은 대형 경제범죄 수사의 경우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족처럼 수사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고', 아까 미국하고 같네요.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인력도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일은 거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만드나요?

'우리나라는 대륙법 계통의 수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수십 년간 검찰이 욕심을 내 왔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보다 자신이 직접 수사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권이 있다 보니 자신이 직접 수사를 하면 경찰에 비할 바 없는 강한 힘을 보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그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의 구현에 도움이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 특검이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관점은.

'특검은 수사를 직접 하면서 필요한 경우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직접수사권을 남용해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절대 권력기관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칼이 한 사람을 향하면 멸문지화의 상황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분개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시민사회가 들끓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뺏는다고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형소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조항(196조)을 깨끗이 잘라냈으면 좋았는데', 이건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제한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 정권은 그 근거를 시행령으로 확대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읽으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압니다. 그 열망을 이제 제도로 바꾸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도 개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검찰개혁의 골자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그래서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꿈). 2.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중수청을 만들어 보존해 국가의 범죄 억제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런 구도하에 지금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을 앞두고 있고 이어서 형소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형소법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갈등이 싹트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검찰은 옛날로 돌아가 보완수사를 근거로 장난을 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보완수사는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사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사와는 속성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사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입니다. 설혹 위험하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실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기소해서 무죄 받으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검사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사는 기소 전에 사실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에게 보완수사마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예를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독일식으로 가면 됩니다’ 하고 이 뒤에는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직접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법전원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도 제가 색동원 사건을, 그게 사실 어제 그제 일이었기 때문에, 최근 일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보완수사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또 이런 본인의 의사를 특별히 조력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거나 지원을 특별하게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수사절차, 사법 접근권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아까 이 교수님이 저와는 아마 다른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내셨을 거고—저는 사실 법적인 의견을 낸 사람은 아니고—하지만 개혁을 굉장히 갈망하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법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이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현장에서 조력하시고 현장에서 변호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늘 우려한 바 있었던 검찰 수사권의 박탈 이후에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를 하는 그런 수사권과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을 열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그 기소권,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자니까 수사해라라고 올리는 게 기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기소권을 갖는데 수사를 시작해서 재판에 올릴 수 있는 그 막강한 권한,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고 그 권한의 남용 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개혁을 하시는 거겠지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그래서 그 역할에 수반되는 권한을 분배하자 하는 것이 목표였던 그런 개혁의 어떤 방향인데요. 형사소송법도 있었고 검찰청법 개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물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내용에는 검찰청법 4조, 형사소송법 196조, 198조제4항 그다음에 245조의7의 제1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했다. 수사권 축소,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지요—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이다. 수사 중 새로 알게 된 범죄라고 해도 수사권을 갖는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별건수사 금지인데 직접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건데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검수완박에서 이 문제가 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슈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피해자가 직접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제삼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는데 그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가 다른 거지요.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경

찰은 범죄 혐의를 수사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로 사건을 보내고, 제가 아까 이를 송치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보내는 것, 경찰로 보내는 겁니다, 하라고 보내는. 검찰이 판단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는 거지요. 재판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만약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후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종결합니다. 이걸 불송치라고 합니다. 아까 보내는 건 송치, 안 보내는 건 불송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불송치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아까처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제가 사건을 다 본 건 아니니까.

경찰이 수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거나—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검사님들도 간혹 악용하시는 분도 계셨겠으나 아까 그 보완수사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절차적 조력과 또 진술 조력까지 요청하시면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듯이…… 사실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합니다. 어디나 빌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고, 아니면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뭔지 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모르는 분에게는 알려 드릴 의무도 있고 본인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취해야 할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도 막고 이런 일이 있듯이 잘 모릅니다.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법 지원이 부실한 그런 결과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인 고발인 모두가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이의 신청하면 검찰로 송치돼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라는 검찰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인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폐지되어서 우려를 계속 낳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다수의 경우 불송치로 그냥 끝나 버리는, 종결되어 버리는 억울한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 색동원 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빼고 다 가셨던 것 같습니다. 총리님도 가셨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그래서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에 대한 주목도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만큼 사실상 사법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론과 언론과.

그래서 경찰로 수사권이 일원화돼서 경찰의 수사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데 피해자도 아닌 제삼자들이 고발을 남발하게 되면 경찰 수사 부담이 가중되어 진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피해자가 아니면 경찰 수사를, 그것 끝나면 더 이상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중증 발달장애인 등이나 정신적 장애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학대 피해, 이게 꼭 육체적 학대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착취도 굉장히 많습니다.

염전 노예 사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염전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장이나 축사 이런 데도 보호한다, 먹여 주고 재워 준다라는 이유로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 많습니다. 은밀하게 장기간, 그것도 착취, 사실 어떻게 보면 그루밍 범죄인데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당하면 이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게 학대를 받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못 하거나 아예 할 생각조차 못 합니다. 고소한다고 해도 아까처럼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이 의사능력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런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요.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으로 아마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적장애인이 노동 착취 사건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잘 하셨는데 검찰은 고소 의사가 내적 기준을 가진 의사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고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느덧 12시가 되어 가네요.

그래서 고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법접근권에 대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알게 된 주변인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삼자로서 고발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또 피해자 보호나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 고소보다 오히려 고발이 적절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했다가 경찰에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더 이상 사건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습니다. 사실상 영영 이게 종결되고 말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 이후에 현장에서는 한 번 더 다퉈 볼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게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기회 박탈이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호소할 기회나 수사가 미비하다라고 다시 어떻게 이의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21년 밝혀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인 제2의 염전 노예 사건의 경우도 권익문제연구소가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만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해서 검찰 대상의 감금이, 재산 착취 사건의 경우에 고발 대신 고소로 사건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후견인 선임이 필요해서 후견인 후보자를 물색하고 또 후견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아주 길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많은 폐해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낸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의 법적 조력을 맡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3월21일 24시 경과)

경향신문에 2025년 11월 16일 ‘경찰개혁, 현장 수사관 목소리 담아야’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개의 범죄 피해를 한꺼번에 고소했다.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일부만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가 그 수사관에게 송치결정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수사 중이라 송치결정서는 못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답답한 피해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수사 중인 사건은 정보공개가 안 되니 청구를 취하하라는 것이 아닌가. 경찰수사규칙 제97조는 송치·불송치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그 수사관의 의무로 적어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의무를 잘 모르십니다. 모를 수도 있지요. 모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 모르시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간혹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혹에 기대해야 할지 물어야 합니다. 운 좋으면을 기대하고 사법적 지원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운에 따라 잘하시는 분은 알고 못하시는 분은 또 의무도 모르고,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경찰 한 명의 실수나 불성실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라고 되묻습니다, 이 글쓴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허술한 구조로 인해서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제도는 법률가에 의한 수사 통제 때문에 탄생했다. 수사 통제는 충실한 기소를 위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말한다. 각국의 수사 통제는 주로 수사 지휘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그 수사 지휘는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종합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정작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일반 시민들은 경찰 하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범죄에 대한 대응이다. 범인을 잡고 수사를 하는 일 말이다. 그러나 13만 명이 넘는 경찰 가운데 실제로 수사 업무를 맡는 인력은 2만 5000명 정도로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

수사 부서는 인기도 없다. 박봉 속 교대근무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사건 관계자들에게 민원도 많이 겪으며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들은 승진이 쉽고 권력과 가까운 기획이나 정보 부서를 선호한다. 이건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수사 부서의 유일한 희망은 승진인데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느냐가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사건을 얼마나 깊고 충실하게 처리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빨리 불송치를 하는 것이 승진에는 유리하다.

경찰에는 검찰에 있는 시효도과 징계조차 없다. 사건 처리가 늦어서 공소시효를 넘겨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대부분의 민생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이제 더 몰리겠지요.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다. 부담이 커지자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까지 현장을 떠났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일선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력 이탈은 지역별 편차를 더 심하게 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지적된 지역 불균형 문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이렇다 보니 힘없는 서민들의 사건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경찰은 이미 처리할 사건이 많기에 어떻게든 새 사건을 받지 않으려 하고 받은 사건은 최대한 빨리 떨어내려 한다.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글쓴이는 이런 분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사건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해도 진상 민원인 취급을 받는다. 뭐 요청하면 진상인 취급을 받기 쉽지요.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지금 제가 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기회에라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내 사건 먼저 봐 달라는 이른바 급행료라는 뇌물이 암암리에 돈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다. 어디에나 있지요.

진짜 경찰 개혁은 현장의 디테일을 바로잡는 일이다. 처리 건수만 세는 구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 부서가 고생만 하는 곳이 아니라 보람 있고 대우받는 곳이 된다. 범죄 대응을 위해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 통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구조이지만 지난 몇 년간 형사사법체계를 파워게임으로 다루며 수사 경찰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제도는 더 퇴보해 왔다. 현장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경찰개혁은 시민에게 도달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현장에서 일하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지금 검찰개혁에도 반영되었는지 다시 짚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될 수 없다.'

이 글은 검찰개혁 하다 보니까 경찰에 수사가 몰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우려 또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도 제안하신 경향신문 2025년 11월 16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은—제가 찾다가 보니까—논문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논문인데요.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므로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권한을 독점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 주장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의 검찰제도를 분석해서 위와 같은 과감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분석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5개국에 대한 분석만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진국 모임으로 지칭되는 OECD 35개 회원국 전체와 검찰제도를 활용하는 국제기구, 각종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 검찰청의 수사·기소 제도를 분석하여 위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고 무엇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탐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 OECD 35개 회원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고 약 77%에 해당하는 2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절대 다수의 선진국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통할하고 있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약 20%는 모두 잉글랜드의 영향을 받은 커먼 로(common law) 국가들로 하나같이 검찰제도를 운용해 온 역사가 매우 일천한 국가들이고 심지어 아직 경찰기관이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점에서 이들 국가도 역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각종 국제형사재판소나 유럽 검찰청에서도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관장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1세기 들어서 형사사법제도를 전면 개혁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모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검사의 수사

권과 수사지휘권을 새로이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모든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할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이고 국제적 표준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 준다. 물론 우리 검찰제도도 그와 궤를 같이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OECD 35개 회원국 중 헌법에 검사의 수사 또는 수사지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규정한 나라가 7개국 또 검찰이 헌법기관인 나라가 위 7개국을 포함하여 14개국인 것으로 확인된다. 혹자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한 주장이다. 위 7개국은 검사의 영장신청권 규정에 비하여 검사로 하여금 수사 전반을 주재하고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수권규정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굳이 대(大)에 포함되는 소(小)에 불과한 영장신청권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가 국민의 인권 보장과 경찰수사의 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을진대 그보다 훨씬 약한 영장신청권 규정이 유례가 없다거나 헌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주장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결합할 경우 검사 2000명 대신 사법경찰 16만 명으로 영장신청권자를 대체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구속 등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폭증할 것임이 분명한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다수 국가의 법령과 유엔 및 유럽평의회의 가이드라인은 검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독립성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바 이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자들은 잉글랜드의 수사·기소 제도를 계수하자고 주장하는바 이 또한 부적절한 주장이다. 잉글랜드는 판례법과 사인소추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로 우리처럼 성문법과 국가소추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검찰제도는 물론이고 민형사법 체계 그리고 소송구조 등 기본적인 사법시스템이 천양지차이다. 수사·기소 제도만 잉글랜드에서 가져올 경우 다른 시스템과 충돌이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도 최근 대륙법계 검찰을 모방하여 CPS와 SFO 등의 검찰기관을 설립하여 경찰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잉글랜드의 시스템을 좇아 경찰권을 강화하는 것은 잉글랜드의 발전 추세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성숙한 제도인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계수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사법시스템도 확연히 다르고 검찰제도 자체의 역사도 일천한 잉글랜드의 제도를 계수하자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다. 더구나 수사와 기소를 단절하여서 수사에 대한 검사의 관여를 차단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단하게 하는 것은 현재 잉글랜드의 시스템도 아니다. 바로 경찰수사의 문제점이 창궐하던 1980년대 잉글랜드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하면서 논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신 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양한 외국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쓴 내용들이라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개혁 방향을 정하신 분들도 이 내용을 보셨으면 해서 찾아봤고요.

그래서 보면 연구의 배경이 나옵니다.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최근 일부 학계와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미 우리는 추진을 하고요—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는 것이 세계적 표준이므로 검사의 수사 권한과 수사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권한을 독점하게 하자는 것이다. 외국의 수사·기소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장이나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한 시대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특별한 반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위 주장의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면 모두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5개 국가의 수사·기소 제도에 대한 분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한다. 물론 필자는 그 분석 내용이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연구 배경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5개국만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 분석 내용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불과 5개 국가에 대한 분석으로 과연 위와 같은 과감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소위 경찰수사권 독립론을 주장하거나 그에 대해 반박하는 논자들은 대부분 위 5개국에 대한 분석에 그 주장과 반박의 근거를 두어 왔다. 그런데 글로벌 스탠더드는 문언 그대로 세계적인 표준을 의미한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고 그중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지칭되는 OECD 회원국만 하더라도 35개국이다. 위 5개국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이고 대부분 법률 선진국인 것은 사실이나 위 5개국의 제도가 전 세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5개국에 대한 분석만으로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단언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소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5개국 외에 다른 선진국들의 제도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주권국가 외에도 검찰제도를 활용하는 각종 국제기구의 시스템을 분석해 보는 것도 수사·기소 제도의 국제적 표준을 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기소 제도에 실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존재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5개국에 대한 분석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출하였다고 단정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다수의 선진국, 각종 국제기구의 제도를 분석해 본다면 적어도 5개국에 대한 분석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존재하는지, 어떤 시스템이 그것에 가까운 것인지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분석 방법론으로 갑니다.

분석 대상에는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방지하고 수사·기소 제도의 진정한 표준을 탐색하기 위하여 OECD 35개 회원국 전체를 분석하였다. 물론 위 35개국에는 위 5개국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에 대한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외국 제도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수사·기소 제도의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참고 가치의 견지에서 본다면 주로 선진국으로 구성된 OECD 회원국 분석이 더 유의미하다고 본다.

나아가 35개 주권국가 외에도 검찰제도를 활용하는 각종 국제기구의 사례도 검토 대상에 추가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등을 비롯

한 각종 국제형사재판소와 최근 유럽연합이 창설을 확정한 유럽 검찰청(EPPO)의 수사·기소 시스템도 함께 검토하였다. 국제기구의 시스템은 다수의 주권국가가 합의하여 만드는 것이므로 그 시스템이 일부 주권국가의 시스템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엔이나 유럽평의회는 검찰제도에 대한 각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검사의 수사 및 수사지휘에 관한 특정한 선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방법이 나옵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각국의 헌법, 형사소송법, 국가 간 조약, 유엔 규정 등 성문의 법령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성문의 법령으로 부족할 경우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검사가 법률적·제도적으로 수사 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실제 현실에서 수사와 기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OECD 회원국의 수사·기소 제도로 넘어갑니다.

동아시아 및 서아시아 4개국인데요.

가. 대한민국입니다.

헌법 12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각 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모두 인정된다.

나. 일본의 예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 검찰관은 모든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①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3조 검찰관은 사법경찰 직원에 대하여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지시 및 지휘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 검찰관의 지시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법경찰 직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검사의 수사 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모두 인정된다.

다. 터키입니다.

헌법 제139조 판사와 검사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60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즉시 사실관계를 수사하여

야 한다. ‘수사하여야 한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검사는 직접 또는 그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을 통해 수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은 검사의 모든 명령을 지체 없이 집행할 의무가 있다.

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영미법 체계의 영향을 받아 검찰의 수사권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사권은 전적으로 경찰이 행사한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도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서유럽 7개국입니다.

가. 독일, 형사소송법 제160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해야 한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 검찰은 수사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에 대하여 수사를 지원하도록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독일 법체계상 검찰은 수사 절차의 주관자로서 경찰에 대해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집니다.

다음, 프랑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조 사법경찰은 검찰의 지휘하에 놓인다.

형사소송법 제41조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활동을 지휘하며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직접 행하거나 행하게 할 수 있고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 전체를 주재하며 경찰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여 기존의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8조 검찰은 수사 절차의 진행을 책임지며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개혁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더욱 명확히 확립하였다.

다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역시 2011년 연방형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6조 검찰은 수사 절차를 주도하고 기소를 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경찰은 검찰의 지휘와 감독하에 수사를 수행한다.

다음 나라는 벨기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조의2 검사는 범죄수사를 총괄한다.

형사소송법 제28조의3 수사는 검사의 지시와 권한하에 이루어지며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다음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검사는 범죄수사를 위해 사법경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음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조 검사는 사법경찰의 활동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그다음 이제 북유럽으로 갑니다, 9개 나라.

첫 번째 덴마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8조 경찰은 검찰의 지휘와 감독할 수사를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742조입니다. 범죄의 수사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수행하며 검찰은 수사의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덴마크는 검찰과 경찰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며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범죄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이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검찰은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침을 하달할 수 있다.

다음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제10장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강제수사·압수수색 등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장제1조 수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주재한다.

형사소송법 제23장제3조 검사는 수사를 직접 주재하거나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음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장제1조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되 검사는 수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

다음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2조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경찰은 검사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다음 나라는 에스토니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검찰은 수사 절차를 주관하며 사법경찰은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를 수행한다.

다음 나라는 라트비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조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경찰에 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그다음은 리투아니아입니다.

헌법 제118조 검사는 수사를 조직하고 주재하며 공소를 유지한다. 그다음 형사소송법 제164조 수사는 검사가 주관하며 검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행한다.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조 검사는 수사를 주재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위임하고 지휘할 수 있다.

다음은 남유럽 5개국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헌법 제109조 사법부(검찰 포함)는 직접 사법경찰을 운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수사를 수행한다. 수행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며 사법경찰을 직접 운용한다. 이탈리아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다음은 스페인입니다. 헌법 제124조 검찰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수사를 감독한다. 형사소송법 제773조 검사는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음은 포르투갈입니다. 헌법 제219조 검찰은 형사소송을 주재하고 수사를 지휘한다. 형사소송법 제263조 수사는 검사가 주재하며 사법경찰의 보조를 받는다.

다음은 그리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슬로베니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8조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며 경찰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다음은 동유럽으로 가겠습니다.

4개 국가인데요 헝가리가 먼저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며 수사기관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64조 검사는 수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사기관에 지시를 내려 수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한다.

다음은 체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4조 검사는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은 슬로바키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감독하며 수사기관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검사는 수사를 주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제 아메리카 4개국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방검찰과 주 검찰의 권한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방검찰의 경우 다음과 같다. 연방검사지침—연방검사는 범죄수사 권한을 가지며 법 집행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미국 검사는 대배심을 통해서 수사를 주도하며 수사기관을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행한다.

다음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헌법 제21조 범죄수사는 검찰과 사법경찰이 담당하며 사법경찰은 검찰의 지휘와 감독하에 수사를 수행한다. 헌법 제16조 검사는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음 나라는 칠레입니다. 헌법 제83조 검찰은 독점적으로 범죄수사를 주관하며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7조 검사는 수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명령을 즉시 집행해야 한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영미법 체계의 영향으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다. 다만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등 간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다음은 오세아니아의 2개 국가입니다.

호주가 먼저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질랜드……

○의장 우원식 김예지 의원님, 의장이 나가고 안호영 환노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겠습

니다.

(우원식 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예지 의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오세아니아로 갔지요. 2개 국가가 같이 나오는데요. 두 국가 모두 영미법 국가로서 경찰이 수사와 기소, 경미범죄를 모두 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복잡한 경제범죄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관여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각 나라들, OECD 35개 국가들을 쭉 대륙별로 봤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수사·기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논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먼저 봅니다.

로마규정 제54조 검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의자 및 피해자를 조사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검사가 수사 전반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럽 검찰청입니다. EPPO 규정 2017-1939라고 합니다. 제24조에 의하면 유럽 검사는 범죄수사를 주재하고 지휘한다. 제28조 수사기관은 유럽 검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며 검사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합의해서 만든 이 기구는 대륙법계의 검찰 모델 수사·기소 통합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타 국제형사재판소 ICTY, ICTR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역시 검사가 수사관들을 직접 지휘하며 수사 전반을 장악하고 기소까지 담당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입니다.

분석 및 비판인데요.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여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35개 회원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약 77%에 해당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검사는 수사·기소를 통할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머지 약 20%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모두 잉글랜드의 영향을 받은 코먼 로 국가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조차 수사·기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경찰이 수사는 물론 기소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수사·기소가 한 기관에, 경찰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국제형사재판소와 최근 설립된 유럽 검찰청(EPPO)의 사례는 현대 형사사법의 흐름이 검사에게 수사 전반을 주재하고 경찰이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21세기 들어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단행한 오스트리아, 2008년에 했다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와 2011년에 한 스위스가 기존에 없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사법경찰을 통제하며 수사와 기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이자 국제적인 표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의 다음 내용은 헌법상 영장신청권 규정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관한 우리 헌법 규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이는 헌법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이 드러났다. 분석 대상국 중 멕시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7개국은 검사의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의 헌법 규정은 우리 헌법의 영장신청권 규정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사에게 수사 전반을 주재하도록 하는 대(大)에 해당하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인 영장신청권이라는 소(小)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뿐이다.

우리 헌법이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역사를 반성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하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다. 이를 유례가 없다거나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만약 영장신청권 규정이 삭제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2000명의 검사 대신 16만 명의 사법경찰이 직접 영장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강제수사와 인권침해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논문의 다음 챕터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입니다.

유엔의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과 유럽평의회의 권고안은 공통적으로 검사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상당수는 검찰총장의 임명 절차에 의회나 사법평의회가 관여하게 하거나 검사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여 보장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기소를 정치적 외압 없이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른바 잉글랜드 모델에 대한 오해와 실상입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는 모델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영국의 역사적 특수성과 최근의 변화를 간과한 것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인소추의 원칙에 따라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 왔으나 경찰의 수사 남용과 오판으로 인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하자 1985년 비로소 검찰청을 창설하였다. 즉 영국의 CPS 창설은—검찰청입니다—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사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결과였다. 또한 영국에서도 최근에는 중대부패수사청과 같이 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지휘하는 모델이 강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와 소송 구조나 증거법 원칙, 법조인 양성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특정 제도만을 분리하여 도입할 경우 법체계 전반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다.

결국 영미법 국가들조차 과거의 수사·기소 분리—실제로는 경찰의 독점이었고—그 분

리 상태에서 벗어나서 검사의 수사 관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거꾸로 1980년대 이전의 영국 모델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논문의 결론입니다.

본 고에서 OECD 35개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수사·기소 제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님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절대 다수의 선진국 약 80%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개혁의 방향을 말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최근 사법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거나 명확히 하는 방향을 택했다. 인권 보호 측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검사의 영장신청권과 수사지휘권은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수사와 기소는 칼날과 칼자루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기능이다.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의 적법성을 따지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공판에서의 유죄판결 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검사는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되어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은 지양되어야 한다.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표준은 검사가 수사 전반에 걸쳐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이 논문 제목은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그 분리의 의미와 한계—분리(分離)인가, 단락(短絡)인가'라는 논문이 있는데 저자를 제가 못 찾았네요.

글을 시작하며…… 아, 여기 있네요.

속전속결·전광석화? 새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검찰개혁이라는 낯익은 어젠다가 등장했다. 분명 이전 정부에서도 내걸었던 검찰개혁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은 이전 개혁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전제로 했을 터이다. 하지만 소위 검찰개혁 4법을 비롯하여 지난 1월 12일 발표된 정부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고 있으면 과연 반성적 인식이 있긴 한 것인지, 지난 검찰개혁을 통해 배운 교훈이 겨우 속전속결·전광석화뿐인지 안타깝다.

이것은 논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현재와 다른 미래를 가질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이 지난 개혁의 데자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을 통해 무엇을 개혁하려 했고 이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반성 내지 성찰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재(再)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서 수사·공소 분리에 대한 검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분리하는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지금까지 공소권과 함께 검찰의 권능에 포함되어 있었던 수사권을 검찰이라는 조직으로부터, 물론 공소권으로부터도 독립, 분리·박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검찰개혁 4법이 내놓는 분리 방안은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대표 권능이었던 공소권과 수사권을 각각 따로 떼어서 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즉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중대범죄수사청, 이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을 지금 검찰이 처한 그 검찰청의 해체·폐지의 위기는 어찌 보면 자초위난에 가깝다. 공수처와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은 반성과 혁신을 꾀하기보다는 검찰규칙의 개정과 검찰 출신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개혁 뒤집기를 시도하였고 내란과 탄핵 정국을 거쳐 새로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되치기를 당하는 꼴이 되어 1949년에 설치된 이래 76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분리, 그 후 수사기관의 다원화.

지금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권을 이양받아 새롭게 신설되는 중수청을 비롯하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볼지 아니면 단순한 기관 쪼개기에 의한 수사력의 분산 내지 혼선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에 대한 개관.

검찰개혁 4법 중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의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중수청장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중수청에는 지역중수청장을 두고 지역중수청장은 그 지역 중수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을 지휘·감독한다.

지역중수청의 직제, 분장 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중수청 포함해 중수청에 수사관을 두며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중수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수사관의 임용·전보, 그 밖에 중수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수사관의 정원은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사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수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중대범죄 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고,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중수청의 존재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글입니다.

검찰로부터 분리된 수사권능은 왜 경찰의 기존 수사조직으로 온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별도의 기관 중수청 설립을 필요로 하는가? 중수청의 설치가 기관 쪼개기 내지 수사기관 난립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서 중수청의 존재 이유 내지 필요성이 논증되어야 한다.

2022년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른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대부분 검찰에 부여되어 있었고 현행 검찰청법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 등의 경우 그간 축적된 수사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집중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는 부패·경제 범죄 등 관련하여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가중된 수사업무로 인한 사건 처리의 지연,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부서 회피로 인한 수사 역량 약화 등의 부작용과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신설된 공수처마저도 협소한 조직 규모, 설립 초기부터 지속되는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와 같은 중수청의 신설 이유 내지 필요성 논증에는 모순적이게도 신설의 불필요성 및 존재적 한계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즉 이러한 필요성 논증은 검찰로부터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분리해 내더라도 정작 경찰에는 당장 이를 온전히 흡수할 인적·조직적 역량 내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비록 기관명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고 그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옮기더라도 그 실질은 검찰의 수사인력 및 조직 그 자체라는 점에서 소위 간판 갈이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물론 이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 내지 중수청 설립 초기의 일시적인 문제 정도로 보아서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권의 분리와 경찰, 중수청으로의 귀속이 과연 인적·물적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밀어붙여야 할 일인지, 더 나아가 필요성도 온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와 별도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자칫 그로 인한 수사상 비효

율을 감내해야 할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중수청 설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존 검찰의 수사조직을 해체하여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가 사장되어 수사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주장한다. 하지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과 노하우의 실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검찰수사 조직이 가지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의 역량과 노하우가 과연 현재의 개혁 방향과 같이 수사인력의 조직적 분리와 이름 바꾸기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컨대 부패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는 대부분 관련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수사를 담당하는 자와 공소유지 담당자 간의 긴밀한 협조·협력 관계의 구축이 전제될 때야 비로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과 노하우가 중수청 설치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개혁의 내용을 보면 당장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분리 그 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다음 챕터입니다. 조직적 분리와 기능적 분리의 구별 필요성.

현재의 개혁 주체는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사법권력의 독점으로 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민주적이라는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개혁안에서 말하는 분리에는 조직적 관점 및 기능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혼재되어 있다.

검찰의 권력화와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직적 관점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기존 조직을 공소청 및 중수청을 분리·재정립하는 방안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 3법의 내용을 보면 조직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넘어서서 기능적 관점에서도 수사·기소의 연결을 금기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에—저는 검수완박이라고 하지만요—따라서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에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방안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데 이번 검찰개혁안에서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름으로 수사·기소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연결고리조차 모두 폐지되거나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혁안이 실현되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수사기록만을 보고 기소·불기소의 종국적 판단만 가능할 뿐 직접수사는 고사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조차 할 수 없다. 안타깝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도 재수사할 수 없게 된다. 이의제기도 못하고 재수사할 수도 없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기에는 조직적 관점에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 내지 감독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의 존재 목적과 공소제기 및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능적 관점에서의 완전한 분리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 차원에서 분리하더라도 이것이 기능적 관점에서의 단절 내지 단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수청과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

진술한 바와 같이 중수청의 설립은 중대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는 중대범죄를 내란·외환의 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다른 죄 또는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를 의미하는 관련 범죄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로서의 중대범죄 등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왜 분리하는가?

권한 독점에 따른 검찰의 권력화.

이번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청의 폐지 및 수사·공소 분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안이유를 보면, 그간 검찰이 수사권, 공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한 데 따른 폐해의 결과로 검찰을 폐지하되 이를 대신하여 공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곤 했음.

한편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 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관 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했음.

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이는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즉 형사사법과 관련한 검찰의 권한 독점과 남용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동기이자 목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많은 권한 중 왜 수사권인가? 아마도 다른 권한들과 달리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함께 이 권한과 기능을 담당해 온 경찰이라는 기관과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 영역에서 경찰은 검찰의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벗어나 검찰과 대등한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였고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운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비로소 수사 권한을 온전히 독점하는 유일한 조직이 되려 한다. 물론 중수청과 경찰청, 국수본 및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다양화를 꾀한다고는 하나 조직의 일부인 기관

의 존재적·관계적·역학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수사 권능이 경찰이라는 조직에 집중·독점되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검찰 수사권의 오남용.

이번 검찰개혁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내지 박탈에 맞추어진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에서 검찰이 보여 준 제식구 감싸기 또는 권력 비호 목적의 뭉개기식 수사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 추궁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 내지 박탈하는 것이 정치적 설득력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단순히 수사권을 남용한 검찰조직에 대한 징벌적 의미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개혁은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를 담아내야 한다. 즉 개혁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바로잡는 동시에 미래에 동일한 잘못과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설계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검찰개혁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개혁 내용에 수사권의 오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내지 설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았을 때 현재의 검찰개혁 법안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들어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는 법학자분의 글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그런 같은 뜻을 가지신 법학자분으로 알고 있고요. 고민과 고려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개혁 논의와 이를 담은 입법안을 보면 당장의 검찰의 조직적 해체와 이름 지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의 개혁안으로는 기껏해야 검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그 수사권을 분리·박탈하여 중수청에 귀속시키는 것만으로 과연 앞으로 수사권 남용이 억제·근절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수사권 남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 내지 수사 구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개혁의 속도에만 집착하다 보면 곧 우리는 단지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은 사라진 쟁점으로서 공소권과 수사권 분리 개혁의 침전물이 되어 버린 공소청.

과거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쟁점은 공소권이었다. 즉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검찰개혁의 목표 지점이었다. 이때 개혁을 둘러싼 전선 내지 대립 구도는 어디까지 검찰 대 국민 간에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개혁의 전선이 옮겨지면서 검찰 대 경찰의 대립 구조가 형성되었고 수사권이 개혁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전장 속에서 검찰개혁은 사법권력 대 국민, 부정의 대 정의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기관 간의 지협적인 전투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검찰개혁이 수사권의 조정을 말했다면 이번 검찰개혁은 수사권의 분리만을 외친다. 이번 개혁안 어디에도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논의는 없다. 단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 내면서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로서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다. 이번 개혁안에서 공소청 공소권은 그저 수사권을 분리하고 남는 개혁의 침전물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사이 검찰의 공소권 행사를 둘러싼 우려와 문제점은 말끔히 해소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수사권의 분리만으로 공소권에 대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가? 아닐 것이다.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권은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 등이 분리하여 나누어 갖는다 하더라도 수사권 및 공소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수사 기능권 또는 기소 기능권으로 따로 분리해서 그 권한 주체만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단순·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담당 기관 및 조직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사권의 분리에 치중한 나머지 공소권에 대한 개혁을 차일로 미루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암세포를 반만 도려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결, 분리하면서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기능적 단락으로서의 분리가 초래하는 것들.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변화는 지금의 개혁안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다듬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어쩌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시도라 볼 만하다. 하지만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기능적 단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위험이 있다.

수사 없는 기소나 기소 없는 수사가 인정될 수 없듯이 수사와 단락된 기소 내지 기소와 단락된 수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 관점에서 양자는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결·관계맺음 되어 있어야 한다.

개혁안을 단순화하면 수사개시와 종결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반대로 불기소 및 수사 중지 사유가 있으면 사건을 불송치하면 수사가 종결된다. 이에 공소청은 보완수사나 재수사 권한 없이 오직 송치·불송치로 건네받은 수사 기록에만 의지해서 기소·불기소만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설사 동등한 관계로서 지휘·감독은 필요 없다손 치더라도 수사·공소의 공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력·협조도 조직 분리에 따른 기능적 불능 내지 저하·비효율을 최소화할 어떠한 소통창구도 없다. 각자 자기의 직무만 하면 되는 구조인 것이다. 즉 수사에 대한 피드백이 존재할 수 없는 기능적 단절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실적 관점에서 범죄 관련 사실 및 정보를 확인·수집하는 수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법 적용 및 사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소는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수사권을 분리해서 중수청에 귀속시키고 오직 공소권만 행사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이번 조직 분리 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기능적 단락으로 이어져서 공소청에게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하여 보완수사·재수사의 권한마저 불허하여서 수사와 기소를 기능적으로 완전히 단절·고립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이렇게 되면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시정·보완되어 공소제기 될 수 있는 사건들조차도 결국 불기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비용과 절차의 반복에서 오는 권리침해 등의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다음은 '분리된 수사권이 모이는 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논의와 입법안을 보면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분리된 수사권이 어디로 모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말하려 하지 않는다. 검찰에의 권한 집중 내지 독점을 막기 위해서 대안으로 선택한 분리가 또 다른 의미의 집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결국 집중을 막기 위한 분리가 또 다른 집중으로 귀결되고 마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번 개혁안은 수사 기능이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다양한 수사기관으로 분산되어 수사 역량이 다양화·전문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수청의 소속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로 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한다. 수사 기능의 구체적 수행기관은 다양화되었으나 조직 및 권력 체계적 측면에서 볼 때 수사 권능이 모두 한곳으로 집중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권력화는 기능이 아니라 그 기능이 하나의 조직으로 집중되고 결국 독점적 권한으로 변질될 때 발생한다. 이것이 검찰이 앓아 왔던 병의 이름이었고 개혁이라는 수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였다. 이처럼 수사권의 집중에 의해 권력화라는 동일한 질병이 또 다른 곳에서 발병할 조짐이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로의 수사권 집중과 그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 내지 권력화는 검찰개혁을 위해 감내하고 넘어가야 할 경미한 부작용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대수술을 부르는 악성 종양인가? 수사권의 분리 못지않게 분리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수사권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에의 수사권 집중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권력화에 대한 우려는 막연한 건강염려증이 아니라 불길한 건강검진표를 받아 든 자의 근거 있는 불안이다.

독점을 막기 위한 독점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76년간 사법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검찰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가히 놀랍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과거 검찰 못지않은 거대 괴물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다양성에 가려져 있지만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이는 하나의 몸통에 붙어 있는 팔다리에 해당한다. 검찰의 권한 독점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경찰의 권한 독점에 대해서는 눈 감는다면 얼마 후 그 감았던 눈을 떴을 때 우리 눈 앞에는 이전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또 다른 괴물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지방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의 비대화를 막고 각 수사기관 간의 수사대상 및 직무범위를 조정해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마스터플랜이기는 하나, 이러한 머릿속 구상을 현실세계 속에 구현해 내기에 그 준비와 논의가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단순하게 조직을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개혁의 결과가 추후 어떠한 혼란과 갈등을 만들어 내는지 우리는 내란 사건을 두고 펼쳐진 공수처와 경찰청의 공방을 통해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승인일 수는 있으나 그 개혁의 구체적인 모습과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 독단적인 개혁은 결국 또 다른 개혁의 빌미만 남길 뿐이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로 대변되는 이번 검찰개혁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찰에의 수사권 집중 및 비대화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이 검찰 그 자체에 대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음은 경찰 수사권의 통제 방안에 대한 고찰입니다.

분리개혁의 풍선효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과 개혁 후의 수사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현재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국민이 아니라 경찰인 듯하다. 이는 검찰로부터 분리한 수사권의 최종 귀속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따가운 눈길을 의식해서인지 검찰개혁 4법 중에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수위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제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자신과 관련된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 또 민원의 공정한 처리 등 수사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포함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인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내부통제 방안으로서 국수위 신설안의 의미와 한계.

검찰개혁 4법 중 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안은 학계와 법조계 안팎의 우려와 비판 속에서 사실상 폐기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동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지만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조직 내지 제도가 경찰의 수사권 집중화 및 비대화에 대한 일종의 내부통제 방안으로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위원회를 통한 통제방식의 한계.

가. 넘쳐 나는 위원회와 그 실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수위의 설치는 이번 검찰개혁의 뜨거운 감자다. 국수위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은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제도가 제한된 업무와 권한으로 인하여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치적 중립 확보, 인권 보장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고 국가 수사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로부터 독립한 수사기관의 권력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한다.

반면 국수위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는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권력이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서 종래 수사기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경찰청장의 임기제 등을 도입했던 기존의 방향성과도 모순된다. 또한 국수위의 인력 구성과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수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옥상옥의 수사구조로 인해 수사 효율성 저하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범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국수위법안에 따르면 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특정 업무가 아닌 수사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통제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 소속 국수위가 중수청은 물론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감독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 경우 기관 소속과 관리 감독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 권한을 보유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관계에서 이중적 지휘 감독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과 관계장관의 직접지휘권과의 상호관계 및 권한의 범위·성격 등이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조직체계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수위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위원회와의 업무상 중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사업무의 원활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의 관계 및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위원회 정치라는 섹션입니다.

위원회,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공식의 환상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국수위법안의 제정 이유 및 목적을 보면 1. 수사기관의 갈등 조정, 2.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판단 및 결정을 국수위에서 다시 판단하거나 번복하는 것이 과연 국수위의 인적 구성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수사 구조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회의는 이러한 수사 구조가 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통한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위원회가 통제장치에서 정치창구로 변질되는 주된 원인은 전문성의 결여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곳에는 책임이 없다는 데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책임도 분산 내지 산일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책임성 또는 책임 분산, 세탁의 효과가 위원회를 때때로 있으나 마나 한 유령기구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우리가 남이냐는 식의 조직 내 정치창구로 변질시킨다.

물론 책임 면제가 자유로운 의사발언과 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는 위원회의 직무 범위가 제한적이고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개혁법안이 말하는 국수위의 직무 범위를 보면 그야말로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이다. 이러한 직무들은 아무리 합의체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태생적으로 책임성이 약한 위원회에 모두 일임하여 처리할 직무의 내용과 범위가 아니다.

또한 위원회 만능식의 발상을 뒷받침하는 것들 중 위원회,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는 환상이 있는 듯하다. 위원회의 구성원이 외국인이 아닌 한 국민에 의한다는 표현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위원회 이퀄 민주적이라는 공식은 항상 참인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위와 같은 믿음 공식이 참이 되려면 위원의 추천 및 선발 그리고 위원회 구성 절차가 국민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 과정 및 의사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 이미 위원회의 인적 구성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정치적 영향력 내지 개입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표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믿음 공식 하나에 습관적으로 기대어 옥상옥으로서의 위원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비판들이 아직 법률안만 나온 상태에서 시기상조이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박할 수 있으나 국수위가 담당하는 직무가 일반행정영역이 아니라 사법영역에 속하는 수사기능 전반, 즉 수사기관 간의 조정 및 지휘·감독·감사는 물론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적법성 통제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만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설계가 무

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라는 고대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 단순한 질문 속에 담긴 딜레마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아직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격언이 주는 교훈은 하나 있다.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수사의 모든 것은 국가수사위원회에 맡겨 두고 단잠에 들 수 있는가?

따라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수용하여 동 법안을 폐기한 것은 바람직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남는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개혁의 결과 집중화되고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수사권을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통제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외부통제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리개혁의 한계 섹션입니다.

수사권에 대한 외부통제의 부재, 이번 수사와 기소 분리개혁의 한계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서 경찰에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수사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담당기관은 세분화되었을지 모르나 수사권능이 국수위를 정점으로 한 하나의 조직체계로 수렴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중수청, 경찰청(국수본),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국수위를 수사권에 대한 독립된 감독·통제 기구로 자리매김케 하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 주체의 바람이겠으나 그렇게 보아 넘기기에는 국수위의 직무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조직적 측면에서도 그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때문에 국수위에 의한 통제는 어디까지나 내부통제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조직체가 수사권의 유일한 실행자이자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감시(통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교만이자 권력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이는 이번 분리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권의 분리와 별도로 개혁의 결과로 창출된 수사권의 집중화 및 거대화에 대한 통제, 특히 내부적 통제를 넘어 외부적 통제를 위한 방안의 논의가 시급하다.

진술한 바와 같이 이번 검찰개혁의 한계는 조직적 분리가 기능적 단락으로 귀결되고 있는 점이다. 즉 기능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수사와 기소가 분리를 넘어서 아예 단절되었다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한계이자 개혁 이후의 성과와 전망을 어둡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검찰개혁법안을 보면 이미 수사개시권과 함께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는 물론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외부에서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의해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어 오던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이 검찰의 해체와 수사권 분리과정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다. 즉 수사·기소 분리개혁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해 공수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답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이 공수청이 가진 유일한 권한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적 분리를 넘어서 극단적으로 기능적 단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외부통제=수직적 지휘·감독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하나의 원인인 듯하다. 즉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검찰·경찰 간의 상하 관계 또는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된 지휘·감독의 트라우

마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통제는 통제주체와 대상에 따라 내부적·외부적 통제 또는 통제방식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통제로, 통제내용과 수준(강도)에 따라 강한(직접) 또 약한(간접)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검찰에 의한 수사권 통제는 내부적-수직적-강한(직접) 통제에 가까웠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적어도 수사기관이라는 동질적 바탕은 유지되었기에 내부적-수평적-약한(간접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분리개혁안은 이마저도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즉 내부적-수평적-약한(간접적) 통제조차도 간섭을 위한 수사지휘·통제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시·견제·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때문에 최소한의 통제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분리·수렴을 통해 거대해진 수사의 권능만을 향유할 뿐, 내부·자율 통제에 가까운 국가수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감시·견제·통제도 받지 않는 형국이다.

생각건대 분리 이후 올바른 수사구조의 확립을 위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의 성과와 이번 분리개혁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통제, 즉 국수위를 통한 내부적-수직적-강한(직접) 통제와 별개로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적) 통제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섹션은 외부통제를 위한 기본전제입니다.

분리·수렴을 거쳐 비대해진 수사권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전술한 국수위)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외부적 통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수사권 조정과 이번 분리개혁의 취지와 방향성을 존중·반영하는 차원에서 통제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지휘 내지 간섭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강한 통제보다는 간접적·약한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강한 의미의 통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견제에 가까운 의미의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제로서의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강한 의미의 통제든, 약한 의미의 통제든 외부통제를 위해서는 우선 내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 없이 이루어지는 외부통제는 그냥 형식적인 쇼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를 위해서는 수사과정과 결과를 외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내부에서 지휘·감독하지 않는 이상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기에 외부에서의 통제는 사후적 통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후적 통제라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외부통제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들이라는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수사·기소의 구조상 외부통제는 주로 수사결과에 집중되고 따라서 사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수사과정 및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중간점검 내지는 통제가 가능한 시점이 바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때이다.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모두 수사기관에게 전적으로 일임된 현 수사구조에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공소기관이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적 순간이 영장청구인 것이다. 현행법상 영장청구권한은 검사에게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공소관 또는 공수처 검사에게 부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한 수사과정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외부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행사를 통한 통제에 대한 섹션입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내세우는 개혁주체 측에서는 진술한 영장청구권과 함께 공소권을 통한 통제를 통한 수사권에 대한 사법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장청구권을 활용한 통제와 달리 공소권 자체를 수사권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소권은 소추기관 공소청의 본질, 본래적 기능이지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공소제기 여부가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 판단을 떠나서 혹은 넘어서서 경찰의 수사권 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 내지 전락하는 것은 사법정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소권 행사는 수사결과에 대한 규범적 결과가 되어야지, 역으로 수사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이에 대한 제재 또는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음 섹션은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통한 통제입니다.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통한 수사권 통제는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마저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보완수사 및 재수사 제도가 수사 지휘 내지 간섭이 아니라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수사권의 통제수단으로서도 필요한 제도적 장치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다른 섹션, 그 안에 있는 소섹션입니다.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한 외부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라는 소섹션이고요.

수사권에 대한 감시·견제·통제만을 위해 외부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나 효율성 및 전문성 면에서 그리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하여 공소청을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에 활용하는 방식은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 통제의 관점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수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수사종결 이후의 공소절차에서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적 피드백을 통해서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형사절차적 측면에서도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때의 통제 방식과 정도는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 통제가 적절하다. 즉 이번 개혁에서 가장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 기소조직과 수사조직의 분리인 만큼 공소청은 외부기관에 해당하고 검찰권한으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분리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상하 내지 수직적 관계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또 보완수사와 재수사는 현행법상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만 허용되고 제한된 요건 충족하에서만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요청 이후 엄격한 요건하에서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약한(간접) 통제수단의 성격을 가진다.

다음은 보완수사 및 재수사 폐지의 폐해에 관한 섹션입니다.

비록 검찰-경찰 간의 핑퐁수사 행태와 수사 및 공소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미비점과 한계가 지적되고는 있으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수사권-공소권 간의 적절한 거리와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견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지향하는 이번 검찰개혁에 따르면 공소청에는 어떠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이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된다.

이러한 개혁안 구현이 되면 공소청은 송치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불송치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재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그저 요청할 수만 있고 요청 후에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의 결과—수사기록 및 보고서 등이 있겠고—그것만을 토대로—보완수사와 재수사의 결과가 만족스럽든 여전히 불충분하든 상관없이—그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는 수동적인 기관이 되고 만다.

개정안에는 이미 사건과 관련하여 송치(기소의견), 불송치(불기소의견) 결정을 한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요청 이후의 수사절차에 대한 매뉴얼이나 기준도 없고 보완수사 및 재수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수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공소청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요청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 내지 사법 통제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과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조서재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조서, 특히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 가치를 약화시킴으로써 의존성을 낮추려는 입법적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물로 전문증거인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예외요건,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서재판의 폐해가 이제 재판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기소단계에서 조서 내지 기록 기소 행태로 재현되는 꼴이다.

범죄혐의 입증을 최우선시하는 수사기관의 목적적 편향성이 깊게 배어 있는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 수사기록만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의견·결정을 뒤집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미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송치(기소의견), 불송치(불기소의견)의 결론 내린 당해 수사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청하고 이전과 다른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사고의 관성 내지 확증편향성을 고려할 때 과연 기대해 봄직한지 의문이다.

생각건대 수사권을 분리·박탈한 후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소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선후관계 내지 인과관계가 전도된 소위 주객전도 논증이다.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의 필요성과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에 기반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존재하는 한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은 유지되어야 하고 기능적 측면에서 이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다면 그 기능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필수적·핵심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조직적 분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라는 소챕터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몸소 체험한 것과 같이 수사기능은 그 속성상 권력화·부패하기 쉽고 따라서 통제가 필요한데 국수위의 소속, 구성, 직무범위 및 위원회로서의 역량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내부 통제장치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외부적 통제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전제들을 부정하지 않는 한, 그러면서도 과거의 검찰개혁의 성과와 이번의 개혁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수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통제로서 외부적·수평적·약한(간접)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 비용-최대 효용의 가성비적 대안은 수사·기소의 기능적 연결성으로 인해 수사의 결과를 사후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공소청에 최소한 수사권—공소를 위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번 검찰개혁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공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껏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한 공소청에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침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개혁 취지에 반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개혁의 취지 내지 기본방침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예외는 이미 존재한다. 바로 공수처가 그 예외이다.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에 국한되기는 하나 공수처는 대상범죄에 대한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함께 가진다. 왜 공수처에는 이번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가? 공수처가 이전 검찰개혁의 산물이자 상징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할 만큼 부패하지 않아서인가?

지난 검찰개혁에서 공수처의 공소권이 주어진 배경에는 기존 검찰권력의 견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독립 수사기관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 생각건대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가져야 할 이러한 이유와 논거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는 역으로 공소청이 공소를 위한 제한된 목적하에서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을 가져야 할 충분한 근거, 수사권력에 대한 견제 및 통제, 공소청의 적절한 공소권 행사를 위한 효율적 대응 등 그런 게 될 수 있다.

만약 공소청의 사건에 제한 없이 보완수사 및 재수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면 보완수사 및 재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만 공소청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허용하거나 보완수사를 임의수사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정부 수정안의 개요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은 2026년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소청 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2026년 1월 12일 발표했다.

먼저 공소청법 수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직무를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함으로써 공소청이 공소 전담기관으로서 수사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중대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도록 법제화하고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법제화하였고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중수청법 수정안은 중수청의 구성과 설계에 있어서는 기존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혁으로 예상되는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의 수사 대응 역량의 누수 및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를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그리고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설정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며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되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인사 운영의 구성을 담보하였다.

그리고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을 고려해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장치로서 행안부장관이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정부 수정안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논문 섹션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수사사법관.

기존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에 대한 위와 같은 정부 수정안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이 사퇴하고 여당은 정부 수정안에 대한 나름의 재수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반발하며 이를 위한 의총 및 공청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수정안이 검찰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싸늘한 반응과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수정안은 중수청 사법경찰관 직렬을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과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담당하는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고 이 중 수사사법관은 전체 조직 인원의 약 10% 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지니거나 이에 준하는 법률 지식을 갖춘 인력을 임용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예우를 기존 검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수청의 인력 규모가 30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300명의 수사사법관의 자리가 기존 검사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검찰의 부활 또는 제2의 검찰청 신설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에 대한 동상이몽이라는 섹션입니다.

정부 수정안에 대한 위와 같은 반발과 엇갈린 평가들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개혁 주체들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시각과 각자 나름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이번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에서 기소의 분리인가, 검사의 추방인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바람직한 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담론장이 점차 축소되면서 개혁의 목표가 지엽적인 쟁점으로 왜곡되고 종국적으로는 나아갈 방향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애초 논의되었던 개혁 방향으로의 수사·기소 분리 담론은 국가기능적 측면에서, 즉 수사기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행성 확보의 관점에서 출발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정치적 당면과제로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담론의 장이 수사기능, 기소기능의 조율이 아니라 경찰-검찰 권력·권한 분쟁으로 왜곡·축소되었고 검찰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수정안을 둘러싼 개혁 주체들 간의 내홍을 보면서 지금까지 개혁 주체가 말해 온 수사·기소의 분리가 기능적 차원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마치 수사영역에서 검사의 그림자조차 추방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역으로 중수청의 구성을 순수하게 경찰 출신 인적자원으로 채우면 개혁 목표인 수사·기소의 분리가 실현되는지, 애초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고작 수사의 경찰순혈주의와 동의어였던 것인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수사 일원화가 기능과 수행 주체의 일원화가 아니라 출신성분의 일원화였는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만약 수사·기소의 분리를 진정 위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법경찰관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사사법관의 역할, 즉 수사의 법리적 검토를 위해서 변호사 자격 등을 요구하는 개정안 속에서 검사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 아닌가 한다.

특히 수사사법관 제도를 통한 중수청의 이원화가 궁여지책이기는 하나 갑작스러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범죄 수사 대응역량의 저하에 대한 대비책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과 수사사법관이 수사에 대한 사전적 법리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미약하나마 내부적 규범통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악을 면하기 위한 차악으로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그나마 낫다.

그 없는 것은 경찰순혈주의보다는 있는 것, 내부적 통제 가능성이 그나마 낫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 논문이 말합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라는 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법률안이 정치적 피켓으로 전락하고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 없이 정치논리에 떠밀려 탄생한 법률이 삶 깊숙이 파고들어가서 국가와 사회,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무책임하게 재단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큼 법률가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논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4법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패인 깊은 골짜기의 교각이 아니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높은 장벽을 쌓는 선택을 하였다. 이 개혁안이 실현되면 이 장벽을 사이에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고립된다. 이러한 고립이 어떠한 조직·기관에게는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자율성의 확보라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성과와 이익이 고작 그것이라면 그 개혁의 목표와 방향성이 과연 타

당하고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때 그 타당성과 정당성의 기준은 당연히 일개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시기상조라 내칠 것이 아니라 아직 제정 전이므로—이것은 제정 전에 쓴 논문입니다—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를 보완·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회는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개혁안의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이에 대해 국민이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가 조직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면 수사기관의 권력화를 막고 수사의 효율성이 확보되는지,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민이 감수해야 할 손해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주체에게는 국민에 대한 설명·설득의 의무가 있다.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계약이 그렇듯 설명과 설득을 통한 합의에 터 잡지 못한 검찰개혁은 효력이 없다. 특히 집중을 막기 위한 분리가 또 다른 집중을 낳고 조직적 분리가 수사·기소의 기능적 단락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방향성을 재고하고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의 검찰개혁이 내일의 경찰개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를 통해 집중되고 비대해지는 수사권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다양한 논문을 또 소개할 예정인데요. 제가 앞으로 소개할 논문은 수사권 조정 입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또 수사종결처분과 통제방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공익 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국정조사 요구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어 왔냐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국정조사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에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요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통과되어 온…… 여러 법학자들, 교수님들 또 현장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들으시면서 굳이 제정을 하신 분들과 공유를, 이것을 알고 하셨을지 모르고 하셨을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유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작이라는 말이 타이틀에 나오고 이 내용 안에서도 열두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대상 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불법대북송금 사건도 있었고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것이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건이었다. 이런 과정이다. 심지어는 사건에 관여했던 박상용 검사라는 분도 간절히, 간절히 의원님들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다양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사건,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SNS를 통한 호소문에 의하면, 이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가장 큰 이익의 귀속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 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 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파생 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2026년 6월 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년 9월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위 국정조사 의안을 발의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국정조사라서 합법적인 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위 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행정부 소속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입법부가 왜 그에 관여를 합니까? 삼권분립이 보장된 대한민국헌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당이 입법도 하고 사법, 행정도 다 하는 일당독재의 나라입니까? 헌법기관이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제발 위헌과 불법의 국정조사를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실까요? 이런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공유를 합니다. 또 관련된 인터뷰들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박상용 검사가 언급하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제3조에 보면 국정조사라고 나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3항입니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4항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5항입니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6항,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죽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담긴 제8조를 찾으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한 것입니다.

아까 헌법에서도 61조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는데요. 61조는 ‘국회는 국정을—감사에 관한 건데요—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굉장히 짧게 근거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아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그 8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됩니다.

제가 잠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법적인 방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안은 겉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정치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수사 과정까지 정치적 기준을 투영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자칫 사법의 정치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역사에 대해 단순한 옹호 입장을 취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검찰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과거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 많은 법학자들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굳이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대와 정권이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됐음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국정조사가 정당한가 이것을 보면, 국정조사요구안을 보면 국정조사 요구는 원래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행정 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이번 요구안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정치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또 향후 수사 방향에까지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권력이 밀실에서 검찰을 이용했다면 지금은 공개된 공간에서 정치가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식으로 그 모습이 변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가 그 과정에 개입하는 순간에 수사의 공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위축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정치적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이 뒤로 밀리고 오직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 주목받는 사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에게 어떤 법치주의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은 권력의 분리를 통해 어느 한 기관도 절대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사법을 통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 아닙니까? 저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요구안이 갖는 헌법적 위험성과 제도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읽으면 가장 먼저 읽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조작입니다. 이 요구서에는 조작이라는 단어가 총 열두 번 등장하는데요.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통계 조작, 증거 조작. 표현이 굉장히, 계속 조작 조작 많이 나옵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는 하는데 결론은 하나로 보입니다. 이 수사는 조작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진 결론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조사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조사라는 것은 결론을 열어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서는 출발점부터 결론이 닫혀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맞는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조사라는 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 판단을 강화하는 절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조작이라는 판단이 어디서 내려져야 하는가입니다. 수사가 위법했는지, 증거가 조작됐는지,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가 하는 게 아니지요. 법원이 해야지요.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요구서도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 요구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합니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열두 번 반복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조사 이전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정부의 정책과 집행과정,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지 어떤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수사·재판의 결론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요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결론을 다시 검증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범위를 넘어서서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더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헌법 제61조를 제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61조에도 있고, 이 근거가 있고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근거가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안은 사건이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요. 개별 사건의 기소 여

부나 유무죄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특정한 정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국정조사의 중립성과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결국 이번 요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 영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재판 중이고 판결을 내린 것도 있고 그런데 입법부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따지겠다, 이게 존중입니까? 이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판단과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특정된 사법 판단의 사실관계와 여론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서 사법기능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치를 보겠지요. 이런 흐름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의 형식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의 결론까지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사법적 판단은 더 이상 법정 안에서만 완결되지 않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나쁜 예가 되겠지요. 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흔들고 결국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이런 방식은 또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모든 작용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형사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심이나 상소 등 법이 인정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원칙을 왜 자꾸 어기십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거치지 않고 국회가, 법원 아닌 국회가, 법원이 해도 되는데 굳이 국회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정당성을 다시 평가하려 한다면 법이 마련한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고 정치가 법 위에 서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마 법 위에 서고 싶으신가 봅니다.

또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검찰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수사 강도와 대상의 형평성 문제 또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특정 사건을 둘러싼 과잉수사 논란이나 정치적 파장을 동반한 수사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특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 방식이 정치적 개입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법적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보다는 지연이겠지요, 방해를 받지는 않으시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내용을 당연히 아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을 정치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통제하는 것입니

다. 수사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선택된다면 수사는 또 다른 왜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항소를 취소한 이례적 판단 역시 수사와 공소유지가 정치적 환경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항소를 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것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눈치 볼 것입니다—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통제입니다.

이제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 요구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입니다.

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 해야지요. 할 게 있으면 해야지요. 제도나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 정책이나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지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매우 중대한 권한입니다, 61조. 제가 이번에 헌법을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재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재미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조만 아실 거예요, 보통. 1조는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아시는데, 60조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다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볼만합니다. 우리의 권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 준 매우 중대하고 무거운 권한입니다. 중요한 만큼 그 무게가 크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인 이것인데 그 권한이 과연 어떤 목적과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오늘 맞네요. 아까는 내일이었고 지금 오늘이 되었는데 어제 제출된 그리고 오늘 당연히 통과될 것 같은,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굉장히 힘 빠지지만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굳이 이러고 있는지를 아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법적 방해 아닌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그런 헌법적 한계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는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과 권력분립의 경계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국회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떤 절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중심기관인 국회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품격과 자제력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결국 통과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에게라도 왜 이것이 위법한 국정조사인지를 설명하고자 이 합법적인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정조사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역사와 본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 명예혁명과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후 바이마르헌법이 최초로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규정합니다.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각국에 확산되었고 현대 입법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의회의 필수적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도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간의 관계로 법적 논쟁이 촉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권이 의회가 갖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능인지 또는 의회의 본래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권능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의회가 국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권의 최고기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조적 권능이라는 견해는 국정조사권이 의회의 입법 활동과 또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입법권을 보조하기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그리고 국정조사권은 보조적인 권능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정조사권은 독립된 고유 권한이라기보다는 입법권과 삼권분립에 따른 감시·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에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연방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조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는 판례로도 수차례 확인됩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국정조사권도 의회가 입법과 행정 감독 등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적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병행해 설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에 의거해서 법원의 예산 운용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등 사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작용 자체, 구체적 사건의 형량 요구나 사실인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분명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이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크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범위 그리고 명확한 목적 안에서 절제되게 행사될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증인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 또 청문회 개최, 현장조사 등 국가기관과 공직자, 때로는 민간인에게까지 상당한 부담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요. 그 필요성과 비례성, 그 목적의 정당성과 범위의 적정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 어느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가와 같은 정파적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과거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실질적 권한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구성,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현장조사, 청문회 개최 등 구체적 절차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헌법적 법률이 정한 형식과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한일수록 남용의 위험 또한 커지며 그 남용이 반복될 경우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권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원래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모호해지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그럴 우려가 큰 위법한 국정조사가 오늘 통과되겠네요.

따라서 국정조사의 핵심은 얼마나 강력한가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정책 수행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 집행의 실패, 공공운영상의 문제, 국가 기능 수행의 구조적 결함 등을 점검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이 국정조사 요구안처럼 개별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판의 결론을 별도의 정치적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거나 수사기관의 개별 사건 처리 결과를 국회가 사실상 다시 심사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 위원회가 대통령을 재무정보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 제2심 항소법원은 의회의 조사권이 입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결국 입법권과 동일한 한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의회가 조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행정부나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상 기능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기본권

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회는 법 집행이나 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당시 연방대법원도 대통령 관련 자료에 대한 소환장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의 요구가 진정한 입법 목적에 기초한 것인지,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요구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해당 요구가 대통령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당파적 목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국정조사권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한계와 절제를 통제로 또 절제를 전제로 하는 권한이고 그 행사 방식이 입법 목적을 벗어나거나 또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는 오히려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원리가 바로 권력분립의 원칙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고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권리·의무와 책임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 권력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개별 형사사건의 실체를 정치적으로 다시 따지기 시작하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거나 현재 판단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조사권 행사를 넘어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 구조이고 국정조사는 이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수사나 재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묻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정치적으로 확정하려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수와 소수, 찬성과 반대, 정당과 정파가 경쟁하는 공간으로서 정치의 논리가 법적 판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사실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법은 여론과 힘의 논리에 흔들리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상 절차가 작동하고 있고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을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

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 국정조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거액의 대북자금 송금이 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주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자금 제공이었는지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청와대의 관계자, 정부 부처 관계자, 현대그룹 관련 인사 등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청문회를 열어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적 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결국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법절차를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법적 책임 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였다는 평가도 남겼습니다.

2005년 행담도 개발의혹 국정조사 역시 유사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건은 서해대교 인근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성격상 정부 정책과 민간자본, 공공기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회는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자금 조달 및 계약 과정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됐고 국정조사가 제기한 많은 정치적 의혹들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 직결된 사안으로 특정 정치인의 주가조작 및 투자금 반환 문제에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건은 사실관계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 제출, 발언순서, 조사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민들 또한 이를 제도적 통제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결국 사건의 실체적 판단은 검찰 수사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정치적 파장이 클수록 국정조사가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댓글 활동, 여론조작 의

혹,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사건 자체가 공정한 선거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국정원 관계자와 수사 책임자 등을 불러서 댓글 활동의 조직성 여부, 지휘체계,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조사했고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원칙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사 과정은 극심한 정쟁 속에서 운영됐고 주요 증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제도개혁보다 정파적 해석 속에서 다루어지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대기업과 권력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다층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맞물려서 이 국정조사는 국민적 분노와 문제의식을 수렴하는 절차로 기능했습니다. 주요 기업 총수,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인사 그리고 관련 민간인 등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예방과 현장 통제, 사고 조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국회는 관계 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등 매뉴얼의 실효성 또 현장 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 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책적 개선 논의와 행정시스템 점검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개별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 수단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형사적 책임 규명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요 국정조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국정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정책적, 행정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

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여기 제안된 정치검찰 국정조사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요구서의 표현을 보면 이미 조작수사, 기획수사, 정치검찰이라는 규정적 표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이미 설정된 정치적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사는 결론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실에 따라 판단이 형성되어야지 판단을 먼저 정해 놓고 사실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방식은 조사라기보다 정치적 확인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들 또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나 행정 작용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 처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별돼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며 법적 책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법원이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국정조사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을 찍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강한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된 사건일수록 국정조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는 현실에서 조사 대상과 자료 선택, 증인 채택, 질의 방식, 결과보고서의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제도적 설득력을 얻기보다 정파적 보고서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헌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앞세워서 별도의 판단을 시도할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여론을 통해 사실상의 압박이 형성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가 다루어야 할 행정적·정책적 통제의 대상인지,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조사 결과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미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항소와 상고 등 사법적 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가 개입해야 할 헌법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의 보완이 아니라 중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 간 충돌을 일으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시도가 하나의 선례로 남는 경우입니다. 안 좋은 선례입니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선례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형

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결론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재조사, 사법부 판단에 대한 실상의 정치적 재심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갈등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은 정치적 적대의 무기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특정 사건을 다시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정쟁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해법 또한 분명합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수사기관 내부의 견제 장치를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와 기소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며 외부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 제도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예컨대 수사 단계에서의 기록 공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과정의 통제장치를 강화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와 인권 보호 기준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것 역시 국회의 본령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특정 사건을 겨냥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적으로 남용될수록 국민은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조사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국민적 상처를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가 수사와 재판의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접근입니다. 검찰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권력의 개입이 아니라 권력의 절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개혁은 특정

사건을 향한 정치적 재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을 세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재판을 대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그 역할을 넘어서는 순간 권력분립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그 피해는 법과 제도에 의존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곧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사회적약자들에게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제도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은 오직 공정한 법과 안정된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약자의 삶이며 절차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침해받는 것은 힘없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적약자의 삶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조사의 정당성은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국정조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절제가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강한 권한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바로 그 절제 속에서 권한의 정당성이 생깁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이며 국회가 그 사안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그 시작부터 매우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흔들리면 국정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이미 정치적 결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에 국민은 이를 사실 확인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반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정조사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정책 실패를 점검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쟁의 도구로 반복 사용될 경우에 국정조사는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으며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번 허물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려우며 한 번 넓혀진 권한의 범위는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에서 국정조사가 사법 영역까지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향후 어느 정권 아래서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법판단을 압박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더 강한 정

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권력 간 균형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권력분립의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 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원칙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헌법이 정한 역할 분담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행사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제가 있을 때 비로소 권한은 품격과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국정조사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그 절제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자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본질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통제에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조사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그 권한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단기적 이익이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권한을 가진 기관일수록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권한 행사를 넘어서 권력 간 균형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균형의 붕괴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사후적 대응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사건의 진위를 정치적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는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나 권한남용 방지장치 마련이나 또 인권보호 기준 확립이나 수사기관의 책임성 제고와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도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투쟁의 연장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하나의 국정조사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순간에 헌정질서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국회가 스스로의 한계를 지키고 원칙을 준수할 때 그 권한

은 더욱 강한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헌법이 정한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고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자리에서 판단이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에 기반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 앞에 서 있는 이유이면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보면 특히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대통령 관련 여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조작 기소였다는 의혹을 전제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였거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다시 나서서 수사과정과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사실상 사법 판단의 결론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 다시 판단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절차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의 결론을 다시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어떤 판결도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석의 힘에 따라 사법 판단이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법의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한계를 지킬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사법의 결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검찰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해법이 헌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헌법은 권력을 허용하는 문서이면서 동시에 권력을 제한하는 문서입니다.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지금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현재 국회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면서 관련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 몇 년 전이지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역시 엄격히 제한되었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수단도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등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제도적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제22대 국회 시작되면서 이미 21대 국회에서 한 번 대표발의한 바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되었고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예지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논의로 인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검수완박으로 제도가 달라지고 현재는 검경 수사권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일까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안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 해법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제도를 통한 개선이어야 합니다. 특정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과는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방해지만 방해가 결코 안 되고 있는 지연 정도의 필리버스터를 이 귀한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입법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개별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국정조사입니까? 이 중요한 개혁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까? 사법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입법부의 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게 개별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련된 제도가…… 말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제대로 작동합니까? 통과돼서 시행 안 됐으니까 모르겠다 하시지 않겠지만. 이미 시행된 검수완박 어떻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이 법안들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까? 개별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이 국정조사를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급한 것이 아니라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만 하면 '니가 뭘 아냐?' 하실 것 같아서 논문을 들고 왔습니다. 논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아닙니다. 법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던 교수님들의 논문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오래전에 통과시켰던 검수완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나 제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의사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때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수사하다가 혐의 못 찾아서 검찰로 안 보내는 게 불송치라고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다시 리마인드를 하자면 그랬을 때 도움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하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제가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발의했을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악용은 이 법이나 저 법이나 다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법안을 안 하지는 않는데 굳이 그것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장애인학대 특례법도 제정안으로 내놓긴 했습니다. 살펴 주시고요.

그래서 불송치됐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못 하게 됐습니다. 고발인은 못 합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도와 달라고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선방안 연구-경찰수사관·변호사 대상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조미지, 김면기 이분들이 쓰신 논문입니다.

논문의 목차가 있고, 논문 요약을 보자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책임송치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이른바 불송치 결정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이 21대 국회에서 하셨던 일인데 이거 재정비 왜 안 하십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국정조사가 더 급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 등에게 이의신청권이 마련되었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후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통제 방법으로서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제가 너무 왼쪽에 있었다네요. 몰랐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통제 방법으로서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논란입니다, 지금.

특히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내용·기간 제한이 없이 사건이 검찰로 즉시 송치되는 현 제도의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해…… 법적 요건 미비, 이것을 왜 안 챙기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안 챙기셨습니까?

불복 절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실무상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경찰수사관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고소인이 이의신청에 이르는 주요 요인 또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이의신청 절차의 명확성 부족, 불송치 결정 통지의 미흡 그리고 수사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법적 요건 보완…… 법적 요건 보완해야 한답니다. 보완합시다. 제가 다양한 옵션을 드린 바 있습니다.

통지 시스템의 개선,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국정조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국정조사 아닙니까?

보완수사 요구 체계 개선 등의 시사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일련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2021년 1월 1일 자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이른바 불송치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해당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245조의5입니다.

검사의 적절한 수사종결 처분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서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과 같은 불복절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 역시 도입되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 및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예로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다른 기관의 판단을 통해 기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에 대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일견 대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45조의7입니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후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통제 방법으로서의 적절성이나 절차적 미비점에 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먼저 이의신청에 기간을 명시한 조문이 없어서 이의신청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건 종결 후 수년이 지난 후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검사에게 사건 송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소인의 법적 지위가 무기한으로 불안정해질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이 경찰수사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나 달리 이의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단순히 이의신청이 있으면 무조건적 송치가 이루어지는 점으로 인해 이의신청이 남발되어 경찰의 책임수사 달성은 물론 수사 종결을 통제하는 방안으로서 이의신청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 외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된 점도 사회적 약자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정착 과정에서 절차상, 실무상 쟁점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갖게 될 의미 및 불송치 결정의 법적 성격과 함께 통제 방법의 적절성을 법리 검토 차원에서 다룬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르게 한 요인과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수사관과 고소인 등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업무를 경험한 변호사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관행과 실제 일선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인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섹션입니다.

첫 번째,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수사종결처분은 수사절차를 종결시키고 공판절차로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핵심적 분기점을 이룬다. 한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 양자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되면서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인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1차적 수사종결권의 핵심은 경찰이 범죄 수사를 진행한 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권한을 갖는 데에 있다.

이러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척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권한의 적정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정당한 불만을

해소하고 나아가 불송치 결정이 경찰의 책임 있는 수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방안은 크게 재수사 요청을 통한 통제와 이의신청에 따른 타 기관, 즉 검찰송치를 통한 통제로 나뉜다.

재수사요청은 불송치 결정이 있은 후에 90일 이내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찰로 하여금 재수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수사의 주체는 여전히 경찰이며 재수사를 통해 다시 송치 여부에 대해 경찰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반면 고소인 등이 불복절차로서 진행하는 이의신청의 경우 즉시 사건이 타 기관으로 송치되며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옮겨 간다는 점에서 바로 효과를 갖는 더 강력한 구제 절차로 말할 수 있다. 그 외에 재수사요청에 선행되는 검사의 기록검토권 및 이의신청에 선행되는 고소인 등에 대한 불송치 취지 및 이유 통지 역시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의 이의신청과 그 한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경찰청 범죄통계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건수와 비율 및 범죄유형별 불송치 결정 건수와 비율 통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집계할 때 사건 수가 아닌 피의자원표상 인원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법경찰관 결정 현황 및 범죄유형별 불송치 결정 인원 및 비율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또 범죄 유형에 따른 경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 2의 범죄유형별 불송치 결정 비율은 범죄유형별 발생원표 인원 대비 불송치 결정 인원 비율로 표시했다. 표가 쭉 나옵니다.

쭉 넘어가면 지능범죄 사기, 횡령,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통화·문서·인장죄 등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범죄와 그 관련 내용들이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쭉 넘어가고요.

중수청으로 넘어간 중대범죄 관련 내용도 표에 있네요. 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표를 다 넘어가면 표가……

이 표에 의하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월별로도 비교적 일관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검찰청이 발간하는 검찰연감에서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접수 및 처리,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접수 및 처리,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의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를 청별로 집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운용 현황을 알기 위한 자체 통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표가 또 월별 이의신청 쭉 나옵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검사의 재수사요청권보다 강력한 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1차적·잠정적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과 같은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사종결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즉 이의신청 역시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 장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대해 그 신청 기한이나 사유, 이의신청 접수 후 처리 기한 및 이의신청의 인용 혹은 기각 결정과 같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이의신청을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된다. 단순히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에 대한 결정을 무효화시키면서 수사의 주체를 변경하여 수사를 재진행하도록 하는 수사종결의 장애 사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불복절차의 미비를 통해 불송치 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불송치 결정 자체와 그 통제 방법을 혼동한 것이라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이미 사건에 대한 수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종국적 수사종결 처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검사의 기록 검토나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권한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후 통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후 통제 절차의 문제만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잠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권한의 도입 취지와 수사 종결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를 형사 절차에서 해방시키고 고소인 등의 국가형벌권 발동에 대한 요청권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 후 조기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청인 경찰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소한의 외부적 불복절차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불복절차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의신청이 균형적이고 실효적인 불복절차로 기능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이의신청 제도의 한계에 대한 섹션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원하는 고소인 등의 불복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의신청의 기한이나 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건을 재검토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를 원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일단 검찰로 사건을 이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된다면 고소인 등은 이후 검사의 수사종결을 기다렸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검찰항고로서 재차 불복해야 한다. 고소인 등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를 위한 이전 단계로서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절차가 오히려 추가되는 부담이다. 형사피의자에 대한 이중수사 역시 불가피하게 되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도입 취지인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조기 해소와 이중 조사 폐해 최소화가 무색해진다.

제한 없는 이의신청에 따른 무조건적인 사건 송치는 경찰의 책임 있는 수사 역량을 강화하라는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기 어렵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에

대한 처분권이 검사에 이전된 것으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규정상 미비를 보완해서 무조건적인 이의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상 이의신청 제도의 미비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의신청권자 개념이 불명확한 점과 이의신청 제기 시한 및 사유 등 이의신청 요건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함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기각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따로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의신청권자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송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 중 고발인을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할 자격을 갖는다. 이때 피해자가 별도로 명시된 것은 고소·고발과 같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고소·고발과 달리 그 형식적인 표지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범위를 형사 실체법상 직접적 보호법익의 주체만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이에 더해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할 것인지 문제 되고 있다.

피해자의 개념의 해석론에 따라 이의신청 권한과 그 불복 가능 여부까지 좌우된다면 법적안정성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진술권의 보장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피해자 개념의 명확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검찰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과 비교했을 때 현행 이의신청이 갖는 규정상 미비에 관한 것들이다.

먼저 이의신청을 다른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라는 측면에서 재정신청에 대응하는 제도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에 선행하는 내부통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 강화와 국민의 신뢰 제고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과 같이 경찰 내부에서 불송치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신청 요건에 준하여 신청 제기 시한이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마련되지 않은 채로 이의신청이 그대로 접수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송치 결정 이후 시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형사피의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서 경미 범죄 등 송치 대상을 제한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의신청 제도 실무상 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연구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법적 성격과 규정의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에 관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는 실무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 불송치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선행 연구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일선의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님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경찰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에 이른 만큼 제도의 실제 운용 상황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던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실무상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불송치 결정의 주체인 경찰 수사관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고소인 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연구방법론에 대한 차례입니다만 잠시만요.

부의장님, 저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예.

(「김예지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김예지 의원 감사합니다.

(○박희승 의원 의석에서 — 복지위 파이팅!)

박희승 의원님 음성이……

(○전진숙 의원 의석에서 — 전진숙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복지위 당번 서신……

(「예」 하는 의원 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구방법론을 할 차례였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연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한 인식을 경찰 수사관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질적연구방법론 중 하나로 개방적인 대화의 형식으로 수량화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사회제도의 형성 과정을 재구성해서 연구 주제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해와 설명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특히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화의 형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담은 구두 진술과 경험의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

심층 인터뷰는 크게 개별 인터뷰와 집단 인터뷰로 구분될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개별 인터뷰 방식을 사용했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이를 위해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제도 시행 이후 수사 실무

경력을 가진 경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 등에게 고소대리·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 구성하였다. 경찰 수사관의 경우 3년 이상의 경찰 경력과 불송치 결정 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수사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하였으며 변호사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소속 및 인원의 선정은 연구자가 주관적 판단기준에 따라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 표본, 즉 관련 주제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유의표집법과 기존 연구 참여자의 소개로 다른 연구 참여를 선정하는 눈덩이표집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대상들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2명으로, 12명, 국정조사 요구건에 나온 조작이라는 단어의 개수와 같습니다. 경찰 수사관 9명(변호사 특채 1명 포함), 변호사 3명, 응답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논문을 쓴 사람들이 표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경찰 수사관 연구 참여자의 경우 평균 연령 38.9세(최소 29세～최고 54세)로 수사 경력은 평균 8년(최소 2년 3월～최고 22년)으로 집계되었다. 변호사의 경우 평균 연령 41.6세이며 형사 분야 법조 경력은 평균 6년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풍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가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사전 발송하였다. 질문지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인식,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에 이르게 되는 주요 이유, 실무상에서 나타나는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이의신청 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또 표가 쭉 나옵니다.

심층 인터뷰는 2024년 5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작 전 응답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대화 내용을 개별 인터뷰 스크립트로 전체 전사한 후 주제와 관련 있는 답변 내용만 정리, 분석했다.

연구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제도 운용 현황에 관한 인식.

먼저 본 연구에서는 통계로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운용 현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응답자들에게 전체 사건 중 불송치 비율, 불송치 사건 중 이의신청 제기 비율, 이의신청 사건 중 보완수사 요구 비율, 이의신청 사건 중 기소로 변경된 사건 비율 등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체감 빈도를 조사했다.

수사관 혹은 변호사의 체감 빈도를 확인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우려도 크고 정확성에도 한계가 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충분히 집계되고 있지 않아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실무자의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한 체감 빈도 응답을 통해 이의신청 제도의 운용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대략적인 통계가 확인 가능한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비율의 경우 실제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체감 빈도와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보는 것도 관련 실무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전체 처리 사건 중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응답자들의 체감 비율은 평균 67.7%, 표준편차 25.14로 2023년도 불송치 결정 인원 비율인 25%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찰관 응답자의 평균은 80.6%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의 부서 특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선서의 형사, 여청수사팀의 경우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지 부서의 경우 고소 고발 사건을 거의 처리하지 않고 기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불송치 결정의 체감 비율이 낮았다.

이에 반해 고소 고발 사건을 다루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특별법 고발 사건의 경우 송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의 경우 불송치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앞선 표가 있었는데요 범죄유형별 불송치 건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포함한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의 불송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반려 제도의 폐지로 인해 기존에 반려되었을 사건들이 전체 사건 수에 포함되면서 불송치 비율이 체감상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측되는 응답도 있었다.

변호사 응답자들의 체감 불송치 비율은 평균 33.3%로 경찰관 응답자의 체감 비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사건이 아닌 변호사 개인이 선임한 사건을 기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변호사의 사건 선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응답이 있었다.

두 번째로 응답자들의 불송치 사건 중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정도에 대한 체감 비율은 평균 51.9%, 표준편차 33.4%로 나타났으며 경찰관 응답자의 평균은 40%, 변호사 응답자의 평균은 79.6%로 나타났다. 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확인되는 불송치 건수 중 이의신청 비율이 1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의신청 비율 역시 체감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불송치 결정 비율과 마찬가지로 경제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의 특성상 불송치 결정 비율이 높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자주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자주 접하는 부서 응답자들의 이의신청 체감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선서 수사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기 사건에 대한 제재도 이의신청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있었다. 사건이 일정 기간 이상 장기화되면 사건 처리 압박에 의해 수사관들이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및 관서 특성 또한 경찰관 응답자들의 이의신청 체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법인이 많고 변호인이 사건에 선임되는 비율이 높을 경우 이의신청이 더 많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도청 특성에 따라 불송치 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 신청이 활성화된 정도가 이의신청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 외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약된 제도 개편 이후로 이의신청의 체감 빈도가 더 줄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을 많이 선택을 하지만 그래도 간혹 심의신청을 굳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 제도는 경찰에 대한 직접 압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심의신청이 어쨌든 상급 관서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경찰관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좀 있어요. 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변호사 응답자들의 이의신청 체감 비율이 실제 이의신청 비율의 약 8배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는 점을 볼 때 변호사 선임 여부도 이의신청 제기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소인 등은 변호사 선임에 비용을 지불한 만큼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가능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대부분은 불송치 결정의 당부와 관계없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이의신청 사건 중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빈도에 대해서는 경찰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만 질문하였으며 체감 빈도의 평균은 66.1%, 표준편차 31.33%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의신청 건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된다고 인식하는 응답과 보완수사 요구 없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수사 요구 결정이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 수사관 입장에서는 보완수사 요구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송치 후에 핵심은 보완수사를 할지 말지잖아요. 그런데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가 완전히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 있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수사관들이 느끼는 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단순 결과 불복인 민원성으로 이의신청된 경우에도 보완하라고 내려올 때도 있고 어떤 건은 약간 사실은 내부 송치하면서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가 이의신청 들어와서 송치했더니 그냥 바로 보완수사 요구 없이 불기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입니다.

기간도 송치 보내자마자 바로 오는 것도 있고 계속 안 오거나 잊혀질 때 즈음, 몇 개월 후에 오는 것도 있고 대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인터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사건 중 기소로 변경된 사건에 대한 체감 비율은 평균 4%, 표준편차 3.9, 경찰관 응답자 평균 3%, 변호사 응답자 평균 6.7%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검사 역시 경찰의 당초 불송치 결정과 다른 처분을 내리게 될 때 소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그리고 단순히 불복을 위한 불복으로써 제출된 이의신청이 다수를 차지해서 기소가 어려운 건일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제도 도입 후 업무 변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제도 운용 현황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체감 빈도에 이어서 제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이로 인한 업무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제도 도입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관 응답자들과 변호사 응답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제도로 인한 업무 변화와 영향에 대한 인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의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했다. 먼저 불송치 결정 도입으로 인해 결정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했다는 인식이다. 과거에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이후 처분은 전적으로 검사의 몫이었

지만 이제는 일차적으로 경찰이 직접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서가 수사관의 명의로 작성되므로 결정에 대한 신중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절차가 중복인 측면은 있지만 경찰이 더 철저하게 기록을 검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의의를 갖는다는 인식이다.

또한 이의신청이 고소인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의신청이 검사의 처분 이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관이 민원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설명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절차를 안내하는 것만으로 민원인들이 수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이 이후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송치를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경향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었다. 경찰의 수사를 못 믿으면 검찰에 넘기는 현 제도가 장기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 변화로 인한 업무 부담도 추가되었다는 인식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 송치 이후의 민원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대응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사건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 민원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졌다는 의견이었다.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민원인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통보하던 것에서 송치·불송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불송치 이유까지 통지해야 하는 통지절차의 변화 역시 주된 변화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업무 부담으로 사건당사자 및 범죄사실이 다수인 사건에서 일부 불송치가 될 경우 이의신청으로 인한 서류 중복 발생 그리고 기존에 없던 경찰의 사건기록 관리 책임 등이 제시되었다.

변호사 응답자들은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거의 모든 경우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만큼 변호사의 업무 자체에서는 경찰 사건 전건이 검찰에 송치되던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있다. 다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더 길어지고 번거로워진 절차로 인해 변호사나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 수사에 대응하기 더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법률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경찰의 수사업무 부담 증가로 수사부서가 기피되는 경향에 따라 일선 수사관들의 경험 부족,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검사 역시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서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고소인의 권리가 오히려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다음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에 이르게 되는 주요 이유에 대한 섹션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

경찰 수사관 응답자들이 고소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내용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었다. 당연히 그런 것 아닌가?

즉 많은 고소인들이 경찰 수사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를 경우 이를 수사 과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절차적 수단으로 이의신청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

찰 수사관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을 통해서 고소인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고소인이 원하는 결과는 당연히 사건이 기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선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보다는 당장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경찰이 자신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불송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었다. 이로 인해서 이의신청서에서 '내 주장을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불만을 표현하거나 수사 과정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갖는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수사 절차에서 고소인들이 불만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 불만이 반드시 이의신청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결국은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요지는 '결과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납득이 안 된다'거든요. 그러는지 보니까 이의신청에는 이런 주장과 이런 증거가 있어서 혐의가 확실한데 이것을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또 의혹적으로도 되고,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식으로…… 그 내용을 수사관이 봤을 때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었거나 쟁점이었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과정도 나쁘게 인식이 될 거고…… 수사관이 고소인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도 고소인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 것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불송치한 것이다라고 믿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경찰의 판단이 최종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절차인 이의신청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인식도 있다.

결국 이의신청이라는 활용 가능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절차로 가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형식인 거지요. 물론 이의신청비율보다 항고비율이 훨씬 낮겠지만 그 장벽도 아무래도 낮고 기간 제한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비율이 높다고 해서 경찰을 더 불신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위 응답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들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수사 과정과 상관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경찰 수사관 응답자 중 다수가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관들은 수사 결과를 정당하게 도출하더라도 불송치가 될 경우 고소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 절차에 대한 불만족.

단순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이나 절차에서의 불만 역시 고소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통지의 미흡이 고소인 등에게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결국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 절차에서 요구나 기대가 반영되지 않거나 문제를 느낄 경우 경찰의 역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경찰 수사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는 요소라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곧 수사 과정에도 불만을 느끼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앞선 항목의 응답과는 반대되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고소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불신이 큰 경우가 많아요. 과정에서 신뢰가 있다면 결과는 오히려 수사관도 나름의 이유를 통해서 내렸겠구나 생각하는 거지요. 그냥 그러려니 한답니다. 피의자 입장을 예로 들어도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을 때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으면 구속된 것에 대해 반박을 별로 안 하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불만을 느끼게 되는 요소로 공통적으로 응답된 것은 수사 절차 지연이었다. 또한 수사의 진전이 없는 채로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중간 통지의 간격도 길어지게 되며 고소인들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 점 역시 불만이 심화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한편 수사 결과가 통지되는 과정에서 미흡하게 작성된 불송치 이유서가 고소인이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이 제도 시행 이후에 개인정보보호나 공무상 비밀 누설 문제로 인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해 일선에서 불송치 이유서가 지나치게 간략히 작성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이유서로 수사 결과가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으면 수사관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과정을 납득하지 못하게 된다.

그 외에—그 외입니다—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발언으로 인해 고소인이 수사 절차에 의심을 갖게 되고 절차상 불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을 것처럼 여지를 남기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 의심이 가게 하는 수사관의 발언이 고소인에게 수사의 방향성에 대해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수사관의 발언이 고소인에게 수사의 방향성에 대해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수사관의 발언이 특정 사건 당사자에게 자신이 유불리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이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검사의 추가 판단을 희망하는 것에 대한 섹션입니다.

고소인들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또 다른 주요 이유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추가적으로 검사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희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을 때에도 검사가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판단 기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도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검사님이 3개월 동안 사건을 검토한다, 경찰이 막 끝내는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로 종결이 되게 되면 수사권 조정 이전에 비해 사건이 일찍 대충 끝났다고 생각하고 검사한테 이 건이, 사건이 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 번 더 봐달라는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사의 추가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에 검사가 사건을 다시 수사해 줬으면 한다는 직접적인 기재도 포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경찰 수사관의 역량 불신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의 역량에 대한 고소인의 불신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주요 이유로 제기되었다. 고소인들은 수사관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적 이해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실제 일선에서도 수사관 간 역량 차이는 흔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이로 인해 복잡한 법적 쟁점이 포함된 경제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사건을 민사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나 법률적 판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는 응답이 있었다. 경찰은 법률 전문가의 자격은 갖추지 못했다는 인식 역시 고소인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불신으로 인해서—안 믿는 것이지요—고소인들은 경찰의 판단을 최종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경찰 수사를 잠정적 판단으로만 본다는 점입니다, 불신.

경찰에 대한 불신은 제도적 신뢰 부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제도 자체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인들은 경찰이 종료한 사건이 충분히 심도 있게 수사되지 않았다고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경찰 수사의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저해한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이의신청과 수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섹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선택한 고소인의 수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한 결과, 이의신청이 고소인의 수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들은 수사 결과에 불만족하여 이의신청을 선택하고 사건이 다시 검토되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이의신청이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경우는 드물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응답자들은 이의신청이 고소인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보다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절차적 만족감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절차를 잘 알지 못한 고소인들에게 이를 안내함으로써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나, 이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수용에 관한 것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인다는 응답이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상의 응답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주요 이유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수사 절차에 대한 불만, 추가 판단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경찰 수사관의 역량에 대한 불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 검사의 추가 판단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절차적 수단으로 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고소인들은 경찰이 자신의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느끼며, 이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를 불신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수사 절차에서의 지연이나 통지의 미흡 그리고 불송치 이유서의 불충분한 설명 등이 고소인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 수사관의 역량에 대한 고소인의 불신 역시 이의신청 제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러한 불신은 제도적 신뢰 부족과 맞물려서 고소인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판단을 요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의신청 제도는 고소인에게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절차적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실무상에서 나타나는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소제목으로, 다음 섹션입니다.

이어서 실무상에서 나타나는 이의신청……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무상에서 나타나는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이의신청의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해서 무분별한 이의신청 접수, 형사피의자의 법적안정성 침해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제도 시행 이후 3년여가 지난 그 시점에서 이의신청 제도 운용이 원래의 취지와 어떻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런 것이 제도고 이런 것이 정책이고 이런 것이 개선해야 할 제도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의신청 제도가 운용되면서 예상치 못한 혹은 법적 요건의 미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의신청권의 남용 문제에 관해서 어쨌든 아까 너나 나나 불만 있고 안 믿고 그러면 막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건수만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 대한 남용 문제에 대한 섹션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많이 위에서 언급이 되었으므로 패스하고.

이의신청 법적 요건 미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랑 관련이 있는 게, 입법부니까 이런 것도 국정조사 이전에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 법안입니다.

앞선 이의신청 남용이 결국은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별다른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요식행위로 전락해서 실질적 사유나 법리적 근거 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경찰의 책임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고유한 목적을 잃고, 그 목적을 잃고 경찰의 사건 판단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로 인식되어 버리는 것이다.

전형적인 불복 절차와 다르게 설계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유사하게 설계가 되었다면 '절차를 거쳐 봤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어쩔 수 없어'라는 수용이 될 수 있지만 이의신청 제도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냥 '경찰에 있는 사건 판단의 주체를 검찰로 바꿔놔'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유례가 없다는 거지요. 민원인 입장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믿으면 검찰로 넘기자—아마 이제 안 되겠지요—이런 제도인 거니까 애초에 경찰의 판단보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시민들의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는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거지요.

제기 시한이 무제한이라는 것, 이게 필리버스터보다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종결 요구를 하면 24시간 안에 종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제한이니까.

하여튼 이런 미비점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런 내용들은 고소인, 본인이 고소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러 인맥적·경제적 상황이 되시는 분들 외에 저에게 많은……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요청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불송치됐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기관·단체라든가 제3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피해자로,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너무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챙겨질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가 계속 되었고, 수사권 관련해서 수사·기소 분리론 비교·비판하는 것도 제가 읽었었고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는 아직 안 읽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논문이나 비판을 보았을 때…… 무슨 법이든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시행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면서 개선해야 하는 책임도 우리 입법기관에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3년이었지만 2021년이니까 지금은 5년 지났습니다.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것입니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에 대해 남용하는 누군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 아니면 할 수 없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른 논문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정혜승이라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이십니다. 날짜는 여기 없는데요.

정치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된 수사권 조정 입법은 민생범죄 처리 절차라 할 수 있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전반을 구조적으로 바꾸었다.

입법의 근간이 된 2018년 6월 21일 자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입법의 궁극적 목적을 수사 효율성 제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밝히고 있으나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지 햇수로 4년째가 된 지금—그러면 2025년에 쓰신 것 같은데요—미로 찾기 같은 고비용·저효율의 복잡한 절차,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 사문화, 보완수사 요구 절차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검경 간에 소위 사건 핑퐁이 양산되고 있는 점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개정 형사법령을 목적 실현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입법이 형사 절차를 분절하고 분절된 영역 상당 부분에서 검사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한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당초의 입법 목적이 수사 효율성 제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었음을 상기하며 그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수사중지 기록에 대하여도 재수사 요청으로 사법통제하고 동일한 기록을 중복 생산하는 실무를 개선하는 등 복잡하고 분절화된 절차를 간이화하는 방안,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 재송치할 때도 경찰로 하여금 결정을 하게 하고 재송치 이전에 검사와 협의할 수 있게끔 관련 협의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 등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의견들이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며, 이른바 수사권 조정 입법이 시행된 지 햇수로 4년째가 되었다. 2020년 1월 13일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가장 우려된 점은 법률 개정 논의가 촉발된 배경이나 동기와 실제로 통과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

이 상호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부합하지 않아요.

검찰개혁 논의의 중심에는 정치검찰—늘 등장하는 정치검찰, 국정조사 요구안에도 있는 정치검찰—이라는 조어가 있고 이는 일부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담아낸 말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미를 가지는 일부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법을 담아내야 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기치에서 시작된 입법적 논의의 결과물이 갑자기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절차를 바꾸어 버렸다.

그게 목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생과 정치.

주지하다시피 수사권 조정 입법의 근간이 된 것은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다(이하 합의문이라고 약칭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요지는 검사와 경찰 간 관계 측면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한다는 것과 검사와 경찰의 각 역할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는 이를 사법통제하게 한다는 것이고 개정 검찰청법의 요지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등으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개정 입법의 요지는 위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위 합의문에서는 개정 입법의 취지와 목적도 밝히고 있다. 합의문 중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함', '이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이라는 대목에서 입법의 취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라는 대목 등에서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입법, 즉 2021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개정 검찰청법, 대통령령인 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경찰수사규칙(이하에서는 이 같은 법령을 통칭하여 개정 형사법령이라고 말한다)에 따라서 바뀐 실무 현실을 평가하는 언론 보도 중 긍정적인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문제 현상으로 고소·고발장을 검찰과 경찰 중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복잡해진 절차, 수사의 지연, 부실수사 사례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의 총량이 증가해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점, 경찰 내 인력 부족과 역량 약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 일주일 사이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진 사실이 수사부서의 업무 과중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제한이 없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경찰 사건의 총량이 증가했다는 추정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경찰의 범죄사건 처리기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경찰의 처리 인원이 178만 4831명, 2019년 같은 인원이 180만 1364명, 2020년 같은 인원이 173만 1433명이었다가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2021년에는 같은 인원이 140만 2284명, 22년 같은 인원이 139만 8452명으로 각각 감소하는 등 오히려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 그 인원이 감소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6개월 초과해서 처리된 인원수는 2018년 10만 4291명(5.8%) 그리고 2019년 5.3%, 2020년 6.4%, 2021년 9.7%, 2022년 14%로 종래 5~6% 선이었다가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9.7%, 14% 수준으로 급증하였음이 확인된다.

특히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 경찰단계 수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의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상대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73.5%가 고소·고발 사건 진행 과정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1%가 그렇다고 답변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고소·고발 사건이 적정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82.5%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실제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걸린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3개월 이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5%에 그치는 반면에 6개월 이내는 22.1%, 1년 이내는 44.1%, 1년 6개월 이내는 19.1%에 달하고 1년 6개월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13.2%나 되었던 점을 보면 실무 현실을 경험하는 변호사들은 2022년도부터 이미 통계상 나타나는 수사 지연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감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실무 현실을 경험한 검사로서 느끼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역시 실무 현실은 오히려 합의문에서 밝힌 수사 효율성 제고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취지에서 비슷한 맥락에 있다.

첫째, 미로 찾기 같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불송치 및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사법 통제 절차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셋째, 현행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는 그 본질적 한계 때문에 검경 간에 소위 사건 핑퐁을 양산하고 있고 내실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어렵다.

그 밖에 마약의 제조·매매·수출입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으나 마약의 투약·소지·보관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마약 사건의 경우 통상 투약사범을 점검하여 검거하고 또 상선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확대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수사 흐름에 따라 수사할 수 없게 만든 것을 비롯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수사 역량을 극도로 위축시킨 점, 근본적으로 부패경제, 경제범죄 등 그 개념의 설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답니다.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이 실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고

려하지 아니한 채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모든 조서의 증거 능력을 피고인의 내용 부인 한마디로 부정할 수 있게 해 버려 법정에서 공공연한 거짓말이 용인되게 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한편 재판 지연을 초래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규정도 문제이다. 다만 이하에서는 지연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점에 한정하여 구체적 실태와 문제 양상을 살피고 각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 미로 찾기 같은 고비용·저효율의 복잡한 절차,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화·분절화된 점은 자명하다. 한 명의 국민이 하나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두 번을 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수사 경로가 일흔네 가지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상에서 복잡해진 경로를 가시화한 자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종래에는 경찰이 사건을 모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는 단순한 구조였다면 이제 경찰의 결정 내용에 따라 사건이 송치 사건, 불송치기록, 수사중지기록으로 나뉘고 송치 사건의 대하여서는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로, 불송치 기록에 대하여는 기록 반환, 재수사 요청 및 재수사 요청 이후 송치 요구로 수사중지기록에 대하여 기록 반환 시정조치 요구 및 시정조치 요구 이후 송치 요구 등으로 단계별로 절차가 점차 분화·복잡화되어 흡사 미로 찾기와 같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전건송치주의를 폐지하고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사구조를 신설하기 위해서 경찰이 일차적 종결권을 행사한 사건,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을 대별하여 절차를 설계하는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절차가 복잡화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문에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자율성 제고라는 언급이 있으나 특정 수사기관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국가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앞서 살폈듯이 합의문에서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으므로 결국 현재의 절차가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수사 구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인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다음은 국민의 권리구제 장벽으로 작용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의 가장 일차적이고 주요한 문제는 국민들이 절차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권리구제 장벽이 된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검찰, 경찰 어디에든 고소하면 되었고 경찰에 고소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사건을 고소한 국민 입장에서는 검경 중 한 곳에 고소를 한 후에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검찰에 항고하면 된다는 설명으로 형사 절차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는 사건과 경찰에 고소하여야 하는 사건이 구별되는데 그 구별의 논리적 필연성이 없어서 구별 기준을 간명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일부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되어 검찰까지 가지 않는데 어떤 경우라야 경찰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까지 가는지 또 사건을 검찰까지 보내고 싶은 경우 어떤 불복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이 송치 사건, 불송치 기록, 수사중지 기록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국민들이 스스로가 당사자인 사건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내용을 개략적이나마 이해하는 것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는 곧 재정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국가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건관리 과정에서의 고비용·저효율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절차가 복잡해진 만큼 각 단계마다 사건을 접수·관리·처리하는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사건관리 영역에서도 고비용·저효율의 문제가 초래됐다. 쉬운 예로 종래에는 각 검찰청 사무국에 경찰 사건의 수리·처분·영장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었다면 개정 형사법령 시행 이후에는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 불송치와 이의신청 및 재수사 요청, 수사 중지, 시정 사건 등 세분화된 각 절차별로 담당자가 별도로 배치되어야 하는 등 검찰·경찰 간 주고받는 사건과 서류 등을 관리하는 인력과 비용이 배가 되었다.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관리 주체가 계속 달라지면서, 늘어나면서 관리하는 인력과 비용이 배가 되었고, 또 뭐가 있는지 다음입니다.

동일 기록의 중복 재생산으로 인한 비효율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기록은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이 보존하게 하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그 기록의 보존 주체가 경찰이다라는 개념하에서 만들어진 규정들 때문에 동일한 사건기록이 중복 생산되고 있는 점 또한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경찰은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된 경우에 각 결정별로 기록을 분리하여 제조하되 분리 제조가 어려운 경우 송치 기록은 원본으로 제작하고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부분의 기록은 원본 기록을 사본하여 별도로 제작한 후에 검찰로 송부하였다가 반환받아야 하는데 이는 혐의의 인정되는 부분 기록의 보존 주체는 검찰이고, 혐의의 인정되지 않는 부분 기록의 보존 주체는 경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토대로 한 결과이다.

문제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수사 개시된 사안이란 대부분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에 해당하며 기록이 가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결정이 혼재된 사건 중 원본 기록 그 자체를 분리하여 송치 기록과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란 존재하기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동일한 기록을 일부 더 사본하여 불송치 기록으로 제작해야 하며, 수사중지 결정까지 혼재된 경우에는 또 일부 더 사본하여 수사중지 기록으로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이후 그 불송치 기록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접수되거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한 결과 송치 결정으로 결정이 변경되게 되면 경찰은 보존하고 있던 기록에 송치 결정서를 입혀서 송치하므로 검사는 최초에 받은 송치 사건기록과 동일한 내용의 사본 기록을 일부 더 받아 2개월의 기록을 끈으로 묶어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중지 결정까지 혼재된 사건이라면 이후 또다시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됨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어 한 번 더 같은 내용의 기록 사본이 검찰로 송치되게 된다.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었으나 모두 내용은 동일한 여러 개의 기록이 그렇게 송치된 후에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라도 하게 되면

원본 기록 1부, 사본 기록 2부(불송치 결정 때문에 제작된 사본 1부와 수사중지 결정 때문에 제작된 사본 1부)가 한꺼번에 경찰로 송부되고 경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그 인지 범죄사실에 대해 또 한번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될 경우 추가 범죄사실과 관련한 기록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원본 1부, 사본 2부가 추가로 생산되어야 한다.

이처럼 경찰의 결정 내용에 따라 기록의 보존 주체를 검찰과 경찰과 구분 짓고 같은 기록을 여러 번 등사하여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각각 나누어 보관하게 했을 때 생길 실질적 편익이랄 것은 전혀 없다.

전건 송치주의가 적용됐던 당시 모든 기록을 검찰이 보존하되 기소중지됐던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는 등 재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언제든 기록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방안이 현재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은 분절화된 사법통제 절차의 법이론적, 입법정책적 당위성 부재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사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송치사건, 불송치기록, 수사중지기록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의 요건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점에 대해 자문할 필요가 있다.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형사절차가 이토록 복잡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경찰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사법통제 절차를 모두 각기 달리 규정했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쓴 바와 같이 그 복잡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절차를 세분화하여야 할 만한 법이론적, 입법정책적 당위성이 없다.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요건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이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불송치기록에 대한 재수사요청 요건은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이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 수사중지기록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있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이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1항).

보완수사요구 요건에 대하여는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한 때라는 재수사요청의 요건은 명확성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재수사요청 사유를 규정한 문구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해당 부분을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그 확인을 위한 재수사'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도 있다.

한편 수사중지기록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나 고소인 등 핵심 사건 관계인이 소재 불명하여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안이므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건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고 검사가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도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항고할 수 있는데 수사중지기록을 불송치기록과 달리 규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등 불송치기록에 대한 재수사요청 및 수사중지기록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의 각 요건을 둘러싸고 법이론적으로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수사의 조건에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데 개정 형사법령에 사법통제의 절차와 관련해서 검사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필요성, 상당성의 범주로 포섭되기 어려운 이례적인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종래 형사법령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이례적인 개념들을 사용한 이유는 불송치기록이나 수사중지기록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범위를 가급

적 축소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불송치기록이나 수사중지기록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고자 한 이유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진술했듯 특정 기관을 전제로 한 관점은 형사사법 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개정 형사법령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이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국민적 효용이 발생했다는 견해가 있으나 월평균 180건가량의 형사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 입장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란 그만큼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절실한 경우임을 잘 알기에 검찰 단계에서 불필요한 (이중)수사가 다수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그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불송치기록과 수사중지기록에 대해 검사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사법통제를 할 것인지는 개정 형사법령에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과 형사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오류란 단 한 건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므로 보다 촘촘하게 검증하고 협업하여 경찰 수사의 오류를 걸러내야 한다는 당위성, 위 두 가치를 형량하고 그 사이에서 적정한 기준점을 찾아 가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개정 형사법령이 설정한 기준은 지나치게 경찰의 자율성 존중에 편중된 것이고, 그에 따른 검사의 사법통제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한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늑골 골절 등 요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하고 불송치 결정 직전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까지 했음에도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고소 취하를 강요받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고소된 상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했으나 재수사요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학영 부의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항에서 상술하겠지만 현재의 재수사요청 절차로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기록에 남겨지지 않아 숨어 있는 사실을 밝혀야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은 기록에 남겨져 있는 사실만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실종 신고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강요받고 있다는 사정은 기록에 드러나 있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경찰 수사의 자율성 존중보다 훨씬 심대한 가치이고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불송치기록과 수사중지기록의 사법통제 절차를 달리 규정한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와 다소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합의문, 형사소송법, 수사준칙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하여 각각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절차를 예정했을 뿐인데 갑자기 하위법령인 수사준칙에서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후속 절차로 시정조치요구가 등

장한다.

경찰의 결정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는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르면 수사중지 결정도 후자에 해당하고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을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위로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만 시정조치요구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시정조치요구란 경찰의 결정에 이은 후속 절차가 아니라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 위법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결과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로서 갑자기 시정조치요구가 등장하는 시점은 법령의 전체적 규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불송치·수사중지 결정과 관련한 사법통제 수단과 각 기한, 고소인 등이 불복해야 할 기관과 기한 등,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이의신청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수사준칙은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불복 절차로 이의제기라는 이름하에 별도 절차를 신설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각기 달리 규정되게 되어 절차의 복잡성이 더해졌다.

다음,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 사문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이 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그 의견에 오류가 있었을 때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했으나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종래에는 요건 측면에서 증거 추가 수집의 필요성 등 수사 필요성만 인정되면 수사지휘하고 또 방법 측면에서 수사지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으며 수사지휘 횟수에도 명시적인 제한이 없었다.

다만 직접 보완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사지휘를 자제하는 관례가 있었고 수사지휘하더라도 검사의 전산상 사건부에 그 사건이 계속 살아 있었으므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1회 이상 수사지휘하는 경우란 많지 않았다. 또한 검사는 수사지휘 이후 그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반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를 때 불송치기록의 경우 요건 측면에서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한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

○의장대리 맹성규 김예지 의원님, 잠시만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소개로 서울시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김예지 의원 감사합니다.

다시 정신을 모아서 해 보겠습니다.

방법 측면에서 오로지 기록을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허락되지 않고 횟수도 1회로 제한되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청에서 기한 도과하여 재수사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기록 접수 후 60일이 도과하면 전결 범위가 상향되는 등 60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그 기한이 60일로 단축되어 운용되고 있다.

재수사 요청 이후에도 경찰로부터 재수사 결과서라는 낱장 서류를 받을 뿐 경찰이 기록을 다시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건을 송치받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이나 법리에 위반한 경우'라는 등의 추가적인 송치 요구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형사법령에 따라서 수사중지기록의 경우 요건 측면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고—이것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1항—방법 측면에서 오로지 기록을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허락되지 않고 횟수도 1회로 제한되며 30일이라는 기한이 있다. 시정조치 요구한 이후에는 그 사건을 송치받고자 할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5항.

제1의 라항에서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의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방법이나 사후조치 측면에서도 그 절차 운용의 범위를 대단히 좁혀 둔 것이다.

특히 방법과 관련하여 전화조사 등 간단한 사실확인조차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서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불송치·수사중지 결정한 기록의 경우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잠정적이나마 종결된 것이고 검사는 사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받을 뿐이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기록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검사는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에 대해 의문점이 있더라도 소환조사뿐 아니라 전화조사 등 어떠한 사실확인 과정도 거칠 수가 없다고 한다.

쉽게 말해 검사는 받은 기록을 받은 그대로의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그 개념을 반영해서 검사가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한 경우 공소시효 산정에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된 시효를 적용하여 지명 수배할 경우에 불법체포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과오가 있지 아니한 이상 어떠한 서류도 추가하지 아니한 채 받은 그대로 기록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사란 필요한 때에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대원칙이 있는데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란 수사의 대원칙에 전혀 들어맞지 않아 수사가 아님이 명백한 그저 기록 검토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그 절차를 통해서 검사에 요구하는 기능은 실질적으로 수사에 해당한다.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는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혐의의 입증 여부,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 자체가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수사여서는 안 되고 결과만 수사의 결과이기를 바라는 모순적 입법이자 수사를 통해서만 실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대전제에서 제정·운용되고 있는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셈이다.

또한 수사중지기록의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 결정 자체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 시정조치요구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검사는 수사를 중단한다는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즉 경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은데도 소재불명을 이유로 중지 결정한 경우 추가로 소재수사할 경우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필요한 소재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은 채 중지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정조치요구할 수 있고 수집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의 관점에서는 기록을 검토할 수 없다. 검사가 추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발견으로 수사가 재개됐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물적 증거 등 증거관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사법통제 조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보완수사요구는 증거수집이 필요한 때 할 수 있게끔 한 반면에 재수사요청은 보완수사요구 절차 소정의 필요성보다 그 범위가 협소함이 명백한 사경의 결정에 위법·부당성이 인정되는 때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사중지기록에 대한 시정조치요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피의자나 참고인이 소재불명이 아닌데도 소재불명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경우에 한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범위를 더욱 좁혀 둔 것이다.

그러나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난감한 사건이 피의자가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기화로 적시에 수집했어야 할 증거들을 수집하지 아니한 채 무책임하게 보류해 뒀다가 오랜 시일이 경과된 후 재기된 중지 사건들이다. 피의자들은 이를 노리고 도망했다가 장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나타나고 피의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증거가 산일된 터라 수사기관 입장에서 추가 확보할 증거의 소재 자체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지 결정을 하는 그 시점에 추후의 재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적시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사법통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개정 형사법령은 검사가 해당 영역에서 사법통제를 할 수 없게끔 검사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이처럼 절차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원체 뚜렷하다 보니 실제 그 절차의 활용 비율 또한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의신청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건에서 외부적 통제 절차란 검사의 사법통제 절차가 유일하다는 데 있다.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기소한 인원이 연간 평균 1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송치 수사중지된 기록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곧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암장되고 있는 사건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은 보완수사요구 절차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수사 성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불기소된 사건의 경우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여하에 따라 수사의 완결성 여부가 판가름 난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인정되던 때에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관여했으므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까지 검사가 책임져야 할 법적인 이유와 근거가 분명했지만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할 법적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해졌다는 말은, 거의 잘 안 됩니다.

형사사법절차상 현실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기소 여부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다는 점에 변함이 없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에 관여하는 법적 장치나 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법적 근거만 미약해졌다.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여 수사 결과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경찰수사의 주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 경찰의 자체적 수사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과 책임성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책임성이란 단순히 그 과정을 담당한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무나 부담을 질 때 비로소 발생한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인정할 만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제197조의2제3항) 실무를 하면서 동 규정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를 듣거나 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란 보완수사요구를 형식적으로 이행했을 뿐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부실수사로 귀결되는 사례들인데 직무배제, 징계요구의 요건 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보완수사요구의 부실 이행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방법 또 판단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제가 그래서 장애인복지법도 개정했습니다. 이 '정당한'이란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데요, 법조인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저만 거슬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보면 지금 현재는 제 옆에 없지만 안내견과의 출입에 관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네요. 다 거부하는데 정당한 사유 아니라 그러지 누가…… 아니, 정당하다고 그러지 누가 정당한 사유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거부권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쓰다가 '정당한'은 굳이 삭제, 굉장히 이게……

그런데 사실 법안 곳곳에 많아요, '정당한' 이것.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해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했던 경험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군요.

검사가 명백한 직무해태라고 판단해서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그 요구를 받은 기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요구해야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 자체가 재량이므로 기관장이 부실수사만으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경우 검경 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결국 직무배제나 징계요구 절차가 개개 사건의 보완수사요구를 내실화해 줄 만한 실효적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검사장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등의 절차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이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여기는 또 '타당한'이네요—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과 등을 요구하여야 하나 수사준칙 소정의 정당한 이유와 공무원 징계령 소정의 타당한 이유 간의 해석 불일치로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나 이

미 검찰청법 제54조에서 징계요구권보다 완화된 교체임용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징계 요구 관련 조문의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 있다.

경찰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됐으니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제고됐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방식을 보면 그 결정이란 자율성을 의미할 뿐 책임성과 연결되지 않는다. 경찰은 스스로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을 한 후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를 받더라도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족할 뿐 새로이 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증거 관계와 결정의 이유를 망라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수사준칙 제58조, 제62조), 결정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반면(수사준칙 제53조)에 결과통보란 결과통보서 서식에 검사의 요구사항을 이행한 사실, 그 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해서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대외적으로 책임을 발생시킬 만한 절차가 아니다. 결과통보서 서식 자체가 수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 이외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나 형식을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도 담당자별로 천차만별이다.

결과통보라는 행위의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최근 들어 검사들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보완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함께 추송하기 바란다'라거나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수사보고를 작성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보완수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이므로 불이행한다'라는 취지로 결과보고서를 송부한 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다수 보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찰의 결정이란 원칙적으로 검사가 기록을 받아 보기 이전 시점에 이루어지고 검사가 어떠한 요구나 요청을 하더라도 경찰이 그 이후에 다시 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완수사 요구 및 그 요구의 이행 과정에서 경찰에 어떠한 의무나 부담이 지워진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나 부담이 동반되지 않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다.

요컨대 형사사법 절차의 흐름상 현실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는 여전히 검사에게 있는데 이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이 책임진다고 선언했으나 이를 현실에서 구현할 법적 장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실무상 검사들이 형사사건 수사에서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점이 경찰의 소위 던지기식 수사, 송치만 되면 경찰은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상황에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종래 수사지휘 체계에서는 지휘 자체가 강제성이 있었으므로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검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면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현재 검사들이 경찰과의 관계에서 완결성을 요구할 명분이나 근거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비근한 예로 검사는 재판 계속 중에도 보완수사요구(공판)를 할 수 있으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 버린 이후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이행 결과통보가 1년 이상 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송치는 하는데 통보가 안 됩니다.

일례로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초기 당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송치사건의

진범을 확인하더라도 진범을 인지하여 기소할 수 없었던 시기에 빵소니 사건 재판이 계속되던 중 공판검사가 '기소된 피고인은 진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니 진범을 수사하여 송치하여 달라'라고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으나 그 수사에 무려 1년이 걸린 사례가 일선에서 회자된 바 있다. '송치를 했으므로 이미 내 손을 떠난 사건이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찰도 존재한다.

경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송치 이후 상황까지 염두에 두며 완결성 있게 수사하게 할 만한 아무런 유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수사구조와 법제도가 문제이다. 검사들이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되면 벌점을 받듯이 경찰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인사제도를 신설해서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수사지휘가 사라진 현시점에서는 경찰에게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유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불송치 수사중지기록에 대한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절차의 경우에 보다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서 검경이 수사의 본론(혐의 유무와 관련된 증거 수집)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된 상황이라지만 수사의 본론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결론을 끌어내야 하는 보완수사요구 절차 영역에서는 이 같은 책임성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다.

책임성 문제는 수사의 방향성을 불분명하게 하고 수사 효율성을 저해한다. 검사가 혐의 인정이 어려운 이유를 명시하여 보완수사요구하고 경찰이 보완수사한 결과 달리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바 없더라도 새롭게 불송치 결정을 하는 선택지와 결과 통보만 하는 선택지 중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한다.

불송치로 결정을 변경하려면 결정서 작성, 수사결과 통지 등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을 해야 하는 반면에 결과통보서는 그에 비해서 훨씬 간이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같은 현상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검사가 결과 통보를 받은 후에 직접 보완수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면 된다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 지연과 국민 불편이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회의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책임성 문제는 검경 간에 송치 사건이 이동하는 절차 그리고 사건 관리 방법이 달라진 점과도 관련이 있다. 종래 수사지휘권이 인정됐던 시기에는 검사가 일단 사건을 송치받은 이상 경찰에 수사지휘하더라도 검사의 사건부에서 사건이 사라지지 않았고 검사는 지속적으로 그 사건을 관리·지휘한 다음 경찰이 일응의 수사를 완결하면 사건의 재송치 가부에 대해 승인하여 사건을 다시 송치받았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기간 중에도 사건의 관리·지휘 책임이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중인 수사지휘 기간에도 검사가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비롯한 주요 수사 사항을 경찰과 함께 계속 점검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고 경찰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완수사요구하면 검사의 사건부에서 사건이 사라진다.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여할……

이처럼 더 이상 수사의 방향성을 좌우할 주도권이 검사에게 있지 않고 검경 간 연계성이 사라졌으며 경찰은 일단 송치 결정을 한 이상 그 이후 보완수사요구를 받더라도 그 요구를 얼마나 완결성 있게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다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검사는 개정 형사법령 취지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발생한 수사 미비점은 경찰이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또 경찰은 별다른 유인을 가지지 못한 채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 검사의 요구 사항을 부실하게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한 후 결과통보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버리는 방식으로 이른바 사건의 핑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한 이후에 경찰이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형사사법 절차 내 구조적 문제점의 산물이다.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고 사건의 재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에서도 검사가 관여할 법적 근거나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경 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완결했다고 판단되면 다시 그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서류의 흠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 사건을 수리하여야 한다.

이를 개선할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3년 10월 17일 자 수사준칙 개정 및 그 취지가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3년 10월 17일 자로 수사준칙이 개정되어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 검사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검경이 어떤 기준에 의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지 그 분담 기준을 정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한다라고 정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각각 분담하여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했고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한을 3개월로 명시함으로써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재수사 요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경찰은 이행 기한을 3개월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검사가 재수사 결과서만으로는 송치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경찰에게 기록 송부를 요청하여서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 송부 요청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재수사요청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위 수사준칙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그로 인한 실무상 변화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현시점에서 생각건대 앞서 밝힌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완수사요구 절차의 경우 근본적으로 검사는 완결성 있는 수사가 긴요한데 경찰은 송치 이후 상황에 대해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검경이 각각 어떤 범위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 특히 기한을 적용해 분담 기준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기한 내 완결을 위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거나 수사 완결성 때문에 부득이 기한을 도과하는 사태만 초래할 수 있다.

절차의 간이화와 효율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법령 시행으로 국민이 경험해야 할 형사절차상 경로가 일흔네 가지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을 만큼 복잡화, 분절화된 절차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이화, 효율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송치사건 기록의 보존 주체는 검찰이고 불송치·수사 중지 기록의 보존 주체는 경찰이라는 분법적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서 원본 기록이 일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

면 등본을 제작할 필요가 없게끔 원본 기록 전체를 경찰이 보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전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 기록이 아닌 한 원본 기록은 검찰이 보존한다라는 취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검찰이 경찰에 기록을 교부할 수 있게끔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송치·불송치·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각 절차의 세부 내용 역시 상이하게 규정했기 때문인데 불송치·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를 달리 규정할 아무런 법리적, 입법정책적 논거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한 사법통제 역시 재수사요청 절차에 의하도록 이 부분 관련 규정부터 신속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절차를 간이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령에 따른다면 검사가 수사중지기록 검토 단계에서 증거관계 미비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나아가 재수사 요청의 요건과 관련하여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부당한 경우' 그 경우와 같이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여 논란을 키울 수 있는 규정으로 절차적 혼란을 가중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라는 2개의 가치 간 형량을 통해 보다 간명한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조건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2개 축으로 하므로 필요성 측면에서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 형사소송법 입법 당시에 검토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한 찬반 입장을 살펴보면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를 찬성하는 입장은 경찰이 일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이 조기에 종결하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수 있으며,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지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검사의 기소권은 서로 다른 단계의 결정으로 다르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를 반대하는 입장은 수사종결은 기소·불기소, 즉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률 판단의 문제로서 사법기관의 역할이며, 경찰의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된 사건이 다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라진다면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무분별한 강제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음.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제도 평가와 장단점 검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측면, 국민의 여론, 해외 사례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됨.

애초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된 논거 중 하나가……

(○유상범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김예지 의원, 유상범 수석이에요. 잠깐만……)

예.

○의장대리 맹성규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유상범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잠깐 쉬었다가……)

○김예지 의원 저요?

○의장대리 맹성규 예.

○김예지 의원 저희 당에서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셔 가지고, 빨리 좀 끝내고 쉬어라라고 해 주셔 가지고……

(「김예지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렇게 합법적인 방해를 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올라온 국정조사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미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사법체계를 흔드는 그런 아주 문제가 있는 선례,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사실 시행되고 있는 개혁이라고 하는 법들의 어떤 폐해라든가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만은 좀 안 믿을 것 같으셔서 다양한 학술논문들을 통해서 그거를 해 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제가 빨리 끝내라 했으니까 또 빨리 끝내야지요.

국정조사는 조사입니다. 여기서 조작이라는 열두 번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입니다. 진실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넓고 곧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시하신 이 지도는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맡긴 것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이지 정적을 가두는 창살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안개를 걷어 내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가려진 사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오히려 정치라는 안개를 더 짙게 뿌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기획된 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 온 국민이 길을 잃습니다.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배리어 또는 바리케이드일 뿐입니다. 진실을 억지로 구부리면 결국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 광장으로 끌어내서 조작이라 낙인찍는 행위는 사법부라는 민주주의 기둥을 도끼로 찍는 일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 있는 탄탄한 대로를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단상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화살받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검찰의 칼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수의 폭력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또 소망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국회가 먼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해 버리는 이 오만한 질주가 여기서 멈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 요구서는 법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사실은 법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과 제도는 강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스스로를 충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더욱 강하게 작동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과 아동, 노인과 여성, 저소득층과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국가의 범죄대응 체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호선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와 기소 체계를 논의할 때에는 권한 배분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실제로 누구에게 가장 큰 부담과 위험으로 돌아가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검찰 기능의 성급한 축소와 무력화가 사회적 약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개혁은, 약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권한 공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의 더 촘촘하고 더 공정한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면 그 해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가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한 통제와 견제의 구조를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첫째, 수사 절차의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사결정이 기록되고 검증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수사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 결정과 같은 핵심 단계에서 판단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을 명확히 하고 그 과정이 사후적으로도 점검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두텁게 보완해야 합니다. 피의사실공표, 과도한 강제 수사, 장기 수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는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체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외부 통제는 반드시 정치가 아니라 독립성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나 감찰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구성과 운영이 어떤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객관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특정 시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권한 구조의 개선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정합적 개편이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단순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책임의 공백이나 권한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권한을 나누는 것이 책임을 분산시키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국회의 역할 또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회는 개별 사건에 개입해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제도적 해결에 집중해야 하며 그야말로 헌법이 부여한 본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정치권 내부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법치가 어디까지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법의 기준 또한 흔들리고 법의 기준이 흔들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피해는 권력을 가진 사

람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그 피해가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는 강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원칙을 흔든다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법은 더 이상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권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한 도구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불신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기반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의 선택은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이 정한 원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경계를 허물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선택입니다. 검찰을 정치로 통제하는 것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개입일 뿐이며 우리가 과거에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권력의 개입이 아니라 권력을 절제해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 역시 그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늘 올라온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오늘 합법적인 방해를, 방해까지는 아니지만 지연을 하러 나왔고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여기서 당번 서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도,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또 계속 연일 하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서기관님들 또 수어 통역으로 힘써 주시는 통역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맹성규 김예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주희)

(10시20분)

○의장대리 맹성규 다음은 이주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주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맹성규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하세요.

○이주희 의원 김예지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맹성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로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께서도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고가 수습된 이후 국회는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발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나아가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저질렀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앞으로의 검찰 권한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은 오늘도 법정에 서고 있고 그들의 명예는 훼손된 그대로이며 수사 과정에서 짓밟힌 인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도개혁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권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돌아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그 막강한 권한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될 때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 낸 사건을 검찰에 넘기자 담당 공안부 검사 3명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까지 냈습니다.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검찰 수뇌부는 다른 검사를 시켜 강제로 기소를 밀어붙였습니다. 양심을 가진 검사들이 몸으로 막아 보려 했지만 권력의 칼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0년 뒤인 1974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는 고문으로 만들어진 거짓 자백에

기초하여 검찰이 기소한 8명의 시민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지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형 집행, 역사는 이것을 사법살인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은 30년이 흘러 2007년에 와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8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 간 국가의 거짓이 밝혀지기까지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보다 최근인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하여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4년 전에 이미 기소유예로 끝난 외환관리법 위반 사건을 다시 꺼내서 보복적으로 기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정식으로 인정하면서 이 기소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무고한 시민 한 사람의 삶을 조작된 증거로 8년 동안이나 법정에 묶어 놓은 검찰의 만행이 마침내 단죄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한다면 사법부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뼈아픈 역사적 교훈이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정교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해 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 전 정부 관계자, 심지어 언론인까지 겨냥한 일련의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뒤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2025년 가을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법정 증언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님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들었으니 그런가 보다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아가 남욱 변호사는 ‘검사들이 허위사실 프레임을 짜서 저를 주범으로 몰아넣고 모르는 내용을 제가 했다고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울먹이며 검사에게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토로한 그 장면은 윤석열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검찰에 제출한 증거가 검찰에 의해 변형되었다고 새삼 법정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 분석을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검사가 해당 수치가 입력된 엑셀파일을 수사 당시에 들이밀면서 신문을 진행하였고 자기가 이를 믿은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 주고 그것을 근거로 진술을 받아 낸 뒤 다시 그 진술을 기소의 증거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조작기소의 구조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수사팀이 원본 녹취록과 다른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면서 '재창이 형'이라는 표현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는 조작을 가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모두 해당 대목에서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 형이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취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에 엮기 위한, 유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아닙니까? 이 부분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조작기소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하였지요. 작년에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줄기차게 법무부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감찰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감찰 요구에 따라서 특별점검팀이 가동되었고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지금 일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서로의 진술 내용을 사전에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접견이 이루어졌고 소주와 연어, 음식물이 수차례 반입되었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피의자를 구금해 놓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맞습니까? 이것은 회유이자 협박이며 수사권의 중대한 남용입니다. 그 자체로 위법한 수사입니다. 이 수사를 벌인 사람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국정조사에서 그것을 저희가 낱낱이 보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 구치소 면회 시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정황이 확인된 점입니다. 얼마 전 저희에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김성태의 진술이 실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했었지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그 결과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되었다 이미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 줄기차게 법정에서 주장해 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 공판검사 그리고 법원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정부가 바뀌고 윤석열이 저렇게 탄핵으로 감옥에 간 이때 와서야 그 압박을 벗어나서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사명을 가진 법조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하여 야당 인사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수사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비단 수십 년 전의 군사정권이 아니라 바로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이러한 조작기소, 조작수사가 횡행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미 판결로 종결이 되었지만 이 사건 역시 검찰의 기획수사가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책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하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에 착수해서 월북몰이를 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당시 감사원의 조사·보고, 명색은 중간보고였지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낸 결론적 보고였습니다. 이 조사의 과정도, 절차도, 그 승인의 방법도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병호 사단이 밀어붙였지요.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등 5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무려 스물다섯 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시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스물다섯 개의 혐의 전부 무죄, 한 건도 아닌 전부 무죄입니다.

이 판결 직후 국가정보원은 이 고발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발을 취하하였습니다. 3년여가 넘는 세월 동안 5명의 전직 고위관료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충직하게 일했던 고위관료가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명예가 짓밟히고 삶이 파괴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수사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어떤 공직자가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일부 드러난 것, 지난 윤석열 내란 사태 때 우리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변호를 맡았었던 통계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관계기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이른바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 결과라는 거창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11명의 전 정부 인사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7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는 없었다', 그런데 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까? 이렇게 증언이 나오니까 검찰은 그 자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변동률 '조작'이라는 표현을 '수정'으로 바꾸겠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법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당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하고 기각이 되자 위헌소원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작과 수정,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조작은 범죄겠지요. 하지만 수정은 통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과정까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업무의 일환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작이라는 말을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그것 자체가 이 사건이 애초부터 범죄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소장 변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요. 사실 바로 공소취소를 해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2년 7개월 동안 무자비한 검사 그리고 그 전에 감사원, 이렇게 조사와 수사를 광범위

하게 펼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눈물짓게 만든 이 과정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합니까? 재판 과정에 와서야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이런 검찰을 도대체 누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원이 이 조사 당시에 했던 행위들 정말 유명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본보기로 삼겠다',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사 기간이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하겠다', 디지털포렌식 이런 거 없이 모든 디지털증거들 다 그냥 제출하게 했습니다. 사실 서해피격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디지털증거 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국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이 횡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전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수사기관을 사냥개처럼 동원한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공소취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야당 인사뿐만 아니라 언론인에게까지 그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는 유통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언론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가 통과시킨 법에 따르면 앞으로 그 책임은 더 무겁게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응당하게 잘못된 관행을 파헤치고 비리를 조사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사명을 제대로 지킨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당시 어땠습니까?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뉴스타파·JTBC·리포액트 등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 차리고 특수부 검사 10여 명 투입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022년 5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관련 범죄라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직접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까지 펼쳤습니다. 이거 맞는 수사입니까? 당시 검찰들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란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석열은 여전히 이 재판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소장은 세 차례나 변경이 되어서 원래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이 수사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왜 절연하지 않으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비록 자리에는 많이 안 계시지만, 정부가 바뀌고 법무부와 검찰이 일부 사건에 대하여 항소 포기, 상고 포기 등의 조치를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변호사로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과거사 사건들을 변호했

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마찬가지로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당한 고통을 세상에 폭로하지 못했던 국가 폭력, 기관 폭력의 피해자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비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럼에도 국가는 그 국가배상 사건의 피고가 되어서 수년째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늘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잘못한 것은 국가인데 왜 내가 이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일부나마 1심에서 손해배상 위자료가 인정이 되어도,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이제 너무나 지쳐서 소송을 그만하고 싶다고 1심을 받아들여도 당시 윤석열 정부, 국가는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이 법정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야 법무부장관과 우리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잘못된 과거사 사건을 교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말 심심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조치가 아주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통계조작 사건 피고인 11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으며 쌍방울 사건 조작기소 의혹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에 올린 7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적인 한계로 7개밖에 추리지 못했지만 7개를 넘어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돼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검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단순한 조항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건넨 철저한 약속이고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헌법 앞에서, 법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입니다.

검찰이 이 약속을 어기고 선을 넘었다면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져야 할 책임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인혁당 사건의 비극이 30년이 지나서야 재심으로 밝혀졌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유우성 씨가 8년간 법정에 묶여 있다가 다시 기소가 되고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받았던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지며 피해자의 고통만 깊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30년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바로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추리고 그 사실 너머에 있는 더 중대한 사실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수사, 조작기

소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열린 검찰개혁의 새 시대, 저는 이에 걸맞은 과거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이번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찬성하는지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적 맥락 그리고 공소취소 제도,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비추어서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검찰의 조작기소 역사,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가 어제오늘의 우발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건건이 신속하게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이 끔찍한 뿌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 곳곳에 뿌리내려서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두 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본연의 책무, 객관의무라는 명백한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끔찍한 국가 폭력에 눈을 감고 억울한 희생양들의 피눈물 위에 거짓된 공소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 공소권 남용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오점이 아닙니다. 우리 사법체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그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려 온 정말 길고 잔혹한 적폐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아까 제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 고문조작 대표적 사례, 인혁당 사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상세하게 인혁당 사건과 그리고 부림 사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의 1차 사건과 1974년의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나뉩니다. 가장 비극적인 서막은 유신정권이 선포된 후인 197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하여 민청학련이라는 학생단체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이라는 반국가단체가 있다는 프레임을 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로 정권의 반대 인사들을 잡기 위해서 명백하게 날조된,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권옹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중앙정보부의 각본을 완성하는 실행자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에서 당한 참혹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고문으로 얻어 낸 허위자백을 내란 예비 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증거로 내세웠고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반국가단체라는 증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로지 정권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법리를 왜곡하고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비상군법회의라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철저히 차단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도예종 씨 등 8명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형집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이 잔인한 처형에 대해서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정말 치욕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명백한 사법 살인, 세월이 흘러서 2007년이 되어서야 재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당시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 사건 발생 32년 만에 국가의 조작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목숨과 무너진 가족들의 삶, 연좌제로 수십 년을 고통받아야 했던 그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부림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 초기에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뜻에서 부림 사건이라고 불렸지요. 이 사건은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직장인 이런 평범한 시민 22명을 반국가단체 조직원으로 둔갑시킨 사건입니다. 군사정권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민주화 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기획한 전형적인 공안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검찰 또 어떻게 구형했습니까? 법적 절차 완전히 무시한 위법행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영장도 없이 시민들을 연행하면서 짧게는 20일 길게는 60일까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불법적으로 감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이 묵인·방조한 상황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정말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읽은 사회과학 서적을 불온선전물로 규정을 했고 건전한 독서토론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왜곡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 사건 결과로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무고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 의의가 있다면 당시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지요. 이 사건 역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2014년 2월에 와서야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기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부당하게 진술을 강요당했고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33년 만에 부림 사건은 국가권력의 오남용이 빚어낸 허구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일부나마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심 무죄 또는 국가배상사건을 접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을 때마다 겪는 일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지금의 검사는 피고인에게 일어서서 목례를 하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를 합니다. 재판부도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해를 받은 그 고통의 세월이 이 위자료를 통해서나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국가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과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람의 기본권을 정말 철저하게 짓밟은 그 잘못을 자행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정작 피고인들에게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은 현재의 검찰과 재판부가 아니라 과거에 위법행위를 자행한 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얼마 전 통과시킨 법왜곡죄의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미래의 재판부가, 미래의 검찰이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응보입니까? 제대로 된 사과입니까? 그것으로 피고인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꾸려졌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사건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어떤 잘못된 관행의 청산이 역시 중요한 화두였고, 검찰개혁을 중요한 개혁의 과제로 삼았었지요. 그래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이때 제기된 그 숱한 사건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었지만 나름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위원회는 총 17건의 사건을 주요 과거사 본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용산참사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 중에서는 역시 또 제가 변호를 했던, 피해자를 대리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인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심청구, 비상상고, 재수사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성과를 남겼었지요.

사건들 몇 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저도 대리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현대판 수용소의 비극, 물론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 방조하고 관망하고 진실을 은폐해 왔던 많은 국가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처참한 인권유린으로 기록되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부랑인 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아무런 죄 없는 시민들을 길거리에서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잡아들여서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가두었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피해자들도 친구를 만나러 부산에 내려갔다가 차가 끊겨서 잠시 역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오지 않아서 엄마, 아빠를 찾아서 거리를 돌다가 경찰서로 인도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부모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이 형제복지원 담장 너머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게 일상을 영위하던 그 시간에 정말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도라는 말은 허울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구타, 성폭행, 굶주림 그리고 강제노역—무임금 강제노역이었지요—이런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

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었지만 죽어나간 이들은 산속에 암매장이 되거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복지원 원장 한 명의 탐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를 방조하고 권장했던 국가권력이 빚어낸 거대한 범죄였습니다. 무고한 아이들과 청년들이, 사실 수당을 벌기 위해서였겠지요. 살려 달라고 외칠 때, 무고하게 끌려가서 그 참혹한 고통에 몸부림칠 때 국가는 그들을 부랑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사회에서 지워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시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끔찍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파악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수사와 기소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수백 명의 의문사와 가혹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장 박인근 개인의 횡령 비리에만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한 것이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특히 검찰 지도부는 현장 수사 검사들이 정권의 배후·유착을 밝혀내려는 의지마저 꺾고서 조기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검사 본연의 임무를 역시 방기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었습니다. 검찰권 일탈이었습니다.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협력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명예회복, 피해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또 가슴 아픈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김근태 고문 사건입니다.

1985년 9월 민주화 운동가 김근태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겪은 지옥 같은 22일, 공권력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잔혹했던 기록입니다. 좁고 폐쇄된 취조실에서 이른바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칠성판에 묶인 채 반복적인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훗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공포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서 유신과 독재시절 국가가 어떻게 안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야망과 폭력의 상징입니다. 김근태 의장이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고통의 와중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투쟁했던 모습은 우리 사회에 고문의 근절,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의 철저한 근절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검찰 역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참한 신체 상태를 보았음에도 그리고 법정에서 생생한 폭로를 목격하고도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고문 사실을 입증할 흔적이 명백했지만 가해 경찰들에 대해서 수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했습니다. 오히려 고문으로 얻어낸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었지요. 국가폭력의 공범 역할을 앞장서서 자행한 것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폐쇄적인 대공수사 구조가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야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방지조약의 철저한 이행,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제도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고문과 같은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특례를 두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공안수사 부서를 기본권 보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는 희생과 피를 딛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 파렴치한 거짓말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불길을 당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취조실에서 차가운 물 속에 머리가 처박힌 채 죽어 간 대학생 박종철의 소식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정권은 고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단순 쇼크사로 위조하려 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의사들과 기자들,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수사관들의 잔혹한 물고문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박종철 열사의 목숨을 딛고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역시 검찰, 이 사건 진상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축소 기소하는 데 적극 가담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검찰은 고문 사실을 알고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었지만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단 두 명의 경찰관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부검 결과 목격자 증언, 고문의 증거가 넘쳐났지만 수사기록에서 일부러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사법정의를 훼손하였습니다.

역시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인권의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정권의 시녀가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변호인접견권의 실질적 보장과 피의자신문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권고했습니다.

다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입니다. 국가권력이 무고한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진실을 조작했던 역시 또 다른 비극적인 공안사건입니다.

1991년 명동성당 분신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강기훈 씨는 고인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기소되어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통을 받았고 병마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4년 만에 대법원 재심을 통해서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사법체계 실상을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이 어떻게 부역하면서 무고한 개인을 희생했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검사들 실체적 진실 규명 내팽개친 채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안 프레임 짜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검 진상조사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심적인 증거 조작, 바로 국과수의 유서 필적감정 결과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고인의 실제 정자체 및 흘림체 필적이 강기훈 씨의 필적과 다르다는 강기훈 씨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비전문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국과수의 허위 감정 결과를 결정적인 증거로 둔갑시켜서 억지 유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무리한 자백 강요, 억울한 개인에게 유서대필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렇게 합작해서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과거사위원회는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친화적인 수사·공판 구조로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안수사 구조 해체와 축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약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수법,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라고도 유명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들어 보셨을 사건에서도 있었지요.

1999년 전북 완주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서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동네의 가난하고 지적장애가 있던 청년들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이들은 역시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 속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해야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훗날 부산에서 진범들이 검거되어서 구체적인 범행 일체를 자백했음에도 당시 검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진범의 목소리조차 외면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우리들의 말은 아무도 들어 주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절규는 우리 사법시스템이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했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역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진범의 자백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오판을 맞는 판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부산지검에서 송치된 진범들의 자백이 담긴 증거들을 검토하면서도 전주지검 수사팀은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지 않기 위해서 진범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보다 자백에 의존하고 한 번 내린 결정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방관한 역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조직보위 논리가 인간성의 존엄을 짓밟았다고 평하면서 자백 중심의 수사관행을 완전히 폐기하고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판으로 인해서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에게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예외가 아니지요. 대표적인 노동자 파괴, 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 사건, 유성기업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 사측이 창조컨설팅,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공모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직장 폐쇄, 어용노조 설립, 대규모 징계를 동원해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터에서 쫓겨나고 폭력적인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짓밟혔지만 공권력은 차가웠습니다. 법은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사측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노동자들의 저항에는 가혹한 법의 잣대가 들이대졌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정말 서글픈 우리 노동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정말 노사관계 수사에서는 유독 노동자들을 굉장히 편협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상실하고 사측에 편향된 수사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수년간 기소를 미루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또 남용의 행위가 되겠지요.

반면 노동자들의 쟁위행위에 대해서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고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형태로 권한을 이용해 왔습니다. 노조 파괴의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고의로 지연시켜서 사측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 주기

도 했습니다.

역시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검찰권의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쳐 행사되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수사·기소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개정하고 노동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재량권을 견제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는 제가 담당했던 약자가 희생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조작 기소의 끔찍한 단면을 보여 주는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13세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후로도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영장도 없이 22살에 불과했던 평범한 농기구 수리공이었던 윤성여 씨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일 동안이나 참혹한 폭행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받았던 윤성여 씨는 자백을 하면 일찍 풀려날 수 있다는 그 말에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백 외에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혈액형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마저 윤성여 씨에게 불리하게 조작했습니다. 확실히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유사할 것이다, 비슷하다, 사실상 추정된다, 이런 막연한 증거들로 윤성여 씨를 진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다리 소아마비를 앓던,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윤성여 씨는 졸지에 잔혹한 연쇄살인범으로 둔갑하였습니다.

특히 당시의 검사는 현장검증 과정에서조차도 인권유린을 넘어선 파렴치한 조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가 불편했던 윤성여 씨가 그 범행 현장의, 집의 담을 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했지만—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검사는 윤 씨를 몰아붙여서 담을 뛰어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담에 기대 보고 담에 다리를 걸쳐 보라고 하고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현장검증의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윤성여 씨는 소아마비를 가진 다리로 높은 담장을 뛰어넘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연쇄살인범이 계속 사건을 저지르는데 검찰과 경찰이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미흡한 수사를, 미진한 수사를 덮기 위해서 제물로 삼은 것 아닙니까? 연쇄살인이라는 그 엄중한 사건을 두고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분명치도 않은 이러한 날조된 증거들을 가지고 살인범으로 몰아갑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검찰은 당시에 실체적 진실에, 국민들께 선서한 그 객관의무에 충직하지 않았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검찰이, 검사가 어떻게 평범한 한 시민을 조직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역시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윤성여 씨는 1989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자백만 하면 며칠 뒤에 풀려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서 허위 자백서를 썼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윤성여 씨는 그 직후부터 검사님께 편지를 쓰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에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 법원, 어느 누구도 윤성여 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 없었습니다. 기록의 엉성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2심과 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어서 윤성여 씨는 자신의 성실한 수감 생활을 통해서 2009년 가석방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청춘의 시간을 차가운 감옥에서 억울하게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윤성여 씨를 변호하면서도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당시 80년대에 그렇게 누명을 써서 끌려갔던 그 당시에도 윤성여 씨는 장애가 있는 다리로 힘겨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히 하루하루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하고 계셨고 감옥에서도 성실히 열심히 노역을 하여서 감옥 안에서 가죽 피혁을 제조하는 기술을 습득하셨습니다. 상도 받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에 바로 가죽 공장에 취업을 해서 풀려난 직후에 취업했던 그 공장에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직장을 옮기지 않은 채 성실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조작 기소 실체가 2019년 현대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밝혀졌지요. 과거 사건 현장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당시 하필이면 이춘재가 감옥에 있어서 DNA 확보가 훨씬 더 쉬웠다고 하지요. 과학적 증거 앞에서 수사기관이 추궁을 하니까 진범인 이춘재는 이 8차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당시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 사건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변호사로서 재심을 청구했고 윤성여 씨는 재심 공판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검사가 법정에 나와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검사는 과거의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법정에서 사과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위법한 행위를 했던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윤성여 씨가 32년 만에,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와 과거 경찰의 가혹행위 등을 인정받고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20여 년 동안 복역하고 사회적인 고립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그 세월을 배상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32년의 세월, 억만금을 준다 한들 보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밖에 계시는 국민들께 이 정도의 돈을 줄 테니 감옥에서 20년을 살아라 하면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 사건 역시 권력을 독점한 검사가, 검찰이 무고한 시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작의 과정을 사후에 교정하고 바로잡는 게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소 취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또 수사기관, 기소기관 스스로, 국가기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신속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성 살인 사건이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 또 역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검찰이 조직 내부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가해자를 어떻게 비호하면서 감쌌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권력형 비극입니다.

이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 중 한 분을 저도 대리를 했었는데요. 2013년에 건설업자 윤중천의 폭로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사건이었지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학의와 윤중천 등등 사회 유명인사들에 의해서 자행된 수십, 수백 차례의 성폭력과 강간, 불법 촬영, 협박.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 명백한 성폭력 정황 앞에서도 오직 뇌물죄에만 매몰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는 철저히 묻혔습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수사 당시에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대가를 얻기 위한 경제적 동기라며 비하했고 심지어 김학의 측 변호인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 검사들을 사건에 배당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마저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당시 검사들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외면한 사실 때문에 이후 이 성범죄의 고통은 사법시스템 속에서 전혀 해소되거나 보상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을 했지만 검사들이 증거를 외면한 것이지요.

피해자 A씨가 김학의와 윤중천에 의한 합동강간 사실을 고통스럽게 호소했지만 검찰은 혈액형이나 동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를 들이밀어도 '김학의가 아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면서 조작 프레임을 씌워서 무시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의 본질을 무시한 채 서로 취한 상태에서의 합의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김학의가 부인하는 진술만을 신뢰할 뿐 피해자 측의 신뢰관계인 동석조차 거부하면서 노골적으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증언이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니까 믿을 수 없는 증인이고, 그렇게 공소시효가 도과되면서 정말 안타깝게 사건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대리인이었던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교묘히 활용하면서 불기소를 정당화했고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한 꼼수 기소로 실체적 진실을 전부 다 밝히지 못한 채 사건 자체를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누더기 상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사건은 9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법적 단죄에 실패했습니다. 성폭력 혐의는 검찰의 초기 부실수사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고요.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 수사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해서 증거능력이 배척되면서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과 김학의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낙인 속에서 기나긴 침묵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영원히 은폐될 뻔했던 이 사건의 실체는 그나마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21년 김학의 보고서 공개를 통해서 일부나마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지만 미흡했던 초기 검찰 수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2021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있었지만 성폭력 영장 제외 등등 미온적인 태도에 그치면서 또 형사절차상의 여러 한계에 부닥치면서 올바른 실체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던 사건으로 정말 저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뼈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

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님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조직이고 시스템입니다. 잘못된 조직이 그대로 온존한다면 결국에 잘못된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이 사건도 대표적인 평범한 시민을 조작된 증거로써 억울한 피해자로 만든 사건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본인들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고 정말 보복적으로 또다시 기소하는 검사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준 한 가지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전면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들이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서 유우성 씨에 대해서 과거에 종결됐던 사건을 꺼내서 보복적인 재기소를 감행했습니다. 대법원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었지요. 제왕적인 검찰 권력에 그나마 제동을 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이었던 유우성 씨는 탈북을 한 후에 2011년 서울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국가정보원은 그가 200여 명의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면서 기습적으로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그의 삶은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참히 흔들렸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그에게 간첩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씌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간첩이라는 딱지가 씌워지면 아무리 수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러서 그 무죄를 받는다 한들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국민들은 여전히 그를 간첩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를 옭아맨 핵심 증거는 국가기관이 제시한 중국 공문서였습니다. 출입경 기록 그리고 탈북자들의 진술조서. 그런데 이 완벽했던, 완벽해 보였던 증거들의 실체가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지요.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고 탈북자들에게 사전에 작성한 조서를 베껴 쓰게 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의 태도였습니다. 훗날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국정원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검증을 회피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허위증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채 기소를 강행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변호사들이 정말 맹렬하고 열심히 이 증거의 조작성을 주장하였으나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더 증거를 검증했어야 하지만 이것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이 조작된 증거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었지요. 2심 재판부가 중국 공문서 위조와 진술조서 조작과 같이 국정원과 검찰의 노골적인 증거 조작을 명백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전면적으

로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을 정말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간첩으로 둔갑시키려 했던 국가권력의 정말 무리한, 참혹한 이 시도가 법의 심판을 받고서야 그나마 무너진 것입니다.

이후 이 위조된 공문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데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하고 민간 협조자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필귀정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 끝나는 줄로만 알았던 이 사건이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됩니다. 코너에 몰린 검찰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2010년, 그 훨씬 이전이지요. 본 사건 훨씬 이전에 유우성 씨가 대북 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담 정도가 경미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실상 종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이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고 선처를 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죄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동일 사건으로 본인이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한 다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간첩사건 무죄 판결 직후에 어떠한 유의미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 또는 유우성 씨가 그 관련한 행위를 다시 또 했다는 어떠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4년 만에 다시 꺼내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우성 씨를 재기소합니다. 간첩 조작 무죄 판결과 조작 폭로에 대한 명백한 앙갚음 기소, 명백한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요.

이 이례적이고 치졸한 기소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물론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 판결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쟁점에 대한 결론.

종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2010년 3월 29일로부터 만 4년이나 지난 2014년 5월 9일 현재 사건이 기소된 점. 그사이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작한 증거가 2013년 9월 공판 관여 검사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4년 1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정원 직원들과 수사검사, 수사관들이 공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법원……

죄송합니다. 제가 줄을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국정원 직원들과 수사검사, 수사관들이 공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로 날조된 피고인에 대한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이들을 고소하였으며 2014년 2월 위 증거 위조가 밝혀지고 그로 인해 위 직원들이 2014년 3월 31일 모해증거 위조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2014년 4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 사건의 공판 관여 검사들이 2014년 5월 1일경 위 증거 위조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바 현재의 사건이 그 직후인 2014년 5월 9일 기소된 점.

셋째,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

고 공소제기해야 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은 없는 점.

넷째, 재수사의 단서가 된 U의 고발은—익명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되었어야 할 것인 점.

다섯째, 현재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공소제기 당시 함께 기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에는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말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이 항소심의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도 역시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 의미 있는 사정 변경 없이 다시 기소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공소를 기각한 최초의 사례로서 제왕적 기소독점에 정말 뼈아픈 경종을 울린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해야 할 과거사로 규정하고서 당시 총장의 공식 사과와 공안수사 구조 개편, 정보기관 통제 등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책임과 쇄신이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증거 위조를 방치하고 보복 기소를 자행했던 담당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가벼운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교묘히 피해 갔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유우성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최근인 2025년 3월에 최종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그 권력을 남용했던, 그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현실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직 온전히 아물 수가 없음을 보여 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제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 있는가를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참혹한 이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검찰은 적법절차를 수호하는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 국가폭력을 행하는 사냥개, 국가폭력의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남영동 대공분실의 끔찍한 고문을 묵인했고 진범을 눈 앞에 두고도 조직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 애꿎은 청년들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기소독점주의라는 거대한 특권, 안온한 특권 뒤에 숨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외면한 이 검찰의 조작 은폐의 역사. 단지 낡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그리고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고 어두운 국가폭력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제도가, 그 합법적이고 적법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바로 우리 제도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기소를 거두어들이는 결단, 즉 공소취소입니다.

앞서도 제가 정말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담당했던 재심사건, 국가배상사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길고 긴 정말 고통의 과정을 피해자에게 계속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 입었다는 사실을 그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하는 그 험난한 과정에 둘 것이 아니라 가해자인 국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으로 공소취소권을 행사해서 그 폭력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피고인의 삶과 피해자의 삶과 그리고 훼손된 사법정의를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그 해답은 명확합니다. 조작 기소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당위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 바로 공소취소입니다.

이 공소취소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소취소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는 최후의 인권보호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적시되어 있지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과 더불어서 우리 법은 검사에게 공소의 제기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 또한 채택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이처럼 강력한 기소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익의 수호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할 객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객관의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객관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소편의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공소취소입니다.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기소를 취소할 수도 있게 하는 제도, 권한을 가진 만큼 그 권한을 다시 교정할 수도 있게 하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공소취소 제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희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 공소취소가 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떤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공소취소 제도는 형사소송법 2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단지 형벌을, 기소하는 죄를 묻는 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때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 바로 객관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소법 제255조 1항,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항,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법정에서 구두로 검사들이 '공소를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검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라면 어떠한 이유든지 이를 서면 또는 법정에서의 구술로 명시해서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된 기소를 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소사실의 철회와는 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요. 공소장에 기재한 일부 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소사실을 이렇게 철회하는 것은 소송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공소취소와는 구별이 되지요. 즉 공소취소는 피고인 사건의 소송 계속 상황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사가 수사 과정의 위법이나 증거조작을 기소를 한 이후에 뒤늦게라도 인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숱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검사들이 조작된 증거를 발견하였거나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의 자백 외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할 증거가 전무하거나 이런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숱한 과거사 사건들에서처럼 검사들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 증거들을 뭉개고 그렇게 계속 가야 합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정말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자신의 힘으로 그 절차를 교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검사가 이러한 문제를 사후에라도 인지했다면 당연히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객관의무에 입각해서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신속히 형사소송 절차에서 해방하는, 이탈시키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봤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대법원으로부터 헌정사상 최초의 공소기각 판결,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스물다섯 번이나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8년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간첩이라는 억울한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그 1심 판결 전에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공소취소 결단을 했다면 유우성 씨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한 시민의 비극은 일찌감치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소·고발의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공소취소를 결정하면 피해자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해서 이미 우리 법은 절차의 투명성까지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조항도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 있는 절차를 검사들은 적극 활용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증거조작 이건 당연히 공소취소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정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증거가 조작되었는데 어떻게 공소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일부 학자분들 중에서는 공소취소의 사유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앞서 본 여러 과거사 사건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 255조 문언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 법령 어디에도 공소취소의 이유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무상으로는 취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공소취소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검사의 재량이 무한히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계와 실무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형식적인 사유,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예를 들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거나 이중기소거나 친고죄에서 고소를 누락했다거나 이런 공소제기 자체

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라든지 또 재판 도중에 소송 조건이 흠결된 경우 이럴 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검사가 바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체적 사유로는 이런 것이 있지요. 사건의 내용 자체와 관련한 것이 실체적인 사유인데요. 가벌성이 희박해진 경우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송 계속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령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거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위헌소원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회 정세의 변화까지도 바로 이러한 가벌성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지요. 진범이 검거된 경우,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된 경우, 유죄 입증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사후에라도 밝혀졌다거나 이럴 때 스스로가 바로 기소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사유들조차도 실무상에서는 공소취소의 사례로 들고 있는데 특히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사건 조작이 확인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당연히 유죄 입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건 자체도 아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공소를 유지할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체적인 사유가 되겠지요.

표적 수사, 억지 기소 이런 것들로 점철된 사건은 처음부터 당연히 정당성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조작 상태가 만약에 소송 계속 중에 밝혀졌다, 검사는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되고 피고인을 조속히 그 부당한 공판 절차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법이 명한 의무인 것입니다.

셋째, 선진 외국의 입법례도 공소 취소에 대한 사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기소 협상, 즉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지요. 이 기소 협상 제도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검사의 기소 재량권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소 취소 이유 역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검사가 임의로 소송을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나는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무죄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 달리 활용할 어떤 것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소 취소를 원하지 않고 나는 소송을 해서 무죄를 받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권리의 행사일 텐데요. 이런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소 취소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공소 취소에 대해서 나름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소 취소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역시 또 피고인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미국과 영국…… 독일도 한번 볼까요?

독일도 우리처럼 성문법 국가이고 대륙법계의 수장이지요. 그런데 우리처럼 기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또한 바로 그 공소 취소 제도를 일정 정도는 좀 허용을 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사실 공소 취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주도권이 검사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이 권리 배분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이 또 구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제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유사하지요. 취소 사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재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제동 장치도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피고인의 동의라든지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동 장치를 두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것인지 공소가 한 번 제기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그 기소 재량권이 폭넓게, 공소 취소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지요.

향후에 이 제도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도 국정조사 이후가 되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어떤 그 표준에 좀 맞춰서 검사들이 자신의 과오를 법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이 공소 취소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공소 취소는 부당한 재기소를 차단하는 피고인의 법적인 방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서 법원은 즉각적으로 형식재판을 통해서 그 기소를 무효화합니다. 공소기각 결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328조제1호에 공소가 취소되었을 경우를 법원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식재판, 공소기각 결정의 경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가 취소되면 전부 해결이 될까요? 이 공소취소는 확정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된 후에도 여전히 검사가 자의적으로 다시 기소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법은 부당한 재기소를 차단하는 매우 강력한 보호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형소법 제329조지요.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기존과 똑같은 상태로는 재기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될 때만 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사에게 공소 취소의 재량권을 무한히 부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그 재기소를 통해서 다시금 불합리한 공방에 들어오는 그런 길을 일정 정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검사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증거도 없이 앙심을 품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27조제4호에 따라서 판결로서 아예 이번에는 공소를 완전히 기각해 버립니다. 이것은 앞서 공소기각 결정이었고 이것은 공소기각 판결이 되겠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새로운 증거, 또 다른 증거의 범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겠지요.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으나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면 유죄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취소 전에 수집이나 조사·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가

나중에 새로 발견된 증거이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아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사자주의 아래에서 스스로 소송을 포기한 검사가 다시 그 책임을, 본인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있는 증거를 미처 내지 않아서 생긴 그 위험부담을 다시 피고인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사가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재기소를 남용하지 않게끔 하여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강력한 사법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 제도 안에 있는 이 공소취소 제도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체계에서, 현실 통계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검사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교정하는, 자신의 기소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것을 교정하는 공소취소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실제로 한 해에 20만 건이 넘는 1심 본안사건 중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1700여 건에 불과하고요. 그마저도 대부분 형식적인 하자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소기각 결정의 대부분은 법원이 형식적인 하자, 실체적인 하자를 이유로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과 공소권 남용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정의의 심판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앞서 본 유우성 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 법리를 아예 법전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식의 사전심리 절차, 중간 절차도 도입을 해서 해서 부당한 조작 기소를 재판 전에 법원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제시스템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민주당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잘못된 단추, 잘못 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꿰어야 합니다. 공소취소야말로 무너진 사법정의,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불신의 극을 달리고 있는 사법 불신을, 다시금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역사 앞에 잘못된 검찰이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만행도 살펴보았고 또 검찰의 조작 기소의 참 무참한 실태도 보았고 공소취소라는 우리 법에 명문화된 제도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들이 왜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공소취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일어났던 정말 참 문제가 많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 7가지 핵심 사건들을 추렸지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및 경제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언론인 기소 사건, 이 7가지 사건인데요. 여기서 드러난 어떤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양상이 참으로 다채롭기도 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과 참고인에 대한 회유·협박 이런 것들로 진술을 마구 조작했습니다. 위법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한 없는 공소취소 사유에 해당할 만큼 정말 중대한 법의 왜곡입니다. 단순히 수사 과실을 넘어서서 국가 공권력이 야당, 정적, 전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사법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기획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민간업자들이 독점하려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익으로 환수하려고 하자 검찰이 오히려 민간과 시가 유착되었다, 민간과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유착되었다며 배임으로 몰아세우며 야당 대표를 기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지리적인 구조와 당시의 정치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남시는 크게 네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구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의 서판교와 동판교입니다. 대장동은 남판교라고 불릴 만큼 입지가 뛰어난 노른자 위의 땅이었고 약 30만 평에 달하는 빈 터가 남아 있어서 많은 민간개발업자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민간업자들의 로비로 인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완전히 민간업자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서 땅의 80%를 매집하면서 민간개발허가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하지요. 그때부터 이 LH가 포기한 공영개발을 성남시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하면서 민간업자들의 독점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나 일부 사람들은 왜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주었냐, 왜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않았냐고 비판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모두 다 민간의 차지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46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고 성남시의 이 공영개발 시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런 난관 속에서도 이재명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입하되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형태로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아주 확정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지요.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차단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한 그런 공적인 관점에서 도출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이른바 배임 프레임을 조작해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재명 시장은 민간업자들의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간절히 원했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민간업자들은 자신들을 사업자로 지정하는 민간개발 허가를 여전히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당시에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시장은 이를 거절하고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강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과 제1공단 공원 조성을 결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이익으로 2500억 원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것도 민간개발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사안이지

요.

셋째, 토지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환지방식 요구에 대해서도 시장은 강제수용 방식을 택해서 업자들의 사업권 확보를 근본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넷째, 업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구획지 선택권도 요구를 했지만 이 역시 성남시의 기준에 따른 배정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다섯째, 특정 민간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요구도 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또 차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자 이재명 시장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1120억 원의 추가 공공기여를 업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간업자들이 말했지요, '이재명 완전히 공산당이다'. 극도로 반발하면서 분개했다는 것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며 사실상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 핵심 증거인 정영학의 엑셀 파일에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서 예상 분양가를 낮게 위조하면서 민간업자의 이익을 부풀려 배임이라고 그 혐의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영학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엑셀이 자기가 만든 진짜인 줄 알았다'. 이런 조작 기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조작 실태를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한번 드러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증거 또 다른 조작 실태가 있다면 그것도 드러내 보자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것도 한번 명백히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 여기서도 역시나 정말 검찰의 파렴치한 녹취록 단어 조작이 있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예행연습으로 기획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민간업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아주 표적적으로, 피고인이 될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특히 당시 이재명 시장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던 정말 참혹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거의 완전히 날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날조했던 이 부분들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간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들, 의도적으로 변조했다는 의혹입니다.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며 언급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여기서 들리는 단어를 윗어르신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윗어르신이 마치 이재명 시장인 것처럼 모종의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위변조했습니다. 그런데 원본 음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본인의 증언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이 단어는 윗어르신이 아니라 위례신도시였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지역명인 위례신도시가 인적 명칭인 윗어르신으로 둔갑이 된 것입니까? 이 사건의 배후에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허위의 인상을 재판부와 국민에게 심어 주려 한 것 아닙니까? 결코 단순한 오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디지털 녹취 자료의 본질까지도 훼손한, 왜곡한 정말 명백한 증

거조작 행위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공소취소가 안 되면 어떤 사건이 공소취소가 되어야 합니까?

위례신도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워낙 이 녹취록 조작 행위가 문제가 되니까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제기한 윗어르신 프레임이 법정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작된 것임을 사실상 자인한 꼴입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유력한 정치인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증거를 변조하고 또 그것이 들통나자 항소를 포기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지금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벌어진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조작수사들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다는 거짓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담당 검사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없는 증거를 만들고 부당한 기소를 했는지 정말 낱낱이 밝혀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한 돈을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둔갑시키고 피고인이 제출한 완벽한 과학적 알리바이를 검찰이 궤변으로 부정한 사건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바로 이 사건, 2021년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요. 검찰은 특정 일시와 장소를 적시하여서 금품 전달이 이루어졌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는데요 김용 부원장 측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통해서 해당 시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알리바이도 제공했었습니다.

검찰은 이 증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동원했습니다. 구글 서버에 직접 기록되어 수정이 불가능한 위치 데이터였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통신 튕김 현상, 미세한 튕김 현상 그런 아주 지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체 데이터의 신뢰성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엄격한 증거는 검사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피고인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까? 피고인은 반증을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소의 이름을, 똑같은 건물 안에 있는 층을 좀 다르게 표시했다고 증거조작 프레임을 씌웠는데요. 이 또한 악의적인 공격이었지요.

그런데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의 성격, 최근에서야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유동규가 성남시설공단 본부장 시절이었는데 철거업자 강철호라는 사람으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데 그 공사 수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으로부터 각종 압박과 협박을 받았겠지요. 유동규가 바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었다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명확합니다. 자금 흐름과 증언을 보면 이재명의 경선 자금이 아니고 유동규 개인의 뇌물 반환금이었고 정민용 자술서 또 남욱의 초기 조서에서도 '유동규가 업자 빚을 갚지 않으면 신변이 위험하다고 하여 돈을 모아 주었다' 이런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경선 자금으로 둔갑한 것입니까?

검찰은 증인 정민용이 김용이 돈봉투를 들고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이를 조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면서 검사의 객관의무를 역시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개

인 채무를 갚기 위한 채무변제 행위였다는 사실이 여러 관련 진술서들을 통해서 확인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비리자금을 마치 정치자금으로 바꾸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둔갑시켜서 야당의 인사를 탄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도 명백한 사건 조작이고요. 사법 정의를 정말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였습니다. 이때 개입한 수사기관들, 검사들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실태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원래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수사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 맺은 정상적인 투자계약금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금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그 프레임을 사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잡혀 있는 김성태에게 연어를 비롯한 각종 음식과 술까지 제공하면서 그렇게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그러니 진술을 조작해 낼 수밖에 없었겠지요.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위법행위들을 검사들이 자행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구치소 접견 중에 했던 말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이 돈 줬다고 거짓말하고 싶다고 토로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검사들의 수사가 집요했으면, 조작·회유가 집요했으면 이런 말까지 토로를 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서 도지사직 유지 자체도 불투명했던 시기가 2019년 11월입니다. 김성태가 거액의 방북 비용을 이때 대납을 했다? 이렇게 위태한 정치인에게 비용을 대납했다? 상식에도 맞지 않은 설정이지요.

그런데 반면 2019년에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희토류 광물 개발 등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자금이 미국 헤지펀드같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권 계약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500만 달러.

만약에 이것이 경기도의 대납금이었다면 쌍방울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물증을 무시하고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줬다는, 받은 사람은 말이 없는, 받았다는 북한은 전혀 말이 없는 정말 희대의 사건을 작출해 낸 것입니다.

김성태가 초기부터 검찰에 동조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구속이 되고 검찰로부터 그 숱한 세미나를 받으면서 진술이 변경되자 그 김성태의 변경된 진술만을 근거로 제3자 뇌물죄를 날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반인권적인 회유나 협박, 실상도 국민들에게 일부나마 알려져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이 사실상 김성태의 집무실이었다고 드러내면서 김성태 등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어회와 술을 마시면서 진술을 맞추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법무부의 최근 감찰 결과로도 실제로 특정 날짜에 외부음식이 반입된 정황이 확인되었지요. 검찰이 피해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국가시설조차도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범죄의 장소로 어떻게 악용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특히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이러한 수사 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고,

지금이라도 본인이 도대체 어떠한 위법 수사를 자행했는지를 국민 앞에 고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라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강제 수사나 징계도 받지 않은 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 검사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SNS와 유튜브 채널 출연을 하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정말로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검찰에 협조하면 구형을 낮춰 주겠다 이러한 부당한 거래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70만 달러를 필리핀에서 전달했다는 그 김성태의 주장은 당시 동행했던 여러 인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김성태의 입에서만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 형벌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원하는 진술을 생산해 내는 이 검찰의 행태가 바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수사입니다.

검찰이 국토부차관과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지워졌다, 고의로 삭제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은 '1 실거래가 제외, 2 취소 사례 반영'이라는 지시 내용만 부각해서 공소장에 기재하고 냈지만 실제 원본 메시지에는 그 바로 뒤에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면서 지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지시가 실행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이러한 결정적인 대목을 거른 채 오직 조작 지시가 관철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증거의 객관적 제시의무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또 검찰은 통계의 주중치와 확정치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용하면서 법원을 기만했습니다. 주중치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정적인 수치고요 최종 확정 과정에서 다양한 보조지표를 통해서 수정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를 보정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이 전 과정이 모두 다 조작을 한 것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이 공판 이전에 검찰과 공조해서 부동산원 직원들 각종 기관 직원들에게 가한 그 압박 수사, 정말 실무자들에게 심각한 자괴감을 안겼습니다. '자기들끼리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직원들의 탄식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 실효성조차도 마구잡이로 훼손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통계 영역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이 통계조작 사건도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간의 문제점들이 다 밝혀지면서 1심 선고가 되기 전에 공소가 취소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충직한 공무원들이 받은 피해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서 이 통계법에 대해서 제가 위헌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도 그 과정에서 제대로 내려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가 그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 해경, 감사원이 모두 다 총동원이 되어서 2년 전에 이전 정부가 내렸던 안보 판단을 뒤집으면서 시작된 전형적인 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인사들이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를 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까 앞서 살펴봤었지요. 25개 혐의가 모두 다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판단이 다소 성급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공소사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판시했습니다.

특히 모든 일련의 업무가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이 되었으며 관련 문서들이 투명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은폐 및 삭제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고도의 안보 판단조차도 사후에 사법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검찰의 시도 그리고 그 검찰을 무기 삼아서 이러한 조작을 자행했던 윤석열 정권의 실태, 정말 뒤늦게나마 우리 법치주의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당시 감사원이 저질렀던 만행, 정말 유명하지요. 유병호 사단이 감사원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결조차도 패싱한 채 이 사건 조사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 판단 번복에 맞춰서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공소사실로 규정한 조작적 공작 산물, 이렇게밖에 규정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당시 공무원들 불러다가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유도 신문을 했고 검찰은 남북관계 악재를 우려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이런 막연한 추측을 범죄의 동기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받았던 그 수모와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열심히 복무했던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받았던 압박적인 조사와 수사, 그 위법적인 행태, 이로 인한 피해 이것은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시키려 했던 이번 사건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철저히 파헤쳐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정말 역시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최대한 충실하

게 그 사건의 진상을, 법정에서 다 드러나지 못했던 내용들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언론인 기소 사건,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과거 수사 무마 의혹을 언론사들이 제기하자 이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팀까지 구성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서 기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허위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보복 기소 사건이지요. 재판 시작부터 검찰이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치적 배경 설명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면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수정 명령을 재판부가 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이 사건과 무관한 온갖 가지 추정으로 점철된 배경 설명을 통해서 재판부에게 피고인들에 대해서 왜곡된 인상을 심어 주려 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은, 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행태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검사들이 선별적으로 기소하고 조작해서 기소했던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소장 변경이 일어나는 일이 또 숱하게 발생했습니다,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서요.

검찰은 기소 후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도의 어느 대목이 도대체 허위냐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허위의 부분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3시간 30분 동안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는데 재판부가 도대체 어디가 허위냐는 거냐는 답답함을 직접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건을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하는 이런 기소를 왜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부당한 기소를 통해서 언론인들을 옥죄고 있습니까?

이 사건 본질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봐주었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를 보도한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보복적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권이 총동원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가 바로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역시 검찰의 부당한 언론 탄압 기획 의도를 낱낱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승인의 건을 저희가 안건으로 올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취지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곱 가지 사건이 지금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되었지만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실 공소 취소가 필요한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또 제가 담당했던 성남FC 사건을 잠깐만 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무려 증인이 410명에 달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의 대표들까지도 줄줄이 피고인이 되어서 법정에 서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시를 위했던 공적인 행정적인 행위가 뇌물로 둔갑했던 참 기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공소 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두산건설, 네이버 등등 기업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

원금을 내게 해서 이게 뇌물이다, 제삼자뇌물이다 하면서 기소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오히려 과거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의 유치활동 그리고 정상적인 축구단의 후원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인에 대한 부정한 대가가 됩니까? 어떻게 이게 뇌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 또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이러한 형태의 제삼자뇌물죄에 해당이 안 될 곳이 없습니다.

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별적인 기소를 강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존의 제삼자뇌물죄의 판례 법리에 따라서도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데 활용되었던, 악용되었던 이런 정치적인 기획 기소, 조작수사를 통한 기획 기소……

증인이 410명이라면요, 처음에 신청했던 것은 또 500명이 넘었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사람들이 이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1명의 성남시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무를 보았던 공무원들을 잡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쥐고 흔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흘렸던 눈물은 또 누가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었다는 기업 임원들과 실무 공무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별도로 따로 떼어 내서 기소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뇌물죄 기소를,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따로 기소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지요. 한쪽으로 모아서 함께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검찰은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정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으로 기소해서 더 큰 무엇으로 향해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은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주변 인물들을 유죄로 만들어서 야당 대표를 포위해 가고 유죄를 만든 그것을 야당 대표의 유죄 증거로 삼아서 단죄하려고 했던 정말 비겁한 소송 전략이고 또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사법적인 부담을 지우는 전형적인 쪼개기 기소, 전형적인 쪼개기 행태…… 참으로 문제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남FC 재판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증인들이 지금 증인 신문을 대기하고 있다는 그 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이 또 검사 퇴정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가 당시에 부산지검 소속인 검사가 검찰총장 명의의 일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위법하다면서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자신의 임관지가 아닌 곳에 어떤 용무가 있을 때 일일씩 직무대리 명령을 발령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의 경우에는 부산지검 소속이었는데 서울로 한 차례 직무대리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서 다시 또 한 차례 성남지검으로 직무대리 명령을 받습니다. 일일씩 말입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그 재판이 없었던 중간중간에 그 나날들에서 이 검사가 행했던 각종 행위들,

공판 관련 행위들, 내부 논의, 의견서 작성, 이 모든 행위들은 적법한 것입니까? 이 위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공판 당일에만 일일씩 명령을 받은 이 검사가 명령받지 않은 날들에 수원지검에서 함께 행했던 그 행위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바로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도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그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인데요. 검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할 외의 직무수행은 수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것이 법에 담긴 문언입니다. 즉 공판을 관여할 목적으로, 수사가 아닌 공판을 관여할 목적으로 관할을 벗어나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또 검찰청법 제34조도 볼게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편법적인 직무대리 명령을 발령하면서 사실상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명백히 침해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검사를 A라는 곳에서 일하게 했는데 임의로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서 사실상 발령받은 A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곳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 이게 적법합니까? 만약에 현행 검찰청법 등 법의 미비함이 있다면 이것은 법 개정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현행법이 있는데,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현행법을 어겨 가면서 유지했던 이 관행, 왜 그런 관행이 존재했습니까?

이 검사가 당시 성남FC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명백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지난 시기 우리 형사절차의 어떤 개정의 방향과도 명백히 반하는 그런 행위를 암암리에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 직무대리, 중복 직무대리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당시의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편법과 불법이 형사절차에서 철저하게 제거되어야지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에도 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이 되고 검사의 객관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는 법정에서의 결과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법부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검찰은—이제 곧 공소청이 될 텐데요—이러한 부당한 형태의 절차, 부당한 형태의 편법과 왜곡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검찰의 편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탄을 합니다, '사안이 복잡해서 그 검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파견을 하라'. 기초적인 절차법조차 무시하면서 공소유지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이 기소의 정당성이 없음을 자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법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사명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1년이 다 돼 가도록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재판 그것이 바로 이 성남FC 재판이었습니다. 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느냐라는 변호인들의 수차례의 호소와 촉구와 의견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다가, 정말 재판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다가 겨우 열린 공판정에서 벌어진 일들 또한 이런 절차 무시, 편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국정조사 7대 사건에 들어간 사건은 아니지만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여전히도 사법 절차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성남FC 사건이야말로 공소가 취소되어야

하는 중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미 그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건 과정에서도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기소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었지요.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8년 재판 당시에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그런 진술이 이재명이 대선후보로 부상하고 나니까, 야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형사 소추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진정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면 왜 당시 수사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4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위증교사 혐의를 들고 나온 것은 역시나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경과를 보면 무리한 검찰 기소였다는 점이 드러나지요. 재판부가 다행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복해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건들이 향하는 곳이 일관됩니다.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국가의 권한을, 국가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들, 이것이 공권력 남용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공소권 남용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쪼개기 기소, 주변인들에 대한 정말 참혹한 수사, 단 한 사람을 향해 가는 이러한 수사, 이 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이 조작되고 진술이 조작되고 세미나를 통해서 재탄생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습니까?

국정조사 요구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검찰은 하나의 공소사실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쪼개기 기소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하중과 고통은 배가 됩니다. 과도한 사법적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야당 대표의 정치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에게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렇게 사법리스크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중요한 자리를 맡길 수 있느냐는 이런 식의 낙인을 반복적으로 찍기 위한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런 기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서 정말 검찰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세 사건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들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현재 재판이 정지된 상태지요. 그러나 재판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이러한 일련의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인 기회, 증거 조작, 쪼개기 기소, 이런 조작적 행태가 있었다면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규명해서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사명이 우리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저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태는 단순한 수사의 오류가 아닙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검찰권이 특정 정치 세력을, 특정 사람들을 수호하고 반대로 그 주장에 반하는 세력을 궤멸시키기 위한 조작의 칼날로 전락한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비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찾아내는 곳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짜고 그 각본에 따라서 진술을 짜맞추는 조작 공장이 되었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 전체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 만행,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각종 회유와 협박,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이런 형태의 국가기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검사실이 범죄 피의자의 개인 집무실이 되고 술과 각종 음식으로 판을 벌이면서 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진술을 맞춰 갔던 세미나장이 됐다는 이 전대미문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검찰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검찰은 이미 과거에도 무리한 기소로 정말 수많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폐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검찰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러했고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무죄판결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공소권 남용 판결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판결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잘못이 교정되는 그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객관 의무가 있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무엇보다 중요한 그 객관 의무를 저버린 이러한 행태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작적인 수사와 조작적인 기소를 자행했던 검찰은, 검사는, 부역했던 사람들은 그에 맞는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지금껏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그들이 행해 왔던 그 숱한 위법한 행위들……

역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동시에 통제하면서 어떤 사건은 기소하고 어떤 사건은 기소하지 않을지를 결정해 오면서 사건의 구조적인 실체보다는, 진실보다는 정치적 상황이나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건이 움직이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양산해 온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도 자체의 문제는 이번에 통과시킨 법들을 시작으로 해서 단초는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이름표를 바꾼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인 검찰의 오남용 폐해가 그 자체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개편의 단초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과거의 수사와 잘못된 기

소의 사례가 제대로 사필귀정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내란정권 시기에 제기된, 발생한 정치적 기소 논란, 표적수사 의혹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깔끔하게 짚고 갑시다. 검찰의 기소권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힙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고 또 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검찰과거사위원회 같은 조직도 꾸려서 과거의 검찰의 오명을 벗어나도록 합시다.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소는 신속하게 정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밝혀서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침묵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으시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3월 19일에 국정조사에 참여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면서 국정조사특위 명단을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린 첫날 출석하지 않은 채 피켓을 들고 1~2분 시위를 하시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태도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명단은 제출해 놓고서 정작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막겠다면서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 아닙니까?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우리의 헌법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의혹처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에 직결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투명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획서 채택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것이 결국 시간을 끌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그러한 안 좋은 정치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열되 조사는 하지 말자 이런 것입니까? 이건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는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 뿐이고 국민 앞에서 정말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이렇게 막으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조사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십시오.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놓고 정작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명이 남아 계십니까?

동료 의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과정을, 이러한 반복적인 시간 소모를 해야 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번 국정조사의 7대 사건, 이 사건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치검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사건을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작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법정의의 실현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도 국정조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끝까지 진실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맹성규 이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민전)

(13시45분)

○의장대리 맹성규 다음은 김민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민주화 40년 만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경제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일쇼크 그리고 외환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은 도미노 부도 사태가 났고 직장인들은 대규모 해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환율 1500원대가 뉴 노멀이 된 지금,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환율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과 같은 외환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그 부작용이 국민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물가의 고통을 국민은 이미 겪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전쟁과 자원의 무기화로 인한 오일쇼크,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산업계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국민들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환율 급등과 오일쇼크가 동시에 오는 더블 쇼크, 이중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정부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당연히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대통령 자신의 형사 문제, 즉 공소 취소에만 전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국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그 성격까지 조작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영역에 대한 개입이며 중대한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6000의 목표를 제시하며 주식 리딩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에 국민의 시선을 뺏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는 생활고와 돌봄의 부담 속에서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긴 것은 17만 원의 외상값이 전부였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월세와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한 가족이 사회와 단절된 채 삶의 끝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삭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시도가 말이 되느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2026년 3월 4일 해외 순방 중에는 수사·기소권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강도·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아가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영역에 대통령이 직접 판단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3만 4754명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누적 초과 사망자 수는 7만 3129명에 달합니다. 코로나 사망을 넘어서는 규모의 원인 모를 사망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보다 백신접종 사망자 수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가,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가,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와 남편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 갔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물질 백신 사태보다 더 시급한 국정조사가 과연 있겠습니까? 여당은 이물질 백신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개인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얼마나 오만하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몰아붙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저는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안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의힘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정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개악, 사법파괴 3법, 다시 말하면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 헌법소원법과 각기 따로 노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법체계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짜여진 하나의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입법행위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오직 특정한 한 사람, 이재명을 법의 단죄로부터 구하겠다는 노골적인 실행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사부터 기소 그리고 마지막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모든 단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법왜곡죄가 되겠습니다.

법왜곡죄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사나 판사들을 향해 말 안 들으면 처벌하겠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왜곡죄가 사법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이미 그 부작용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이 이미 사법부의 수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법의 첫 번째 부작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왜곡죄 도입 이후 발생한 1호 사건의 피의자는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법왜곡죄 때문에 현직 대법원장이 범죄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촌극, 아니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명백한 보복성 수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피의자가 된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 즉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법왜곡죄의 피의자가 된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은 법관은 누구든지 그것이 마치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경고이자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압박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이 자신을 심판하는 판사를 고발해 수사를 받게 만드는 상황, 이것은 분명히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재판부들이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동료 판사가 수사받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법왜곡죄의 진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왜곡죄가 재판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는 사법 협박, 이것이 바로 법왜곡죄의 실체이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부 여당은 이미 최종 재판부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얼마 전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최종심을 장악한다 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인적·구조적으로 이제 이 대법관 증원법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신속한 재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마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고 해서 재판이 신속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이 본인의 임기 내에 대법관의 85%를 직접 임명하는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만들겠다 그 의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임명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법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의 사유화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에 대한 보복이자 장악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했던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어서 자신을 심판할 최종 심판자를 직접 선발하여 사법적 면죄부를 확정 짓겠다는 그런 치밀한 계산이 여기에는 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 재판헌법소원법의 통과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법원까지 장악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혹시 모를 변수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확정 판결까지도 취소할 수 있는 재판헌법소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소위 제4심을 구축해서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종료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원칙을 깨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 자체를 다시 심사하여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종속시키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입법권을 남용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시도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측근들의 유죄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등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유죄판결들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바로 이 유죄판결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재판 헌법소원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판결을 취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향하는 유죄의 증거 고리를 끊어 내리는 헌법적 도구가 바로 이 4심제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셋째, 법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본권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자신과 연루된 모든 확정판결을 파기하여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 법은 확정된 진실마저도 부정하겠다는 선포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도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법개악, 사법파괴 3법만 해도 이미 사법부는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국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바로 사법파괴 3법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판 헌법소원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이 국정조사를 남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살펴보면 첫째, 국정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특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작으로 몰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국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를 특정 개인의 변론을 위한 제2의 법정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적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이 국정조사는 이미 내려놓고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는,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정치 선언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면 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유죄판결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판결들을 정조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대장동 유죄판결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판결 등 이를 취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사법파괴 3법은 1단계 법왜곡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의 증원 그리고 4심제 도입 그리고 오늘 상정된 국정조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의도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왜곡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재판 헌법소원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제도를 가동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

다.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죄도 다 없애는 것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설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2026년 3월 11일 자 논설이 되겠습니다. '거래설까지 제기된 공소취소 논란, 李가 자제시키길' 이렇게 제목 잡아 있습니다.

검찰 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넘어 현직 대통령의 과거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정치적 거래설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논란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그동안 친여 나팔수 역할을 해 왔던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이라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편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에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받아 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과 보완수사권 유지 기류에 반대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와중에 그제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제기한 거래설은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며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 팩트다'라고 했다. '검찰은 수뇌부가 공소취소를 해 주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친명계는 출처도 없는 음모론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이 어제 특검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소취소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거대 집권 여당이 사법 절차에 개입해 재판 중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리하겠다며 실제 행동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 사건인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미친짓—저도 미친짓이라고 생각합니다—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공소취소 추진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에 연연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방탄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더는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민주당에 공소취소 작업을 중단하고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는 언론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정의를 무력화하려는 공소 취소용 방탄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다뤄지고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끌고 와서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국정

조사로 겁박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법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사설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당과 국회의장이 합심한 공소 취소 국정조사 강행, 역풍 없겠나', 2026년 3월 19일 한국일보 사설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이르면 19일 국조 실시계획서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조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 국조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고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2시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17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보냈다. 여당과 국회의장이 속도전을 위해 합심한 모양새다.

역대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여야의 합의를 추구하고 또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원식 의장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 일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겠지요.

민주당이 정한 국조 대상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3개의 사건이 포함돼 있다. 국조 후 필요시 특검을 거쳐 조작 기소 의혹이 밝혀지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대통령 1인을 위한 국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과오를 청산하기 위한 국조라는 민주당의 설명은 허술하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조 추진위'라는 당 차원의 조직이 있는 마당에……

이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바로 이 국조 추진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라는 의도를 가지고 다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국정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여야 합의와 협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다. 여야 합의 없이 국조가 실시된 것은 1999년 IMF 환란 관련 국조가 유일하다.

그동안 국조는 환란 국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야가 합의한 국조였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조의 정치적 정당성과 국회 운영의 중립성 차원에서 우원식 의장은 여야 합의를 위한 중재에 끝까지 힘을 쏟기 바란다.

이미 배는 떠나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까지 이미 중지된 상태이다. 정치권에서는 퇴임 후 사법 리스크 해소가 이 대통령의 최대 고민이라는 얘기가 오르내린다. 여당이 각종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사정도 바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대장동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몸통은 바로 현직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말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2021년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 이 설계를 내가 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다 설계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도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금액은 7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금 액수가 19억이었습니다. 로또 1등을 410번 당첨되어야 하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동산 개발 비리 범죄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대장동의 설계자가 과연 책임이 없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7800억 원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고 또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범죄자 집단이 쓱싹 다 먹은 구조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장동 1심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의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 실무자인 정민용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며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대장동 1심 판결문 404쪽입니다.

이미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이것이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그들의 사업 기여도를 훨씬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취득했고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행위는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로 엄단해야 할 공익성,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판결문 405쪽입니다.

이미 엄청난 개발이익이 생겼고 그 개발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가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개인들에게 이 개발이익이 독점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것이 법원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시절이던 2014년에서 2015년 분당구 대장동 일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정한 민관 결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대장동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약 390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390여 회나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조작기소인지 이것이 조작인지 국민들은 저는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등에 공공개발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2010년 10월경 유동규를 공단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한 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추진 및 공사 설립 등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기면서 성남시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자신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부여

하였다. 판결문 416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규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직접 권한을 준 것이 이재명과 정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1심 판결문은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단 본부장 유동규에게 대장동 등 업무를 맡기면서 공단 이사장의 권한인 직원의 임용 및 인력관리 업무를 기획본부장 권한으로 변경하고 인사규정에서 기획본부장의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했다. 피고인 유동규가 공단에 대한 실질적인 장악력을 확보하게 했다. 대장동 1심 판결문 81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유동규가 공단의 실질적인 지배를 가능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을 돕는다는 사실 그리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대장동 1심 판결문 137쪽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도와준 바가 있고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주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남시 수뇌부는 알고 있었다. 이때 성남시 수뇌부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지역 토착 개발업자와 비리 정치인들이 허가권을 매개로 결탁해 성남시민들에게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당시 성남시 총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비리의 중심에 있었다는 판결문상의 인정이 수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을 본다라고 하면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과 정진상의 책임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2022년 10월 24일 사설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장동 핵심 ‘이재명 모를 리 없어’, 그런데도 ‘정치탄압’인가”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지은 죗값은 내가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씨는 작년 대선 국면에서 8여억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을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표가 불법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검찰에서 다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릴 수가 없으니 두려울 것이다, 돈을 요구해 실컷 받아 쓸 땐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느냐고 유동규 씨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대표 측근들이 휴대폰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 증거인멸 행위를 하라고 해서 했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이 수천억 원대의 특혜를 받도록 사업설계를 해 준 핵심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부분이 있고 그 책임은 이 대표가 져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는 이 대표 측근의 요구에 따라 대선자금이 오간 것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지시로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김용 부원장은 유 씨에게 돈 받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2022년 칼럼이고요. 이미 김용은 유죄판결을, 아직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받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지요.

이 대표는 '검찰과 유동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나를 엮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일부러 조작해 만들어 낼 이유가 있겠는가. 이 대표는 의혹이 나올 때마다 유 씨와 검찰, 여당 등에 책임을 돌리며 정치 탄압이다, 조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2022년부터 바로 이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국정조사에서도 이 조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획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장동 의혹이 터졌을 때는 '내가 다 설계했다'고 했다가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대면보고를 받고 여행까지 함께 간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까지 된 것이다, 이렇게 칼럼은 적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계속 읽지는 않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는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토착비리 사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이 시작은 토착비리 사건이었으나 이제 독재권력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회의 의석수를 동원해 재판을 흔들고 사법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고 있는 절차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권력과 의석수를 이용해서 국정조사로 모두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대장동 1심과 관련해서 상당한 재판 판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선고 결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징역 8년 선고하면서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액수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징역 8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얘기하는 것에,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상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도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겠습

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걸 다 합친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7800억 원, 검찰이 구형했던 7800억 원보다는 아주 작은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형량 자체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검찰의 기소가 상당한 증거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검찰 스스로가 얘기한 것보다, 검찰 스스로가 구형했던 7800억 원의 추징금보다 선고된 추징금이 작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은 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항소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사·공판팀은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즉각 항소 준비에 들어가서 2025년 11월 7일 오후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었고 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도 이 판결이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에는 못 미친다라는 생각에 항소를 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항소 준비를 2025년 11월 7일 오후까지 다 마치고 중앙지검의 결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 자정을 불과 7분 남기고 대검이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뒷배에는 항소 포기가 필요하다를…… 세 번이나 보고를 받고도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 말 듣고 과연 대법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정성호 장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조차 조직에 대한 항명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18명의 검사장 중 3명을 법무부는 지난 12월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또 올해 초 다시 4명을 추가로 좌천시켰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말이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 봐라고 하는 얘기였다라고 하면 항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낸 검사장들을 왜 좌천시켰는가? 본인의 의도가 항소 포기였기에 이들을 좌천시킨 것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2025년 12월 13일 사설 하나 읽겠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냈다. 좌천이다. 이들은 검사장 18명이 항의 성명을 냈을 때 발표를 주도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또 현 정권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또 다른 검사장 1명은 고검 검사로 강등시켰다. 좌천된 검사장 3명 중 2명은 사의를 표명했고 강등된 검사장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왜 이렇게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검사들이 왜 목소리를 안 내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좌천당하고 그 좌천에 불복해서 또 사표를 내고. 이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도 얘기했지요. 젊은 검사들

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들은 검찰을 떠나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만 남는 것은 아닌가.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태가 지금 현재 검찰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소 포기의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이 항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명서에서는 왜 이것을 항소 포기하는지 경위를 설명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항명이라고 낙인 찍은 것입니다.

검찰은 애초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정성호 법무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됐다. 지금 정부 여당은 공무원, 군인 등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검찰청법에서도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항소 포기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검사장들의 성명서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들을 강등 좌천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한 목적은 검사들을 향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하라, 거기에 반기를 들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좌천 인사를 당한 검사장은 사직 인사 글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들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

그렇습니다. 권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점점 더 집중시키려고 하고 집중된 권력은 점점 부패해 간다 이게 권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이고 뒤로는 권력 보호이다. 더더욱이나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정부, 전과 22범의 정부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느 정부보다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지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민주당은 저항하는 검사들을 손보겠다며 이미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호를 받는 검사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점점 바른 소리를 하는 검사는 사라져 갈 것이다.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검사는 사라져 갈 것이다.

앞에서 이수진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서도 검찰청에도 과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도 일견 검사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역대 다른 정권들과 크게 다른 점은 불의를 저지르고도 당당하며 심한 경우에는 당당한 정도를 넘어서 공격적이기까지도 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칼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주요 검사장들은 성명서 작성 당시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검찰

청법 제7조에 의하면 검사는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법과 양심에 따라 같은 검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에게 이재명 정권은 징계로 되돌려줬고 이에 적지 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상당수가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 대장동 비리, 백현동 의혹, 쌍방울 불법송금 등 5건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검찰 인사가 몇 번 더해지고 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검찰청에서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 사건을 잘 아는 검사들이 다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 의회, 국회의 몫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에게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입법부가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 사설 하나 더 읽겠습니다. 국민일보 2026년 2월 24일 자 사설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소위 공취모가 어제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60여 명이 참석했고 참여 의원은 105명에 달한다. 사실상 당내 최대 규모의 모임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간사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결과물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가 유지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공소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재판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가 유지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마치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지만 이것은 퇴임 이후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취모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위증교사 등 8개 공소 사실이 정치적 목적의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판 중에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공소 취소의 파장은 단순하지 않다. 한 번 취소되면 재판은 즉시 종결된다. 증거를 둘러싼 다툼도, 상소 절차도,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판단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일거에 정리된다. 그 점 때문에 더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이 필요하다.

범여권 인사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공취모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은 거칠지만 문제의식은 명료합니다. 공취모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하면 재판을 통해 그 조작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위법 수사

라면 국정조사와 제도 개편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공소 사실 자체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주장이다. 보수 진영이 전국을 순회하며 공소 취소 요구 집회를 하고 집단 압박하겠다는 것은 입법부 외피를 쓴 범죄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어폐가 있다. 물론 조작이라는 말은 그것이 정말 조작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밝혀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재판 중인 사항을 국회로 가지고 오는 것도 옳지 않지만 또 다른 편에 있어서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이라고 하는 상투적인 용어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사건의 원활한 공소취소를 위해서 관련 공범들을 속속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보석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 대상에 이 사건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면서 이것도 조작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들어 보시면 이것이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않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1심 유죄가 나왔고요.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2025년 2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 7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심과 2심이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의 단죄를 받으며 자숙하나 했던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라고 하면 조용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용 전 부원장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보

석은 어디까지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석방이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아무 죄도 없는 듯이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있고요.

저는 특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뇌물을 받을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는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북콘서트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 등 수십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야말로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성남시장의 왼팔·오른팔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들은 김용 전 부원장의 결백을 공개적으로 응원하면서 대법원에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북콘서트에 참석해서는 안 될 분들이 몇 분, 정말 이분들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리더십 모델은 영국을 따라가고 있다, 영국 리더십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하도록 하고 있는 의회는 영국 의회고요.

영국 의장의 경우에는 당적을 단순히 이탈할 뿐만 아니라 정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과의 식사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모임, 단순한 의원들과의 식사 모임 이런 곳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석 중인 김용 부원장의 북콘서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영국의 모델을 따라서 국회의장의 당적을 이탈해서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의 의사진행을 하라고 하는 원칙과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육감 출마자들이 김용 전 부원장의 북콘서트에 참석을 한 사진들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 여겨서 당적을 가지면 교육감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 여겨서 당적을 가지면 출마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보석 중인 여권 실세의 북콘서트에 교육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석했다, 이것도 교육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 사설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2026년 2월 14일 사설이 되겠습니다. ‘징역 5년 최측근 출판기념회 민주당 의원총회를 방불했다’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징역형 보석 중에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현역 의원만 50명 넘게 모였다고 한다.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다고 인사말을 했을 정도다.

김 전 부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 고맙다라는 얘기기도 하지만 ‘나의 영향력이 이 정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개인 행사를 열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막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

을 합니다. 출판기념회에서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바로 국회의 신뢰를 갉아먹는 것이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보석 중인 분이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출판기념회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행사장에서는 '김용 무죄'라고 하는 구호가 나오고 참석자들은 그를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고 했다. 우 국회의장은 '김 전 부원장이 꿋꿋이 버텼다'라며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다'라고 했고, 한 원내대표는 '설이 끝나면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확실히 해서 우리 김 전 부원장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다.

오늘 이 자리의, 국정조사의 목적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법원의 판단과 달리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 무죄를 외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김용 무죄를 위해서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공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김용'이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은 '아무리 짚어 봐도 무죄'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님은 별명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동규 씨 등 관련 인물이 이 사실을 인정했고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 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다시 말해서 이 유죄가 단순히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증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심·2심이 다 유죄가 인정되고 법정 구속됐다.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수사 대상은 불법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부원장을 언제 봤다고 '김용 무죄'를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김용을 위해서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바로 정치자금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정권 교체 직후인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나더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숙하기는커녕 구치소 밖에서 여당 의원이 대규모로 모인 출판기념회까지 연 것이다.

보석 중인 피고인은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법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김 전 부원장과 같은 행동은 보석취소 사유가 되고 재수감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겠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설도 나온다. 지금 법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 앞의 평등이 법치의 핵심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등했다. 어떤 사람은 법 위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용 부원장의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진상 씨,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법원이 정 전 실장에 대해서 보석 조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정진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입니다. 대장동 1심 판결문에서 성남 수뇌부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과 인가,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정진상이 중간 결재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최종 결재하는 등 사실상 대장동 사업 설계의 핵심 연결고리였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폰 버리기 17분 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휴대폰을 버려라' 이 얘기를 정진상 실장이 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작년 9월 법원이 보석을 해 주면서 그 조건으로 자정 전 귀가 조항을 삭제해 줬고요. 올해 3월에는 기존의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라는 보석 조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로 완화시켜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석이 되었을 때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건 관계자와 만나서 입을 맞추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와 만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보석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취하해 줬다.

법원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물렁물렁해졌는가. 그렇지요?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가운데 법원이 물렁물렁해졌다 이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 준 것은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도모할 기회를 열어 준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총동원되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공범자들의 죄까지도 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장동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1심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다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 핵심 수뇌부에 해당하는 정진상, 김용 부원장 등도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죄판결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조작이라고 얘기하는지 대다수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자들을 무죄로 만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에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장동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이 부분을 되돌아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사건의 실체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일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서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이화영 부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농촌 지역에 스마트팜, 다시 말해서 지능형 농장을 지어 주겠다, 그 비용은 500만 달러, 스마트팜을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큰소리를 칩니다. 5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요.

그러나 그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의 공식 예산으로는 단 1달러도, 단 1원도 북한에 합법적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법을 지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이 없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500만 불을 보낼 수 없는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는 이 사태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영역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공식적인 외교라인으로는 단 1달러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해결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사가 바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일명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이 되겠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북한의 대남공작 소속 고위급 인사들과 선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안부수 회장의 주선으로 2019년 1월 중국 심양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북한 측 고위 인사들 그리고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이 참석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부지사가 사기업 회장을 데리고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다 이것도 부적절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김 회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보내 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독점적 사업권과 이권을 쌍방울이 챙길 수 있도록 확실이 밀어 주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국가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이렇게 기업과의 유착을 통해서, 정경유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일입니다.

김성태 회장은 이 위험한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이 50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중국과 마카오를 거쳐서 북한에 보내는 것은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은 그룹 직원들을 이용해서 일명 환치기, 쪼개기…… 참, 이재명 지사의 근처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상천외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환치기, 쪼개기, 밀반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회사 지시를 받고 책갈피 사이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빳빳하게 끼워 넣거나 여성용 화장품 케이스 안에 내용물을 파내고 그 안에 달러 다발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또 속옷 안주머니에—과거에 할머니들이 이런 주머니 많이 만드셨는데요—달러를 꿰매 넣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쌍방울 직원들은 인간 달러 운반책, 외화 반출책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과 마카오로 가서 돈을 모아서 북한에 넘겨주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벌써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작일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직원들의 출입국 기록, 환전 기록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들 본인들이 외화 밀반출책이 되었던 그 생생한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탔던 비행기, 출입국 기록, 환전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없는 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조작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화영 일당은 이 500만 불을 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력한 대선주자로 키우기 위해서 평양 방문을 추진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대가로 이른바 의전 비용, 헬기를 태우고 퍼레이드를 하고 인원을 동원하고 하는 명분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300만 달러는 역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그 직원들이 동원돼서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도합 800만 달러가 됐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검은 돈이 경기도지사의 치적과 방북이라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을 위해 북한의 검은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이 800만 달러가 미사일 발사에, 우라늄 채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이 엄청난 범죄 행각에 꼬리가 잡혔고 관련자들은 구속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더불어민주당과 이화영 씨 측에서는 사법부를 조롱하고 검찰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검찰청 창고에서 연어·소주 파티를 벌이며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라는 거짓말도 지어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어·소주 파티보다는 박상용 검사의 검사실을 세미나실로 이용했다—레파토리가 약간 바뀌었지요—범죄 피의자의 구치소 면회실에서 자기 지인에게 했던 개인적인 푸념, 출처도 불분명한 카더라 통신을 대한민국국회가 국정조사 근거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들의 옥중 수다를 근거로 국가 수사기관을 난도질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의 페이스북에서 박상용 검사의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 드릴 것은 이건태 국회의원의 2026년 3월 8일 자 기자회견 관련 박상용 검사 입장이라고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의 요지라고 박상용 검사가 쓰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박상용 검사의 사무실인 수원지검 1313호실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처럼 사용되었다—이때는 집무실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최근에는 세미나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313호실에서 김 전 회장이 업계 지인과 쌍방울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쌍방울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지시를 하고 회의를 했다라고 이건태 의원이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23년 2월 23일 자 및 2023년 5월 15일 자 김 전 회장의 구치소 면회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라고 박상용 검사가 기자회견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상용 검사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검사 박상용은 이건태 의원의 주장처럼 수원지검 1313호실을 김 전 회장의 집무실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위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전 회장이 1313호실에서 만났다는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들일 뿐 수사 외의 이유로

소환된 사실이 없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관계자들을 소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위 인물들은 모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의 증인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쌍방울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의 증인으로 적시되었고 이화영 부지사는 그 판결에서 유죄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정당한 수사, 재판 과정을 도외시한 채 한 장 분량에 불과한 개인적인 사담인 면회 녹취록의 일부 표현을 침소봉대해 왜곡·과장하는 것일 뿐 실제 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인 것입니다. 위 녹취록은 6개월 전부터 입수하여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수사팀의 세 번에 걸친 조사에서도—박상용 검사가 서울고검에 세 번의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여기서도 관련 질문을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1313호실이 김성태 회장의 집무실로 사용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대화 맥락과 수사, 재판의 경과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혹 제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 녹취록에 기반하여 제기되는 의혹들 자체도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분명 2023년 3월경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자백 압박을 무섭게 하여 김 전 회장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 직전에 검사가 해당 검사실을 김성태 집무실로 내주는 일종의 집사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김성태를 검사가 너무 무섭게 압박해 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허위자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1313호실을 집무실로 이용하게 하는 등 집사의 역할을 검사가 해 주고 김성태 회장이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박상용 검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제기한 의혹들은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재판 및 이화영 국회 위증 등 국민참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다. 국민참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야 결국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유리한 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검찰 또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달성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상용 검사 페이스북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북송금 기소는 확정이 안 됐으니 재심이 아니라 공소취소밖에 없다. 이것은 전혀 아니다. 차라리 재심을 해 달라. 법원이 판결하게 해라. 그게 위헌·위법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박상용 검사의 주장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는 북한에 800만 불이 허가 없이 보내졌다. 외환 밀반출을 통해서 북한에 800만 불이 보내졌다. 이것은 이미 법원이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500만 불은 경기도가 북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고 300만 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었다. 이렇게 법원은 이미 확정했다.

돈은 이미 갔다.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그리고 방북 비용 300만 불. 이미 돈은 갔다.

그리고 돈이 가는 데에는 합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화 밀반출을 통해서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쌍방울에서 그 돈을 제공했다. 이것은 이미 법원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 또는 재판 중단된 대북송금 사건은 위 확정판결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800만 불의 성격이 제3자 뇌물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돈이 간 것은 맞는데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확정돼 있는 전제인 이화영 부지사 판결에 대한 취소 없이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돈이 간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확정된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때문에 민주당 등에서의 주장은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기소는 공소 취소하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은 이화영 부지사를 사면하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아니,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당시 이재명 지사는 공소취소가 될 수 있고 이화영 부지사는 사면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는 돈을 허가 없이 북에 보냈고 그 이유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이었다는 확정된 불법 사실을 그대로 두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일종의 법적 모순 상태를 일부러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법은, 법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박상용 검사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정상적인, 법적인 방법을 좀 사용해 주세요’라는 게 박상용 검사의 호소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확정 판결에 대해 검찰이 조작수사를 이유로 재심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조작수사를 했다고 국정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세요. 검찰이 그것을 조작한 것입니다, 조작수사했습니다 하고 재심을 받으세요’라는 게 박상용 검사의 호소입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확정 판결이 취소되고 이화영 부지사는 무죄로 석방됩니다.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공소는 그 자체가, 그 전제가 800만 불의 성격이 무너지니 당연히 근거가 없어서 공소취소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재심을 왜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조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재심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상용 검사가 주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정말 조작이라고 한다면 재심 전문 변호사들 얘기도 있고요, 많은 재심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재심을 청구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화영이 무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검사의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재심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게 박상용 검사의 얘기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행정부의 최고위직들이 이런 법치의 죽음을 주장하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단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권력자의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점의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페이스북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린 것입니다.

‘이건태 의원님, 이참에 녹취록을 다 공개하시지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태 의원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의 극히 일부를 근거로 제가 한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셨지요? 이참에 그 녹취록 전문을 전부 공개하시지요. 안 하시겠다면, 아니 못 하시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건 어떤 말이건 전체 글을 다 보지 않고 일부를 따와서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박상용 검사는 ‘그 부분의 일부를 따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마이뉴스를 필두로 이건태 국회의원까지, 박상용 검사가 조작수사를 했다는 둥, 검사실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로 제공했다는 둥 사실과 다른 주장 하면서 무슨 대단한 자료인 양 법무부 특검점검팀 자료를 조금씩 잘라서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일부만 보게 되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주 일부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저도 최근에—저는 박상용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도 최근에—시중에 유출되고 유포 중인 1600페이지의 자료 전부를 확보해서 읽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읽다가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읽어 보니 이 자료들 상당 부분이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조작수사 운운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 있더군요. 이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김성태 전 회장의 구치소 녹취록입니다. 녹취록 전부를 읽어 보니 김성태 전 회장은 저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는 내용이 전혀 없더군요. 거꾸로 자신이 저로부터 수사받은 과정에서 사안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고’, 김성태 전 회장의 구치소 녹취록에서 김성태 회장은 나는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 이화영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가에 대해 아쉬워하는 내용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영도 이제 진실을 얘기해라, 이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기사화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의원님, 왜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시나요? 선택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라는 게 박상용 검사의 질문입니다.

‘저는 공소취소 모임을 이끄시는 이 의원께서 당당하게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록 일체를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정조사도 하신다는데 주권자인 국민들께 그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이 의원께서 끝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으시겠다면 제 변호인과 상의해서 제가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작을 했다, 진술을 맞췄다 이 말은 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사법부의 판결들이 상당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했다라는 그 시점보다 훨씬 전인 2023년 5월 제가 앞서 반드시 기억해 달

라고 말씀드렸던 핵심 브로커 안부수 아태협 회장,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관련자는 이화영, 김성태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들도 있지만 그 브로커 역할을 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있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여권에서 주장한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했다라고 하는 이 시점보다 훨씬 먼저 이미 법원에 의해서 3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부수의 판결문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냈고 피고인이 그 과정을 중재했다라고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팩트는 이미 판결을 통해서 나와 있다, 안부수의 판결에서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보냈고 안부수가 그 중개인 역할을 했다라는 판결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화영의 판결에서도 이미 800만 불의 송금 그리고 밀반출, 북한에 전달을 명확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배달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 돈을 보내게 만든 지시자들은 무죄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현실적인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지사도 마찬가지지요. 2024년 6월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선고를 했고요. 판결문 60페이지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500만 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 맞다라고 확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2심에서도 이화영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유지되었고요. 2025년 6월에 있었던 대법원에서도 이 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심, 2심, 대법원 다 이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진실을 부정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면서까지 국정조사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게 저의 질문이고요.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시대라고 한다면 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중 쇼크, 오일 쇼크와 그리고 환율의 상승으로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 순간에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설 하나 읽겠습니다. 2025년 6월 17일 사설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조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5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조작됐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의 사실 왜곡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 의원은 북한에 일부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들이 다 바보다라는 말과 다름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사가 이렇게 사건을 조작했는데 판사들이 바보여서 그것을 다 인정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 사이 내분으로 진술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이 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대납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1심, 2심, 3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렇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수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명백한 사실 증거가 없으면 결코 유죄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중형을 선고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쌍방울의 전 대표와 임원 등 관련자 모두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도 당초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그 번복 과정도 아주 요란했던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명백한 증거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이 검찰과 한통속이 돼 조작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라고 했다. 사면도 요구했다.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주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은 뭔가. 정치인들이 사법을 흔드는 일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 범여권에서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사법탄압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온다'. 여권 정치인 하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전 장관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 전 대표 모두 검찰의 표적수사 때문에 희생됐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의문의 여지 없는 증거들에 의한 판결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박 모 씨의 전화 녹취록 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일선 법원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자 판사를 탄핵소추했다. 탄핵 사유나 과정이 모두 엉터리였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됐다.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면 이런 사실 왜곡, 막무가내 행태는 벗어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그 힘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는 80년대에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도덕성, 정치의 도덕성을 부르짖었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고 한국의 법치가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이 사기업과 지방정부의 결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부처 전체가 한통속이 되어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대한민국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끔찍한 국정농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가장 나쁜 거짓말이 뭐냐, 그것은 통계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통계는, 많은 사람들이 통계 수치를 얘기하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조작해서 그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는 정말 나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신뢰 자본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형적인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많이 쓰고 많이 쓰면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소득이 더 많아진다 이런 논리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아주 급격하게 인상했고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오스크가 갑자기 많이 보급된 것은 바로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자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서 키오스크를 대거 사용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 밥집이라고 한다면, 식당이라고 한다면 점심시간 근처 일하고 중간에 휴식하고 저녁시간 근처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시간 수를 확 줄여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최저임금을 같이 올려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득입니다. 그러나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있으신 분들, 자영업에 고용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용을 대거 줄이고, 예를 들면 편의점 하시던 분들도 밤에 아르바이트 쓰시던 분들이 밤에 아르바이트 쓰지 않고 그냥 밤에 문 닫고 혹은 본인이 혼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 게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엥겔계수가 높기 때문에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소비가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선순환한다 이런 주장과 달리 실제는 가난한 분들이,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가 혹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것이 바로 이때이고,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빈부격차 통계가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로 벌어졌고요. 그러자 그 당시 국가 통계 책임을 맡고 있던 황수경 통계청장은 이 참담한 현실을 원칙대로, 있는 대로 투명하게 발표했습니다. 국가 통계는 정권의 홍보물이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을 마구 올리고 나서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일자리가 더 줄었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줄이는 게 처방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통계를 고치는 것으로 처방을 삼았습니다.

결국 2018년 8월, 임기가 한참 남았던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했고요. 이 말 안 듣는 진실한 공직자의 목을 날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사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수경 청장이 이임식 날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얘기를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뇌했을까,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한마디에서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황수경 청장을 해임했고요. 그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와 소위 코드가 맞는 강신욱

청장을 앉힙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가 원하는 통계를 강신욱 청장이 만들어 주기를 아마 바랐겠지요. 또 강신욱 청장은 자신의 임무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강신욱 청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주창자인 홍장표,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책까지 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드가 맞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런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강신욱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통계청의 표본과 조사 방식이 아주 마법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최악이던 소득분배 지표가 갑자기 개선된 것처럼 둔갑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다른 통계가 나온 것이 바로 부동산 통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수현, 김상조 정책실장은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 당시 집값은, 우리 다 기억합니다. 서울시 내 한강 주변에 5억짜리 20평대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10억을 넘긴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집값은 하늘을 뚫고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미친 집값에 고통을 받았고요. 집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동산 통계도 마사지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은 겨우 11% 올랐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기 집값이 얼마인지 알고, 그 집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매물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결과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국가공인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매주, 매일같이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난다, 낮춰라, 수치가 안 내려가면 부동산원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 무려 백이십오 차례, 다시 말해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실제 주택가격 변동률을 억지로 끌어내린 것이 백이십오 차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기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이 통계 마사지가 아주 집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의한 일자리 부족, 이로 인한 소득격차 또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의한 벼락거지 탄생.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아픈 얘기지요. 이로 인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절망감이 더 커진 시기가 이 시기이다 보니까 결국 통계 마사지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과도한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고요. 2024년 4월 대전지방검찰청은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핵심 인사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작이라는 표현 대신에 수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

다.

민주당은 이것이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 앞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또 공소사실이나 단어나 법률용어나 이런 것들을 가다듬어 가는 절차 그것이 공소장 변경인데 마치 이것을 조작의 증거인 듯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조작이라고 했든 아니면 수정이라고 공소장에 쓰든 아니면 저처럼 마사지라는 표현을 쓰든 어떤 표현을 쓰든 그 당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한국 경제에 엄청난 폐해를 입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자 일자리 만들겠다고 국가재정을 늘리고 이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부채 400조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일자리 가운데는 정말 엉터리 일자리가 너무 많았지요. 빈 교실의 불 끄기 아르바이트, 강가에서 산책하다가 휴지 주워 오면 그것도 돈을 지불하고 이런 식의 엉터리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았고 이로 인해서 국고는 엄청나게 사용되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의 국가부채가 증가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집값의 엄청난 급등, 2배 이상 올랐지요, 5억짜리가 10억이 넘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젊은이들은 이제 돈 벌어서 집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진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가계부채가 문 정부에서 역시 400조 이상 늘어난 것은 바로 주택가격의 엄청난 상승이 그 뒤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집값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18%인가요 서울 집값이 올랐지요. 결국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돈을 많이 쓴다, 많이 푼다. 돈을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결과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책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사설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2024년 3월 16일 '국기문란 해당하는 문 정부 통계조작'이라고 하는 사설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류경제학과 결이 다른 독특한 경제정책을 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 그렇습니다. 주택정책은 사실 이것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만 두들겨 패서 그들이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내려간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공급을 한편에서는 올리고 한편에서는 화폐 가치를 유지해야 주택과 같은 실물의 투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수요 억제 일변도와 주택정책, 노동시장에 개입해 비정규직의 인위적인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고용정책, 불평등을 완화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시장에 충격을 안긴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문가의 부작용 경고를 무릅쓰고 강행한 이런 정책은 결국 통계와 수치로 성패가 판가름될 터인데 그 성적표인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11명이 14일 무더기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경제정책을 관장하던 이들이 망라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통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나 시작된 수사에서 조작의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고 한다. 국가 운영의 기초자료여서 그 작성과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한 통계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훼손된 선례를 찾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조작과 왜곡이 이루어졌다는 통계는 모두 정책의 실패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잇단 대책에도 높게 나타나자 이를 불법적으로 사전 검열하고 확정치를 낮추라거나 '장관님이 보합은 안 된다고 한다' 등의 명시적인 지시로 백이십오 차례나 조작했다.

또 고용통계에서 비정규직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 방식의 변화로 전년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발표해 이를 은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 불평등이 거꾸로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 원자료를 불법으로 가져다 최저임금 인상에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성적표를 위조한 셈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런 내용이 재판에서 사실로 판명된다면 국기문란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엄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미 800만 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그 800만 불의 돈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검찰의 조작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반하장이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박상용 검사의 말처럼 재심을 요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과 같이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다른 판결은 아직도 재판 중인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조사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도, 사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 사건도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그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그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실시간 첩보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9월 22일 3시 30분, 이때 우리 군도 정보 당국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구조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되는 게 왜 핫라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때 핫라인을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이 실종되어서 지금 해역을 떠돌고 있으니 우리한테 구조해서 보내 달라 이런 핫라인을 사용하면 왜 안 되는가, 이런 핫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남북의 평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저녁 9시 40분경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은 소각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청와대 안보실장과 주요 책임자들은 조기 퇴근했습니다. 이

것이 감사원을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첫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공식 발표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자진 월북이라고 하는 말도 충격적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씨 주변에 중국어선이 있었다라는 정황이 있고요 이 어선에 왜 무전 등을 통해서 구해 달라고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지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경비계선 인근에서 중국어선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특정할 수 없다며 부정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책임 있는 국정원과 국방부는 지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한 국민이 이미 북한 해역을 떠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북한 쪽에 얘기해서 빨리 구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남북 핫라인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의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 첫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근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첫 보도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라고 하는 얘기였고요. 자진 월북이라고 추론한 이유는 슬리퍼를 벗어 놓고 갔다, 빚이 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가계에 빚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빚이 있다 이것을 월북 가능성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사건의 등장인물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먼저 서훈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당시에 범정부 대응의 총책임자였고요.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그는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안 지시를 내렸고 자진 월북 프레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빨리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 해역에 떠돌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때가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던 때였습니다. 유엔 연설을 앞두고 다른 기사가 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안보실의 방침에 따라 국정원 보고서 46건, 국방부 첩보 60건 이상을 삭제하거나 열람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은 아마 정상적인 보안 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 평범한 국민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저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입니다. 그는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였던 인물입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경찰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김홍희 전 청장은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안 본 것으로 할까요? 그 당시에 정부 당국이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수사 당국 아니겠습니까? 수사 당국이 정부 당국에서, 국방부와 또 그 당시 국정원 등이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역할이 경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찰청장은 안 본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 청장이 자진 월북이라는 이 프레임에 방해되는 이런 정보들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시간 순서대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월 22일 18시 30분 정부는 이 씨의 생존을 인지했습니다. 살아 있음을 알았으면 정부가 할 일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저녁 7시 30분, 우리 국민이 북한군 밧줄에 묶여서 바다에 떠 있을 때 청와대 안보실장과 1차장은 퇴근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우리의 정부 당국은 각자 집으로 퇴근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이것이 인권을 추구하는 국가인가? 이것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인가? 묻지 않을 수 없지요.

9월 23일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 직후부터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전산망에서 관련 첩보들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회의가 열리기는 했는데, 9월 23일에 뒤늦게, 이때 한 일은 왜 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첩보들의 삭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정부는 뒤늦게 발표하며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슬리퍼가 발견되었다, 빚이 있었다는 식의 개인 사생활을 들춰내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슬리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사실은 그 뒤의 나오는 조사들은 확인할 수 없다, 빚 규모도 부풀려져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저는 설사 빚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빚이 있으면 월북이다', 이 프레임이야말로 얼마나 개탄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정권교체 후 해경과 국방부는 2년 전의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월북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늦게,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월북이라고 할 증거는 없다라고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이대준 씨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밧줄에 묶여서 망망대해에 끌려다니다가 총살당하고 시체가 불태워지는 그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빚이 있니 없니로 월북 몰이를 당하고 그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어버린 그 아픔, 사랑하는 동생을 잃어버린 그 아픔도 큰데 월북자의 가족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 판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 무죄선고가 나왔지요. 1심 판결이 전원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재심 가고 그다음 3심까지 해 봐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체계다. 법은 판사가 해석하는 것이고 그 해석은 본인의 양심껏 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사가 똑같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3심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4심입니다, 4심」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는 4심. 이제는 어쩌면 영구히……

그런데 이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오자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몰

아붙이면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판결 무죄선고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무죄라고 해서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의 판단이 섣부르거나 꼼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판사로서의 양심이 작동한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아무런 증거 없이, 북의 해역으로 떠밀려 갔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월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 정부가 꼼꼼하지 못했고 섣불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재판부는 서 장관과 박 전 원장에 대해서 '자료 삭제 지시가 사건의 은폐와 조작을 위해서는 아니다. 첩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삭제했다면, 원본 자료를 파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급자가 다시 들춰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은폐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1심 무죄판결이 나온 것만으로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얘기를 했지요, '사건을 조작 기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수한 판결들이 1심 판결은 무죄이지만 2심에서 유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2심까지 무죄가 나와도 3심에서 유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심제를, 아니면 앞으로는 4심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 얘기를 다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총체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주의는 4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보호, 권력분립,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그리고 법치, 이 4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기둥은 서로 완전히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가 붕괴되면 다른 것도 따라서 붕괴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법치가 붕괴되면 공정한 선거도, 인권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시점에 사법을 파괴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미 유죄판결난 사건조차도 검찰이 조작했다면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특공대, 수많은 경찰들, 광화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검문하고 지갑을 열어 보고 그리고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결국 법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광장에서 시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인권보호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법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권력분립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력분립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데 법치가 유지될 수도 없고 공정하고 자유

로운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권력분립과 법치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는 이 4개의 기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이 4개의 기둥은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같이 무너진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치가 무너진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법치가 뭔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 단계이고요. 하나는 집행 단계이고요. 하나는 해석과 판단 단계입니다. 입법 단계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치가 이루어지려면 입법을 할 때 그 입법의 목적은 헌법정신과 공공선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정조사는 공공선 실현이 아니라 특정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입법에서 이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통과되었던 사법 파괴 3법, 대법관을 증원하고 판사들을 법왜곡죄로 위협하고 그리고 4심제까지 가겠다, 이것은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다. 헌법정신은 판사들에게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라고 했지, 법 왜곡될까 말까 전전긍긍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4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은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는 헌법정신과 공공선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법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만 끝나면 다 통과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법이 제대로 된 입법이려고 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입법이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이런다면 이미 절차에서부터 입법은 법치의 조건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입법에 있어서는 법은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법왜곡죄, 명확합니까? 뭐가 법왜곡죄입니까? 무엇이 법 왜곡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수당이, 다수당의 정부 여당이 원치 않으면 법 왜곡입니까?

그래서 이미 입법에서부터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치가 되려고 하면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규범이 뭐냐? 모든 것이 법에 다 쓰여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문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 지켜왔던 규범을 지켜야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이것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규범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부터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 이것을 아주 떳떳하게 얘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지요.

사실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직을 갖지 않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을 규범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규범도 민주당은 다 무너뜨렸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지 않는, 국회의장이 없는 정당에게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간사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의 간사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규범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국회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규범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 보신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이 첫 번째가 규범 지키기, 두 번째가 자제입니다.

그래서 자제가 뭐냐? 법에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법에 누구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권한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쓴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제가 아니다. 그래서 있는 권한이라고 해도 자제하는 것이 그것이 법치요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탄핵소추 발의된 통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12대는 민주화가 되기 전이니까 이건 뺀다고 하더라도요 민주화 이후 보면 13대는 한 건도 없고요. 14대 2건, 15대 3건, 16대 4건, 17대 3건, 18대 1건, 19대 1건, 20대 5건입니다.

그래서 역대 국회가 탄핵소추라고 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지만 그 권한을 다 막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자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건 안 되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도 사실 투표까지 간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통과된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와서는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요. 22대 국회에서는 1년 만에 무려 20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 1년 동안에는 한 달에 1.6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공룡 다수당이 자제하지 않고 마구 힘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구 힘을 쓰는데 법치가 되겠는가, 민주주의가 유지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치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재판의 단계이지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PPT 넘어가겠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몫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집행은 행정부의 몫이고요. 그리고 입법의 과정은 보통 입법부의 몫이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해석과 판단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중요하다, 여권 무죄 야권 유죄 이렇게 간다면 공정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의 단계에서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통일교, 저희 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은 의혹이

나오자마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밭에 버리는 증거인멸까지 있지만 구속은커녕 부산시장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것은 공정한 법집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이 있어야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혹은 고발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판사가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거야'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양심을 어길 수 없는 분들은 자리를 조용히 떠나겠지요. 그래서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중요한데 법왜곡죄와 같은 것으로 위협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중립성에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법관의 증원입니다. 대법관의 증원입니다. 어느 한 정부가, 어느 한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때 그 대법원이 중립적일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 법치가 남아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과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법치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법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내일 갈지자로 법이 계속 바뀌어 나간다 이러면 어떻게 법을 알고 지키겠습니까? 그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법을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 누가 집권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좌로 우로 법이 계속 바뀌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법은 형해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법치가 왜 중요하냐? 법치는 제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하나의 기둥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 14세, '내 말이 곧 법이다' 그 말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고 루이 14세가 좋아하는 사람은 봐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벌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그 사회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눈이 없고 계급이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는 경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성장은 투자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는 물적·인적 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적 투자에는 자본의 투자, 자본이 투자돼야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인적 투자, 질 좋은 노동자가 있어야 혹은 노동력이 풍부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 특히 인적 투자에 있어서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성장은 그래서 투자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법치의 함수다. 법이 무수하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한다, 이것도 투자입니다. 물론 '좀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집을 사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 법이 바뀌어서 집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집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를 해야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눈이 있어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봐주고 권력에 가까우면 예산도 따고 '공정경쟁 그런 것은 개에게나 줘'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시장의 법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왜 투자하겠습니까?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지. 투자하지 않으면서 혁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도 법치가 필요하고 공정한 시장은 결국 투자의 활성화와, 투자의 활성화는 기술개발, 혁신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 공정성, 예측가능성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야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란봉투법, 어느 날 갑자기 하청기업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법인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결국 투자를 국내에 하지 않고 국외로 빠져 가는 것이고 국외로 투자가 빠져나갈수록 국내의 경제는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그래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아니야?'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1950년대에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4위의 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네 번째로 잘살던 나라가 전 세계 132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베네수엘라 훌륭한 나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여권 권력자와 가까운 분이시지요. 우리는 아직 4위까지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잘못 가다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무너지는 베네수엘라도 결국 엄청난 자원이 있고 세계 4위의 부국이었다가도 이렇게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도 점점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 지금 더블쇼크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지금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환율이 1500원대, 그런데 이 1500원대 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환율 그래프가 지진계 같다,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엄청 반복돼서 누군가는 아마 큰돈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환시장에서.

그런데 여기에도 정부가 환시장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환시장에 개입을 하느라고 얼마의 돈을 갖다 넣었는지, 얼마나 돈을 넣어서 종가 1400원대를 유지했었는지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통계의 조작도 문제이지만 정보의 비공개 이것도 민주주의 사회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 그런 곳에서 경제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500원대의 달러 환율,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가 110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아직 않았습니

다. 그럼에도 원화 가치 폭락에 의한 1500원대의 환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환율의 부작용은 수입물가의 급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물가의 급상승은 결국 전체 물가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지요.

우리가 울산의 스스로 어려운 선택을 하신 그 가족처럼 일자리도 줄어든 상태에서 물가도 올라가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은 어떻게 견뎌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일쇼크입니다.

물론 저는 이란 전쟁이 1970년대의 중동전쟁과 자원의 무기와 같이 오래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오일쇼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주름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블쇼크 상태에서 정말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일까, 특정인의 죄를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법 파괴를 하는, 이 사법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 더블쇼크 상태의 경제위기,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에 대한 묘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국회의 양심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저는 의원님들처럼 민주화를 위해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민주화에 앞장서셨던 여러분들께서 1987년 민주화 결과로 만들어진 이 87체제를 무너뜨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라고 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향이 아니라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특정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이런 법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어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민주화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민주주의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이런 국정조사를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한 걸음만 멈춰 서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 되는 일인지 여러분들께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실 때 저는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검찰에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에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는 여러분의 덕이 컸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도 불가능했습니다. 민주화는 많은 나라에서 산업화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준까지 올라온 민주주의는 산업화를 일으킨 세력과 여러분처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세력이 같이 이루어 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대법관을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증원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재판해야 될 판사들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검찰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실 수가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던 그 당시의 정부들도 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 당시의 정부들도, 그 당시의 권위주의 정부들도 그 정도는 인정하고 갔습니다.

어제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BTS 공연장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습니다.

김구 선생이 얘기한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 그것 생각하기 이전에 저는 슬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찰에 쫓기던 시대, 그 시대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광화문에서 펼쳐졌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경찰들이 검문을 하고 여성들의 검문, 특히 임신한 여성은 검문이 안 된다고 하자 여경이 손으로 더듬고 가방을 열어 보기도 했습니다.

2002년 붉은악마 이후 광화문은 자유와 열정, 자발적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검문과 배제와 수색의 장소가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께서 한번 퍼포먼스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은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너무나 슬픈 오늘의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경찰에 가서 고문당하고 또 감방 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비겁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당시에 가방 압수수색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2026년 오늘에 펼쳐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수인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집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인권보호도 안 되고 자유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엇이 법치인지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만드는 법,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만드는 법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법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인정하는 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원의 독립성, 판사의 독립성, 판사가 본인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한테 너무 멀리 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함께 드린 이유는 이것이 단 하나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가 1단계이고요, 2단계는 대법관의 증원이고요.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이것들 내 말 들어. 마음대로 하지 마', 대법관의 증원은 '대법

원은 우리 손아귀에 있어야 돼. 우리가 다수여야 돼’. 그리고 4심제 헌법소원제는 설사 그렇게 대법원을 만들어 놔도 엉뚱한 짓 하면 헌법재판소로 갈래……

○의장 우원식 김민전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김민전 의원 마무리하라고 하셔서……

○의장 우원식 아니, 마무리할 거면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는 건데……

○김민전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김민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0인 서면동의)

(16시44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곽상언 의원, 김영환 의원, 박홍배 의원, 부승찬 의원, 윤종군 의원, 이정헌 의원, 김준형 의원, 최혁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45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아직 투표하실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사이에 한 가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작년 광복절 전야제 때 국회에서 축제를 한 번 했는데 국민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축제를 즐기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3만 명이 넘는 그런 광복절 전야제를 국민 축제로 하는 멋진 행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작년 가을에 국회에서 소규모입니다만 버스킹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를 이제는 열린 국회로 국민들에게 자꾸 개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가 늘 험악하고 인상 쓰고 그런 데가 아니라 국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

드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국회에서 버스킹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국회 열린광장에서 수준 높은 음악으로 버스킹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원님들도 와서 같이 즐기시고, 점심 식사 시간에 할 거거든요, 12시부터 하니까. 즐기시기도 하고 또 가까운 분들이 있으면 국회에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하니까 와서 봐라 그렇게 해서 국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안 계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잘 고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합니다. 아주 추울 때, 아주 더울 때 빼고.

(「요일이 빠졌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내가 이걸 빼먹었네. 금방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셋째 주만 하고 금요일입니다.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12시에 합니다. 지난번에 강변서재에서 했는데 아주 대단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7시01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8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655)

(17시11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천준호 의원 등 160인으로부터 제출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을 제출한 교섭단체 및 제 정당들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은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월22일 17시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공소청법안(대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4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용혜인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천하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이주영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추가 상정(제3항)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8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상욱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신정훈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출석 의원(28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3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176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상욱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청가 의원(3인)

강선우 김병기 김우영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운영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
차관 이진수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학영

3월 22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26. 3. 22.)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개혁특별	정치관계법심사	서일준	국민의힘	2026. 3. 13.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김승원 박선원 박성준 박지원 서영교 양부남 윤건영 이건태 이용우 이주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2026. 3. 19.
	곽규택 김재섭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조배숙	국민의힘	
	차규근 손 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개혁특별	서일준	국민의힘	2026. 3. 13.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재정경제기획	박홍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2026. 3. 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조인철	박홍근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퇴직(대법원 판결 확정)	2026. 3. 12.

○의안 제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1)

3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4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442)

이상 5건 3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정태호 의원·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5)

이상 7건 3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5)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 3. 1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9)

이상 2건 3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9)

이상 2건 3월 1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7)

이상 6건 3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06)
3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3)
이상 3건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0)
이상 2건 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6)
이상 7건 3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8)
이상 4건 3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9)

3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6)

이상 6건 3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8)

3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7)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2026. 3. 1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5)

이상 3건 3월 1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4)

3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3)
이상 6건 3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0)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7)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0)
이상 5건 3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2)
3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2)
3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0)
3월 16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8)
이상 2건 3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9)
이상 2건 3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5)
이상 3건 3월 17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4)
이상 3건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2)
3월 1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3. 1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3)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3. 1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4)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3)
이상 6건 3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4)
이상 2건 3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6)
이상 3건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6)
3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1)
이상 2건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8)
이상 3건 3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복기왕 의원·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0)
이상 10건 3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9)
3월 17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0)
3월 17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6)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2026. 3. 17.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5)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3. 17.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6)
이상 4건 3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5)
이상 7건 3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4)
이상 3건 3월 1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1)

이상 2건 3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4)

이상 2건 3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8)

이상 3건 3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7)

이상 2건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9)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2026. 3. 17.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5)

이상 5건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6)

이상 3건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5)
3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열에너지기본법안
(2026. 3.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4)
이상 3건 3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2)
이상 3건 3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성권 의원·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0)
3월 18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41)
3월 18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0)
3월 18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6. 3. 1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7)
3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9)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3.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6)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2026. 3. 1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3. 1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후보자(고광헌) 인사청문요청안

(2026. 3. 18. 대통령 제출)

이상 3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 3. 13.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472)

공소청법안(대안)

(2026. 3. 18.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8.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8.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2)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 3. 18. 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6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6. 3. 18.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3. 18.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589)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안)

(2026. 3. 20.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7655)

○**의안 심사**

공소청법안

(2024. 8. 29.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6. 11.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2025. 6. 11.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공소청법안

(2026. 3.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197)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0)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024. 8. 29.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6.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026. 3.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200)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3.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9)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026. 3. 6.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8)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0)

3월 17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6. 3. 12. 한상희 외 1인으로부터 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3)

3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6. 3. 12. 한상희 외 1인으로부터 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4)

3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26. 3. 13. 이현경 외 51,9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5)

3월 1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6. 3. 12. 한상희 외 1인으로부터 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3)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6. 3. 12. 한상희 외 1인으로부터 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4)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요구서 제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26. 3. 18. 송언석 의원 등 107인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생계비계좌 실효성 제고 필요에 관한 질문서

(2026. 3. 16. 오기형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

(2026. 3. 1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출)

3월 13일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비공개)

(2026. 3. 12. 국토교통부 제출)

2026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2026. 3. 13. 국토교통부 제출)

이상 2건 3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송부

국회감사요구사항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감사」 감사결과보고서(비공개)

(2026. 3. 16. 감사원장 제출)

3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송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26. 3. 11. 행정안전부(비공개)

2026. 3. 11. 경찰청(비공개)

2026. 3. 13. 제주항공(비공개)

2026. 3. 17. 국토교통부(비공개)

2026. 3. 17. 한국공항공사(비공개)

이상 5건 3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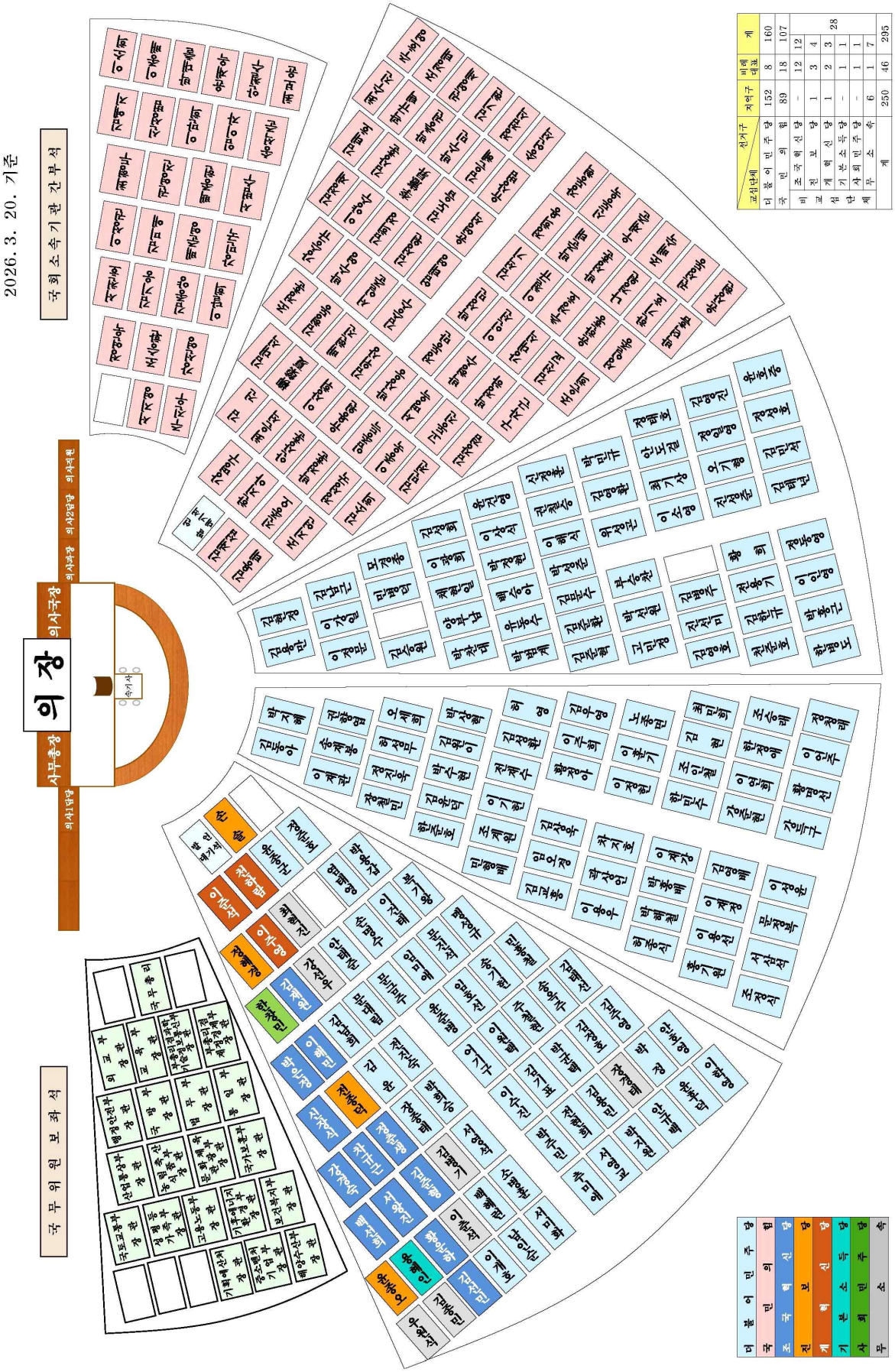
2026. 3. 18. 국무조정실(비공개)

2026. 3. 18.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비공개)

이상 2건 3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송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교섭단체 / 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더불어민주당	152	8	160
국민의힘	89	18	107
조국혁신당	-	12	12
진보당	1	3	4
개혁신당	1	2	3
기본소득당	-	1	1
사회민주당	-	1	1
무소속	6	1	7
계	250	46	295